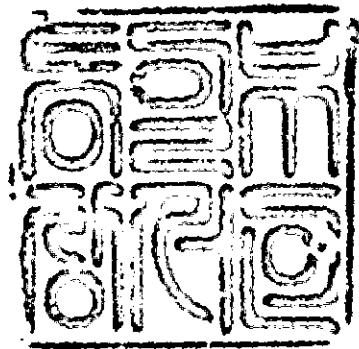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관련
국내주요신문기사집

2002. 8



통 일 부
(남북회담사무국)



일 판 기 사

北 “서해 우발적 충돌 유감 장관급회담 서울서 열자”

8월초 실무접촉 제의... 정부 “사과 간주”

북한이 25일 지난날 말의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를 재의해왔다.

북한의 김연성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은 이날 오후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낸 진화 통지문에서 “얼마 전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한 쌍방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이어 “서울에서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쌍방 사이에 합의한 남북 철도연결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4·5 공동보도문 이행문제와 그밖의 관심하는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하기 위해 오는 8월 초 금강산에서 남북 장관급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부터 갖자”고 재의했다.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은 이에 대해 “전화 통지문 내용은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사과·유감 표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해교전 이후 급속히 냉각됐던 남북관계는 풀리게 됐으며, 지난해 11월 이래 중단됐던 남북 장관급회담도 재개될 전망이다. <관계기사 3면> 또 이날 말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 때 별도의 남북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서해교전에 관한 북측의 유감 표시를 평가하는 한편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의 대북 여론이 악화되고 남북대화 및 북·미관계가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전

통문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련 김동태(金東泰)농림부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남북 관계가 잘 되면 배합사료용으로 공급

된 재고미를 북한에 우선적으로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

중앙일보

2002. 7.26(금)

朝鮮日報

2002. 7.26(금)

北 “西海 우발적충돌 유감”

서울서 장관회담 제의... 정부, 謝過간주 수용방침

김령성 북측단장 명의로 電通文 보내

북한은 25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 북측단장 명의로 정세현(丁世鉉) 남북 수석대표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얼마 전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한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와 함께 “서울에서 제7차 북남상급회담(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쌍방 사이에 합의한 남북 철도연결 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 문제 등 (인동원 특보 방북 시 합의한) 4·5공동보도문 이행 문제와 그 밖에 관심하는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하기 위하여 오는 8월 초 금강산에서 북남상급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부터 갖자”고 재의해왔다.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은 이에 대해 “6·29 서해 사태에 대한 북측의 명백한 사과와 유감 표시으로 간주한다”면서 “이번 북측의 재의를 계기로 형성어진 남북대화틀 다시 장관급회담부터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해, 이날 수용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박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6일 오전 김

급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부 입장을 최종 결정하고, 단신 제외일차 및 내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북측의 서해교전 사태 입장 표명이 북측이 6·25 전쟁 이후 남북, 미·북 간 군사적 충돌에 대해 이 같은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단 이같은 수용해 남북장관급 회담을 받아들이다. 북측에 서해사태 책임자 처벌 등은 향후 남북회담을 통해 계속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權景福기자 kkb@chosun.com

北 “서해 무력사태 유감”

전화통지문...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제의

상부 “사과로 간주- 수용여부는 신중 검토” 한나라 “진의 두고봐야” 민주 “변화 긍정평가”

북한이 25일 이례적으로 6·29 서해 교전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남북장관급회담과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전격 제의했다. (관련기사 3면)
남북 장관급회담 김영성 북한측 수석대표는 남한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사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남북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이어 “우리측은 서울에서 제7차 북남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쌍방이 합의한 남북 철도연결과 이산가족 문제 등 4·5 공동보도문 이행 문제와 그밖에 관심하는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하기 위해 8월 초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의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또 “중단된 당국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을 뿐 아니라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관계부처 실·국장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북측의 대화 재개 제의 의도 등을 분석한 뒤 답신을 어떻게 보낼 지가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측이 요구했던 사과, 책임지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북측이 수용한 것이어서 여론을 주시하고 있으나, 북측 제의를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기 통일부 차관은 “북측이 이번 전종문에서 서해사태에 대해 사과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형벌어진 남북대화를 장관급회담부터 복원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입장은 엇갈렸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유감 표명이 북한의 진정성 의사이인지, 진의가 무엇인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구체적인 재발방지 약속이나 책임을 시인하지 않아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한화갑 대표도 “북한이 진일보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하루 빨리 남북대화가 재개돼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북한의 유감표명을 책임회피 전략으로 규정하고, 북측 제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철호기자

서울경제

북 “서해교전 유감” 장관급회담 제의

北 김영성대표 전화통지 “내달 초 실무접촉 갖자”

북한이 25일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이를 위해 다음달 초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 실무접

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에 따라 26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전략기획단 회의를 열고 북측의 장관급 회담제의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형기 통일부 차관은 이날 긴급 기

지회견을 갖고 북측이 김영성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우리측 수석대표 정세현 통일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문전 전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북측이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서울 개최를 제의하고 쌍방이 합의한 남북철도연결·이산가족상봉 등 4·5 공동보도문 이행문제와 그 밖의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하기 위해 8월 초 금강산에서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시훈기자 shlee@sed.co.kr

北 “서해 우발적충돌 유감”

정부 “사실상 사과간주” ... 수용 분위기

김령성 北대표 電通文 장관급회담 서울개최도 제의

북한은 25일 서해교전에 대해 우발적인 무력충돌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갖자고 전격 제의했다.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 북측 수석대표는 이날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8월 초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을 열자"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김 대표는 전통문에서 "얼마 전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쌍방 사이에 합의한 남북철도연결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5공동보도문 이행 문제와 그밖의 관심사들을 윈만히 협의하기 위해 8월 초 금강산에서 남북장관급회담 대표

들의 실무접촉을 갖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은 "서해교전으로 국민의 대북여론이 악화되고 남북대화·북미관계에 차질이 초래된 상황에서 북한의 전통문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이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노력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사과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나 일단 북측의 제의를 수용할 분위기가 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초 이산

가족상봉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가 8일중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측의 유감표명 수위와 관련,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는 등 비판적인 여론도 없지 않아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한은 지난 4월 임동원 특사 방북 당시 ▲남북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 ▲남북단국지회담 ▲금강산관광 단국지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했으나 이산가족 상봉건만 이행됐다.

/김기홍기자 kidong@sgt.co.kr

한국경제

북, 서해교전 유감 표명 장관급회담 재개 제의

정부 “사과 수용”... 다음달초 금강산서 실무접촉

북한이 25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김령성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이통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와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장관급회담 재개를 위해 8월 초 금강산에 실무접촉을 열자고 제의했다. > 관련기사 3면

김형기 통일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이번 서한을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북의 명백한 사과의 유감표시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히고, 26일 오전 대북관계 부처회의를 열어 실무접촉 대표 등을 겸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금강산 실무접촉을 수용

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다.

김 단장은 남쪽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에게 보내는 이 전통문에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서울에서 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 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8월 초 금강산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을 열자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번 북측 제의를 계기로 협력어진 남북대화할 때 지

급 회담부터 복원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며,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난 4월 초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에서 합의했으나 5월 초 북측의 일방적 연기로 중단된 남북 단국간 대화를 재개하게 됐다.

당시 북한은 4월 말 금강산에서의 4차 이산가족 상봉 뒤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에 대한 최성훈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 등을 문제삼아 5월 7~10일로 예정됐던 2차 남북 경제추진위 회의 등을 비롯해 6월 11일 금강산관광 협성회 회담 등

남북 단국간 대화를 모두 중단했다.

북한이 남한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1996년 동해안 침투사건 당시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서로 유감을 표명해긴 했으나 당시에는 북-미 뉴욕접촉에서 철저히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발표하는 형식을 밟았다. 따라서 이번 유감표명은 남북을 고려한 상당히 진전된 태도로 평가된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재개된다면 지난해 11월 9~14일 금강산에서의 6차 장관급 회담 이래 8개월여 만이다. > 관련기사 kankan1@hani.co.kr

北 “서해충돌 유감”

한국일보

2002. 7.26(금)

장관급회담 서울개최도 제의... 정부, 사과 간주

北김령성대표 명의 전화통지문 보내



북한은 25일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란 시일 내에 경의선 연결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열 것을 전격적으로 제의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판문점을 통해 김령성(시진) 남북 상급(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쌍방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4면

김형기(金炳基)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유감표명을 "서해교전에 대해 우리측이 요구한 사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입장으로 부터 제7차 장관급 회담을 제의한다"면서 "8월초 금강산에서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날 서해 교전과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철회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장관급 회담을 통해 진전 될지 관심이 쏠리고, 북미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북측의 '유감' 표명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 향후 회

담 과정에서 논란도 있을 전망이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7차 장관급 회담의 의제와 관련,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4월5일 합의 등의 이행 문제와 남북철도연결, 흩어진 가족의 상봉 문제 등 그 밖의 관심 있는 문제도 협의하자"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북측의 정확한 의도, 서해교전유감표현의 적실성 등을 검토한 뒤 실무접촉일자확정,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한 "사과로 보기 어려워" 민 "미흡하지만 수용을"

한나라당 남경필(南靑弼) 대변인은 25일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에 대해 "명백한 무력 도발을 우발적 운운하며 책임을 직접적으로 시인하지 않아 사과로 보기 어렵다"며 분명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와속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들의 요구에 비해 미흡하고 특히 서해교전 희생자들의 꽃다운 젊음을 생각할 때 더없이 착감하지만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감안해 북측의 태도표명과 제안을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유성식기자 ssyoo@hk.co.kr

한겨레

2002. 7.26(금)

“남북관계 잘되면 쌀 우선지원”

농림부장관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남북 장관급회담 제의 등과 관련해 "남북관계가 잘되면 북한에 쌀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료용 방울방금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재고 쌀 처리 문제에 대해 "배합사료로 공급하다가도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재고미를 대북 지원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

들과 만나 대북 쌀 공급시 규모에 대해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재고 쌀 물량은 300만석 정도인데 그 중 200만석 가량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며, "(공급방법은) 장기차관 형식이 될 것이나 이 모든 것은 남북관계가 잡힐 경우 남북경협추진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 운장배 식량생산국장은 이날 "대북 쌀 지원이 결정 날 경우 현재의 보유물량이나 준비상태로 보아 독자 지원이 나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체회 박찬우 기자

매일경제

2002. 7.26(금)

金농림 “남북관계 잘되면 쌀지원”

김동태 농림장관은 25일 북한의 남북 장관급 회담 제의 등과 관련해 "남북관계가 잘 되면 북한에 쌀을 우선 주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료용 투입 등이 검토되고 있는 재고미 처리 문제에 대해 "배합사료로 공급하다가도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재고미를 대북 지원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 쌀공급시 규모에 대해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재고미 물량은 300만석

정도인데 그 중 200만석 가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급방법은) 장기 차관 형식이 될 것이나 이 모든 것은 남북관계가 잘 될 경우 남북경협추진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나머지 100만석 규모 외 처리대상 재고미는 배합사료 등에 투입되는"는 질문에 "배합사료로 쓰는 가급적 쓰지 않고 주정용 등으로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걸기자 sungirl@mk.co.kr

대한매일

2002. 7.26(금)

정부, 北에 쌀지원 검토

김동태(金東泰) 농림장관은 25일 북한의 남북 장관급회담 제의 등과 관련, "남북관계가 잘 되면 북한에 쌀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사료용 투입 등이 검토되는 재고미 처리문제에 대해 "배합사료로 공급하다가도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재고미를 대북 지원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출원기자 wshong@daily.com

北 “서해교전 유감”

장관급회담도 제의...정부 “사실상 사과”

김령성단장 명의 전화통지문 보내와 “우발적인 충돌...재발방지 공동노력”

북한이 지난날 29일 발생한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은 또 제7차 장관급회담의 서울 개최와 이를 논의하기 위한 8월 초 금강산 실무접촉을 전격 재의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남북대의 재개를 위한 구체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북한은 25일 오후 3시쯤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 북측 단장 명의로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炫)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5면

북한은 통지문에서 “아마도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북한 정부는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6·15 공동선언과 4·5 공동보도문을 이행한다는 입장에서 제7차 북남 상(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이를 위해 오는 8월 초 금강산에서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가질 것을 재의한다”고 밝혔다.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와 관련, 북측은 “이번 항쟁 사이에 합의한 남북 협도연결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4·5 공동보도문 이행문제와 그 밖의 관심 문제들을 원만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귀국이 우리측의 이 건설적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처럼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감표명을 분명히 함에 따라 향후 남북대화가 전면 복원되고 북·미대화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제의는 서해교전으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불협한 상황을 매듭짓고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영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은 “1996년 김종삼수협 침투사건 때에는 달리 이번에는 장관급회담 단장이 우리측에 직접 유감 표명을 통보해왔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신속히 이뤄졌다 는 점에서 북측의 태도는 대단히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차관을 또 “어떤 경우에도 남북대화를 전진시키는 것이 한반도 안정에 유익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특히 북한이 장관급회담 서울 개최를 재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차세형기자

csf@kyunghyang.com

한국경제

2002. 7.26(금)

北 “서해교전 유감”

장관급 회담 제의

북한은 25일 지난날 발생한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건적 재의했다.

북한은 이날 김령성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한 정부는 앞으로 이러

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8면

북측은 또 6·15 공동선언을 이행한다는 입장에서 제7차 장관급회담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재의했다. 이날 통지문은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 앞으로 왔다.

북측은 또 다음날 초 금강산에서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을 갖겠다고 재의했다. 홍형식 기자

yshong@shankyung.com

東亞日報

2002. 7.26(금)

北 “서해 무력충돌 우발적... 유감”

전화통지문 보내... 남북 장관급회담 제의

정부 “사과로 간주”- 오늘 절차-시기 논의 金농림 “남북관계 잘되면 北에 쌀 우선지원”

북한은 25일 6·29 서해교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재의했다. ▶A2면에 관련기사

북한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김영성(金榮成) 내각 책임장사는 이날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炫) 통일부장관에게 전달한 대남 전화통지문에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한 정

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측의 유감표명이 우리 측의 사과 및 책임지짐, 재발방지 등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장관급회담 개최 절차 및 시기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장관급회담은 이르면 8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북한 측의 유감표명에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군 주요지휘관 초청오찬 자리에서 “서해교전에 대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확고한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태도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킬 것이다”고 말해 북한의 유감표명을 사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김영성 장사는 통지문에서 “방방합합의 남북관 협도연결, 읍어진 가족 친척(이산가족) 문제 등 ‘4·5 공동보도문’ 이행 문제와 그 밖의 관심사를 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하자”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8월 초 금강산에서 수석대표를 뺀 장관급회담 대표로 구성된 실무급 회의를 갖겠다고 재언했다.

통일부 김영기(金炯基) 차관은 “북측의 유감표명은 서해사태에 대한 북측의 명백한 사과와 유감 표시로 간주할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회담을 해가면서 매꾸나기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태(金東泰) 농림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남북관계가 잘 되면 북한에 쌀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료용 투입 등이 검토되고 있는 재고미 300만톤 처리문제와 관련 “매입사료로 공급하기도 do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재고미를 대북 지원으로 돌려준다”고 밝혔다.

김영식기자 sear@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북 “서해 충돌 유감”

丁통일에 전통문... 장관급회담 전격 제의

8·15전후 회담 가능성 한나라“미흡” 민주“수용”

북한은 25일 6·25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경의선 연결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전격 제의했다.

▶관련기사 3·4면

북측은 이날 오후 김영성 남북 상급(장관급)회담 대표가 정세현(丁世鉉·통일부장관) 남측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에게 보낸 판문점 전화통지문을 통해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

력 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쌍방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이어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이른 시간내에 서울에서 제7차 장관급회담을 갖자. “면서 “이를 위해 금강산에서 8월 초 실무접촉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북측은 또 제7차 장관급회담의 의제와 관련,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4월5일 합의한 공동보도문의 이행문제와 경의선과 경원선 등 남북철도연결, 이산가족의 상봉문제 등 그밖의 관심있

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밝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남북장관급 회담이 이르면 8월15일 광복절을 전후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관급회담 개최를 계기로 지난달 서해교전과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철회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제의를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복삼 용원상기자
youngtan@kdaily.com
2면으로 더

북 “서해 충돌 유감”

▷1면에서

김정기(金炯基) 통일부차관은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북한측의 명백한 사과와 유감 표시”라면서 “진척된 입장 표명이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6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통지문에 대해 검토한 뒤 우리 입장과 대표단, 구체적 의제, 일자 등을 결정해 답신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대화제의에 대해 한 나라당은 남경협(南寧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지만 유감을 표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러나 장관급회담은 무리도반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북한측의 태도표명과 제안을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유운영(柳雲永) 대변인은 “북한의 유감표명은 책임회피용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전에는 남북 장관급회담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

2002. 7.26(금)

北 “서해 무력충돌 유감”

장관회담도 제의...정부 사과로 간주

북한은 25일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제7차 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북측의 유감 표명을 사실상 사과로 받아들이고 장관급회담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해 이르면 8월 중 남북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기 통일부 차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북측이 판문점을 통해 김영성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우리측 정세현 대표 앞으로 보내 이같이 전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

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어 “서울에서 제7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해 8월 초 금강산에서 남북 장관급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부터 갖자”고 제의했다.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서해교전과 관련해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노력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사과와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서해교전으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불편한 상황을 매듭짓고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6일 통일부가 장관회의를 열어 장관급회담을 개최할 시기와 주요 의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북측은 이번 전통문에서 남북철도 연결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임동원 특사 방북 합의사항과 그밖의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자고 의제를 제시했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3 외무회의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 최성훈 외교통상부 장관과 북한 백남순 외무상이 함께 참석한다.

특히 백 외무상은 일본의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니영필기자 philip@mk.co.kr

2002. 7.26(금)



북한이 25일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서울 개최를 전격 재외해와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작년 11월 금강산 호텔에서 열린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모습)

南北관계 복원 청신호

北 서해교전 유감 표명

북한이 25일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7차 장관급 회담 개최를 전격 재외해에 따라 6·29 서해교전 이후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지난 4일 임동원 특사 방북 때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못했던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간 회담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 방북 때 합의했던 사항 중에서 4차 이산가족 상봉만 이행됐을 뿐 2차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개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 당국자간 회담, 금강산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당국자간 회담 등은 북한의 거부로 결리지 못했다.

북한이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에서 태도를 바꾼 것은 서해교전 사태로 인한 긴장관계를 깊게 풀어야 득이 될 게 없다는 손익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식량을 지원받기 위해선 남북 관계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서해교전 이후 미국 정부가 북

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남북과의 관계개선을 먼저 이루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고 볼 수도 있다.

김형기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제의에 대해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 표명은 명백한 사과로 간주할 수 있다"며 "형평어진 남북대화 장관급회담부터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선 "과거에도 북한이 위기 탈출용으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후 스스로 뒤집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삼부론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갖고 북측의 의도를 평가한 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나 가급적 남북대화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측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시사했다.

yshong@hankyung.com

2002. 7.26(금)

對北전문가 상반된 시각

도발 은폐의도 잘못 시인안해

▽송영대(宋榮大) 전 통일원차관=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측의 표현 가운데 "우발적으로 발생한 '공동 노력' 등은 중립적인 문구들이다. 이는 유감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유감 표명도 북측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충돌이 빚어진 상황이 유감스럽다는 뜻이다. 잘못을 시인한 게 아니다. 이러한 표현은 '명백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정부가 서해교전 해법으로 제시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자 처벌을 언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재발방지 노력도 공동 노력을 강조, 서해교전이라는 무력충돌이 공동책임이라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겉으로는 사과한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도발 자체를 은폐한 셈이다. 정부가 이를 중대한 사과로 받아들이고 북한 당국과 회담에 나설 경우 상당한 비판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8월초 금강산 실무접촉을 제외한 것은 8·8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위적으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DJ정부와 민주당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기존입장 반복 간접사과 의미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북한의 유감 표명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사과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중앙방송 등 관영매체들을 통해 이번 서해교전을 남측의 선제공격에 따른 도발이라고 주장해 왔다. 북한이 25일 대남 전문을 보낸 데 이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방송을 통해 이번 사건을 우발적 사태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은 주민들이 겪을 혼란을 무릅쓰고 자신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따라서 간접사과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거 자행한 수많은 도발 가운데 유감을 표명한 것이 단 두 번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96년 김동원 침수함사건 발생 이후 처음 유감 표명을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미국의 중재에 따라 뉴욕채널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고, 내용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관측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모호한 것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은 이를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사과로 받아들였다. 이런 전례와 비교해볼 때 북한은 이번에 우리 측에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등 진전된 태도를 나타냈다.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간접사과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남북대화 극적재개 정상화 계기

■ 북한 유감표명 의미

· 레없이 예상밖 사과-대화 제의 남쪽 '재발방지'요구에도 화답 북미·북일 대화 긍정영향 끼칠듯

북한이 25일 서해교전 사태에 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북 장관급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안한 것은 예상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북한이 이 시안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내다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서해교전과 그에 이은 미국의 대북 북사 파견 철회로 한반도 경제가 곧 >붙었던 점을 생각하면, 북한의 이번 조처는 북한 최고지도부가 국면 돌파를 위해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부담감을 느꼈던 정부가 '유감'이라는 표현만으로 대화 개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도 메시지 표현보다 북쪽 최고지도부의 대화 의지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의 표명은 시기로 볼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양쪽이 공동노력하자고 한 것은, 침묵한 고수장을 인정할 때 자신들한테 시간 확보하려고 주장한 것과 비교해 대단히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북쪽이 전문 분야에서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지도부의 의도성이 없었음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감 표명과 함께 "남북 양반이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한 부분은 남쪽의 재발방지 요구에 부분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당국은 해석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부 당국이 남북대화 재개와 인도적 지원의 전제 조건처럼 내세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처'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북한이 우발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평양 치원에서 볼 때는 교전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로서도 서해교전이 '원치 않았던' 대화의 장에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쪽이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남짓 열리지 못하고 있는 7차 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열자고 제의한 것도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김용재 공보관이 북한이 보내온 서해교전 유감표명과 남북대화 재개를 담은 전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윤문식 기자 yws@hani.co.kr

파격적이다. 북쪽은 지난해 9-11 테러사태 이후 당국간 회담을 위해 남쪽에 내려온 적이 한번도 없다. 북한이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총화 조정기구로 삼고 있는 장관급회담부터 열자는 것은 난미처럼 얽힌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선 큰 볼의 조정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몰라라'식의 지금까지 태도로는 경제개편과 체제보장 등 자신의 전략적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쪽의 이런 변화는 직접적으로는 남북을 향한 것이지만, 서해교전 사태 뒤 더욱 전대각이고 냉담해진 미국의 대북인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릴 아세안 지역포럼(ARF)에서 남북, 북-미, 북-일 간에 어떤 식으로든 대화의 장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정이 순조롭다면 한반도 경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도 마련되는 셈이다. 이재훈 관측팀 기자 nomad@hani.co.kr

북한 사과·유감표명 일지

도발 사건	사과·유감표명 내용
침와대 무장공비 침투 (88년 1월21일)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며 내부 책임경중본자들의 것이지 나와 당의 죄는 아니었다." (김일성-이후락 연담, 72년 5월4일)
만주국 도개만행사건 (76년 8월18일)	"유감스럽게 생각. 재발임도록 방법이 노력을 경주하자." (군정위 북측수석대표 유영근사랑관에게 구두에서, 76년 8월21일)
대북지명선박 인공기 강제 계약 (95년 6월27일)	"이제 일꾼들의 실무직으로 불이신 일 일어난 데 대해 유감표명." (전금일 발희당 북측수석대표, 95년 7월21일)
평해안 북측수항 침투 (96년 9월18일)	"같은 유감을 표시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외교부 대변인 설명, 96년 12월29일)
서해교전 사태 (2002년 6월29일)	"우발적 무력충돌 사건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리국 회담 북측 김영성 단장 진흥문, 2002년 7월25일)

한나라 "北 속뜻 좀 더 지켜봐야" 민주당 "미흡하지만 받아주자"

정치권 반응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청와대 박선숙(朴仙淑)대변인은 "정부는 충분히 강도해 입장을 견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검토 결과는 통일부에서 답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이 가라앉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이낙연(李洛淵)대변인은 "우리의 요구에 비해 미흡하고 특히 서해교전 희생자들의 뜻다운 정성을 생각할 때 더없이 착각하지만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북한 측의 태도 변화와 제안을 수용했으면 한

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경필(南靑弼)대변인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라며 "불완전한 사과표사로 본다"고 말했다. 南대변인은 "북한 측의 유감표명만으론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는 "북한이 서해교전을 우발적 사태라고 했는데 그것은 고의적인 도발이었다"면서 "그게 무슨 사과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비난했다고 유운영(柳雲永)대변인이 전했다. 이정민 기자 <jimlee@joongang.co.kr>

北 경제난 부담 화해 손짓

유감 표명·회담 제의 배경

북한이 25일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개최를 제안함에 따라 소강상태에 빠졌던 남북 단국관계는 북반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다음달 초 금강산에서의 장관급 회담 실무접촉과 서울 8·15 통일축전 개최로 8월 남북관계는 뜨겁게 달아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침을 거듭해온 남북관계로 미뤄볼 때 북측 제안에 일회일비하기보다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차분한 마무리를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회담제안 평양 속사점=이종석(李鍾奭)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 연구실장은 "북한이 그동안 취해온 남북관계나 대미 접근의 전략적 경로가 서해교전 사태로 흔들려지자 이의 시급한 복원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특히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식량문제 등 악화된 경제사정과 함께 대북특사 파견 철회 같은 북·미관계의 악화 등도 전반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서명한 6·15 남북 공동선언과 4월 초 임동원(林東源)특사의 평양 방문 때 약속한 시점이 진척되지 못하는 데 따른 부담감도 작용했을 수 있다.

오는 31일로 잡힌 2년 만의 북·일 외무장관 회담 재개나 러시아 외무장

"서해교전 南 도발"서 말바귀 對美관계 악화도 고려한 듯

관의 남북한 연쇄방문 등 대외정세와 남북관계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도 북한을 압박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서해교전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우리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국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관급 회담 개최를 종용했고, 이집 북한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 '뜻밖의 사과'에 놀란 정부=북측 전정문을 집한 청와대 당국자는 "북한이 이런 정도로 사과와사할 표시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실제 장관급 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장관 등 통일부 핵심직원들은 이날 낮 한 행사장에 있다가 부랴부랴 복귀, 예상밖의 제안임을 짐작케 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이 대남 전화 통신문에서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로 서해교전을 규정 한 대목.

지난달 29일 교전 이후 남조선 군부의 계획적 도발"로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달랐다. 전문가들은 교전이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려면 이런 북측의 태도는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북측이 도발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은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 등 과거 내치예편이기 때문이다. <표 집소>

북측의 유감표명을 사과로 볼 수 있는 시기도 있지만, 96년 9월 강릉 침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3개월10일 만에 외교부를 내세워 유감을 표한 것과 비교할 때 신속하고 직접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 남북관계 순환할까=북한이 당국 대화 복원의 뜻을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장관급 회담 재개로 잡은 것은 7개월 남은 김대중 정부와의 대면을 마무리하고, 차기 정권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최완규(崔完圭)경남대 북한대학원 부원장은 "북측으로선 남북대화가 중단된 채 다음 정권과 마주해야 할 경우 연결고리를 다시 만드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통신에서 협도연결과 이산가족 문제 등 구체적인 회담 의제까지 제시한 점은 적극적인 태도로 보인다. 북측의 회담 호응으로 침몰한 해군교속정의 인양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고,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해교전에 대한 감경 대응 여진이 수그러들지 않는 데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율의 하락 등에 정부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서울=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식량난 극심... 버티기 한계 느낀듯

북한의 6·29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 및 남북장관급회담 제안은 우리 정부의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얘기다. 북한 스스로가 이번 교전사태를 풀 끈 남측의 선제공격으로 주장해온 점 등이 비추어 정부관계자들은 3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백남준 북한 외무상으로부터 간접적인 유감표명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간의 공개접촉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스스로 유감표명을 한 데 대해 남측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 필요성,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식량원조 등 외부 지원 확보의 필요성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는 최근의 경제개혁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커다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앙대 제성호(諸成鎬·법학과) 교수는 "북한의 태도변화는 최근 진정되고 있는 내부 경제개혁조치외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임금 및 물가인상 등 가격개혁조치와 단위 사업소별 실적제 도입 등 경제개혁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절실할 것인 분석이다. 현실적으로도 북한은 내년 식량 부족분이 150t으로 예상되는 등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대화를 진행함으로써 쌀 30만 t 등 각종 내국지원을 받을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데다 사과문제를 둘러싼 애매한 표현을 둘러싸고 벌어질 남

남북대화재개 계기 쌀30만 t 등 지원 기대 재보선 앞두고 발표- '정치적 배경' 의구심



김종재 통일부 공보관이 25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표명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일들을 노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의 태도변화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물밑 촉구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8·8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마져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나서는 등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입장에 빠진 정부로서는 서

해교전 사태로 이기린 비판여론을 해소하지 못하면 인신대는 압박감에 빠져 있었던 게 사실이다.

어쨌든 북한의 태도변화는 북-미관계 변화의 종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서해교전으로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가 바로 북한의 사과였기 때문이다.

북한전문용어지

암암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쌍방사이에 합의한 남북철도연결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5 공동보도문' 이행문제와 그 밖의 관심하는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하기 위하여 오는 8월초 금강산에서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부터 가지는 것을 제의한다.

미국은 서해교전 직후 제임스 켈리 미 국무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미국 대표단의 방북을 취소하며 "공은 북한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유감표명은 북-미대화 재개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유감표명 및 남북대화 재개 제의는 북한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거꾸로 북한의 내남 유훬 제시가 우리 정부의 내국지원을 노린 일회성 제스처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우발적... 공동의 노력" 책임 회피

사과로 봐야하나

책임자 처벌등 南요구와 큰 차이 정부 환영에 "성급했다" 지적도

북한이 25일 오후 전화통지문을 통해 전격적으로 진담해온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에 대해 정부는 일단 명백한 사과와 유감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명백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단국간 접촉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입장=정부는 북한의 유감표명에 대해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은 북측의 유감표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명백한 사과와 유감 표시로 간주한다"며 "과거 북한의 문제 해결방식을 고려할 때 대단히 진전된 대도로

발생사건 및 시기	표명 내용	표명 후세 및 실제
철매대 무장공비 발무사건 (1968.1.21) 1972.5.4	"그것은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었으며 우리 내부에서 생긴 최악의 통분자들이 한 것이지 결코 내 역사나 당의 역사가 아니다."	김일성 주석이 이후 북측 통일부장과의 면담에서(비공식)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76.8.18) 1976.8.21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양방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군사실천위 수석대표가 유엔사령관에게 구두 전달(비공식)
북한잠수함발무사건 (1996.9.18) 1996.12.29	"확실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남조선 잠수함발무사건에 대해 유감 표시한다.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힘써 할 것이다."	외교부 대변인이 설명 발표(공식)

보여진다"며 대한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1996년 잠수함 침투사건 때와 비교할 때 북한의 태도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에는 북-미회담을 통해 북한 외무상 대변인 명의의 유감표명을 했으나 이번에는 북측 장관급회담 단장 명의 로 우리측 수석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유감표

명했다라는 게 정부측의 논거다.

▽사과라고 보기엔 애매한 표현=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유감표명이 매우 애매한 대다 문구 가운데 사실을 외곡하는 단어들 이 숨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감표명을 긍정 평가하는 전문가들조차 '명백한 사과'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우발적으로 발생한'이라든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등은 북한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우선 북한은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상황 발생에 '계획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이 표현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인 교전지점이 남한 영해가 아니라 북한 경비정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공동의 노력'이라는 문구 역시 책임 회피 성 심격을 띠고 있다. 무력충돌이 발생한 데에는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기본 인식을 내비친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6년 잠수함 침투사건 때보다 상당히 진전된 표현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후퇴했다는 분석도 많다.

당시 북한은 '잠수함 사건으로 대단히 인명피해가 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며' 등 의구심적인 표현을 통해 명백한 재발방지 약속과 유감의 대상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표를 '명백한 사과'로 규정하는 정부의 입장 정리는 성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동기기자 esor@donga.com

‘유감’으로 얼버무린 北韓

北 전화봉지문 의미

북한이 25일 서해도발과 관련해 일단 '유감'을 표명하며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재의해오자,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은 즉각 "북측의 일방적인 사고와 유감 표명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김 차관의 언급으로 미루어 북측 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의 이날 유감 표명은 우리 측이 요구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보장과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과인가 아닌가
북측은 전화봉지문에서 "일마 친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유감표명'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간접적인 사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측은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재발방지 문제의 경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말로 넘어갔다. 이는 그동안 북측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흔히 사용해왔던 표현으로 이번 사건을 남북공동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며,

때 북측의 '유감표명' 내용은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북측은 특히 이번 사건을 '우발적 무력충돌' 사건으로 규정, 사건의 본질을 흐트(糊塗)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측의 이 같은 '유감 표명'을 사과로 간주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북, 왜 다시 회담하지 않느냐

西海道발을 '우발적 충돌'로 표현 장관급회담 제의로 국면전환 시도 식량 30만 지원 등 實利 노린듯

NLL(북방한계선)과 관련한 북측 협상전라과도 연결될 수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사대발생 후 25일 군 주요 지휘관 오찬에 이르기까지, 거듭 북측의 사고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국면이 납득할 수 있도록 친절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비취널

북측은 유감 표명과 동시에 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남북철도 연결 문제 ▲이산가족 문제 ▲4.5 공동보도문 이행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8월 초 단강산에서 장관급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부터 갖자고 재의했다. 그간 서해도발 사태 이전, 우리 측이 집

<우리 측 요구사항>

- 北韓측의 사과
- 책임자 처벌
- 재발방지 보장

요하게 요구했으나 묵살했던 남북 접촉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사고문제는 적당히 참을 타면서, 남북대화 재개간 명분을 전제로써 남측이 자신들의 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북측이 이같이 선화한 배경에 대해, 정부당국자들은 식단년에 정착한 북한이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가동해 할 30만t을 지원받는 현실적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다. 또 서해도발 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중단 등 고립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대화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북한이 남한의 선제공격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남북서전 조율했다
북측의 이번 전화봉지문이 북측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남측 간 '비밀접촉'의 산실(産物)인지도 관심이다.
사전접촉설은 몇 가지 정황증거로 인해 짙어지고 있다. 이날 북측 봉지문은 공개롭게도 김 대령이 청와대 군 주요지휘관 오찬에서 "북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강조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왔다. 또 김형기 통일부 차관이 북측 발표 직후 즉각 "일방적인 사고와 유감표명으로 간주한다"고 환영하고 나온 것도 눈길을 끈다.
일본 당국자들은 사전접촉설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북측이 막후접촉에서 일정한 정도의 협의 표시는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들도 제기되고 있다. /全長地기자 baibaie@choon.com

▷북한의 유감표명 사례

사건	사건 일시	유감표명 방식	내 용
평안도 무장공비 침투사건(9.1.21)	72년 5월 4일	이후에 중앙정보부에게 김일성이 직접 구두로 전달	"그것은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었으며 우리 내부에서 생긴 최의령공비사건이 한 가지가 될까 내 의사가 아니다"
위무령 도끼 반핵사건(76.8.30)	76년 8월 21일	군사지휘관 북측측 수석 대표가 김일성이 유연군 사령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구두 전달	"반민족 공동경비구역에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쌍방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시애스도 인서기 계양사건(96.6.27)	95년 7월 21일	전남철 배이정방위원장 북측측 수석 대표가 우리 측 대표에게 친문을 보내 사과	"여에 할무들의 일부가 최초로 불타서로 인하여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오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 대하여 인정하는 바이다"
북한수출물 통제법 제정시건(96.9.18)	96년 12월 29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이 통일통신과 중앙방송을 통해 사과성명 발표	"책임은 인민피해물 로래한 할수한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조선인 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관측들과 함께 할 것이다"
북한수출물 통제법 제정시건(96.6.22)	-	-	사과표명 안 했음
서해교전사건(2002.6.25)	2002년 7월 25일	남북장관급회담 김형기 장관단장이 우리 측 수석대표에게 전화봉지문 전달	"일마 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朝鮮日報

2002. 7.26(금)

철도연결·상봉등 '밀린 숙제' 산적

• 장관급회담 의제 뭐 있나

북한이 25일 서해도발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남북 장관급회담 서울 개최를 재의함에 따라 그동안 북측의 일방적인 이행 거부로 추진되지 못했던 남북한간 각종 현안이 이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회담은 지난 4월 임동원(林東源) 특사 방북 당시 6개항으로 구성된 공동보도문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 스케줄을 마련했다. 그러나 북측의 태도 변화로 지난 4월 이뤄진 이산가족 교환 방문 외에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관급회담에서는 공동보도문 미

개성공단·군사 당국회담등 미이행사항 일정 전면조정

이행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 협의사항은 ▲5월7~8일 서울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회의 ▲6월11일 관경철상회 개최를 위해 6월11일 열린 예정이었던 당국회담 ▲5월 중으로 예정됐던 북한 경제시찰단 남한 파견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등이다.

이중 북한이 전화봉지문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남북철도 연결문제와 관련, 서

음-신의주 사이의 경의선과 북한의 선(先) 제의로 합의된 동해선 철도 연결사업이 우선 논의될 법하다. 또 4월말 금강산에서 진행된 제4차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제5차 이산가족 상봉문제 역시 협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안 책임자지는 24일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을 추석을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갖자는 제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북측의 남북관계 복원 의지가 강한 만큼 군사당국자 회담이 어렵지 않겠고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철도연결을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 회담은 아니어도 군사 실무회담 개최는 필수적이다.

차세현기자 chd@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2. 7.26(금)



北 서해충돌 유감표명

배경·향후 남북관계 영향

북한이 25일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나섰으므로 냉각된 한반도 기류가 해빙기에 들어설 조짐이다. 남북관계 복원뿐 아니라 미측의 대북특사 파견 협회 이후 공동 달린 북·미 대화 재개에도 일단은 정신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은 8·8재·보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선거 정국, 북측의 '유감' 표명에 대한 평가를 놓고 정치권외 평가가 엇갈려 '햇볕정책' 등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南정서 악화... 위기 느낀듯

●북한 태도 변화 배경 북한은 서해교전 이후 초래된 검색 국면을 더 이상 방치해선 곤란하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남한내 대북 정서가 악화되고, 특히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급증함에 따라 돌파구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 행정부의 강경기류가 견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EDO)사업 보류 등 미국내 대북 압박 여론이 강화된 것도 국면전환을 필요로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회담은 남북한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교착국면 이후 남북관계 진전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향후 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 재개로 이어지면 가속 시도로 쓰기로 결정한 우리 잉여밭의 대북 지원도 가능해진다.

●문제점 및 논란 가능성 북한 서해교전을 '우발적'이라고 한 점, 또 '유감'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논란의 핵심이

북·미 및 남북관계 두 축 모두 교착된

이례적 태도변화... 한반도 냉기류 견힐듯

북측 '유감' 표현 해석싸고 정치권 논란

상태는 일치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남한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북·미 남북 대화 물꼬 이달 말 보느냐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향후 북·미 및 남북, 북·일 관계의 가능성이 될 전망이다. 북측은 이미 백남준(白南準) 외무상의 파견 방침을 확인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전향된 자세를 취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북측이 '성의있는 태도'를 발휘하지 않는 이상 남북 대화를 먼저 제시하거나,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우리 정부도 북측의 이번 유감 표명을 '성의있는 조치'로 일단 받아들였다.

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우리가 요구해온 ▲명백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에서 미흡하다는 시각이다.

북측이 남북한 교전 역사상 직접적으로 우리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것도 사건 발생 1개월 만에 해명을 했다. 때문에 정부는 "상당한 진전으로 본다."는 평가이지만 한나라당 등 일부 정치권의 평가는 인색하다. 쌍방이 노력하고자 한 점도 양측 책임을 다 거둔했다는 것이다.

ARF회의와 8월의 장관급 회담 실무 접촉에서 보일 북측 태도에 따라 선거 정국에서 대북 논쟁 방향다가 잡힐 전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김형기 통일부 차관이 25일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장관급 회담 재개를 제의한 북한의 전화통지문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도순진기자 pado@kdaily.com

김형기 통일부 차관 문답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은 25일 북한이 서해교전과 관련, 유감을 표명한 전화통지문을 보내온 데 대해 "항클어진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어떤 의미가 있나.

그동안 서해교전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대북 여론이 악화되고 미

재발 방지할 위해 노력하고자 언급한 점에서 지난 90년 동해안 침수한 침투 사건 때 북측이 취했던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을 통한 간접적 유감표명보다 대단히 진전된 형식이다.

●정부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26일)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신중히 대처할 것이다. 8월초 금강

산 실무회담 대표단 문제나 분회담 시기, 답신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할 나눌 계획이다. ●그간 남북 정부

"우발적인 충돌 언급 남북관계 복원 전기"

국과의 대화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켰다. 북측의 이번 제의가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는데.

전화통지문의 '시해해상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무력충돌'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는 첫번째 문장은 서해 사태에 대한 북한측의 명백한 사과와 유감 표시로 간주할 수 있다.

●사과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는데.

방식이 중요하다. 직접 유감 표명을 했고

당국간 교류가 끊겼었는데.

지난해 6차 장관급 회담 이후 냉각돼 있는 검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지난 4월 특사 교환을 통해 남북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그 가운데 이산가족 교환만 이뤄지고 나머지는 이행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번 북측 제의를 계기로 해서 항클어진 있는 관계를 장관급 회담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복삼기자

youngtan@kdaily.com



2000년 이후 장관급 회담

시기	장소
제1차	2000년 7월29일 ~ 7월31일 서울 신라호텔
제2차	2000년 8월29일 ~ 8월31일 평양 고려호텔, 인민문화궁전
제3차	2000년 8월27일 ~ 9월30일 제주 롯데호텔
제4차	2000년 12월12일 ~ 12월16일 평양 고려호텔
제5차	2001년 9월15일 ~ 9월18일 서울 올림픽피아호텔
제6차	2001년 11월9일 ~ 11월14일 금강산 금강산어관
제7차	미정 서울

남북관계 정상제도 복원기도

• 北 서해교전 사과 배경·전망

南·美 강경태도 의식...식량지원도 염두 대화물꼬로 움츠렸던 '햇볕' 탄력 받을 듯

북한이 25일 서해교전 사과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된 남북대화 를 재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경색태 도는 남북관계가 전면 복원될 전망이다. 이르면 8월중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 서울에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관여권이 벗어난 햇볕정책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북·미 관계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 무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해 대화재개 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분석된다. 경 우에 따라 무산된 미국의 대북북사계 획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다.

북측의 전봉은 내용은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과 남북 쌍방의 재발방 지 노력 촉구 ▲제7차 남북 장관급회 담 서울 개최와 이를 위한 8월초 금강 산 실무접촉 제의 ▲남북 철도연결·이 산가족상봉 재개 제의 등이다.

북측의 서해교전 유감표명은 내용과 형식 모두 이례적이다. 북측의 남북관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북 서해교전에 로 조성된 불리한 상황을 배제되고 관 계 복원을 하자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서해교전과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나서 강하게 사과를 요구하 고 미국이 대북북사 과정을 철회키로 결정하는 등 대외환경이 급속 악화된 것에 대해 북한이 결단을 내렸다는 분 석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남북관계 정 상화에 따른 식량지원 등을 염두에 뒀 을 수도 있다.

다만 서해교전을 유발적 시간'으로 표기한 것은 북측이 원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긴 하지만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북한 협정의 북방한계선 (NLL) 침범에 이은 선제 공격임을 그 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성 각이 든다.

북한은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에 서 더 나아가 7차 장관급회담의 서울 개최를 재요청한 것은 남북관계 정상화 도 운명의 지를 구제화한 것이다. 순서 대로라면 임동원(林東源) 대북특사 방 북시 남북회담에 따라 제2차 남북경협 추진협의를 먼저 개최해야 하지만 서해교전 이후 흐트러진 남북관계 일 정을 복원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호연기자 chy@kuryong.com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우리측은 서울에서 제7차 북 남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쌍방사이에 합의된 북남 철도연결문제, 출어권 가축진척 문제 등 4·5 공동보도 문 이행 문제와 그밖에 관심하는 문제들을 원만히 협 의하기 위하여 오는 8월초 금강산에서 북남 장관급담 대표들의 실무접촉부터 갖자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는 귀국이 우리측의 이 건설적인 제안에 긍정적 으로 호응해 나오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북남 장관급회담 단장 김영성

• 北 전회봉지문 요지

오늘 북남 쌍방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그 이 행을 위한 4·5 공동보도문을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중 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얼마 전 서해교전에서 유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 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간주한다.



/ 중앙대신기시연

전군 지휘관 청와대 오찬

이날신 협창의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오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지휘관은 가운데 인 시일을 하고 있다.

“남북 꼬인 매듭 푸는 실마리”

• 김형기 통일처관 문답

김형기(金亨基) 통일부 처관은 25일 오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측의 전봉은 풍지 사실을 전한 뒤 “북한이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노력을 인정한 것은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 사 실상 사과와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다음 은 김처관과의 일문일답.

측을 재의해왔는데, “장관급회담 대표 가운데 몇사람을 보낼 게 획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부처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겠다”

—7차 장관급회담은 언제 개최될 것으로 보

나. “실무접촉에서 결정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이번 북측 제의를 계기로 풀려져 있던 남 북관계를 다시 장관급회담부터 복원해나갈 수 있는 기분이 마련됐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 가한다”

—북한의 유감표명에 대한 입장은.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명백한 사과와 유 감표명에 간주한다”

—북측이 장관급회담을 위한 금강산 실무접

2002. 7.26(금)

시민단체 "북 유감표명 사실상 사과"

남북관계 회복 기대

25일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데 대해 대부분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사실상의 사과'로 받아들여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진은주 사무국장은 "이번 유감표명은 북한이 남북화해와 긴장완화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며 "앞으로 민간교류가 활발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사실상의 사과'인 유감표명을 했으니, 사료용으로 돌리기로 한 재고 씬을 다시 북한에 보내도록 하는

등의 화해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북한이 이처럼 진창적인 태도로 나온 만큼, 우리 정부도 굶주리는 북한주민에게 남쪽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권 통일협회 박준우 간사는 "북쪽이 예전과 달리 공개적·공식적으로 '유감 표명' 입장을 밝힌 것은 꾸준히 추진된 햇볕정책 덕에 상대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꼭막힌 南北 관계에 '숨통'

■北 "서해충돌 유감" 표명

북한이 25일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7차 장관급 회담을 재의하고 나침에 따라, 5월 이후 교착국면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와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취소로 경색된 한반도 정세가 정상화할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북측의 유감 표명은 서해교전이 북한 지도부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시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유감 표명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남한내의 이견, 미국의 찬반 등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 향후 당국 간 관계 회복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최대 현안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문제도 거론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측이 회담에서 서해교전 유감 표명을 번복하는 등 정치적 입장을 강조할 경우 대신 정국과 맞설려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수도 있다.

북미관계 북한의 회대 손짓은 서해교전 후 사실상 관계 개선 의지를 표기했던 미국의 태도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의 참석이 확실시되는 31일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향후 한반도 주변정세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

"교전 北지도부 의사 아니었다" 간접 시사 장관급회담서 이산상봉 등 합의 가능성 北·美관계도 영향... 불신감 극복이 관건

북측의 유감 표명에는 서해교전 사태로 야기된 고립을 남북관계에 종단 숨통을 트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사실 북측은 남측의 월드컵 선전을 축하하는 등 서해교전으로 인한 정치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대남 유화제스처를 보여왔다. 그러나 남한 내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북 지원 동결론이 제기되는 등 감경 여론이 높았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개화를 추진 중인 북한에게 상당한 악재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남측이 준비했던 식량 30만톤 지원 카드를 포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관측된다. 동국대 교유환(高有煥) 교수는 "북측이 인권의 위기상황을 선남후미(先南後美)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면서 "특히 현 정부와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리서 다시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 남북, 북이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북측의 무용담과 서해교전으로 무기 연기된 미국의 특사파견 논의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뿌리 깊은 대북 불신감을 감안하면 북미관계의 급격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만만찮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북한의 대남 유감 표명 사례

- 1972년 5월 4일
김일성,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면담에서 청와대 무장공비투사 사건(68년 1월 21일)에 대해,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었으며 우리 내부에서 생긴 죄의 행동분자들의 죄."
- 1976년 8월 21일
판문점 도끼인명사건(76년 8월 18일)에 대해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구두 메시지, "유감스럽게 생각.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방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 1995년 7월 21일
베이징(北京) 영화당 북측 수석대표, 베이펙스호 인공기계양사건(95년 6월 27일)에 대한 진문, "아래 일종의 실무적 학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 1996년 12월 29일
침수함 침투사건(96년 9월 18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깊은 유감(deep regret)을 표시한다.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 안정을 위해 함께 힘쓸 것."

한국일보

2002. 7.26(금)

北, 이번에도 "사과" 표현은 안써

"우발적 충돌" 공동책임 제기
예전과 달리 한달만에 "유감"
"南에 상당한 양보" 시각도

수석대표가 1개월 만에 우리 수석대표에게 직접 유감의사를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이 주목하는 것도 북한의 이 같은 표현 방식과 시기이다.

북한은 25일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발적 무장충돌'이라고 표현, 사실상 공동 책임을 제기했다. 이는 서해교전을 '북측의 계획적 도발'로 규정한 남측 당국의 입장과는 상치된다. 북한은 또 북방한계선(NLL)이라는 도발장소와 시점이 명백한 태도 '엄마전 서해해상'이라며 피해나갔다. 북한은 이어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간주한다"면서 소극적인 재발방지 의지를 보였다.

분단 이후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김일성(金日成) 주석이 1972년 5월 4일 방북한 이후락(李厚洛)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구두로 1·21 청와대 무장공비투사사건을 해결한 이후 모두 5번이다. 북한은 그러나 단 한 차례도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유감표명은 96년 침수함 침투사건 때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진전된 측면도 있다. 북한은 당시 북미회담을 통해 시진 평성 3개월 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유감을 표시했으나, 이번에는 북측 장관급회담

체면을 중시해온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번 유감 표명은 남측에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유감 표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해교전을 미국의 사주에 의한 남측의 도발이라고 비난해온 군부의 반발에 부딪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주석(徐柱錫)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실장은 "북한이 남측의 사과 요구에 응하고 회담을 제의해 최소한의 격식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남북장관급 회담이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 건설사업과 경의선 철도연결사업 등 경제협력사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현대건설과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북한측과 추진해오던 사업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음 것으로 평가돼 왔다. 현대측은 개성공단을 건설한 뒤 한국 기업을 적극 유치해 생산 및 수출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경의선 합도연결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럽에까지 이르는 대륙철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군부가 개방정책에 반발해 경의선 연결에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동해와 서해의 어장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임진강 수해를 방지하는 사업, 금강산탐봉과 빙지와 수자원 공동관리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승윤 기자

hyunssy@hankyung.com

‘지원’ 아쉬운 北 유화제스처

‘서해교전’ 유감표명 왜 했나

정부는 북한의 진중문을 환영하면서도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을 무시하고 있다. 북한의 전기 제의가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되지만 서해교전을 유발적 사태라고 규정하는 등 서해교전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의 수준이 의회권 국민감정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할 것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진중문이 갖는 의의는 다각도로 분석하며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대화재개 쪽으로 기조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도 평가 - 정부는 북한이 특정 사안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996년 동해안 잠수함 침몰사건때 북한이 북-미회담에서 외부성 대변인 명의의 유감을 표시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장군급위원 단장이 우리측 수석대표에게 유감을 표명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유감 표명 시기도 사태방정 26일만으로 96년의 3개월에 비해 훨씬 짧다. 뿐만 아니라 장군급위원을 위한 실무접촉의 구체적 장소와 시간까지 제시하고 있어 문제점 풀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유화 제스처는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을 비롯한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최근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문명에 부딪히 법 지도 모델, 임금과 월가 및 환율 인상까지 하며 경제난 타개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대립상이 지속되는 것은 북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우리의 약 30만 지원 중남 길정도 북한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남한에서의 햇볕정책 전반 공방일 의식했다는 분석도 있다. 남한 사회가 서해교전 이후 격렬한 대북정책 공방 끝에 강경 쪽으로 방향이 정러되는 듯하자 대북 포용정책에 힘을 실기 위해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이다.

아베에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미국 경제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집권 공화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상황이다. 서 '약의 속' 국가로 분류된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긴장완화를 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전망 - 북한의 대화 제의에 정부는 환영도 인정에 유익한 민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할 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

화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불분명해 외형상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유감 표명은 외교적으로 볼 때 시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은 서해교전을 "우발적으로 발생한 부러충분"이라고 밝힘으로써 '의도적 도발'이라는 우리 군의 조사 결과와는 상반된다. 또 북한은 재발 방지 요구에 대해서도 남북 공동의 노력을 담고 나와 마치 공동책임인 것처럼 강변하고 있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촉급 요구했던 책임자 처벌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런 점도의 입장 발표로 열드린 의중에서 사상장까지 발생한 도발을 당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감정이 해소될 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향후 방안을 종합 예정이다. 정부의 햇볕정책 기초를 감안할 때 일단 실무접촉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북한이 좀더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경우에는 제7차 장군급회담도 열려 지난해 11월9일 성과없이 끝난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북한에서 이번엔 제안한 의제인 남북철도연결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다. 또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계속기로 했던 민간교류가 활기를 띠게 돼 8-15 남북공동행사는 물론 비정부 차원에서 합의했던 8-15 남북축구를 경기 개최에도 진심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 식량지원 등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 남북대화 재개 북-미관계 개선으로 연결돼 한반도에 훈풍이 불게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되지 않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익구 신촌호기자 egkim@kmb.co.kr

경제난 타개 시급·남 강경론도 의식 ‘우발적 사태’ 규정 국민감정과 거리 정부, 일단 기대감속 여론동향 주시



침몰 고속정 합동인양

이남신 함정외장(오른쪽)과 리연 리모프 주한미군사령관이 25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제17차 한미군사위행회 상설회의에서 서해 고속정 인양작전을 위한 한-미 협조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권영기사 22면) 김민희기자

남북관계 해빙 계기될 듯

■ 北, 7차 장관급회담 재의
긴장장기화했던 경제난등 부담
美 강경태도 유화메시지인듯
정부 '신중대응속 진전 노력'



남북장관급회담 김형선 북측단장이 25일 오후 우리측 대표단 정세현 통일부 장관앞으로 '서해교전 유감 표명 및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서울 개최'를 재의하는 전 회 통지문을 보면 기묘대 김홍태 통일부 대변인이 전 행문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동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과의 대화 재개
■ 통해 미국에 간헐적인 유화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노린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최근 북한
의 경제개혁 움직임과 어려운 경제 사정도 더 이상
남북 관계를 방치할 수 없게 한 요인으로 평가된
다.

◇ 향후 전망=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하되 북측과
의 대화는 적극 진전시킨다는 입장이다. 북측이 서
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을 한데다 이번 북측의 재의
가 남북간 냉각 국면을 풀릴 확률의 기회로 판단하
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유한 동국대 교수는 25일
"이번 재의는 북측이 현 정부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
룩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
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초 금강산에
서 열릴 장관급회담 실무집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31일 분주나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 북한의 백남순 외
무상도 참석할 것으로 보며 이 회의에서 남북은 돌
론 마·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연세집속 결
과가 주목된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며구름이 잔뜩 끼었던 한반도에 한줄기 빛이 내렸
다. 북측의 서해교전 유감표명과 제7차 장관급회담
재의는 교전사태와 미국의 특사파견 철회로 급속히
간색해 온 남북 관계가 일단 해빙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재의 배경=북한 당국이 남북간 대화의 현실적
인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해교전과
미국의 특사파견 철회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국면의
장기화가 시달린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측에도 부
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서해교전 이후 남한 내에서 햇볕정책에 대
한 논란이 그치지 않는데다 미국의 대북 태도가 더
욱 강경해 지고 있는 것도 남북대화에 나서게 한

나는 것이다. 타이밍이 중요해 남
북한이 다양한 채널을 가동, 통일
접촉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우리측이 북측에다 대고
"지금 재의하지 않으면 쌀은 물론
너 같 것"이라는 경고(?)도 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이 이달 초부터 임금 인상,
환율 현실화 등 일련의 경제개혁
을 시행한 것에도 밀접한 연관이

북한이 서해교전 이후 처음으로
2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재개 의사표
명한 점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공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이 서해교전을 '우발
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발방지
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는
등 책임회피 측면이 없지 않아 한
후 회담을 앞두고 논란이 일 것으

北, 서해교전 유감표명 배경

'우발사건' 규정... 앞으로 회담에 논란일 듯
'남는쌀 사료화' 발표 하루만에 대화재의
한국여론은 냉랭... 정부도 신중처리 입장

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북측
의 재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도 이같은 북측의 '노답수'에 대
비,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갑작스런 입장선회 배
경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이 가
능하다. 공급물결도 정부가 재고
빚을 시료로 처리한다는 방침이
선 뒤 하루만에 북한이 대화를 재
의했다는 것은 대북지원 쌀 30만~
50만t을 생기기 위한 것이 아니

있어 보인다. 경제개혁이 성공하
려면 대외관계가 좋아야 하고, 특
히 남북관계가 호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한은 한때 임동원 특사
방북시 합의했던 경제시찰단을 서
둘에 보내 북한 실정에 맞는 중소
기업 위주로 자본주의 경영기법을
배우려 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
서 이해된다.

북한이 서해충돌 이후 미국측에

거친 비난을 퍼부었지만 정작 남
한을 향해서는 비난을 극도로 자
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화의사
를 간접적으로 비추었던 것도 대
화재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
을 수도 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
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관영매체
를 총동원, 6·15선언을 강조하면
서 남한과의 관을 놓치지 않으려

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북한의 유감 표명
에 대해 국내 여론은 여전히 따갑
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북
측은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표현,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 쌀지원
과 북미대화 재개를 노린 유화세
스처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지민연은

'시교로 볼 수 없다'는 반응이
다. 북한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간주하며
시비거리를 남겨두고 있다. 대화
가 잘 안될 뻔 또다시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김기흥기자 kidong@sgt.co.kr

사과 '어물쩍' 실리얼기 속셈

世界日報

2002. 7.26(금)

매일경제

2002. 7.26(금)

“기델곳은 남한뿐” 화해 시도

지난 5월 일일 예전이던 경합추진위를 무산시킨 데 이어 서해교전을 일으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이 돌연 화해 제스처를 보였다.

정부는 북한의 유감 표명을 즉각 사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시킴 기반을 마련했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 내 보수·진보 세력 간 갈등과 한·미 갈등을 이끌어내려는 고도의 대화전략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유감 표명을 수용할 것인지를 놓고 남한 내 갈등을 고조시키고 대북 강경 기조로 돌아선 미국과 햇볕정책을 고수하는 우리 정부의 의견차츰 파괴되는 전술을 내세운 것이라는 해석이다.

■ 북한 의중은

정부는 북한의 이번 제의를 서해교전으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불편한 상황을 매듭짓고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북측 의지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추진중인 경제개혁 등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남한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식량지원 문제도 그렇다.

우리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사과를 요구하고 중국 러시아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압박한 것도 북한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남한이 돌아서면 북한은 고립된다’는 무언의 압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서해교전 후 미국의 대북 태도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것도 북한을 남북대화에 나서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서해교전 후 미국이 고위급 특사 방북을 철회하는 등 강



김종일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오후 북한이 보낸 '서해교전 유감 표명' 전문문을 발표하고 있다. (해)

남북 대화 재개
계기 마련
전망은 불투명

김기조로 돌아선 만큼 북한은 대화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미심쩍어하는 시각도 있다.

서해교전으로 인한 국제사회와 남한으로부터의 신뢰 추락이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대결국면 장기화에 따른 위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특히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국면

속여 대화 카드를 던짐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화 이미지를 심어놓고 실제 회담에서는 우리측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회담 결렬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대화, 과연 걸릴까

지난 5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는 북측의 대화 제의로 일단 정상화 계기를 마련한 것만은 틀림없다.

정부측이 김영성 북측 단장 명의의 유감 표명을 ‘성의있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간 합의는 됐지만 이행되지 못했던 △경의선 철도와 개성-군산 도로 연결 △이산가족 문제 해결 △개성공단 조산 △금강산 육로관광 △경협 협의회 교환 및 후속조치 진전을 위한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 현안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문제도 거론될 수 있으나 언제 실현 가능할지 회의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북측의 유감 표명을 놓고 남한 내 세력간 갈등이 벌써부터 표출되고 있어 회담 분위기가 마냥 호의적이지는 못할 것 같다.

더욱이 회담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온갖 관계로 남북회담을 무산시켜온 전례에 비추어보면 이번 회담도 개최일 아침에 가서야 개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회담이 열려도 북측이 북방한계선(NLL) 폐지 등을 요구해도 남북회담을 연기시키는 수단에 남측회담을 건락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니영필기자 philip@mkco.kr

‘사과’ 수용놓고 南南갈등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놓고 또 다시 남남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북측의 유감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이며 이를 평가하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회생군인들의 유가족 등은 “그게 무슨 사과냐”며 회담을 수용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해교전으로 햇볕정책에 타격을 입은 정부는 북측 제의가 온 지 두 시간도 지나기도 전에 “사과의 의미할 것”으로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설명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기만함을 보였다. 김철기 통일부 차관은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북측의 태도 변화할 긍정적 평가한다”고 했고 한화갑 대표는 “북한이 과거와는 달라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며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남경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긴장한 사과로 납수 없다”면서 “재발방지 약속, 처벌자 처벌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도 “(유감표명이) 북한의 진정한 의사인지, 그리고 진의가 무엇인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아예 “그런 게 무슨 사과냐. 다분히 의도적인 도발이었다”고 우발적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청와대도 이 같은 상반된 반응

서해교전 이후 일지

- △6월 29일 - 서해교전 사태 발생, 북한에 해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촉구, 북측은 정상급 회담 거부하고 “남조선 해군이 일제 침범했다” 주장
- △7월 1일 - 북측 “미국이 북남관계에 벽기를 치기 위해 만든 것” 주장
- △7월 2일 - 김대중 대통령 방일 귀국교에서 대해경고 메시지, 미국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 철회
- △7월 7일 - 국방부 조사결과 발표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로 규정
- △7월 9일 - 북측 침몰 환선 인양 작업일짜의 동원선박 침몰 통보 요구
- △7월 25일 - 김 대통령 “북한의 사과 관철시키겠다” 발언, 북측 유감 표명 및 장관급 회담 제의

을 의식한 듯하다. 청와대는 박선숙 대변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논평해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처럼 들렸던 통일부에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 '수용' 한나라 '미흡' 자민련 '불가'

■ 정치권 반응 제각각

25일 오후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 표현과 함께 장관급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수용'했다고 논평했으나, 한나라당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자민련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우리들의 요구에 비해 미흡하고 특히 서해교전 희생자들의 애타운 절음을 생각할 때 더없이 착잡하지만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북한측의 태도 표현과 제안은 수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북한은 겁이난 철도 연결 등 그동안 남북 단국자간 합의사항이 상당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정부는 확고한 안보대세를 바탕으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유감을 표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발적' 운운하며 자신들의 무력도발 책임을 직접적으로 시인하지 않는데

다구체적 재발방지 약속도 없어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북한의 유감 표현에 대해 "북한의 진정한 의사인지, 그리고 진의가 무엇인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우리쪽이 서해무력도발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남 대변인이 전했다.

자민련의 유운영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행위를 우발적 사태로 규정하며 유감을 표명한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분명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필 총재도 "그것이 무슨 사과냐"며 "다분히 의도적이며 우발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유 대변인이 전했다.

이상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쪽의 유감 표현은 서해교전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전향적 자세로 평가한다"며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협력실과 같은 항구적인 평화보장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수 박찬식 최원길 기자
cspcsp@han.co.kr

한국경제

2002. 7.26(금)

한나라 "진정한 사과 아니다" 민주당 "미흡하지만 긍정적"

北제의 정치권 반응

정치권은 25일 북한이 서해도 발사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 데 대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재발방지 약속이 없어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우리 요구에 비해 미흡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야 하며 북한은 남북단국자간 합의사항이 상당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은 "서해교전 희생자들의 애타운 절음을 생각하면 더없이 착잡하지만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북한측의 태도 표현과 제안은 수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 김동필 총재는 "그것이 무슨 사과냐"며 "다분히 의도적인 태도 우발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철·김동욱 기자
leejc@hankyung.com

평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북한의 진정한 의사인지, 진의가 무엇인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쪽이 도발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발적 운운하며 자신들의 무력도발 책임을 직접적으로 시인하

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재발방지 약속도 없어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북한의 유감 표현에 대해 "북한의 진정한 의사인지, 진의가 무엇인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우리쪽이 서해무력도발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2002. 7.26(금)

청와대·정부 '긍정평가'

신중한 태도속 남북관계 전전 기대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25일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일단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다.

○ 청와대=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일단 남북관계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수용'이나 '거부'의 뜻을 분명하게 못박지는 않았다. 박 대변인은 "북한의 입장 표현 내용과 전후를 충분히 알아본 뒤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통일부

에서 밝힐 것"이라고 직접적인 반응을 피해왔다.

청와대의 이런 신중한 분위기는 정부가 그동안 북한측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해온 것에 비춰 보면, 북한의 입장표명이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중 환영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남북간 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측이 사과에 가까운 유감표명을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태도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여론의 추이를 엿어가며 교착된 남북관계 풀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단호한 자세로 북한측에 사과와 재발방지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압박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국방부=김종환 고속정 인양작업 요양에 두고 있던 국방부는 북한의 유감표명이 알려지자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표명으로 남북한 사이에 극한상황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인양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국방부는 30일째 고속정 인양작업에 들어갈 것이며, 인양작업 기간 인양의 사태에 대비해 한-미 연합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두 나라는 1976년 8월21일 문명진 미추마우 집단적전 당시 유사한 상황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부="관계부처와 협의할

거처였다"고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했지만 "형용어진 남북대화가 복원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남북해 8-15 남북공동행사를 위한 실무회담을 하고 들어온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관계자들을 통해 북쪽이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단국간 대화 재개 의사가 강하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96년 동해안 잠수함 침몰사건 때에는 3개월의 진통 끝에 북한 외교부가 북-미 회담을 통해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사전 발령 전달도 되지 않아 직접 유감표명을 한 것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걸 남북정책기획실장
skkim@han.co.kr

25일 오후 북한(조선중앙텔레비전)이 정규 보도를 통해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남북 장관급회담을 제의한 북한측 전외통신 내용도 발표하고 있다.



이회창 “北진의 지켜봐야”

노무현 “태도변화 긍정적”

한국일보

2002. 7.26(금)

金농림 “재고쌀 北지원 검토”

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장관은 25일 재고 쌀 400만석을 북한에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 위 담변에서 “오늘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보낸 만큼 재고 쌀을 가축사료로 처리하는 대신 대북 지원용으로 전환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인준현기자 dejvu@hk.co.kr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에 대해 한 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함께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지역 지방연설회 참석 도중 이 사실을 보고 받고 “(북측의 유감 표명이) 북한의 진정한 의사인지, 그리고 진의가 무엇인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고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우리측이 서해무력 도발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북측의 유감 표명은 사과로 볼 수 없다.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장관급 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오만한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근 ‘햇볕정책 한계 봉착’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노 후보는 별도 논평을 통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측으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야 하고 북한은 입관성 있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의 유종필(柳鍾弼) 공보특별보는 “북한의 유감 표명이 미흡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다”며 “이들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북측의 의도 잘 살펴서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朝鮮日報

2002. 7.26(금)

“北 진정한 사과로 볼수 없어” “수용후 재발방지 보장 받자”

전문가들 견해

서해도발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진정한 의미의 사과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으나 향후 정부의 대응에서는 양갈래로 엇갈렸다.

▲이상우(李相禹) 서강대 교수=북한측의 유감 표명은 특이한 변화로는 해석되지 않으며, 과거 도발시에 평화공세를 펼쳤던 ‘정석(定石)’대로 움직인 것이다. 또한 8·8 재·보선과 12월 대선 등 남한에서 본격적인 선거정국의 계기를 활용, 도발을 회색시키려는 의미도 있다.

만일 정부가 북측의 유감 표명을 수용해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에 입한다면 북한이 김정일 담판을 비롯한 대규모 평화공세를 지속할 우려도 있다.

▲송영대(宋榮大) 전 통일원 차관

=진정한 의미의 사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의도적인 도발을 은폐하면서 교전의 남북 공동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관련자의 처벌문제 언급이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는 북측의 진중문을 수용하지 말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관련자 처벌에 관한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야 한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북한측의 유감표명은 서해 교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개입돼 있지 않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경제개혁 조치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정부는 북측의 사과가 나온 만큼 7차 장관급회담에 용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원상회복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정용석(鄭鎔碩) 단국대 교수=핵심은 북한의 계획적 도발이라는 점인데, 북한이 공동책임론을 제기한

것부터가 해결 방향을 왜곡한 것이다. 북측의 유감을 받아들이는 대신, 북측으로부터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조건부 수용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학순(白鶴淳) 새종연구소 연구위원=북한이 과거 유사사태 때 유감을 표명한 적이 많지 않고, 서해사태 후 1개월 만에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고는 점에서 놀란다. 북측이 서해 사태를 ‘우발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북측의 사과 표명이 나온 이상,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인해야 할 것이다.

▲지만원(池萬元) 군사평론가=총한방을 쓰려고 해도 김정일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게 북한인데, 대포질 쏘고서 우발적이라는 것은 믿고 안 된다. 남쪽이 북한에 코치해준 내용인 것 같다. 짜고 치는 것이다.

/樞景編기자 kkb@chosun.com

경향신문

2002. 7.26(금)

쌀지원 재개 검토

정부 “北태도변화 고려”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무산됐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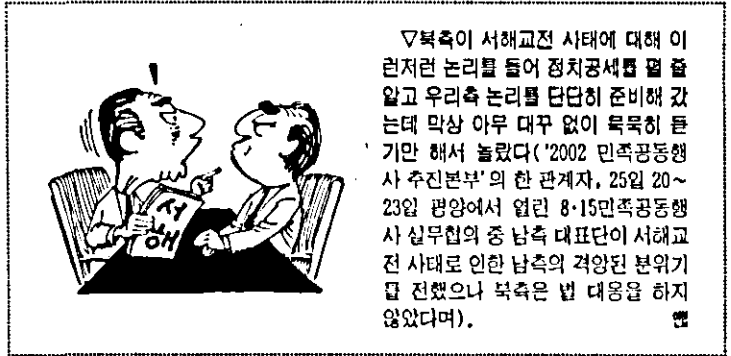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북한의 태도 변화로 남북관계가 급전전환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 고민인 만큼 그동안 접어두었던 쌀 지원 재개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장관도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참석,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북한에 쌀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해교전 사태 이전에 논의된 쌀 대북지원 규모는 30만t(2백만섬) 정도다. 김희근기자

2002. 7.26(금) ▶

경향신문

2002. 7.26(금)



▽북측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이 런저런 논리를 들어 정치공세를 펼칠 줄 알고 우리측 논리를 단단히 준비해 갔는데 막상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듣기만 해서 놀랐다('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의 한 관계자, 25일 20~23일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공동행사 실무회의 중 남측 대표단이 서해교전 사태로 인한 남측의 격앙된 분위기가 달렸으나 북측은 법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 '北사과' 반응 3黨3色

한나라 '사과 미흡' 민주당 '긍정 평가' 자민련 '어불성설'

정치권은 25일 북한이 서해교전에 유감을 표명하고 장관급회담을 재의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총경 후보는 경기 안성 정당연설회 도중 소식을 전해 듣고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며 "도발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 우리측 요구사항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려도발 책임을 직접적으로 시인하지 않아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총경 후보는 "속단은 이르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확고한 보증을 받아내야 하고 북한은 남북당국자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갑(韓均甲) 대표는 "군건한 안보태세 위에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를 풀어야 할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종필(金宗弼) 총재는 "그것이 무슨 사과냐"며 "다분히 의도적인데 우발적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는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예외 신중론 반응을 보였다. 박선숙(朴仙淑) 대변인은 "북한이 보내온 내용과 제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정부 입장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근·최재영기자 herubeng@kyunghyang.com

한나라 "진정한 사과 아니다" 민주당 "北태도변화 긍정적"

정치권 반응

정치권은 25일 북한이 서해 무력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남북장관급회담을 재의한 데 대해 북한측 태도변화를 수용할 것인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먼저 청와대는 즉각적인 논평을 유보한 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통일부로 넘기는

중 이에 관한 보고를 듣고 "북한의 진정한 의사인지, 진의가 무엇인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측이 도발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통일부위 조영규 의원은 "8·8 재·보선을 앞두고 입장을 작을 하거나 햇볕정책 지지세력을 간접지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모

- 청와대 "구체입장표명은 통일부가"
민주당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 민정서를 감 안한 듯 "서
태도를 취했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해 나갈 것"이라며 "그중에서 보내 온 (통지문의) 내용과 전후를 충분히 알아본 뒤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통일부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이 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던 점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석했다. 민주당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 민정서를 감 안한 듯 "서

世界日報

2002. 7.26(금)

한-자 "우발적이라니 말도안돼"

민주 "미흡하나 수용했으면..."

북한이 25일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장관급회담을 재의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불안정한 사과"라며 평가절하한 반면 민주당은 긍정평가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무려도발 책임을 직접적으로 시인하지 않은데다 구체적인 재발방지 약속도 없어 불안정한 사과표시"라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그것이 무슨 사과냐"며 "다분히 의도적인데 우발적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미흡하지만 북한측의 태도표명과 제안을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상환기자 shyoon@sqt.co.kr

태도를 취했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해 나갈 것"이라며 "그중에서 보내 온 (통지문의) 내용과 전후를 충분히 알아본 뒤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

해교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는 말을 내놓지 않았다.

'햇볕정책 한계봉착' 법안으로 논란을 빚었던 노무현 대총경 후보는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보증을 받아내야 하며, 북한은 경의선철도 연결 등 그동안 남북당국자간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며 진지한 사과를 거듭 촉구하면서도 북한의 의도와 국내정국에 미칠 영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회창 대총경 후보는 안성 정당연설회 도

北 서해충돌 유감표명

전문가들 어떻게 보나

서해교전과 관련, 북한이 전격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남북 회담 전망을 보다 밝게 한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지만, 유감표명을 했다고 해서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애초 의도를 의문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의 유감표명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정리한다.

“햇볕정책 지속 희망 강조한것”



고유현
동국대교수
북한학

김정일 의도와 무관
돌발상황 재차 표명

인해 햇볕정책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것 같다. 미국의 확고한 대북 강경책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감소 등 위기 참 모면하기 위해서도 남북회담을 진전시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이 최근 배급제 포기 등 시장경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려는 자구 노력을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안영섭(安瑛瑛) 명지대 북한학 교수 북한 변화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변

당초 요구사항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야 한다.

● 서주석(徐柱錫)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서해교전 후 곧바로 북·미회담이 중단된 데다 남한 내에서도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자 나뉘게 되어 결국 미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빨리 이뤄지리란 예측은 아무도 못했지만 그동안 힐드립, 축하, 조평통 메시지 등 남북회담 손질을 꾸준히 보내왔다는 점에서 유감표시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이



서주석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장관급회담 열며 해결을



안영섭
명지대교수
북한학

대북지원 중단등 우려
대화재개 위해 불가피

● 고유현(高有煥) 대한매일 명예논설위원 겸 동국대 북한학 교수 서해교전이 남북관계의 결빙들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유감표명을 한 것 같다. 또한 서해교전이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뤄진 돌발 상황이란 점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장관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교착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메시지로, 북한이 이처럼 빨리 직설적으로 사과를 표명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그만큼 북한의 사정도 매우 급박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 대선정국의 변화 등 서해교전으로

개방-강경 北 이중노선 정확한 인식 필요
서울서 이산상봉 제의등 진실성은 평가를

화의 속도이다. 북한은 늘 개방과 강경 노선을 함께 취하고 있다. 내부 체제를 단속하기 위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하기도 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는 개방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대화할 제의한다.

서해교전이 우발적 사건이라는 북한의 해명을 보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물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의외로 너무 커지자, 당황했을 수도 있다. 북한의 국기경영 수준은 (우리나라의) 60년대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일반인은 절대 해치지 않는다.'는 미피어의 전술조차 못 따른다.

햇볕정책은 이론적 틀은 맞지만 북한에 오판의 소지를 준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이렇수록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때도 단호함을 함께 보여야 한다. 이번 사과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측의

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은 장관급 회담을 열면서 해결해도 된다고 본다. 사과만으로도 일단 회담을 여는 데 큰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남북회담 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 실질적인 내용을 이번 제안에 담았고 장소도 서울로 제의한 점 등에서 단순히 국면을 호도하려는 북한의 술책이라고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

● 이종서(李鍾熙)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은 경제문제와 대외문제 등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경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특히 북측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최소한 이 시대가 북측 지도부가 원했던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말



이종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北도 현사태 예상못해
군사회담 재개 요구를

해주는 것이다.

지난 96년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 때는 미국의 중재 아래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10일이 지난 뒤에야 외교부(현 외무성) 대변인 이름으로 유감을 표명했었다.

이번 유감 표명이 남북간 직접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최근 진전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시는 군사적 긴장상황을 유발하지 않도록 장관급 회담을 통해 북측에 군사회담 재개를 요구해야 한다.

● 정리 빅정경기자 olive@kcdaily.com

北 유감표명 정치권 반응

북한이 서해교전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7차 장관급회담을 제의해 온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 한나라당 북한의 태도 변화할 평가하면서 서도 북한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이 남북대화에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지만 일단 유감으로 표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며 "북한이 진정 남북대화와 협력을 바란다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에 대한

한나라 "재발방지 약속등 선행돼야"
민주당 "남북관계 인내 필요 재확인"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측근은 "사안마다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대표적 보수의원인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북측의 대화제의를 식량사

정 해결과 공지에 불린 김대중 김근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장관급회담보다 북측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절 위 한 회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일단 환영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긍정 평가한다."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야 하며, 북한은 경의선

연결 등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갑(韓和甲) 대표도 "북한의 진일보한 태도를 일단 평가한다. 굳건한 안보태세 위에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를 풀어야 할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고 햇볕정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李洛賢)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해교전 희생자들을 생각할 때 미흡하고 착잡하지만,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북측의 제안은 수용했으면 한다."며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도발 방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진경호 월간기자 jace@kcdaily.com

북 北 전통문 전문

오늘 북남 방방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이행을 위한 4·5공동보도문을 실현해 나가는 길에서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얼마 전 서해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방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간주한다.

우리는 오늘의 북남 관계에 주목을 돌리고 중단된 당국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북남관계를 원상 회복하며 화해와 단합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문제를 풀어 나갈 데 대한 6·15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도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우리측은 서울에서 제7차 북남상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방방 사이에 합의한 북남 철도연결문제, 출어진 가족친척 문제 등



25일 오후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정규 보도를 통해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을 표한 북측 전통문 전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TV촬영

4·5공동보도문 이행 문제와 그밖에 관심하는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하기 위하여 오는 8월초 금강산에서 북남상급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부터 갖자는 것을 재의하는 바이다.

우리는 귀측이 우리측의 이 건설적인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판문점 도끼사건등 5~6차례 불과

북 北 과거 유감 표명 사례

그동안 북측이 군사적 긴장상황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간헐적인 유감 표명까지 포함해 대역섯 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김정성 북측 상급(장관급)회담 대표단장은 남측에 직접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뒤 진전된 남북관계를 반영했다. 그동안 북측의 대남 유감 표명 사례는 대부분 간접적 형식 또는 낮은 수준에서 이뤄졌었다.

다음은 그간 북한이 남한에 유감을 표명했던 사례들이다.

- 68년 1월21일 무장공비 침투사건 72년 5월 김일성 주석이 방북한 이후 락 중앙정보부장을 만나 이에 대해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었으며

우리 내부의 좌익평등본자들이 한 짓으로 결코 나나 당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유감 표명.

이후 올해 5월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방북한 한국미래연합 박근혜 대표에게 "극단주의자들이 일을 잘못 저지른 것이다. 미안한 마음이다. 그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응분의 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 76년 8월18일 판문점 도끼인행 사건 사흘 뒤 군사장전위 북한측 수석대표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공동경비구역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달.

● 96년 9월18일 동해안 잠수함침투사건 12월 29일 중앙통신과 중앙방송을 통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침투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공개 발표. ●박복삼기자

한국일보

북 北 유감표명 각당 반응

주요 정당은 25일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뚜렷하게 구별되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북한의 속내와 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는 안성정당연설회 도중 보고를 받고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며 "도발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핵암자 처벌 등 우리측 요구에 대해 북한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발적 운운하며 자신들의 두려도발 책임을 직접 시인하지 않은 데다 구체적 재발방지 약속도 없어 사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재의한

장관급 회담에 응해야 하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북측 제안을 활용해야 한다"며 "일단 북측과 만나서 우리

한 "진의가 뭐냐"
민 "미래 위해서"
자 "우발 이라니"

측 요구를 더 강하게 주장하면 될 것"이라고 전향적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우리 요구에 비해 미흡하고 특히 서해교전 희생자들의 고통은 평생을 생각할 때 더 없이 깊어지지만 남북관계의 현대와 미

래를 위해 북한측의 태도 표명과 제안은 수용했으면 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남북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남북관계가 다시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북측 서해교전과 같은 북한측의 군사적 도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기를 요망한다"고 북한측의 성의 있는 대화 자세를 촉구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이것이 무슨 사과냐"며 "다분히 의도적 도발이었는데 우발적이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운영(柳運泳) 대변인은 "북한의 유감표명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려는 전략·전술임을 의심해야 한다"며 "북한의 분명한 사과 없이는 장관급 회담을 수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호섭기자 hsshin@hk.co.kr
유성식기자 ssyoc@hk.co.kr

북한경제 최근 일련의 변화

“중국개혁 초기와 비슷”

임동원특보 밝혀- 기업 자율·책임경영제 등 도입

북한이 최근 취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분야 개혁조치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내린 특별지침에 따른 것이며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하다고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특별특보가 25일 밝혔다. 林특보는 이날 한국정 치학회가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 한 ‘남북한 관계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중국방위위원장이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 방문 직후 이 지역에 경제전문가를 보내 연구시키는 등 오랜 준비를 해왔으며, 그 결과를 술술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林특보는 “북한이 기업자율권을 인정해 단위원장 대신 전문성을 가진 지 내인이 책임지고 공장·기업소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세부 적인 생산계획까지 내려보내던 것과 달리 이제는 기업 자체로 계획을 세우

고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회계제도 손잡과 환율조정 문제에 대해 林특보는 “아직은 실시 하지 않고 있으나 물가 현실화로 유 통 회계단위가 높아져 고액권이 발행되고 환율도 현실에 맞게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는 북 한이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 수년 전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林특보는 북한의 배급제 폐 지실에 대해서는 “배급제 폐 전적으로 폐지했다는 의문”이라면서 “북한은 군인이나 공안기관 근무자 등에게는 배급제를 유지하되 그 이외의 주민들은 식량 등을 시장이나 국영상점

에서 구입토록 하는 단계적인 방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林특보는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 방 초기 경제개혁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목표로 해온 북한의 개방과 시장경제로의 유도 쪽으로 북한이 시작하려는 인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유호일(柳浩一·북한학)교수는 “북한이 남북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어 압력이 가중되던 이달 초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적극적으로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남측의 회계·협력정책 결과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홍 기자

<yjlee@joongang.co.kr>

朝鮮日報

2002. 7.26(금)

中 “北, 시장경제 안할것”

“중국식 개방가능성 없어”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에 대해 중국의 한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조치들은 계획 경제와 국가안정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참고는 하겠지만 중국식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고 단정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농산 물에 대해 수확량의 15% 정도를 현 물로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생 산자가 자유 처분토록 하는 조치로 시행하고 있다고 중국의 북한 소식 통들이 25일 말했다.

북한 소식통들은 인센티브제 도입 이 생산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는 측면과 사업세가 도산할 경우 국가 가 더이상 보조해주지 않는다는 시 장경제의 원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 다고 말했다. /北京=呂始東특파원

soyo@chosun.com

“배급대신 월급생활 걱정하더라”

訪北인사들이 전한 ‘北주민 표정’

지난 20~23일 북측과의 8·15 통일축 전 협의차 방북했던 ‘2002 민족공동행 사 추진본부’ 관계자들은 최근 물가와 급여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경 제적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북한 단국이 경제변화 조치 들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지만, 주민들 이 아직은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면서 “북측 인사들은 이번 조치가 ‘했 별정책의 산물’이나 ‘시장경제 도입’ 이라는 등으로 표현되는 것을 꺼려했 으며, ‘가격현실화’라는 용어가 더 적 합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물가·급여 인상

천주교 주교회의의 김홍수 신부는 북 한이 회계의 기초단위인 전(錢)을 없

애고 원(元) 단위만 사용하는 것이 눈 에 띄었고, 종전에 20전이었던 지하잡 의 운임도 20원으로 100배 올랐다고 말 했다.

◆식량배급제 변화

통일연대의 한상열 독사는 “식량 배 급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며, 국가유공자나 어린이·노약자 계층에는 여전히 식량이 배급되고 있었다”면서 “점진적으로 배급제도가 사라지는 대 신, 쌀의 가격이 상승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예전대 6월까지 배급소에서 쌀 시 세는 0.8원이었지만, 7월 들어 45~53원 에 유통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응

민화협 김창수 정책실장은 배급 대신 월급으로 기계를 운영해 나갈지 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주민의 모습이 많이 감지됐으며, 남측 인사에게 “앞으 로 봉급을 탄 뒤 어떻게 주택세나 공공 요금을 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질문은 세금제가 부활하게 된을 뜻하는 것이다.

/權秉勳기자 kb@chosun.com

“시장경제 실험 시작” 평가

北 개혁·개방 움직임-정부 시각

그동안 실로만 떠돌던 북한의 경제분야 개혁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입을 열었다.

북측의 이런 움직임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오랜 준비 끝에 내려진 것이란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총괄처의 25일 언급은 북한 내부 정보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평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林북보는 최근 입수된 정보와 첩보를 종합한 내용이라면 서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의 내용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잠정적인 판단을 소개했다.

특히 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경제관리 개혁을 위한 지침은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도 경제적인 실험(實驗)을 최대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상하이(上海)를 방문해 중국의 변화된 경제상에 놀라

움을 표시했던 김위원장이 경제전문가를 외국에 보내고 개혁조치를 준비시키는 등 그동안 착착 자신의 ‘신사고’를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가.

그러나 林북보는 배급제의 폐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배급제 폐지등 오랜 준비 흔적

성공 여부에 대해선 판단 유보

조치”라고 말했다. 국가기관 근무자나 군인 등은 배급제도를 그대로 실시하되 이외의 주민들은 시장과 국영시장에서 물품을 사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금을 20배 가량 올리고 물가를 높인 것도 시장가격과 배급제를 통하던 국정가격을 현실화하려는 조정작업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林북보는 그러나 “공급이 따르지 않는데 배급제를 피한다고 주

민들을 먹여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북한 경제체제가 옮겨가려는 것으로 판단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林북보는 특히 “중국은 개혁조치가 상당히 성과를 거둔 뒤에야 발표했는데 북한도 이런 전례를 따를 듯하다”고 말해 북한의 움직임이 중국의 개혁·개방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목표인 개혁·개방→시장경제로의 유도→체제전환 단계에서 두번째 대목이 풀러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진단이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모델로 한 흔적은 역력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이를 대북정책의 성과로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영중 기자

<yilee@joongang.co.kr>

중앙일보

2002. 7.26(금)

책임경영제 도입 “중국식 개혁”

가격통제 포기안해 “경제 타개책”

엇갈리는 전문가 시각

임금·물가 인상 등 북한이 최근 취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중국 초기 개혁과 유사하다’는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총괄처의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중국이 10여년 이상 걸쳐 추진한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북한도 중국식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견해와, 양국이 처한 입장과 기존의 추진방식이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1984년 10월 공산당중앙위원회 12기 3차 전체회의에서 ‘경제체제의 개혁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발표해 ‘중국식 사회주

의 경제’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그 내용은 상공업의 생산책임제 실시, 기업의 자주권 확대, 교통·가격 제도의 개선 등이다.

이는 북한이 최근 추진 중인 임금·물가 인상, 특히 林북보가 이날 밝힌 ‘기업 책임경영제’ 등과 유사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일부 지방에서 그동안 음성적으로 시행해온 ‘농업생산 책임제’(농민들에게 곡물 등에 대한 처분권을 포함, 경제적 자율권을 부여)를 공식 인정했는데, 이도 북한이 96년도에 취했던 ‘가족분조관리제’와 비슷하다.

한국은행의 박석삼 자료조사역은 “임금과 가격을 모두 인상한 것은 결국 농민시장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북한의 이번 조치는 중국식 개혁으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의 개혁방향에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우선 북한은 가격을 현실화하면서도 중국과 달리 국정가격을 폐지하지 않았다. 이는 고정 가격정책을 통해 중앙 통제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다.

또 중국은 국영형태의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개인영농제로 나아갔지만, 북한은 체제유지상 국영농장과 협동농장 체제를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중국은 ‘정치체제는 고수하고 경제는 시장경제로 간다’는 기본방향을 갖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북한은 이런 정책적 마인드를 갖고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북한연구팀장은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개혁은 중국식 개혁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공적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창현 기자

<jchmin@joongang.co.kr>

2002. 7.26(금)

北 백남순 ARF참석 확인 南北외무 접촉가능성

北·日 31일 외무회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조선중앙통신과 회견에서 오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북·일 외무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의 ARF참석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남북 북미 외무장관 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는 조일 국교정상화와 관련, 원칙적 문제들과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한겨레

2002. 7.26(금)

북·일 외무장관 ARF서 회담

[도쿄=외신종합] 북한과 일본 외무장관이 2년 만에 처음 오는 31일 브루나이에서 개막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안 별도 회동을 갖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일본 외무성 관리의 말을 인용해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이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만날 것이라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2. 7.26(금)

아세안 안보포럼때

北·日 외무회담 열기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북·일 외무장관이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오는 7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조·일 외무상 회담도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한국일보

2002. 7.26(금)

北백남순 ARF참석 日과 외무회담 갖기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면서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의 ARF 참석을 처음으로 공표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ARF에서 남북 및 북미 외무장관 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높아졌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일 외무상 회담에서는 조·일 국교정상화에서 제기되는 원칙적 문제들과 현안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그 해결을 위한 방도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ARF에는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총 23개국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동준기자

경향신문

2002. 7.26(금)

월말 北·日외무회담 北 "ARF 기간중 개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 기간 중 북·일 외무장관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ARF 기간에 조·일 외무상 회담이 진행된다"며 "회담에서는 조·일 국교정상화에서 제기되는 원칙적 문제들과 현안들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해결을 위한 방도적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차세현기자

서울서 남북장관급 회담 재개

정부, 북한제의 수용 방침 ... 서해교전 유감 표명도 북한에 실무접촉 일시 등 담은 전통문 곧 통보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정부는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표명 및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제의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26일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북측의 유감표명을 수용하는 한편 다음달 초 금강산에서의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6면>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실무대표접촉 일시, 참가자 명단 등 남북 전화통지문 내용을 확정, 곧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던 남북장관급 회담이 서울에서 다시 개최돼 남북당국간 관계가 원상회복될 전망이다.

북한은 25일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제의해 온데 이어 오는 30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북일 외무장관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간 냉각기류가 흐르던 한반도 정세는 서해교전 이후 한달만에 대화국면으로 돌아설 전기를 맞게 됐다.

미국도 이날 저녁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이번 제의가 남북관계 진전의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환영의사를 밝혀 한반도 정세를 밝게 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장관급 회담 김령성 북측단장 명의로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얼마 전 서해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서울에서 제7차 남

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쌍방 사이에 합의한 남북철도연결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5공동보도문 이행문제와 그밖의 관심하는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하기 위해 오는 8월초 금강산에서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부터 갖자"고 제의했다.

김형기 통일부 차관은 이에 대해 "전화통지문 내용은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사과·유감 표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해교전 관련

북한의 사과는 지난 96년 잠수함 침투사건 때와 비교할 때 상당한 진전"이라면서 "당시 북측은 3개월후 외교부(현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유감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전화통지문을 보낸 지 약 두시간만에 조선중앙통신·평양방송을 통해 외무성 대변인회견 형식으로 "오는 7월 31일 브루나이에서 진행되는 '아세안지역단(ARF) 기간에 조·일 외무상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 백남순 외무상의 ARF참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ARF 기간 동안 북일의 무장관 회담과 남북외무장관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내일신문

2002. 7.26(금)

문화일보

2002. 7.26(금)

정부 '北 서해유감' 신중 대응

北 전통문... 통일부 '수용' 발표와 달라 혼선

정부는 25일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과 장관급 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과 관련, 북측 유감표명의 적절성 여부와 배경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국내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응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3·4면>

정부는 이에 따라 북측이 전통문을 통해 제의한 8월초 장관급 회담 대표들간의 실무접촉 제의에 대한 회신을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한 뒤 내주중에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통일부, 국정원, 법무부 등 관련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략기획단 회의에서도 이같은 대응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당국자는 이날 회의와 관련, "북한의 유감표명 내용과 배경 등을 따져보고 받을 만한 내용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모든 대응을 신중하게 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적어도 이번주에는 북에 회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측의 전통문이 도착한 직후 통일부가

보인 반응과 크게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 김형기 차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북측의 유감표명을 "명백한 사과와 유감의 표시로 간주한다"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이날 북의 유감표명과 관련, "북측이 우발적이라고 규정하고 공동책임을 주장한 것 등을 정부가 서둘러 명백한 사과와 유감표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대응혼선을 지적했다.

/서외동기자 phil21@munhwa.co.kr

'저 자세' 시비 우려 여론살피기

정부 '北 서해교전 유감' 수용 신중론

北에 재고쌀 지원도 재검토키로

남북대화 집착맨 햇볕정책 또 흠집

서해교전 이후 약 한달간 계속된 대치국면 끝에 북측이 25일 깜짝카드로 내놓은 대화 제의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이 새로운 논란에 휘말리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 분위기는 25일의 신속한 수용 입장 발표(김형기 통일부 차관)와는 달리 26일에는 '신중한 접근'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내건 만큼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북한에 대한 '저 자세' 시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대중 농림부 장관은 25일 오후 북한에 대한 재고쌀 지원 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청와대와 국정원 등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냉방온탕식 흐름은 북측이 전화통지문 서두에 밝힌 유감의 뜻을 합당한 수준의 '사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서해교전이라는 장애물 해소의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요구해 온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대화제의를 응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북측은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쌍방 과실에 의한 우발적 사건으로 규정하는 한민 처벌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이 사건을 북측에 의한 불법적 선제공격으로 간주해 왔다. 또 북측은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언급, 향후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정부는 25일 오후 3시쯤 북측의 전통문이 접수되자마자 놀랄 만큼 신속하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정리한 뒤 공식 발표했다. 통일부 관계자들은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볼 때 이 정도 수준의 유감 표명은 사실상의 사과"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앞으로 회담 과정에서 군사적 회해와 신뢰구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입장까지 보였다.

그러나 전통문이 전달되기 불과 몇 시간 전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군 주요 지휘관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서해교전 관련 정부-북한 입장 비교

	정부	북한
성격 규정	* 북한군의 명백한 불법도발 * (김대통령, 7월25일 군 주요지휘관과의 오찬)	* 남조선 군부의 계획적도발 * (6월29일 교전 직후) *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 (7월25일 전통문)
정부 요구와 북측 반응 (7월25일 전통문)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보장	* 유감스럽게 생각 ... * 언급 없음 * 북한 정부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 *
향후 입장	* 명백한 사과와 유감표명 * (김형기 통일부 차관으로 간주하고 대화 재개 준비)	* 8월초 금강산에서 7차 장성급회담 실무협력을 갖기 *



한나라당이 조일 여외도 당사에서 서청원(왼쪽)대표 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임만수기자 panfocus@munhwa.co.kr

북한의 태도를 우리는 관철시킬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남북대화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경우 햇볕정책을 무리하게 추진 한다는 또 다른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26일 "현 정부가 임기내에 기사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에 빠져 원칙을 버릴 경우 오히려 북측에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준호기자 idhan@munhwa.co.kr

경의선 연결·상봉등 '단골의제' 산적

남북관계 미이행 사항들

신뢰구축 최소수준 논의

군사문제 北인식 변화야

북측이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 상태인 남북장관급 회담을 재의함에 따라 남북간에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미(未)이행 사항들이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북측이 대표실무접촉의 의제로 ▲북남 철도연결문제 ▲올어린 가

족 친척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정부는 북한 당국의 진의 및 진척 가능성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가장 우선적 과제로 꼽고 있는 것은 경의선 연결 문제다. 이 문제는 장관급회담, 임동원북사방북 등 남북대화 때마다 '단골의제'였다.

남북은 2000년 9월 제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과 5차례의 남북 군사실무 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DMZ)내 공사중 안전보장을 위한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에 합의했으나 이후 진척이 없었다. 남측은 비무장지대 이남 철도·도로공사를 지닌해방 완료했지

만 북측은 2001년 동짓기 이후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특사방북 당시 남북은 경의선과 함께 동해안 철도·도로 연결에도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실무협의회담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북측이 최성홍 외교통장관의 방미발언을 문제삼아 경추위를 무산시켜 논의가 중단됐다.

이산가족 문제도 북측이 25일 전통문에서 이행과제로 명시한 사항이다. 남북은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8월 제1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이후 지난 4월28일-5월3일 금강산 순차방문까지 4차례의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켰다.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집박성을 시종일관 강조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직입자 회담을 개최해 생사 및 주소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교류 제도회를 북측에 촉구해 왔다.

군사적 신뢰구축분야와 관련, 남북은 제1차 국방장관 회담에서 긴장완화, 공고한 평화 구축, 전쟁위협 제거 노력 등을 합의했지만 이후 북측은 군사당국자 회담제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29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간 무장충돌 사태를 계기로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가 최소수준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그러나 군사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사안이라는 북측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주요의제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정부내 조율시스템 '삐걱'

통일부, 정부대책회의 이전 "즉각 수용"

DJ, 전통문 2시간前 "책임자 처벌"강경

서해교전과 관련한 북한측의 유감 표명을 전후한 우리측의 대응과정에서 정부 내 조율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 않으나 의의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통일부의 다른 분위기는 통일부 감청차 차관은 25일 오후 4시20분 북의 전통문 내용에 대해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명백한 사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정부가 26일 오전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전략기획단회의를 열고 북측의 전통문 내용과 관련한 정확한 의도와 대응책을 공식 논의하기도 전에 나온 것이다.

청와대 박산속 대변인이 비슷한 시각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해나갈 것"이라며 다소 선명한 입장 표명을 피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더구나 정부가 당초 26일 오전에 개최하려 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다음주로 연기한 것이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감안할 때 통일부의 과속은 상당히 무리

한 것 아니었느냐는 분석이 많다. ◆김대중대통령의 발언=김대중 대통령은 북이 전통문을 보내기 불과 2시간 전인 25일 낮 군 주요 지휘관과의 오찬에서 '북의 사과와 처벌, 재발 방지' 등을 강한 톤으로 요구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이번 서해 교전은 북한군의 명백한 도발"이라면서 "북한에 대해서 사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조치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발언은 북의 태도 변화와 사과를 이끌어내려는 압박전략"이라고 추후에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대통령의 잇단 강경발언이 북의 전통문 내용과 비교할 때 결과적으로 심각한 '불일치'를 노정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북 태도 변화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사전 인지실'이 불거져 나오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북의 예상되는 사과 수위를 무시한 채

북한 서해교전 '전통문' 관련 시간대별 상황 (7월25일)

12:00~	김대중대통령, 군 주요 지휘관 격려
13:30	오찬에서 북의 사과와 재발방지 등 역설
15:00	북, 판문점 통해 전화통지문 우리측에 전달
15:20	전세현 통일부장관과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북 전통문 보고
15:30	임성준 수석, 김대중대통령에게 북의 전통문 보고
16:20	김영기 통일부차관, "명백한 사과와 유감표시로 간주" 기자회견
16:30	박산속 청와대 대변인 "충분히 검토, 통일부에서 입장 밝힐 것" 브리핑

너무 여럿만 추수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민화협을 한 관계자는 "최근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대표단이 평양에 갔을 때 북측으로부터 서해교전과 관련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포착, 귀국 후 이를 통일부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 당국자는 "전혀 사전에 감세를 느끼지 못했다"고 밝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 통일부의 신속한 반응과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해 온 점등으로 마취 상당한 막후대화가 있었으나 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막상 북한의 반응이 나온 이후에는 손발이 안맞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허민기자 mnski@munhwa.co.kr

"국면전환용" "대화의지 표명" 엇갈려

■北, 대화제의 진의는

"선택적 화해전략" 분석도

북한이 25일 돌연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며 대화를 제의하고 나선 속셈은 뭘까.

북측이 전통문을 통해 밝힌 표면적 이유는 "중단된 당국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북남관계를 원상 회복하며 화해와 단합,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도 대체로 납득하는 분위기다. 무려총통 이후의 긴장국면을 계속 풀고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북측이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또다른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것인지도 주의할 기울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역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의 대화제의는 아무리 후하게

북한 사과·유감표명 사례

도발사건	사과·유감표명 내용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68년 1월21일)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었으며, 내부 좌익동맹원지들의 짓이 아니라 남의 의사는 아니었다." (김일성-이후라 면담, 72년 5월 12일)
판문점 도끼인행사건 (76년 8월18일)	"유감스럽게 생각,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경우이다." (군정원 북측수석대표 윤연사령관에게 구두에 1차, 76년 8월21일)
대북지원선박 인공가침 제 개입 (95년 6월27일)	"이번 일련들의 실무차오로 불미스런 일 일어난데 유감표명." (전금철 청와대 북측수석대표, 95년 7월21일)
동해안 북침수할 침투 (96년 9월18일)	"같은 유감을 표시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 96년 12월 29일)
서해교전 사태 (2002년 6월29일)	"우방적 무력충돌 사건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장관 회담 북측 김영성 단장 전통문, 2002년 7월25일)

평가해도 서해교전 이전 상태로의 복원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며 "북한이 단순한 국면전환용 유감표명을 한 것인지, 진정한 대화의지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장성민 (미 듀크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전의원은 "북한이 서해교전 책임을 미국과 남한에 돌리던 기존 입장을 번복까지 하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를 제의한 것은 상당한 태도 변화"라면서도 "북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군사문제

를 다룰 북-미회담을 회피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선택적 화해전략' 정책과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8월 초 금강산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어떤 의제를 들고 나오는지를 보면 분명해졌겠지만 남측의 양보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합의공백의 국면전환용 카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중호기자

金대통령 “北, 사실상 사과”

정부, 장관급회담 答信은 내주중 전달키로

北에 도발관련자 처벌 再요구 검토

정부는 북측의 서해 도발 유감표명 및 7차 남북장관급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북한의 사과 표명이나 제발방지 다짐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작지 않게 일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내주 중 북측에 답신(答信)을 보내기로 했다. ▶관련기사 3·4면

정부는 26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전라기획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8월 초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해온 만큼 적어도 내주 초에는 답신을 보내 7차 남북장관급회담과 실무접촉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

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0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불만족스런 면이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전례없이 북한이 신속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제발방지와 함께 장관급 회담을 일어서 금강산 육로관광 등을 논의하고자 제의했다”면서 “어제 북한이 서해 교전 사태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는 그러나 신중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북측 전문분야에 대해) 우리는 기대를 갖고 두고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무조건 대

화나 화해가 아니며, 확고한 안보, 국방강화에 추호도 소용함이 없도록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 전라기획단 회의에서는 북측의 제의를 수용하되,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서해 도발 관련자의 처벌 등을 다시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회의에서 북측이 밝힌 유감과 장관급회담 개최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이 난 단계는 아니다”면서 “앞으로 추가 관계부처 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등을 통해 정부의 최종 대응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기자 baibai@chosun.com
/권영기기자 kkb@chosun.com

朝鮮日報

2002. 7.27(토)



東亞日報

2002. 7.27(토)

정부 ‘北유감’ 대응 혼선

北 표명 하자마자 “적극수용”... 하루뒤엔 “신중대처”

“어떻게 사과로 간주하나” 비판여론 의식

북한의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기조가 불과 하루 사이에 ‘적극 수용’에서 ‘신중 대처’로 물러서는 등 정부의 대응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A3면에 관련기사

더욱이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전 회동지문을 보낸 직후 청와대와 통일부가 보인 반응이 서로 달라 정부 내 정책조율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한 남북관계 현안 보고자료에서 “북측의 대화 제의를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서해교전과 같은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에 역점을 두겠다”며 “현재로는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유보하고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신중대응 기조는 불과 하루 전 통일부가 보인 반응과는 전혀 달랐다. 정부가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뒤늦게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은 25일 북한의 유감 표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명백한 사과 표시로 간주한

다. 과거와 비교할 때 대단히 진전된 태도이다”고 적극 수용 태세를 밝힌 뒤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날짜를 잡아 북측에 홍보하겠다”며 당국간 대화재개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날 같은 시간 청와대 측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정부의 입장을 검토해나갈 것이다”(박선숙·朴仙淑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고 신중한 대응 태도를 보여 정부와 청와대 간에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이철희기자 kiimt@donga.com
성동기기자 esrit@donga.com

김대통령 "북 사과한것"

회담제의에 내주 답신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북한이 사실상 사과했고, 우리는 기대를 갖고 두고 보자는 입장"이라며 북쪽 태도를 사과의 뜻으로 받아 들일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이 사실상 사과한 것으로 보고 이날 김형기 통일부 차관 주재로 관료부처 회의를 열어 다음주 초 '장관급회담 대표들의 금강산 실무접촉' 일정 등이 담긴 전화통지문을 보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농성 이재훈 기자 yskim@hani.co.kr

장관급회담 答信 내주 초 보내기로

김대통령 "北 사실상 사과"

정부는 6·29 서해교전에 대해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7차 장관급회담을 제안해 온 데 대해 다음주 초 북한 측에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일지를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6일 서울 산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김형기(金炯基)

통일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북한의 유감표명에 대한 논란에 대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00여 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어제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대한매일

2002. 7.27(토)

주적 포기 - 철도·도로 軍보장 합의

'주고받기' 신중 검토

국방회담 열린다면...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간 군사적 현안중의 하나로써 우리 군의 주적론(主敵論) 폐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짙어 관심을 끈다.

국방부는 북한의 회담 제의에 대해 26일 "일단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제2차 국방장관회담도 개최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다.

국방부는 장관급 회담에서 주요 의제의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 이번엔 반드시 북측으로부터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를 받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군사보장합의서를 받아내는 대신 국방백서에 규정된 '북=주적'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이미 주적론이 그 '실현적 가치'가 상실됐다는 저변의 판단도 함께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아울러 지난

5월 정부 일각에서 주적론 폐지 방침이 불거졌을 때 국방부는 "아무런 조건없는 포기보다는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에서 '양보 카드'로 제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학계에서도 동의한 의견이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주적론 폐지는 군사회담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면서도 "이번 제의가 국방장관 회담으로 이어지면 환영할 일이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당국자 회담이 열려도 북측이 서해교전 관련자에 대한 문책 조치를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북측의 태도를 볼 때 선언적 유감 표명과 군에 대한 처벌은 별개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무력도발에 대해 5~6차례 유감을 표명했으나 군을 공식적으로 문책한 것은 지난 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운기자 kkwoon@kdaily.com

여론 줄타기... 이례적 '속도조절'

□ 정부, 대북 신중접근 안팎

“사과 미흡” 평가·막후접촉설등에 부담감

“서둘것 없다”... 한발 앞서던 전례와 판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다.” 북한의 사과 고전 유감표명 및 장관급 회담 제의가 나온 하루 뒤인 26일 정부 당국자들이 내놓고 있는 말들이다. 북한이 약간의 전향적인 제스처만 취해도 이를 즉각 수용, 한발 더 앞선 후속조치로 대응하던 이전 양상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는 통일부가 “분명한 사과로 받아들인다.”고 천명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북한의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적절한 시점에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과가 미흡하다.’는 일부 여론을 고려, 다소 시간을 갖고 고심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

정부가 26일 열려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일단 연기하고 김형기(金炯基) 통일부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전략기획단 회의로 대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전략기획단 회의에서도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한다는 원칙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통일부가 “북측의 전통문을 명백

한 사과로 간주한다.”고 평가한데 대해서도 청와대측은 “신중하지 못했다.”며 할 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숙(朴仙淑) 청와대대변인은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 열리는 브루나이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을 준비하는 외교부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회의에선 북·일 외무회담이 잡혀 있고 남북 및 북·미 외무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어 향후 한반도 정세의 가능성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측의 유감표명으로 분위기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적으로도 북측 전통문이 우리 요구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상당하고, 약속을 여러차례 깬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의해 오는게 순서라는 설명이다. ARF에서의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최근 북한의 남북대화 약속파기와 미 특사 파견 제의에 대한 무응답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태도 표명이 남북한간 사전 물밑접촉의 결과이며 우리가 사전에 인지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대한매일

2002. 7.27(토)

다.

그러나 검색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선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논리가 정부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된 점과,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변화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왔다는 점 등에서 막후 접촉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군사신뢰 구축·이산상봉 이행 재론

□ 실무접촉 절차·의제

남북장관급 회담이 여섯 차례 열리는 동안 실무대표단 접촉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을 마지막으로 끊겨 9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서울 7차 장관급 회담’에서 그 만큼 타결해야 할 의제와 쟁점이 많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7차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금강산 실무접촉에서는 장관급 회담의 시기, 의제 등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라면서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4월 합의한 경의·동해선 연결, 군사적 신뢰 구축, 이산가족 상봉, 서울에서 열릴 8·15행사에 북측인사 참가,

재고쌀 대북 지원 등 신중한 과제의 이행에 대해서도 탐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경의선, 동해선 등 철도·도로 연결 남측은 지난해말 비무장지대 이남 철도·도로 공사를 완료했지만 북측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우리측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지난 4월 방북했을 때 합의한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은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함께 인적·물적 교류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지만 지난 5월 경험위 2차 회의가 무산되며 담보상태에 있다.

● 이산가족 문제 지난 4월까지 모두 4차례 상봉이 이뤄졌다. 정부는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교류 제도화를 북측에 제안하고 추석쯤 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방침이다. 북측이 25일 전통문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 8·15행사 북측 인사 참여 민간행사이지만 북측이 고위 인사를 내려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확실한 신변안전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 역시 8·15행사가 무사히 치러진다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연내 담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성의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 남북경추위 개최와 쌀 지원 지난 5월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경추위가 무산되며 굶긴 상태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재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재고쌀 300만섬의 대북 식량지원과 차관공여계약, 개성공단, 금강산유로관광협의를 등을 위해 경추위 개최는 남북 모두 필수성을 느끼고 있다.

● 박복삼기자 youngtan@kdaily.com

대북 쌀지원 이르면 9월 재개

재고분중 내년3월까지 30만톤 보내기로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조짐을 보이면서 대북 쌀지원이 이르면 오는 9월 하순께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까지 북한에 지원되는 쌀의 양은 '30만톤+'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쌀 재고는 크게 대북 쌀지원과 사료용이라는 2가지 방향에서 처리된다. 대북지원이 이뤄질 경우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해외 무상원조는 추진되지 않는다.

농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국의 양곡창고에서 벼를 도정, 포장해 항만에서 북한까지 수송하는 데 1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8월 중 남북이 순조롭게 쌀지원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부터 선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물량은 그동안 협의돼온 30만톤(210만섬)을 준거로 하지만 이북이 그 이상을 요청

● 쌀 재고처리 비용 비교 (100만섬 기준·단위: 억원)

북한지원	해외원조	배합사료
2.422	3.396	2.590

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측이 제안한 8월 초 금강산 실무회담 이후 장관급회담이나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쌀 차관협정에 조속히 합의할 경우를 전제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여전히 올해 150만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쌀 재고처리시 남한도 대북지원을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유리하고 탈북자 문제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수확기 이전 재고쌀 400만섬 가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배합사료용으로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북지원과 함께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창고에서 3~4년간 묵은 지난 98~99년산 쌀은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99~2000년산은 북한에 지원될 전망이다.

대북지원 방식은 장기차관 형태로 이뤄지는데 수송은 북한 항만의 낙후로 5,000~1만5,000톤의 소형 배를 활용해야 돼 총 6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쌀 재고는 벼 수확 이전(10월 말) 기준 1,318만섬으로 예상돼 그동안 쌀값대란 우려와 창고 부족사태가 우려돼왔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대한매일

2002. 7.27(토)

"대북 쌀보내기 너무 늦었다"

농림부, 시간없어 재고해소 도움 안돼

북한이 지난달 말 발생한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대북 쌀 지원에 활요가 트이게 됐다. 하지만 막상 이를 추진할 농림부는 어정쩡한 입장에 놓였다.

재고해소를 위해 400만섬을 사료용 등으로 긴급처분키로 한 농림부로서는 북한의 변화된 모습이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대체로 "너무 늦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남북 장관급 회담은 8월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의 급박한 사정에 비춰볼 때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수확기를 앞두고 10월말까지는 400만섬을 특별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대북 쌀지원이 빨리 결정돼 9월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 하지만 200만섬(예상) 규모의 쌀을 보낼 경우, 도정(搗精) 및 선적·수송 능력을 고려할 때 일러야 4~5개월은 걸릴 전망이다.

실제 1995년 100만섬을 지원할 때에도 4개월이 걸렸다. 시간이 없어 국내 재고해소에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김태근기자 windsea@kdaily.com

北 "美특사 방북 수용"

북한 외무성은 26일 미국 특사의 방북과 관련, 미국의 철회 방침에도 불구하고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 "서해 사건 이후 특사 파견이 취소되었지만 앞으로 조건이 마련돼 미국측이 다시 특사를 보내겠다는 우리는 일관한 입장에서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전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평양에 특사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동의한 바 있다."면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자신의 일"이라고 강조, 특사의 '감'에는 구애받지 않음을 내비쳤다.

● 박복삼기자

2002. 7.27(토)

남북장관급 회담서
교전 재발방지 논의
정세현 통일장관 밝혀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26일 북측이 제의한 7차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 "회담이 재개되면 서해교전사태 문제를 비켜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회담에서 서해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뜻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3·4면>
정 장관은 "장관급회담에서 군사당국자간회담을 추진, 이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답변을 통해 "북측의 대화제의는 여론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문제, 개성공단 건설, 검열 사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김형기(金炯基) 통일부차관 주재로 청와대, 외교부, 농림부 등 남북 관계 부처 전략기획단회의를 갖고 북측 제안에 대한 국민 여론의 종합·분석에 주력키로 한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정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낮 시장·군수·구청장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제안에 대해 "신중히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 김수정 박희심기자
crystal@kdaily.com
2면으로 ①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측에 답신을 보내는 시기와 내용, 실무접촉시 대책 제안, 이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남북 외무장관회담 입장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성룡(崔成龍) 외교장관과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회담을 갖고 남북, 북·미 관계 등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전반을 논의했다.

2002. 7.27(토)

北 대화제의 원칙적 수용

김대통령 "北 사실상 사과"- 정부입장 곧 전달

정부는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과 장관급회담 재개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그러나 북측의 유감 표명이 도발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로 보기에 미흡하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열릴 경우 좀 더 명확한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김형기 통일부 차관 주재로 남북대화기획단회의를 갖고 북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거쳐 실무접촉 일정을 포함한 남측 입장을 전화통지문 형식으로 북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초단체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며 "정부는 신중히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북측 제의에 대해) 불안족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례 없이 북한이 신속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장관급회담을 열어 금강산 육로관광 등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고 북한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진홍 신항호기자 procol@kmbi.co.kr

경향신문

2002. 7.27(토)

정부 '北 유감' 신중대응

장관급회담서 서해교전 명시적 입장표명 요구키로

김대통령 "사실상 사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한 장관급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정부는 신중히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4면

김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전 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어제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불안족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례 없이 북한이 신속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언급하고 장관급회담을 열어 금강산 육로관광 등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유감 표명과 장관급회담 재개 제의를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돌파구로 활용하되 향후 남북 장관급회담 등에서 서해교전과 관련한 북한의 좀 더 명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북측의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금강산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다음주 초 수락의사와 함께 접촉시기 등 구체적 일정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통일부, 국정원, 외교부 등 관련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기획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종근·박성진·차세현기자
hanbang@kyunghyang.com

北제의 장관급회담 수용기로

정부 금강산 실무접촉 대표단 파견방침

일정만 협의-쌀지원등 의제는 논의않기로

한내에서 알고 있는 '사과가 미흡하다'는 비관여론을 북측에 전달키로 했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장관급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 정부는 26일 북측의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제의를 수용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초 금강산에서 개최될 대표 실무접촉에 대표단을 구성,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김형기(金炯基) 통일부차관 주재로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 실국장이 참여한 전략기획단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략기획단회의에서는 ▲북한의 '유감'

표현 해석 ▲관련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실무대표 접촉을 위한 준비작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최종 입장은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나 일단 대화재개 원칙은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북측의 '사과' 수위에 대한 계속되는 논란을 의식, 금강산 실무접촉에서는 30만~50만(의 대북 쌀지원 문제등 예민한 사안은 일체 다루지 않고 장관급회담 일정만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실무접촉 등에서 남

世界日報

2002. 7.27(토)

한국일보

2002. 7.27(토)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날짜

정부, 내주초 北통보

신중 대응... 金대통령 "北, 사실상 사과"

丁통일 "회담때 北에 책임자 처벌 요구"

정부는 26일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을 남북관계 복원 등 한반도 정세 안정의 계기로 적극 활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내주 초 7차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일자를 북측에 통보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31일 브루나이에서 개막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남북 외무장관 회담 등을 추진,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고 북미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전략기획단 회의에서 이 같은 대북 대응 기조를 확

인하고 내주 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 정책 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유감 표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당국 대회에 응하고, 서해교전 침몰 함선 인양 작업도 북측이 요구한 사전통보 없이 30일 강행키로 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표명에 대해 "북한이 사실상 사과했다"면서 "우리는 기대를 갖고 두고 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4·5면

김 대통령은 이날 시장 군수 초청장 등 기초단체장 250여명을 청와대

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만족스럽다는 지적도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전혀없이 북한이 신속하게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참석해 "남북 장관급 회담이 성사될 경우 우리 정부는 서해교전 사태에 따른 책임자 처벌 문제 및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요구를 비켜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북측에 서해교전 사태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고태성기자 tsgu@hk.co.kr

이종준기자 djlee@hk.co.kr

北, 서해교전때 24명 사망

관련자 문책...정부 여러 경로로 확인

지난달 29일 서해교전에서 북한 해군도 24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6일 "북한은 지난 7월 중순 비공식 검토를 통해 '우리도 피해가 컸다. 관련자할 문책했다'면서 이같은 피해 내용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군 고위 당국자도 이날 "베이징(北京)의 소식통들에게서 이같은 내용의 검토를 입수했다"면서 "이로 미뤄볼 때 북측이 중국 측에는 피해 상황을 풍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리 해군 고속정 357호를 기습공격한 북한 경비정 684호(SO-1급)는 승조원이 50명 탑 수 있는 규모로, 교전 당시 30여명이 갑판에서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비정은 우리 측 공격을 받고 여인될 때엔 마스터 포 등 갑판에 설치된 전투장비가 완전히 부서졌고, 승조원도 거의 없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문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

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이번 서해 도발은 1999년 연평해전의 참패를 보복하기 위해 해군사령부나 서해 함대사령부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식량 등 필수 공급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강제에 장애를 줄 게 뻔한 군사 도발을 점진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교전 발생 며칠 전 북한군 각 예하 부대에 '6·15 공동성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첩보가 입수된 점 등을 들었다.

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이런 점에 근거, 서해교전 우발론을

제기하면서 지난 25일 사과를 표명하고 남북 장관급 회담을 재의해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은 올 하반기에 예상되는 극심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와의 대화할 마냥 회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서해교전 이후 취한 김수로 요원들의 남한 방문 허용, 방북 초청장 발급 기한의 단축(1~2주에서 3~4일), 서해교전에 관한 비난을 미국에 집중하고 1999년 연평해전 때와 달리 대남 규탄 군중대회가 이번엔 없었다는 점 등도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철희·정창협 기자

<chlee@joongang.co.kr>

'北유감표명' 정치권 혼선

한-자 "사과간주 납득안돼" 정부조급성 비판 민주 "전례없는 일... 미래위해 받아들여야"

송대통령 "사실상 사과-대안없는 강경론 문제"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우발적 무력 충돌'이라고 규정하면서 유감표명을 한 것과, 이를 즉각 사과로 간주한 정부 대응의 적당성을 두고 정치권의 분열이 심해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내에서도 북한의 입장표명에 대해 신중론과 즉각 수용론이 존재, 혼선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민국당은 26일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이 비흡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대북 조급성'을 정면 비판했다. (관련기사 3면)

서형원(徐炳源) 대표는 주요 당

직자회의에서 "북한이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공격해 놓고도 공동책임을 주장하는 등 사과와 재발방지 및 관련자 처벌 요구가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서둘러 사과를 받아들였는데 정부가 이렇게 나가면 북한은 다시 우리에게 도발한 뒤 유아무야 유감표명만 하면 그만이라는 판단을 내려 제2의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북한의 어처구니없는 말 한마디를 갖고 정부가 허겁지겁 덤벼서

서해도발 만행에 대한 사과로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명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흡하지만 유감표명을 수용하지"는 입장에서 정부의 사과 수용을 적극 지지했다.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국방위에서 "이번 유감표명은 과거에 비해 전례 없이 빠른 기간내에 이뤄진 것으로, 진일보한 태도"라고 옹호했다.

정부부처내에서도 북한의 유감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일 것인지 못하고 혼선을 빚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시장 군수 구청장과 오찬

을 함께 한 자리에서 "북한이 사실상 사과한 것"이라면서 "덧어놓고 감경론으로 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장관급 회담제의 수용 여부에 대해 "정부는 신중히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해 여론을 의식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北 서해교전 유감' 표명 청와대-통일부 '엇박자'

정부내 조율시스템 '빠격'

북한측의 '유감표명 및 장관급 회담 제의'를 놓고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의 반응에서 '은도차'가 느껴지고있다. 통일부는 25일 북한의 입장표명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으로

제안을 순전히 기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청와대로선 여론을 종합하고 정치적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신중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북측의 유감표명과 대화제의를 대해 대처방안을 두고 정부내에서도 이견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이례적 신속 '긍정' 평가 청와대 '여론살피기'-신중한 대응

평가한다"며 적극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어제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는 신중히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언급은 그간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된 점을 감안한 신중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발빠른 통일부의 반응과는 차이가 난다.

통일부의 적극성에 비해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소극적인 것이다. 통일부를 내세워 북측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청와대는 여론의 의식, 한반도 뒤로 빠지겠다는 의도도도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일부는 남북관계 전문 기술자들로 북측

김 대통령은 장래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 북측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햇볕정책에 의문을 품고 있는 여론과 정치권의 분위기를 살피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는 듯하다.

또한 북한측에 서해도발 사태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책임자문책 등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북한의 유감표명 수위가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유감표명은 미흡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정부내 이견 때문에 북측제안에 대한 정부의 조율된 공식입장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입장표명은 다음주 초에나 정리될 것 같다.

/정승욱기자
jswook@sgt.co.kr

악화된 이미지 개선 北 고립탈출 '통큰 처방'

· 잇단 대외 화해제스처 주목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5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장관급회담 재개를 제의한 데 이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북-일회담 개최를 발표하거나 26일엔 미국의 대북특사 수용과 요도호 납치범들의 귀국을 용인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서해교전으로 악화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틀새 쏟아낸 조치들은 대체로 한반도 정세를 경색시킨 사건과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 표시는 남북간 현안이다. 미국의 대북특사 문제 역시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북-미 대화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요도호 납치범들의 귀국은 일본인 납치 의혹과 함께 북-일관계의 중요 사안이자 북-미관계에도 깊이 연계돼 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요도호 납치범 북 거주 허용을 주된 이유로 꼽아왔다. 북한이 남한과 미-일간 갈등의 원천을 먼저 나서서 제거해가고 있다는 얘기가.

북한의 조치들은 내용의 중대성 외에 형식도 이례적이다. 서해교전 유감표명은

美·日과 갈등불씨 제거 한반도 긴장완화 기대

김경성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는 방식을 택해 '직접적 사과'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 기하엔 요도호 납치범 귀국 용인과 북-일 의무회담 개최 사실, 미 대북특사 수용 방침 발표는 북한의 대외창구 중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는 외무성 대변인이 맡았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대외 화해 제스처를 잇따라 취하고 있는 것은 일단 서해교전이나 미국의 대북특사 무산 등으로 조성된 고립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북한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 및 미국과의 대화와 유엔연립(UN) 국가외의 잇단 수교로 활발하게 국제사회에 진출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경제적 9·11테러, 반테러전쟁과 맞닥뜨리지 못한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 및 북-미, 북-일관계가 극도로 경색됐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외부지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회생을 하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임금-물가 인상과 인센티브제 강화 등 경제개선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는 북한으로서 지금 외부의 유·무상 지원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북한의 이런 조치들이 실현되느냐와 미국과 일본이 이를 적극 수용하느냐이다. 북-미관계의 경우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란 난제가, 북-일관계에서는 대량살상무기와 함께 일본인 납치 의혹 등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그러나 북한이 완강히 거부해온 사안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한 것이 만큼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만은 틀림없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조호연기자 chy@yonghyang.com

DJ 사전에 알았나

25일 軍지휘관오찬서 北사과 요구
北 두시간뒤 유감표명 봉지문보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5일 낮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해 강한 분노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태도를 관찰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불과 2시간 뒤 북측은 반문집을 통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진화통지문을 남측에 보내왔다. 김 대통령의 대북 감감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북한

이 즉각 '회답'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인콰에서는 김 대통령이 사전에 북측의 유감표명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물론 청와대 측은 "김 대통령이 사전에 북측의 유감표명을 알았다면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며 '사전 인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소한 김 대통령이 북측의 유감표명 '조감' 정도는 알고 있었으리라는 관측도 있

다. 비록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한 공식 접촉은 없었지만 남북관계에서 비공식 채널은 상시 가동되는 만큼 상당한 뒷담화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청와대 '北 압박했을 뿐'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강력한 사과 요구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수단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 klmi@donga.com

“도발 은폐” “대화 의지” 갑론을박

❏ 통의동위 '北 유감표명'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서해교전사태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과 장관급회담 제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의견은 크게 세가지로 갈렸다. “유감표명을 사과로 볼 수 없으니 장관급회담에 응해선 안된다.”와 “장관급회담 의제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전향적 자세로 장관급회담을 수용, 경의선 복원 등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등이다.

대체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선(先)사과’를, 민주당 의원들이 전향적 자세를 요

구한 가운데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김덕룡(金德龍),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은 당론과 거리를 뒀 눈길을 모았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북한의 유감표명은 결코 사과가 아니라 도발 자체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선사과 후회담’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인제 의원은 “북한의 의도는 불법 도발은 그대로 둔 채 다른 분야에서 실익을 거두겠다는 것”이라며 “장관급회담에 앞서 군사정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북한의 유감표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만 국민정서를 감안,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의 공식사과를 한번 더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다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서해 사태를 규명할 남북합동조사위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서해교전 책임문제는 장관급회담에서 다루어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유감표명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 도발 사건 때와 달리 중앙방송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도 회담제의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단순한 제스처를 넘어 실질적 대화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kkr.ay.com

31일 브루나이 ARF때 北·美외무 마주 앉을까

북한이 25일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북미 대화의 재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북미 관계는 서해교전 발발 직후인 2일 미국이 전격 대북 특사 파견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사실상 완전동결된 상태다. 당시 미국은 철회 이유로 북한측의 시한내 무응답과 서해사태로 빚어진 ‘수용할 수 없는 분위기’ 등 두 가지를 내세웠다.

북한이 서해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특사 파견 철회의 배경이 됐던 걸림돌 하나는 해소된 셈이며 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일단 북한의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북한에 회답했다.

이와 관련, 관심을 끄는 사안은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북미 외무장관 회담 여부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 대표단의 북한 방문이나 풀린 파월 장관이 백남순 북한 외무상을 만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재반 상황을 감안해 보면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선 파월 장관이 이날 어떤 상

황도 배제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또한 북한이 남북 장관급회담 재개를 요청하고 ARF에서 일본과 외무장관 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유연한 제스처를 보인 점도 미국의 입장 결정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 외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미국이 회담을 적극 추진할 의사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지에서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해 올 경우에는 극적

인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내에 자리잡고 있는 대북 불신감이 워낙 완강하다는 점에서 북미 외무장관 회동 여부를 설불리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외교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 번 제임스 웹리 국무부 차관보의 특사 파견도 철회한 미당에 이보다 격이 높은 외무장관 회동에 선뜻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다만 이번 ARF에서 북한이 보다 진향적 자세를 보여 줄 경우 향후 대화 재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대한매일

2002. 7.27(토)

한국일보

2002. 7.27(토)

“재보선 앞둔 미니北風 의도”

통외통-국방위

한나라 “北통지문 비밀합의說 나돌아” 민 주 “모처럼 대화기회- 긍정적 수용”

통외통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표명 및 남북장관급회담 재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도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재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북한의 전외통지문이 서해교전된 ‘우발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남측의 공동책임론을 언급하는 등 진정된 사과가 아닌데도 정부가 사과라고 한 것은 성급한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북한이 책임을 묻는다는 진심적 책략을

펴고 있는 만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을 후에 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동규(趙東圭) 의원은 “정부가 ‘명백한 사과’로 받아들이는 근거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북측이 통지문을 보내온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니북풍 8·8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통지문이 온 게 의심스럽다. ‘미니북풍’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김종하(金鍾河) 의원은 “통지문이 남북간 ‘비밀합의의 산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모처럼 대화의 기회가 온 만큼 회담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유재건(柳在健) 의원은 “북한의 유감표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에 응하되 연희소 설치와 협조 연결, 개성공단 조성 문제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우발적”이라는 표현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해도받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고 해석했다.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허순봉(許舜鳳) 의원은 북한이 통지문에서 ‘(교전)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한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북방한계선(NLL)을 안정치 않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천용택(千容澤)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90년 동해안 침수한 침투사건 때 100일 만에 북한 의무성 대변인이 유감을 표시한 반면 이번엔 27일 만에 남북장관급 회담 북측 수석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훨씬 진정했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donga.com
김승권기자 skim@donga.com

정치권 ‘北 유감표명’ 신중론

徐대표 “정부 너무 성급히 수용”
韓대표 “국민정서 만족 못시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6일 북한의 6·29 서해교전 유감 표명에 대한 대응 전략을 놓고 크게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은 북측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진남보다 ‘신중’적으로 무게 중심이 더 옮겨간 분위기였다.

▽한나라당 = 서성원(徐成源)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이 ‘우발적’이란 표현을 쓰고, 공동책임을 주장하는 등 사과와 재발방지 및 관련자 처벌 요구가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퇴를 시켜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향후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을 뿐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제시와 남북장관급 회담의 전체조건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사나하게 대결강경자세를 취하는 게 득책(得策)이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한나라당

의 대응이 충분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당내 입각에선 북한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덕홍(金德弘) 의원은 “(북측에 대해) 더 사과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면서 “서해도받에 대한 남북합동 조사

진남 “북한이 진일보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일단 평가한다. 하루 빨리 남북대화가 재개돼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협력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보인 첫 반응에 비해 한 발 물러선 발언이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들은 “서해교전의 ‘조문 분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직 진의를 알 수

한나라, 향후대응문제엔 입장표명 유보 민주 “선불리 환영했다 逆風” 여론 주시

위 구현을 요구하는 한편 단절됐던 남북관계재정착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에 나가기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민련 = 한화갑(韓華甲)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의 제안은 국민 감시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며 “남북 대화 재개는 바람직하지만 북한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옳겠다”고 강조했다.

없는 북한의 유감 표명을 선불리 환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자민련 김동원(金東源) 총재는 “북한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를 갖고 정부가 허겁지겁 담아서 마치 유감 표명을 사과로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동원(林東源) 대동원외교안보동일특보의 시위를 촉구했다.

정연욱기자 in11@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東亞日報

2002. 7.27(토)

한나라 北, 남한과 짝짜꿍 한 느낌

민주 미흡해도 北태도변화 긍정적

‘北유감 표명’ 국방·통외통위舌戰

20일 일선 국회 통일·외교·풍상 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하루 전 북한의 서해도발 유감표명과 정부 대응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국방위

한나라당은 서해도발 사태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여가며 여권내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민주당측은 “약간 미흡하다”면서도 북의 태도변화를 긍정 평가했다.

한나라당 하순경(河舜景) 의원은 “정부가 미흡한 유감표명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루빨

리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쟁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충고하고 “남북간에 합의할 주기 위한 회담보다 긴장완화와 충돌예방을 위한 국방장관 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남북간의 ‘짝짜꿍’이란 말은 부적절하다”, “증거도 없이 김정일의 서해도발 개입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지도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준 장관은 “앞으로는 싸우면 이기는 굳이 되겠다”고 말했다. /洪錫僉기자 udo@chosun.com

朝鮮日報

2002. 7.27(토)



한나라 | “책임자 처벌 등 이뤄진 것 없다
통일부 즉각 환영은 비굴한 태도”

민주 | “긴장 완화 위해 國防회담 필요
햇볕정책 문제있지만 기초지켜야”

리 김정일 선권과 밀접관계일 이르고 햇볕정책의 타격을 선전하겠다고 하는 발언”이라며 “북한의 유감표명은 사과가 아니라 서해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북반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기도”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이준(李俊)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장관은 서해도발에 대해 북한의 분명한 사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뤄진 것이 뭐냐”고 따지고, “북한의 유감표명 내용을 보면 남한과 짝짜꿍 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린 경우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하며 NLL에 대한 어떤 협상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민주당 천용태(千用泰) 의원은 “북의 유감표명은 책임소재가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의의표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나만 유감표명이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낫았으며 새로운 변화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그러나 “굳은 북의 사과와 관계없이 연명해전 같은 것이

◆통일외교통상위

통일부의 ‘중속 환영반응’에 비판부터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동갑(金東甲) 의원은 “김현기(金鉉基) 통일부 차관이 북한의 유감 표명이 나온지 한 시간만에 ‘명백한 사과와 유감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한 배경이 뭐냐”고 물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다소 강한 표현을 쓰다 보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과거에 비해 사과 주... 두 렷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유감표명이 나왔고, 보도 매체... 을 뒷받침했다.

리나 한나라당 조응규(趙應圭) 의원은 “남북 문제에 가장 침착해야 하는 통일부가 매우 초보적이고 감성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북한의 진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비전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라며 동조했다.

김용갑 의원은 재차 “북한이 우발적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상호 노력 등 예매한 봉지문 하나 보내 왔는데 정부는 감지하지하는 모습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강산으로 달려가겠습니다’나 다름이 없는 비굴하고 감동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5개월 남은 정권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뜻이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대협(鄭大協) 의원은 “어려가지 분쇄집이 있지만 햇볕정책의 기초는 분명히 지켜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대북정책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서해도발이 군사적인 측면에선 분명히 계획된 도발이지만, 좀더 큰 규모의 정치적 의미에선 우발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 등을 던지며 정 장관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지었다.

/金昌均기자 ck-kim@chosun.com

한반도정세 '풍향계' 초미관심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31일 개막...의미와 전망

북한이 25일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전격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일 외무장관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데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남북 및 북·미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ARF 회의는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여전히 불투명한 북·미대화=북한의 유감 표명 및 남북 장관급회담 재개에 대해 이 국무부는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도 남아야 할 산은 많다. 지난달 25일 미 국무부의 특사파견 재의를 북한이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북·미간 갈등의 깊이가 그만큼 깊기 때문이다.

이번 ARF에서 백남준(白南準) 외무상이 작곡적으로 미국과의 대화의지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북·미 외무장관 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비 행정부내 분위기와 관련, "북한의 유감 표명 등으로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지만 지난해 북한의 특사파견 거부로 여전히 대남감정이 경색돼 있다"며 "북한이 먼저 대화 재의를 앞지 여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다른 당국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 여부가 결정

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대화, 피하지는 않겠다=장관급회담 재개로 남북대화 복원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회담이 남북 외무장관 회담을 재의할 경우 굳어 거침없을 이유는 없다는 게 정부의 내부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여론 등을 의식, 우리측이 먼저 회담을 재의하지는 않기로 했다.

북·미대화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국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대화 중재는 자칫 '저지세 외교'로 비쳐질 수 있고 이는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목되는 북·일대화=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교착됐던 북·일관계가 이번 외무회담을 통해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가외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은 "(북·일관계는) 어려운 상태이지만 대화를 통해 수교교섭에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대 한반도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에서 북한이 적극성을 보인다면 의외의 성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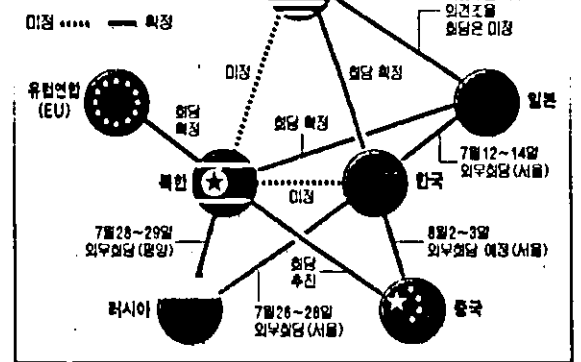
이와 관련, 북한 세류 '요도호' 남시범 4명의 자진귀국 의사표명에 이은 또다른 진전은 이끌어낼 경우 북·일관계 개선의 청신호가 될 수 있다.

차세현기자 chs@ywhyang.com



손잡은 한·러 최성훈 외교평상부 장관이 25일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이고리 이반노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문석기자

ARF 각국 외무회담 상황도



정부 '北유감 수용' 방침

배경과 의미

‘명분보다 실리’ 여론탐색

정부가 대북 강경 여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은 명분에 매달리 실리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 사과와 책임 뒤집 요구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명분인 만큼 이에 집착하기보다 영kip 대로 영kip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실질적 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이다.

지난 4월 임동원 청와대 특보 방북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는 6월29일 서해교전으로 완전 중단됐다. 자칫 김대중 정권이 끝날 때까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서해교전에서 드러났듯 북한은 여전히 활여측성, 호전성이 남아 있다며 끊임없이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숨통을 죄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이 서해교전이 우발적이었으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적인 진통문을 보내온 것은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좋은 기회를 우리 정부에 제공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태도는 북한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이며 북한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일겠다는 태도다. 그러면서 신중 대처를 주문하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의도와 배경을 정면 검토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조심스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몸조심 속 행동준비' 태세는 북한의 대화 제의 수용 여부가 추후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해가는데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업무에 둔 행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아직 대북 강경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일부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설득작전을 벌이며 여론잡이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김대중령이 "북한이 어제(25일) 서해교전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

對北 강경론에 한때 주춤
신중론 정치권 설득작전
재발방지책 등 요구키로

나. 김세현 통일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외교문서상 유감이라는 표현은 사과와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말한 것은 이런 작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내달초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열리더라도 북측에 서해교전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북측이 어떻게 답하든 우리가 한말은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군사회담 제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전히 강경한 대북 여론을 단결기 위한 것임을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대화제의 수용 방침을 정해놓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도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주말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공식 발표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북측 제의를 수용할 때 하더라도 북한의 대남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일단은 신중히 대응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신창호기자 procol@kmb.co.kr



李國芳 첫 국방위 출석 답변 준비 국외 국방위에 출석한 이준 국방장관이 26일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美, 對北대화 일단 관망

'北 서해교전 유감' 반응전망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를 계기로 북미 대화재개에 선뜻 나서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한국 정부내에서 감지되는 낙관적 기류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필립 리커 부대변인은 21일 워싱턴 프레스 센터에서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 북한의 입장 표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와 향후 북미 관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리커 부대변인은 북한의 유감 표명을 한국이 요구해온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단 남북한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라며 즉답을 피했다.

리커 부대변인은 "북한의 유감 표명이 남북 대화와 북일 대화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발표에 따른 미국 정부의 대북 대화 입장은 접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위기 성숙불구 테이블 선뜻 안나올듯

南北-北日접촉등 지켜본후에 결정예상

리커 부대변인은 북한의 유감 표명용 계기로 남북, 북일 대화를 재개하되 북미 대화는 일단 유보해 두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서해 사건의 당사국이 남북한이기 때문에 일단 남북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남북한이 북한의 제의에 따라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면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또한 오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과 일본간의 외무장관 회담 결과 등을 지켜본 뒤 향후 행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리커 부대변인은 ARF에서 미국의 폴린 과월 국무장관과 북한의 백남순 외상이 북미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할 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리커 부대변인은 "북한측과 회담 가능성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북미 외무장관 회담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북한과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다소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한국-미국과 북한간 다양한 외무회담이 ARF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남북 외무회담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서해도발에 대한 입장과 대회의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미와 북한간 외무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한반도 정세의 향방은 북한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복파원, 박희준기자 kuk@sgt.co.kr

CNN "햇볕정책 힘 실어줄듯"

'北 서해교전 유감' 외신반응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은 대남 자세의 변화로 해석된다는 외신보도가 잇따랐다.

미국 CNN방송 인터넷판은 25일 휴전 이후 계속된 수많은 남북 충돌에서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

이 3번째라며 비관할 수 없다

BBC "상부적 위기조장 정책 변화" 아시아 "南서北 '사과'로 받아들여"

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전달까지만 해도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 사령부가 서해상의 '불법적인 경제선'을 재거하지 않으면 남북한 해군간 충돌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북한 당국이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BBC 방송도 북한이 그 동안 서해교전의 책임을 남한과 미국에

전가해 왔으나 이번 유감표명은 북한의 위기 조장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외교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었으며 26일부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이 일본 외상과 만나기로 예정돼 있고 폴린 과월 미국무

장관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BBC는 덧

붙였다.

아시아 朝日는 "북한의 유감표명은 한국에서 사실상 '사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남북 각료급 회담을 위한 실무자협회가 곧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이우리 讀賣는 "대북 감경자세를 보여준 미국과 2년만에 외무장관 회담을 갖게 된 일본을 견제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도쿄=전현일복파원, hyunil@sgt.co.kr

世界日報

2002. 7.27(토)

북 “미 특사 파견뎌 수용”

적극태도 보여…파월·백남순 외무 만날 가능성

북한이 미국의 특사 방북 재추진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미국 역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쳐 서해교전 이후 냉각된 양국 간에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양쪽 외무장관들이 참석할 가운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대화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3편

북한 외무성은 26일 미국의 특사 방북과 관련해 미국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용' 의사가 있음

을 발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서해 사건 이후 미국의 특사 파견이 취소되었지만 앞으로 조건이 마련되어 미국 측이 다시 특사를 보내준다면 우리는 일관한 입장에서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전했다.

대변인은 "얼마 전에 미국이 조미 대화 재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특사를 평양에 보내겠다고 제기해 온 데 대하여 우리가 동의할 준비가 있다"며 "미국이 특사로 누구를 보내는가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 강조해 특사의 '급'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끝난 과월 미국 국무장관은 아시아 8개국 순방에 나서기 하루 전인 25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아시아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미 외무장관 회동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서해교전을 두고 유감을 표명할 때 대해 "분명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유감 표명은 긍정적인 시대 전전이며, 북한이 제안한 남북대화 재개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윤국한 특파원,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한겨레

2002. 7.27(토)

北 “美서 특사 보내면 수용”

북한 외무성은 26일 '서해 사건' 이후 특사 파견이 취소되었지만 앞으로 조건이 마련되어 미국 측이 다시 특사를 보내준다면 우리는 일관한 입장에서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회견에서 미국의 특

사 파견 수용 입장을 표명하면서, 특히 "미국이 특사로 누구를 보내는가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일이다"고 강조했다. 북측의 언급은 특사의 '급'에 개의치 않고 조속히 대미 대화 재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동준기자

한국일보

2002. 7.27(토)

北 “美 특사 파견뎌 수용”

경향신문

2002. 7.27(토)

외무성 대변인…요도호 납치범 귀국 허용 시사

북한은 26일 미국이 특사를 파견하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본 여객기 '요도호' 납치범들의 일본 귀국을 사실상 허용했음을 시사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서해사건 이후 특사 파견이 취소됐지만 앞으로 조건이 마련돼 미국 측이 다시 특사를 보내준다면 우리는 일관한 입장에서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 관련기사 4편

이는 미국이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하고, 북측이 특사 파견 수용 여부에 태

한 답변을 하지 않자 지난 2일 파견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주목된다. 미국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외무성 대변인은 "얼마 전 미국이 조(북)-미 대화 재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특사를 평양에 보내겠다고 제기해 온 데 대하여 우리가 동의할 준비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이날 또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회견에서 "요도호 관계자가 일본으로 귀국할지 여부는 자신들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일부러 붙잡을 필요

도 없고 적절하게 해결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고 NHK 한국어방송이 전했다.

NHK 방송은 "북한은 지금까지 요도호 공중 납치범의 귀국에 대해 '정치량 평가'하면서 일본의 송환 요구는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회견은 북한이 그들의 귀국을 용인한다는 것을 공식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1970년 요도호를 납치한 일본 적군과 4명은 앞서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일본 언론이 지난 10일 보도한 바 있다.

최재영·차세현기자
cyoung@kukhyang.com

“여론逆風 맞을라” 속도조절

■ '北 유감표명·대화제' 정부반응

정부는 26일 북측의 사대교전 유감표명과 장관급 회담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신중하게 대처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북한이 회담 제의치만 회담도 반색하며 한발 앞선 후속조치를 쏟아냈던 이전 입장과는 시뮬 대조적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여론수렴 등을 통해 고심하는 분위기라 보여지며 속도조절하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장관급 회담을 열어 경제국면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비등 것은 아니다.

“긍정적 수용하되 차분한 대처”

저자세 시비 우려 “조금 더 지켜보자”

“北과 대화 필요” 국민설득 병행할듯

여론수렴 과정

정부는 이날 적극적인 수용 입장을 발표했던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왔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조금 더 지켜보지”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깊은 정치권 등의 역풍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사대교전 이후 북한에 강경 입장을 천명해 왔고 엄격한 요구조건을 내건 만큼, 북한의 제의도 성급하게 수용할 경우 대북 저자세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국민 여론이 북측의 유감 표명에 시비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대화제에 상당히 광범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25일 김중태(金重泰) 농림부 장관이 재고 발 대북 지원금 언급

자 침외대가 직접 진화에 나서는 동우보(牛牛)를 거둬내고 있다.

회담제 명분

정부는 그러나 북측의 제의를 적극 활용하면 남북관계를 최소한 청와대 임종환(林東勳) 외교안보총장 특사가 방문했던 4월5일 수준으로는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군부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대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그만큼 대화 수요와 의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담을 통해 사대교전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을 북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화 제의의 명분을 얻을 계획이다. 정부는 늦어도 내주 중 장관급 회담을 위한 금강산 실무협약 개최 일정을 북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손익집은 韓-러 외무 협상을 외교장관과 이고리 어바노프(왼쪽) 러시아 외무장관이 26일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 서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다. 그러나 정치적 피장을 감안, 8·8 재보선 이후로 실무협약 날짜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회담 의제

정부는 장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기존 협의사항을 재점검해 가지적인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의제는 북측이 먼저 제기한 협도 연결이다. 방안에 이어 28일 방북하는 이고리

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북측에 진양작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도 연결은 북한 군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한다. 북측은 그러나 사대교전에 대한 판문점 장관급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북측은 대북 합 지원 문제를 거론할 2차 협정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우리측이 먼저 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결국 향후 남북 관계는 회담에 임하는 북측의 대화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측이 북방안개전(NLL) 침해를 요구하는 등 우리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면 대화 제의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

/이동훈기자 dhlcc@hk.co.kr

‘남는 쌀’ 北지원 다시 떠올라

북한의 사대교전 ‘유감’ 표명으로 북은 쌀 북측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쌀 재고처리 난제에 고심하고 있는 농림부에서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셈. 농업특위와 통해 사료용 쌀을 내리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상태지만 국민 정서와 국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김중태(金重泰) 농림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북한 지원 검토 방침을 밝혔지만 공식 입장은 아직 ‘유보’에 가깝다.

우선 격렬 반대가 불일부로 일

안하만 만일 결정 권력이 없고,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 항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북 쌀 지원은 주는 남측이나, 받는 북측이 모두 만족할 대목이기 때문에 논의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회담의 제의치만 위안 것도 쌀 지원을 염두에 둔 불길직업의 결과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농림부 입장에서 재고 쌀 북한 지원은 가장 합리적인 처리방안. 비록 면에서 쌀을 사료용

이나 주정용으로 공급할 경우 100만석당 리카 2,437억원과 2,374억원의 재정손실이 생기지만 대북 지원시 대북경협기금이 국제거래 등으로 피는 형식이기 때문에 손실은 2122억원에 그친다.

또 해외 무상지원의 경우는 수송비까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2,608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지난 해 10월 남북경협위가 합의했던 지원비율은 30만톤(약 210만석).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

사료용 방출보다 명분중고 비용도 싸 여론항방 일단 주시

제할 수 없다. 농독위의 400만석 방출 권의가 대북지원 방안을 배제한 가운데 계산된 것이고, 사료용으로 검토중인 98년산 쌀은 미질이 떨어져 대북 지원용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내년 초 북한 의 식량수요까지 감안하면 최대 50만톤(350만석) 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쌀은 전체에 비취 곡곡(粃穀) 가운데 미질이 양호한 2000~2001년산이 할 전망

이다. 쌀 지원 재계정안이 워싱턴 경유 남북간 협의, 기술적 처리 절차에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먼저 실무-고위급회담과 경협추진회 등 협의가 마무리되려면 일러야 8월 중순에야 가능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추측. 이후 쌀의 구체적인 인도조건과 물량 가격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전체로 차관형태로 지원할 경우 우리측 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간 차관협정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른내 9월초에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말~10월 초에야 선적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운필기자 walden@hk.co.kr

북, 한미일과 다각대화 손짓

■ 유감표명·특사수용 의미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26일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밝힘으로써 오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에 불리는 관심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남-북-미-일의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5일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남북 강경급 회담을 재의했으며, 이날 저녁에는 아세안지역포럼에 박남춘 외무상의 참가를 공식 발표하고 일본과 외무장관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런 발표가 나온 지 하룻만에 다시 미국이 특사 파견을 추진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인민군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회견은 사실상 미국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특사 파견에 대해 미국이 요청한 시간까지 회답을 주지 않았으며, 미국은 이를 두고 대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번 회견은 그에 대한 북한의 답안 셈이다.

특히 북한의 발표는 이날 끝난 파월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미 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미국과의 관계 복원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에선 외무성 대변인의 회견에 앞서 북-미 간에 뉴욕 채널을 통한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유감표명에 이은 북-일 외무장관 회담, 북-미 외무 회담으로 남북 외무장관의 회동 가능성도 전보다 높아졌다. 정부는 남북 외무 회



26일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장우 기자 woo@hani.co.kr

아세안포럼 만남의 장 활용할듯 '남북 4·5특사 합의' 복원 주목

동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대화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회담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아세안지역포럼이 핵 사찰과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위기감을 예방하기 위해 남북한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이른바 '4·5

합의'의 기본틀을 복원시킬지 주목하고 있다. 이 합의는 남북 대화들 중 심에 두고 북-미, 북-일 관계의 진전, 특히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북한의 동의할 기본틀로 하고 있다.

대화 내용도 관심사다. 특히 북한이 미국 특사 수용의사를 다시 표명한 이상, 미국이 핵심문제로 보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협정 이행을 위한 협상에 성의 있게 임하

는지가 중요하다. 북한은 지난달 원자력기구와의 18차 가습협상을 연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적지 않은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백남춘-파월의 회동이 상사되면서 미국이 핵사찰 협상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자세를 확인하고, 북한 역시 미국의 대화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잡지는 이번 회의를 지나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포럼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해외언론 '북 유감표명' 큰관심

미국대화·식량난극복 위해 '남한카드' 전격제시 분석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강경급회담 개개를 제안한 것에 해외 언론들은 26일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및 식량난 타파를 위해 '남한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풀이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방향전환이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자신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생각대로

간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먼저 '남한카드'를 꺼냈다"며 이번 조처의 배경으로 △식량난 완화를 위해서도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서해교전으로 나빠진 국제 이미지 전환과 함께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자세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오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을 계기로 한 남북 외무장관 회담의 실현에 이번 조처가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따 "북쪽이 유감표명을 하게 된

것은 서해교전 이후 30만의 대북 식량지원이 미뤄진 것이 원인일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미국 《시애틀타임스》은 인터넷판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한 '배량할 전술'에서 극적인 전환을 했다"고 보도했으며, 영국 《비비시방송》도, "북한의 위기조정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전했다. 시애틀 방송은 특히 대화재개 제안이 이고 리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남북한 연세방문 및 아세안지역포럼에서 백남춘 북한 외무상이 풀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접촉할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사실에 주

목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유감표명으로 국내외 김치적 반대자 들한테서 햇볕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이온 김대중 대통령이 입을 열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서해교전은 북한에 의한 계획적 도발"이라는 견해가 강단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하고 남북대화 분위기가 만들어 일본과 미국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외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도 26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하나의 전경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앞으로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도쿄/오태규 특파원, 외신종합 ohtak@hani.co.kr

“低자세로 비칠라...” 속도조절

정부, 北 대화 제의에 신중 대응

북한의 시해 무리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과 7차 남북장관급회담 재의에 대해 2일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던 정부가 하루 뒤인 2일에는 속도 조절에 나섰다. 북한의 유감 표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적지않고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야당을 의식한 것이다.

당장 통일부의 자세가 달라졌다. 전날 “명백한 사과와 유감표명으로 간주한다”며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던 김경기(金敬基) 통일부차관은 이날 말이 없었다. 김 차관 주재로 2시간 동안 열린 전라기회단회의의 결론은 “북측의 전통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 정부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북측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방침을 정했고 다만 국민들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연착륙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오찬에서 “북한이 서해교전사태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고 규정.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했다.

속도조절에 나선 정부는 북측에 보낸 답신(答信)을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북측이 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8월 초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한 점을 감안,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답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내주 초에는 답신을 보내고 북측과의 실무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무접촉과 장관급회담에서 그동안 남북이 합의했던 사항들을 최대한 복원시키겠다는 계획을 다. 금강산 육로관광 등 금강산 관광 활성화, 주석 기간을 이용한 이산가

족 상봉, 경의선 연결 등을 진전시키고, 분위기가 심속되면 북측에 합의를 지원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의 유감표명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회담을 진행시키면서 북측의 추가적인 언급과 조치들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서해도발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측이 고집된 처지를 이번트성 남북대화로 헤쳐나가기에는 전락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내에서도 신중론이 있다.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마치 북을 배고 기다렸다는 뜻 북한 전문가들이 한창 오자마자 ‘과속(過速) 드라이브’를 한다는 비난이 거세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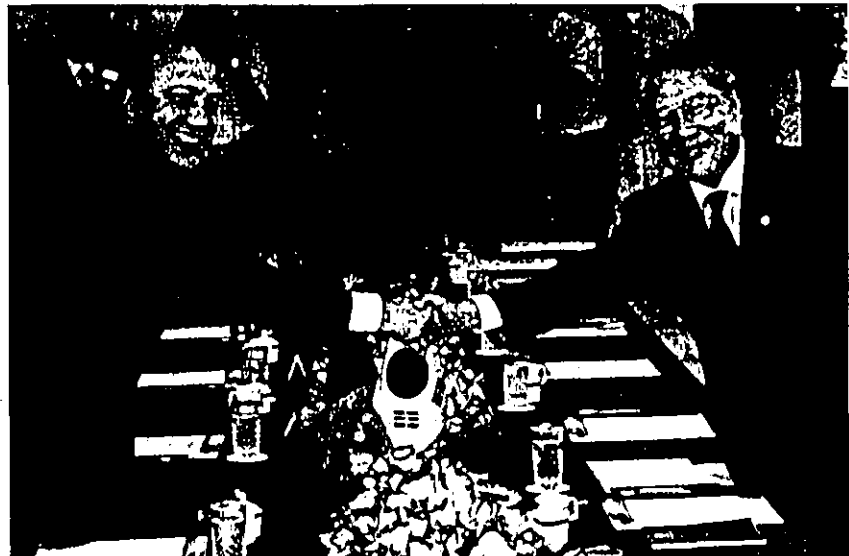
실제로 야당의 비판은 거세다. 서

청원(徐淸源) 한나라당 대표는 “북한이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공격해놓고도 공동책임을 주장하는 등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가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일(金榮日) 사무총장도 “북한이 NLL을 무리화하기 위해 양동작전을 펴고 있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정부가 기다렸다는 뜻이 사과로 간주하느냐”고 개탄했다.

야당은 특히 북한이 8·8 재보선과 대선정국에도 개입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어 자칫 잘못된 경우 남북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金民植기자 baiba@chosun.com

“통일부 즉각 환영은 경솔” 비난에 멈칫 내부적으로 수용태도... 來週 결론낼듯



◇韓·러 외무 약속 최성룡 외교부장관과 이비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6일 서울 한남동 외교부장관관에서 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李德暉기자 leedh@chosun.com

北 백남순외상, 韓·美외무 만날까

31일 ARF 참석할 예정 파월 “北외상 만날수도”

북한의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이 오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서해무리도발 유감표명 및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재의 이후 그가 ARF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ARF 개막을 약 1주일 앞두고 나온 북한의 유감 표명이 ARF에서 어떤 형태로든 마주할 수

밖에 없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화해 메시지’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서해도발로 자초한 국제적 비난을 회식시키고 국제사회에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홍보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는 진단도 적지 않았다.

백남순 외무상이 이미 ARF 기간 일본의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과 중국의 덩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은 물론, 유럽연합(EU)·호주·아세안 국가들과 외무장관회담을 갖기로 일정을 잡아놓은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북은 백남순이 최성룡(崔成龍) 외교부장관과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과 회담 내지는 접촉을 가질 것인지의 여부. 이중 남북 외교장관회담의 경우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정부는 북한의 유감표명이 있기 전에 이미 ARF에서 남북외교장관 회담을 우리가 먼저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서해 유감 메시지가 나온 이상 북측이 ARF에서도 유화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남북 외무회담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쏘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2일 아시아 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 “나는 어떠한 것도 배제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ARF에서 남북 및 미·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해소되고 화해·협력구도가 다시 자리잡는 등 파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측이 안보문제 협의의 장(場)인 ARF에서 시해 도발 후 되풀이되었던 북방한계선(NLL) 문제 제기하면서 그 책임을 한·미측에 전가하는 2중 전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한 견해도 나오고 있다.

/權秉錫기자 kkb@chosun.com

비판여론의식 대화 '조심조심'

정부,北집측재개 입장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표명과 장관급회담 재개에 대해 정부가 회담에 응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움으로써 남북대화는 시작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정부는 북한의 '사과' 수위 문제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하면서 일단 8월 초 장관급회담을 위한 금강산 실무접촉은 해보자는 입장이다. 정부의 속내는 회담을 언제든 희망하고 있지만 한국에 비판 여론이 민간급이 처치 '남남(南南)협정'이나 '직접분할'이

내달 금강산접촉선 쌀지원논의 배제 北측에 南분위기 전달-사과 요구키로

없어날 수도 있어 신중한 태도다.

26일 김영기(金炯基)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관련부처 전략기획단회의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 역시 신중한 기조를 내비쳤다. 대북정책의 창구인 통일부측이 전방 북한인의 '우방적인 무력충돌에 유감을 표시한다'는 입장표명에 대해 '사실

상의 사과로 해석, 진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비해 한반도 불려산 분위기에, 통일부를 통해 여론을 띄워 본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기 때문인 듯하다.

정부는 남북한 금강산 실무접촉이 열리면 그야말로 실무적이고 사무적인 장관급회담 일정한 논의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0만

~50만1의 대북 쌀지원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추후 예상되는 장관급회담에서 다루는 등 사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은 식량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경수와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회담 개시 날짜 등을 논의하는 자

리"라며 "당분간 내부적으로 관계 부처와 꾸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 사이 금강산 실무접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측에 좀더 진전된 사과를 요구하거나 '사과가 미흡하다는 남한내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볼 때 장관급회담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장관급 회담이 늦어질수록 회담 의제는 정치문제뿐 아니라 대북 쌀지원,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문제, 금강산 관광문제 등 패키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유감 표명' 해석싸고 혼란

정치권이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입장표명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 남남 분열 양상이다. 한나라당과 지민련 등은 대체로 한판이 되고 민주당은 그 반대편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상은 정부가 서해교전을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라고 규정할 후 ▲사과 ▲재발방지 약속 ▲북침차 처벌 등 3대 처리원칙을 정해놓고도 남북 북한의 입장 표명을 사과로 간주하고 한 양하면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대북 조급증 논란=한 대법원은 정부가 대북 조급증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사과와 재발방지 및 관련자 처벌요구가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서둘러 사과와 받아들인 것은 겸손한 처사는 비판이 주류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양측적전을 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통일부 차관이 기다렸다는 뜻이 사과로 간주하는 나"며 비판했다. 지민련 김준갑 총재는 대북정책의 책임을 묻어 청와대 임종권 북문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계기"라고 긍정 평가했다.

한하급 대표는 "국민 정치의 숨통이 막히지 않도록 10년간 회담과 최후를 반복한 독일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외통외와 국방위 논란=한나라당 조용규 의원은 "북한이 서해교전을 유감표명함으로써 남북한 사과나 책임 인정할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규 의원은 "북한에서 전외통외가 오지마자 부처간 협의도 없이 통일부차관이



국회답변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 북한의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 수위가 적정하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규기자

한나라 "서둘러 사과인정...정부가 경솔" 민주당 "대표가 직접 표명...진전된 내용"

통일-국방장관도 "사과" "미흡" 입장 엇갈려

사과로 인정하는 등 남북간에 막후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전운'으로 의심했다. 반면 민주당 우미에 의원은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 비해 유감 표명은 사실상 사과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재진 의원은 "북한의 유감표명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에 응하되 먼 회소 실천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기유와 달리 소신을 피력하는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이인재 의원은 "서해교전 문제는 군사정전

위나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남북장관급회담을 재의한 것은 북한이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받기 위한 회담을 재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의 이부영 김덕룡 의원은 "북한에 더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정부측을 지지했다.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김창성 의원은 "남의 입장에 들어가 도둑질하고 경비원 잡으러 죽고 난 뒤 공동으로 책임 지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김정일의 기만책으로 남북이 찍혀온 것 아니냐"

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96년 동해안 감수한 침투사건 때는 훨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시간 압박 100일만에 북한이 외교부 대변인 방외로 유감을 표명한 반면, 이번엔 27일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의 북측 수석대표가 직접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한은택 의원은 "이번 유감 표명을 과거에 비해 진지 않아 빠른 기간내 이뤄진 것으로 진일보한 태도"라고 평가했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을 사과 수준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위에서 "그동안 북측에서 사과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남북간에 주고받는) 전외통외문은 외교문서로 볼 때 유감이라는 게 사과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말해 '유감=사실상 사과'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준 국방부 장관은 국회위에서 "북측이 전외통외문을 통해 밝힌 유감 표명은 우리 군이 요구한 수준에서 아직 미치지 못한다"라며 사과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 기술도 앞으로 우리 전방 20여개의 사정자가 발생했고 협정이 침투하는 피해가 있었으며 이에 국방부는 사건 단일 대책수립을 통해 북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황용호·김정훈·윤성원기자 shyoon@sgt.co.kr

고속정 인양 연기 검토

정부, 北자극 우려... 장관급회담 이후로

김대통령 "北 사실상 사과"

정부는 서해교전 당시 침몰된 고속정 인양작업 개시시기를 지난 25일 한-미간에 합의했던 '가급적 빠른 시일'에서 남북 장관급회담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태풍 북상

등 기상조건 악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군의 고속정 인양작전이 북한을 자극해 회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주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남북 장관급회담 대책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인양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27일 "고속정 인양은 단순한 심종선박 수

색작업이 아니라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모두 가동하는 군사작전"이라며 "이같은 대규모 작전이 북한 군부첩자극해 장관급회담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기상조건과 함께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남북회담과 8-15 민족통일대회 이후로 인양작전을 연기하는 방안을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이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17차 한-미 군사위(MC) 상설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침몰한 고속정 인양작전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인양작전은 북측의 유감 표명과 전혀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군사 당국자는 "심각한 상황이 없다면 29-31일중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미 인양전담부대를 편성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25일 전화홍지문을 통해 밝힌 유감의 뜻을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사과로 간주, 북한이 제외한 남북 장관급회담을 수용키로 하고 내주초 북측에 실무접촉을 위한 담신을 보낼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00여명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고 밝혔다.

/한중호기자 idhan@munhwa.co.kr

문화일보

2002. 7.27(토)

北 대외관계개선 '가속페달'

北-日회담 개최 발표이후 美 특사제의도 수용

대외 관계 개선을 향한 북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북한은 25일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남북장관급회담을 재의한 데 이어 이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서 북-일회담을 갖겠다고 발표하더니 26일엔 미국의 대북 특사를 수용하고 요도호 납치범들의 귀국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와 함께 북한은 최근 들어 내부의 경제개혁 움직임을 서방 인사들에게 과감히 공개하고 있어 대외 관계 개선행보와 경제개혁 움직임 사이에 함수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일 3국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취해진 이런 조치들은 서해교전 이후 한반도에 집게 드리워졌

던 경제 국면을 일시적으로 걷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근본문제들을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 국무부도 26일 북측의 태도에 환영의 뜻을 밝혀 ARF 회의기간중 북·미 외무장관회담의 개최가능성도 한결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요도호 납치범들에 대한 북한의 귀국 용인 방침이 테러지원국 해제의 걸림돌을 치우고 대외관계 개선에 중대 진전을 이룩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로 연결돼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뜻한다. 정부당국자는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사회주의 지키며 최대실리 얻어야"

김정일 강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6일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최대의 실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날 자강도 희천시 희천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어야 하는 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완성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고 조선 중앙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명

“장관회담 실무접촉 8월초에 개최하자”

통일부, 北에 주중 답신 보내기로

정부는 북한이 시해무려도발과 관련, 유감 표명과 함께 8월 초 장관급회담 실무 접촉을 제의해 온 데 대해 북한측에 전화문자를 보내 구체적인 접촉 날짜를 통보하기로 했다.

통일부의 한 담당자는 28일 “지난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다수가 회담 개최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다”며 “이번 주 중반 통일부장관인 정세현(丁世鉉)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북한측 김령성 단장 앞으로 접촉 날짜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측이 실무 접촉 시기를 ‘8월 초’라고 한 만큼 늦지않게 우리 측 입장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일부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답신 내용이다. 북한측의 유감 표명이 미흡하기 이를 데 없고, 관련자 문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는 데다 제발방지에 대해서도 ‘공동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얼버무린 데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북한이 전화문자를 보낸 이후 정부가 여론수렴의 모양새를 갖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통일부는 그러나 답신에서 관련자 문책, 제발방지책 마련 등을

본격 제기할 경우 회담의 전제조건인 양 비쳐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거론 수준에 그치고 회담 재개 쪽에 비중을 둔다는 입장을 정했다.

따라서 답신에는 북한측의 유감 표명을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표현과 함께 실무 접촉의 시기를 통보하는 내용을 주로 담을 예정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통일부는 내부적으로는 8월 들

“문책·재발방지책은 일단 거론만 할 듯”

래 주를 실무 접촉 시기로 확정할 상태이나 북한측의 수용 여부도 고려,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자 문책, 제발방지대책 등은 실무접촉·장관급회담에서 보다 상의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유감 표명만으로도 도발사태를 매듭지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통일부의 후속 조치 요구 강도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실무접촉·장관급회담 등의 성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崔秉默기자 bmchoi@chosun.com

“서해교전 北 13명 사망한듯”

국방부 “북한군 수뇌부 交戰부대 격려 방문”

金위원장은 공장시찰서 실리보장 원칙 강조

국방부는 6·29 서해교전 때 북한군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은 “이준(李俊) 국방장관이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서해교전 당시 북한군 30여명이 사상됐으며 이 중 13명이 사망했다는 관련 집보를 확보한 것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13명 사망 추정’ 부분은 국방부의 최종 결론이 아니며 군이 입수한 여러 유력 집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서해교전의 유감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해군 총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최근 교전에 참가했던 서해안 일대 해군부대를

격려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정보 소식통은 28일 이같이 전하고 “그러나 이는 전투 후의 통상적 행동으로,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최근 자강도 화천시 공장과 기업소를 시찰하면서 ‘실리보장 원칙’을 강조했다.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 전면 확대 등 최근 북한의 새로운 경제조치들이 김 위원장의 주도로 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같은 경제개혁 노력이 당분간 지속된 것으로 분석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南보수세력이 交戰책임 北에 씌워”

北 “NLL은 유령線” 주장

북한은 서해 무려도발 사태의 원인을 법적 타당성이 없는 북방한계선(NLL) 때문이라며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 중앙방송은 27일 휴전 협정 체결일인 이날 “미국과 남한의 우익 보수세력이 지난달 20일 발생한 서해교전의 책임을 북한에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며 이를 전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양방송은 “사해 해상 사건의

근본원인으로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으로 말하면 그 어떤 근거도, 법적 타당성도 없는 친남부담한 유령선”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서해 무려도발 이후 해군사령부 대변인(6월 30일), 외무성대변인 담화(7월 1일), 조선중앙통신(7월 5일) 등을 통해 미국과 남한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지난 25일에는 장관급회담 김령성 북측 단장 명의의 전화문자를 통해 “얼마 전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려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崔秉默기자 bmchoi@chosun.com

서해교전 北사망자수 혼선

국방부 "13명 사망"-"미확인" 오락가락

국방부가 서해교전 당시 우리 고속정에 기습공격을 가했던 북 경비정의 사망자 발표를 놓고 오락가락, 대북 정보 능력 부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일부 언론이 "서해교전 당시 북 경비정에 승선했던 50여명의 승조원중 13명이 사망하는 등 총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하자 "지난 28일 이준 국방장관이 국회 임시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 경비정에서 13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발표를 '입수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27일

'서해교전때 북 경비정에서도 21명이 사망했다'는 또 다른 언론보도와 관련, "이달초 북측 사상자가 30여명에 이른다는 발표를 입수했으나 사망자가 24명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자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군 일각에서는 교전 직후 군단국이 교전 규칙까지 변경해 기미 북이 재차 도발할 경우 무조건 응징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북측의 남북 장관급회담 제의와 교전에 따른 유감표명 이후 북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측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정경기자 worldpk@sgt.co.kr

朝鮮日報

2002. 7.29(월)

北, 서해交戰부대 격려

정부소식통 "유감표명 불구 관련자 문책안해"

국방부 "북한軍 13명 사망"

북한은 서해교전 유감표명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문책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군 수뇌부가 교전참가 해군부대원 순시하고 심한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8일 "북한이 서해교전은 우발적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 해군작전 총책임자 김승삼 해군사령관의 경우 최근 서해교전에

참가한 8천대 동 시해 전산포 및 동 산포 일대 해군부대원 순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하계(夏季) 훈련기간 중 이례적으로 240㎞ 다연장포 및 동 지상에 배치된 장거리포로 해군 항정을 공격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각종 정보로 종합한 결과 서해교전 당시 북한 경비정에 승선했던 50여명의 승조원 중 13명이 사망하는 등 총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각정경기자 kyw@chosun.com

대한매일

2002. 7.29(월)

"서해교전 북한군 13명 사망"

국방부 잠정 추정

국방부는 서해교전 당시의 북한 해군 사망자 13명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황의돈(黃義敦) 대변인은 이날 "이준(李俊) 국방장관이 지난 28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한군 사

상자 30여명 가운데 사망자는 13명으로 추정된다는 군 발표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3명 사망 추정은 국방부의 최종 결론이 아니고 유력 후보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집계로 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 김경문기자 kkwon@daily.com

국민일보

2002. 7.29(월)

한반도 '해빙무드' 오나?

北 장관급회담 제의 후 변화

북한의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제의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기류가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다. 무시미 대통령의 의의 즉 발언 이후 북·미 관계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북을 잇는 북·일, 북·러 간 대화와 접촉까지 막았으나 이번 제의를 계기로 해빙 무드로 바뀌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누그러지지 않은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국민 감정과 '사과로서는 미흡하다'는 정치권의 비판 때문에 북한 제의 수용을 공식 발표하지 못한 채 고만아 빠지고 있다.

○ 남북 및 북·미 외무장관회담 가능성 = 30일부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는 남북한과 미국이 대화개념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남북 및 북·미간 외무장관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관심사는 북·미관계의 복원. 북한은 이미 지난 26일 '미국이 특사를 파견한다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것이다'는 직극적인 수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북·미는 ARF 회의에서 양국간 입장충조원하고 구체적인 의사 파견 일정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 백남운 외무상과의 회담을 검토중이다. 남북 장관급회담을 재의하고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북측의 진의상 파악해 남·북 양측이 간헐적이다.

○ 한반도 주변 6개국 접촉 - 러시아의 이비노프 외무장관은 시골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 두 정상에게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자국의 외교적 위상을 이번 중재자 역할을 통해 회복

하려는 태세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작 지원에 배경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ARF 회의 기간 동안 북·일 외무장관회담을 확정해 놓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 경제원조 시급한 북한 내부시정 = 북한은 임금, 물가, 현물을 동시에 근 북으로 인상하고 자율기업 경영에 같은 노동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화의 공급이 적잖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천체원 경제도 되살리기 위해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원조를 받아야 한다. 또 경제특구별 통합 외국 기업의 진출도 특이하게 기다리고 있는 합선이

북·미 외무 무릎맞달 가능성 커

러 푸틴대통령도 중재역할 나서

정부, 국민감정등 우려 고민 중

전에 대한 공식적인 유감표명도 이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정부와 고민 =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 제의에 대해 산뜻 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자민련 등 정치권은 대북 강경대응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 북한의 유감 표명도 정부 자체의 '신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대응입장에 비해 보잘것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부당스럽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제의를 수용한다는 원칙은 세워놓았다.

정치권과 여론을 탐색하고, 대북관계에서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대화재의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시점은 이번 ARF 회의가 끝나는 8월 초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호기자 procol@kmb.co.kr

“실종자수색 한달이나 미뤘는데 北자극 우려 다시연기 말이되나”

軍내부 고속정인양 연기검토說에 발끈

서해교전 당시 침몰한 해군고속정의 인양작업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남북상황을 고려해 연기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자 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갖춰 빠른 시일 내 고속정 인양 및 실종자 수색작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한 것도 정치권의 ‘연기 검토설’을 기만한 것이다.

황 대변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반응을 우려해 인양작업을 남북장관급회담 이후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교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태풍 등 기상조건 악화로 고속정 인양과 실종된 한상국(韓相勳) 중사의 수색작업이 연기된 마당에 북한 군부를 ‘자극’할지 모른다고 해서 이를 또 다시 연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측은 여전히 북방한계선(NLL)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군의 이 같은 태도로 미뤄 인양작업은 이르면 29~30일경 예정대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관계자들은 정부가 북한측의 유감표명을 사과로 인정한 데 대해서도 “교전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도발방지 약속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東亞日報

2002. 7.29(월)

한나라 “新北風 어림없다

李후보 ‘北유감 정부수용’ 강도높게 비판 국회서 남북문제 강력대응 ‘악용’ 차단키로

한나라당이 연말 대선 때 또다시 ‘북풍(北風)’이 침략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가 직접 나서서 연일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에 대한 정부측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이다.

이 후보는 27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면서 “분명한 무력도발을 우발적 충돌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도 남북 쌍방이 공동 노력하지 않고 한 것은 사과 취지가 담겨 있지 않은 대단히 미흡한 것이다”며 “그러나 정부와 대북원은 이를 분명한 사과로 보고 집착을 서두르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안보를 걱정

하는 진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문책을 다시 한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연말 대선 때 청와대와 민주당이 침략적으로 ‘북풍’을 이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우리도, 북한도, 대선에 임할을 미치기 위해 침략적으로 (북풍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한나라당 내에선 북한의 갑작스러운 유감 표명이 ‘북풍의 전주박’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청근(鄭亨根) 의원은 “이번 유감 표명이 남북간의 사전 조율 없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불법협상설을 제기했고 이 후보의 한 측근도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대선 전 답방 움직임 등 모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북풍’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활동을 통해 서해교전 등 남북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그러자 민주당 장진형(張進亨)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원래 제1당의 후보로서 균형 감각을 상실한 냉전수구적인 사고를 나타낸 것으로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 후보가 비전과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 쪽이 말하는 순간까지 전전 한번 하지는 것인지 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경향신문

2002. 7.29(월)

昌 '北유감' 일축은 대내용?

• 이틀째 강경론 배경 관심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가 27, 28일 이틀간 '연속으로 북한의 유감표명을 "대단히 미흡하다"고 규정하고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문제 등을 거듭 요구했다.

이후보는 27일 평소 참석하지 않던 주요당직 자회회에 나와 강한 어조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당 지도부는 이에 따라 28일에도 재차 사과를 촉구하면서 진면목인 공세를 취했다.

이후보가 북한의 유감표명에 분제세기를 하고 나선 것은 '대북한왕'보다 '내내왕' 측면이 강하다. 북한의 재(再) 사과를 얻어내기도는 정부측 대응에 여운이 초의적이지 않다고 보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8·8 재·보선에서 경험하려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후보는 "정부와 대통령은 이 정도 유감표시를 분명한 사과로 보고 하루이침에 집착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경필(南景勳) 대변인은 "국민 절대 다수가 진정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만 북한을 비호하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 수용' 비판 여론 판단 재보선 겨냥 정점화 의도 남북간 이면거래 의심도

한나라당은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년), 판문점 도끼 비행사건(1976), 씨백스 인공기 계양사건(1995), 북한 잠수함 동래침투사건(1996) 때의 북한측 반응을 상세히 소개하고 과거사과와 비교할 때 이번의 유감표명은 수준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후보는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남북한간에 이면합의나 뒷거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보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 속에서 '신북풍(新北風)'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연결된다.

이후보는 "북한 카드를 대선에서 전략적으로 이용에선 안된다"고 말했다. 서형원(徐衡源) 대표도 "남북문제는 이 집권에서 이 정도 선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경기자 leek@kyunghyang.com

世界日報

2002. 7.29(월)

“北유감표명 사과로 볼수없다”

이회창후보, 金대통령 수용입장 정면비판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서해교전과 관련한 북한의 유감표명에 대해 사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분명히 하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사실상의 사과'로 수용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 후보는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지난 25일 무력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시는 대단히 미흡한 것"이라며 "분명한 무력도발용 우발적 충돌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도 남북 쌍방이 노력하지고 한 것은 전혀 사과의 취지가 담겨 있지 않다"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은 이를 분명한 사과로 보고 다시 접촉을 서두르는데, 이 정도 유감표시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정부가 무력도발의 재발을 방지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문제를 다시 한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남북관계 개선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남북관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南景勳) 대변인은 28일 논평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 대통령이 기대했다는 뜻이 북한의 미흡하기 짝이 없는 유감표명 탓이다"며 "국민공수권자로서, 국가최고지도자로서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판단"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정전환(鄭全煥) 부대변인은 "원래 1당의 후보로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냉전수구적인 사고로 무

책임한 처사"라며 "이 후보가 한쪽이 당하는 순간까지 전쟁 한번 하자 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허범규기자 hbk1004@sgt.co.kr



푸틴 친서읽는 김위원장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8일 평양을 방문한 이고리 이비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서 전달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읽고 있다. /평양=서병

朝鮮日報

2002. 7.29(월)

“사회주의 원칙속

實利추구 보장”

金正日, 현지지도서 강조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28일 자강도 회천시 공장과 기업소를 시찰하면서 사회주의 원칙 고수와 실리보장 원칙을 강조했다. 조선중일방향이 27일 보도했다.

방출은 김 위원장이 회천 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며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달 연계 하는 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주체적인 계획경제 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예 단위의 참발심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사회주의 속 실리 보장’ 발언은 북한이 7월 1일부터 임금과 참가 인상 등 경제개신관리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홍영환기자 bmcho@chosun.com

北 교전유감 사고 南南 설전

□ 정치권 공방 안팎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 이후 정부의 대북 대응 자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 등 한나라당 측은 "북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라면서 남북관계에서 지기야 할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민주당은 "평전수구직 사고"라고 반박하고 있다.

● 한나라당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사과 인정 발언과 관련, "북한의 유감표명 몇마디에 범죄부를 발부해 주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수위나 전달방식이 예전에 비해 훨씬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북한의

한나라 "능장 유감 몇마디에 면죄부라니"

민주 "사사건건 판죽... 남북대화 의지 의심"

이번 사고는 무력도발과는 무관한 '인공기 계양사건' 때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정권은 북한이 신속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지만, 도끼만행 사건 때도 북측은 3일만에 유감을 표했다."면서 북한의 '늦은 사과'에 불만을 표출했다.

북한의 유감 전달방식도 부성의라다고 보았다. "과거에는 최고지도자 명의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외교부 대변인 이름으로 중앙통신·평양방송을 통해 발송을 했으나, 이번에는 전화통지문 전달에 그쳤다."는 얘기다. "군사

적 도발에 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나선 것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96년 잠수함사건 이후 북한의 언급이 '사인-사과-재발방지'의 3요소를 갖췄는데도, 당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는 '부족하다.'고 했다. "는 사례를 거론하며, "너구나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서둘러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국군통수권자-국기최고지도자로서 경솔한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 민주당 한나라당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

는 분위기다. 과연 한나라당과 이회창후보가 남북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북측의 '유감' 표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남북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 정진형(鄭鎭亨) 부대변인은 28일 한나라당이 후보가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한 정부의 수용태도를 비난한 것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한대 1당의 후보로서 균형각각을 삼실한 부적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사건건 대북문제에 대해 흠집내기와 발목잡기로 일관해온 이 후보가 또다시 비견과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쪽이 망하는 순간까지 전쟁 한번 치자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우 김재천기자 jw@kcdaily.com

世界日報

昌, 보수층 결집-新북풍 차단용

李후보의 金대통령 對北정책 비판배경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과 관련해 북한의 진의 평가와 인식, 한우 남북 대응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27일 "대단히 미흡하다"며 선을 그었다. 전날 김 대통령이 "사실상 사과"라는 평가와는 선명치다.

이 후보의 이같은 입장 정리는 서해교전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한 반감과 국민들의 안보의식, 정부의 대북 조급증에 대한 비판여론에 호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8·8 재·보선과 대선을 앞두고 광범위한 보수층 표를 결집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북풍'에 대한 우려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

된다. 이 후보는 정부의 안보태세를 특히 문제삼았다. 그는 "김대통령과 정부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 과연 무력도발 재발을 방지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안보를 걱정하는 진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

'정부 對北조급증' 국민 비판여론에 호응 北 '유감'수준도 불만... 'DJ패리기' 강화

다. 앞서 김 대통령은 북한의 진의에 대해 "전례 없이 신속하게 유감을 표시했다"며 긍정평가하고, "전쟁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현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무원칙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 발언 비교

김대중	이회창	이후보
사실상 사과했다.	북한유감 표명평가	대단히 미흡하다. 진해 사과와 뜻이 담겨있지 않다.
전례없이 신속하게 유감표시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언급.	북한 진의	대안을 일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략의 이유.
신중히 대책 강구함 (사실상 수용)	대외계의 수동여부	명백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다시 요구.
정부는 수교도 안보불 소홀히 하지 않는다.	정부의 대응평가	안보에 대한 걱정과 긴장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
전쟁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 관계 절진적 개선.	한우 남북관계	남북관계 무원칙이 문제, 안보에 대한 확고한 원칙까지야.

인공기 계양사건 때의 유감 수준보다 못하다고, 76년 관동침 도끼만행사건 때 3일만에 유감 표명한 것에 못미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남경필 대변인은 "07년 1월 당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잠수함 동해침투사건의 사과문구와 관련해 매우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고 관련 발언을 공개했다.

/윤상환기자 shyoon@sgt.co.kr

亞太22국 + EU의장국

역내정치·안보 협의체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아시아·태평양 지역 22개 주요 국가와 유럽연합 (EU)의장국이 참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만든 정부간 경제·안보 협의체다. 회원국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세안 (ASEAN) 10개국에, 대화 상대국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의장국 (현재 덴마크) 등 10개국, 그리고 대화 상대국은 아니지만 회원으로 가입한 파푸아뉴기니, 몽골, 북한 3개국 등 2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94년 창설됐지만 한국 등 국제사회엔 지난 2000년 7월 북한의 가입을 계기로 관심이 집중된 회의다. 북한은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 해병부대 속에 8차 방북 회의에서 가입했다. < 김수정기자

대한매일

2002. 7.29(월)

한겨레

2002. 7.29(월)

“북 사과 미흡” DJ 겨는 ‘창’

외경표명 미루던 이회창후보 강한 비판 나서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그동안 확실한 의견 표명을 미뤄 왔던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북한의 사과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정부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주요당직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분명한 무력도발은 우발적 충돌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도 남북 쌍방이 공동 노력 하지도 한 것은 사과 취지가 담겨 있지 않은 대단히 미흡한 것”이라며 “이 정도 유감표시를 갖고 (대북대화 틀) 서두르는 정부와 대통령이 무력도발의 재발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예초 북한쪽의 재의에 대해 다소이

정정한 태도를 보였던 이 후보가 이처럼 강한 어조로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대북협상 태도를 ‘지지세 외교’로 몰고간으로써 8·8 재·보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를 다시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 정견형 민주당 부대변인은 “원내 제1당의 후보로서 균형각각을 상실한 냉전수구적인 사고”라고 비난했으며, 유운영 자민련 대변인은 “예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이 후보가 남북교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공격했다. 최익철 기자

東亞日報

2002. 7.29(월)

중앙일보

2002. 7.29(월)

亞太 23國 참가

‘아세안포럼’ 열려

南北·北美회담 가능성

동남아 10개국 이 참가하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외무장관 회의, 아세안+3(한·중·일)외무장관 회의, 남북한·미국 등 아태지역 23개국이 안보문제를 다루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외무장관 회의 등이 29일~8월 1일 브루나이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에는 ARF 회원국인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2년 만에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서해교전 이후 처음으로 남북 고위 당국자 간 접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별도의 남북 외무장관 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먼저 회담을 제의하지는 않으나 북한이 제의해오면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풀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인도 방문길에 나선 파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ARF 회의에서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과 회담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브루나이=오영환 기자

美, 北변화 긍정평가

파월 “외무회담 배제 안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과 미 특사 수용 의사들 연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담 때 풀린 파월 미국 국무부 장관과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의 회동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 8개국 순방에 나선 파월 장관은 27일 중간기지에서 동행한 기자들에게 백 외무상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포스트는 파월 장관이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과 남북대화 재개 요청 등에 대해 “북한의 발표는 긍정적 조치”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워싱턴=한기홍 특파원

eligiusdonga.com

美 켈리특사 방북 재추진

北 대화 원해... 이르면 내달 가능성도

미국은 오는 31일부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태도에 따라 서해교전 후 철회된 고위특사의 명양 파견을 재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7일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에 이어 미국 특사의 방북을 요청한 데 대해 부서 행정부가 상당히 의미를 두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브루나이

에서 북·미 접촉 결과에 따라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켈리 차관보가 방북하기 위해서는 일정에 대한 협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8월 또는 9월 방북 가능성을 점쳤다.

워싱턴/이승철 특파원

경향신문

2002. 7.30(화)

軍·官 고속정인양 연기 갈등

서해교전 당시 연평도 근해에서 침몰된 고속정의 인양작업 시기를 놓고 정부 일각에서 연기론을 제기해 주저론 폐지에 이어 '북한 눈치보기'라는 논란이 재연됨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양작업 연기를 주장하는 쪽은 지난 5월 임동원(林東源) 대북 특사의 방북 이후 주저론 폐지 방침을 들고 나온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부 대북관련 부처로 알려졌다. 이들은 "장관급회담을 앞두고 남북화에 본 위기와 기상악화 등을 고려할 때 이 답말로 예정된 인양 작업을 장관급회담 이후로 연기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고속정 인양은 단순한 실종선박 수색 작업이 아니라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모두 기동하는 군사작전인 만큼 북한 군부담 자극할 수 있고 제9, 11호 대포 '뽕센'과 '뽕뽕'이 부상중이라 정밀한 인양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양작업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태풍도 소멸됐는데 군 인양작업을 남북관계 문제와 연결하는 것

은 대북 과민 반응"이라면서 "무작정 연기되면 '북한군 눈치나 보려고 해군 장병의 목숨을 맞바꾸었느냐.'는 여론의 질책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27일 국방부 황의돈(黃義敦)대변인도 공식 입장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의 유감 표명과 무관하게 계획대로 강력한 대비태세 갖출 가운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실종자 수색 및 고속정 인양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준(李俊)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예방한 리언 리포트 한·미연합사령관으

로부터 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고, 인양 작업 중에 공중조기경보기(AWACS)와 초계함 등을 동원한 해상 무려사위함 펼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주에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인양작업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실령 연기 방침을 정해도 실효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군의 반발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북 저지세'라는 정쟁의 빌미줄 제공할 우려가 커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경운기자 kkwon@kdaily.com

官 "北자극우려, 장관급회담후에"

軍 "눈치보기 오해소지, 예정대로"

국민일보

2002. 7.29(월)

南北외무 이번주 회담 가능성

崔외교 아세안포럼 출국

최성훈 외교부장관이 30일부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3 외무장관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출국한다.

이번 ARF 회의에는 특히 북한 백남순 외무상이 참석, 서해교전사태 이후 첫 남북 고위당국자간 접촉이나 회담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최장관은 회의기간 관련 파월 미국 무장관과 회담을 열어 서해사태 유감 표명 및 남북 장관급회담 재의 등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른 대북정책을 조

윤한다. 또 중국, 일본과 한·중·일 3국 외무장관회담도 열고 유럽연합(EU), 캐나다와의 양자 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다. 북한 백외무상은 31일 일본과 외무장관회담을 갖기로 화장한 것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 호주에도 양자 회담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21개국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선 또 파월 미 국무장관,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 탄자니아 중국 외교부장,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한반도 주변 4강간 연세접촉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골간의 서울 방문 일정을 마치고 28일 특별 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 김외무기자

世界日報

2002. 7.29(월)

파월, 北-美회담 시사

31일 ARF서- "北태도변화에 적절조치"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북한이 미 특사의 방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오는 31일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미 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관련기사 4면)

파월 장관은 이날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뒤 중간 기착지인 이탈리아 시고넬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표명과 미 특사 방

북수용입장 천명 등과 관련, "북한이 지난 수일동안 내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성명들을 내놨다"며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ARF에서 파월 장관이나 제임스 골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북한 관리 사이의 회담 가능성은 묻는 질문에 대해 파월 장관은 "캘리 차관보와 만나 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박원규특파원 wgnark@srt.co.kr

광화문에서

이동관 정치부 차장



햇볕정책 '나홀로 과속'

6·29 서해도발 이후 25일 북한의 유감 표명에 이르기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발생한 남북관계의 우여곡절을 우리 정부 쪽 실명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북한 현지 군부대의 ‘의도적 도발’ 입은 분명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김정적 주장이다. 북한당국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차실상 사과’를 해 왔고 대화개개의사까지 밝힌 만큼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하루 사이에 ‘적극 수용’에서 ‘신중 대처’로 풍향 변화를 보인 데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붙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된다.

“북한이 유감 표명을 해왔다는 보고를 받고 김대중 대통령은 ‘신중한 대응’을 지시했으나 통일부 관계자들이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해 다소 앞서 나갔다.”

복잡다단한 경위를 줄이고 줄거리만 추려 놓은 이 요약본을 읽고 나면 누구라도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울 것 같다.

우선 굳이 ‘음모론’에 기울지 않은 사람이라도 북측과의 접촉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북과 관계된 일은 아주 작은 사안이라도 치밀한 전략 전술 아래 행한다는 점을 금방 알게 된다.

90년대 남북국회회담에 참여했던 박관용 국회의장도 최근 사석에서 “북측과의 협상 도중 ‘국회의 권능’에 대한 얘기가 화제가 되자 북측 대표가 우리의 국회법 규정을 짚음이 외우며 논박을 하는 것을 보고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이런 점에서 서해교전이 ‘우방적’ 사건이란 북측 주장이나 ‘최고지도부와는 무관한 사건’이란 우리 정부의 ‘감정적 견해’를 들으면서 60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김일성 주석의 해명과 너무도 논리 구조가 비슷하다고 느꼈다면 지나친 의심

일까. 김 주석은 70년 평양을 방문한 이후 6·25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좌익맹동분자들이 한 짓이지 내 의사나 당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백보 양보해 서해교전이 ‘북한지도부와 무관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일방적 포격으로 무고한 장병 5명이 숨지고 배 한 척이 침몰했는데 우리가 얻은 것은 책임소재가 애매한 한마디의 말이나”는 항변이 나올 경우 설득하기가 마땅치 않을 것이란 점이다.

통일부 관계자들의 ‘정치적 판단 부족’ 때문에 북측의 전화통지문이 오자마자 ‘적극 수용’이란 입장발표가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그동안 정부 내에서 북측의 유감 표명을 고대했던 분위기가 관측해 있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북한과의 대화개개가 절실하다면 그럴수록 왜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과 감지작업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반면에 김부 혼자 ‘나 홀로 과속 드라이브’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가 하는 점이다.

6·15 김장회담 때만 해도 현 정부는 이당이나 언론에 사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햇볕정책’의 원조격인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당시 야당인 기민당에 극비사항까지도 알려주고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혔던 전례가 상기되는 것도 아 때문이다.

대북문제는 항상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면서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역풍을 피할 수 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 정권의 되풀이되는 대북정책 ‘과속 드라이브’를 보면서 간혹 ‘대북문제만은 우리가 선적으로 하는 일’이란 독식 의식이 팽배한 것 같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dklee@donga.com

경향신문

2002. 7.29(월)

러外務 金위원장 만나 푸틴대통령 친서등 전달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28일 평양을 방문한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환담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이바노프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와 선물을 김위

원장에게 전달했으며 김위원장은 이바노프 장관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중앙방송은 전했다.

두 사람의 회동에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안드레이 카를로프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가 배석했다. 이바노프 장관은 앞서 백남순(白南淳) 외무성과 회담을 갖고 친선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

한겨레

2002. 7.29(월)

수용내군이 푸대니를 일으켜 어린 조카 단종(재위 1453~1455)을 끌어냈을 때 우의정 정변(?~1454)은 제삼시로 전라도의 김상도를 거쳐 서울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가 광주에서 왕보인·김종서 등을 표시하는 것을 보고 용안역에 이르렀을 때 한 관원이 말을 달려 오며 "전지가 있소"라고 외쳤다. 정변은 죽음을 각오하고 말에서 내려 "노상에서 형을 받을 수는 없으니, 역관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관원은 "공이 귀양갈 전라도 낙안으로 압송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변은 낙안까지 가는 10여일 동안 한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낙안에 도착했을 때 "수고했다"고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안려십기술) 그는 낙안에서 처형됐다.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색깔시비

이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태연하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에서는 품위와는 답을 쌓을 지질의 밥이 너무 흔하다.

"오늘날 미국에는 지식인은 없고 '병사'만 있다"는 것은 험연 험물 교수(시카고대학·철학)의 말이다. 누구나 텔레비전을 보기만 하면 15분 안에 배울 수 있는 거친 말과, 서툰 짜리 짜리 철학을 말한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의 한국을 여전한 것처럼 들린다.

정/경/의 즉비소리



'햇볕'은 끝났는가?

김권교제 이후 이 나라의 정치판은 저질의 육질이 됐다. 그러더니 지난 23일에는 한나라당의 이규태 총무가 민주당을 가리켜 "빨치산 집단 같은 느낌"이라는 극단적인 막말을 했다.

이 총무가 "말은 잘못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사과하고, 서정원 대표도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당을 '빨치산 집단'에 빗댄 이남의 발언이 무연히 터진 단발선의 사고는 아니라는 데 있다. 그것은 6·15 공동선언 이후 한나라당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색깔시비와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북의 2중대(김용갑 의원)

라든지, '북의 홍위병(박승국 의원)'이라든지, 사학법 개정안에서 '사회협약을 통한 고통분담'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김만제 의원)' 따위를 붙였다든지, '죄과'로 문 일련의 색깔시비가 그것이다. 사실상 '빨치산'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6·15 공동선언이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미국 정부의 공조로 이룩해낸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김 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있기 전인 1999년 미국의 패리 조경관이 평양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마 6·15 공동선언의 큰 원칙은 이때 협의를 보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

그에 앞서 북과의 수교에 합의했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필리핀이 '먼저 남북 대화'를 요구하고, 독일도 '남북대화부터 하라'고 해서 북의 백남순 외무상을 문전박대했다. 미국의 막강한 외교망을 통해 법세적인 공조체제가 가동됐던 것이다.

또한 6·15 공동선언은 법세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북의 2중대'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땅의 한나라당에 속한 사람들밖에 없다는 우스꽝스런 결론이 나온다.

6·15공동선언은 한·미공조 성과물

미국의 대외정책은 대통령의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다. 국무부·국방부의 직업관료 집단, 의회, 그리고 여론이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타협의 산물이다.

북에서 요도호 남치 적군파가 일본 귀국 의사를 밝히고, 시장경제 원리를 실행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북-미 사이에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

북쪽에 서해교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변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악의 축' 한미대로 햇볕·포용정책이 끝난 것은 아니다. 6·15 공동선언은 법세적인 공조·지지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기억해 줘야 할 것이다.

北에 '남북대화 수용' 답신

이르면 내일중 장관급회담 실무접촉등 통보

정부는 남북 장관급 회담 실무접촉을 8월초 개최하지는 북한측 제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데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답신을 이르면 30일중 북측에 보내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이 우리가 요구해 온 사과 수준에 미흡하다는 논의가 있음을 잘 안다"고 진제하고 "그러나 장관급회담 자체를 거부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데 여야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어 회담을 본격 추진

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빠르면 30일 중 실무접촉 일정과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

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답신에서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미흡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중호기자 ichan@munhwa.co.kr

문화일보

2002. 7.29(월)

미국무-북외상 만날 예정

북미관계 진전 예상 ... 공식회담 가능성은 희박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폴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서해교전 유감표명 및 남북장관급 회담 제의, 미 방북특사 수용방식 등 잇따라 내놓은 성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북한의 성명들은 내가 보기에 일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북한 백남은 외무상과 브루나이에서 만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파월 장관의 아시아순방에 관한 인도 뉴델리발 분석기사에서 파월 장관이 26일 첫 방문국인 인도로 가는 도중 가진 기내 회견에서 "매우 긍정적인 아들 성명"이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말했다.

신문은 그러나 앞서 국무부 관계자들이 파월-백남순 회동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밝히고 이들은 27일까지도 이에 대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아시아 순방 중인 파월 장관과 백남순 외무상이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워싱턴 외교소식통의 말을 빌려 2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외교소식통은 28일 파월 장관과 백 외무상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 "폴린 파월장관과 백 외무상이 정식으로 미국-북한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해 공식회담 형태로 만날 가능성은 적다"며 "그

러나 ARF 외무장관회담 및 공식 만찬 또는 다른 부대 행사에서 만나게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파월 장관과 백 외무상이 비록 공식 양자회담은 아니더라도 ARF 외무장관회담에서 대화해 상호 만남을 통해 미-북대화 재개 등 워싱턴-평양간 현안을 논의하게 되면 이는 미-북관계의 대단한 진전이라고 이 외교소식통은 전망했다.

내일신문

2002. 7.29(월)

금주 초 금강산 실무회담 본격 추진

정부는 북한이 서해교전 유감표명과 8월 초에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금강산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해오는 데 대해 이번주 초 이를 위한 실무접촉 준비작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형기 통일부 차관은 28일 이같이 밝히고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장관급회담 대표 4명 중 일부가 금강산 실무접촉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 전화 봉지문 전달은 20일나 30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북측이 전문 문 전달 두 시간 후 이를 보도한 점을 들어 우리측도 사전에 전달시기를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차관은 금강산 접촉과 관련, "서울에서 개최될 7차 장관급 회담의 의제와 일정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며 "북측이 먼저 남북철도연결 문제와 이산가족문제를 거론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南北장관급회담 새달초 실무접촉

정부, 8월 2~4일 금강산서 개최 제의할듯

정부는 이르면 30일 대북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8월2~4일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끝나는 대로 남북 실무접촉을 가질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 협의될 거처 이같은 내용과 함께 대표단 명단 등을 포함한 답신을 곧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산에서 가질 실무회담에서는 장관급회담의 제와 일정 등이 잠정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북측의 제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큰 맥락에서 좋게 평가하는 분위기인 만큼 ARF를 통해 남북, 북·미, 북·일간에 대화가 더욱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ARF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복삼기자 youngtan@kdaily.com

남북청년학생 통일대회 9월 7·8일 금강산서

빈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

지난 20~23일 평양에서 실무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2002년공공동행사 남측 추진본부 청년학생위원회 관계자는 29일 "남북의 청년학생들 500여명이 9월 7~8일 금강산에서 '청년학생통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다음주 초 남측 청년학생단체 대표자 회의를 갖고 준비단을 꾸려 대표단 선정과 구체적 실무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본부측은 지난해에도 남북청년학생 통일대회할 준비했으나 "민중대파문" 등으로 인해 불발에 그쳤다. 하지만 추진본부측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정부가 그동안 남북을 분열하며 문제삼았던 법청하권, 친흥련 관계자



김정일과 러외무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평양을 방문한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맞아 접견장으로 들어서며 촬영되고 있다. 서울 방문을 마치고 이날 평양에 도착한 이바노프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뒤 29일 평양을 떠났다. ●평양 AP 특

들과도 협의를 원만히 마쳐 어렵지 않게 남북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추진본부 실무회담 대표단은

남북여성통일대회할 남북 각각 200~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9월14~15일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박복삼기자

東亞日報

2002. 7.30(화)

南-北, 北-美외무 회동 가능성

백남순 ARF참석

남북 및 북-미 외무장관이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각각 회동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현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은 회의 참석차 30일 밤 브루나이에 도착할 예정이다. 또 동남아를 순방 중으로 북한 대표단과 비슷한 시간에 브루나이에 입국하는 콜린 퍼월 미 국무장관도 백 외무상과 극적으로 회동

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남북 및 북-미 외무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남북은 각각 동시에 4강과 외무장관 회담을 갖게 된다.

이번 ARF 회의에서는 6·29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 및 남북장관급회담 제의에 대해 논의한 뒤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할 전망이다.

반다르세리베가완(브루나이)=김영식 기자
soear@donga.com

朝鮮日報

2002. 7.30(화)

"내달 2~4일 실무접촉"

정부, 오늘 北에 답신

정부는 30일 북한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8월2~4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관련 부처간 협의할 위해 북한이 8월초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것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금강산으로 가는 배편을 감안, 2일 출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崔秉默기자 bmchoi@chosun.com

주말께 南北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오늘 북에 일정등 통보- 8·15전 본회담 추진

정부는 북측이 지난주 제안한 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가급적 이른 시일에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30일 판문점을 통해 이번주 안에 회담 실무접촉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대북 전 회통지문을 보낼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전통문에는 실무접촉 일정과 남측 대표단의 명단이 포함된다"면서 "다음달 2일부터 사흘간 북측 금강산여관에서 진행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다. 남측 대표단은 장관급 회담 대표인 통일부 이봉조(李鳳朝)정책실장과 서영교(徐永敎)국장을 비롯해 수행원·전략요원 등으로 짜일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서울에서 열릴 장관급 회담 일정과 관련, "실무접촉에서 북측과 논의해야겠지만 8·15 이전에 '8월 10일을 전후한 내외간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회담 대변인을 맡아온 나실장은

"실무접촉에서는 철도 연결·이산가족 상봉 등 합의 사항 이행 문제도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서해교전 사과 문제는 실무접촉보다 본 회담에서 보다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8월 중순 이후로 회담을 늦추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19일부터 일주일간 울지군사 연습이 실시되고, 서울 8·15 통일축전 행사도 잡혀 있어 조기 개최로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중 기자 <yilee@joongang.co.kr>

매일경제

2002. 7.30(화)

오늘 남북실무접촉 답신

정부 장관급회담 수용

북한의 장관급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정부는 이르면 30일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기로 했다.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29일 "(유감표명 수위가 반쪽스런지 않더라도)북측의 회담 제의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역안보포럼(ARF)이 끝나는 대로 실무접촉을 할 수 있도록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30일 실무접촉 일정과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답신에서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 미흡하다는 국내 여론을 전담할 계획이나 이를 장관급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측의 유감표명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실무접촉 일정과 장관급회담 일정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8월중 8·15 전후로 남북 민간단체간 남북 공동행사가 열리는 데다 19일부터는 울지훈련이 일주일 간 계획돼 있어 일정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회담을 8월 마지막주에 열 경우 8·15행사에서의 폭발심함이나 울지훈련이 북측에 회담 인기 등의 발목을 제공할 수 있다.

나영필기자 philip@mk.co.kr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내달2일 갖자"

빠르면 오늘 북에 '수용' 답신

정부는 이르면 30일 대북 전화 봉지문을 보내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 실무접촉을 8월2~3일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북측이 지난 25일 제의해 온 내달초 장관급

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일단 긍정 수용하는 방향에서 북측에 전통문을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의견 조율을 마무리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협의끝 거친 뒤 이르면 30일중 실무접촉 일정과 대

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답신은 서해교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미흡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실무대표 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美·北외무 회동 가능성

WP "파월, 北 유감성명 긍정평가" 내일 ARF서 南北외무 접촉도 관심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과 폴린 파월(Powell) 미국 국무장관이 31일 열리는 제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밤(이하 현지시각) 브루나이에 도착한다. 이에 앞서 최성홍(崔成泓) 외교부 장관은 29일 밤 현지에 도착했다.

▶관련기사 4면

이번 ARF에서는 남북한이 주변 4강 등 각국과 인쇄 양자 외무회담

을 가지며, 북한의 서해 도발 유감 표명 및 7차 장관급회담 재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브루나이에서 백남순 외무상과 극적인 회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파월 장관이 지난 26일 그의 동남아 순방 길 첫 방문국인

인도로 가는 도중 가진 기내 회견에서 북한이 서해 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이같은 회동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성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성명"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는 남북 외무장관회담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으나 한 외교 소식통은 "남북 외교 장관들은 회의장에서 나란히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할 나눌 것이나 별도 회동은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워싱턴=朱廣中특파원

midway@chosun.com

/빈디르 세리 베가완(브루나이)=

權秉福기자 kkb@chosun.com

대한매일

2002. 7.30(화)

한국일보

2002. 7.30(화)

“北, 美·日과 무조건대화 준비”

방북 러외무 “김정일 남북관계 강화의지 확고”

【평양 30일】 방북을 방문 중인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9일 “북한은 아무런 전제 조건없이 미국, 일본과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서울 동남의 한 국 방문을 마치고 28일부터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이바노프 장관이 김경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예방한 뒤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다고 보도했다. 이바노프 장관은 김 위원장이 2000년 남북공동선언을 토대로 남한과 관계 개선을 계속 추구하고 더욱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으로부터 “관대 대표들이 다음 주 개최되는 브루나이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서 미국·일본 대표들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 경제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경제개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폴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27일 북한이 최근 발표한 성명들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ARF에서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 놓아 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금주말 금강산서 갖자”

정부, 이르면 오늘 제의

정부는 북한이 태미관계 개선과 외부의 경제 지원 필요성 때문에 남북 장관급회담을 재의할 것으로 분석하고, 서울에서 열린 7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의제로 서해교전사태 재발방지책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과 남북경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30일 북한에 전화 통지문을 보내 이번 주 후반에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을 갖는 방안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北, 美·日과 대화 준비”

방북 러외무 밝혀...“김정일 南과 관계개선 의지 표명”

북한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미국, 일본과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을 방문중인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9일 밝혔다.

/ 관련기사 3면

이타르타스 통신은 이바노프 장관이 이날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미국, 일본과 건설적인 대화를 가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바노프 장관은 이어 “그런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과 미국, 일본 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의 회담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김위원장으로 부터 북한 대표들이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국, 일본 대표들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위원장이 2000년 남북공동선

언을 토대로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계속 추구하고 나아가 더욱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끝난 파월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27일 북한이 최근 발표한 성명들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ARF에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아 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모스크바·평양 / AFP 이타르타스연합

경향신문

2002. 7.30(화)

ARF “서해교전 평화적 해결”

외무회의 성명 채택 추진...남북회담 가능성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릴 제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서 서해사태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할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남북 양국이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 관련기사 3면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표명과 미국의 대북특사 수용방첩, 잇단 경제개혁 조치 직후 열리는 ARF 외무장관회의에서는 또한 한·미 및 북·일, 북·중 외무회담 등이 예정돼 있어 한반도 정세변화와 관련해 주목된다.

또 이날 열린 아세안외무장관회담(AMM)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을 환영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당국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를 위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계자는 “북한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이 31일 열리는 ARF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명의 대표단과 함께 30일 밤 브루나이에 도착할 것”이라

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외무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 “백외무상이 서해교전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고 북한의 공식요청이 있으면 상사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다르 세리 베가윈(브루나이) / 차세현기자

중앙일보

2002. 7.30(화)

남북 대화 재개 촉구 의장 성명 채택할 듯 아세안·ARF 외무회담서

29~30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와 31일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는 각각 의장 성명을 내고 남북 대화 재개 움직임을 환영하면서 남북 화해협력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브루나이의 외교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관계기사 5면>

이 소식통은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는 30일의 의장 성명에서 남북한에 화해협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ARF 회의도 의장 성명에서 남북 간 화해협력, 지속적인 대화 진전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대를 나타낼 것”이라며 “지난달 말 서해교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나이=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

한국일보

2002. 7.30(화)

南-北, 北-美
외무 회동 가능성

브루나이 ARF서... 北-日 내일 외무회담

북한이 서해교전 유감표명 이후 잇달아 대외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가운데 남북 및 북미 외무장관이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서 각각 회동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29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은 30일 밤 ARF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박영구 외무부 차관(차관)인 도내시, 마철수 아주국장 등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브루나이에 도착한다.

또 동남아를 순방 중인 월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북한 대표단과 비슷한 시간에 브루나이에 입국할 예정이다.

백 외무상은 다음 달 2일까지 브

루나이에 머물며 31일 중국 일본 호주, 8월1일 유럽연합(EU) 브루나이 등 5개국과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 외교 소식통은 "이직까지 북미 외무장관 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으나 백 외무상이 회담할 경우 지인스럽게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28일 파월 장관이 백 외무상과의 회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열린 ASEAN 10개국 외무장관회의는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및 2차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장선명을 채택했다. /빈다르 세리 베기완(브루나이)=이동준기자 dilce@hk.co.kr

南北-北美 외무회담
성사 가능성 불투명

ARF 초미관심사

최근 잇따른 북한의 유화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기간중 남북, 북-미간 외무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29일 ARF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호주 일본 등 5개국과 양자회담 입장을 확고히 하는 등 ARF 기간중 활발한 외교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도 최근 일련의 북한측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과의 외무회담에는 우리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알려졌다. 미국 과일 장관의 입장 또한 30일 오후 늦게 브루나이에 도착해 ARF 외무장관회의와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1일 바로 떠나는 것으로 돼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과의 외무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되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南-美 "무리해 추진하지 않겠다"

北도 별움직임 없어- 태도 주목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 외무회담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한측에서 제안이 온다면 내용을 검토해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측이 외무회담을 제안할 경우 고려하겠지만 우리측이 먼저 제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신중한 입장은 북한의 유감표명에 대한 국내외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다음달 중 남북 장관급회담이 예상되는 만큼 무리해서 남북 외무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한측의 남북, 북-미 외무회담의 회담 성사여부

는 전적으로 북한 태도에 달려 있는 셈이어서 북한의 태도가 주목된다.

/빈다르세리베기완(브루나이)=박희준기자 july1st@sgt.co.kr

ARF란

韓-美 등 23개국 모여 지역 안보정세 논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참가국은 아세안 10개국+아세안 대화상대국 10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인도+북한 몽골 파푸아뉴기니 등 23개국이다. 지역 안보정세가 주의제다. 31일 열린다.

2002. 7.30(화)

“北, 美-日과 조건없이 대화”

防北 러외무 밝혀

북한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미국 일본과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을 방문 중인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9일 밝혔다.

이바노프 장관은 이날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미국 일본과 건설적인 대화를 가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이타르티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바노프 장관은 "그런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과 미국, 일본 사이의 접촉이 이뤄지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28일 회담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 대표단이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마일 대표들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모스크바=법

북한, 韓·美·日과 대화 트나

내일 '아세안 안보포럼' 4國외무장관 참석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제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가 북한의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의 "서"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백 외상은 이날 외무장관회의 이외에도 중국·일본·호주 외무장관과 개별 회담을 갖는다. 이에 따라 최근 6·20 시해 도발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남측을 향해 대화 재개를 제의해온 북한이 ARF를 국제사 회담 향한 대화 제스처를 표명하는 무대로 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 큰 관심은 미·북 외무장관 회담과 남북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지 여부이다. 이 중 미·북 외무장관 회담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긍정적인 언급을 " "는 미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고, 우리 당국자들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백 외무상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시해 사태 이후 미국이 무기 연기시켜 놓은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문제가 재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은 이미 남북대화 재개 의사를 밝힌 이후 미국측에도 특사를 보낼 경우 받아들여졌다는 의사를 밝혀놓은 상태이다.

남북 외무장관 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미·북 간보다는 다소 낮다는 게 당국자들의 예상이다. 정부는 백 외무상이 브루나이에 도착, 외무회담을 제의해올 경우 당연히 이에 응할 계획이나, 우리 측이 먼저 회담을 제의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도발 피해자인 우리

가 먼저 나서서 대화를 요청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ARF 석상에서의 한담 등 접촉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한 당국자는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과 백 외무상이 외무장관회의에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 나란히 앉는 만큼 남북관계

日과는 31일 외무회담 일정잡혀

美·北도 최근 대화분위기 조성

南北외무 나란히 앉아 담화 나눌듯

현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며, 북측의 태도에 따라 상황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1일로 일찌감치 일정이 잡힌 일·북간 외무장관회담에서는 유도호 남치법 문제와 일본인 처 고향방문 재개를 위한 적십자회담, 2000년 10월 이후 중단된 수교 회담 재개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일부 진전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브루나이 현지 외교소식통

ARF 기간 남북한 양자회담 일정

일시	한국	북한
7월30일	유럽연합 러시아	
7월31일	미국	중국 호주 일본
8월1일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 브루나이
미정	북한	한국·미국

들의 분석이다. 단, 북한이 현안 해결을 위해 식량지원 등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경우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북한은 외무성의 마철수 아태국장과 김창국 국제기구국 군축부국장, 이동일·김종요 국제기구국 군축담당관 등을 대표단으로 함께 파견하는 등 진반적으로 이번 회의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라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반다르세리베기완(브루나이)=
權景福기자 kkb@chosun.com

'아세안 안보포럼'은

亞·太지역 안보 논의

域內유일 정부간 협의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아·태지역의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94년 태국에서 창설된 역내 유일의 정부 간 협의체다. 역내 안보정세와 해직(海賊) 등 초국가적 문제를 협의하지만 구속력이 약해 실적(實益)

이 없다는 평가도 있으나 북한이 2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2000년 7차 때부터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회원국은 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 10개 아세안국가와, 한·미·일·중·러·캐나다·호주·뉴질랜드·인도·유럽연합(EU)의장국 등 10개 대화상대국, 파푸아뉴기니·몽골·북한 등 23개국이다. 이번에는 파키스탄과 동티모르가 가입을 추진 중이다. /權景福기자

아태지역
다자협의체
외원국 관계도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리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아세안 + 3 (13개국)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회의 (20개국)**
미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유럽연합의정국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23개국)**
북한
몽골
파푸아뉴기니

서해교전 이후 北외교 가늠

아세안 안보포럼 개막

29일 브루나이에서 시작된 아태지역 다자협의체 외무장관 회의가 한반도 정세 안정에 한몫 하는 장(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때 남북, 북·미 외무장관간 접촉이 이뤄지는 데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ARF 23개 회원국이 각각 남북 회해·협력,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미, 한·일 양국은 양자 회담을 열고 서해교전에 관한 북한의 유감 표명 이후의 대북 대화 문제를 저울질한다.

북한도 일본·호주·유럽연합(EU)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지원 확보와 대외 이미지 개선에 나선다. 그런 만큼 이번 회의는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미국 특사 방북,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의 환경을 다지고 북한이 서해교전에 따른 외교적 고립감을 벗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다.

최대 관심사인 남북, 북·미간 별도의 외무장관 회담 개최는 아직 불투명하다.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과 한·미 양국의 회담으로 분위기는 조성된 듯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29일까지 잡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쪽에서 전격적으로 회담을 제의하지 않는 한 남

남북·북미 별도회담 미지수

韓美日 대북정책 조율 기회

북, 북·미간 공식 회담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남북, 북·미간 외무장관 접촉이 없는 것은 아니다. ARF 전체회의나 리셉션을 이용해 자연스런 접촉이 있을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의미있는' 회담을 할 수도 있다. 풀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미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의 접촉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남북, 북·미 외무장관 접촉은 그

자체가 적잖은 무게를 갖는다. 남북간 고위당국자 접촉은 서해교전 이후 처음이고, 북·미 외무장관간 접촉은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래 최고위급 간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일 3국간 회의는 별도로 없지만 한·미, 한·일, 미·일 회담이 "정대

되어 사실상의 3국 회담은 이뤄지게 된다. 특히 북한의 외교 지평 넓히기는 눈에 띈다. 백남순 외무상은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31일부터 이를 동안 눈고 틈새 없는 다자·양자외교 활동을 벌인다.

현재까지 공식 파악된 양자회담만 5건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북·일 외무장관 회담은 북한이 추정 과선 밖의 일본 양해 첩보 사건 등의 양국간 악재를 털어버리고 국교정상화 교섭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남북대화 등을 촉구하는 아세안과 ARF 외무장관 회의의 의장성명

브루나이 주요 장관급회의 일정

7.29

· 아세안 10개국 외무장관 회의

7.30

·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
·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 아세안 + 한·중·일 외무장관 회의
· 한·유럽연합 외무장관 회담

7.31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23개국 외무장관 회의
· 남북, 북·미 외무장관 접촉
· 한·미 외무장관 회담
· 북한·중국·호주·일본 연석 회담

8.1

·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 회의 (20개국)
· 한국·일본·캐나다 외무장관 회담
· 북·유럽연합 외무장관 회담

은 한·미·일 3국-북한간 대화를 뒷받침해줄 것이 분명하다. 아태지역 국가들의 대화 권고가 전방위 외교노선의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브루나이=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

북에 식량 30만t 제공

정부, 내달2~4일 금강산서 실무접촉 통보

경의선 연결등 조속 이행 주력 장관급회담서 구체적 논의키로

북한이 서해교전 유감 표명 및 남북 장관급회담 재개를 제의하는 전화 통지문을 보낸지 닷새만인 30일 정부가 이를 수용키로 하는 답신을 북측에 보냄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중단됐던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남북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 수석대표인 김남섭 내각 책임참사에게 보내 7차 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8월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관급회담 대표단 5명 가운데 2명을 실무접촉 대표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장관급회담 본회담이 열릴 경우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착공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북측의 태도에 따라 30만t 정도의 식량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부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전문문에서 서해교전 사과 문제에 대해 "귀측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것에 유의한다"면서 "앞으로는 무력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통일부 김홍재 공보관은 "북한의 유감표명은 미흡한 것이지만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제관행에 비춰볼 때

사실상의 사과로 인정된다"면서 "북한 내부에 경제관리 방식을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고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남북대화를 진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을 무대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서방세계를 향해 공격적인 대화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남북 당국간 회담이 재개될 경우 남북관계의 중대한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한중호기자 ichan@munhwa.co.kr

문화일보

2002. 7.30(화)

내일신문

2002. 7.30(화)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8월 2~4일

오늘 북한에 통보... 장관급 회담은 10일 전후 열릴 듯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8월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다.

정부는 지난주 북한의 제안에 대해 3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통지문을 북한측 대표단 김성령(당장) 앞으로 보냈다.

정부는 우리측 수석대표 정세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지난달 20일 서해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사태는 6·15 남북 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되고 그동안 남북한간에 쌓여온 평화와 화해·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귀측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

해 유의함으로써 앞으로는 무력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우리측은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그전에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갖자는 귀측의 제의에 동의한다"며 "남북장관급 실무회담 접촉 날짜를 8월2일부터 4일까지로 할 것을 제의하며, 장관급회담 대표 2명을 포함하여 적절한 실무인원을 금강산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 실무대표단 2명은 통일부 이봉조 정책실장과 서영교 국장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7차 장관급회담의 개최시기는 8월 10일을 전후한 4일 정도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 적극적... '예상외 성과' 기대

남북 장관급회담 전망

정부가 30일 북측의 제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8월 중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7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회담과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우선 아래쪽이다 싶을 정도로 북측이 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보낸 건통문을 통해 "중남년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북남관계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던 북한은 이 대의를 북한 내부를 방송인 중앙TV를 통해 공개, 북한 주민들이 회담 성과에 기대를 갖도록 했다. 공식 문서를 통해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현을 하면서, 몇 달간 계속돼 온 김책리면을 먼저 꺼고 나온 쪽도 북한이다.

더구나 브루나이에서는 백남준 북한 외상이 일본 유엔연감(UN)과의 외무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파월 미국무장관과의 비공식 회담 가능성도 감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북측이 내부 경제

7차 남북 장관급회담 예상의제

5대 핵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확충 금강산 육로연결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군사적 신뢰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군사회담에서 '철도·도로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 남측은 군사 원로 북측은 2001년 겨울 이후 공사중단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 합의 사항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열기로 합의했으나 불이행 현대와 아태평화위 도로 연결합의 임동원 특보 남북시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합의 정상회담 이후 4차례 심층 생사 및 주소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 교류 제도화 목표 2001년 2월 5차 군사실무회담 이후 대화 중단 서해교전 계기로 긴장완화 방안 논의 전망
가타 합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일 위원장 도방 김영숙 주 등 민간교류 대연도 시범단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진강 공동수방(水防)사업 남북러 철도 가스관 연결 북 동해어장 개방 등 북 경제시찰단 서울 파견 민간선박 상호 영해 통과
최근 의제	금강산년 수계문제	

北, 경제개혁위해 대외관계 복원의지 南, DJ임기내 가시적성과위해 전향적

시스템 개혁을 위해 남북관계와 대외 관계를 복원·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임동원 특사 방북 때의 합 의사장을 먼저 이행한 뒤 장관급회담을 갖자던 '4·5 합의'와는 역순으로

회담을 먼저 갖자고 제의한 것도 북측의 조바심을 드러내는 징표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도 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남북 당국의 이같은 입장때문에 예상 이상의 건교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의제는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금강산 육로 연결 ▲개성공단 확충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군사적 신뢰구축 등 이른바 '5대 핵심 과제'와 북한 경제시찰단 서울 방문 등 미이행 합의사항들을 선전에 옮기는 것.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및 에너지 지원도 수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의제와 북측이 이에 응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식량·에너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병렬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식량 30만t을 대북 차관 형태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식량 및 비료의 긴급 시기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호기자 ichan@munhwa.co.kr

내일신문

2002. 7.30(화)

임성준 수석 "이면합의 없었다"

"북 사과 미흡하지만 당국자 회담 추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9일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표명과 관련, "우리의 기대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외교관계 상 유감은 사과와 뜻으로 통용돼 온대 비쳐 사과로 받아들이고 남북 당국간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수석은 북한의 유감표명에 대한 남북간 이면합의설에 대해선 "사전협의나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교전 당시 북한군 13명

사망설과 관련, "그 같은 첩보가 있으나 확인된 것은 아니며 우리 군 당국은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수석은 또 "참몰된 고속정 인양 작업을 남북대화 재개 등과 연계해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군에서 7월말이나 8월초에 인양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만 대풍을 감안하고 한미 대비태세를 유지해 빠른 시일내에 고속정 인양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김민철 기자

남·북 2일 금강산서 실무접촉

'서울 장관급회담' 논의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이 오는 8월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남북장관급 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 이름의 전화통지문을 북측 대표단 김령성 단장 앞으로 보내,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8월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하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전종문에서 '북한의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동의한다'며 '실무대표 접촉 날짜를 8월2일부터 4일까지 할 것을 제의하며, 장관급회담 대표 2명을 포함하여 직할한 실무인원을 금강산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남측의 제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대표 2명과 수행원 3명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서문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를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종문을 통해 '지난 6월

29일 서해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사태는 6·15 남북 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되고, 그동안 남북간에 쌓아온 평화와 화해·협력 관계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귀축(북측)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의한다'며 '앞으로는 무력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혁길 기자 nura@hani.co.kr

南北 2~4일 금강산회담

北, 실무접촉 동의

북북한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는다.

▶A5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북한의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제의의 관련, 30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명의로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실무대표접촉을 갖자고 수정 제의했으며, 북측은 즉각 이에 동의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8월 중순경 서울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경향신문

2일 장관회담 실무접촉

금강산서 개최...철도연결·상봉등 논의 협상진행 따라 식량 30만톤 제공 검토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다음달 2~4일 금강산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중단된 남북 당국자 대화가 3달만에 재개되게 됐다.

통일부 김중재(金弘宰) 대변인은 30일 "오늘 오전 10시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명의로 8월2~4일까지 접촉을 갖자는 전화통지문을 보냈다"면서 "북측은 5시간만인 오후 3시쯤 김령성 북측 단장 명의로 '남측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또 "북측은 대표 2명과 수행원 3명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등 철도·도로 연장과 이산상봉 등 주요 현안들을 비중있게 거론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비록 실무접촉이지만 남북 당국자 접촉에서 논의했던 여러가지 의제들의 구체적 접근을 장

게 할 것"이라며 "이행되다 중단된 부분, 이행중인 부분, 앞으로 이행할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측의 협상태도와 국민정서를 바라며 30만t의 식량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당국자는 "장관급회담 대표단 5명 가운데 2명을 포함해 수행원·전략요원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북측에 보낸 전종문을 통해 "지난 6월29일 서해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사태는 6·15 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되고 그동안 남북간에 쌓아온 평화와 화해·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앞으로 무력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욱기자

woodyl@kyunghyang.com

朝鮮日報

南北, 2~4일 금강산회담

정부, 장관회담 실무접촉 제안... 北, 동의 답변

남북 장관급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8월 2~4일 금강산에서 열린다. 정부는 가급적 8·15 이전에 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5면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30일 남북 장관급회담 북한측 김령성 단장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장관급회담 실무 접촉을 8월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전종문에서 실무접촉 날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전종문에서 "지난 6월 29일 서해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사태는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되고 그동안 남북 간에 쌓아온 평화와 화해·협력 관계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한 뒤 "귀축(북측)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의한다"면서 "앞으로 무력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崔秉默기자 bmchoi@chosun.com

모레 南北실무접촉 합의

사흘간 장관급회담 일정·의제 등 조율

남북한은 8월 2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7차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 김홍재(金弘宰)대변인은 30일 오후 "북측이 다음달 2일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위한 대표 2명과 수석 3명 등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판문점을 통해 알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북한에 정세

현(丁世鉉·통일부 장관)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김영성(內閣 책임 참사)북측 단장 앞으로 보내 실무접촉 일정을 제안했다.

丁수석대표는 전통문에서 "6월 29일 서해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사태는 6·15 남북 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되고 그동안 남북간에 쌓아온 평화와 화해·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했다"며

"앞으로 무력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회담 관계자는 "실무접촉에서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나흘간 열릴 7차 장관급 회담의 구체적 일정은 물론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도 깊이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중 기자

<ylee@joongang.co.kr>

世界日報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2~4일 금강산서 개최

南北합의 쌀30만톤 지원 논의가능성

남북은 8월 2~4일 금강산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5월 이후 단절됐던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고 산적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오전 10시 북측 김령성 단장 앞으로 보냈다"며 "그후 5시간만인 오후 3시쯤 북측이 남측 제의에 대해 동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남측의 이날 오전 제의에 대해 동의하면서 "북측 대표 2명과 수행원 3명을 금강산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는 이날 북측의 서해교전사과 수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 전통문에서 "지난 6월 29일 서해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사태는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되고 그동안 남북간에 쌓아온 평화

와 화해·협력 관계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무력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이에 따라 장관급회담이 열리면 북측이 제의한 남북 철도연결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해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연결 등 5대 핵심 추진과제가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사료용' 전한 방침을 거론한 바 있는 30만~50만t의 대북 쌀지원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담이 실무접촉이라는 성격상 장관급회담 일정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등에 대한 원론적 합의가 도출되고 실제 발지원 문제는 경추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재고할의 '사료용' 방침이 논란을 빚고, 도정 등 쌀처리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실무접촉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2~4일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南北, 금강산 개최 합의... "쌀 30만톤 지원 논의"

북북한은 8월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7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북측 장관급회담 대표단장인 김영성 내각 책임참사 앞으로 보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명의의 전회통지문에서 "실무대표 접촉 날짜를 8월2일부터 4일까지 할 것을 계의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북측은 이날 답신을 보내 "남측의 계의에 동의한다"면서 "장관급 회담 대표 2명과 실무인원 3명을 금강산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무대표접촉 후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7차 장관

급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이날 보낸 대북 전봉문에서 "6월29일 서해 무력충돌사태는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되고 그동안 남북간에 쌓아온 평화와 화해·협력 관계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언급은 정부가 금강산 실무대표접촉과 장관급회담에서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북측의 재발방지대책 수립등을 강도높게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의 서해교전 유감표명은 외교적으로 사실상의 사과를 의미하지만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며 "북한이 경제관리방식을 전환하고 대미, 대일 관계개선을 위해 대화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남북대화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식량지원을 요청했을 경우 "쌀 30만톤의 지원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남북경협추진위를 열어 논의할 수 있다"는 요지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남북 2일 금강산 실무접촉

北 남측 답신 수용... 정부, 식량 30만t 지원 검토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게 됐다.

통일부 김홍재 대변인은 30일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인 김영성 내각 책임참사가 오후 3시30분쯤 전봉문을 통해 "실무접촉을 갖자는 남측 답신에 대해 이날 받아들인다"면서 "실무접촉에 대표 2명과 수행원 3명을 보내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앞서 정부는 오전 10시쯤 북한이 서해교전 유감 표명과 함께 제의한 장관급회담 계의를 수용한다는 답신을 보

내면서 내달 2~4일까지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급 회담은 8월 중순쯤 서울에서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에서는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착공, 이산가족문제 해결, 금강산 육로연결, 군사적 신뢰구축 등 5대 핵심과제 이행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확인될 경우 국민여론을 감안해 30만t의 식량을 신속히 제공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전봉문에서

"서해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사태는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되고 그동안 남북간에 쌓아온 평화와 화해·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앞으로 무력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의 서해교전 관련 유감 표현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남북간 대화를 유지하면서 북측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담을 통해 계속 시정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신창호기자

쌀30만~50만t 北지원 검토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새달 2일 금강산 개최 합의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 대표 접촉이 다음달 2~4일 금강산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30일 북한의 장관급회담 제의를 수용하는 내용의 답신을 북측에 보냈고, 북측은 우리가 제시한 실무접촉

날짜에 즉각 동의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던 남북 당국간 대화가 곧 재개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미뤄왔던 대북 쌀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

(丁世炫) 통일부장관 명의의 전회통지문을 북측 김령성 수석대표 앞으로 보내 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북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실무대표접촉을 다음달 2~4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북측은 오후 3시40분쯤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측의 제의에 동의하며 대표 2명과 수행원 3명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비밀심기자 youngtan@kdaily.com 2면으로▶

쌀30만~50만t 北지원 검토

D-1면에서

정부는 장관급회담의 진전 권위에 따라 북한에 30만~50만t의 쌀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내부방침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김홍재(金弘宰) 대변인은 "지난해말 여야가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하는 데 동의한 바 있지 않느냐."고 반문, 장관급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쌀을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금강산 남북장관급회담 예비접촉에 장관급회담 대표 2명을 포함하여 적절한 실무인원을 보낼 계획이다.

국민일보

핵심의제 '상당한 성과' 기대

南北장관급회담 전망

실무회담없이 직접논의 파격

철도등 5대과제 합의 주목

8월 중순쯤 서울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린 경우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우리 남측은 기대하고 있다. 핵심의제 잡 놓고 육신각신 논쟁만 법이다 끝나고 언던 이전의 회담과 달리 실질적 합의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인 전망이다.

지금까지 장관급회담은 1차회담을 제외하고는 실무진이 구체적 현안을 논의한 뒤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김의신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논의, 이산가족 상봉 등이 완전 중단된 상태에서 의제별 실무회담 없이 양측 지도급 인사가 직접 논의한다는데 의미가 지니고 있다.

이같은 파격은 북측이 먼저 제의했다. 우리가 제의하고 북측이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식의 남북대화 관행과는 정반대다. 그만큼 북한은 자세한 남북 대화할 바라고 있고 우리측은 서해교전 문제할 카드도 완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대북 전문기관도 이번 회담의 성과에 기대할 수는 모습이다. 우리측으로서는 지난 4월 평양을 방문한 임동원 청와대 특보가 여러가지로 제안했고, 북한은 임정부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측은 지금까지 임특보의 방북 때 남북이 합의했던 사항을 먼저 이행한 뒤 장관급회담을 갖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이 장관급회담을 제의한 것은 임특보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 예상의제

의제	한제상황
김의신연결	• 남북 '철도·도로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 • 남북공사완료, 북측공사중단
개성공단 착공	• 현재와 북한 이대평화위원회 합의 •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중단
금강산 육로관광	• 임동원 특사 방북때 동해안 철로·도로 연결 합의 • 실무협의 안건
이산가족 상봉	• 2002. 4. 28 이후 중단
군사기 신뢰구축	• 남북, 장래회 요구 • 1년이상 군사회담 중단 • 남북 재개 요구중
기타 합의 사항 이행	• 김정일위원장 담방, 임진관 광복수방사업 • 동해어장 개방,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방북시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우리 남측은 해석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의제들은 임특보 방북 때 북한 지도부의 합의한 사항, 즉 남북화해할 위한 5대 핵심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군사기 신뢰구축이 그것이다.

여기에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담방, 쌀 지원 문제할 포함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협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측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철도 및 도로연결과 금강산 육로관광의 경우 북한 군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현실적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과제다. 북한이 회담에는 적극 응하지 않을 것인데에서 정부나 남 한 기능성은 임비둔시 있다. 신창호기자

한국경제

내달 2일 금강산서 '장관급' 실무회담

정부, 北에 식량지원 검토

남북은 30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날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측이 제의한 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서울 개최를 수용하고 이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금강산에서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다"며 "북측은 이에 동의한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8·15 이전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화통지문에서 "귀측(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면서 "앞으로는 무력 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금강산 실무대표 접촉에서는 7차 장관급 회담의 개최 일정과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북측의 협상태도에 따라 30만 t의 식량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내달2일 南北 실무접촉

北, 장관급회담 관련 정부 제의 수용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간 금강산 지역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일정 조율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이뤄진다.

북한은 30일 실무대표 접촉을 다음달 2~4일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세현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 대표단 김령성 단장 앞으로 보냈다"면서 "실무대표 접촉 날짜를 8월 2일부터 4일까지 할 것을 제의하며 장관급회담 대표 2인을 포함해 적절한 실무인원을 금강산으로

보낼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측이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의 답신을 같은 날 보내왔다"면서 "합의에 따라 양측은 대표 2명, 수행원 3명으로 실무대표 접촉을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제7차 장관급회담의 개최 일정과 의제가 집중 논의된다.

정부는 실무접촉에 참여할 우리측 회담 대표로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 서훈 청와대 국장, 윤진식 재경부 차관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4일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南北, 금강산개최 합의

북측은 다음 달 2~4일 금강산에서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실무대표 접촉에서 남북간의 협력이 이뤄질 경우 제7차 장관급회담은 8~15 광복절 전후로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오후 북측이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앞서 금강산 실무대표 접촉을 제달 2~4일 개최하자는 남북 제의에 대해 합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북측은 전화문에서 남측의 이날 오전 제의에 대해 동의하면서 "북측 대표 2명과 수행원 3명을 금강산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남측은 이날 오전 정세현 통일부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 대표단 김령성 단장 앞으로 보내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 날짜를 8월 2일부터 4일까지 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장관급회담 대표 2명을 포함, 적절한 실무인원을 금강산으로 보낼 것을 제안했다.

이성훈기자 shlex@sed.co.kr

世界日報

2002. 7.31(수)

남북대화 속도 빨라졌다

유감표명후 접촉 적극적

한동안 알려졌던 남북한이 최근 들어 갑자기 대화와 접촉을 서두르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의 서해사건에 대한 유감표명 및 장관급회담 재의(25일)→남측의 대화제의 수락(30일)→장관급회담 실무접촉(8월2~4일) 및 8·15남북공동행사(8월14~17일) 합의 등 일련의 움직임은 보면 과거와 달리 남북한이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하다. 30일엔 오전 10시에 남측이 보낸 전문문에 대한 답신을 오후 3시에 보내왔다.

물론 더욱 적극적일 것은 과거와 달라진 북한이다. 북한은 유감표명과 회담 재의 이후 연이어 북일-북미회담을 수용하겠다고 공언하고 보

北, 경제개혁 다급... 쌀지원 아쉬워
南, 임기내 '햇볕' 성과 부담안아

루니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 백남준 외산이 참가하는 등 부쩍 대외관계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측의 다급함은 25일 보낸 전문문에 잘 나타난다. 과거 유감을 표명할 때는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방송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대외용' 매체를 통해서 북한이 이번에는 조선중앙TV 등 '대내용' 매체를 이용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전문문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에 공동노력하자는 내용을 제외하면 마치 남측이 보낸 대북전문문

처럼 보인다"며 "그만큼 북한이 다급한 상황에서 회담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금강산회담, 경제시찰단 파견 등의 진척 여부에 따라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자는 '4·5합의문'을 무시한 채 곧바로 장관급회담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개혁조치를 진행중인 북한이 남북 및 대외관계를 복원시켜야 할 '절박함'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남측이 지난 4월 내부방침으로 정해 놓은 쌀 지원 30만~50만 t도 놓치기는 아쉬

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남한 정부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는 형국이다. 북측의 유감표명을 재빨리 '사과'로 수용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실무접촉에서 북측에 제공할 '당근'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꼬리를 빼고 있다. 하지만 서해교전 이후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임기내에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야 할 부담도 안고 있다. 쌀지원 문제 역시 지난해 11월 이미 정치권에서 '30만 t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언제든지 지원할 태세다. 이같은 남북간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서훈담방 등 의외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조정진-김기동기자

정부, 장관급회담 속도낸다

'8·15이전에 개최' 내심 기대

정부가 북한의 대화 제게 재의를 수반, 30일 북한에 전화통지문달 보내 장관급회담 실무 접촉을 제안함으로써,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 당국간 대화가 8월 중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무리도발 재발방지와 관련자 문책을 강력히 촉구하라"는 한나라당과 상당수 여련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화 먼저'를 선택했다. 장관급회담은 남북 교류·협력관계의 모든 기본 틀을 정하는 자리라는 것이 정부측이 내세우는 이유다.

이날 정부가 북측에 보낸 전공문은 시해무리도발을 "그동안 남북간에 쌓여온 평화와 화해·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측의 유감 표명을 "유의한다"는 호의적 시각으로 표현했다. 선봉문은 특히 책임자 문책에 대해 "무력충돌과 같은 실상사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는 우회적인 촉구 표현을 포함시켰다. '햇볕' 유지에 급급해 대화를 서두른다는 한나라당과 여론의 비난을 일단 피하기 위한 방편이다.

야당의 비판여론 의식 재발방지는 우회 촉구

정부는 남북 장관급회담을 가급적 8·15 이전에 연다는 방침이다. 의제는 북한측이 지난 25일 전공문에서 기본적인 남북 협조연결과 이산가족 문제가 별다른 이의 없이 채택될 것 같다.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방북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4월 5일) 내용도 의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제협력추진위 개최, 금강산 관광 합

화,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경제추진위의 경우 대북 쌀 지원과 연계돼 있어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측이 우선 관심을 보일 사항이다. 30만 t 정도의 쌀 지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공감대가 확보돼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쌀 지원을 기대하고 서해무력도발에 대해 시들러 유감 표명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임기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쌀 외에 북한이 다른 문제에도 성의있게 나올 것인지는 미지수다. 한 당국자는 "추석을 전후한 시기의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쌀 지원 정도의 성과에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장관급회담이 일러면 시해무리도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책임자 문책 등도 촉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어서 그 수위에 따라 회담 진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崔秉默기자 bmchoi@chosun.com】

대한매일

2002. 7.31(수)

철도 연결·육로관광·개성공단·이산상봉·군사신뢰

'5대 과제' 이행 급진전 가능성

7차 장관급회담 의제 전망

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그동안 시행을 미뤄왔던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등 '5대 핵심과제'와 함께 북측이 다급하게 여기고 있는 쌀 및 비료, 전력 지원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도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북한이 경제개혁정책을 취하고 있는데다 남북 모두 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만큼 대화의 급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북측은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쌀, 전력 지원의 구체적 약속을 받아 경제위 안정을 꾀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신뢰감있는 파트너로서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측은 8월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군사적 신뢰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5대 핵심과제는 이미 지난해 남북이 합의된 결내 이행 시기, 방법 등에 대한 논의만이 남은 상태다. 정부 당국자

는 "실무대표접촉 결과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추진위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자리에서 쌀 및 비료, 전력 지원 등의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급회담에 "내달 거는 또다른 이유중 하나는 북, !의 대도 변화다. 지난 25일 북측이 유감 표명 및 회담 제안은 아주 이례적인 부분이 많았다. 그동안 '판문점 도끼 만행' 등 대어섯 차례 유감 표명이 있던 했지만 모두 대외용 방송을 통해서였다. 이번처럼 비교적 신속하게 대내용 방송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적은 없었다.

이는 그만큼 북의 식량 시장이 다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최근 북측에서 단행한 경제개혁과 함께 미국, 일본 등과 대외관계를 개선해 '북한식 개혁·개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는 분석이 더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지난 6월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해상 무력충돌의 범법행 제공한 북방안계선(NLL) 문제할 협의할 수 있는 남북군사실무회담 재개도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박복삼기자

youngtan@kdaily.com

7차 남북 장관급회담 예상의제

5대 핵심과제	경의선 연결	• 남북군사회담에서 '철도 도로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 • 북측은 군사 완료 • 북측은 2001년 겨울 이후 군사중단
	개성공단 착공	• 원대외 북한 이대평화와 합의 사항 • 개성공단 실무협회의 결기로 합의했으나 불이행
	금강산 육로관광	• 원대의 이대평화와 도로 연결합의 • 원정일 북로 방백서 통해서 철도 도로 연결 합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 정상회담이후 4차례 상봉 • 생사 및 주소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 교류 제도화 목표
	군사적 신뢰구축	• 2001년 2월 5차 군사실무회담 이후 대화중단 • 시해고점 결기로 긴장완화 방안 논의 전망
기타 합의 사항 이행 및 논의	• 감동일 위원장 담판 • 경원 축구 및 민강교류 • 태권도 시범단 교환	• 임진강 공동수방(水防)사업 • 남·북·북 러 철도 가스관 연결 • 북 동해어장 개방 등 • 북 경제시화단 서울 파견 • 민간선박 상호 영해 통과 • 민간선단 승객 문제

“한화갑대표 내달 訪北”

정형근의원 ‘정상회담 추진설’ 제기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30일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가 8월중에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초청으로 방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정보위가 무산되자 정보위 개최를 요구하면서 “한대표는 민주당 의원 및 재야인사 몇명도 대동해 방북을 한 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강산에 80여 만달러를 들여 북한의 요구대로 해수욕장을 마련하고 20만달러를 들여 번저점프장도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모 대사가 베이징에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중이며 정상회담 장소는 대한민국 내로 압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한 측근은 “최근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신북풍’을 조성하려는 기도를 여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대표는 “기회가 되면 하는 생각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당대표이기 때문에 방북문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이용범(李龍範) 부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정진형(鄭鎭亨)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풍 운운하는 정 의원의 행태에 참으로 안타까운 동정을 보인다”며 “북풍소설로 국민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범광기자

한겨레

“한화갑대표 내달 방북

김위원장 10월 답방 추진”

한나라 정형근의원 주장

한대표 “확정된 것 없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8월중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으로 방북한 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김덕규 정보위원장에 제 정보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자리에서 “한대표는 민주당 의원 및 재야인사 몇명과 함께 방북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강산에 80여 만달러를 들여 북한의 요구대로 해수욕장을 만들고, 20만달러를 들여 번

저 점프장도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권이 신북풍 전략에 대선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베이징에도 대사 한명이 머물면서 10월 중 김정일 답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대표는 “기회가 되면 하는 생각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대표는 이용범 부대변인을 통해 “지난해 북한에서 열린 자문자대화 때 가려 했다”며 “당시엔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나 현재는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방북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익립 기자 choi21@hani.co.kr

美 對北특사 재추진 논의

韓-美-日 ARF서 긴급 고위급회담

한-미-일 3국이 31일 브루나이에서 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긴급 고위급 회동을 갖고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재추진 등 중요 논의에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한미일 대북정책조정회의(TCOG) 당사자인 이태석(李泰植) 차관보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다나카 히로시(田中浩)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브루나이에 와 있으며 31일 오후 7시 TCOG를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31일 발표된 ARF 의장 성명에 ▲북한의 사태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최근 북한의 유감표명 이후 조성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분위기를 환영하고 ▲남북간 화해협력 증진과 재네바기본합의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전협정 준수와 남북간 신뢰구축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이 채택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최성룡(崔成龍) 외교보상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해도발은 정전협정과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어긴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최근 북한의 유감표명과 대화 재개 제의를 주목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과 중국 방자위안(傅家敏) 외교부장, 일본 기와구치 요리코(川口麗子) 외상은 이날 오전 회담을 갖고 매년 한-중-일 3국 위무장관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은 이날 오후 11시25분 브루나이에 도착했다.

【한라산 세리 배가원(브루나이) = 박희준기자 hyl1st@sgt.co.kr

東亞日報

7차 남북장관급회담 예상 의제

경제선 연결	남북국사회담에서 철도·도로 군사보장협력서 채택 필요
개성공단 건설	현대와 북한이대협하여 합의 서명
금강산 남북 연결	일정권 확보 방책서 통해선 철도·도로 연결 합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민회소속지 등 제도화 추진
군사적 신뢰 구축	2001년 2월 5차 군사실무회담 이후 대화 중단
그밖의 의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금강산 열수계 문제·김정일 관공복구 지원·남북경협 4대 합계서 포괄한 필요 촉구·북한 경제지원단 서울 파견·대연도시범단 교류·일련성 공동 수방사업·남·북·미 철도 가스선 연결·경북 축구 등 민간 교류

‘도발’ 대신 ‘충돌’?

정부, 北의식 對北전통문서 표현 수위 낮춰

30일 남북 양측이 장관급회담(7차)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에 합의함으로써 6·29 서해교전 이후 일어났던 남북관계가 일단 대화의 길로 들어섰다.

북측이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장관급회담 재개를 제의(25일)한 이후 북측 해인본과 사과문제를 놓고 솔직한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북측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였다.

사실 정부는 30일 정세권(丁世勳) 통일부장관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성서첩, 또 한편으로는 협상분위기와 고려해 못한 작상에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력충돌사태와 같은 불상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것이 “국민정서”를 의식한 것이라면 무리도대 내선 무력충돌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남북 공동의 책임”이라는 북한의 공식 입장을 고려한 수사라는 것이다.

여하튼 북측은 답장 답신을 보내왔

고 이에 따라 8월초의 서울 장관급회담 개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현재의 난국에서 벗어나 서해교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산상봉-경의선 주로 다들 듯

장관급회담이 임박해 되면 우선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경의선 등 남북철도연결 문제가 비준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산가족상봉은 남한이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현안이고 이미 전례가 있어 다룬 의제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생사확인 등 준비기간과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추석(9월17일)을 전후에 5차 교환방문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의선 연결은 단골 의제, 2000년 9월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보장협약서 합의했으나 북측은 지난해 동결기 이후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성동기기자 eson@dongae.com

“민주 韓대표 내달 訪北 김정일 10월답방 추진”

정형근의원 “新북풍 일으키려 한다” 주장
韓대표 “확정된것 없어...정치목적 아니다”

관련이 없고 현재 방북 심사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하고 “지금은 당 대표가 돼서 갈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洪錫復기자 udo@chosun.com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30일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가 8월 중 북단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초청으로 민주당 의원 몇 명 및 재야단체 인사들과 함께 방북할 예정”이라며 “이는 오는 10월 김정일의 답방을 심사시키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가 민주당의원 불참으로 일리지 못하자, 김덕규(金德圭) 진보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간담회에서 “한 대표가 방북을 위해 1년 전부터 북한에

잘 보이고 김 위원장의 초청을 받고 공작을 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현 정권이 한 대표 방북과 김정일 답방을 위해 30만 1대북 식량지원 등 수백만달러를 지원해 신(新) 북풍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회가 되면 북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지만 화진된 것은 없다”고 답해, 어떤 형태로든 방북이 추진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한 대표는 “방북 추진은 김정일 답방 등 정치적 목적과는 아무런

朝鮮日報

2002. 7.31(수)

국민일보

2002. 7.31(수)

“한화갑대표 내달 방북 김정일 10월답방 추진”

정형근의원 ‘新북풍설’ 논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30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8월 방북설을 주장,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한대표가 8월중 북한 김정일 위원장 초청으로 방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김위원장의 10월 답방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의원은 양남간 이견으로 정보위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기자들과 만나 “정보위가 알려면 이 정권이 신북풍 전략을 갖고 대신에 이용하려는 것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대표는 민주당 의원과 몇몇 재야인사를 대동해 방북한 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강산에 80여만달러

를 들여 북한의 요구대로 해수욕장을 마련하고 20만달러를 들여 번지 점프장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베이징에 있는 모 대사가 10월 중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중이며 정상회담 장소는 대한민국내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대표는 이용범 부대변인을 통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북한에서 열린 자동차 토크때 북한방문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지금은 당 대표로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기회가 되면 갔으면 하는 생각이나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진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의원은 북풍소설로 국민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남도영기자 dynam@kmib.co.kr

“韓대표 내달 방북 김정일答訪 추진說”

정형근의원 주장- 韓씨측 “訪北엔 신중”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30일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가 8월 중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초청으로 방북할 계획이며 정부 차원에서 김 위원장의 10월 답방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5면에 관련기사

국회 정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정 의원은 이날 정보위가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의 정보위원 자각을 둘러싼 정당간 이견으로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10월 남북정상회담은 중국 베이징(北京)에 머물고 있는 모 대사가 추진 중이며 회담 장소는 남한 내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 대사가 주중 대사를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알아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민주당 한 대표의 방북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몇몇 재야인사도 동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금강산에 80여만달러를 들여 북한의 요구대로

해수욕장을 마련하고 20만달러를 들여 번지점프장까지 개설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이 접근이 ‘신(新) 북풍(北風)’을 대신 전략에 이용하려 하고 있는 상황을 오늘 정보위에서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 대표의 한 측근은 “지난해 북한에서 열린 자동차 견주대회 때 방북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당 대표로서 방북 문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신 북풍이나 정상회담 추진과 한 대표를 연결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민주 韓대표 다음달 訪北

한나라 정형근의원 10월 金위원장 答방추진”

韓대표 “확정된것 없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30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8월중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으로 방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인 정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가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된 뒤 “한 대표가 민주당 의원과 재야인사 몇명을 대동해 방북한 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요구대로

로 금강산에 80여만 달러를 들여 해수욕장을 마련하고 20만달러를 들여 번지 점프장을 개설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정 의원은 또 “모 대사가 베이징에 있으면서 10월중 김정일 답방을 추진중인데 정상회담 장소는 대한민국 내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용범 부대변인을 통해 정 의원이 제기한 방북설과 관련, “기회가 되면 갔으면 하는 생각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허범규·김청중기자
hbk1001@sgt.co.kr

170개 시·군·구 가운데 낙후도 순위 40위 이내 지역에 투자·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수요기업이 제시하는 분양조건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산업단지 지정요청제’도 도입기로 했다.

또 임금조정을 생산성에 연동시키는 ‘생산성 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사간 생산성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중립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생산성진단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박종훈기자 kkkk@sgt.co.kr

김정일 내달 러 방문할 듯

극동지역 경제시찰 목적

【모스크바 교도=연합】 김정일(일공) 북한 국방위원장이 8월 중·하순께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러시아 정부 관리들이 30일 밝혔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러시아 고위 관리리는 김위원장이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 연방지구 대통령 전권 대리인의 초청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리는 김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이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을 주로 돌아보기 위한 것이며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경제 시찰 성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위원장은 그러나 모스크바를 방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지난 4월 풀리코프스키 전권 대리인이 평양을 방문

했을 때 올해 중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

김위원장은 지난해 7~8월 특별 열차 편으로 시베리아를 횡단해 러시아를 방문했다.

최근 평양에서 김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던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이 지역적 교류를 증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해 양측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2. 7.31(수)

“김정일 10월담방 위해 韓대표 방북추진”

정형근 ‘도라산 프로젝트’ 주장

정보 출처는 안밝혀- 민주당 “소설 쓰지 말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30일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신(新)북풍(北風)’ 전략을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 회의장에서 있던 비공식 간담회에서다. 그는 “이 전략은 도라산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는 “8월 중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김정일(金正日)의 초청을 받아 육로로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는 10월에 김정일을 부르려는 전초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韓대표의 방북에 이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거의 성사단계며, 회담 장소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韓대표에 대해 “집권당 대표가 1년 전부터 북한에 잘 보여 김정일의 초청을 받으려고 공작해 결국 이번에 북한에

가게 됐다. 의원 수명과 재야 인사들을 대동하고 (김정일에게) ‘절’ 하러 간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鄭의원은 “정부는 이같은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80여만달러를 투입해 금강산에 해수욕장을 만들고, 20만달러가 넘는 번지점프대를 설치해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며 “이미 전력·가스·식량 지원 등을 약속하고 북한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이며 서해 도발에 서둘러 면죄부를 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鄭의원측은 이같은 정보를 “중국의 정보통으로부터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더 이상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鄭의원의 발언이 전해지자 민주당과 韓대표가 말쑥 뛰었다.

韓대표는 “1년 전부터 그런 얘기(방북)가 있었으나, 한번도 구체화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鄭의원이 주장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선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鄭의원은 ‘북풍 소설’로 국민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鄭의원은 “방북 계획이 미리 새어나가면 남북 정상회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다. 광복절(8월 15일) 전에 분명히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정보위 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의 정보위원 선임이 민주당과의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현직 국경위원장 김홍업(金弘業)씨에게 용돈을 준 일 등이 부각될까봐 민주당이 회의를 거부했다”며 회의장에 모여 항의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중앙일보

2002. 7.31(수)

“북한과의 대화 위해 美, 의제·조건 검토중”

백악관 안보회의 대변인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미국 정부는 북한과 진지하고 포괄적인 대화를 한다는 원칙 아래 북·미 대화의 의제와 조건 등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다.

<관계기사 10면>

손 매코백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대변인은 “우리는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

재 북·미 대화의 다음 단계를 위해 의제와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과 포괄적이고 진지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부의 필립 리커 부대변인도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열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RF 외무장관 회담 참석에 앞서 동남아 6개국을 순방 중인 파월 장관은 30일 말레이시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순 외무상과 회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브루나이에 도착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ARF 회담에 참석하는 이고리 아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및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일본 외상 등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백남순 외상과의 접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joonlee@joongang.co.kr>

대한매일

2002. 7.31(수)

ARF, 서해교전 유감 표명 추진

의장성명 통해 남북정전협정 준수 촉구도

【반다르 세리 베가완(브루나이) 김수정 특파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원국들은 31일 의장성명을 통해 서해시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북한간 정전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브루나이의 ARF 외교소식통들이 30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이와 함께 “의장성명에는 최근 조성된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 완화 움직임에 유익하고, 6·15 공동선

언에 입각, 남북간 회해·협력 진전을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 남북한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북·미 관계 중재 노력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ARF에 참석중인 우리 정부 관계자는 30일 이와 관련, “향후 북·미 대화는 북측이 기존의 남북간 협의를 얼마나 이행하느냐 여부에 달렸다.”면서 “최

근 북측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 등 긍정적인 신호들을 살려 나가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6·15 남북정상회담과 4·5 특사합의 사항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토대로 31일 열린 파월 미 국무장관을 수행, 브루나이에 온 제임스 램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다나카 히토시(田中均)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 이태식(李泰植)차관보간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열고 향후 대북 정책 전반을 조율할 계획이다.

© crystal@kdaily.com

2002. 7.31(수)

오늘 ARF의장 성명에 서해교전 우려표명 추진

어제 韓·中·日 외무회담 책임소재는 명시 않기로

정부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의 의장 성명에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참가국들의 우려(Concern)를 표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 성명에 교전의 책임 소재는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미국이 북측의 도발로 사태성격 규정을 했고 북측도 유감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결국면을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최근의 대화·협력 기조는 살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은 그러나

ARF 연설을 통해 서해교전이 북측의 정전협정 및 6·15 공동선언 정신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한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의 서해교전 관련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백 외무상은 이날 밤 브루나이에 도착, 29일 일국한 대표단과 일류했다. ★관련기사 8면

최성홍 장관은 이날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무장관, 탕자위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과 가진 사상 첫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백 외무상과 만나게 되면 건설적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남북 외무장관 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디르 세리 베기완(브루나이)=이동준기자 djlee@hk.co.kr

朝鮮日報

2002. 7.31(수)

韓·中·日 외무회담 정리화

오늘 ARF 외무회의

정부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제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서해 도발이 6·15 공동선언을 비롯해 남북간 기존 합의에 위배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향후 정전협정의 준수할 촉구할 방침이라고 우리 ARF대표단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 관계자는 "다만 북측의 서해사태 유감 표명과 남북 장관급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응분의 주목을 한다(duly note)'는 뜻을 표명하고, 북한의 화해·협력 진전 노력 및 국제사회의와 건설적 대화 등을 촉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성홍(崔成泓) 외교부 장관은 30일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상에게 먼저 회담을 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회담)일정이 잡히면 건설적인 대화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남북 외무장관 회담 성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최 장관은 또 이날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 탕자위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과 첫 3국 외무회담을 갖고, 이 회담의 정리화와 3국간 경제협력 및 문화·인적교류 확대, 마약 등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노력 강화 등에 의견을 모았다. /반디르 세리 베기완(브루나이)=權景福기자 kkb@chosun.com

경향신문

2002. 7.31(수)

한·미 "北·美대화 신중 재개"

남북장관회담 뒤에 결정

한·미 양국은 북한이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기존 남북간 합의 사항 이행상황에 따라 북·미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조율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한·미·일 3국은 31일 브루나이에서 3국 차관보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고위합의를 갖고 북한의 서해사태 유감표명 이후의 대북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ARF 기간중 북·미 외무회담 개최와 관련, "미국은 남북간에 대화 요건을 할 경우 그 가능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은 ARF 회의에서 서해교전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남북공동선언 정신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반디르 세리 베기완(브루나이) /차세현기자 csh@kyunghyang.com

국민일보

2002. 7.31(수)

서해교전 침몰 고속정 軍, 내달5일 인양시작

6·29 서해교전 때 침몰된 해군 고속정 인양작업이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된다.

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일본 정부의 정조(停柁)시간과 한미 양국군의 대비태세 등을 고려할 때 8월 5일에 침몰 고속정 인양작업을 시작해 가을 직항(直航)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북한의 유감사항이

나 남북장관급회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더구나 침몰된 한상국(韓相國) 중사가 고속정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인양작업을 미룰 수 없다"며 "인양작업을 두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양작업 기간에 한미 양국군의 연합위구조치반(CAT)이 기동되고 미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이지스함 등이 주변 상공과 해안에 배치된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한겨레

2002. 7.31(수)

침몰 고속정 내달5일부터 인양

국방부는 서해교전에서 예인 도중 침몰된 고속정의 인양작업과 실종된 한상국 중사에 대한 수색활동을 다음달 5일 착수하기로 했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한미 양국군의 대비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양작업 개시일은 8월

5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고속정 인양도 중요하지만, 실종된 한 중사가 고속정 안에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북한의 유감사항, 남북 장관급회담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성철 기자 skkim@han.co.kr

경향신문

2002. 7.31(수)

침몰 고속정 5일부터 인양 해군 조류흐름등 고려 결정

국방부는 30일 "다음달 5일부터 서해교전 때 예인 도중 침몰된 고속정 인양 및 실종된 한상국 중사에 대한 수색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기상관계와 조류의 흐름이 정지되는 시간, 한미 양국군의 대비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달 5일에 작전을 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황대변인은 "특히 실종된 한중사가 고속정 속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의 유감사항과 남북 장관급회담 등은 이번 작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성진기자

世界日報

2002. 7.31(수)

고속정 인양작업 다음달 5일 착수

서해교전 당시 침몰된 고속정 '함수리 357호'의 인양작업이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된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때 조류가 멈추는 정조(停柁)시간 등 기상여건과 한미 양국군의 군사대비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월 5일에 인양작업을 개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또 "특히 고속정 인양도 중요하지만 실종된 한상국 중사가 고속정에 있을 것으로 보여 인양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병진기자 worldpk@sgt.co.kr

東亞日報

2002. 7.31(수)

고속정 인양 내달5일 착수

6·29 서해교전 때 북한경비정의 기습공격을 받고 침몰한 해군고속정의 인양과 실종된 한상국(韓相國) 중사의 수색작업이 내달 5일부터 시작된다.

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기상 조건과 한미 양국군의 연합대비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5일에 작업을 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실종된 한 중사가 침몰된 고속정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작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北 백남순·美 파월 예정 없던 15분 회동

아세안포럼서 '대화 재개' 원칙 공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브루나이를 방문 중인 폴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이 31일 전격적으로 만나 양국간 협안을 논의했다.

白외무상은 이와 관련, 이날 저녁 "무슨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미 사이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白외무상의 이 발언과 두 장관의 회동이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간 최고위급 접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미국 특사의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미국측은 특사 방북 문제에 대해 이날 열린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특사 방북 문제를 백악관에 보고하고 사

가 결정되면 한국에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RF 개막 직전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15분 동안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파월 장관은 전제 조건없는 대북 대화 정책을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미·북 대화가 이뤄지면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문제,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 문제, 재래식 군비감축 문제 등을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白외무상은 또 이날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일본 외상과 회담을 하고 이날 중에 국교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외무선 국장급 회담을 알기로 협의하는 한편 적십자회담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브루나이=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

美·北 대화재개 합의 日·北 "조기 國交정상화"

연쇄 외무회담서 발표

폴린 파월(Powell) 미국 국무장관과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은 31일 오전 브루나이에서 열린 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장에서 비공식 회동을 갖고, 미·북 대화 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15분간의 회동에서 파월 장관은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對北) 대화정책을 재확인하면서 "미·북 대화가 열리면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문제와 제네바합의 이행, 재래식 군비 감축 등을 협의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우리 ARF대표단 관계자가 밝혔다.

백 외상은 이날 오후 일·북 외무회담이 끝난 뒤 파월 장관과 무슨 논의

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북)·미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의 외교 소식통들은 "미·북 외무 회동에서 미국의 특사파견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부시 대통령에게 백 외상과의 회동결과를 보고하고 특사파견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금명간 북사파견을 위한 미·북 간 실무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백 외상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은 회담을 갖고 국교 정상화를 가능한 한 조기 실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8월 중 외무장관급 협의를 개최하며,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8월 중 열도록 협의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반디르 세리 베기원(브루나이)=樞幕編기자 kkb@chosun.com

북·미 외무 전격 회동

백남순·파월, ARF서 '대화재개' 의견 모아

한겨레

2002. 8. 1(목)

파월 '궤도차 사건 유감'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폴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31일 오전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 회의장에서 15분간 '비공식적으로' 만나 양국간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뒤 북·미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두 장관의 만남은 조지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간에 이뤄진 최고위급 접촉이다. ▶관련기사 2·3면

백 외무상은 회동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북)·미 간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파월 장관과 동행한 라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파월 장관이 아세안지역포럼 회의에 앞서 북한 외무상과 15분간 비공식 회담을 나눴다"며 "앞으로 이어질 (북한과의) 만남

이나 (북한) 방문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내놓은 성명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회담을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이번 만남이 북·미 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제임스 칼리 국무부 차관보를 대북 특사로 파견하는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

파월 장관은 이날 포럼 회의에서 "이전 휴게시간에 백 외무상과 만났다"며 "북한과 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미사일 확산 문제와 북·미 제네바기본합의의, 워싱턴행 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훈 외교교통부 장관은 서해 교전과 관련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철저한 이번 사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북측이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를 재의해온 것에 유의한다"고 덧붙였다. 백 외무상은 "미국은 전쟁위험을 없애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해야 하며, 그럴 경우 우리도 상응하게 호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파월 장관은 최 장관에게 미군 궤도차량에 치어 숨진 여중생 사건에 대해 "유감과 애도를 표명하며, 병사들에게도 북부지침을 잘 지키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디르 세리 베기원(브루나이) //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北·美 대화재개 합의

백남순·파월 전격 회동...이달내 北·日 수교협상도

ARF서 연쇄 외무접촉

북한과 미국이 대화재개에 원치 않
의하고 북한과 일본은 8월에 수교협상
을 재개하기로 했다.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은 3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루나이에서 끝
린 파월 미 국무장관, 가와구치 요리코
(川口順子) 일본 외상과 잇단 양자 회
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5면

백외무상은 이날 회담 직후 인터넷
를 통해 “조(북)·미 회담을 재개기로
파월 장관과 합의했다”며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르면 8월 중 북사과건 시
기를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제의로 15년간 진행된 전격
회담에서 파월 장관은 조지 W 부시 대
통령의 ‘대화할 통한 문제해결 원칙’을
강조한 뒤 “앞으로 북·미 대화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제네바 기본합
의 이행, 재래식 군비감축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
다고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백외무상은 “미국과의 대
화를 환영한다”고 응답했다.

북한과 일본은 양자회담 후 공동발
표문을 통해 수교협상 재개합의 사실
을 전하면서 “국교정상화 논의를 위한

외무성 국장급 협의도 8월중 개최기로
하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회담도 8월중 열 수 있도록 협력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ARF 회의석상에서 북·
미 대화 재개합의를 전하며 “인도적 차
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월 장관은 이어 열린 한·미 외무
회담에서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표명을
강경 평가하면서 대북 북사과건 시
점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것은 없
으며 결정되면 한국측에 통보하겠다”
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다르 세리 베가완(브루나이)

/차세첨기자 ch@kyunghyang.com

“北-美 회담 재개 합의”

백남순 밝혀 양국외무 ARF서 비공식 회담

23개국외무 “남북화해 권고”의장성명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 참석중인 백남순(白南
淳) 북한 외무상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31일 오전 전격적으로
비공식 회동을 갖고 양국간 대화의
지를 확인했다. (관련기사 2면)

미국은 북한의 시해도발로 취소
된 대북특사 파견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파월 장관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조만간 특
사파견 방침과 일정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백
외무상은 이날 오후 북일외무회담
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조선(북
한)과 미국 사이에 회담을 재개하
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월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백
외무상과 15분가량 만나 미국의
대북대화정책을 재강조하고 “앞으
로 북미대화가 이뤄지면 비확산문
제와 91년 제네바기본합의서 이행
문제, 재래식무기 감축문제를 합
의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외무상은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과의 대화를 환영한

다”고 밝혔다. 양측 회동은 ARF 회
의장 로비에서 파월 장관 지시로
미 국무부 관계자가 로비에 놓여선
백 외무상을 안내해 이뤄졌다.

남북외무회담은 백 외무상이 기
자들에게 “요구하면 만날 것”이라
고 말하면서도 우리측에 회담을
제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제의하면
만나겠으나 우리측이 먼저 제의하
지는 않은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ARF 23개 회원국 외무장관들
은 회의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
시킨 서해사태에 우려를 표시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
다.

최성중(崔成中) 장관은 ARF
외무장관회의 기조연설에서 서해
도발과 관련, “앞으로 유사한 사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번 불행한 사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며 재발방지 약속
등을 북한측에 다시 촉구했다.

世界日報

2002. 8. 1(목)

東亞日報

2002. 8. 1(목)

美특사 訪北 다시 추진

파월-백남순 전격 회동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북한 백
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은 31일
브루나이에서 개막된 아세안지역안
보포럼(ARF) 회의장에서 전격 회
동하고 6·29 서해교전으로 무산된
대북특사의 방북을 재개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
다. ▶A5면에 관련기사

정부 당국자는 “ARF 회의 개막직
전 약 15분간 이뤄진 두 사람의 회동
에서 파월 장관은 지난해 6월 북·미
대화의 의제로 제시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 재
래식군비 감축 문제 등을 협의하겠

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백 외무상은 이날 오후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
상과의 회담을 마친 뒤 “조선(북)과
미국 사이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
의했다”며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파월 장관을 수행한 리
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도 파
월 장관과 백 외무상의 비공식 회동
사실을 공식 발표한 뒤 “후속회담이
나 대북특사 방북 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발표했던 성명들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다르세리베가완(브루나이) = 김영식
기자

spbear@donga.com

北·美 특사파견 합의

백남순·파월 ARF서...켈리차관보 방북 시사

北·日 수교교섭 재개키로

【반다르 세리 베기완(브루나이) 김수정특파원】북한과 미국은 31일 6·29 서해교전 사태로 무산된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을 재추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4면

할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은 이날 오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브루나이에서 비공식 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평양 방문 절차 밟기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특사 파견이 성사될 경우 지난 2000년 11월 이후 중단된 북·미 대화가 본격 재개 국면에 들어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파월 장관과 백 외

상이 이날 ARF회담 직전 비공식 회동을 갖고 대북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측에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문제, 제네바 기본합의 상호 이행문제, 재래식 군비감축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을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치 미 국무부 대변인도 회담이 끝난 뒤 "미국은 향후 북·미 회담 및 평양 방문 등과 관련, 북한이 이미 내놓은 성명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켈리 동아태 차관보의 평양 방북이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백남순 외무상은 일본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무상과의 회담이 끝난 뒤 "조선과 미국 사이에 회담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됐다."며 파월 장관과의 회동

에서 매우 진전된 대화가 오갔음을 내비쳤다.

북한은 이날 일본과의 외무회담에서 북·일 국교 정상화 협의를 조속히 재개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내달 중 외무성 국장급 협의회를 열어 국교정상화 등 재반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8월 중 개최기로 했다. 양측은 일본인 행방불명자 조사사업의 조기 결실에도 노력키로 했다.

북·일간 수교협상은 지난 2000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1차 교섭이 열린 이후 중단됐다.

한편 할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날 최성홍(崔成泓) 장관과 가진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 재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유감과 애도의 뜻을 표했다.

●crystal@kdaily.com

국민일보

北-美 회담 재개 합의

부시정부 출범후 첫 양국 외무장관 접촉

北-日, 국교정상화 협의 조속 재개키로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할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31일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세리베기완에서 개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장에서 비공식 집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5면

백외무상은 기자들을 만나 파월 장관과의 회동결과에 대해 "조선과 미국 사이 회담을 재개키로 합의했다"고 밝혀 조만간 미국 특사의 방북 일

정 재조정을 통해 북·미대화가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외무장관간 접촉은 지난해 1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는 물론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 이후 처음이다.

파월 장관은 회의 개막 직전 백외무

상과 가진 15분간의 회동에서 "앞으로 북·미대화가 이뤄지면 핵 비확산문제, 제네바 기본합의 상호 이행, 재래식 군비감축 문제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백외무상은 "미국과의 대화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이같은 회동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또 백외무상과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은 별도회담을 갖고 양국간 국교정상화 협의를 조속히 재개키로 합의했다.

한편 최성홍 외교부 장관은 ARF

회의 연설을 통해 "서해교전 사태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그간 남북간 여러 합의사항에 위배된다"면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불행한 사태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F는 의장성명을 통해 "최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서해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남북간 신뢰구축과 상호 화해의 진정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지난 4월 한국 대통령 특사의 평양방문시 합의된 사항의 완만한 이행 및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반다르세리베기완(브루나이) = 김외구기자 egkim@kmib.co.kr

美특사 방북 성사될 듯 日·北 이달 국장급 접촉

2년만에 대화 무드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이 미국, 일본과 각각 양국간 대화를 재개기로 합의,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서고 있다.

참관 파월 미 국무장관과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의 회동은 이날 오전 ARF 회의장에서 '조우'의 형식을 빌려 이뤄졌다. 회의장에 먼저 입장한 파월 장관은 오전 9시30분쯤 백 외무상의 모습을 보자 에드워드 동(Dong)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내가 여기 라운지에 앉아 있음을 알리라"고 지시했고, 이를 전 달받은 백 외무상이 파월 장관에게 다가가 15분간 커피타임을 가졌다.

현지 외교 소식통들은 "파월 장관이 대북대화의 핵심제들을 백 외무상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양국간 비공식 회담으로 볼 수 있고, 미·북 대화 재개를 일리는 신호탄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해 도발로 참회된 미국측 특사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문제도 곧 기사회할 것인데, 이로써 지난 2000년 10월 말레이시아 칼라퐁푸르에서의 미사일 회담 이후 중단된 대화가



◇나란히 앉은 南北외무 최상층 외교부장관(오른쪽)이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 북한 백남순 외무상과 나란히 앉았다. /반디르 세리 베기완(브루나이)=AP29

미국의 對北 3대의제 파월, 白南淳에 제시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들이다. 파월 장관과 백 외무상은 이날 회동결과를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각각 보고하고, 우선 미국 특사의 방북을 위해 급명간 뉴욕채널을 통해 실무접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양국간 대화가 순환할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3대 의제를 북한이 꺼뜨려워하고 있는 데다, 미국도 북한의 진의에 대해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분위

기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북한이 이날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가급적 조기에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하고, 양국간 모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무장관 회담을 8월 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도, 북측의 대화 결심을 엿보이게 하는 요인이다. 대시급을 수석대표로 한 일·북의 국교정상화 교섭은 지난 2000년 10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의 11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된 뒤 2개월 만에 사실상 재개되는 것이다. /반디르 세리 베기완(브루나이)= 韓京總기자 kkb@chosun.com

“북·일 적십자회담 이달 열도록 협력”

■ 양국 공동보도문 요약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가외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은 31일 오후 브루나이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연 뒤 4개항의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북한은 공동보도문 이외에 북·일 외무장관 회담에 대한 북측 대표단의 의견을 내었다. 다음은 요약:

〈북·일 외무장관 회담에 관한 공동발표문〉(일본어 발표문)

1. 양국은 북·일 관계를 계속 개선하고 지역평화와 안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국교정상화를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하고 과거청산 문제를 비롯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한 노력을 해나가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인도적 현

안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에 해결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2. 양국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관계국간 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견일치를 봤다.

3. 양국은 국교정상화에 관한 여러 문제와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8월 중 개최하기로 했다.

4. 양국은 적십자회담을 8월 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조·일 외무상 회담이 진행되는 데 대하여〉

공화국측은 일본측이 상근한(성실한) 자세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

해 노력할 의향을 표명하는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공화국측은 핵물자소식 조사사업을 성의있게 협력하고 있으며, 결실이 이룩되도록 적극 관심을 돌릴 것이다. 공화국측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긴장완화노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유관측들과의 대화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남측에 북남상급회담을 열기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하는 전화 통지문을 보낸데 대해서도 브루나이에서 조·일 외무상들의 상봉이 있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빨리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려는 공화국의 입장은 시종일관한다.

한겨레

“北·美 대화 안되면

내년 핵위기 우려”

장선섭 KEDO의장

북·미 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한 반도는 내년에 핵 위기를 맞게 될 것 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장선 섭(張善燾)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EDO) 집행이사회 의장의 발언 인 당,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장의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결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핵 위기를 피하려면 북한이 핵 사찰단 의 입국을 허용하도록 관련 국가들이 평 앙을 실효해야 한다”며 “특히 북·미 대 회가 2003년 위기실'을 해소하는 데 비 수직 요소”라고 밝혔다.

장의장은 또 “김수로 핵심 부품들이 반입될 예정인 2005년까지 북한 핵 사 찰이 완료되어야 한다”며 “사찰에 3~4 년 걸리기 때문에 이미 사찰이 시작됐 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최원기 기자

한반도 정세 ‘대화무드’ 급진전

ARF계기 분위기 반전

31일의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 럽(ARF) 외무장관회의의 지역문제 회담은 한반도 전세였고, 그 결과는 긴장완화와 대화였다.

홍진 리얼 미 국무장관과 백남순(白南淳) 북한 회무상이 15분 동안 회동 한 것은 우리 정부도 뒤늦게 안 감과 소였다. 그것도 “북한에 놀라다나지 않겠다”고 적은 미국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후 북·미간 외교위급 만남이 이뤄진 의치는 크다.

남북 외무장관을 따로 만나기는 없 었지만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두 장관 의 기조인상 공통점은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었다. 북측은 우리측 이 제기한 서해교전 재발 방지 등에 응수하지 않았다. 서해교전이 남북관 계의 뒷다리를 잡는 상황은 가시적 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중세 안정 국도론>이런 ARF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안정 국도로 들어갔다. 남북이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에 합의한 가운데 북·미, 북·

백남순,韓美日 외무와 잇단 접촉 특사방북·국교정상화 등 실마리

일 일각이 외무장관 회담에서 각각 미 국 특사 방북에 사실상 합의하고, 이 날 중 외무성 국장급 회담을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경 제는 남북 장관급회담, 미국 특사 방 북, 북·일 국교정상화 문제 합의라는 전면 동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다. 대북 경제정책을 들고나온 부시 행정부 출범 이래 한·미·일 3국과 북한간에 이같은 회담 분위기가 조성 된 적은 없었다.

뿐만 아니다. 남북이 ARF를 전후 에 중국·러시아와 잇따라 교차회담 을 열 것도 경제 인정에 도움을 줄 것 으로 보인다. 북한이 경제개혁 움직임 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ARF에서 전 방위 외교 자세로 나온 것도 고무적이 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 유화정책 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미국 특사 방북 시간문제론>미 일·미외무상 회담은 북·미 공식 대화 의 보증수표라 할 수 있다. 단축이 고

위급 접촉에서 대화에 원칙적으로 합 의한 만큼 재입성 했다 미 국무부 중 아태담당 차관보의 방북은 남북만 남 겨놓게 됐다는 지적들이다. 미외무상 이 “조·미 회담 개체에 합의했다”고 공언한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 다. 특사의 급은 이번엔 외무장관 회 담이 이뤄짐으로써 차관보급에서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북·미간 공식 대화의 급속한 접근에 대안선 우리 정부도 직잡디 늘라는 분위기가.

그렇다고 북·미관계가 곧바로 큰 긴장을 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의제로 삼는 미사일 확산 금 지, 제재바 완화의 이행 개년, 재대 식 무기의 감축은 모두 북한의 양보가 필요한 것들이다. 게다가 북한은 미 국의 대북정책이 전대 정책이라고 의 심하고 있고, 미국측이 제시한 의제 가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미외무상의 ARF 연설에서도 잘 드 러난다.

한반도 주변 대화 현황

- 남북**
 - 7월 24일: 7차 남북장관급회담 1차 회담(서울)
 - 7월 24일: 북·미 외무장관회담(서울)
 - 7월 25일: 북·일 국교정상회담(평양)
 - 7월 25일: 북·미 외무장관회담(평양)
- 남북-중국**
 - 7월 24일: 북·중 외무장관회담(서울)
 - 7월 25일: 북·중 외무장관회담(서울)
- 남북-러시아**
 - 7월 25일: 북·러 외무장관회담(평양)
 - 7월 25일: 북·러 외무장관회담(평양)
- 남북-미국**
 - 7월 24일: 북·미 외무장관회담(서울)
 - 7월 25일: 북·미 외무장관회담(평양)
- 남북-일본**
 - 7월 24일: 북·일 국교정상회담(평양)
 - 7월 25일: 북·일 국교정상회담(평양)
- 기타 북한-외국회담**
 - 7월 24일: 북한-중국, 중국-북한, 북·미, 북·일, 북·러 외무장관회담(서울)
 - 7월 25일: 북한-일본 외무장관회담(평양)

ARF참석 南北美 외무 장관

한국 (최성룡 외무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 24일 서해교전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유발했고 남북국무장관의 남북교섭의 시발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 표명하고 대화를 계속 추진한다 일도를 유지하면서 대북정책을 위해 오랜 시간을 할애하여 해결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미사일과 핵 안전조치협정의 이행 속도도를 강조한다
북한 (백남순 외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 24일 서해교전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유발했고 남북국무장관의 남북교섭의 시발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 표명하고 대화를 계속 추진한다 일도를 유지하면서 대북정책을 위해 오랜 시간을 할애하여 해결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미사일과 핵 안전조치협정의 이행 속도도를 강조한다
미국 (콜린 파월 국무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 24일 서해교전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유발했고 남북국무장관의 남북교섭의 시발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 표명하고 대화를 계속 추진한다 일도를 유지하면서 대북정책을 위해 오랜 시간을 할애하여 해결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미사일과 핵 안전조치협정의 이행 속도도를 강조한다

北·美-北·日 관계복원 새전기

■ 백남순, 美·日외무와 회동 대화지 서로 확인 日, 쌀지원 재개검토 한반도에 화해기류

북한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의 31일 브루나이 행보는 저 막혀 있던 북미·북일 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단번에 대화국면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 백 외무상은 특히 이날 합판 파월 미 국무장관과 전격적으로 회동, 북측이 사인할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미대화물 1년7개월 만에 재개기로 합의했다. 북미·북일 관계의 개선은 7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합의와 8-15 공동행사 등 민간교류, 임금·불가 인상 등 북한 내부의 경제개혁 조치 등 일련의 남북 한인 과 맞물려 한반도 전체에 분위기란 화 무드를 조성할 전망이다.

북미대화 이번 북미 외무장관 회동은 특히 최근 북측의 화해 세세치할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파월 장관이 백 외무상으로부터 직접 대화 의지

를 확인했다는 데 우선적 의미가 있다. 파월 장관은 비확산 및 제네바합의 이행 문제에 덧붙여 북측이 꺼리는 외재인 재래식 군비 감축 문제까지 논의하고자 제의했었다. 백 외무상은 경우로 전략 손실 보충 등으로 맞불을 놓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측의 무응답으로 무기 연기한 대북특사 파견을 조만간 재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북미 양국은 2000년에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전면적인 대화국면에 진입한 적이 있다. 백 외무상은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사상 최초의 북미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고 3개월 후 조명옥(趙明福)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미와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 등 중대 한 관계 개선 조치가 잇따랐다.

양국 외무장관 회담으로 전환된 북미관계는 7일 북한 경수로 한창에 시 일리는 콘크리트 타설식에 재프러미드 미 대북교섭담당 대사가 참석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1994년 제

■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

- 2001년
- 1월20일 : 조지 W 부시 이 대통령 취임
- 3월 7일 : 부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악인의 회의' 언급
- 6월 6일 : 부시, 대북 대화제 성명 발표
- 6월18일 : 백 외무상, 전전선상보상 의제 제시
- 2002년
- 1월30일 : 부시, '악의 축' 발언
- 1월31일 : 백 외무상, '신진포고'로 규정
- 2월22일 : 백 외무상, 대화 거부 입장 표명
- 4월 3일 : 김 위원장, 임동천 특사 방북 수용입장 표명
- 4월30일 : 백외관, '북, 북미대화 시점준비 통보' 발표
- 6월14일 : 프리체드·비밀연 뉴욕 접촉
- 6월25일 : 미, 7월10일 특사 파견계획 전회로 북측에 통보
- 6월29일 : 서해교전
- 7월 2일 : 미, 고위급 특사 방북 합의
- 7월31일 : 백미 외무장관 ARF 회동

네바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의지를 보여 주면서 북측에 대화발 동결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북일협상 당초 예상대로 백 외무상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무장관의 회담으로 수교 협상을 위한 준비협약 일정이 도출되는 등 북일 관계가 이번 ARF를 계기로 급진전했다. 양국 관계는 최근 북한이 오토 남침범 일본 귀국 문제 등에 전방적 태도를 취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과거청산을 통한 배

상으로 인정적으로 경제개혁을 추구하겠다는 북측의 대화 수요가 그만큼 컸던 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일 협상의 진전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국내어은 등에 묶여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을 새운 한미일 대북정책공조의 일관된 측면도 있다. 향후 북일 직접대화될 수 통해 일본인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등 인도적 문제가 탄력을 받고, 반대 급부로 지난해 이후 중단된 대북 식량지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반대로 세리 베기안(브루나이)=이동준기자 dje@hk.co.kr

한겨레

2002. 8. 1(목)

남북 외무장관 '어색한 만남'

■ ARF 개막회의

백 "안녕하십니까" 인사
최 "멀리서 오셨습니다"
옆자리 앉아 회의만 몰두
회담제안 상대에 공백



브루나이에서 31일 열린 아세안지역포럼에 참석 중인 최성룡 외교통상부 장관(왼쪽)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각각 다른 곳을 응시하며 회의에 임하고 있다. 이날 백 외무상은 회의 직전 열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비공식 접촉을 했으나 최 장관과는 별도 만남을 갖지 않았다. 반도세리베기안/AP 연합

31일 개막된 아세안지역포럼(ARF) 회의장에서 최성룡 외교 통상부 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조우'는 어색했다. 북한으로서는, '가피인물 1호'로 지목해 온 최 장관과 별말 없이 옆자리에 앉았다는 사실 자체가 나름의 '유화적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미국방문에서 <워싱턴포스트>에 보도된 최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5월 7~10일로 예정됐던 2차 검합추진위에 일방적으로 결함하고 남쪽 정부에 책임있는 조처를 촉구해 왔다.

이날 최외장 건물엔 백 외무상이 먼저 도착했다. 그러나 정작 회의장엔 최 장관이 먼저 들어섰다. 백 외무상이 회의장 옆 리운지에서 풀린 파월 미 국무장관을 만나는 시간을 지체한 탓이다. 최 장관이 먼저 다가와 악수를

쳤다. 백 외무상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짧게 인사했고, 최 장관은 "멀리서 오셨습니다"라고 받았다. 그리고 최 장관은 조상범 외교정책실장 등 실무관리들을 백 외무상에게 알일이 소개했다. 그러나 최 장관과 백 외무상은 이후 오전 내내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최 장관은 점심식사 뒤 오후 회의할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갈 때, 백 외무상한테 실내 냉방을 거론

하며 "공기가 너무 차네요"라고 말을 건넸다. 백 외무상은 "아, 그렇습니다. 너무 습네요"라고 짧게 답하곤 입을 닫았다. 이들은 앞서 회담을 여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대측(남측)에서 요구를 하면 응할 것"(백 외무상)이거나 "우리가 먼저 제안하지는 않을 것"(최 장관)이라며 공을 상대방에게 넘겼다. 반도세리베기안(브루나이)/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北·美 관계개선 '파란불' 켜졌다

경향신문

2002. 8. 1(목)

• 대화재개 합의에 담긴 뜻

북한과 미국이 브루나이 비공식 회담에서 이룬 시애틀 북·미 대화 재개에 전격 합의하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엮이기만 했던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6개월간 경색국면을 면치 못했던 양국 관계가 전격적인 단 한 차례의 고위급 채널 가동을 계기로 정상화 기차를 찾은 것이다.

과월 파월 미 국무장관의 선(先) 제의로 이뤄진 31일의 북·미 회담은 무엇보다 우리측에 회담 재개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 직전 라온주에 있던 파월 장관이 예드워드 동 국무부 한국과정을 통해 북남순(白南順) 외무상과의 회담을 주역한 것은 북한에 대한 특사 거부 이후 미국이 먼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관측을 뒤엎는 것이다.

파월 先제의로 전격 대화 백남순도 "대화해결" 화답 부시취임후 첫 '개선' 가닥 우선 특사파견 모색할 듯

러나 짧은 순간에도 기쁨의 성과를 내었다. 파월 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월 발한 당시 관망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핵 비확산,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 재래식 군비감축 문제 등을 다루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백외무상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회답했다.

백외무상의 태도 역시 향후 북·미 대화 급진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백외무상은 북·미 외무회담 직후 기자회견의 인터뷰를 통해 "(조(北)·미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대외성대국민 미국보다 앞서는 내용의 "독단선언"을 했다. 그의 발언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미 관계가 완전 정상화되고 미국이 조만간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ARF 회담 주면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대외관

계 개선을 위한 모종의 결단을 내린 것이 다니 나는 추측이 나오는 것은 북·미 회담과 그 성과의 전격성 때문이다.

북·미 대화의 방식으로는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이 채택될 것 같다. 양측이 뉴욕이나 오스카바, 베이징(北京) 등지에서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고는 있지만 공식 채널은 없어 '특사외교' 방식이 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간 대화가 정상화되고 후도 중안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움직임이 잔재 없이 진전된다면 의지가 강해 긍정적 성과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반디르 세리 베가만(브루나이) / 차세현기자

파월 장관의 대화재개 의 배경과 관련, 파월 장관은 동원한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파월 장관은 북한이 최근 내놓은 성경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우처 대변인의 언급은 지난 25일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 및 남북중군합동훈련 폐지, 다음날인 26일 양국 외무상의 대북특사 수용입장 차관인 성명을 가리킨다. 파월 장관의 회담선사외는 미국이 그만큼 북한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대화제스처를 긍정적으로 보고 북한에 대화의지를 직접 최종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분석된다.

회담이 ARF 회의 7차 직전 15분 동안 이뤄져 두 장관의 대화는 서해교전 이전 일련의 대화동작임을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

한국일보

2002. 8. 1(목)

ARF 나란히 앉은 南北외무

썰렁한 조우

"안녕하십니까" (백남순) "알려서 오셨습니까" (파월)

"(예)어쨌든 가리키며, 금기가 없습니다(회담장) 너무 추운데요(백남순)

3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장에서 만난 남북 외무장관을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바로 옆 자리에 앉히기도 별로 실감하지 않은 친위끼리 연설했다. 두 사람은 오전 11시

그러나 첫 포문 주제로 한 인도 관계가 제외되지 않고 회담장은 최대 현안인 서해교전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포리를 내렸다. 백외무상은 "미국과 적대정책과 반대"로 한결 다른 한반도 정국이 이뤄질 것"이라며 북측 당국의 정상적인 주장을 피력했다.

이해 발언권을 넘겨받은 회담장은 "서해교전은 6·15 남북 공동선언 정신 위반"으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유발했다"면서

첫 대면 어색한 인사만

白, 서해교전 언급안해

崔 "北 유감표명에 주목"

나란히 앉아 되돌아보기도 첫 대면에서 회담장이 먼저 악수를 통한 첫 외치는 글과 대칭한 모습을 보여 주기 않았다.

사실 회담장은 북과 남이 잘 만나지만 해도 백 외무상의 기파 인종 1호였다. 북측은 이후 언론 보도를 근거로 회담장의 수를 평가해 "미국과 대북 대화 중추가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하고 조장시켜 양감을 요구한다. 북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중의 외교안보총합 회의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양관(白南順) 회담장(白南順) / AP연합

연설을 유감했다"면서 개발 방지를 위해 이념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북측이 국제무에서 자코를 문화를 만들지"고 우리측에게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백 외무장은 오수 회담장에 참석했다.

반디르 세리 베가만, 브루나이. *이동준기자



북·미 현안 입장 비교

북	현안	미
▶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대화 재개	▶ 대남외교정책: 비핵선	▶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 수월
▶ 이념적 차이를 일시적 이해관계로 인정하며 대화 재개를 위한 대화 재개	▶ 대남외교정책: 비핵선	▶ OAS와 개발, 정치, 무역수출, 에너지 등
▶ 주한미군 철수	▶ 재래식 군비 감축	▶ 유엔안보리 북한군 유류금 이동
▶ 경수로 발전소 건설지원에 따른 우선 보장	▶ 재래식 기본합의 이행	▶ 조기 특사 파견
▶ 인도-네팔 국경과 북방안보 문제	▶ 핵무기 보유 금지	▶ 대외관료 교류협력 추가 가동
		▶ 핵군축 수월

南北외무 대화

회담장 외교장관(오른쪽)이 31일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무장관 회의에서 나란히 앉은 북의 백남순 외무상과 대외하고 있다. 반디르 세리 베가만(브루나이) / AP연합

北-美 경색탈피 '대화 물꼬'

백남순-파월 전격회담 의미

31일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과 폴린 파월 미국 무장관이 전격 회동함에 따라 한반도정세가 본격적인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북한의 서해도발 유감표명으로 남북장관급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양측 회동용 계기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북미관계에 대화 물꼬가 트이게 됐다. 양측간 만남은 비공식 회동에 불과하지만 양국 고위급 인사가 직접 대화의지를 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0년 10월 매들린 슌브라이트 전 미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20개월간 이뤄진 북미간 접촉 가운데 최고급 접촉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는다.

이날 파월 장관은 백 외무상에게 부시 대통령 이 지난해 6월 밝힌 대북대화 의지를 재강조했고 백 외무상은 "미국과의 대화를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북한의 유감표명과 미국의 공격적 평가, 북한의 미국특사 수용의사 발표 등 양국이 번복만 올리던 대시 직접 대화하는 상향으로 급진전된 셈이다.

북미 고위급 인사가 직접 대화의지를 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서해도발로 취소된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도 조만간 재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고위급인사 대화의지 확인 對北특사파견등 재추진 가능성

다.

파월 장관은 15분간의 회동에서 북미대화에서 다할 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 중단 등 비확산문제와 핵개발 동결 및 경수로제공 내용을 담은 9년 10월 북미 제네바기본합의서 이행문제, 재래식무기 감축문제가 그것이다.

이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미대화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다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유도호남지법 일본 공민당의 표명으로 테러지원국 해제의 걸림돌이 이미 제거돼 앞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칭 해제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함께 북한과 일본은 이날 오후 무회담을 통해 양국간 관계개선에 가속도를 붙일 계기를 마련했다. 양국이 가능한 조속히 국교정상화를 이뤄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0년 9월 중단된 북일수교회담이 다음달중 재개되게 됐다.

양국은 외무 국장급회담과 칙십자회담을 재개해 일본인 납치문제와 과거사 청산문제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백 외무상은 북미 회동과 북일회담에 대해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음을 내비쳤다.

/반디르 세리 베기안(브루나이)=박희준기자
july1st@sgt.co.kr

ARF 남북기조연설 내용

31일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서해도발 유감표명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서해도발 자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서해도발과 관련된 유감표명 외에 더 이상 내용을 게 없음을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서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9·11테러사건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개발 등을 거론하고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 "서해도발 재발방지장치 촉구" 北, 도발언급 않고 美테러 비판

는 "근거없는 반대러전설"이라는 표현을 사용, 9·11테러 이후 더욱 강해진 미국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백 외무상은 또 "역사적 6·15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이후 군사회담과 장관 회담 등이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며 외세간섭 없이 남북이 관계를 개선해서 불안을 이겨나가지고 재언했다. 리남순(李南淳) 외교장관은 "서해교전 시대는 국제사회에 큰 수려를 유발시킨 행위로 6·15 공동선언 정신 등에 배치된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불행한 사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최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서해도발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재개를 제외한 데 대해 주목한다"고 말했다. /반디르 세리 베기안(브루나이)=박희준기자

世界日報

2002. 8. 1(목)

경향신문

2002. 8. 1(목)

美 프리처드대사 방북 확실

7일 금호경수로 콘크리트 타설식 참석할듯

7일로 예정된 북한의 합남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식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미국측 집행이사인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대사 참석이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프리처드 대사는 오는 5일 서울 삼정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리는 KEDO집행이사회에 참석할 것

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31일 "북한 현지의 콘크리트 타설식을 앞두고 집행이사들이 서울을 방문해 회의를 열 예정"이라면서 "프리처드 대사의 서울 방문이 기대되는 만큼 금호지구에서 이뤄지는 경수로 콘크리트 타설식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용걸기자 hanyon@sgt.co.kr

부산 아시안게임 北 참가할듯

장웅 위원 체육회담 제의

북한이 오는 9월29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4회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북의 아시안게임 참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체육회담을 갖자고 김문형(金文龍) IOC 위원에게 제의해왔다.

김위원은 31일 "장위원이 지난 29일 IOC 관여기구들 통해 오는 20일쯤 모스크바에서 남북 체육관련 현안 협의를 위한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김석·이용욱기자

김정일 이달하순 訪러 교도통신 "극동지역 방문"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8월 하순에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한다고 교도(共同)통신이 31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러시아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김위원장이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대령령 전권대리의 초청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문일정은 현재 조정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北, 체육회담 전격 제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논의하려는 듯

2002 부산아시안게임 개막(9월 20일)을 두달 앞두고 북한이 남북 체육회담을 전격 제의해왔다.

김운용(金雲龍)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은 31일 "지난달 29일 북한의 장웅 IOC위원이 남북 체육관련 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따르면 장웅 위원은 20일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본부가 있는 모나코에서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GAISF 회장인 김위원은 이 기간에 모나코에서 GAISF 총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동안 현안이 돼왔던 부산아시안게임의 북한선수단 참가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왕희수 기자 <goman@joongang.co.kr>

北, 김운용위원에 남북체육회담 제의

북한의 장웅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이 29일 김운용 IOC위원에게 남북 체육관련 현안 협의를 위한 회담을 제의해 북한의 부산아시안경기대회 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위원은 31일 "조선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장웅 IOC위원이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회장이며 IOC위원인 김 위원에게 오는 20일쯤 GAISF 본부가 있는 모나코에서 만날 것을 전격 제의했다"고 밝혔다.

리홍철기자

한반도 정세 '대화 금물살'

ARF 북-미, 북-일 잇따라 활동

백남순- 파월 15분간 비공식 전격대화 특사訪北 협의 관측... 관계개선 청신호

관련 기관 미 국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31일 전격 회담함으로써 북·미 대화가 급류처럼 되고 있다.

두 강령은 오전 9시30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 회의장에서 조우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있던 파월 장관이 백외무상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에드워드 총 국무부 한국과장을 통해 연락을 취함으로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 15분간 커피를 마시며 완담했다.

파월 장관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대화 방침을 재강조하고 앞으로 북·미 양국자가 만나면 대강상항우기 비화산, 제네바 핵합의 이행, 재래식무기 감축 문제 등을 논의하는 뜻을 진술했다. 이에 백외무상도 미국과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은 비록 비공식 단담이긴 하지만 대화 의지를 서로 확인한다. 북·미 대화 의제까지 거론돼 공식회담에 준하는 무게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백외무상도 이번 회담에 대해 "조·미대화 재개에 합의

했다"고 공개해 무게를 실었으며 회담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

이 행정부가 이번 회담의 수준과 의미 없는 정도로 보느냐가 관건이었지만 북측이 잇따라 대남 및 대미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온 점에 비추면 때 미국측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지난 25일 서해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남북 장관급회담 재개를 제의한데 이어 26일 외무성 대변인이 "앞으로 조건이 마련돼 미국측이 다시 특사를 보내줬다면 우리는 일련된 입장에서 대담 것"이라며 특사 수락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특사로 누구를 보내는가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일"이라며 특사의 급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적극 성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도 다급한 논평을 내고 "북한의 성명은 서해교전에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최근의 입장과 백리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었다.

이번 분위기를 타고 북한과 미국이 조금만 더 적극성을 보일 경우 특사 발령을 비롯한 고위급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월 장관은 미국으로 넘어가면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서해교전 사태 이후인 지난 2일 취소됐던 특사 발령 입장을 재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부의 내부조율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화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로 방향을 잡을 경우 북·미간 접촉 창구인 뉴욕 채널을 통해 구체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측은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맞춰 특사발령 날짜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북한이 일선과 양국간 국교정상화 협의를 조속히 재개키로 합의함에 따라 서해교전 사태 이후 감색했던 한반도 주변 정세는 빠르게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한드르세리베가만(브루나이) - 김희구기자 egkim@kmb.co.kr

北·美, 케리특사 방북 합의

백남순외무상 밝혀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1일 대국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31일) 북-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대북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한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면서 "특사 파견 날짜는 미국측이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서, 백 외무상은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조-미 사이에 회담을 재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외무상의 발언과 두 장관의 회동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간 최고위급 접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특사의 방북이 이르면 8월 중 상

시될 것으로 보인다.

백 외무상은 또 이날 기외구치 요리코(天口領子) 일본 외상과 회담을 하고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위한 외무성 국장급회의와 북-일 적십자회담을 8월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브루나이를 방문중인 최영홍 외교통상부장은 1일 이번 회의기간 중 남북외무장관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과 관련, "당초 서울에서(출발할 때)도 만날 계획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숙소인 영과이어호텔에서 열린 수협기자들과의 조인간담회에서 "북한의 서해사태에 대한 유감표명과 대화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가 대단히 격앙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정해서 북측과 외무회담을

찾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또 "조인간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리고 회담을 통해 현안이 다뤄지는데 특별히 억지로 (외무회담을) 선(先)재의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모든 우방국이 북측과 단교하며 (우방국들과)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하고 "우방은 북측에 기항에 미련되어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디르 세리 베기완(브루나이) - 서외통기자 phil@munhwa.co.kr

한반도문제 대화로 해결 共感

ARF 무엇 남겼나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6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서해 교전 사태 이후 조성됐던 한반도 긴장기류를 완화시키고 남북한은 물론 미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한반도문제 해법에 다시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북한은 2년만에 미국과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북-미 대화 개개 원칙 합의했으며 각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성과를 내는 등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번 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 서해사태 및 미국의 특사방북 무산이후 급속히 냉각됐던 북-미 관계

대화국면으로 반전시간대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7일 서해사태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 및 남북 회담재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조인간 회담의 진행여부를 지켜 보며 향후 행보를 관찰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끝난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백남순외무상과의 전격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 개개 원칙합의를 이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측에 먼저 접근, 대화의 의는 있지만 지존심 때문에 망설여온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북한은 또 이번 ARF회의에서 활발한 양자회담을 벌이는 한편 다자 회의에서도 유연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지체됐던 대외관계 개선행보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또 내부적으로 추진중인 경제부문 개혁작업에 우호적인 대외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거론 북한 의 외교성과가 국제사회의 대북 신뢰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의선 연결 등 남북간 합의사항의 이행에 실질성을 보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ARF회원국들이 31일 제6차 외장정명에서 '6·15남북공동선언과 지난 4월 한국대통령 특사의 경안방문시 합의했던 후속 조치 사항들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향후 북한이 예측가능한 행보를 보여줄 것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한디르 세리 베기완(브루나이) - 서외통기자 phil@munhwa.co.kr

北·美 회동에 소외당한 한국외교

ARF외무회의의 안위

지난 31일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끝난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 간의 전격회담이 여러가지 파장을 낳고 있다.

- ...전날까지 최소한 남북외무회담이 선행돼야 북-미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판단한 우리 외교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당국자들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지만 씩씩해하는 표정이었다. 특히 '북한의 선(先)재의 합의는 북-미 회담이 없을 것'으로 강압했던 정부대표단은 회담이 미국측의 의도적 접근에 의한 '준 회담'으로 드러나자 표정이 밝지 못했다.
- ...북-미 외무장관 회담과 관련, 미국측은 지난 30일 오후 늦게 만남

北외무상 "만족한다" 대화진전 시사

崔외교, 北측 실무진과 일일이 악수

의 형식과 대화 수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RF통신이 미국의 고위관리 발언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파월 장관과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밤 백외무상을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고 북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 사인을 보냈다.

백외무상이 31일 탐자위안 중국 외교부장과의 조인회담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파월장관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이 먼저 재의해오면 만나겠다"고 여유있게 말한 것도 몇분후의 미국과의 회담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파월장관은 이날 오전 9시쯤 ARF회의장 밖 라운지에서 켈리 차관보를 북측 대표단에 보내 "커미한

진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의지를 전달했고 파월장관과 백외무상은 곧바로 소파로 이동 15분간 커피를 마시며 양측현안문제를 협의했다.

- ...최상층 외교부장관과 백외무상 간의 접촉은 ARF회의장에서 이뤄졌지만 밀도있는 대화는 오가지 못해 오직만 언급된 한반도 회담기류에 부합하는 인상을 주지 못했다. 오간 회의중 거의 브레이크 시간에 회담은 "회의장 예언이 너무 정확해 오지 않았다"고 말을 건넸고 백외무상은 "너무 추운데요"라며 맞장구쳤다. 그러나 이후 두 장관 사이에 남북대화 등 정치적인 문제가 관한 논의는 한마디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北에 군사회담 조기개최 제안키로

오늘 금강산 실무접촉

정부는 2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장관급 실무접촉에서 군 직통전화 개설 등을 협의할 군사 남북 회담의 조기 개최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고위 관계자는 1일 "침몰해군 고속정의 인양작업 등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 직통전화 등 필요한 마찰을 방지할 군사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며 "군사 남북 회담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고속정 인양작업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영해이므로 북측 요구처럼 인양작업 계획을 미리 알려주거나 하는 일은 실무접촉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접촉 남북 대표단은 2일 오후 강원도 속초항에서 현대 관광선 실성도탈 타고 금강산에 도착할 예정이며 3일부터 이튿날 7차 장관급 회담 일정과 의제 등 본격적인 협의할 계획이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경향신문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열려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다. / 관련기사 5면

통일부 김홍재(金弘宰) 대변인은 1일 "오늘 오전 관공정에서 연락관 접촉을 통해 실무대표 명단을 교환하고 회담장 겸 숙소를 금강산어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촉에는 남측의 통일부 이봉조(李鳳朝) 실장과 서영교(徐永敎) 국장,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최성익 부장과 김만길 참사가 각각 참석한다.

남북 대표단은 이번 접촉에서 7차 장관급회담 서울 개최 시기와 의제를

확정하는 한편 경의선·동해선 등 철도·도로 연결과 이산상봉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 대표단은 지원인력 12명과 기자단 6명일 포함된 모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2일 오후 속초에서 실봉호를 타고 금강산으로 출발, 3일 북측과 회담을 가진 뒤 4일 오후 늦게 귀환할 계획이다. 이용목기자 woodye@kyunghyang.com

한겨레

오늘 장관급회담 실무 접촉

남북은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어관에서 제7차 장관급회담 서울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한다.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오전 관공정에서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 실무대표 명단을 교환하고 회담장과 숙소를 금강산어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hura@hanjire.com

오늘 南北실무접촉

금강산 지역서 사흘간 장관급회담 날짜등 논의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2일부터 4일까지 북한 금강산 지역의 금강산어관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임동원(林東源) 북사 방북 이후 4개월 만에 재개되는 당국간 회담이어서 올 하반기 남북 관계 복원 여부를 판수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은 장관급회담의 날짜

와 의제 등을 주로 논의하는데, 특히 추석이 즈음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남한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에 대한 북측의 입장도 일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무접촉에는 남측의 통일부 이봉조(李鳳朝) 통일정책실장과 서영교(徐永敎) 국장,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최성익 부장과 김만길 참사가 각각 참여한다. 우리 측 실무접촉 대표단은 실무진과 취재기자 포함, 20명으로 구성됐다.

/崔秉默기자 bmcchoi@chosun.com

대한매일

켈리 美특사 北방문 백남순 "과월과 합의"

[워싱턴=이호준 특파원, 브루나이=오영환 기자]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브루나이를 방문 중인 백남순(白南淳)북한 외무상은 1일 북·미 대화와 관련, "(골린 과일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환영 방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무상은 유럽연합(EU)과의 양자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켈리 차관보의 방북 시기와 관련해서 "미국이 경제 봉쇄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대표단은 이와 관련, 언론 발표문에서 "켈리 차관보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켈리 차관보의 방북은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과 북·미 외무선 국장급 회담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말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필립 라커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날 31일(미국시간) 국무부에서 "과월 장관이 돌아오면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커 부대변인은 백남순 외무상이 방한 켈리 차관보의 방북 합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으나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무상은 EU와의 회담에서 하비에르 솔라나 대외관계장관위원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 전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촉구한 데 대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EU 측이 전했다.

북한은 이에 앞서 31일 ARF 회의에 제출한 연례 안보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전에는 감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joonlee@joongang.co.kr>

북-미, 켈리특사 방북 합의

백남순 외무상 "김위원장 서울 답방"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1일 유럽연합과 안지협의 틀을 전후해 내외신 기자회견에 "할린 파워 미국 국무장관과의 만남에서 제임스 켈리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했으며, 시기는 미국이 결정해 발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중 남북 장관급 회담과 북-일 국장급 회담,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에 따른 북-미 고위급 회담 등 한-미-일의 대북 대화가 동시-병행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3면

브루나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석하고 있는 한-미-일 외무장관들은 31일 한-미-일 한-일-미-일 안지 회담을 열었다. 기외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은 1일 최상훈 외교교통부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북-일 회담 결과물 설명하며 "북쪽이 국교정상화에 상당히 적극적인 인상을 받았다"고 소개했

다. 또 31일 오후엔 외무장관회담과 별도로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한-미-일 비공식 '트릭'(대북정책조정 감독그룹) 회의가 열려 북한과의 대화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대화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필리핀 리거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일 장인이 돌아오는 대로 조지 W 부시 대통령 및 국가안보회의(NSC) 팀과의 논의를 통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음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남순 외무상은 이날 히베르 솔라나 유럽연합 외교안보담당 대표와 만나 "북조선은 북남 대화의지를 갖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리스티나 갈라흐 유럽연합 대변인이 밝혔다. 반디르세리베가완(브루나이)/이재훈 기자 nomak@hani.com

한겨레

2002. 8. 2(금)

朝鮮日報

2002. 8. 2(금)

대한매일

2002. 8. 2(금)

美 켈리특사 이달말 방북

재래무기 감축도 논의

【반디르 세리 베가완(브루나이) 김수정·위싱턴 백은일특파원】미국은 지난 31일 할린 파워 국무장관과 북한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이 대북 특사 파견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에 착수, 이달 말쯤 제임스 켈리 특사를 북한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미국의 외교소식통은 1일 "미 정부는 한-일 정부와 협의를 거치고, 2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을 지켜본 뒤 특사 파견 일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와 관련, 우리 정부 관계자는 "특사와 의제도 정해져 있어 2-3주 후엔 특사 파견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앞서 필리핀 리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31일 "과일 장관이 워싱턴에 돌아오는 대로 조지 W 부시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대북 후속조치 등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북-미 회담에 대한 언론 보도문'을 배포, "북-미간 특수파견에 합의했다."면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부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후 북-미 협상 의제와 관련, 백남순 외무상은 재래식 무기감축 문제에 대해 "미국과 앉아 봐야 한다. 앉아서 토론해야 한다."고 말해 재래식 무기 협상도 의제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백남순 외무상은 또 요도호 납치범과 관련, "요도호 선원들이 자기 조국으로 가겠다고 지원했다."고 말하고 "변인일 결심에 따른 문제"라고 밝혔다. 북한의 요도호 선원 보충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 국가로 분류해 높은 금요건으로 북한이 요도호 선원을 출국시킬 경우 대러지정국 해제 및 일본과의 수교협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crystal@kcdaily.com

“美특사 訪北 환영”

백남순 北외무... 이르면 이달말 성사될듯

제9차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은 1일 할린 파워(Powell) 미 국무장관과의 전날 회동 결과에 대한 언론발표문을 내고, "제임스 켈리(Kelly) 미 국무부 차관보가 조지 W 부시(Bush)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을 환영하며, 특사 방북 시기는 (미국과) 추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현지의 한 외교 소식통은 "켈리 차관보의 방북 시기는 과일 장관이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일본과의 외무회담(8.1) 및 금강산 남북 실무접촉(8.2-4) 결과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확정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8월 말쯤 특사 방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그러나 이날 ARF에 제출한 연례안보보고서에서 과일 장관이 제시한 대북대화의 '3대 의제'(대량살상무기 비확산-재네타말의 이행-재래식 군비 감축) 중 재래식 군비 분쇄에 대해 "(이 분쇄는) 자위위 위한 수단이며 주변국군 철수와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전에는 절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실질적 관계전전으로 나가기까지는 난제(難題)가 많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백 외무상은 이와 관련, "미국과

마주앉아 토론해 봐야 한다"고 일단 한결을 풀려냈다.

/반디르 세리 베가완(브루나이)= 韓景福기자 kb@chosun.com

“김정일 서울 답방 적절한때 이뤄질것”

白외무 밝혀

북한은 여전히 남북대화 의지를 갖고 있으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이 1일 밝혔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브루나이로 방문 중인 백 외무상은 이날 히베르 솔라나 유럽연합(EU) 외교안보담당 대표가 북한 측에 대해 김 위원장이 오는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서울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크리스티나 갈라 E.U.대변인은 전했다.

갈라 대변인은 약 1시간 동안 열린 이날 양측 회담에서 솔라나 대표는 백 외무상에게 "EU는 한국 대선 이전에 김 위원장의 남한 방문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디르 세리 베가완=韓景

北 “대화재개 합의”… 美 “결과 말하긴 일러” 美·北 대표단 ‘신경전’

아세안 안보포럼 이모저모

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브루나이에 체류 중인 미·일·북한 대표단은 지난달 31일 미·북·미·일 외무장관 접촉 결과를 놓고 다소 엇갈린 해석을 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은 31일(이하 현지 시각) 열린 파월 미국무장관과의 회동 결과를 선명하면서 “조(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지 미국무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본국 및 한·일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백 외무상처럼 결과를 말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이에 백 외무상은 1일 숙소인 엔파이어호텔에서 언론 발표문을 배포, “양국은 미·북대화를 재개기로 합의했고 부시 대통령의 특사인 켈리 차관보의 방북을 환영하며 방북시기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해기를 밝혔다.

현지 소식통은 백 외무상이 파월 장관과의 회동에서 “미국이 북한을 친구로서 관대하게 대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아마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김정일 비하(卑下) 발언에 매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日·北 국장급 협의 발표도 마찰

○…미·북은 지난달 31일 외무장관회담 직후 ‘국교 정상화를 위한 외무성 국장급 협의와 지식자회담의 8월 중 개최’ 합의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외무성 국장급협의를 8월 25일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고 추가 발표했다. 그러자 북측 관계자는 1일 “두 회담의 구체적 시기·장소에 대해서는 합의된 게 없다”며 다소 불쾌하게 반응했다. 현지 소식통은 “일본이 북한측이 자의적으로 합의를 변경할 가능성을 우려, 선수(先手)를 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은 1일 수행기자단과

의 조찬 간담회에서 “서해사태 이후 우리가 자청해서(북에) 먼저 만나자고 제의하는 방안은 이구동성으로 반대가 있었다”고 말해, 남북외무장관 회동 불발이 서해사태로 악화된 국민여론을 고려한 조치였음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백 외무상과 ARF 회의장에서 나란히 앉아 편안하게 지냈다”면서 “회의장 안의 실내온도가 낮기는 했지만 건강이 나쁜지 백 외무상이 매우 추위를 느끼더라”고 말했다.

의장성명 놓고 南北갈등

백 외무상은 이남도 최 장관과 만날 수 있는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장관이 만나자고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놨으나, 최 장관은 같은 날 오후 6시15분 귀국길에 올라 브루나이에 남북 외무장관 회동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은 앞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ARF 의장성명 가운데 서해사태 관련조항 삽입을 놓고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한후 재발방지를 위해 ‘북측의 정전협정 준수 촉구’ 문구 삽입하자고 주장했으나 북측이 이에 반발, 이 문구가 빠지는 대신 ‘신뢰구축 노력’ 조항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김창국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또 최 장관이 연설에서 서해사태를 거론하자, 우리 측 실무자에게 “왜 서해사태를 끌고 넘어지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한다.

○…브루나이 외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27~30일 브루나이측 대표단이 방북, “ARF에 전 회원국 외무장관이 참석하는데 북한만 빠지면 고립이 우려된다. 우리가 양자회담 일정도 주선하고, 필요한 경비 일체도 지원하겠다”며 백 외무상에게 참석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경비 지원이 있어서 그랬는지, 북한은 당초 풍보한 대표 6명보다 2배 가량 많은 11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전했다. /반디르 세리 베 기임(브루나이)=權秉福기자 kkb@chosun.com

아세안안보포럼후의 한반도 기류

최성룡 > 백남순 "서해교전 사태는 6·15 공동선언 위에 대화 통한 남북관계 진전을 희망한다"
백남순 > 최성룡 "6·15 공동선언에 따라 외세 간섭없이 민족끼리 대화와 협상하자"
(남북 언급은 AFR 회의장내 발언내용)

파월 > 백남순 "앞으로 이북대화가 이뤄지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의 문제 협의하겠다"
백남순 > 파월 "미국과의 대화를 환영한다"

가와구치 요리코 > 백남순 "과거를 극복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자"
백남순 >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이 성의있고 관계정상화 나오면 우리도 부응하겠다"

北 “대화로” 美日 연쇄접촉 ‘화해 손짓’

北 대량살상무기-核 걸림돌
美 강온과 내부 조율도 변수

東亞日報

2002. 8. 2(금)

北-美관계

미국은 골란 파월 국무부장과 백남순 북한 외무장간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 회동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급속한 관계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북-미 외무장관 회동이 끝난 뒤 백 외무상이 즉각적으로 북-미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힌 반면 미국은 이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이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1일 '북한과의 커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파월 장관과 백 외무상이 브루나이에서 15분간 커피를 마시며 회동한 것이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새로 재개된 대화가 계속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 재래식 군비의 휴전선 후방 이동,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동결 이행 여부 사항 등이 북한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포스트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에 대해 회의적인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그가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포기하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허용하며 휴전선의 긴장을 완화한다는 것 등을 설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북한 변수 외에도 미국 외교안보팀 내부에서 '대북 대화 재개의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사실은 장담하기 어렵다.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지만 백외관 국방부 등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서해교전은 북한을 회의적으로 보는 강경파들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예상보다 빨리 유감을 표명한 것은 온건파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도발과 유감 표명 중 어느 쪽을 북한의 진의로 보느냐에 따라 대북대화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월 장관은 아시아 8개국 순방을 마치고 4일 귀국하므로 이번 북-미외무장관 회동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대북특사파견 재개 여부 결정 등은 빨라야 다음주 이후에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한기홍특파원
 elgius@donga.com



파월과 켈리

반디폰세라에가온(브루나이) AFP

브루나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에 참석 중인 켈리 파월 미 국무장관(왼쪽)이 1일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측이 만나자면 언제든지”

北 백남순 외무상 문답

북한측 대표단은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회동하고 일본측과 국고정상회담을 개개기로 합의한 이후 취재진이 보도자료할 배포하는 등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우리 대표단은 북한과의 외무회담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수차례 접촉 과정에서 북측의 우호적 분위기를 확인한 것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남북 외무장관 회담

먼저 제의는 안할것

캘리 차관보 방북시기

미국이 직접 정하기로”

○북-미대화 거듭 확인한 백외무상=백외무상은 31일 파월 장관과의 전격회담후 “조선과 미국이 회담을 개개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1일에도 “제임스 캘리 미국무부 이태담담차관보가 평양을 방문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북한 대표단은 이어 한 강자리 영문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북-미대화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백외무상과의 일문일답.

- 미국이 대화재개에 합의한 적 없다던데, 스톱. 그 사람들... 합의했어요.
- 캘리 차관보가 평양을 곧 방문하냐. 스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기는 미국이 결정해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 미국이 특사과건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스조건이 없다.
- 재래식 무기를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북한 백남순 외무상과 회동을 가진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1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외무장관들과의 회담에 앞서 제임스 캘리 이태담담 차관보와 대화하고 있다. 반다르세리베기완(브루나이)=로뉴시스

스누가 그런 소리들 해. 뭐가 협상대상이 아니라.

-그럼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냐. 스미국과 마주 앉아야지. 앉아서 토론해야지. 이제 두고 봐야지.

-최성룡 장관을 만나나. 회의장에서 약속도 했는데.

스동족인대 약속도 못하겠소. 믿으려면 만나는거고. 회담관하고 내가 만나지 못할 근거가 없어요. 그분이 먼저 만나자면 재히 만나겠다.

-먼저 만나고 재의할 의향은. 스내 일경상 그것이 되지 않는데...

○남북 대표단 접촉=양측이 서로 상대방이 회담을 먼저 제의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공식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정관은 조찬 기자간담회에서 “백외무상의 ARF 연설은 남한에 대한 비방이나 서해사

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등 조심스럽게 작성됐다”고 평가했다.

북측 실무자들은 우리측이 서해 사태 재발 방지 등을 언급하자 “우리 입장을 보존 발언으로 밝혀야겠다”고 불만을 토로했으나 심행에 옮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ARF 의장선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이 새로운 문화를 이뤄나가자”면서 대화 분위기를 강조하는 등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호의적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경제 조기에 대해 북측 관계자들은 “물가가 실패와 큰 차이가 나서 쉬웠다”고 언급했고 일부 인사는 경제난을 굳이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다르세리베기완(브루나이)=김외구기자 egkim@kmib.co.kr

경의선 연결·추석상봉에 집중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7차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한 실무접촉이 2일 저녁 북한 금강산여관에서 시작된다. 과거 어느 때보다 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어서 회담의 의제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남측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실무대표 접촉에서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해 실무접촉에서 서해교전 문제를 거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특히 "예비접촉이라 장관급 회담의 절차를 주로 협의하겠지만 국민의 기대를 감안해 그(서해교전) 문제에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현 통일부장관

"서해교전 거론할것"

실무접촉 대표인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서해교전에 대한) 남북합당한 수준의 단편이 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회담 의제에 대해 이 대표는 "일동원 특사 방북으로 이뤄진 4·5 합의사항 가운데 철도·도로 연결과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북측이 지난달 25일 보내온 건평문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며 경의선 연결과 이산가족 상봉이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남북이 합의한지 오래됐고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경계철책 문제가 중점 논

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측 대표단은 오전 7시16분 강원도 속초에서 북한 경진항으로 향하는 현대 실명호를 타기 위해 남북회담 사무국을 출발했다.

●...앞서 남측 대표단은 1일 오전 정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기 통일부 차관 주재로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전략기획단회의를 열고 실무접촉 대책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남측 대표단은 대표 2명과 지원인력 12명 및 취재진 6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북측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최성이 서기국 부장, 김만길 서기국 참사가 실무대표로 나올 예정이다. 북측은 실무접촉에 참석하는 대표단과 보도진에게 총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북포해 와 대표단의 일부 인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중호기자 idhan@munhwa.co.kr

문화일보

2002. 8. 2(금)

"北·美협상 NLL 포함"

조평통, 북방한계선 국제법에 배치

북·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특사 파북이 합의된 가운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북방한계선(NLL)문제를 미국과의 협상 의제에 포함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31일 양측 외무장관 회담에서 끝난 파일 미국무장관이 북한 핵문제는 물론 재래식 전력 감축문제까지 논의하겠다는 뜻을 공개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NLL 문제가 향후 북·미협상의제로 채택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NLL문제는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평통은 1일 서기국 '백서'에서 "오늘 조선반도는 경진상태 지역이며 북남 사이에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침해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면서 "서해해상 경계선을 확정하자면 우리(북한)와 미국이 서로 마주앉아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 중앙방송이 2일 보도했다.

조평통은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에 참여해 조선 경진협정에 기초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하는 한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보장)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평통은 NLL은 국제법에도 배치된다면서 "국제법은 경진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국 영해안에 들어가 있는 섬의 수역문제를 규정하는 경우 이미 체결한 경진협정에 기초하여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호기자 idhan@munhwa.co.kr

한·미 對北공조 이상징후

ARF 북·미접촉 예측못해... 서해교전 수습과정도 이견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미 양측이 공식외무장관 회담에 가까운 접촉활동을 갖고 북·미대화재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한·미 대북공조의 이상징후가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백남순 북한외무상과 폴린 파월 미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진 ARF외무장관회의 개막에 앞서 커피회동을 갖기 직전까지도 김부는 북·미 회동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았다. 한국의 교관들은 북·미양측 회동 후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전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AFP 통신에 따르면 파월장관이 이미 지난 30일 밤부터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와

함께 북측과의 회동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왔다. 뉴욕타임스도 1일 "북·미외무장관 접촉은 파월장관의 외교적 신중성이 발휘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는등 한·미 양측 분위기는 다르다. 파월장관은 최성훈 외교통상부장관과 같은 비핵기관으로 30일 밤 브루나이에 도착하면서도 이같은 의중을 귀담해 주지 않았다.

한·미간 대북공조 이상징후는 이미 지난 6월29일 서해교전사태이후 미국측이 켈리 특사의 방북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할때부터 표면화했다. 한국측은 특사 방북이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부시행정부는 이것을 거부하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서해교전 원인규명 과정에서도 한국측은 예하 부대의 돌발행동으로 규정했으나 도널드 럽즈랜드 국방장관은 "명백한 무력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측이 군사위성등을 통해 입수한 서해교전 정보란 어느 정도 한국측에 제공했는지도 미지수다. 심지어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측이 미국무부 고위인사를 면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얘기가까지 전부측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 4월 임동원 특사의 방북과 6월말 서해교전 수습과정을 둘러싸고 한·미간 불신이 다시 확산되고있다"면서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이 잘 마무리된다면 한·미 외교당국자들간의 정보공유와 신뢰회복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국기자 musei@munhwa.co.kr

문화일보

2002. 8. 2(금)

北·美 채널 열렸지만 가시적 성과 미지수

ARF 접촉계기 북·미관계 전망

브루나이에서 백남순-파월 회동을 계기로 북·미 관계의 급진전 가능성이 감춰지고 있다. 그러나 진후 시정을 짚어볼 때 북·미협상에서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파월 미 국무장관의 회동은 지난 2000년 10월 메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21개월만의 강관급 접촉

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특사 방북이 이뤄지면 이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99년5월 일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 방북 이후 3년여 만이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대화 일지

2001. 1.20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6. 6	부시 대통령, 대북 대화재개성명
6.13	핵 프리지드 미 대북협상 담당대사와 김형철 유엔주재 북한대사 첫 접촉
6.18	북 입우성, 전핵순살 보성요구
2002. 1.30	부시 대통령, 연두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2.22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대화거부입장 표명
3.13	프린치드대사와 박경연 유엔주재 북한대사 접촉
4.3-6	양동원 특사 방북명, 김장일 프린치드 특사 방북 수용
4.30	이 북익관 '북·미 대화재개준비' 성명
6.25	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방북계획 발표
6.29	서해교전
7. 2	미, 대북특사 방북계획 취소
7.31	백남순-파월 회담에서 '미북시 방북 합의'

美 특사 방북은 3년만에

한국 대선후 본격화 전망

이같은 흐름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대북 분쇄전략, 또는 매과식 포용정책이 완만하게나마 포용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이전까지의 북·미관계는 지난 99년의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와 1998년의 페리 프로세스를 토대로 한 포용정책을 근간으로 한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여기에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문제를 더 얹어 놓았다.

8월중으로 예상되는 켈리 특사 방북에서도 이같은 ▲핵 합의 이행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재래식 전라 접촉 등 '3대 의제'가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이 분명하지만 당장 전환점을 찾는 쉽지 않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내 온건파의 기수인 파월 장관의 정책이 당후 공화당 행정부와 의회 심의를 거치며 어떻게 굴절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파월 장관도 1일 "향후 수순은 부시 대통령 및 안보부처 관계자들과 협의한 뒤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을 방문한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존스 홉킨스 대)교수는 "워싱턴과 평양 모두 오는 12월의 한국 대통령선거를 지켜본 뒤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며 북·미 관계는 앞으로 6-12개월간 대화 채널은 유지하되 직격탄 대화는 하지 않는 상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호기자, 반디르 세리 베가완(브루나이)-서의동 기자 idhan@munhwa.co.kr

北, NLL철폐 주장

실무회담 때 맞춰 미묘한 움직임

北, 장성급회담도 제의

북한이 2일 "서해 해협에서 발생한 무장충돌은 미국의 대(對)조선 공격에 따라 남조선 요란 계층이 계속적으로 강행한 도발사건"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또 이날 판문점 군사장관회담 중에 서해에서의 충돌방지화 강령안과 관련해 남조선이 "북한군 권의 장성급회담을 오는 6일 열자는 내용의 진화문자문을 보내왔다."

서해교전 직후인 지난날 30일 유엔사는 북한 경비정의 장엄장엄 위반 문제를 논의하고자 북측에 장성급회담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NLL을 먼저 제거하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으며, 지난날 2일 유엔사는 장성급회담을 다시 제의한 바 있다.

<관계기사 3면>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의 시작에 맞춰 북한 측은 이날 입장표명을 지난날 25일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유감표명 및 단국대화 재개 제안과 제를 크게 달리하는 것이어서 4일 까지 일일 실무접촉 강화와 향후 북측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권익 종합방송을 통해 공개한 1일자 '서기국 백서'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요란사건이 북방한계선을 계속 주장하고 나서는 한 동쪽 사이의 유혈시대가 계속되고, 나아가 그것이 온 민족을 무서운 공포 속에 몰아넣는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남조선 군부 요란 계층은 강행한 고속강의 인양작업에 빚지고 이날 초 보타시 북방한계선을 무력으로 강행할 기도를 보였으므로 도라에 놓고 있다"면서 "이러한 대결행동을 경고 추수방관하시옵소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관급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실무접촉 대표단의 방북진교를 받는 자리에서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 이번 접촉에서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측의 보다 냉정한 사과 등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통일부 이봉조(李鳳朝)실장과 서영교(徐永敎)국장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 20명은 한때 출발로연으로 이날 오후 금강산에 도착해 북측과 만찬을 했으며, 3일부터 본회담 일정·의제 등을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영준 기자 <kimseok@joongang.co.kr>



◇南北대표 견배 남북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회담에 참석한 이봉조 남측대표(왼쪽)가 2일 금강산에서 최성익 북측대표와 견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北에 '도발관련자 문책' 재촉구키로

南北접촉 오늘 본회담

남북한 양측의 장관급회담 실무 접촉 대표단은 2일 저녁 북한 금강산지역에서 만나 3일 실무대표들의 본회담을 갖기로 했다.

남측 대표단은 3일 회담에서 북한의 서해부림도발과 관련해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이와 관련해 어떤 수준의 요구를 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이날 아침 방북길에 오른 대표단에 "원래 실무대표 접촉은 본회담의 절차를 협의하는 자리이나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봉조(李鳳朝) 실무 대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4일 귀환한다.

/崔秉默기자 bmchoi@chosun.com

서해교전 재발방지 北에 요구

南北, 금강산 실무접촉 장관급회담 의제 논의

남북한은 2일 북한의 금강산 여관에서 7차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장관급 회담 일정 및 의제 조율에 착수했다.

남측대표단은 이날 북측대표단과의 만찬에서 10일께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의한 뒤, 서

해교전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력기사 3면

남측은 4일까지 진행될 접촉에서 추석(9월21일)을 전후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경의선 연결사업 추진 방안 등과 관련한 북측의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북측은 식량지원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분

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면서 북측의 진전된 입장 표명이 있어야 원만한 장관급 회담 진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이번 접촉에서 짚을 것은 짚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실장과 서영교(徐永敎) 통일부 국장을 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은 오후 6시30분께 금강산여관에 도착, 북측 대표인 최성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등의 영접을 받았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북에 서해교전 재발방지책 요구”

남북 실무대표단 어제 방북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금강산 실무접촉에 참가하는 남북 대표단이 2일 오후 속초항에서 실무로 편으로 방북했다.

출발에 앞서 남북 대표인 이봉조 통일부장관실장은 속초항 이객터미널에서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일차와 외제 등의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서해교전과 관련한 남북대표단의 입장에 대해 “서해교전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해 온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이 있는 조치를 북쪽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번 실무접촉의 진전에 대해 “남쪽과 북쪽 모두 어렵게 마련한 자리이니 만큼 절원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파서철 교통계중으로 속초항 도착이 늦어진 일부 관광객 때문에 예정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오후 1시30분 출발과 남북대표단은 금강산에 도착하는 대로 회담장 겸 숙소인 금강산 여관에서 북쪽 대표들과 만나 실무회의 일진 등을 논의하고 상견례를 겸한 동식 만찬을 했다.

이번 실무대표 접촉에는 남쪽에선 통일부 이봉조 실장과 서영교 차관, 북쪽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최상의 부장과 김만길 참사가 나왔다. 권혁갑 기자 nura@hani.co.kr



남북대표 '건배'

금강산 /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남북대표단 이봉조 대표(왼쪽)가 2일 저녁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공동석식에서 최상의 북측대표와 건배하고 있다.

장관급회담 의제 협의
실무대표단 어제 방북

남북한은 2일부터 금강산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에 들어갔다.

남북한 실무접촉 대표들은 4일까지 사흘간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시기와 의제를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쪽에 서해교전 관련 재발방지 약속과 책임자 처벌 문제 등을 언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東亞日報

2002. 8. 3(토)

대한매일

2002. 8. 3(토)

장관회담 실무단 北도착

▷ 1면에서

앞서 이날 오전 정세민(丁世敏)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표단 서울 출발에 앞서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일대 실무대표 접촉은 본

회담의 결실을 협의하는 자리이나 남북관계 상황을 냉대 짚을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원이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방관계선(NLL)의 불법성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등 긴장기조를 보이고 있어 실무접촉의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남북은 북쪽의 재발 방지책 마련 등 남북합의 방안 조치를 다시 촉구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북쪽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世界日報

2002. 8. 3(토)

이산가족-경의선 논의

남북한 오늘 금강산 실무접촉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서울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대표단이 2일 오후 금강산에 도착. 2박3일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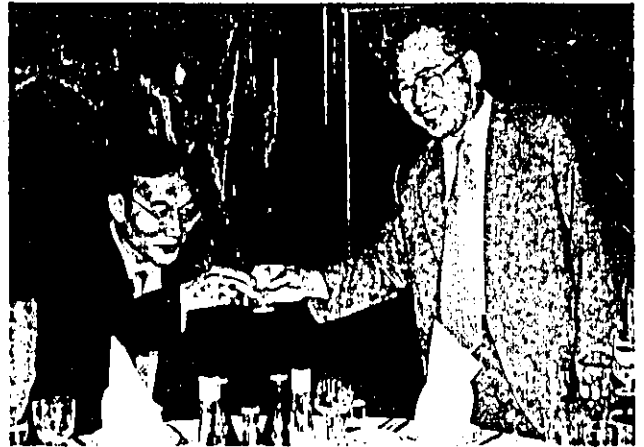
통일부 이봉조(李鳳朝) 장관실장 등 대표단은 3일부터 북측 최상의

조평동 서기국 부장 등 북측 대표단과 금강산 여관에서 만나 7차 장관급회담 개최 시기와 주요 의제를 집중조율할 계획이다. 남북은 올해 추석을 즈음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

환을 비롯해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추진 등 의제를 조율하고, 임 목사 방북시 합의 사항과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쪽이 최근 전문문에서 이산가족 및 철도연결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지만, 서해도반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김기동기자



南北 금강산 실무접촉 시작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실무접촉에 나선 남북 대표단 이봉조(왼쪽) 대표가 2일 오후 숙소인 금강산 여관에 도착하자 북한측 최성익 대표가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금강산=시진공동취재단



"잘해봅시다"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이봉조 남북 대표(왼쪽)와 최성익 북측 대표가 2일 금강산여관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건배하고 있다. /금강산=시진공동취재단

남북, 추석 이산가족 교환방문등 조율

금강산 실무접촉 시작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금강산 실무접촉이 2일부터 금강산에서 시작됐다. (관련기사 4면) 남북한은 4일까지 계속될 이번 접촉에서 장관급 분회담의 일정 및 의제할 논의하는 한편 추석(9월21일)을 전후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철도 및 도로 연결 문제에 관해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29 시해교전 사태에 대해

남측은 재발방지책 마련 등 북측에 남북합의한 조치들 재차 촉구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북측은 시해 북한계선(NLL)이 분쟁의 씨앗이라며 새로운 경계선 설정을 요구할 것이 예상돼 논란이 첨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표단 서울 출발에 앞서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실무접촉은 원래 분회담의 절차를 협의하는 자리지만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짚을 것은 많고 넘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 대표단장인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시해교전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우리가 요구해온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의 있는 조치들 북측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조평동 '백시'를 통해 "북방한계선은 해상경계선이 아닌 땅따먹기 새로운 경계선 확정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백시는 또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하는 한 전면전행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경호기자 procol@kmb.co.kr](mailto:procol@kmb.co.kr)

南北, 금강산서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추석상봉·경의선 의제 절충

남측 대표단은 2일 북한 금강산지역 정전선에 도착해 7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개최 시기와 의제 조율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대표 접촉에 들어갔다.

북한은 남북 대표단이 입장하는 시기와 때를 같이해 "북방한계선(NLL)은 시해 해상경계선이 아니며 새로운 경계선 확정은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전개한 남북 및 북미 대화에서 NLL문제를 이용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남북 대표단 출발을 보고받고 "실무접촉은 분회담 절차를 협의하는 자리이나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짚을 것은 많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실무접촉 대표단장인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남북 실무접촉 의제

- 7차 장관급회담 개최 시기 확정
- 7차 장관급회담 의제 확정 (추석 전후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남북 철도·도로 연결, 쌀 등 식량 지원,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추진, 개성공단 건설, NLL 관련 협상)
- 시해교전사태 북방지 처벌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회담 첫날부터 책임자 처벌 등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남·북한은 지난 4월 임동원 북측 방북 이후 4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실무접촉에서 장관급회담 개최 시기와 의제할 조율하고 합의사항을 회담 마지막날인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장관급회담 개최 시기로는 각각 8·15 남북 공동행사, 임지훈 등이 예정인 8월 셋째, 넷째 주를 피해 8

월 둘째주나 마지막주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회담 의제로는 추석(9월 21일)을 전후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남북철도·도로연결 및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추진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북한 백남준 회무상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제임스 램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

램리 리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일 워싱턴에서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해 "과월 장관 귀국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북미대화 재개 여부와 그 시기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나영필기자 philip@mk.co.kr
장영준기자 sc20max@mk.co.kr

이산상봉·군사신회등 장관급회담 의제 조율 금강산 실무접촉

남북한은 2일 금강산에서 7차 장관급회담 서울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회담 시기의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4일까지 열리는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작공, 대북 식량지원, 군사적 신변구축 문제 등을 장관급 회담의 주 의제로 채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이봉조 정책실장과 서영교 국장 등 남북 대표단이 금강산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짚을 것은 많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시해교전 문제를 거론할 발간임을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서해교전' 팽팽한 신경전

南 재발방지 요구에 '장성급회담' 물타기 北, 쌀지원·美대화 갈망 걸걸까진 안갈듯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안팎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우려측 대표단이 2일 오후 금강산에 도착. 북측 대표단과 회동함으로써 북측만이 남북 장관급 회담이 재개된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우리 대표단이 오후 5시30분을 정선역에 도착해 하산하자 북측 인사 3명이 마중을 나와 "오시느라 수고했다"며 우리 대표단 일행 20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대표단은 곧바로 금강산에서 짐을 풀고 북측 대표단과 상견례를 겸한 편찬을 가졌다.

만찬에서 북측 대표인 최성익 조평통 서기국 부장은 "우리가 만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9개월이나 지났다"면서 "이렇게 좋은 계절에 다시 만나니 친할수록 만남 뜻 같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에 남측 대표인 이봉조 통일부 장관은 "이번 접촉에선 쌍방이 역사지지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만찬 분위기는 무척 좋았다고 대표단이 전했다.

그러나 성과가 확실시되던 실무회담은 사태 교전사태의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남측에 맞서 북측이 서해에 북방한계선(NLL) 대신 재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삼무적 주장을 들고 나와 남북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북측은 또 유엔군사령부에 서해교전 사태를 논의하자며 장성급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장관급회담을 앞두고 우리측이 서해교전 책임을 따질 경우, NLL 폐기 주장을 하면서 서해교전 문제는 장성급회담으로 넘겨지는 주장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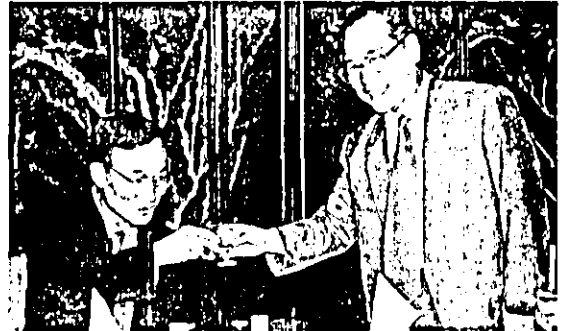
이번 실무접촉의 가장 큰 목적은 장관급 회담의 일정과 의제별 도출하는 것이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다면 본회담은 8-15 광복절 이전인 9일에서 12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세균에 빠져 있는 내부 사정 때문에 경제협력에 가장 큰 관심을 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급회담 의제가 대북 경제지원 쪽으로만 치우친 경우 국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정부는 끊임없이 퍼다나오던 북한이 무력도발을 계속한다는 정치권 일부의 상당수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북한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런 국민정서를 담론기 위해서는 실무접촉 단계에서부터 북한이 달관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실무접촉을 갖기도 전에 북한은 NLL 협제와 새로운 경제선 설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선전전을 펴고 있다.

우리측은 일단 실무접촉에서 서해교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하는 동시에, 북으로부터 보다 진전된 답변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서해교전 책임 따지기는 쳐두고 화해협력 관계할 우선적으로 논의하자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 조정에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실무회담은 3일중 두세 차례 공식회담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해교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 1일 오후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어쨌든 남북관계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대단하고, 북한도 북-미대화를 앞둔 상황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을 성사시킬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실무접촉은 난항을 겪더라도 일정한 합의의 이양어날 가능성이 높다.

신창호기자 procol@kmb.co.kr



남북대표 건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회식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진행중인 북한 금강산여관에서 이봉조 남측 대표(왼쪽)와 최성익 북측 대표가 저녁식사에 앞서 건배하고 있다.

이산상봉-경의선복원 타진

南北 실무접촉-“좋은 성과 법시다” 만찬서 덕담

2일 오후 8시10분경 남북장관급회담 준비 실무접촉이 열린 북한 금강산여관에서는 남북 대표들의 공동만찬이 있었다.

북측 대표인 최성익(崔成益) 조평통 서기국 부장은 “좋은 계절에 남북 대표단을 만나니 친할수록 만남 뜻 깊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남측 대표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장관은 “배우 중요한 시기에 회담이 열리게 됐다”며 “쌍방이 진지하게, 허심탄회하게, 역사지지(易地思之)하면서 좋은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회담했다.

남북대표단은 3일 오전 금강산여관 2층 회담장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

를 열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남측 대표단이 북한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짐을 것은 짐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서해도 밤의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번 접촉에서는 이산가족상봉과 남북철도연결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최소 30만t 이상의 대북 식량지원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이산가족상봉은 우리측이 상봉을 기뻐하는 의제다.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실무접촉에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경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8-15 광복절을 즈음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성동기기자 esori@donga.com

北, 교전 진전된 입장 밝힐까

2일 시작된 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회식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진전된 태도를 보일지 여부이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이날 실무접촉에서 짐을 것은 짐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측 대표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장관은 "배우 중요한 시기에 회담이 열리게 됐다"며 "쌍방이 진지하게, 허심탄회하게, 역사지지(易地思之)하면서 좋은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회담했다.

■ 南北 금강산 실무접촉 시작

北, NLL문제 강경입장 고수속 쌀지원 노력 南이해 구할수도

가 있어만 원만한 장관급 회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그러나 서해교전이라는 '우발적 충돌'에 유감을 표시하고, 남북 쌍방 책임을 전담한 북한이 재발방지책과 책임자 처벌문제를 두고 진전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그의 크지 않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일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서해교전사태를 포괄할 수밖에 없는 NLL 문제를

북미협상에서 다룰 것이며 남측과는 당분간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날 서해교전문제를 다룰 장성급 회담 개최를 유엔사에 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측이 교전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고려중인 NLL 지역에

서의 남북 공동어로 문제 등은 향후 남북대화의 의제로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남측의 식량지원요 구 기대하는 북측이 남측 러한 정서적 마냥 무시할 수만 없다는 일부 분석도 있다. 관측자들은 "북측 대표들이 유감표명의 진의를 설명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북측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밝히면서 남측의 이해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접촉에서 남측은 7차 장관급 회담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임동원(林東源) 대동암 측사의 방북 당시 제의 의회고도 이행되지 않은 경의선 연결사업 등을 장관급 회담 의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영섭기자 youngse@hk.co.kr



남대표단 금강산 도착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을 위해 2일 오후 금강산여관에 도착한 남측 대표인 이봉조(왼쪽) 통일부 정책실장을 최상의 북측 대표가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통취재단

경협등 포괄적 논의 난제 많아 낙관 못해

南北 금강산접촉 뒤편

지난 4일 임동원(林東源) 특사 방북 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가 2일부터 금강산에서 7차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이번 실무접촉은 북측이 시해교전에 대해 먼저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남북간 주요 현안

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의 사과 수위와 관련된 등에 대한 국내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실무를 하우 앞둔 1일 조국강화중앙위원회의(조평통)가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이 북한에게 선(NLL)을 고집할 경우 전면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필 논의하다=인간 7차 장관급회담의 서울 개최에 따른 구체적 일정 등이 화제였다. 또 북측이 전문분야에서 협조연결과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했고 우리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이번 접촉에서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그동안 한차례 국방장관 회담과 5차례 군사실무회담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내 안전보장을 위한 '철도·도로 군사보장 합의서' 발효 문제와 이산가족 상설연회소 설치까지 요구한다는 북안이다.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재개와 경제시찰단 파견 등 '남북경협' 부분도 논의된다. 최성홍(崔成亨) 외교장관의 방미 발언을 분석해야

북측이 부산시진 경수위와 시찰단 파견, 금강산관광 회담 등은 북측이 체제 있는 경제상관을 감안할 때 우리 없이 타결할 가능성이 크다. 서해교전으로 아끼던 한반도 긴장 완화 부문도 북측이 미국 특사 방북 및 북미, 북일회담 재개에 합의한 점으로 미뤄 선연적 차원에서 언급된 것이 확실하다.

◆협상 전망=시해교전 사태에 대해 북측이 지난달 25일 전종훈보도내진전된 사과를 내놓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느냐는 점이다. 이 점에서 실무접촉 하우 전 조평통이 발표한 '북방한 개선 백서'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정부는 서해도발에 대한 북측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식으로든 이 문제를 잡고 넘어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시료용 전관 방침으로 촉발된 대북 쌀지원 문제도 실무접촉 선진화 시기와 수량 등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진전된 '조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담 분위기에 따라 서해교전과 NLL 문제가 이번 실무접촉의 성과를 좌우할 키 포인트로 부각될 개연성도 다분하다. 북측은 남측의 피상공제협력기 위해 이번 접촉에서 '서해교전과 '화해협력'은 별도 논의하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군사당국자 회담에서 서해교전 책임 및 NLL 문제를 포함, 철도·도로 안전 문제 등을 앞장 논의 하자는 주장을 합치해 주목된다. /김기홍기자

분 야	주요 의제	비 고
경제협력(경수위, 경제시찰단 파견, 금강산 관광회담)	타결 전망 높음	
남북 협조 연결과 이산가족 문제	-	
군사당국자회담	추후 논의	
한반도 긴장 완화	원칙적 합의 가능	
이산가족 교환(시신교환, 생사확인, 상설 연회소 설치)	-	
서해교전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북, 난제 예상	
북방한 개선(NLL) 논란	차별한 공방 예상	
대북 지원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	

철도연결-이산문제 가시적성과 기대 北 또 NLL시비-사과싸고 논란예상

이런 속시원상으로 인해 3일 본격적인 회담에서 서해교전을 둘러싸고 핵무기나 신경제를 발발 경우 장관급 회담 진화의 발파라 의제 길이에 진공이 따를 수 있다. 아무튼 북한은 지난날 25일 대남 전문분야에서 장관급회담이 재개되면 남북간 협조연결과 이산가족 문제 등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힌 실무접촉이 시작되면 회담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식(9월 21일)에 맞춘 이산상이나 30여만 명의 정부보유 핵 대미지연 합의 가능성에 대해 김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문제에 장관급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피해한다. 이영종 기자 <ylj@joongang.co.kr>



2일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회담을 위해 북한 금강산여관에 도착한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이(왼쪽) 만진정에서 북측 최상의 조평통 서기국 부장단과 만나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대화 손짓하며 비난 발언 北 헛갈리는 양면작전

남북 실무접촉 전망

남북 당국 간 공식대화가 4일 초 임동원(林東源·청와대 외교안보실장) 특사의 방북 이후 2일 만에 2일 금강산에서 재개됐다. 그렇지만 서해교전을 둘러싼 양측의 양군이 체 사나지 않은 상태라 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함께 실무접촉은 낙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외교관계사의 전망이다.

○발 따른 임 때로=북측은 실무접촉 남북 대표단이 서울을 출발하던 2일 오전 7시 중앙방송을 통해 서해교전 "남측의 재회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1일 조평통 백서 공개해 서해교전의 후유증을 덜

관계에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져 북측도 교전사태를 더 뜨겁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실무접촉 순항할까=하지만 이번 회담서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전사태에 대해 뱀뱀하게 나올 경우 사태는 꼬일 수 있다. 대남 대표단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과·해명을 위해 끊임 있는 것"을 강조했다. "전력을 사할까" 때문이다.

북측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간주한 정부 결정에 감지 않은 사안도 있는 만큼 향후 대북정책이 탄력을 받으면 북측이 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한 사 조평통 백서 발리는 모습 을 보였다가

북 "남측 도발" 태도 변화
의제·일정 진통 따를 듯

북 "남측 도발" 태도 변화
의제·일정 진통 따를 듯

는 단계적 될 수 있다는 압박감도 크다. 이번 속시원상으로 인해 3일 본격적인 회담에서 서해교전을 둘러싸고 핵무기나 신경제를 발발 경우 장관급 회담 진화의 발파라 의제 길이에 진공이 따를 수 있다. 아무튼 북한은 지난날 25일 대남 전문분야에서 장관급회담이 재개되면 남북간 협조연결과 이산가족 문제 등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힌 실무접촉이 시작되면 회담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식(9월 21일)에 맞춘 이산상이나 30여만 명의 정부보유 핵 대미지연 합의 가능성에 대해 김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문제에 장관급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피해한다. 이영종 기자 <ylj@joongang.co.kr>

北 “西海경계선 美와 합의 필요”

祖平統 주장... “NLL 고집뚱 전면戰 가능성”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북방한계선(NLL)은 서해 해상경계선이 아니라며 새로운 경계선 확정은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했다.

조평통은 2개항의 서기국 백서에서 “오늘 조선반도는 점전상태 지

역이며 북한 사이에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침해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면서 “서해 해상경계선을 확정하자면 우리(북한)와 미국이 서로 마주앉아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제압을 앞두

고 NLL과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을 미리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평통은 또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들은 북방한계선을 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고 전면 전쟁을 일으킬 말하심으로 써먹으려는 것을 보이고 있다”며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하는 한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없다”고 주장했다.

/崔秉熹기자 bmc@chchosun.com

北 “6일 장성급회담 갖자”

유엔사에 전통문 보내 “서해교전 논의” 제의

북한의 6일 원문집에서 유엔사-북한군 간의 장성급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원문집은 2일 “서해상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원문집 장성급 회담을 제의하는 유엔사의 제안에 오는 북방군에서 회담을 보내 왔다”며 “북방군의 회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이찬봉(장성) 대표 보

외의 장성급을 위한 군사(장성)와 판문점 제임스 스티븐 유엔사 부장 보좌관 앞으로 보내 6·29 서해교전과 관련된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교전 직후인 지난달 30일 유엔사는 북한 양측과의 긴장완화 위한 단계로 논의해 군사 북방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먼저 제기하라”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2일 다시 장성급회담을 제의했으나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은 2000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北 “美와 NLL문제 논의”

조평통 백서발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미국과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미국의 백서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했다. 백서는 “미국은 북방한계선과 관련된 회담에 아무런 의무성과 협력 의향도 보이지 않음으로 북방한계선에 합의할 이후 나온 NLL백서는 북한에 대해 협상에서 NLL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한국일보

2002. 8. 3(토)

한겨레

2002. 8. 3(토)

유엔사-북 6일 장성급회담

서해교전 진상조사등 논의키로

북한은 서해교전 시대 이후 유엔사가 제기한 장성급 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열지고 2일 응답해 왔다. ▶관련기사4면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리찬복 대표(중장) 명의의 진문문을 판문점 군사정전위를 통해 제임스 스티븐 유엔사부참모장(소장) 앞으로 보내 6·29 서해교전과

관련한 논의를 하지고 제의했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상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열자는 유엔사 제안에 북한군이 회담을 보내왔다”며 “유엔사는 북한군의 회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 6월29일 발생한 서해교전 시대 이후 서해교전 및 정전협정 위반사건의 진상조사 등을 위해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열자고 두 차례

제의했으나, 북한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회담은 2000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김성열 기자 skkim@hani.co.kr

“미와 서해경계 합의 필요”

북 조평통 주장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서기국 백서 발표 북방한계선은 서해 해상경계선이 아니라 경계선 확정은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 백서에서 “서해 해상

경계선 설정문제는 철저히 조선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며 미국이 교전방안이라는 겁을 들어 이렇게 주장했다. 백서는 국제법을 들어 “정전상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국 영해안에 들어가 있는 섬의 수역문제를 규정하는 경우 이미 체결한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백서는 이어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북방한계선 을 계속 고집해 나갈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철회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서는 “남조선의 군부 호전계층이 그 무슨 침략한 고속정의 인양작 안에 빚대어 이단 초여 또 다시 북방한계선을 무력으로 침범할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北 “서해교전 논의 장성급회담 갖자”

유엔시에 전통문 보내

북한이 6일 판문점에서 북한과 주한 유엔사령부간의 장성급 회담을 갖자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고 유엔사령부가 2일 밝혔다. 유엔사는 발표문에서 “서해상의 긴장 완화를 위해 장성급 회담

을 갖자는 우리측 제의에 대해 2일 오전 북한측에서 회담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북한측이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이찬복(李贊福) 중장 명의로 제임스 슐리건 주한 유엔사 부참모장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는 서해교전 사태를 논의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관계자는 “북측 회담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회담 재개에 따른 각종 조건이 포함돼 있어 이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온산호기자 ysh1005@donga.com

경향신문

北 “6일 장성급회담 갖자”

유엔시에 전통문...조평통 “서해경계선 美와 합의 필요”

장관급회담 실무대표단 어제 금강산 도착

북한이 오는 6일 판문점에서 유엔사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을 갖자고 전격 제의했다. / 관련기사 3면
 유엔사는 2일 “서해상 긴장완화를 위해 장성급회담을 갖자는 유엔사의 제안과 관련해 오늘 조선인민군 이찬복 판문점대표부 대표(상장)가 제임스 슐리건 유엔사 부참모장 앞으로 회답해 왔다”며 “북한군의 회담에 대해 유엔사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달 25일 판문점에서 비장성급 접촉을 가졌으나 유엔사측이 서해교전 당시 북측의 잠전합정 위반

사인과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북측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서해교전 때 침몰된 남측 해군함정 인양계획 사전통보를 요구,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급회담은 2000년 11월에 열린 이후 1년10개월동안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1일 발표한 ‘서기국 백서’에서 “북남 사이에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협여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면서 “서해 해상경계선을 확정하자면 우리의 미국이

토론하고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은 철저히 조선전쟁합정에 기초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들이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하는 한 전면전경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 등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금강산 실무접촉의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금강산연관에 도착, 북측 대표단과 만찬을 갖는 등 2박3일의 일정에 들어갔다.
 박성진·이용욱기자
 longin.er@yonghwa.org.com

北, NLL 또 시비

“美와 합의” 주장... 국방부선 일축

북한이 남북 장관급 회담 실무접촉(2~4일)을 하루 앞두고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NLL은 서해 해상경계선이 아니며, 새로운 경계선 확정은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2개장의 ‘백서’에서 “오늘 조선반도는 전쟁상태 지역이며 북남 사이에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협여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해상경계선을 확정하자면 우리

(북한과 미국이 마주앉아 토론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들은 북방한계선을 북남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고 전면 전쟁을 일으킬 발화점으로 써먹으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하는 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보장은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NLL은 정전합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北 “서해경계선 美와 합의 필요”

조평통, NLL,북인정 주장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북방한계선(NLL)은 서해 해상의 경계선이 아니며, 새로운 경계선은 북한과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4면에 관련기사
 2일 조선중앙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조평통은 서기국 백서를 통해 “NLL은 미국이 조선인민군측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우리의 산

성한 영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감도적인 선”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제멋대로 그어놓고 그 존수를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충돌과 전쟁 재발의 시한탄이 될 뿐”이라며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는 교전 쌍방인 공화국(북)과 미국이 합쳐서 조선 정전합정에 기초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동기기자 esor13donga.com

北 '서해도발' 책임회피용

해상경계선 문제 왜 꺼냈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북방한계선(NLL)을 대체할 새로운 경계선 획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미간 정전협정에 기초한 해결'을 들고 나온 것은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겨냥한 사선성지작업의 성격이 짙다.

북한이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국과 대화재개에 합의한 시점에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북-미회담에 대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그보다는 '소리는 미국쪽을 향해 지르고 실제로는 남측을 치는' 선동격시(聲東擊西) 전술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

즉, 남한 당국이 2일부터 시작된 금강산 실무대표접촉과 이어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해교전의 책임을 추궁하고 NLL 준수할 요구하더라도 'NLL은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간의 문제'라는 식으로 논의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뢰'를 깔아놓겠다는 의미라는 것

이다.

조평통은 특히 NLL의 합법성을 부정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강조하면서 정전협정의 존재를 자주 언급했다. 정전협정 당사자 중 하나인 북한과 아무런 협의 없이 그어놓은 NLL은 경계선으로 쓸 수 없으며 또한 남한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므로 북-미간의 의제라는 것이다.

북한측이 '정전협정'을 근거로 들고 나오는 것은 정전협정대표가 미군정당에서 한국정당으로 바뀐 뒤 협상대이블에 나오지 않는 등 정전협정 무력화를 시도하던 북한측의 태도와도 모순된다.

이종석(李鍾碩)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외무성이 아닌 대남 담당인 조평통에서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 것은 2일부터 시작된 금강산 실무대표접촉이나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해교전 및 NLL 문제를 가급적 거론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이지 새로운 경계선을 정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심동기기자 esprit@donga.com

한겨레

북-미, NLL의제로 대화 실마리

북한이 2일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는 유엔사의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것은 대화 의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서해 최방한계선(NLL)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일 "북한이 보낸 전문문은 매우 복잡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유엔사는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유엔사의 회담요구에 응할 것은 북-미, 남-북 대화 문맥에 걸맞은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6월30일과 7월 2일 유엔사의 잇따른 요구에 부정적 태도로 일관했다. 북한은 유엔사의 첫 제의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을 먼저 제기하라"며 난호한 기부의사를 나타냈고, 두번째 제의에 대해서는

■ 북 장성급 회담 동의 배경과 전망

서해교전 유감 표명 걸림돌 제거

북-유엔사 주장 '평행선' 그을듯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엔사는 당시 북한에 장성급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서 △서해교전 진상 조사 △경전협정 위반 사항 △서해상의 긴장완화 문제 등을 의제로 내세웠다. 서해교전을 남한측의 선제공격 탓이라고 주장했던 북한으로서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25일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일단 큰 걸림돌은 제거된 상태였다. 특히 최근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 백남순 외무상이 열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전격적으로 북-미 대화를 한 뒤 군 내부에서는 북한이 장성급 회담에 응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겹쳐 왔다. 북한은 앞으로 장성급 회담이 열릴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의 협의 필요성을 중점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서기국 '백서'를 발표하면서 서해 해상경계선 확정 문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 장성급 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문제를 두고는 "유엔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진 선"이라는 북한측 주장과,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켜져 왔으며 새로운 경계선이 설정될 때까지 준수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라는 유엔사의 주장이 팽팽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방한계선 문제로 장성급 회담이 크게 급속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이라는 현안에 대해 선연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는 예상에서도.

오히려 북한 백 외무상이 미국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긍정적 조치를 촉구했고 미국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북방한계선 문제는 대화를 위한 의제로 활용되거나 북-미 대타협의 살마리를 짚 단 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성길 기자 skkim@hani.co.kr

2002. 8. 3(토)

대화 주도 '선수치기'

對美 평화협정 압박 근거 제시
南 교전문책 요구 차단 겨냥도

北 NLL거론 배경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제기한 것은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두 마리 토끼잡기'로 해석된다.

9개월여의 공백을 깨고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이 이뤄지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는 시점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위)가 NLL 문제를 제기한 것은 남한, 미국과 가장 대화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적극적인 포석이라는 뜻이다.

북측이 2일 지난달 시해교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사의 장성급회담 제의에 대해 6일 회담을 갖자고 뒤늦게 호응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북측은 조평통 백서에서 "NLL 문제는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뜻을 밝힘으로써 3일부터 이뤄질 실무회담과 8일중 열릴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이 서해교전에 대해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 추가조치를 요구하기에 앞서 선수를 치는 효과달 노린 셈이다.

남측과 대화 테이블에서는 서해교전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 다면 의제달 다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NLL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장관급회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짐짓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도 북측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웠다.

조평통 백서는 미국과 가장 대화를 염두에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남측 실무대표단 이봉조(왼쪽) 대표와 북측의 최성익 대표가 2일 밤 금강산여관에서 가진 민찬에서 술잔을 부딪치고 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둔 측면도 강하다. 북한 백남순 외무상은 지난 1일 브루나이에서 막을 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풀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미국의 특사 방북 재추진에 합의, 미 국무부 해외차관보의 방북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북측은 이 자리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로 NLL의 비법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평화협

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전역지원 및 검수로 건설 추가 지원을 따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이번 백서 발표는 내부 강경 세력을 달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이는 최근 북측이 적극적 대외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군부 일각 등 강경세력이 느낄 소외감을 달래려는 뜻이 내포됐다는 관측이다.

●박복삼기자 youngtan@kdaily.com

世界日報

2002. 8. 3(토)

北 美에 장성급회담 제의 유엔사에 전화통지문

유엔사는 2일 북측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미 장성급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시해상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갖자는 유엔사의 제안에 북측이 정전위를 통해 오는 6일 판문점에서 유엔사와 북한군간에 장성급 회담을 갖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박병진기자 worldpk@sgt.co.kr

2002. 8. 3(토)

유엔사에 전화통지문 전달 서해교전 관련 논의 제의

북한은 오는 6일 판문점에서 유엔사-북한군간의 장성급 회담을 갖자고 2일 제의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이찬복 대표(중장) 명의의 전통문을 판문점 군사장전위실 통해 제임스 솔리건 유엔사 부참모장 앞으로 보내 6·29 서해교전과 관련, 논의하지는 제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서해교전 직후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2차례 제안했으며 이날 전통문은 이에 대한 북한측의 답변 협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은 2000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최현수기자

한국경제

2002. 8. 3(토)

“장성급 회담 갖자”

北, 유엔사에 전통문

북한이 오는 6일 판문점에서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장성급 회담을 갖자고 2일 제의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이찬복(상장) 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판문점 군사장전위실 통해 제임스 솔리건 유엔사 부참모장 앞으로 보내 '6·29 서해교전'과 관련한 논의를 제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서해상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갖자는 유엔사의 제안에 오늘 북한군에서 회답을 보내왔다"며 "내주초 회담을 갖자는 북한군의 회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석 기자 yshong@hankyung.com

2002. 8. 3(토)

南과는 경제 교류 美와는 군사 논의

· 北 장성급회담 제의 속뜻

북한이 유엔사 장성급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은 본격적인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를 앞두고 논의 내용을 분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남측과는 경제·인적 교류 분야를 논의하되 군사적 문제는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북측이 남북장관급 회담 의제로 남북철도·도로 연결과 이산상봉을 제시한 점이 이를 시사한다.

장성급회담 개최에 앞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세워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주장을 하고, 해상경계선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2일부턴 금강산에서 시작된 장관급회담 예비회담에서 남측이 서해교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예방하지는 못도 단견 것 같다.

◇북·유엔사 장성급회담=유엔사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일단 "검토중"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회담이 열리면 NLL과 서해교전이 주요 의제가 될 듯 하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북·유엔사간 비시장급 접촉에서 북측이 집중한 남측 함정 인양계획 사전통보와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도 같고 나왔고, 유엔군측이 북측의 서해교전 관련자 문제와 진전협정 위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한 것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특사 방북이 시간문제인 상태여서 이번 장성급회담은 성사되기만 하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이번 장성급회담에서의 NLL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북·미대화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꾀할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금강산 실무접촉=지난 4일 임동원(林東源) 특사 방북 이후 4개월만에 대화할 재개한 양측은 이번 실무대표 접촉에서 장관급회담 개최 시기 및 의제 등을 논의했다. '실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이번 접촉은 본회담의 성격도 갖고 있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금강산 육로관광·추석 전후 이산상봉 등 장관급회담의 주요 현안들이 거론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짐을 짓은 짐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겠다"고 밝히 북측의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서해교전에 대한 남북간 입장차가 선명해 회담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듯하다. 한편으로는 북측이 서해교전 문제는 장성급회담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논쟁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이 경우 실무접촉은 순항할 수 있다. 법다른 진통을 겪지 않고 장관급회담 임정파 의제를 도출할 것이란 예기다. 남측의 대화의지가 강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앞둔 북측도 회담무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 듯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욱기자 woodj@kyunghyang.com

太平路



朴斗植

요즘 한·미(韓·美)관계는 빗나가 잔뜩 좁아져 있다. 손발이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미 모두 아예 손발을 맞추지 않기로 작심한 것 같다.

부시 행정부, '햇볕'에 등 돌리려

대북(對北) 공조만 해도 그렇다. 김대중(DJ) 정부는 임기 마지막을 장식할 북한 관련 '대박'을 터뜨리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거꾸로 부시 행정부는 햇볕정책의 조역을 말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기말의 DJ 정부와 본격적인 대북공조를 펼치기보다는 한국의 대동령 선거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의 등을 제기

로 미·북대화가 재개될 진망이지만, 부시 정부의 기조(基調)가 크게 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부시 정부의 속내는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한·미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들까지 공개적으로 찬반 격론을 벌이는 상황이다. 탈린던 정부 때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다 시먼 대사가 부시 정부의 결정에 격분해 "올해 말 대선에서 있을" 한국 리더십의 변화가 대북정책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이들 대부분은 미·북 회담이 시동을 걸고 있다.

한·미 공조는 한만도호(韓)를 움직이는 양쪽 연진이다. 한쪽 연진이라도 이심을 보여면 배의 운항 자체가 위기를 맞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한·미 관계에 파고치고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두 정부가 한·미 공조를 언급하는 빈도나 강도도 줄었고, 그 말을 할 때조차 요식행위를 치르는 것 같은 부상의향이 느껴진

뒤틀려진 韓·美관계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미국의 지원 없이 추진되는 남북관계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남북 해양무도합 '연출'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체가 빈약한 신기루 같은 행사만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 또 '남북만의 화해분위기'는 미국발(發) 경고 하나에 당장 얼어붙을 수 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다. 먼 과거를 떠올릴 필요도 없다. 지난 2월 부시 대동령 방한을 전후해서 겪었던 '악의 축(軸)' 발언의 파장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어렵지 않다. 게다가 미국의 눈으로 볼 때 한반도에는 북한 해·미사일 문제 같은 인화력 강한 현안들이 즐

다. 지난 2월 부시 대동령 방한 이후 한·미 정상은 언제, 무슨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조차 기를기울할 정도다.

무하러 '심심함'을 드러내는 김우가 부처 놀았다. 한국 정부와 여러 인사들은 부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털어놓는다. 햇볕정책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상당 부분이 부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에 탈린던 대통령의 임기가 1년만 더 남아 있었어도..."라며, 미국의 전 장관에 대한 항수(愆愆)까지 드러낸다.

미국 역시 할 말이 많은 눈치다. 어지간에선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종종

"한국이 어딘 수 있느냐"는 불편한 심사가 느껴진다. 미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부시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심심해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DJ '대박'욕심에 조역 거부

미국 대사관 및 직원 숙소의 턱수궁 인군 진동(眞洞) 이전 문제 같은 현안이다. 의정부에서 어종생 2명이 혼인 중인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 등 일련의 반미(反美) 정서의 확산에 대해 DJ 정부가 팔방을 켜 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 미국 관리는 "한국 정부 내에서 누구도 책임있게 미국의 관심사들을 다루려 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한때 '마위처럼 단단하다(rock-solid)'고 표현되곤 하던 한·미 관계는 현재 삼삼치 않은 굴연에 산입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종종 유이족존적 태도를 보여온 부시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한국측 책임도 크다. DJ 대미(對美) 외교력이 한계달 드러냈고, 현 정부가 줄곧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국내적 질문에 모호한 태도를 위해 온 것 등이 김국 기축(基軸) 동맹국인 미국까지 DJ 대북정책에 등을 돌리는 상황으로 발전한 것이다. 임기말 DJ의 햇볕 드라이브는 위험한 외출타기만 것이다.

/논설위원

매일경제

北 배급제 폐지는 변화도화선

테마진단



이 상 만 중앙대 교수

최근 북한이 물가와 급어급 대책 인상하고 식량배급제를 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향후 북한 경제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 같은 조치는 북한 당국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던 시장제 부문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에 미칠 파장이 넓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식량 등 모든 생필품을 배급이나 국영 생산을 통해 유통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물자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배급량이 붕괴되고 주민들의 경제생활에서 시장제 부문의 암시장 비중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배급가격과 암시장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 식량의 경우 암시장가격이 정부 배급가격의 수백 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수어진 소득

으로는 식량 등 기본 생필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북한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이 시도하는 물가와 급어인상이나 배급제 폐지는 국영 부문과 사경제 부문간 가격 격차를 좁히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준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정책 변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북한이 새로운 개혁의 길을 찾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을 때 문에 단순히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으로만 볼 수 없는 것 같다. 이번 조치에는 노동시간, 노동생산, 생산량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개혁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식 변화 모색

비록 제한적이지만 시장가격으로 식량을 사고 팔며 국영 부문에 성과급제 도입을 도입하는 것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요소를 접목시키는 것으로 소위 북한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태동용 알리는 조짐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경제난을 다개하기 위해 나름대로 개혁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90년대 이후 농업, 김관민, 무역자유주의로의 정책 전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설, 남북간 협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전환과 외국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등이 대

표적 사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했는데 북한의 경제인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98년 인민경제법 제정 후 신사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북녘은 개혁조치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의 정책 변화가 큰 전환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북한은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 시도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중국식 개혁모형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뉠 대로 논리적 개방에 북한식 개혁(소위 주체적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든지 개혁내용과 범위는 북한의 현행 계획경제체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접목하는 형태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다소 이해되지 않는 점도 있으나 엄밀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제개혁의 초기 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앞으로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부작용도 예상보다 크지 않다면 북한은 배급 폐지 대상 품목을 더욱 확

대하고 임금 인센티브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북녘은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장경제 형태로 이뤄지는 암시장 거래에 대한 당국의 허용 조치는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른 개혁조치 가능성도

북한의 시장제 부문(암시장)은 식량 남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이미 북한 국내총생산(167억9000만달러)의 3.6%(약1000만달러) 이상 규모로 독일 통일 직전의 동독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 시장제 부문을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 사회의 '아래로부터의 개혁 압력'을 수용하는 것일 의미하며, 이는 중국의 '위로부터의 개혁 모델'과는 형태가 다른 소위 북한식 개혁개혁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북한 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북한의 식량 생산이 급속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북한 사회에 심어진 시장경제의 뿌리는 계속 자라게 될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여지가 없어진 북한이 이렇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경제개혁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장관급회담 의제 조율

남북 첫 금강산 실무접촉 南, 서해교전 사과 요구

남북은 3일 북한 금강산여관 2층 회담장에서 7차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첫 회의를 갖고 본회담의 개최 시기와 의제를 논의했다.

남북은 경의선 및 금강산 철도·도로 연결과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개

성공단 착공, 군사적 신뢰구축 등 정부가 최우선 이행과제로 삼고 있는 사안들과 그동안 합의만 해놓고 이행이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사안들을 기본 의제로 삼자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산가족 방문 및 철도·도로 연결은 북측이 지난 달 25일 보낸 전 화통지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어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함께 남측은 부산아시아게임(9.20-

10.10)에 대한 북한 선수단 급기차 및 두산·한리안 동시 성화 제화를 북측에 관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서해교전에 대해서도 북측이 사과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백서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거론하며 서해교전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한중호기자 idhan@munhwa.co.kr

한화갑 방북 '新北風' 논란

한나라 "DJ지침하 김정일 담방 성사위함것" 민주 "방북의지 일본 계획 확정된것 없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지난 2일 방북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신북풍' 의혹을 제기하며 방북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측은 3일 "한 대표가 방북 의지를 상조한 것이 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정권권이 대선전략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화갑이 방북하고 안하고는 한화갑이 결정할 문제지, 한나라당의 승낙을 받고 가느냐"며 "가면 국가를 위해 가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는 것"이라고 방북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한나라당이 남북회담과 나의 방북설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피월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백남준 위무상을 만나 대화재개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왜 '신북풍'이라고 안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정형근 의원이 "한 대표가 8월 중 방북,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담방을 논의할 것"이라는 '도라산 프로젝트'를 제기했을 당시만해도 한 대표는 "지난해 북한에서 열리는 자문자담회에 가려 했지만, 지금

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방북 문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이같은 발언 변화로 인해 한 대표의 방북 계획이 확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자 이용범 부대변인은 "한 대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나라당이 뭐리든 가겠다는 것이지만 북한으로부터 초청이 있거나 날짜가 확정됐는데 숨기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8·8재·보급 선거와 12월 대선을 앞두고 난관에 처한 정부와 민주당이 국면전환을 위해 한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남경필 대변인은 "왜 이 시점에서 자칭 정책여당의 대표요, DJ의 정치적 분신인 한 대표가 남몰래 방북을 추진해왔는지가 의문"이라며 "어떤 자격으로 무슨 목적으로 가려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남 대변인은 또 "DJ의 지침하여 퍼주기론 통한 김정일 담방을 성사시키려는 정권차원의 비밀프로젝트라는 의심이 든다"며 "남북문제를 악용해 등돌린 민심을 현혹해 보려는 '신북풍'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며 방북 철회를 촉구했다.

/김석기기자 suk@munhwa.co.kr

"대선 겨냥한 남북 밀거래"

청와대·국정원·민주당 합작품 도라산 프로젝트에 의해 기획 한나라 정형근의원 주장



한나라당 정형근(울금)의원은 3일 문화일보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한화갑대표의 방북은 여권이 만든 '도라산 프로젝트'에 의해 기획된 것으로 대선을 겨냥해 남북관계를 이용하기 위한 전략적 밀거래"라고 주장했다.

- '도라산 프로젝트'의 내용은 뭔가.

"한대표는 오는 6-7월에 갈 것이다. 육로로 융성한 대접을 받으며 간다. 김정일의 담방을 성사시키는 게 목적이다. 한대표가 DJ대리인으로 김정일의 초청장을 받아 간다."

- 프로젝트를 어디서 추진한 것인가.

"정권차원에서 모든 재산을 가동한 것이다. 추진한 지 오래 됐다. 서해교전에 대해서 '김정일이 지시한 것을 행하'하면서 증거가 없다. 우발적 국지전이다"고 한 것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추진주체의 이름을 말할 수 있나.

"청와대와 국정원, 민주당의 3각 합작품이라고 보면 된다."

- 우리가 주는 반대 급부는 뭔가.

"개성공단 전력지원하고 금강산여관 지어주고 금강산 해수욕장 82만달러, 반지점프장 20만달러 등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그의 북측이 요구하는 상당 부분을 들어주기로 했다."

- 한대표 방북이 한나라당 대선전략에 불리한가.

"남북정상이 만나고 긴장을 해소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대선전략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희생하며 추진하니 문제가. 내가 한말에 대해 민주당이 또 고발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김세동기자 sdgim@munhwa.co.kr

北, 釜山아시안게임 참가

南北 장관급회담 12~14일 서울서

실무접촉서 공동보도문 5개항 발표 경협촉 재개·이산상봉등 논의키로

남북한은 제7차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14일 서울에서 열어 임동원(林東源) 북사의 4월 방북 때 합의했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 2차 회의와 금강산관광 합성화 2차 당국간 회담,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로 4일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또 5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기 위한 4차 직심자회담 개최 문제도 협의키로 했으며, 9월 29일~10월

14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4회 아시아안게임에 20개 종목으로 구성된 북측 선수단이 참가하고 남측이 편의 1장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15~16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간차원의 8·15 통일축전과 박근혜(朴槿惠) 의원의 5월 방북 때 합의된 9월 8일 남북 대표단 간 축구경기의 성공적 진행을 지원키로 했다. 남북한은 3일부터 4일까지 금강

산에서 열린 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마친 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개 사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6·29 서해 무력도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의 처벌 등의 내용은 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봉조(李鳳朝) 우리 측 수석대표는 "남북간 합의는 그동안 정체됐던 남북관계에 활기를 넣고 앞으로 관계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서해 교전사태는 (6일 열리는) 장관급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명간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실무접촉 결과를 토대로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미국·일본과도 긴밀한 협의를 벌여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지난 2일부터 북측과 실무접촉을 벌였던 우리 측 대표단은 4일 오후 장전장에서 설봉호 편으로 속초항에 귀환했다. >복합기자 kkb@chosun.com

중앙일보

北,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한다

금강산 南北실무접촉서 5개항 합의 12~14일 장관급회담 서울서 개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논의키로

다음달 20일 부산에서 개막될 14회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고, 백두산에서 치러질 성화(聖火)도 온다. 또 지난 5월 초 4차 이산상봉 이후 중단된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재개된다. 남북한은 4일 금강산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 실무접촉 서울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개항에 합의하

고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될 7차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키로 했다. >관계기사 3, 4, 38면>
5일 남북이 금강산 실무접촉 결과를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장관급 회담에서 4차 남북 직심자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와 금강산에서 5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처

는 방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서울 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추석(9월 21일)에 즈음해 각 1백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측 최성익(崔成益) 부장대표는 어려운 식량사정을 설명하고 30만t 규모의 정부 보유 쌀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회담 고위 관계자는 확인했다. 정부는 곧 김내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장관급 회담 대책과 남북 식량지원 문제 등을 협의한다. 양측은 또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 재개와 북한 경제사태의 서울 파견 문제도 포함해 지난 4일 임동원(林東源) 특사 방북 때 합의한 사항의 실천도 본 회담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북은 민간차원에서 진행될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8

월 14~17일)와 9월 서울에서 열릴 남북 축구경기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적극 돕기로 합의문에 못박았다. 그러나 정부가 공안한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사과·재발 방지 약속 문제는 북한 대표단이 지난 달 25일자 대남 전통문서에서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측은 장관급 회담을 20일 열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접촉 대표인 통일부 이봉조(李鳳朝) 남측은 "북측은 전례회의의 기초 발언을 통해 유감 표시와 재발 방지 노력을 재확인했으나 재발 방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명의 실무접촉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후 현대 설봉호 편으로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vjl@joongang.co.kr

南北 장관급회담 12~14일 서울 개최 합의 北, 부산아시아경기 참가

5차 이산가족상봉 추석전후에 재개 서해도발사태 재발방지 明文化 없어

남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남북장관급회담(제7차)을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A3·4면에 관련기사
양측은 또 9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고, 제5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금강산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스포츠선수단이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종합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4일 금강산어관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 회의일 마무리짓고 이 같은 5개항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측은 북측이 3일 실무접촉 전체 회의 기초연설에서 지난날 25일 진화불지문 수준의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으나 공동보도문에는 그런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양측은 장관급회담이 열리면 남북 협도 및 도로 연강, 개성공단 건설, 압전강 수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문제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자회담 △북측 김제시찰단 파견 △남북군사당국자 회담 개최 등 임동원(林東源) 대총리명임 외교안보특보 방북(4월 5일) 때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이행 일

정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장관급회담 때 제4차 남북직접 지회담도 함께 열어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상봉을 실현하는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봉 일지는 장관급회담에서 결정하겠지만 생사확인 등 준비기간과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전후가 유력하다.
북측은 또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20여개 종목의 북한 선수단을 보내기로 했으며 남측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남북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의 한국미래연합 박근태(朴根燾) 대표의 방북(5일) 때 논의했던 남북대표단의 9·8 축구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주요 합의사항
12~14일 서울서 장관급 회담 개최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
9월 축구경기 성공 위해 협력
남북철도연결 위한 경제협력추진위 개최
금강산관광회담, 남북군사회담 재개
제5차 이산가족상봉 실현

대회 성사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북한 장전장에서 심봉호를 타고 강원 속초항으로 와 서울로 귀환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한국일보

北, 부산 아시아경기 참가

南北 장관급회담 12~14일 서울서

■ 금강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발표

철도연결·軍당국회담등 의제 확정 적십자회담·금강산 이산상봉 합의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12~14일 서울에서 열린다. 또 북한은 9월 29~10월14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4회 아시아경기에 20개 종목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파견키로 했다.
남북은 4일 금강산에서 장관급 회담 실무대표 접촉 전체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특히 제4차 적십자회담과

제5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지를 장관급 회담에서 정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서해교전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특보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4월5일 합의 수준으로 복원되면서 향후 북미·북일 관계개선 등 한반도 정세 변화

급 주도할 전망이다.
남북은 그러나 최대 쟁점이던 서해교전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보도문에 언급하지 않고, 6일 북한·유엔사간의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남측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북측이 전체회의 기초발언 등을 통해 유감표시와 재발방지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장관급 회담 의제로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제2차 금강산 관광감정회담 위한 당국회담 개최,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재개 등을 의정했다. 대북 식량지원,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인도적·경제적 협력사안들은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거론키로 했다.
남북은 또 서울에서 열리는 8·15 민족통일대회의 9·8 남북 축구경기 등 민간교류협적 지원키로 합의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후 설봉호 편으로 귀환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동준기자 djlc@hk.co.kr

북, 부산아시아경기 참가

남북 12~14일 장관급회담...추석께 이산상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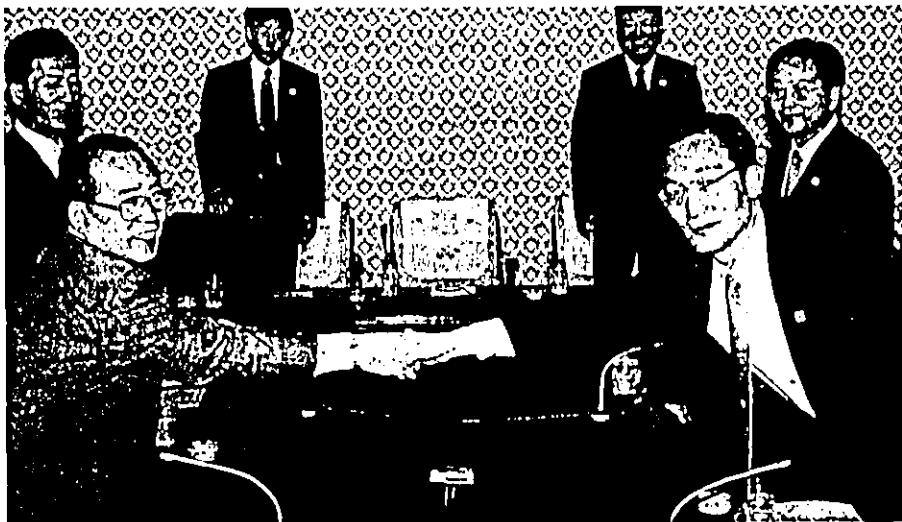
실무접촉 5개항 합의

남북은 7차 장관급 회담을 12~14일 서울에서 열기로 하고,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9월 20일~10월 14일)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지난 4월에 이어 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금강산에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장관급 회담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사업은 추석 즈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2·3·31면

남북은 4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7차 장관급 회담 실무대표 접촉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5개항의 합의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또 이봉조 남쪽 수석대표는 귀환하는 배편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아시아대회 참가뿐만 아니라 성화를 백두산에서 축하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12일 알리는 7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선공단 건설, 입진강 수해방지 등 경제협력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김원추진위 2차 회의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 △북쪽 경제시찰단의 남한 파견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문제 등 일련된 대통령 특사 방북 때 합의한 '4·5 공동보도문'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을 협의·확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해교전 사태로 흐트러졌던 한반도 정세는 브루



4일 오전 금강산 여관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전체회의에서 이봉조(오른쪽) 남쪽대표와 최성익 북쪽대표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러워 악수를 하고 있다.

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의 북-미, 북-일 대화 재개 '합의'와 함께 '4·5 공동보도문' 체제로 복원될 전망이다.

남북은 또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14~17일)와 9월8일 서울에서의 남북 축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별개로 4차 남북직접자 회담을 열어 면회소 설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등이

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협의할 전망이다.

이봉조 대표는 합의내용을 발표 한 뒤 "이번 합의는 그동안 정체됐던 남북관계에 활기를 넣고, 앞으로 관계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해 "우리 쪽은 무력충돌이라는 협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북쪽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명확한 입장을 전했고, 북쪽은 전체회의의 기초발언 등을 통해

거듭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대북 쌀지원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그 문제는 김주위 2차 회의가 열리아 북쪽에서 거론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남쪽 대표단은 이날 오후 금강산 관광선 출발후으로 정전상황을 떠나 남쪽으로 돌아왔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한겨레

2002. 8. 5(월)

이산상봉 추석前 이뤄지나

준비작업에 한달- 시간여유 있어 가능성 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석 전후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직 관계자는 "상봉자 명단 교환 등 준비 작업에 보통 한달이 걸린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날짜를 정할 장관급회담이 12~14일 열리고 추석은 9월21일로 한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추석때 상봉이 성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봉 장소로 금강산이 결정된 것은 북쪽 주

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3차 이산가족 상봉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열렸고 지난 4월28일 제4차 상봉이 금강산에서 있었다. 북쪽은 금강산을 이산가족 상봉의 상징적 장소로 고정화시킴으로써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서울행을 억제하려는 계산 아래 금강산을 고집해 왔다.

반면 우리측은 뱃길 여행으로 인한 고령자의 건강 문제나 상봉시설의 미비 등을 들어 남북

동시 개최를 주장해왔다. 남쪽이 이번에 양보한 것은 장소 문제를 떠나 일단 상봉이 지속되도록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4차 남북직접자회담 개최기로 한 것이 의미가 적지 않다. 장소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회담이 열리더라도 남쪽이 얼마나 의견을 좁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해 1월 20일 개최 이후 중단 상태에 놓여있었다. 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 확대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이 논의된다.

남북은 면회소 설치 원칙에는 동감하면서도 장소에 대해서는 남한은 판문점이나 경의선 연철지점을, 북한은 금강산을 주장해왔다.

김외구기자

北 부산아시아게임 참가

남북, 12~14일 서울 장관급회담 합의

적십자회담 열어 5차 이산상봉 일정 잡기로 부산아시아게임 성화 한라·백두산서 채화

남북한은 4일 금강산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을 위한 2차3일간의 실무접촉을 갖고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제7차 장관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또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와 제5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고 장관급회담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3·16면

이와 함께 9일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한다는 데 합의했다. 북한이 남측에서 열

리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약 300명의 선수단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북한은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국과 대북 특사파견에 합의하고, 일본과 북·일 수교교섭회담에 합의했다. 따라서 7차 장관급회담의 진전 여부에 따라 6·20 서해교전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

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는 대화와 안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장관급회담 의제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당국회담 개최,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 재개 등 4·5 공동보도문 이행 일정을 확정했다. 남측은 부산 아시아게임에 출성회를 백두산에서 개최한다는 대도 합의,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동시 채화된 성화가 합쳐져 부산 아시아게임을 밝히게 된다. 양측은 또 서울에서 열리는 8·15 민족통일대회와 9월 남북 축구경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해교전과 관련, 우리측은 북측의

성이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북측도 경제회의의 기초방안에서 유감표시와 재방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했으나 공동보도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박3일간의 임장을 끝낸 남측 대표단은 이날 낮 북측 대표단과 오찬을 함께 하고 오후 2시30분을 장전장에서 재조선성남호텔으로 귀환길에 올랐다.

한편 한라산은 남북 실무접촉 합의와 관련, "공동보도문 어디에도 북한이 서해도반에 대한 사과나 재방방지 약속이 없다."며 "입기말 믿어들이기식 대북정책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北, 부산아시아게임 참가

금강산 실무접촉 장관급회담 12~14일 서울개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오는 12~14일 서울에서 개최되고,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한다.

또한 ▲남북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을 위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남북 군사 당국회담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및 제5차 이산가족 상봉 등 그동안 합의만 해놓고 실천이 안되던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관련기사 3·4·13·25면)

남북은 4일 오전 금강산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마무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5개항에 합의했다. 남

■ 5개 합의사항

- ▶철도-도로연결-경우회 개최
- ▶北 경제시찰단 파견
- ▶금강산관광 활성화 회담
- ▶군사당국회담 재개
- ▶적십자회담-이산상봉

북은 이밖에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와 9월 남북 축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돕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관급회담 일자는 남측이 제안한 것을 북측이 수락함으로써 결정됐다. 공동보도문은 임동원(林

東源) 특사가 4일초 방북 당시 합의한 '4·5공동보도문'에 ▲북한의 아시아게임 참여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 부문이 추가돼 있다. 장관급 회담장소를 쉽게 서울로 동의하고 그동안 꺼리던 군사 당국회담을 재개기로 합의한 부분이 특히 눈에 띈다.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 남측 수석대표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장관실장은 "우리측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성의있는 조치를 북측에 촉구했으며, 북측도 유감표시와 재방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전체회의의 기초방안을 통해 유감표시와 재방방지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대표단은 전했다.

앞서 북한 중앙통신은 3일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은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북측의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회담장인 금강산여관을 출발, 삼봉호텔 숙소 향에 귀환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북한,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장관급회담 12~14일 서울서

남북 실무접촉 합의...이산상봉 재개키로

다음달 열리는 부산 아시안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하고 오는 12~14일에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린다. / 관련기사 3·31·32면

남북은 4일 금강산에서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접촉 후 내놓은 공동보도문에서 "제14회 부산아시안경기대회에 북측이 20개 종목에서 참가하고 남측은 편의급 보장하며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남측 대표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장관실장은 "지난 4월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방북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남측 아시안게임 조직위에서도 북측을 초청하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북측은 부산 아시안경기대회 성화를 백두산에서 개최하는 우리측 제의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또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등 철도 및 도로연결·개성공단 건설 등을 논의할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및 군사당국자회담 재개, 북측 경제사찰단 파견,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등 지난 4월 임동원 특보 방북시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못한 사항들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4차 남북직접사

회담을 개최해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했으며, '8·15서울 민족통일대회'와 9월 남북 국가대표 축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남북당국이 적극 돕기로 의견

을 모았다.

그러나 서해교전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 등의 문구는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봉조 실장은 이와 관련, "서해교전에 대해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했고 이에 대해 북측은 전체회의 기초방안을 통해 유감표시와 재발방지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산집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그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접촉은 7차 회담준비를 위한 것이고 지원문제는 경추위가 없어야 북측이 거론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이홍욱기자

woody@k.yunghyang.com

世界日報

2002. 8. 5(월)

남북經協 재개 기대감 고조

장관급회담개최 합의 인파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합의를 계기로 경의선 철도-도로 복원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업의 주요사업 재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남북 경협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개성공단 조성 및 개성 관광사업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남북은 4일 금강산에서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오는 12~14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어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의선-동해선 등 철도-도로 연결=2000년 9월 착공된 경의선 복원사업은 지난해 2월 남북 군사회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공동규칙 합의서'에까지 의견일치를 이뤘으나, 이후 북측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철도는 문산~군사분계선 12km 복원공사 구간 중 10.2km 공사가 끝나 도라산역까지 열차가 운행중이며, 도로는 봉일대교 복단~군사분계선 5.1km 공사구간 중 3.3km의 포장작업을 마쳤다. 동해선 철도 연결사업은 남측 강릉~군사분계선 127km, 북측 군사분계선~강원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18km를

했다. 임진강은 총길이 254.6km 중 92km만이 남측에 있고 전체 유역면적 8117㎢ 가운데 5108㎢가 북한 지역이다.

◆개성공단 및 관광사업=개성공단 조성사업은 2000년 8월 현재와 북한이 합의한 사업으로 총 80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한 뒤 국내 기업들을 유치해 연간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대아산은 이미 공단부지에 대한 토질조사 작업을 끝낸 상황이며, 공단 조성공사가 시작되면 1년 안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입주희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신발지식산업협동조합,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3개 협회 등 300여개 조합과 기업이 입주권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이 조성되면 개성지역 관광사업은 자연스럽게 활력 가능성이 높다. /김갑수씨에원기자kks@sigt.co.kr

경협추진위 2차회의 일정 집중 논의 철도연결-개성공단등 본격화 가능성

각각 복원해야 한다. 도로는 봉일대(송현리)~군사분계선 구간 4.1km와 북측 군사분계선~삼일포 구간 10km를 건설해야 한다.

◆임진강 수해방지=해마다 반복되는 경기도 과주-문산-동두천 등 임진강 하류지역의 물난리를 막기 위해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후 본격화됐다. 그러나 수해지역 조사 대상 및 기간, 조사단 구성, 조사방법 등 세부사항에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

北, 부산아시안게임 참가

南北 장관급회담 12~14일 서울개최

5개항 합의

금강산=공동취재단·나영필기자

다음달 29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한다. 남북은 또 12~14일 서울에서 7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추석을 전후한 시기에 이산가족 상봉 개최 등을 논의한다.

남과 북은 4일 오전 금강산연락처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 전 제회의합업고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항의 합의를 공동보도문을 통해 발표했다.

남측은 실무접촉에서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남측할 만한 수준의 상의있는 조치를 요구했으나 북측이 "유감표명은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며 재발방지 노력을 언급하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해 공동보도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관련기사 3·31면

공동보도문에서 남북은 조만간 제1차 남북직접회담을 개최해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민간단체간 진행되는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와 9월 남북친선축구경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돕기로 합의했다.

북측 선수단의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해 남측은 이에 편의를 보장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측은 이와 함께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로 △남북 길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압진강 수방대책 등 경제협력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개최 문제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간 회담 개최 문제 △북측 군사당국간 회담 개최 문제 등 일동일 특사 방식시 합의했던 4·5 공동보도문 합의사항을 포 함시켰다.

주요 합의 사항

- 7차 장관급회담 서울 개최(8.12~14일)
- 길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 압진강 수해방지사업
- 금강산 관광
- 경제 시찰단 파견
- 군사 협력지 회담 재개
- 4차 남북직접회담
- 5차 이산가족 상봉
- 북한, 부산아시안 게임(8.29~10.14) 참가
- 남북 편의 보장
- 8·15 서울민족통일대회
- 9월 남북축구경기 적극 지원

매일경제

2002. 8. 5(월)

국민일보

2002. 8. 5(월)

北, 부산아시안게임 참가

백두산서 성화 채화... 7차 장관급회담 12~14일 서울개최

남북 실무접촉- 5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南측 "北 서해교전 유감-재발방지 재확인"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남북장관급회담이 9개월만에 재개되고 내달 하순에 열린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한다. 부산 아시안게임에는 북한뿐 백두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한라산에서 채화된 성화와 합쳐져 대회기간을 밝히게 된다. (관련기사 2·3·4·19면)

남북은 4일 금강산연락처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7차 장관급회담을 12~14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하는 등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8월12일부터 14일까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장소는 순차에 따라 서울에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제11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20개 종목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하고 남측은 이에 편의를 보장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와 9월 남북 축구경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돕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7차 장관급회담에서 지난 4일 초 일동일 특사 방식시 합의한 남북 길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압진강 수해방지 등 경제협력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또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개최와 북한 경제시찰단 파견 그리고 군사당국자회담 재개 문제를 합의하기로 했다. 특히 제1차 남북 직접회담을 열어 금강산에서 5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하기로 했다.

서해교전과 관련해 남측은 3일 열린 수석대표 단독접촉과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다

상의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했고, 이에 북한은 전체회의 기초반영을 통해 유감 표시와 재발방지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대표단은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재발방지 노력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아 논란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병조 남한 대표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선수단을 보내고 백두산 성화가 부산 주경기장을 밝힌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합의"라면서 "성화 채화는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동시에 한다는 것 이외에 이동경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 대표단은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정기회속선 설명회를 갖고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신창호기자

대화나선 北... 관계복원 되려나

南北 금강산 실무접촉 협의이후

北 식량난 악화 경험추진쫓 적극나설듯 군사회담은 '西海' 문제로 난항 불가피

남북한이 4일 장관급 회담 실무대표 접촉 후 발표한 '8·4 공동보도문'은 기본적으로 지난 4월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방북 때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던 '4·5 공동보도문'의 합의사항들을 이행하자는 뜻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 일정은 12~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확정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시해 무력도발로 형성된 남북관계는 일단 복원되는 모양을 취하게 됐다. 북한은 특히 임 특사가 4월에 제의했던 9월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를 이번엔 받아들이기로 했고, 이를 공동보도문에 담았다. 이는 북한이 '도발'의 이미지를 '대화'로 바꾸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이 열리면 우선 4·5 합의의 이행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4·5 합의 가운데 신사당 것은 4차 이산가족 상봉 하나뿐이었다. 따라서 4·5 합의 중 이행되지 않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과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 등을 논의키 위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 금강산관광 활성화 위한 2차 당국간 회담, 북측 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추석(9월 21일)을 전후로 한 5차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이 중 정부는 5차 이산가족 상봉과 경험추진위 재개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추가 상봉은 이를 위한 4차 적십자회담 개최에 합의,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협추진도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

는 북한측이 30만 t 이상의 쌀을 남측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이자, 남측도 임여반의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렵지 않게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1일부터 경제간리방식 전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는 경제협력 방식을 통한 남측의 지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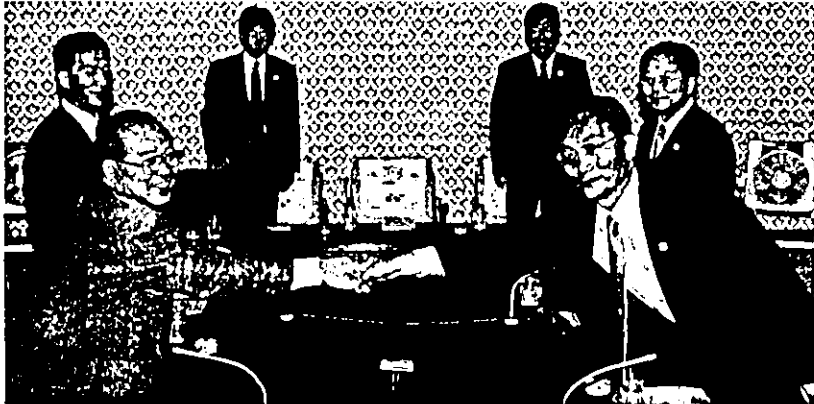
그러나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문제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측은 서해도발과 관련해 북측에 확실한 제방방지 약속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북측은 서해 북

방한개선(NLL) 문제도 협의하지고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측은 이미 6월의 장성급회담 등을 들어 시해도발 문제 등은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하지 말라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이산가족 상봉 및 경협 문제와 군사적 문제를 분리하려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관급회담에서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에 의견이 모이진다 하더라도,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공사를 위한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합의서의 서명·교한 수준의 합의만이라도 있으면 대항이라는 진전이 나오고 있다.

/홍영희기자 kkb@chosun.com

올해 주요 남북관계 일정

- ▶ 4월3-6일 임동원 특사 방북
 - ▶ 4월25일-5월3일 제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금강산)
 - ▶ 5월7일 北, 남북경협추진위 2차회의 연기(일정불확)
 - ▶ 6월29일 北, 시해 무력도발
 - ▶ 7월2일 北, 대북특사 파견계획 발표
 - ▶ 7월25일 北, 서해교전 유감표명 및 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재개
 - ▶ 7월29일 장흥 북한 IOC위원, 김용중 IOC위원에 서해회담 재개
 - ▶ 7월31일 열린 특별 남북회담, '백남산 북의무장 AFP 외부회의'서 최종
 - ▶ 8월2-4일 남북 금강산 실무대표접촉
 - ▶ 8월6일 유엔군사령부-북, 장성급회담 (판문점, 여경)
 - ▶ 8월12-14일 제7차 서울 장관급 회담(예정)
 - ▶ 8월15-16일 8.15 서울 통일추진(예정)
 - ▶ 9월8일 남북한 축구대표팀 경기 (서울 잠양경기장, 예정)
 - ▶ 9월29일 北,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참가 (-10월14일, 예정)
- ▶ 7차 장관급회담에서 시가 합의
- 4차 남북회담실지회담
 - 5차 이산가족 상봉(금강산)
 - 남북경협추진위 2차 회의
 - 금강산관광 활성화 2차 당국회담
 - 북측 경제시찰단 남한 방문
 -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약수하는 남북대표 4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에서 남측 이병조(오른쪽), 북측 최성이의 대표가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동보도문에 '西海道발' 언급안해

실무접촉 이모저모

지난 2~4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은, 서해도발 이후 대외적으로 '대화' 이미지가 나오려는 북측의 자세 때문인지, 큰 진통없이 공동보도문을 만들어냈다.

남기자에게 '만족하나' 질문

○...북측 관계자들은 3일 오후 전

제회의를 거친 뒤부터 "큰 보따리만 가져가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순환'을 예고했다. 이번 분위기는 4일 아침 장관급회담 일정이 남측 회담대로 8~15 이전으로 잡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1차 확인됐고, 이어 정오에 발표된 공동보도문에 북한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사실이 포함돼 더욱 분명해졌다. 공동보도문 발표 이후 북측 대표단은 남측 기자들에게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고 북측 최성이의 수석대표는 "그쪽이 만족한다니까 지도

만족합니다"라고 말했다. 북측은 특히 아시안게임 참가에 관심을 보였는데, 엔트리 마감이 언제인지 우리측에 물어왔으며 우리측이 성과 재해 문제도 제기하자 이에 순순히 동의했다고 한다.

北, 아시안게임에 큰 관심

○...이번 접촉에서 남측은 국민여론을 감안, 서해도발 관련 제방방지 약속·책임자 처벌 등을 다시 기술했으나 북측은 7월 25일 정중문으로 밝

힌 이상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동보도문에도 서해도발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은 실무접촉이 진행된 3일 "(시해사태에 대한 7.25 유감 표명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교류·협력을 강화하려는 데서 출발한 솔직한 진지한 태도의 반영이며, 추후의 의 함도 기질 필요가 없다"는 중앙통신 논문을 발표, 남측의 추가 요구에 선 물고 있었다.

이 문제는 6일 장성급회담 등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나, 북측은 오히려 북방한개선(NLL)의 문제점만을 부각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홍영희기자 kkb@chosun.com

北, 쌀 30만톤 지원 비공개 요청

금강산 5개항 합의 의미

4일 남북 양측이 7차 장관급 회담의 일정과 의제에 합의함으로써 지난 해 11월 결렬된 후 첫 장관급 당국 대화가 마련됐다. 또 4월 초 임동원(林東元) 특사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중과 구를 찾지 못한 남북 간 교류·협력 합의사항의 실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9월 하순까지 이산상봉과 아시안 게임이 이어지면서 한달여 동안 '북한 봄'이 일 전망이다. <일정 참조>

◇중동보도문 어떻게 짜였나=다음달 말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 측이 참가하기로 합의한 점이 새로운 내용이다. 북측의 방북 때 제안한 것을 북측이 수용한 것.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BAGOC) 측은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에서 채취된 성화를 합쳐 통일염원을 담는다는 계획을 갖고 관문점 통과 등을 북측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20개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2백여명 규모가 된다.

적십자 회담의 재개와 추가 이산상봉도 고령 이산가족의 고통을 사정을 감안할 때 의미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금강산 상봉의 정례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과, 적십자 회담에서 면회소 개설과 생사확인·서신교환이 이뤄질 기대를 다시 한번 갖게 됐다.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과 3개성공단 건설, 2인간 수방(水防) 대책 등을 다룬 경제추진위 개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등은 이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북측 사에게 약속한 4·5 합의문에 담겨 있다. 북한 경제시찰단의 서울 방문과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도 마찬가지다.

남북 교류·협력 실천 탄력 받을 듯

고속정 인양·을지연습 등 변수도 많아

북한이 30만t의 식량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틀 논의하기 위한 긴급 추진위 개회가 우선순위로 놓일 공산이 커졌다. 대북 지원 여력을 조성하려는 정부 발걸음도 바빠지게 됐다.

아무튼 오는 12일 서울 7차 장관급 회담에서 이런 실행과제의 선추관계가 합의되면 남북간 당국 대화와 민간교류는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15 민족통일대회, 부산아시안게임, 9·8 남북 축구대회, 경제시찰단 등 북한 인사들의 남한 방문이 속속 이뤄지게 돼 남북의 방북이 위주였던 남북교류도 균형이 잡히게 된다.

이런 북한 측의 대남 접근 의지가 대외관계 진전과 맞물릴 경우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이상적 국면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이봉조(李鳳朝) 남측 대표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경제관리 개선 조치 등 대내외 변화 모색을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남측이 종결 발언에서 "7차 장관급 회담은 향후 몇개월, 그리고 그 후 몇년의 남북관계 침사진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점도 짐작어볼 대목이다.

◇합의이행 탄력 불을까=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많은 합의가 기대를 부풀렸지만 상당부분 공수표가 되버린 남북관계의 부침을 감안할 때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마무리를 위한 참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이 앞서 여섯차례의 장관급 회담 때 필요했던 실무접촉이

남북 관계 향후 일정

- ◇8월
- 5일 서해교전 침몰 해군 고속정 인양 시작
- 6일 북한·유엔사 정찰교 8일(민변)하
- 7일 북한 김수로 남측소 본세공사 착공
- 12~14일 7차 남북 장관급 회담(서울)
- 14~17일 8·15 민족통일대회(서울)
- ◇9월
- 8일 남북 축구경기대회를
- 21일 5차 이산가족 교류 방문(금강산·예성)
- 29일 부산 아시안게임 북측 참가
- ◇이달
-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
-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차
- 금강산관광 활성화 2차 회차
- 북측 경제시찰단 서울 파견

란 디딤돌까지 만들어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비무장지대(DMZ) 관련 사안이 대부분인 합의이행에 북한 군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변수다. 서해교전 유감 표명을 둘러싸고 북한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불안요소다.

합의이행에 도사린 북경(伏兵)도 적지 않다. 당장 5일 시작할 해군 고속정 인양과정에서의 남북 긴 줄물기 농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또 북측이 참가할 서울 8·15 행사나 오는 19일부터 치러질 을지군사연습도 북측이 시비를 걸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북·미관계로 가기 위한 정거장 정도로 여기는 구태에서 벗어났다면 남측에 볼 수 있다. 이영준 기자

<yjlee@joongang.co.kr>

“사전접촉으로 관심사 합의 회담진전 발판 마련”

■ 이봉조 남측대표 문답



의하게 된다.

-상봉 장소와 한다는 것 자체는 합의된 건가?
=그렇다.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문제는 누가 먼저 꺼냈나?
=4월 초 임동원 특사 방북 때 특사가 먼저 제기한 바 있다. 아시아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북측을 초청하는 뜻을 전달했다. 이런 노력에 대해 북측이 참가 의사를 밝힌 것은 화해협력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서해교전 재발 방지 노력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나?
=그렇다. 북측은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금강산/공동위차단

-실무 접촉 성과는?
=경제협력단 남북관계에 활기를 불고, 관계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동안 6차례 장관급회담이 개최됐지만 사전예비회담 성격의 실무 접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전 접촉을 통해 상호 간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날짜도 합의됐나?
=7차 장관급 회담에서 논

한겨레

2002. 8. 5(월)

‘유감표명’ 시종 일관한 北
‘도발사과’ 끝내 못짚은 南

장관급 회담 실무그룹에서 북측측은 예상외로 부상관 ‘도발사과’를 줄여왔지만 정작 6·25 시해교선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전화회의문의 ‘유감 표명’ 수준으로 일관했다.

교전 이후 첫 남북 장관급 회담인 이번 접촉에서 남측은 일단 수석대표 단독 접촉을 통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다 상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2일 대표단 출발 직전 “접을 것은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3일 전체회의 기초발언을 통해 거칠 유감을 표시하고 함께 재발방지에 노력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우리 대표단은 설명했다.

북측은 이에 앞서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유감 표명’을 공식적으로 진지한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원갑은 이날 “북측이 일단 이 수준에서 사과의 뜻을 수용해달라고 ‘유감’이란 것이 아니었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동합의문에는 이 내용이 명문화되지 않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북한은 남북 실무그룹이 열리고 있는 3일에도 노동신문을 통해 “시해교선의 책임은 미국과 남한의 호전세력에게 있으며 북반반계선(NLL)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정부는 6일 열린 예정인 북한과 유엔사간의 장성급 회담이나, 이번 실무그룹에서 합의한 군사당국자회담에서 핵심적 치밀과 재발 방지 등을 계속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군교위 관계자는 “교전 이후 고적상태인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어떤 형태라도 보다 진전된 북측의 사과 표현이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갈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윤성호기자 ysh1005@donga.com

南北관계 복원 일단 ‘순풍’

● 실무접촉 결산·회담전망

남북이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북한 선수단의 부산 아시안게임대회 참가 및 철도·도로 연결 및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할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와 이산가족 등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긴장된 남북관계의 복원 계기가 마련됐다. 남측 대표인 이강조(李尙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이번 합의는 그간 정체됐던 남북관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앞으로 관계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랑했다.

◇실무접촉 내용=남북은 실무접촉에서 남북 경제협력·인도적 분야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등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의 남북대화할 진공기로 했다. 남북은 우선 오는 12일부터 장관급회담을 열어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개성공단 건설·인진강 수해방지 등 논의할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 개최 ▲북측 경제사립단 파견 ▲금강산관광 활성화 위한 제2차 당국회담 개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4차 남북직접회담 개최 및 제5차 금강산 이산상봉 논의도 장관급회담에서 진행됐다. 북측은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와 9월 남북국가대표 축구경기 개최도 약속했다.

그러나 시해교전 관련 내용이 공동보도문에 명기되지 않았다.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측은 이번 접촉에서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북측도 수석대표 기초발언을 통해 지난 7월25일 진공문에서 밝힌 유감표시와 재발방지 언급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평가 및 장관급회담 전망=통일부는 공동보도문 발표 직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북·미, 북·일 대화량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대외관계에 대한 태도변화는 남북국간 대화복원의 전제적 배경으로 작용했다”면서 “북한의 경제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외부지원 및 기술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금강산 실무접촉 합의내용 (※는 새로운 내용)

- 제7차 장관급회담 8월12~14일
- 제7차 장관급회담 의제
 -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 일정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당국회담 개최
 - 북측 경제사립단 파견
 -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시기
- 제4차 직접회담 개최일정과 5차 이산가족 상봉
- 제14회 부산아시아인게임 북한 참가
- 8·15 38선상시 및 9월 남북 축구대회 북대표단 남산 파견

▶ 남측 “탄력받을 것” 기대뿐구
순항여부 장관급회담 가늠야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어도 좋다”고 말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실무접촉에 임하는 북측 자세 등 곳곳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낙관하게 하는 징후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이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 군사적 신뢰구축에 성의할 보임 경우 장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등과 같은 남북 경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제4차 남북 직접회담에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한편 5차 이산상봉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장례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순항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번 합의문 내용이 부산아시아인게임 북한 참가 외에는 이동원(林東源) 특사 방북 때의 현안사항을 외환이하고 있는데다 “허기로 했다”는 식의 미대항으로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합의에선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압기 많은 사임을 거론하며, 북한이 상의있게 임할지 미지수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향후 남북관계의 전로는 7차 장관급회담에서 가늠이 집합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욱기자

국민일보

금강산 2박3일 표정

남북 실무접촉 대표단은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기 훨씬 전인 4일 새벽 대부분의 합의사항을 이끌어낸 뒤 공동보도문 문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대표단 분위기는 지난 3일 수석대표 단독접촉 직후부터 눈에 띈 경도로 밝아졌다.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양측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장관급 회담 일정과 현안에 대한 양측 입장이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자 대표단 전체회의는 오후 3시 30분부터 다소 느긋하게 진행됐다.

이번 분위기는 실무접촉 기간 내내 양측

3일 양측 수석 단독접촉후 분위기 호전
북측서 회의 통보없어 한때 긴장하기도

대표단이 식사할 길아 남 것에서도 짐드러났다. 첫날 공동민한 이후 공식적인 공동식사 일정아 없었는데도 두 대표단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며 “오랜만에 만나니 친할수록다”는 말을 주고 받았다. 북측 대표단은 전체회의 중간중간 “회담 분위기가 좋다”는 말뿐 아니라 “임동원 특사 때의 4·5 공동보도문 이행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의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양측은 당초 예정됐던 3일 밤 전체회의를 볼 갖지 않았다. 이때부터 사실상 대부분의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의 시간에 대해 북측에서 아무런 통보가 오지 않자 우리 대표단은 한동안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전 11시과 다사던 기뻐한 전체회의는 30분 뒤에 열렸다.

전체회의는 직전에 이미 양측이 공동보도문을 초안에 서로 의견을 없었기 때문인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보도문에 들어간 단어까지 다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은 10분. 또 1시간30분 공동보도문이 양측 보도진에게 일제히 배포된 뒤 임동원 북측 연락관은 남측 기자들에게 웃음 띤 얼굴로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양측 대표단은 금강산이던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공동 점심식사를 했다. 우리 대표단은 오후 2시30분쯤 마중 나온 북측 대표단의 인사를 받으며 출발할 때로 강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경호기자 procol@kmbk.co.kr

북, 교류협력 적극적 의지 표명

■ 남북 실무접촉 합의 안팎

이달 중순부터 대규모 대표단 줄줄이 남북-북미-북일 동시 대화구도 마련

금강산에서 2~4일 열린 7차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은 북쪽이 전과 달리 교류협력에 적극적 태도를 보인 점이 특히 눈에 띈다.

북쪽 선수단이 제 14차 부산 아시안경기대회(10월20일~10월14일)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남쪽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청해 왔지만 단번을 피해 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모처럼 북쪽의 '대화 현역'과 그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문재는 여초 실무대표접촉의 여상 합의 의제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인데다, 북쪽이 7차 장관급 회담 합의 내용으로 제시해도 손색이 없는 비중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8~10월 중 8-15 민족통일대회(14~17일), 9월 남북축구(대표팀) 경기, 경제사찰단 파견 등 북쪽의 대규모 대표단이 줄줄이 남쪽으로 오는 문재는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북쪽은 지난해 9월 5차 장관급회담 이후, 국제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수로 사업과 관련된 것을 빼고는 단 한차례도 남쪽에 오지 않았다. '북쪽은 남쪽에 오지 않는데 우리만 만날 울라기며 팔러다니냐는 비판 여론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

의향	시기	내용
7차 장관급회담(서울)	8월12~14일	2차 김정은총리, 북측 경제사찰단 파견, 금강산관광 활성화 위한 2차 당국회담, 군사 당국자 회담
8-15 민족통일대회(서울)	8월14~17일	북측 대표단 총 1000명 서울 방문
북-일 적십자회담	8월 중순	북측 일방인적 교환방안 협의
북-일 국교정상화	8월25일 (평양)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협의
북-미 고위급회담(평양)	8월말 (이르런)	재정비 지원 미국무부 통이대담담 차관부 발행
남북축구경기대회(서울)	9월7일	북측 대표팀 서울 방문
5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	추석 즈음 (추정)	4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시가미양)
제14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	9월29일~10월14일	북측 대표팀 참가, 북측선 선의 북측군 등 시선 실무접촉

환 사업과 4차 적십자회담 개최에도 합의를 한 것은 북한이 남쪽내 여론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북쪽의 이런 적극적 태도 변화엔 △북·미, 북·일 대화를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대외관계에 대한 태도 변화 △북한의 경제관리 방식 개선

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외부 자원·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실무대표 접촉으로 임종권 대통령 특사 방북으로 합의한 '4·5 공동선언'의 이행 입장은 7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날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 회의 기간의 미국, 대. 북 북사 파견과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합의 등 한반도 정세안정에 필수적인 남북, 북·미, 북·일 사이의 동시·병행 대화 구도가 차리를 갖춘 셈이다.

깜깜이었던 서해교전 문제는 일단 6일 일일 정상급 회담에서 한차례 길러갈 전망이다. 재방방지를 포함해 북방안계선 문제는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등에서 군사적 상호 신뢰구축 문제 등과 함께 폭넓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세훈 기자 nomad@hani.co.kr



남북 장관급 회담 실무접촉 회담의 북측 대표(왼쪽)와 금강산어관 직원들이 4일 귀환길에 오른 남북 대표단을 배웅하고 있다. 금강산사진 공동취재단

아시아경기 성화 '백두·한라' 동시채화

북 선수단 350명 파견 예상
정부 단일팀 구성 타진키로

이번 금강산 남북 실무접촉으로 남북 체육교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회조직위는 북한이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3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은 1998년 방북대회 때 301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그러나 북한이 선수단 파견 때 메달 획득이 유력한 동북에만 국한해 파견할 가능성

도 커 선수단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 북한이 남쪽에서 열리는 국제 종합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선수단을 공식 파견키로 한에 따라 정부는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도 조심스럽게 타진할 계획이다. 정대환 문화관광부 차관보는 "북한의 대회 참가 자체가으로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정도

로 의미가 큰 것"이라면서 "이들 시 일 안에 남북 단일팀 구성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성화 봉송로 제공 등 한안 타진에 치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참가 규모를 파악함과 동시에 단일팀 구성 문제 등 현안 협의할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 된 성화 채화는 9월5일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동시에 채화할 예정이다. 대회 조직위는 이를 뒤인 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협회 행사까지 계획하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또 조직위는 북한 선수단의 숙소로 4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마련하고, 별도의 수송계획도 짜고 있다. 이밖

에 남북한 선수단의 동시 입장, 북한 교역단 등의 개회식 공연 참가 등 각종 공식 행사에서도 교류가 잇따를 전망이다.

그런 점에서 9월8일 삼일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북 축구대표팀 경기는 아시아경기대회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체육 교류를 알리는 '개막선' 냄새가 날 것이다.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한반도는 또다시 남북한이 같이 참가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경제와 이념을 떠나 스포츠로 7천만명이 하나가 되는 자리를 보여주는 감동의 현미담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무 기자 kkm100@hani.co.kr

한겨레

2002. 8. 5(월)

푸짐한 합의 보따리... 문제는 실천



4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실무접속 전체회의에서 이종조(오른쪽) 남측 대표와 최성이 북측대표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과 지난해 2월 까지 5차례의 판문점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지뢰제거와 한 군사보장 등 원론적인 합의를 본 상태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12-14일 장관급 회담을 기점으로 대우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8-15 서울 민중통일대회, 9-8 남북 축구대회 등 민간행사로 탄력을 받은 남북관계는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할 2차 서울 경제추진위와 금강산 유류 회담 등 리외 양국회담에다 5차 금

■ 南北장관급회담 전망

남북이 4일 금강산 실무접속에서 내놓은 공동보도문 내용은 서해교전 등으로 동결된 남북관계할 임동권(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특보 방북 시의 4-5 합의 단계로 복원한 것이다.

북측은 부산 이시인제임(9월29-10월14일)에 참가하기로 했고 무려 1년 6개월 만에 4차 직접자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기로 정정 합의했다.

‘군사당국자 회담’ 의제 채택 진전

南北관계 서해교전前으로 회복

北 ‘말따라 실천따라’ 가능성 배제못해

금강산 상설 면회소 설치 등 세부은 인도적 시안을 논의할 장이 겨우 마련된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특히 남북이 7차 장관급 회담에서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문제를 의제로 올려 놓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군사회담을 통해서 간접의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재(DMZ)를 넘는 주요 경제 시안을 이 합의를 담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2000년 9월 1차 국방장관 회담

어느 때보다 강한 대화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말 따르, 실천 따르’ 형태를 포디시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임기 말의 남북의 시정국 북측의 협심 태도가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7차 장관급회담 실무접속 합의내용

- ▶ 장관급회담: 8월12일-14일 서울 개최
- ▶ 의 제: 남북철도-도로 연결, 2차 금강산 유류회담, 개성, 북측 경제시안, 판문점 북측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4차 적십자회담 개최, 5차 이시인제임 등

- ▶ 북측 부산 이시인제임 참가 합의
- ▶ 8-15 서울 협사, 9-8 서울 남북축구대회 지원

인적교류 '큰 물길' 기대

• 北 아시안게임 참가 의미·전망
| 南 개최 국제경기 사상 첫 참여 주목
北 평화의지 과시 '이미지 개선' 뜻

2~4일 진행된 남북장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다음달 29일부터 열리는 부산 아시안경기대회(9.29~10.14)에 북측 선수단이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 남측은 공동 보도문에서 "제14회 부산아시안경기대회에 북측이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은 이에 관의를 보장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북측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북한은 베이징아시안경기대회(1990년)·바르셀로나올림픽(92년)·예를렌다올림픽(96년)·방콕아시안게임(98년)·시드니올림픽(2000년) 등에 모두 참석했으나 유독 서울에서 열린 아시안경기대회(86년)·올림픽(88년) 등에는 불참했다. 이번 합의는 90년 통일축구와 99년 통일농구 이후 중단됐던 남북체육교류가 재개되게 된다는데 1차적 의미가 있다. 남북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선수단 동시입장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를 본격적인 체육교류로 연

결시키지는 못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남북한 본격적 체육교류로 이어지는 한편 사회·문화 등 각종 분야의 인적교류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과거 북측이 아시안게임에 200명이 넘는 선수단을 파견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산상봉에 이어 또 한차례 대규모 남북간 인적교류로 기록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공식화하면 예기는 아니지만 20개 종목에 출전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산상봉이 3~4일인 반면 아시안 게임은 15일간 진행되므로 최대규모의 인적교류로 짐할 만하다.

북측의 아시안경기대회 참석은 지난 4일 압동연(林東源) 특사가 방북시 제기했으며 아시안경기대회 조직위에서도 초청의 뜻을 전달하는 등 정부의 꾸준한 실행으로 이뤄졌다. 남측 대표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북측 관계자들은 '성화 제화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사람이 하느냐 자동차가 하느냐'고 질문했다"면서 "처음부터 아시안경기대회에 관심을 가진 듯했다"고 말했다.



남북장년급회담 실무대표의 남북 이봉조 대표(오른쪽)가 4일 오전 금강신아관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최성익 북측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김경신 /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은 이번 기회를 자신들의 평화의지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것 같다. 북한이 현재 미국·일본과의 관계진전에 힘을 쏟는 만큼 아시안경기대회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전시키려는 카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는 대규모 북측 선수단의 입국에 그동안 진행됐던 어떤 남북한 체육교류보다 파괴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남북 당국간에 대세적 합의가 이뤄진에 따라 오는 20일 모나코에서 남

측 김운용(金雲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북측 정웅 IOC 위원간의 회담에서 주요한 제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대안체육회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스포츠 무대에 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은 전부터 있었다"면서 "북측 선수단의 참가로 변화의 제곡간에 불쾌했던 아시안게임이 세계 언론의 눈길을 모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욱기자 wood@kbs.com

국민일보

'北 손님맞이' 최대 경호작전 돌입

조직위, 물샴 틈 없는 준비

부산아시안경기대회조직위원회(BAGOC)가 '북한 손님'을 맞이 위한 대대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95년 대회 유치 이후 북한 참가를 관망하게 유도해온 조직위는 남으로부터 북한 참가가 농성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밑그림을 그리왔다. 그러나 시드니조직위원회에 머물러있던 가장 첫 상인이 4일부터 실제상황으로 돌변하자 관계자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진순내 조직위원장 "북한 참가가 이미 예상하고 모든 대책을 세워놓은 상태"라며 "북한선수단 규모와 수송방안, 안전장비 등

전세버스·선수촌 따로 마련

만일 사태 대비 접촉 최소화

출전경비 조직위서 전액부담

여 관련된 북측의 요청사항 등은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업,홍보본부장은 "장관급 회담이나 20일 모나코에서 김운용 IOC 위원과 정웅 북한 IOC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남북 체육관계 회담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단"고 말했다.

○규모 및 안전대책=조직위는 방콕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와 임원 등 총 301명이 참가할 것을 감안, 이번 대회에는 350명 정도의 대규모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만에 하나 북한선수단 안전에 위험이 생길 경우 대폭운임에 승리를 남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위는 안전동계본부의 주도하에 철저한 준비를 위한 경호 작전을 위한 강도높은 반복훈련을 할 방침이다.

○수송=그동안의 남북한외간관계에 따라 선수단, 보도진, 예술단 등을 위한 별도의 강운차를 운행하고 각 차량별로 운전요원을 고정 배치한다. 참가 선수들은 선수촌과 경기장을

오갈 때 국가·종목 구분없이 모두 서플라이를 이용하지만 북한 선수 임원 등은 안전을 위해 특설요원 집속을 피하도록 할 예정이다.

○숙소=해운대구 연여동에 위치한 아시안게임 선수촌내에서 별도의 숙소가 제공된다. 조직위는 북한 선수들만 불편없이 묵을 수 있도록 350명이 두숙할 수 있는 43세대의 선수촌 아파트를 특별히 준비해놓고 있다. 북한선수단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배지한다. 조직위는 방한 예술단을 위한 별도의 호텔도 시킨다. 최대한의 편의를 위한 배려는 계속이다.

○성화봉송=백두산과 한라산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방식이 합의됐다. 9월6일 평문참에서 성화의 성화봉송을 한 다음 전국을 돌아 부산으로 내리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남북 분열을 청산, 평민족의 일임을 한껏 살린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출전경비=북한 출전 경비는 조직위에 시 전액 부담한다. 43개항개국 중 예외적인 케이스이다. 한영권기자 bkhan@kmb.com, kr

철도·도로 '軍분야 합의' 관심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이 성과를 거둬 따라 장관급 본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및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우선 장관급회담이 열리면 남북한은 임동원 특사 방북때 나온 4·5 공동보도문 6개 합의사항을 토대로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기대 이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장관급회담이 열린 경우 협지원, 개성공단 건설, 경제시찰단 파견 등 자신들의 경제난 다개탈 위해 도움이 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나올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북측은 남한내 보수층으로부터 "계속 퍼주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을 고려한 듯 관심을 잘 만한 맞가지기를 합의해왔다. 본회담에서도 이런 배려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장관급 본회담에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할 것으로 보는 것은 상당한 전망이다.



이봉조 남한 대표(오른쪽)와 최성익 북한 대표가 4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전체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전력지원등 교류·협력 활성화 예고

군사적 신뢰구축 위한 국방장관회담도 추진

실무접촉에서 정한 회담 의제는 의제일 뿐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철도 및 도로연결 - 우리측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 남북은 동쪽의 동해선 철도와 도로, 서쪽의 경의선 철도와 도로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연결키로 이미 합의했다. 그러나 이밖 위해서는 남북한 군국외의 군사보장 합의서 서명 발효가 선행돼야 한다. 가능성이 높은 경의선 연결을 위해서는 북한 군의 군사 시설 기반공사가 재개돼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동해안 도로와 철도 연결도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남북 경험 방안 - 북측이 바라는 문제이기도 한 임정부본 합의점일 가능성은 높다.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는 임특사 방북때 5월7~10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해 놓고 북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장관급회담에서 인장이 잡히면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등을 이 회담에서 논의하게 된다. 개성공단 문제는 남측 사업자인 현대와 토지공사, 북측 사업자인 조선 아시안테평양평화위원

장관급 회담 의제와 남북 입장차

주요 의제	남측 입장	북측 입장
남북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	즉각 개최	분위기가 상숙이 우선 과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식 즉각 착수	군사적 이해보장 우선
개성공단 건설	북측이 경제특구 지정해야	남측이 지원관련법 정비해야
임진강 공동수해 방지대책	남 포함 시찰 즉각 건설	군사분계선 문제이므로 '군사담판' 국한 협의 필요
금강산관광정상화 2차 남북회담	동해안 도로·철도 연결공식 즉각 착수	남측의 금강산 관광지원책 필요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원형	분위기가 되면 간다
남북군사당국자회담 재개	즉시 개최	남측의 주적개념 바뀌어야
이산가족 상봉	상봉 상시화	최신지회담에서 인장 논의

회담 논의가 1년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필요가 트일지 주목된다.

남북한은 2000년 9월 열린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협추진위를 설치키로 해 같은 해 12월 평양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전력협력 등을 비롯해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의 문제를 토의했다. 정점이 됐던 전력협력 문제와 관련, 남측은 전력상황에 대해 정보교환, 실태조사 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우선 지원부터 하라는 입장이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남북관계 악화로 연기돼 온 쌀 30만t을 지원하는 문제와 5월 중 시행키로 했다가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도 장관급회담에서 깊이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밖에 민간선박의 영해 통과, 동해 공동어로, 남북한과 러시아 철도 및 가스관 연결 문제

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당국자회담과 금강산 관광 활성화 = 우리 정부는 경의선 인강, 금강산 유로개설에 필수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자 회담을 이른 시일내 개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역시 임특사 방북때 논의됐던 사항이어서 국방장관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에 선 또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자회담 개최 방안도 모색될 전망이다. 6월로 예정됐다가 무산된 것이다. 이 회담이 열리면 금강산 관광특구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과 학생 등 1300만명에게 관광경비 참 보조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는데,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북한이다.

신창호기자 procol@kmbi.co.kr

남북 대화·교류창구 '풀가동'

남북 실무접촉 대표단이 12~14일 서울에서 제7차 장관급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개최, 군사적 신뢰구축,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을 강조한 의제로 다룬 직후 경추위, 남북군사실무회담 등 각 분야별 회담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은 다음달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의외의 성과도 만들어냈다.

이같은 합의는 향후 한반도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미·중·일 등 주변국가들의 지지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북한측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지난 4월5일 임동원(林東源) 특보의 방북시 만들어낸 합의를 지키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세가 우려되어 이번 실무접촉 합의가 실질적 남북간 진전으로 확실히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관급회담 첫 실무접촉 7차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성과와 장관급회담 의제·전망

미국·중국·일본등 주변국가의 지지 근거 마련

'군사신뢰' 진전·이산상봉 정례화 기대감 고조

지 전통문 교한 형식이 아니라 예비회담 성격의 실무접촉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로 얼굴을 맞대며 의제를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실무접촉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장관급회담 준비의 전행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남북경제협력 급진전 가능성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이미 합의했던 경의선 등 남북 철도·도로 연결 문제와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제협력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를 주제로 채택한다.

특히 지난달부터 북한이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경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경제시합단을 파견하는 등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원하고 있으며, 남한 역시 통일비판을 대폭 절감할 기회인 만큼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급진전을 이끌 소지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4차 직접회담이 개최되고 9월21일 추석쯤 금강산에서 5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북측이 지난달 유감 표명 전보문에서도 언급함으로써 만남이 점쳐질 여지도 있다. 직

접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서신교환 등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 2월 5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관공장에서 열리게 된다. 회담에서 북측의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남북합의한 추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민간 교류 및 대북 쌀 지원 북측은 14일부터 이달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8·15민족통일대회에 100여명의 참가인과 함께 북측 교외인 사도 보낼 예정이다.

특히 장관급회담 직후에 열리는 만큼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쌀 지원 문제는 회담 공식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장관급회담을 거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북측에 주는 '신분'로 쌀 30만~50만톤 지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복삼기자 yangtan@kdsily.com

본회담 앞서 실무대표들 의제 조율

장관급회담 준비 국제 관례 첫 적용

이모저모

이번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북한은 대화 의지를 보여줬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서해교전' 부담을 안고 시작한 양측 접촉은 시종 수월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시종 무호적 분위기 임동원 특사 방북 이후 4개월여만의 당국회담인 이번 실무접촉에서 남북한은 성과도 출몰 사진에 약속이나 한듯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지난 2일 남북한은 예정에 없이 점심식사와 만찬을 함께 하기도 했다. 남북은 4연 세력 사실상 대부분 합의사항을 이끌어낸 뒤 같은 날 오전에는 공동보도문을 문안작성에 들어갔다.

당초 7차 장관급회담 일정 정도만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3일 밤부터 분위기는 급진전됐다. 북측 관계자들은 공공연히 "큰 보따리를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4일 오전 11시50분 양측 수석대표는 차례로 북측의 부산 아시아안 게임 참가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북측 대표단은 "그 정도면 만족할까."라는 질문을 기자들에게 하기도 했다. 북측 회담의 수석대표는 "그쪽이 만족한다니까 저도 만족합니다."며 흡족한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남북한 접촉도 국제관례로 남북은 장관



4일 제 7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을 마친 이봉조(왼쪽) 남북 대표기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금강산에서 손을 떠나며 회담의 북측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급회담을 앞두고 사전 실무접촉에서 의제 달랐고, 미리 후회 본회담에서의 큰 합의의 결을 만들어냈다.

이전 장관급회담 본회의에서 양측이 갑론을박하다가 시간이 늦게, 조급한 합의본을 만들어내던 것과 달리 이번 본회담은

부담국자는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회담'에서 실무회담이 만나 본회담에서 논의하고 합의할 내용을 미리 조율하는 국제 관례를 남북간에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7차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2002년 8월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었다. 접촉에서 남과 북의 대표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데 기초하여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2002년 8월12일부터 14일까지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순차에 따라 서울에서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다음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① 이미 합의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제협력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문제, 금강산관광 합성회담 위한 제2차 당국회담 개최문제, 북측 경제시합단 파견 문제,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4·5 공동보도문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 확정문제.
 - ② 제4차 남북 직접회담을 개최하며,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4. 쌍방은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이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은 이에 편의를 보장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서울 민족통일대회와 9월 육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돕기로 하였다.

2002년 8월 4일 금 강 산

南北 장관급회담 일정 의제 합의

'햇볕정책' 마지막 시험대

남북한이 제7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다시 분개도에 오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합의는 최근 북한이 취한 경제개혁 조치,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북미-북일대화 등과 맞물려 북한이 개방을 가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김종재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실무 접촉성과에 대해 "제7차 장관급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확정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원상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북미-북일 대외를 전진시키려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우선적으로

남북간 대화를 촉진하리라는 한걸음 배개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각에서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남북문제에 관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송광대 전 통일부 차관은 "이번에는 북한이 장관급회담에 나온 것 같다"면서 "경제개혁 조치에는 실재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합의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북한이 9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측은 이에 화답하듯 '이여 편의를 보장하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포함시켰다.

관북질을 전후해 서울에서 열리는 8·15 민족통일대회의 9일 남북친선

축구대회 등 민간단체간 행사를 적극적으로 돕자고 합의한 것도 이채롭다.

특히 9월 축구대회는 부산아시아안 게임 북한 참가와 함께 남한에서 조성된 월드컵 분위기를 한반도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데 활용하는 계 획이어서 남북간 체육교류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활기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7차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한 의제는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기존 합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남북 협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협추진 위원회, 금강산관광 당국 간 회담, 북한 경제시찰단 파견, 남

북군사당국간 회담 등을 지난 4월 임종환 특사가 방북해 합의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론을 펴는 사람들도 북한의 태도가 '경제단'에 따른 것임을 들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짐치기 위해선 이들 문제를 논의할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나타날 북측 태도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실무접촉에서 합의된 시장의 실천여부가 고사위기가 빠진 정부 '햇볕정책'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회하자'고 합의한 것이 주목된다.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대표적 창구인 적십자회담을 북측이 받아들인 것은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라도 이해할 수 있다. nypk.com

개성공단등 경험 재개 추석 이산상봉 가능성

□ 남북 공동보도문 요지

남과 북의 대표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데 기초해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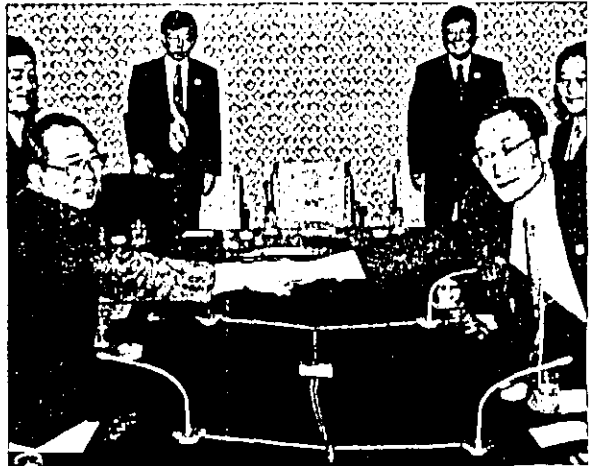
-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 까지 서울에서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한다.

-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는 아시아 협의회 남북 협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제협력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문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개최 문제,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문제,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 재개 문제를 비롯해 4·5 공동보도문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 확정 문제 △제4차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며, 금강산에서 제2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천하는 문제 등을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이 참가하고 남측은 이에 편의를 보장하며 적극 협력한다.

-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와 9월 축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돕기로 한다.



4일 오전 금강산연계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종조(오른쪽) 남북대표와 최성호(왼쪽) 북측대표가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北선수단 200명 넘게 올듯

남측대표 귀환 일문일담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마치고 귀환한 남측 대표단은 4일 방상장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은 일문일담 내용.

- 아시아안게임에 북측이 얼마나 참석하나.

▲북측 대표단으로부터 20개 남북 참가할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일부 언론에서 최대 350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200명이 넘는 인원이 부산까지 오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월드컵 축구 경기대회가 끝났고 아시아안게임도 잡 마무리되면 코리아 브랜드가 올

리갈 것이다.

-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는 어떤 경로로 오나.

▲베이징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다른 가능성도 있고... 돌아가는 것은 항공편을 이용해 민간인들과 함께 갈 것 같다.

- 서해교전 언급 중 북이 지난달 25일 보내온 건화물지문 이상은 없나.

▲3일 오전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서해교전에 대한 사과, 제방방지책 마련, 책임자 처벌 등 우리측의 일관된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이 남북한 안전 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전세회의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南北관계복원 '출발은 순조'

금강산 실무접촉 합의문 의미-전망

중단됐던 남북장관급회담과 부산아시아안게임 북측 참가 등 5개항이 전격 합의함으로써 일단은 남북교류가 다시 급진전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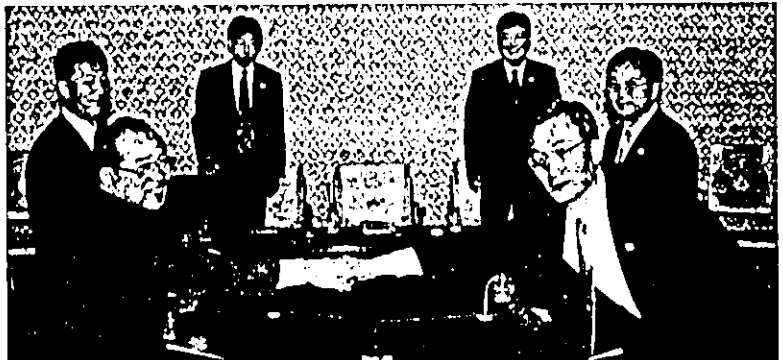
이번 합의는 최성호(崔成浩) 외교통장관의 뉴욕방언과 서해교전으로 단절됐던 남북관계가 임종권(林東淸) 특사 방북 당시로 원상회복하는 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그동안 참가여부가 불투명했던 아시아안게임과 8

했던 협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제협력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문제를 논의기로 했다.

또 금강산관광 합성회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과 북한의 경제사찰단 파견문제, 군사당국자회담 재개 등도 합의키로 결정, 사실상 남북중 조율하는 문제만 남게 된다.

4·5공동선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7차 남북직접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북 문제 5



손잡은 남북대표

4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전체회의에서 남측대표인 이봉조(오른쪽) 통일부 정책실장과 최성호(왼쪽) 외교통장관이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때 악수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군사당국자회담 재개등 의외의 성과 서해교전 사과 제대로 못받아 비판론 "전례 비추어 끝까지 가봐야" 지적도

15공동성서 및 9월 남북선선 축구경기에 대한 협력을 강조, 남북관계를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분야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과거 진례에 비추면 남북관계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비판론도 많다.

서해교전과 관련, 북측의 지난 달 25일 진화봉지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측은 회담 내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북측은 유감표시와 재발방지 노력만을 재확인했다.

결국 출발선수 하나로 남북관계가 난항을 겪었던 과거 예를 비추어볼 때 서울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보여준 북측의 태도가 향후 남북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번 합의에서 '4·5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실행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는 남북이 그동안 합의하고도 실천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해 있고, 실무접촉 성격상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밀의한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진전'을 우리 정부가 북측에 일관되게 요구한 데서도 드러난다.

남북은 12~14일 서울에서 열리는 7차 장관급회담에서 이미 합의

한 이산가족상봉을 갖는 한편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산상면회소 설치 등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북한이 부산아시아안게임에 참여키로 결정, 90년 통일축구와 99년 통일농구 이후 중단됐던 체육교류가 재개되는 전환점이

1. 양방은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키로 하였다.
2. 양방은 순차에 따라 서울에서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하기로 하였다.
3. 양방은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다음의 문제들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남북 공동보도문

① 이미 합의한 남북 협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제협력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문제, 금강산관광 합성회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개최 문제, 북측 경제사찰단 파견 문제, 남북 군사당

합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1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8·15공동성서에 남북이 적극 지원하는 데도 합의, 지난해 '민경대파문'으로 얽혀온 민간성업은 동안세들의 교류도 적극적인 협조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차례 장관급회담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예비회담 성격의 '실무접촉'이 의외의 성과를 거둬야 할 후 회담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김기홍기자 kidong@spt.co.kr

국사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4·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 확정 문제.

② 제4차 남북 직접회담을 개최하며,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4. 양방은 제14차 부산 아시

아경기대회에 북측이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은 이에 권의를 보장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양방은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서울만민축합대회'와 9월 축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돕기로 하였다.

합의안	주요 안건	비고
7차 장관급회담 (8.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 - 남북협도 및 도로연결 - 개성공단 건설 - 임진강 수해방지 금강산관광 2차회담 북측 경제사찰단 파견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재개 제5차 이산가족 상봉 제4차 남북직접회담 	4·5공동선언 이행
14회 부산아시아안게임 북한 참가 (9.29~10.14)		남측, 권의보장
8·15공동성서 및 9월 남북선선 축구대회 참여 약속		양방 노력

시장개혁 도움얻기 '몸짓'

北 '적극대화' 배경

금강산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전례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일관, 그 배경이 주목된다.

최성익 북측 대표는 3일 전체회담 입장을 미루고 남측 대표인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과 예전에 없던 접촉과 오찬을 하면서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북측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제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외부자본 및

기술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성장(鄭成長)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통남(通南)-통미(通美)-통일(通日)'로 요약되는 일련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시장개

만(의 쌀 문제도 북측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단군으로 꼽힌다.

북한이 서두르는 이유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훈담방을 위한 사전정치작업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 연구위원은 "남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들여다보며 환영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군사당국자 회담에 응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합의내용에 강한 이행 의지를 보여줬지만 '이행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으로 만만찮다.

류길재(柳吉在)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올 것은 예상됐었다"며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며 장관급회담이 열려 합의사항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광용(金光用) 한양대 아대지역연구센터 교수는 "김대중(金大中) 정권에 기대를 접은 북한이 남한의 장권교체를 대비한 국면전환용"이라며 "클린턴에서 부시로 바뀌면서 당했던 총력을 교훈삼아 장권이 바뀌더라도 후퇴하지 않을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 의도가 역력하다"고 설명했다.

/조정진-김기동기자
jj@sgt.co.kr

쌀문제도 무시못할 '당근' '南정권교체 대비용'분석도

혁 조치 때문"이라며 "자본과 자원의 내부공급에 한계가 있는 북한이 남한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해져 간단한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달걀 30만~50

한국경제

2002. 8. 5(월)

철도 연결·개성공단 건설등

南北경협 '탄력' 붙을듯

장관급회담 합의 의미

남북이 7차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열기로 함에 따라 지난 4월 임동원 특사 방북 이후 4개월만에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반향이 미려졌다. 특히 북한이 부산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기로 한 것은 민간 교류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 배경=북한은 이번 실무접촉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주목받는 것은 대북 쌀지원금 논의하게 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합 장관급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북한으로선 식량 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또 김합추진위 회의를 겸

제시장단의 남한 파견을 서두르는 것은 최근 북한이 취한 경제관리 방식 개선 조치할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남한의 자본·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합추진위에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문제도 협의하게 된다.

부산아시안게임의 북한 참가 문제는 우리 대표단들도 예측 못했던 사안이다. 북한이 민간 차원의 교

류 협력 폭을 체육·문화 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걸림돌 없다=남측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서해교전에 대해 보다 심의 있는 조치를 북측에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유감 표시와 제갈 방지 노력을 표명했지만 공동보도문에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미 지난 1일 서해북방한개신(NLL) 문제 등과 관련, 유엔사와 장성급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이는 군사 관련 문제는 남한이 아닌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뜻으로 접수 있어 우리측이 이 문제 담 제기할 경우 회담 순서가 어리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남북 공동보도문 주요내용

항의안	주요 내용
·7차 장관급 회담 개최 (8.12~14, 서울)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 개최 논의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입장간 수해방지 -금강산 관광 2차회담 개최 논의 -북한 경제시찰단 파견 논의
·북한,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9.29~10.14)	-남측, 변의보장
·8.15 서울민족통일대회 및 9월 남북 축구대회 (민간차원행사)	-남측, 적극협조

부산 아시안게임 오는 북한

南개최 국제대회 첫 참가
우리측이 출전경비 부담

선수단 350여명 파견

북한의 2002 부산아시안게임 참가 결정은 남북 체육교류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북한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남북을 오가며 일했던 통일축구대회(90년)와 통일농구대회(90년) 등 단일 종목의 이벤트성 교류에는 응했다. 또 91년 일본 지바세계탁구선수권과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2000년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 등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의 남북 교류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등 국내에서 열린 각종 국제대회는 철저히 외면해 왔다.

북한의 참가로 부산아시안게임은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 43개국 모두 참가하는 사상 최초의 대회이자 1만3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게 됐다.

북한의 선수단 규모는 98년 방콕아시안 게임에 파견했던 301명보다 늘어난 350여 명이 될 것으로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는 예상하고 있다. 북한 체육은 90년대 이후 지속된 심각한 경제난으로 하락세이지만, 96년 애틀랜타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계순희를 보유한 여자유도팀 비롯해 여자축구, 여자탁구, 역도, 사격, 체조, 레슬링 등 예선 아시아 정상권을 유지하고 있다.

4일 통일부로부터 북한의 참가를 홍보받은 조직위원회 손연(孫烈) 홍보본부장은 "북한이 이제까지 공식적인 불참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참가할 경우에 대비해 숙박과 교통 대책을 별도로 세워 놓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 선수단 숙소는 해운대구 반여동의 아시안게임 선수촌 내에 별도로 마련되며, 선수촌과 경기장을 오가는 전용버스도 준비해 경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북한의 출전 경비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직위에서 전액 부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남북화합의 장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성화를 9월 5일 백두산 친지와 한라산 백록담에서 동시에 채화해 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합화(合火)할 것을 북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기자 haksoo@chosun.com

경향신문

“北 서해교전 거둬 유감표명”

• 이봉조 남측대표 문답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금강산 실무접촉 남북 이봉조(李鳳朝) 대표는 4일 오전 금강산에서 북측과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실무접촉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실무접촉 성과는.

“금번 실무접촉 합의는 그간 정체됐던 남북 관계에 활기를 넣고 앞으로 관계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이산가족 상봉장소와 행사를 갖는다는 것

“막힌 남북관계 활력기대
쌀지원 문제는 추후 거론”

은 합의된 건가.

“그렇다”

- 아시안게임 참가문제는 누가 먼저 꺼냈다.

“4·5 일등원 특사 방북시 특사가 먼저 제의한 바 있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연평측에서도 북측 참가를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다.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도 북측을 초청하는 뜻을 전달했다. 북측이 이번 접촉을 통해 참가

의사를 밝힌 것은 화해협력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실무접촉에서 어려움은 없었다.

“서해교전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전한 데 대해 북측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회담 초반에 쌍방의 쟁점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접촉에서는 논쟁을 지양하고 얘기하고 협의할 것을 협의한다는 입장에 따랐고 북측도 거둬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 쌀지원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 접촉이 7차회담 준비를 위한 것이고 지원문제는 경험위가 열려야 북측이 거론한 것으로 본다”

금강산 / 공동취재단

北, 체육교류 적극적

남북한의 금강산 실무집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북한 스포츠교류에 관한 합의다. 북한은 오는 9월29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아시아게임에 참가하기로 했다. 또 민간차원에서 이미 합의된 9월8일 남북축구대회 서울 개최도 재확인했으며 이에 우리측은 적극 돕기로 했다.

부산아시아게임에 북한이 참여하게 되면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공동입장한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게임 참가·축구대회-

국제적 관심 환기 효과

단일팀등 향후 접촉 주목

로 국제대회에서 남북 스포츠 공조가 성사되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참가할 경우 부산아시아게임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남북축구대회까지 성사될 경우 남북교류 협력의 폭이 한층 넓어지고 남북간 신뢰·협력 분위기를 재고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번 실무집회에서 스포츠교류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게임 참가 문제와 남북축구경기 문제는 지난 4월 입동원 특사 방북시 남북합의사항에 들어있지 않은 대목이다.

북한이 아시아게임 참가를 결정한 것은 남한대 대북 비판이붙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당국은 6월29일 서해도발로 인해 북한이 우리의 월드컵 성공 개최를 방해하려 했다는 남한대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축구협회장이 서해교전 직후 우리의 월드컵 4강 진출에 대해 축전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시아게임 참가를 통해 이런 비판여론을 희석시킴으로써 대북 경제지원을 얻어내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로서는 월드컵을 계기로 한 국민여너지 결집에 도움이 될 때가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번 남북합의를 토대로 축구 단일팀을 비롯한 아시아게임 공동선수단 구성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자가 앞으로의 관심거리다. 또 지난 1990년 10월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지 12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축구대회가 경례회할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다.

그러나 북한의 아시아게임 참가는 원론적 합의를 이룬 것인 뿐 성사되기까지는 감입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이후 남북관계에 비취할 때 북한이 언제, 어떤식으로 합의를 껴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구체적 입장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측이 더욱 탄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익구기자 egkim@kmb.co.kr

경향신문

선수·임원·심판 350명 ‘매머드급’

· 北참가규모와 전력

부산아시아게임에 참가하는 북한선수단은 간판선수들을 모두 포함하는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경제난이 심화된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 입상가능 선수들만 파견해 왔지만 이번에는 참가명단이 만족화해 및 몰입기반 조성인 만큼 상황이 다르다.

또 아시아게임의 경우 올림픽과 달리 지역예선이 없어 출전지역에도 문제가 없다.

현재 부산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가 추정하는 북한선수단 규모는 임원(301명)을 포함해 4년 전 방북대회 파견인원(301명)을 훨씬 넘는 20개 종목 350명 수준이다.

이들 가운데 국제경쟁력이 있는 종목은

여자유도·역도 ‘막강파워’

남자는 격투기·사격 강세

주로 여자종목들이다. 먼저 계승희(52kg급)와 리경옥(48kg급)이 버티고 있는 여자유도는 세계 정상급이다. 국제무대 데뷔장이었던 96에틀렌트 올림픽 48kg에서 일본의 유도영웅 다무라 료코를 누르고 금메달을 따낸 계승희는 체급을 올린 뒤에도 98방콕아시아게임과 2001세계유도선수권을 제패했다. 리경옥 역시 충분히 금메달을 노려볼 만한 북한유도의 차세대 기대주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결승에서 다무라에게 무세한 경기력을 펼치다 판정으로 석패했지만 가능성만은 인정할 만했다.

전통의 강세종목 여자탁구도 아직 견제한다. 예이스 김현희를 앞세운 북한 여자탁구는 지난해 4~5월 세계선수권에서 중국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 김은미는 세계랭킹 2위 리주홍을 3-1로 꺾기도 했다. 김현희는 지난해 2월 영국으로 여자단식 준우승, 여자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축수도 아시아정상급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12월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중국과 일본을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고, 지난 4월 불가리아에서 열린 알베나컵 국제축구대회에서도 러시아를 3-0으로 꺾고 우승했다. 특히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 득점왕(15골)인 리금숙과 진별희, 조성숙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시드니올림픽 58kg급 은메달리스트 리성희와 지난 4월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48kg급 인상 세계주니어신기록을 세운 최은성이 버티는 여자역도도 금메달이 유력하다.

지난 대회에서 한국에 3-0으로 완승한 소프트볼과 여자미리본 은메달리스트인 김창옥도 북병으로 평가된다.

남자종목에선 격투기와 사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 그레코로만형 54kg급에서 우승한 강영균은 아시아게임 금메달이 유력하며, 복싱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아시아크레이슬선수권 남자 스키트란제전 우승의 주역인 박남수가 있는 사격도 강세 여망된다.

이밖에 체조에서도 지난해 베이징유니버시아드대회 여자 평점 금메달리스트인 손은희와 남자 안마에서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우승자 배남수의 후계자로 꼽히는 김현일이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김석기

20여 종목 350여명 올듯

■ 부산아시아안 북한선수단 규모

부산아시아안게임 참가 의사를 밝힌 북한은 '350여명'이라는 매머드급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아시아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남녀축구 38명, 여자핸드볼 16명, 남녀농구 12명, 탁구 10명, 복싱 9명 등 20여개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축구나 농구 등 구기종목에도 참가해 인원이 96명족이 시안게임 때의 301명보다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방북대회 때 금메달 7개를 따내 종합 8위를 차지했지만 2000시드니올림픽에서는 '노골드'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대회를 '아시아 스포츠계의 다크호스'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삼을 전망이다.

우선 남자축구는 66일글랜드월드컵에서 8강

신화를 이룬 뒤 전반적으로 참체기를 겪고 있다. 지난 2월7일 약해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조직력과 수비에서 허점을 보이며 1-2로 패하는 등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최강인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우승한 여자축구는 이번에도 무난히 금메달을 딸 것으로 예측된다.

96방북대회 때 금메달 3개로 최고의 '금갈'이 된 사격은 이번에도 북한에 혼자 노릇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아시아클라이밍 선수권 남자 스키트 단체전 우승의 주역 박남수와 여자 스키트 3위였던 박장만이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또 여자유도에서는 96대륙권타올림픽의 영웅 계순희가, 여자역도에서는 시드니올림픽 58kg 은메달리스트 리상희가 금메달 획득을 노린다. ●이두걸기자 douzr@kddaily.com

1990년 통일축구대회로 '물꼬'

■ 남북 체육교류 역사

북한이 부산아시아안게임 참가를 선언함으로써 남북 체육교류사에 새 장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크고 작은 교류가 이어져 왔지만 어치잡 대규모 선수단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남북 체육교류 물꼬가 트인 것은 90년 10월11일(평양 5·1경기장)과 23일(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열린 남북 국가대표팀간 통일축구대회, 90 베이징아시아안게임 도중 현지에서 양측에 의해 전개 합의된 통일축구대회는 분단국가간 교류리는 상징성으로 인해 전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통일축구의 열기는 이듬해 4월 일본 자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에서의 역사적인 단일팀 구성으로 이어졌다.

'코리아컵'으로 합쳐진 남북연합팀은 '아리랑' 합창 속에 현정화 이분화 유승복이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9연패를 노리던 중국을 3-2로 누르고 극적인 우승을 일궈냈다.

남북의 자력은 2개월 뒤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재연됐다. 남북은 그해 6월16일 A조 예선 1차전

에서 조인철(당시 평양체대)의 결승골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1-0으로 제압한데 이어 2차전에서는 최철(평양체대)의 동점골로 북경 아일랜드의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남북은 8강전에서 브라질에 1-5로 졌지만 코리야의 위용을 마음껏 뽐냈다.


이후 스포츠 교류는 행동인 단결상태에 떠났다. 90년 친선농구경기를 통해 재개됐다. 현대 남녀농구단과 북한의 우희(남), 최오리랑(여)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친선전을 벌였다. 최근의 업적은 2000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 실현된 남북한 동시입장. 당시 남북은 대형 한반도기 1개를 앞세우고 메인스타디움으로 들어서 감동을 자아냈다.

●박해욱기자 hoo@kddaily.com

부산 아시아안게임 북한 참가 일정

일시	내용
2001.10	대외공식초빙장 북한에 발송
2001.10	김대중대통령, 북한 참가 위한 범정부적 지원 약속
2002.4	양측팀 정부 측사, 북한 방문해 대회 참가 요청
2002.6	조직위원회장 회의와 대표참가 요청서문 현정화 합체 선공
2002.8.4	북한 대표참가 확정

■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실무접촉 결과

합의사항	주요내용	일정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8월12~14일, 서울)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 개최 (노동, 도로건설, 개성공단 건설, 일인원 수해방지 등) 공강신군중 합성화 2차 당국회담 북측 경제시정안 피견 군사당국지도원 재개 저스시 남북 적십자회담 재개 저스시 이산가족 공강신 순차상봉	7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 체결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8.15 서울인류문화대회 9월 축구경기	북측 대표단 참가 및 남북의 편의제공 협력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9월29일 ~ 10월4일, 부산 8월15~16일 9월, 서울

남북 체육교류 새 이정표

■ 北 부산아시아안게임 참가 의의

축구는 새달8일 상암구장서

북한이 오는 9월2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기로 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및 민간 체육교류에 새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북한은 국제경기인 아시아안게임에 참가해 평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남북한은 우선 오는 20일 모나코에서 남북의 김은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북측의 장준 IOC 위원간 회담을 통해 남북한간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BAGOC)는 우선 북한의 출전 경비를 전액 제공키로 했다. 참가 인원이 350여명이어서 경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북한이 참가하면 대륙별 종합경기에 불과한 아시아안게임이 세계의 눈길을 모을 초특급 이벤트로 승화될 수도 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남북이 합의한 백두산-한라산 성화 채화

도 상징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후속 조치 실행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직위는 부산아시아안게임장에서 다오를 성화할 9월5일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에서 동시 채화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9월7일 만문침 공동 경비구역을 통해 이송한 백두산 성화를 한라산 성화와 합화(合火)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북측과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다. 조직위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안전 대책이다. 이 때문에 북한 선수단에 대해 사상 최대의 경호작전을 벌일 계획이다. 북한 선수들을 위한 별도의 수송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수촌과 경기장을 오갈 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게 보통이지만 북한 선수들에게는 따로 전세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축구협회는 남북이 오는 9월8일 남북 축구대표팀 대회 개최를 공식화함에 따라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축구협회는 다음달 8일 오후 7시 서울 상암구장으로 경기 장소 및 시간을 결정하고, 이달 말쯤 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해욱 김수경기자 hoo@kddaily.com

국민일보

2002. 8. 5(월)

선수단 350여명 파견 '명예회복'



북한 참가규모와 전력

북한은 2002년 시드니 올림픽과 98년 북아시아인 게임 참가를 만회하기 위해 이번 부산아시아인 게임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8년만에 아시아인 게임에 모습을 드러낸 방콕대회에서는 종합 8위(금7 은14 동12개)에 그친데 이어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노골드(은1동2개)에 머물며 종합 60위로 추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북한은 시드니 올림픽 후 이번 아시아인 게임 참가에 대비, 스승에게 열 버들을 위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아시아인 게임 조직위원회가 추정하는 북한선수단 규모는 임원 4명, 심판 10명, 방콕대회 파견인원(371명)을 훨씬 넘어선 35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전력은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 참가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은 남미리본, 유도, 역도, 복싱, 레슬링, 사격 등 전통적인 메달종목에서 여전히 남한과 맞먹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자마리본, 여자 유도, 여자역도 등 몇몇 종목에서는 세계정상급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무더기 금메달을 노리는 종목은 레슬링과 여자 유도, 복싱.

올림픽에 첫 출전한 72년 민선대회 이후 금 2, 은 2, 동 2개를 획득할 정도로 레슬링은 북한이 자랑하는 전통의 메달밭이다.

시드니 올림픽 그레코로만형 54kg급 동메달리스트 김용준과 자유형의 진주동(54kg), 이경상(58kg), 조웅상(63kg) 등이 유력한 금메달 후보들이다.

여지유도서는 96년 폴란드 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계순희(52kg)와 2001년 세계유도선수권 45kg급 준우승자인 이경옥,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한 차현황(48kg) 등이 금메달 사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싱시는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김은철(남자 라이트플라이급)을 앞세워 금빛 수확에 도전한다.

여자마리본도 북한이 자랑하는 종목 중 하나다. 북한은 99년 세계육상선수권을 제패한 정성옥이 은퇴했지만 여 대회마다 4등밖의 새로운 스타를 배출할 정도로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다.

베이징유니버시아드 하프마리본 금메달리스트이자 시드니 올림픽 8위에 오른 함봉삼과 98년 북아시아인 게임 은메달리스트이자 유니버시아드 동메달리스트인 김장욱이 선두주자다.

일부 구기종목에서도 북한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제12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시드니 노골드 수모 이후 체계적 준비 유도 계순희등 세계정상급 선수 다수 전종의 메달밭 투기종목서 선전기대

최근 남·북한 국제대회 성적

	98 방콕 아시아인 게임	2000 시드니 올림픽	2001 하계 유니버시아드
남	금 7, 은 14, 동 12 총 33개	금 1, 은 11, 동 11 총 23개	금 1, 은 11, 동 11 총 23개
북	금 7, 은 14, 동 12 총 33개	은 1, 동 2 총 3개	금 1, 은 1, 동 2 총 4개

서 세계최강 중국과 일본을 잇고 있다고 평가되는 여자축구는 이번 아시아인 게임에도 금메달이 유력하며, 2월 월드컵에서 16년만에 우승한 남자축구는 월드컵 4강 개최를 앞둔 남한과 금메달을 놓고 가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시드니 올림픽 여자역도 53kg급에서 여섯개 은메달에 머물렀던 이성희와 국제역도연맹(IWF)이 발표한 2002년 전반기 세계랭킹 1위인 여자 45kg급의 최은삼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들이다. 김진용 기자 jdkim@kmb.co.kr

世界日報

2002. 8. 5(월)

北선수단 350여명 올دت 조직쫓, 경비 전액 부담

부산 亞洲게임 北출전

북한이 4일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부산아시아인 게임에 참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한 체육교류가 크게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 4명 포함해 350여명의 대규모 북한 선수단이 한꺼번에 국내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이번 아시아인 게임은 지금까지의 어떠한 남북 체육교

류 참가 43개국 중 유일하게 북한의 출전경비 전액을 부담해줄 예정이다.

이전까지 남북 체육교류의 대표적 성과물로 꼽히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여자 단체전 우승이나 91년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 단일팀 출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동시안장 등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본격적인 체육교류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 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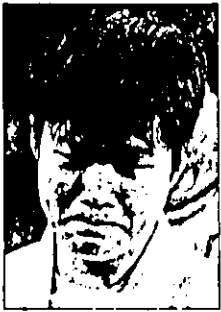
6월까지만해도 응답없다 입장 돌변

南개최대회 첫참가- 체육교류 활기

류보다 엄청난 파급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아시아인 게임 조직위(BA-GOC)는 지난해 9월 아시아올림픽픽업위원회(OCA) 43개 회원국에 초청장을 발송한 데 이어 지난 6월21일 북한에 참가를 제차 권유했지만 응답이 없어 북한의 불참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 변화는 어쨌든 남북 체육교류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종합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회 조직위는 이번 대회

이후 처음 이뤄진 90년 북한측 구단의 서울 방문, 99년 현대남녀농구팀의 평양 방문과 북한 남미 농구팀의 서울 답방 등은 단일 종목의 이변이상 교류 성격이 강했다. 당시 통일농구대회에 출전하느라 서울에 온 북한 농구스타 리명훈에 대해 국민들이 보였던 엄청난 관심을 감안하면 부산에 올 북한 선수들의 움직임은 국민적 관심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부산아시아인 게임은 한일 월드컵 못지않은 국민적 열기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박병현기자 bonanza7@sgt.co.kr



계순희



정성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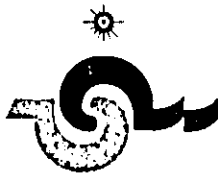


이성희

유도 계순희·마라톤 정성욱·역도 이성희

‘北女 3스타’ 온다

아시안게임 참가 북한전력



북한이 부산아시안게임에 참가키로 함에 따라 북한 선수단의 전력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최고 스타는 여자 유도의 계순희(23)다. 계순희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여자 유도 48kg급 결승에서 일본 유도의 간만 다무라 료코를 꺾고 금메달을 따내면서 북한 최고의 임운으로 떠올랐다.

52kg급으로 체급을 옮긴 뒤 출전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베르테치아(쿠비)와의 준결승에서 허연창은 판정으로 저 동메달에 그쳤지만 지난해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다시 금메달을 따내 발군의 기량을 과시했다. 여자 48kg급의 차현향도 수준급 선수로 꼽힌다.

여자 탁구에서는 김현희(22)가 돌보인다. 세계 랭킹 11위인 김현희는 지난해 카타르 오픈 여자 단식에서 중국 선수를 꺾고 우승했다. 김현희의 복식 파트너는 김향미(23)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 랭킹 2위 리주(중국)를 꺾어 패란을 일으킨 김윤미(20)도 기량이 급성장했다.

시드니올림픽 여자 역도 은메달리스트 이성희(24)는 58kg급의 1인자다. 용상 세계기록(1백31.5kg)보유자인 이성희는 시드니올림픽에서 작전 실패로 어이없게 금메달을 놓친 뒤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면 중국의 천안 킵·첸사오민과의 접전이 예상된다.

구기 종목에서는 여자 축구와 여자 소프트볼이 강하다. 여자 축구는 지난해 아시아선수권에서 세계 최강 중국(준결승)과 일본(결승)을 잇따라 격파하고 우승해 값지 않은 세계 여자 축구사에 한 획을 그었다.

탁구·사격·체조·투기종목 강세 男 레슬링 강영균 등도 金 후보

이금숙(21)과 진별희(22)는 여자관 '호나우 두-히바우두'로 불리는 최고의 투법. 이금숙은 15골로 이 대회 득점왕에 올랐고, 중국전에서 두 골을 터뜨린 진별희는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경기력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난 말연니 조선옥(28)의 활약도 눈여겨봐야 한다. 90년대 중반 이후 경쟁적으로 육성된 여자 소프트볼도 중국과 일본의 발목을 잡을 유망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최고의 영예인 '공화국 인웅'의 칭호를 받은 여자 마라톤의 정성욱(28)도 아직 한역으로 뛰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욱은 99년 세계

북한 역대 국제종합대회 성적

▶여름 올림픽

연시	장소	성적
2000	시드니	금 0 · 은 1 · 동 3(60위)
1996	애틀랜타	금 2 · 은 1 · 동 2(33위)
82	비호셀모나	금 4 · 은 0 · 동 5(116위)
88	서울	불참
84	LA	불참
80	모스크바	금 0 · 은 3 · 동 2(26위)
76	몬트리올	금 1 · 은 1 · 동 0(24위)
72	헝가리	금 1 · 은 1 · 동 3(22위)

▶아시안게임

1998	방콕	금 7 · 은 14 · 동 12(8위)
94	히로시마	불참
90	베이징	금 12 · 은 31 · 동 39(4위)
86	서울	불참
82	뉴델리	금 17 · 은 19 · 동 24(4위)
78	방콕	금 15 · 은 13 · 동 15(4위)

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해 북핵에 납뽀 못지 않은 마라톤 입봉을 얻었다. 북한 남자 선수들은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이 처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54kg급의 강영균을 비롯, 사격 서킷 종목의 박남수, 체조의 김현일 등은 금메달에 도전할 만한 선수로 꼽힌다.

박남수는 지난해 아시아(그레)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북한의 단세전 우승을 이끌었다. 김현일은 92년 비호셀모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네 김수의 후계자로 각광받고 있다. 강병철 기자

<honger@jijunrank.co.kr>

부산 아시안게임 북한도 참가한다

서울경제

2002. 8. 5(월)

남북장관급회담 12일부터 서울서

양측 실무접촉 5개항 합의

북한이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다.

또 개성공단 건설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과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7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남북한은 4일 오전 금강산역관에서 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양측 실무대표 접촉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항 합의시행을 발표했다.

남북은 이날 전체회의 후 공동보도문에서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이 참가하기로 하고 남측은 이에 편의를 보장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어 "8월12일부터 14일까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장소는) 순차에 따라 서울에서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34면

남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장관급회담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밖에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와 9월 축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돕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남북은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개최문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개최,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東亞日報

2002. 8. 5(월)

北선수단 최소350명 올듯 조직위서 경비 전액 부담

北아시아경기 참가

북한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결정은 남북 체육교류 역사상 최고의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북한은 90년 통일축구와 99년 통일농구 때 서울에 선수단을 파견한 것을 비롯해 91년 일본 지바의 세계각국선수권대회와 포르투갈의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2000년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에는 합의했지만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최소 350여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못지 않은 전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대회의 경우 경제난에 따른 소수정예 원칙을 지켜왔지만 이번 대회 때는 98년 방콕대회의 파견 인원(선수 195명 포함 총 301명)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북한은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친선경기 개최에 합의한 남자축구를 비롯, 방콕대회 은메달을 딴 여자 축구와 남녀농구, 소프트볼 등 구기종목과 사격 체조 유도 레슬링



시드니올림픽 남북 동시입장

"북한이 온다." 북한이 분단 후 처음으로 남한에서 열리는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결정했다. 2000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운 채 함께 입장하고 있다.

태권도 북측은 아시아 정상권의 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BAGOC)는 정부의 협력을 받아 43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북한의 경비를 전액 제공할 예정. 북한 선수단의 숙소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아시아경기 선수촌 내에 따로 제공되며 사상 최대

의 경호작전이 펼쳐지게 된다.

특히 조직위는 성화를 9월5일 백두산 천지와 할라산 백록담에서 동시에 점화해 이를 뒤인 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연산적인 합화(合火) 행사를 치른 뒤 3주일간 전격을 돌고 나서 29일 부산항에 도착한다는 밀그룹을 마련했다.

장환수기자 zangpabo@donga.com

北출전경비 조직위 전액부담

선수단규모 350명 '해외출전 사상최대'

■ 부산아시아게임 참가

북한이 4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 실무대표 접촉에서 오는 9월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참가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선수단 규모와 이들에 대한 내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부산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BAGOC)가 추정하는 북한선수단 규모는 임원과 심판을 포함해 4년 전 방콕대회 파견인원(301명)을 훨씬 넘어선 350명 수준이다. 이는 북한이 가장 최근 참가한 국제 대회인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 하계 유니버시아드(115명)는 물론 96년 애틀랜타올림픽(70명)과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105명) 때에 비해 훨씬 많다.

선수단 규모가 큰 것은 남녀 농구, 탁구와 배구, 소프트볼, 배드민

턴 등 구기종목 참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 북한 선수단의 출전 경비는 이번 대회 참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 43개국 중 유일하게 BAGOC에서 전액 제공한다. 북한 선수단의 숙소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아시아게임 선수촌 내에서 따로 제공한다.

조직위는 43개국의 선수촌 아파트를 특별히 준비했다.

별도의 수송 대책도 마련된다. 아시아게임 참가 선수들은 선수촌과 경기장을 오갈 때 나라와 종목 구분 없이 모두 셔틀 버스를 이용하지만 북한 선수들은 전세버스를 이용하게 된다. 조직위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안전 대책. 안전 문제본부의 주도하에 사상 최대의 경호 직원을 할당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부산아시아게임 참

가는 남북한 체육교류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분단 이후 크고 작은 체육교류가 있었지만 한국에서 여는 종합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 북한은 86년 서울아시안게임은 물론 올림픽 사상 최대 참가국수인 기록한 88년 서울 올림픽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남북한 체육교류의 대표적 성과물로 꼽히는 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이나 세계청소년 축구 단일팀 출전,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동시 입장 등은 모두 외국에서 이뤄진 일이다.

또 90년 북한 남녀 농구대표팀이 서울을 방문, 친선경기를 갖는 등 북한 선수들의 한국 방문도 드물지 않았으나 여전히 단일 종목에서 이벤트성 경기에 국한됐다.

/김진영기자 eaglek@sed.co.kr

世界日報

2002. 8. 5(월)

사격-女축구-탁구등 亞정상권

AG 북한선수단 규모-전력

북한이 4일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에서 부산아시아게임(9월29~10월14일) 참가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북한의 종목별 경기력과 참가규모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아시아게임 참가경정으로 이번 부산아시아게임은 사상 최초로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CA)소속 회원국 43개국이 모두 참가해 1만2000여 명이 출전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대회가 될 전망이다.

◆경기력=북한은 투기종목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사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난이 심화돼 각종 국제대회에 대규모 선수단의 파견을 자제하고 입상 가능한 소규모 정예부대만을 출전시켜온데다 많은 대회에 불참해 정확한 종목별 경기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도 태권도 레슬링 복싱 등 투기종목과 역도 체조 마라톤 등에서는 한국에 뒤지지 않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북한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사격 여자축구 남녀농구 소프트볼 탁구 등은 아시아 정상권

로 평가하고 있다. 시드니올림픽 여자역도 58kg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던 리선화와 여자 48kg의 최은심, 지난해 베이징유니버시아드대회 여자펜싱 금메달리스트 손은희와 남자 안마의 김현일, 애틀랜타올림픽의 영웅 계순희(여자유도) 등이 유력한 금메달 후보들

투기종목 강세...350명 정도 참가 성화 백두-한라산에서 동시 채화

이다. 탁구 여자복식의 김현희-김현미, 단식의 김현희도 금메달 경쟁을 벌일 만한 선수들이다. 이밖에 98년 방콕대회 때 금메달 3개를 따내 한국(금 2)을 능가하는 성적을 냈던 아시아올림픽선수권 남자 스키트 단체전 우승의 주역 박남수와, 같은 대회 여자스키트 3위였던 박정란 등 몇몇 선수들이 메달 획득을 노리고 있다.

북한은 98년 방콕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2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8위를 차지했으며 94년 히로시마아시아게임에는 참가했다. 90년 베이징아시아게임에서는 금메달 12개, 은메달 31개, 동메달 39개로 중국 한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선수단 규모=우선 9월 남한과 친선경기 개최에 합의한 축구와 한때 남한을 방문했던 농구 등 구기종목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 선수와 임원

을 합해 20여개 종목 350명 가량의 선수단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북한 선수단 규모가 임원과 심판을 포함해 4년 전 방콕대회 파견인원(301명)을 넘어선 35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베이징 하계유니버시아드에 115명, 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 70명,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 105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조직위 대책=북한 선수단의 숙소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대회	기간	내용
남북통일축구대회	90년 10월	서울 평양 상호방문
제4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91년 4월 (일본 지바)	단일팀 출전, 여자단 체전무출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91년 7월 포로투일	예선실력
현대 남녀농구 월드컵	99년 9월	2차례 친선경기
북한 남녀농구 월드컵	99년 12월	.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	2000년 9월	.

위치한 아시아게임 선수촌 내에 탁구 선수들과 떨어져 별도로 제공되고, 탁구 선수들이 셔틀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 선수들을 위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등 특별한 수송대책도 마련된다.

조직위는 북한 선수들이 목을 수 있도록 350명이 부속할 수 있는 43개국의 선수촌 아파트를 특별히 준비해 놓았다. 또 조직위는 북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호 직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성화 채화=오는 9월5일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에서 나란히 아시아게임 성화를 채화하는 우리측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였다. BAGOC는 남북에서 채화된 성화들 7일 관문길 공동 경비구역에서 합화(合火)한 뒤 8일 의정부를 출발, 7500여명의 봉사자들이에 의해 21일간 16개 사도를 도는 4210km의 대정전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경호기자 rsflush@sgt.co.kr

사상최대 南北 스포츠 교류

北 아시안 게임 참가 의미

북한의 부산 아시안게임(9월 29일~10월 11일) 참가는 남북한 스포츠 교류 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꼽힐 만하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이리저리 스포츠 교류를 해왔지만 이번 만큼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의 단일팀 출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동시 입장 등은 역대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최대 성과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 무대는 모두 외국이었다.

90년 통일축구, 99년 통일농구대회에서 북한 선수들이 한국 땅을 밟은 적이 있지만 이는 단일종목의 이벤트성 경기에 불과했다.

남북한 어느 한쪽에서 개최하는 국제 종합경기대회에 다른 한쪽에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는 이 변화는 차원이 달랐다.

과의 공간에서 제한된 종목에 걸쳐 제한된 인원으로 이뤄지던 남북한 스포츠 교류가 새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43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하는 완벽한 대회가 됐으며, 국민적 관심은 일본 세계 언론의 눈길을 끌잖아 볼 국제적 이벤트로 떠올랐다.

북한이 어느 정도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할지는 미지수다. 오는 30일이 선수단 엔트리 마감일이어서 그때까지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4일 북한이 20개 종목에 걸쳐 2백여명을 보낼 것으로 추정했다.

BAGOC는 4일 유입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자 대부분이 출근해 선수단 숙소·교통·안진 등 대회 운영에 대한 검토에 몰입했다. BAGOC 관계자는 이미 북한이 참가할 경우와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회 진행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짜놓았기 때문에 혼선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0년 9월 15일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중앙포토】

北 20개 종목 선수단 200명 보낼듯

聖火는 백두·한라산서 동시 채화

북한의 참가 건비는 OCA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BAGOC가 전액 제공한다. 참가 건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다. BAGOC는 해운대구 반여동의 선수촌 내에 최대 3백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북한 선수단 숙소를 특별히 준비했다.

북한 선수단을 위한 별도의 수송 대책도 마련된다. 아시안게임 참가 선수들은 선수촌과 경기장을 오갈 때 국기와 종목 구분없이 모두 서플버스를 이용하지만 북한 선수들의 경우 전세버스를 이용하게

된다. 심밀요한 진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로 성화 채화 및 봉송 계획이 더욱 눈길을 끌게 됐다. BAGOC가 세운 시나리오에 따르면 성화는 9월 5일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담대에서 나란히 채화돼 이튿날 7일 관동점 공동검비구역에서 합화(合火)행사를 열고 남한 전역을 순회한 뒤 29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도착한다.

원희수 기자

<goman@joongang.co.kr>

한국경제

2002. 8. 5(원)

南北 체육교류 새장 열린다

북한 부산AG참가 의미

북한이 오는 9월29일부터 열리는 부산아시아게임에 참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남북한 체육 교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분단 이후 크고 작은 남북 체육 교류가 있었지만 한국에서 열리는 종합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원래 국제대회 참가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지만 특히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는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86년 서울아시아게임은 물론이고 올림픽 사상 최대의 참가국수를 기록한 88년 서울올림픽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는 스포츠를 정치적·이념적 선전수단으로 여기온 북한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참가를 체제의 우월성 경쟁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왔던 탓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부산아시아게임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어떤 남북한 체육 교류보다 큰 과장을 일으킬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아시아게임 참가 결정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제한적 공간에서 소수 인원만으로 이뤄지던 남북한 체육 교류는 이번 부산아시아게임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2000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손에 들고 함께 입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이 3백50명 정도의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9월 남한과 친선경기 개최에 합의한 축구를 비롯 농구 탁구 배구 소프트볼 배드민턴 등의 참가

한선수단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조직위는 우선 정부의 협력을 받아 43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북한의 김비를 진에 제공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선수단 350여명 파견 '파격적' 남측, 경비부담 - 全회원국 참가

가능성이 높다. 이중 여자축구와 남녀 농구, 소프트볼은 전력이 아시아 정상권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사격과 유도 레슬링 태권도 복싱 등 남한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 무기종목에도 선수들 대거 파견할 것으로 스포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북한의 참가소식이 전해지자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BAGOC) 관계자들은 휴일인 4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선수단 숙소와 교통, 안전대책을 협의하는 등 북

한 선수단의 숙소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아시아 경기 선수촌 내에 따로 제공하고 안전대책반을 중심으로 대

대적인 검호작전을 펼 방침이다. 특히 조직위는 선화를 9월5일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목담에서 동시에 전화해 이들 뒤인 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합화 행사를 치른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한편 최근 아프가니스탄이 참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 북한이 대회 참가를 확정함에 따라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43개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태 기자 changyt@hankyung.com

'체육교류 물꼬' 의외 소득

■北, 아시안게임 참가 의미

9월29일 개막되는 부산아시안게임(제14회)은 북한의 참가로 명실상부한 아시아인의 대륙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측이 대회에 참가하고 남측은 북한선수단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양측이 4일 합의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참가는 남북 체육교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북측이 남측 주회의 국제 스포츠 행사에 처음 참가한다는 의미가 넘어서는 것이다. 6월 서대교전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는 시점에 이뤄진 이번 결정은 남북화에 찬양기립 한껏 고무시킬 것이 분명하다. 한일월드컵이 입증했듯이 스포츠는 이념을 뛰어넘어 남북 관계 증진목차원에서 접근하는 계기로

南주최 국제스포츠 첫참가 단일팀구성 논의 가능성도

작을할 것이라고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특히 남북단일팀 구성문제에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릴 것이 분명하다. 일단 이달 말까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3개 회원국 중 최후연드리플 부산아시안게임 대회조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단일팀 구성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측간 협의나 선수 선발 과정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일팀 구성은 사실 상 어렵다는 게 체육계의 시각이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해 협 때 북측이 완전히 별개의 팀으로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가

람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처럼 한반도 단일팀을 앞세워 남북안이 공동 입장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또 이날 중순 남북 정관계회담 김교에 따라 일부 종목에 한해 상징적 형태의 단일팀 구성도 논의될 수 있다.

북한의 참가결정은 대회운영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로 불러올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대표단의 규모는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등을 고려했을 때 선수와 임원을 합쳐 대략 20개종목 200여명 인원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비용은 남측이 편의를 보장한다는 합의에 따라 참가국 중 유일하게 대회조직위가 전액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 선수단의 입국경로는 일단 베이징을 경유하는 항공로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북 합의에 따라 직항로나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입국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대회조직위는 북측 대표단을 위해 해운대구 변역동에 있는 선수촌 아파트 33채를 특별히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용기자 hohulik.co.kr

부산 아시안게임 성화 백두-한라산 동시채화

부산 아시안게임을 맞아 동성화가 9월5일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담대에서 동시에 채화된다. 남북 정관계회담 실무협약 관계자는 4일 "북측이 백두산 채화에 초응했다"면서 "다만 성화의 이동경로는 앞으로 더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이 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BAGOC)는 9월7일 남북 정상(頂上)에서 불붙은 성화봉 판문점 광동경비구역(JSA)으로 이송, 합화(火火)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준기자

경향신문

탁구 단일팀 세계 제패 청소년 축구 8위 '돌풍'

■ 남북 체육교류 약사

북한의 부산아시안게임 참가가 그동안 있었던 이랜드심 남북교류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선수단의 한국방문이라는 환경의 남북체육교류라는 의미가 다르다.

그동안 남북한은 축구와 탁구에서 '코리아' 단일팀을 이루는 등 크고 작은 체육교류를 해왔다. 분단이후 첫 남북체육교류의 시작은

1990년 10월11일(경양 5·1경기장)과 23일(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열린 남북 국가대표팀간 통일축구대

90년 통일축구대회로 물꼬

시드니올림픽 동시 입장도

회, 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도중 현지에서 양측에 의해 전격 합의된 통일축구대회는 분단국가간 교류라는 상징성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평양에서 열린 1차전에서는 전반 25분 남한의 김주성이 선취골을 넣었으나 후반 북한의 윤정수가 후반이 되자 골키퍼를 빼어 북한의 승리, 그러나 서울 2차전에선 전반 17분 티진환선수의 결승 헤딩골로 남한이 1-0으로 승리, 사이공계 1승씩 나눠가졌다.

통일축구의 열기는 이듬해 4월 일본 시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에서의 역사적인 단일

팀 구성으로 이어졌다. '코리아팀'으로 명명된 남북은 풀리지 않는 아리랑합창 속에 시작된 남녀 단체전에서 통일된 힘을 과시했고 현정화-리병희-유순복으로 이뤄진 여자단체는 결승에서 9년째를 노리던 중국을 3-2로 누르고 극적인 우승을 일궈냈다.

이어 2개월 뒤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2번째 단일팀을 구성한 남북한은 조2

위로 8강을 달성했고 8강전에서 브라질에 1-5로 패배, 탈출을 꾀했으나

하나라도 코리아의 위용을 한껏 자랑했다.

이후 남북관계 경색 속에 스포츠교류는 단절

상태에 빠졌다가 99년 친선경기기를 통해 재개됐다.

현대 남녀농구단과 북한의 우희(남), 최오리(여)팀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친선전을 벌였다.

북한 선수들의 시용방문은 세계청소년축구 단일팀의 합동 훈련이후 8년 만이었다.

가장 최근의 남북교류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의 남북한 동시입장, 남북한은 대형 현반도가 1개월 앞서주고 시드니올림픽 메인스타디움으로 들어섰다.

김석기



1990년 평양과 서울을 오간 통일축구를 시작으로 남북한은 크고 작은 체육교류를 계속해왔다. 사진은 매년 방콕아시안게임에서 첫 남북대표를 가진 남북한 스포츠별 선수들이 경기구 광동경비원을 뚫린 관중들을 향해 한데 어울려 달려가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자료사진

조직위 "이미 예상했던일 대책 완비"

북한이 부산아시안게임에 참가한다는 담보로 결한 부산아시안게임대회조직위원회(BAGOC)는 4일 남북한의 전격합의를 예상한듯 당당하게 반응했다.

정순택 BAGOC 위원장은 "북한 참가가 이미 예상하고 모든 대책을 세워놓은 상태"라며 "북한의 선수단 규모와 수송방안·안전통제 등에 관한 북측의 요청사항 등은 방콕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우선 북한의 대회 출전 경비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3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BAGOC가 부담하기로 했다.

선수단 숙소도 신변안전과 편의시설을 고려해 부산 해운대구 변역동에 위치한 아시안게임 선수촌내에 별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50명이 묵을 수 있는 43세대의 선수촌아파트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북한선수단 수송대책도 마련했다. 각각 선수들이 나라와 중국에 관계없이 함께 이용하는 세류버스 대신 선수단·보도진 등 전용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각 차량별로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기로 했다. 조직위는 안전통제본부의 주도 아래 북한선수단에 대한 안전대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유신모기자

한겨레

2002. 8. 5(월)

90년 통일축구대회로 물꼬 이듬해 탁구단일팀 우승 패거

남북 체육교류 약사

북한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선언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 체육교류가 활기를 띠게 됐다.

분단 이래 남북 체육교류의 효시가 된 것은 1990년 10월 11일(평양 5·1경기장)과 23일(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열린 남북 국가대표팀간 통일축구대회. 90년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도중 현지에서 양쪽에 의해 전격 합의된 통일축구대회는 29~46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펼쳐진 경품축구의 부활이라는 성격을 띤 가운데 분단국가간 교류라는 상징성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통일축구의 열기는 이듬해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에서 역사적인 단일팀 구성으로 이어졌다. 코리아팀으로 명명된 남북은 남녀 단체전에서 코리아

의 힘을 과시했고 한정화·리분희·유복순으로 이뤄진 여자단체는 결승에서 9연패를 노리던 중국을 꺾고 우승을 일궈냈다.

단일팀의 위력은 2개월 뒤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재연됐다. 남북은 6월 16일 예선 1차전에서 우승후보 아르헨타나를 1-0으로 꺾은 데 이어 2차전에서는 북병 아일랜드와 1-1 무승부를 이루는 활약을 보였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단절상태에 빠졌던 스포츠교류는 99년 친선농구경기를 통해 재개됐다. 현대 남녀농구단과 북한의 우뢰(남), 회오리틴(여)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친선경기를 벌여 북한선수들의 서울방문이 성사됐다. 2000년에는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는 남북이 대형 한반도기 1개를 앞세우고 메인스타디움에 들어가는 동시 입장이 이뤄져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진영 기자

경향신문

2002. 8. 5(월)

월드컵이어 이번엔 '北열풍' 예고

• 북한, 부산아시아경기 참가 전격 결정



남북 동시입장·공동응원등 실현 가능성 세계언론 관심 집중... '단일팀'은 힘들듯

그들이 온다. 북핵방 운동선수들이 남북 땅에 무리지어 넘어온다.

오는 9월 29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제14회 아시아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분단 이후 한국에서 올림픽·아시아경기 등 최고 직인 올림픽 참가가 어렵지만 북측은 남한의 집안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로 인해 아시아경기관련 외환(OCA) 43개 회원국 모두가 참가라는 사상 첫 대회가 상사됐다.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그들은 오지 않았다. 북한은 그간 한국에 개최한 대형 스포츠축제에 초대장을 받고도 참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동양축구' '동양농구' 같은 단명인 이벤트를 통해 남한방문을 허용하는 체육친선을 고수해 왔다.

이번과 제국을 초월한다는 스포츠정신이라고 해도 그들의 이번이 남한에 관심을 쏟으려는 듯하며 남북간의 교류제언할 수 있는 기회로 분석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부산아시아경기 참가 결정은 파격적이면서도 역사적이다. 북한의 변신은 별개의 관심사다. 거기에는 그만한 정치·경제적 이유가 개입되어 있었지만 국내외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계산하기 힘들 정도다.

단순히 350여명 규모의 북한선수단이 추가된다는 차이를 넘어선다. 방상 부산아시아경기엔 아시아인의 대표로서 전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 만한 세계적인 대회로 격상될 전망이다.

북한선수단이 대표를 전수해 20일 이상 체류하면 가장 오래 남한에 머물 북한선수단이 될 것이다. 각 종목에 출전한 북한선수들의 경기력도 관심사가 되겠지만 경기장 밖에서의 발표 활동에도 언론인들의 이목이 집중될 게 틀림없다.

지난 6월 전국을 달군 월드컵열풍이 오는 10월 아시아경기에선 북한열풍으로 재연될 수도 있다. 우리 스포츠팬들에게 뜻밖의 계승(여지유도)·김연희(여지유도) 같은 북한스

역대 아시아경기 남북한성적

연도	남	북	합계	순위
7회(74년) 베이징	16	14	17	6
8회(78년) 방콕	16	15	16	4
9회(82년) 뉴델리	17	19	20	4
10회(86년) 서울				
11회(90년) 베이징	12	31	38	4
12회(94년) 히로시마				
13회(98년) 파리	7	14	12	8

●북한, 7회대회부터 출장

대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도 예견된다. 대표조직위원회는 벌써 북한선수단 북한에 아시아경기엔 이제 국민들의 무관심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북한이 참가를 결정함으로써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이어 남북한 동시입장·공동응원 등 '역대 최인종사'도 실현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박민순 공동대표장은 "외국에서 개최된 올림픽대회에서 좋은 선례를 남긴 동시입장과 공동응원은 이번에도 인식이 합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올림픽때마다 제기된 남북한 단일팀 구성은 이번에도 실현이 힘들어 보인다.

권부원기자 www.kyungil.com

백두·한라산서 성화 동시 채화

7,500여명 봉송 전국 누벼

북한의 참가로 43개 아시아경기관련외환(OCA) 회원국이 모두 참가하는 부산아시아경기엔 남·북 최고봉에서 채화된 성화가 37억 아시아인의 축제를 환하게 밝히게 된다.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동시에 불붙어 남북을 함께 출발하는 성화는 민족정명의 연계를 안고 반문점에서 하나가 된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BAGOC)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부산아시아주경기장에서 펼쳐질 태오를 성화가 민족의 심연인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동시에 채화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다음달 5일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담대에서 나란히 채화된 성화는 이를 묶은 7천 명원천 공동경비구역에서 역사적인 합화(合火) 행사나 갖는 스포츠제전을 통한 또한번의 작은 민족정신을 이루게 된다. 이 행사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에 중계될 예정이다. 이어 8일 의정부를 출발해 남한의 16개 시·도 869개 구역을 거치는 4,240km의 대정정에 들어간다. 성화 봉송에 참여할 7,500여명 주지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조직위측은 남·북한 체육인과 정·관계 인사들을 대시 포함시킬 방침으로 북한측과 이어 연연한 실무협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엔 전국을 일주한 성화는 개막일인 29일 부산 아시아주경기장에 도착한다. 성화 최종주지와 전화자는 개막식까지 절대 보안에 부처진다. 안호기기자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되던 때만 해도 국제체육경기대회에서 만나기만 하면 선수들은 사생결단으로 싸워야만 했다. 다른 나라에는 저도 "북한에만은 이겨야 하고" "남조선만큼은 꼭..."이라는 감격감염에 젖어 선수들은 제대로 시합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남과 북으로 좁어진 혈육이 만나는 현장은 꼭 경기장이었다.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육상계를 휩쓸던 북한의 신금단이 남녘의 아버지를 상봉한 것도 1961년 도쿄올림픽 때였다. 또 '은반위의 해방'으로 불리던 북의 빙상선수 한광화도 삿포로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오빠를 만났고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경기장에서는 서로를 응원했고 선수단조차 위로와

북한 체육



치하에 인색하지 않았다. 어느 누가 국제아이스하키 대회에서는 남북한의 대결했지만 법칙은 북과 4번뿐이었다. 다른 국가팀들이 평균 34번의 범하는 법칙에 비하면 그것은 서로를 아끼는 의도적인 경기였다.

북한이 9월 29일부터 열리는 부산아시아게임에 참가하기로 했다. 남북한전선 축구대회에 이은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다. 북한은 전 종목으로 역대 레슬링 유도 권투 등 격투기 종목에 강하다. 축구는 66년 런던 월드컵대회에서 이미 8강에 오른 만큼 강했지만 지금은 FIFA랭킹 125위(7월 현재)에 불과하다. 매달 국가대표팀간의 경기(A매치) 성적에 따라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국제경기실적이 없는 북한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선수 가운데는 여자선수들인 마라톤의 정성숙과 유도 선수 계순희, 역도선수 리성희가 두드러진다. 한때 체육경기는 남북간의 전우를 대신했지만 부산에서는 "한 뿔줄 한겨레가 / 온통 합창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그날의 환희 다시한번..." 지난 2003년 9월 15일 호주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공동기수 박종철, 북한 유도감독 은복 그 중은은, 북한 여자 농구선수 을 일서은(코리안 선수단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국민일보 자료사진)

북한 참가하기까지

대회 유치때부터 '교섭'

民官 끈질긴 노력 결실

북한의 부산아시아게임 참가 결정에는 정부와 부산아시아게임조직과, 체육계, 각종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남측의 총체적이고도 끈질긴 노력이 뒷받침됐다.

북측 정부에서는 수차례의 남북회담 때마다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고 대한체육회와 아시안게임조직위 등 관련 단체에선 비공식 채널을 통해 참가를 종용해왔다. 또한 각 종목별 단체의 부산 지역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다양한 제스처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대회 유치시부터 시작됐다. 95년에 서울에서 열린 OCA(아시아올림픽위원회)총회에서 부산시는 아시안게임 유치허가까지 북한의 참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공식 표명하면서 OCA에도 도움을 요청한 것. 조직위와 OCA가 오는 30일까지인 이번 대회 엔트

리 최종 마감시한을 북한에게만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게 그 일환이다.

끈질긴 한국의 노력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지난 2000년 7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남북 체육교류추진위원회'. 이 모임은 한국 정부와 체육계, 민간이 한데 모여 끊임없이 북한 참가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제 교섭을 시도했다.

북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남북측의

북, 남북체육회담 재의때

사실상 참가결정 기류 감지

공식적인 움직임은 대회 D-365인 지난 해 9월 29일 아시아 각국에 대한 공식 초청 발송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남측의 이런 노력과 달리 그간 북한의 반응은 별로 시답찮았다. 스포츠장 정치의, 아남적 선전수단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으로 해석됐다. 마침내 지난 6월 21일 대회 조직위는 판문점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회 참가를 권유하는 최후 통첩상 공식 문서를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한국측의 노력이 한되지 않아 이

번 금강산회담이 앞서 북한의 대회 참가를 시사하는 징후가 여러 차례 감지되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정몽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이 김문용 IOC위원에게 남북 체육관련 현안 협의를 위한 회담을 제의해와 부산대회 참가에 긍정적인 해석을 냈었다. 지난해 6월 당시 김문용 대한체육회장과 최계승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일정이 비공개로 북한체육위원회 위원장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낙관하는 노골을 받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

정수익기자 sagu@kmib.co.kr

북한 아시안게임 참가 유도 주요일지	
2000. 9	김문용 대한체육회장과 임성애 부산시장은 시드니올림픽에서 북한 정몽 IOC위원과 접촉 대화 참가 축구
2001. 9	조직위원장 정몽의 공식 초청장 발송 (안성영 부산시장 등 국제경기연맹(GAISF) 총회에서 북한 정몽 IOC위원과 접촉 대화 참가 요청
2001. 10	비정부지원 북한 참가 유도 결정
2002. 4	임성영 특사 북한 방문 대회 참가 요청
2002. 6	조직위원장과 정몽의 대화 참가 요청 장과 판문점 통해 북한에 전달

‘서해교전’ 공동보도문에 언급안돼

“지나친 양보” 비판론

남북한이 합의한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공동보도문에 서해교전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을 놓고 우리 협상팀이 지나치게 양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측 대표단장인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2일 금강산으로 출발하면서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북측에 다시 한번 강도높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감표명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언급을 했음에도 이 공동보도문에는 빠졌을까.

이번 실무접촉은 전체회의가 중심이 되는 전례와는 달리 대표끼리의 개인접촉이 먼저 이뤄지고 난 다음 전체회의가 열리는 식으로 진행됐다. 두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는 양측이 민감한 서해교전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도 전체회의에서는 가능한 건드리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이실장은 개별접촉에서 남한의 정부와 군,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서해교전에 대해 감강한 목소리를 낸다. 반면, 대표단끼리의 전체회의에서는 장관급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세부의제만 논의한 셈이다.

이같은 이중적 협상태도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 쪽으로는 명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실제로는 명분보다 포기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대표단이 공식 합의문인 공동보도문에 결코 서해교전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북한 대표단의 교묘한 협상 전략에 밀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 “6일로 예정된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면서 “이번 실무접촉은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호기자

대표접촉서만 강력 거론

전체회의선 논의안돼

“北 전략에 말려 명분 포기”

다. 그는 3일 북측 회담의 대표단장과 단독접촉을 마친 뒤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다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동보도문에는 ‘서해교전’이라는 글짜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양측의 무력충돌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원칙적 언급도 없다.

이실장은 공동보도문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전체회의 기조방향을 통해 지난번 김영성 북측 장관급회담 대표의 유감 표명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난 2일자 북한 중앙통신 내용을 거론하면서 “솔직하고 진지한 유

대한매일

北 “재발방지”... 군사회담서 재논의

■ 서해교전 정리 어떻게

사과 명시안돼 여론에 촉각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에서 우리측 대표단이 가장 부담을 느꼈던 부분은 ‘서해교전’, 실무접촉 결과와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서해교전과 관련, 공동보도문에 명백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명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이 나올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용재(金容宰)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측은 수석대표 기조연설에서 서해교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전달하고 남북한 민간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측도 기조발언에서 지난달 25일 보낸 전문문의 ‘유감’ 표시와 ‘재발방지’ 언

급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서해 무력충돌 같은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전체 분위기도 전했다. 지난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유감’ 표명은 남북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북측의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이며 추후의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한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군당국자 회담과 6일 예정된 유엔사 장성급 회담 테이블에서 서해교전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든가 우리측 설명이다.

서해교전에 대한 대북 공세는 이쯤으로 마무리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재개된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실질 진전이 이뤄지면 서해교전과 관련된 비판여론이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수정기자 crystal@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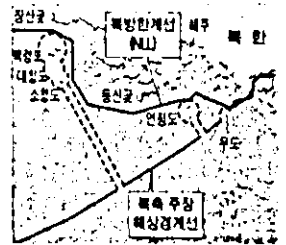
北, 서해교전·NLL문제 無언급

‘장성급회담서 논의’ 계산

남북은 4일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최대 걸림돌인 서해교전 대명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문제를 북·유엔사 간 장성급 회담을 통해 논의하는 선에서 봉합했다.

남측은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이 “짚을 것은 짚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공동보도문에는 단 한 줄의 서해교전 관련 표현도 넣지 못했다. 이같은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성과에 집착해 또 다시 북측에 밀렸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남측 대표단이 높이 평가한 북측



도출하는 쪽으로 협상 방향을 정한 듯하다. 남측 실무접촉 대표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이번 접촉은 논쟁을 지양하고 합의할 것은 합의한다는 입장에 따라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고 해명했다.

유감표명 반복에 그쳐

“舌戰보다 실질성과 중요”

南도 봉합차원 양보한듯

대표단의 서해교전 언급도 따지고 보면 지난달 25일 유감표명의 동어 반복이었다.

북측은 여전히 서해교전을 ‘쟁방 책임의 우발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북측은 남측의 강경한 여론을 감안한 듯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유감표명은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의 반영”이라며 서중전보다 진전된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남측도 서해교전을 놓고 설전을 피우려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

결국 서해교전 문제는 북측이 1일 전격적으로 유엔사에 제안한 장성급 회담

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유엔사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인 점을 고려하면, 서해교전 문제가 남측이 아니라 사실상 북측 간에 논의되고 결정되는 셈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1일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문제”라면서 논의 주체를 분명히 했다. 이는 남북대화 외는 별개로 브루나이 북미대화관 회담으로 탄력을 받은 북미대화에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더블 트랙(double track)’전술을 구사하겠다는 뜻이다.

북측은 NLL 문제를 북미협상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특히 1999년 인민군 총참모부가 입법적으로 선언한 ‘해상경계선’을 원용해 개성 이북의 수역을 모두 자기 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NLL의 무력화도 시도하고, 한발 더 나가 정전협정의 원천적 폐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NLL을 무기로 재래식 무기 감축 등 미국이 제시한 의제에 맞서겠다는 계산이다.

남측은 이번엔 장관급회담에서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문제를 의제로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국방장관 회담 등의 개최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만에 우리측이 교전책임 방지책으로 고려중인 NLL지역에서의 남북 공동어로 문제 등이 영등하게 식미 대화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서해교전 추궁 미흡

지난 2일 실무접촉 대표단을 배웅하던 정세현(통일부 장관)장관급 회담 남측 수석대표는 웃는 표정의 한 회담 관계자에게 '경고'를 줬다.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정부가 "죄를 짓은 죄였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마당에,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이런 모습은 비취지면 큰일이란 뜻에서다.

그렇지만 "책임자 문책도 요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정부의 생각과 회담 결과는 격장이 어긋났다.

북측 최성의 대표가 3일 전체회의 기초합안에서 지난달 25일자 유감 표명 대남전통문 수준으로 재차 언급했을 뿐 구체적 얘기가 없었기

北“유감”재언급 수준 장성급회담으로 넘겨

때문이다.

북측은 오히려 “서해교전은 남조선의 계획적 도발”(2일·조평통백서)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또 실무접촉 기간 중 북·유엔사 간 장성급 회담을 6일 개최하기로 합의해 교전 사태를 북·미 간에 다루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사실상 실무접촉에서 교전 사태를 털어버림으로써 분회담 테이블에까지 오르는 것을 막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인다.

남측 이봉조 대표는 4일 “교전 문제가 초반 쟁점이 된 게 사실이지만 논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랐다”고 말해 정부의 대북 요구에 한계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정부는 내심 회담 결과에 대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북 쌀지원 등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서 서해교전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하다. 실무접촉을 마친 뒤 최대표는 “서해교전 사태는 장성급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같은 시각 서울의 회담 관계자는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엇박자를 냈다. 이영종 기자

국민일보

금강산 남북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요지>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쌍방 실무대표 접촉이 2002년 8월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었다. 접촉에서 남과 북의 대표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쌍방은 2002년 8월12일부터 14일까지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 쌍방은 순차에 따라 서울에서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하기로 했다.
3. 쌍방은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다음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 ① 이미 합의한 남북 철도 및 도로 인건,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제협력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문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개최 문제,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문제,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들 비롯하여 4·5 공동보도문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 화강 문제.

- ② 제1차 남북 직상지회담을 개최하며,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4. 쌍방은 제14차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이 참가하기로 했으며 남측은 이에 편의를 보장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5. 쌍방은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와 9월 축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돕기로 했다.

대한매일

2002. 8. 5(월)

“北 ‘실리와 실천’ 중시”

이봉조 금강산회담 대표 회견

7차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을 마치고 4일 서울로 돌아온 통일부 이봉조(李鳳朝) 정책실장은 “정체된 남북관계에 합기를 넣었다.”면서 “이번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접촉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달라.

실무접촉 성격에 맞게 할 만큼 하고 합의할 것은 합의했다. 처음으로 가진 실무접촉이었지만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고, 역사사지(歷史事實)에 대해, 실무접촉 성격에 맞게 라는 4가지 원칙에 입각해 회담에 임했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실무접촉의 성과는.

7차 장관급회담의 일정과 의제, 쌍방의 관심사에 합의할 이뤄 장관급회담 성공적 개최의 기초를 마련했다. 또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할 거듭 촉구했고 북측 역시 유감표시와 재발방지 노력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결정은 어떻게 심사됐나.

지난 4일 임동원(林東源) 특사가 제기했고 아시아경기 조직위에 서도 북측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북측이 이런 노력들에 회담해 참가 의사할 밝힌 것이다.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가장 큰 어려움은.

회담 초반에만 해도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진단한다 대해 북측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논쟁을 지양하려는 양측의 노력과 북측의 유감표시, 재발방지 의사 재확인으로 잘 해결됐다.

●공동보도문 3조를 보면 그냥 ‘협약’이 아니라 ‘협의, 해결’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장관급회담은 합의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 데 역점을 뒀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해서도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북측도 동의한 것이다.

●북측에 대한 인상은.

북측은 이번 실무접촉 내내 ‘논쟁과 실천’보다 ‘실리와 실천’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좋은 결과를 이끌기 위해 실무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금강산 공동취재단·박복심기자
youngtan@kdaily.com

東亞日報

2002. 8. 5(월)

南대표 “쌀 지원문제는 논의안해”

이봉조(李鳳朝) 서양교(徐水效) 남측 대표는 4일 저녁 서울 귀한 직후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대표는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북측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였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특히 북한 선수단의 아시아경기 파견에 대해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사면’이다”라고 덧붙였다.

-북측의 서해교전 언급에 변화가

없는데...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 책임자 처벌 등 우리측의 일관된 입장을 진단했다. 판문점 장성급 회담이 모래(6일) 열리는데, 서해교전은 정전협정 위반인 만큼 회담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쌀 지원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논의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논의는 남북 경협위에서 북측이 거론할 것으로 본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국민일보

2002. 8. 5(월)

이봉조 남측대표 일문일답

“北, 서해사태 거듭유감”

-실무접촉 성과는.

△이번 실무대표 접촉은 7차 장관급회담의 일정과 협의 의제 그리고 쌍방 관심사들 논의하고 합의할 이듬으로써 7차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회담이었다. 이번 접촉에서는 이미 남북간에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못한 사항을 합의하기 위해 7차 회담에서 이행 입장을 확정키로 한 데 의미가 있다.

-이산가족 교환 날짜도 합의했다.

△7차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하게 된다.

-아시아게임 참가문제는 누가 먼저 꺼냈나.

△지난 4일 임동원 특사 방북시 특사가 먼저 제의한 바 있다. 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에서도 북측을 초청하는 뜻을 진단했다. 북측이 이번 접촉을 통해 참가의사를 밝힌 것은 화해협력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데 기여할 거는 것이다.

-실무접촉에서 어려움은 없었다.

△서해교전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진단해 대해 북측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회

담 초반에 쌍

방의 쟁점으

로 된 것은 사

실이다. 하지

만 이번 접촉

에서는 논쟁을 지양하고 예기하고 협의할 것을 협의한다는 입장에 떠났다.

-북측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노력 대응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 북측은 기본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협의’가 아니라 ‘협의, 해결’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남북간에는 많은 합의가 있는데 이행되지 못하는 과제가 많이 있다.

-합치원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 접촉이 7차 회담 준비를 위한 것이고 지원문제는 경협위가 일러야 북측이 거론할 것으로 본다.

-장관급회담 협의의제 대응에 대해서도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나.

△이번 장관급회담으로 비롯된다. 협의 의제들은 간격을 2년 만에 합의할 것도 있고 일부는 최근에 합의할 것도 있다. 이 자리에서 새로 합의할 것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본격논의 군사 신뢰구축 돌파구 만들수도

향후 남북관계 전망

남강산 실무접촉에서 그동안 검색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각종 당국간 및 민간 레벨의 대화와 교류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 관계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주 열린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북측이 북-미, 북-일 대화 재개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 실무접촉에서도 북한선수단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등 예상은 뛰어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남북관계 개선의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북측은 또 20개월이나 중단됐던 주한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 수용의사까지 밝혀놓은 상황이다.

물론 장성급 본회담을 지키와야 북한의 진의를 좀더 확실하게 알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정부 관계자는 "적십자 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면회소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서신교환과 생사주소확인 등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다"며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군사당국자간의 회담 재개도 초점. 특히 서해교전 사태 이후 군사적 신뢰구축 등 긴장완화를 위한 보다 분명한 조치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해 여론의 관심도 높다.

정부당국자들은 2000년 11월 중순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가 무기한 연기된 2차 국방장관 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있다. 회담 재개가 합의될 경우 서해상의 무력충돌 방지논의, 양측 군사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군사훈련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남북관계 주요 일정

8월6일	유엔사 북한 장성급 회담 (판문점)
7일	경수로 콘크리트 타설 개공식 (북 신포 급호지구 현장)
12~14일	7차 남북장관급 회담(서울)
15, 16일	8·15 민족통일행사(서울)
9월8일	남북육구대회 (서울 삼양월드업경기장)
29일~10월14일	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부산)
	남북여성 통일대회(금강산)
	남북청년 통일대회(금강산)
	4차 남북적십자 회담
이정	남북경제협력추진위 2차 회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
	북측 경제사찰단 파견

국방부측은 "그러나 군사실무회담에 그칠 경우엔 경의선 연건공사 등을 위한 비무장지대 내 공사합의서의 서명교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서울경제

남북관계 개선 급물살 탈듯

■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남북이 오는 12일 서울에서 제7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5개월의 공동보도문을 발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아시아게임(오는 9월 29일~10월14일)에 북측 선수단이 참가하고 9월 경원축구대회 서울 개최에 대한 남북 당국의 지원 약속 등이 시사한 경우 남북관계가 위기적으로 진전될 전망이다.

정부 남북자들은 이와 관련, "북측이 대미 및 대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당에 남북관계 진전을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근 북측이 추진 중인 경제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외부자본 및 기술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어도 좋다"는 전망을 내놓고

◇남북합의 5개항

1. 7차 장관급회담 서울 개최 (8월12~14일)
2.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개최문제 등 재논의
3. 5차 이산가족상봉 위한 4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4. 북,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5. 남북 당국, 8-15 민간 남북 공동행사의 9월 축구경기 적극 협조

있다.

그러나 서해교전과 관련, 남측이 유감표명보다 진전된 북측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으나 북측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남한 내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

지가 남아 있다. 이는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해 북시 행정부 출범과 9·11 미국 내 테러사태, 서해교전 사태 등으로 우려극정을 거듭해온 남북관계로 미뤄 남북관계가 과연 기대대로 순항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따라서 12일 서울서 열릴 7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의 대외변화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 여부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특히 북측이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선의를 보일 경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등과 같은 남북경협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남북관계 역시 좀 전처럼 일회성 합의와 이행논쟁을 반복하면서 퇴색할 우려가 높다.

/이성훈기자 shlee@sed.co.kr

한나라 “재발방지 약속없이 유감” 민주당 “남북 긴장완화위한 진전”

‘남북합의’ 정치권반응

한 “김정일담방 시나리오”-3대의혹 제거

민 “정략적 왜곡-훼손말고 총력지원해야”

정치권은 남북한 장관급회담 개최 동 금강산 실무회담 합의내용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진전’이라며 반색했지만, 한나라당은 서해도발에 대한 사과 등이 없는 점을 들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4일 “실무접촉에서 썩 좋은 결과가 나왔고 특히 부산 아시아경기 대회에 북한측이 참가하기로 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의 지평을 넓힐 신선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권도 남북 합의가 충실히 실천되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당연하고 남북간 합의를 정략적으로 왜곡 훼손하는 것은 민족에 대한 범죄”라며 “최근 남북대화 재개에 입을 다물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주목한다”

고 덧붙였다.

민주당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북측이 서해도발로 인한 긴장고조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동보도문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에서 “공

동보도문 어디에도 북한의 서해도발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등 성의있는 언급이 없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국민보안’ 3대 사유를 제시하며 5개항의 합의에 대해서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 등에서 일회성으로 이뤄져서는 안되며 ▲‘금강산 관광 합성화문제’가 ‘김정일담방’을 성사시킨다는 시나리오의 시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와 ‘9·8 남북 추수대회’ 서울 개최 등은 서해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했다.

지민련 유은영 대변인은 “5개항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서해도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남규·이천증기자

▲ 世界日報

2002. 8. 5(월)

東亞日報

2002. 8. 5(월)

20개월만에 대좌 재가동 ‘실마리’

주한유엔군 사령부가 4일 ‘장성급회담’을 열자는 북한측 제의를 수락해 오는 6일 판문점에서 양측이 무려 20개월여만에 대좌하게 됐다.

남북한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유일한 협의체인 북한군-유엔사간 장성급회담은 2000년 11월 이후 중단됐으나 지난 6월 29일 발생한 서해도발을 계기로 북측의 제의에 유엔사측이 수락함에 따라 재가동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그러나 서해도발 이후 북측은 거의 매일 방송매체를 통해 교전의 책임을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 탓으로 돌리며 북방안계선(NLL) 합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회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장성급회담에선 서해도발의 책임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서기국 백서’에서 NLL과 관련한 ‘조·북’미정립·장성급회담’ 등을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북측은 남북한 및

북-유엔사간 현안인 NLL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조평통 백서 내용은 ▲NLL은 서해상 경계선이 아니고 ▲서해 해상경계선 획정은 북한과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군과 미군간 일자 군사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부와 유엔사는 남북한 군사문제는 당사자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의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엔사측에서는 특히 서해도발 사태를 둘러싼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장성급회담에서 양측은 98년 6월 회담 개최 절차에 대한 합의도 도출한 것을 제외하고, 거의 소모적인 ‘언쟁’으로 일관해 왔던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회담도 상호 견해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병진기자 worldpk@spt.co.kr

서해도발-NLL등 난제 산적 소모적 언쟁 되풀이 가능성

한대표 “북한서 통일방안 토론 생각”

정몽준 “정몽준-김정일 만남 주선說”

‘訪北논란’ 2라운드

한나라당은 4일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가 당초 ‘방북설’을 부인하다가 방북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정권창출을 위한 ‘신북풍(新北風)’ 옴모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며 공세를 재개했다.

처음 한 대표의 방북설을 제기한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이날 “한 대표의 말이 바뀌고 있다. 내가 지난달 30일 언급했던 (한 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도라산 프로젝트’) 얘기는 모두 틀린 얘기는 사실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여권이 ‘제3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만나도록 해 줄 것을 올려주려는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청원(徐靑源) 대표는 “12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용

납할 수 없다. 한 대표의 방북이 대통령직 자격인지, 민주당의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장전철(張全哲) 부 대변인은 “한 대표는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에게 기회가 된다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볼 것을 충심으로 권하기도 했다”며 “정몽준 의원의 접근을 올려주려는 옴모가 있다는 식의 삼류 무협소설 같은 얘기는 그만 하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3일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회의에서 “정부에 사람이 없어 나를 특사로 보내줬느냐”며 김정일 위원장의 탄압 추진을 위한 “특사설”을 일축하면서 “지금쯤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지만 북한에 가서 내가 생각하는 통일방안을 갖고 토론을 해보겠다는 개인적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ark@donga.com
김정훈기자 inghn@donga.com

북-미, 남-북 대화 의제선점 포석

北 장성급회담 속뜻

유엔사령부와 북한이 6일 장성급 회담을 개최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동결된 북·미 대화를 비롯해 남북한 군사당국 간 대화가 가지개를 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교전 직후 두차례나 유엔사의 장성급 회담 개최를 거부했던 북한이 최근 장성급 회담에 합의한 것은 북·미 및 남북대화 재개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라고 군 당국자들이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일행의 방북에 앞서 '의제 선점'을 겨냥해 장성급 회담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군당국의 관측이다. 북한은 미국이 북·미 대화의 핵심 의제로 삼는 핵·미사일·재래식 무기 등의 문제보다 북방한계선(NLL) 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긴장완화 등을 위해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명분을 장성급 회담을 통해 축적하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장성급 회담에 관한 전문문을 보내기 직전인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백서'를 통해 "서해 해상경계선 확정 문제는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 일지

시기	의제	유엔사 주장	북측 주장
2002년 8월(예정)	서해교전	-기습공격은 정전협정 위반	-북방한계선(NLL) 철폐(추정)
2000년 11월	경의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관련 '비무장지대(DMZ)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 서명 및 비준	-남측이 먼저 서적
1999년 6~9월	연경해전	-북한 합정의 선제 시격은 개략적 -NLL은 실질적 해상 분계선 -남북군사공동위협 통제 협의	-NLL 철폐와 남북 합정 협수 -새로운 해상 경계선 제시
1999년 2~3월	3차 회담	-장성급 회담 정례화 -일직 장교 간 통신선 개설	-북·미·한국군 정성 참여하는 '군사안전보장위원회' 설치 제의
1998년 6~7월	잠수정 침투	-북한 잠수정 침투 증거 제시하고 사과 및 관련자 처벌 요구 -승조원 사신 송환	-훈련 중 고장으로 조난 -승조원 송환
1998년 6월	1차 회담	-북한 잠수정 한국 영해 침범	-북·미 광회합성 체결 -주한미군 철수

NLL철폐 계속고집엔 난항 예상

북한은 또 장성급 회담을 지난해 2월 이후 중단된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사전 접지작업의 기회로 삼으려 할 전망이다.

오는 12~14일 있을 7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활성화 문제 등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거쳐야 하는 의제들에 남북이 재합의할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 회담이 열릴 때 서해교전 사과 문제 등을 남측이 제기하지 못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서해교전은 NLL과 관련된 문제고 이는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입

장을 확고히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성급 회담 진행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은 거듭 NLL 철폐를 주장할 게 확실시되나, 유엔사·남한은 이런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과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문제"라면서 "유엔사도 우리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기자

<chlee@joongang.co.kr>

한나라 "新북풍 경계" 민주 "남북협력 확대"

남북장관급회담 반응

정치권은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협상 결과에 대해 일단 총론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남북관계가 국내정치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신(新)북풍' 가능성을 경계했고 민주당은

"남북간 합의의 중요성을 왜곡하는 것은 민족에 대한 범죄"라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중단됐던 대화가 재개된 뒤 5개월이 합의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한 사과나 재

발방지 약속 등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은 불안해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국제질서에 동참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의 지평이 넓어지는 신선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유엔사-北 내일 장성급회담 서해교전문제 논의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열어 서해 무력충돌 사태를 논의하지는 북한측 제의를 받아들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담은 1998년 북한측과 합의한 장성급회담 절차에 따라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98년 6월 1

차 회담 이후 2000년 11월 12차 회담을 열어 정전협정체제 준수문제 등을 협의해 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조선인민군 관문장대표부 리찬복(상장·한국군의 중장) 대표 명의로 보낸 전화 통지문에서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갖자고 유엔사에 제의했다.
/박병진기자 worldpk@sgt.co.kr

중앙일보

2002. 8. 5(월)

내일 장성급회담 개최

유엔사, 북측 제의 수용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열어 서해상에서의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하지는 북한측 제의를 받아들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담

은 1998년 북한 측과 합의한 장성급 회담 절차에 따라 열리게 된다"면서 "회담에 참석한 대표가 모두 동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서해교전 직후인 6월 30일 등 유엔사의 두차례 장성급 회담 개최 제의를 거부한 뒤 지난 2일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6일 장성급 회담을 열자고 유엔사에 제의했다. 이철희 기자 <chlee@joongang.co.kr>

朝鮮日報

2002. 8. 5(월)

유엔사령부·북한 내일 장성급회담

서해교전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사와 북한 간 장성급 회담이 6일 열린다. 유엔군사령부는 "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열어 서해 무력충돌 사태를 논의하지는 북한측 제의를 받아들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 유엔사측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현위에 대해 제반방지를 요구할 계획이지만, 북한측은 시해 북방한계선(NLL)의 침해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진흙이 예상된다.
/廣龍源기자 kysu@chosun.com

東亞日報

2002. 8. 5(월)

유엔사-北 내일 장성급회담

주한유엔군사령부는 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열어 서해교전 문제를 논의하지는 북한측의 제의를 받아들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유엔사는 "이번 회담은 98년 북한측과 합의한 장성급회담 절차에 따라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98년 6월 1차 회담을 가진 유엔사와 북한군은 2000년 11월 12차 회담을 열어 정전협정 체제 준수 문제를 협의했으나 이후 회담이 중단됐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유엔사·北 장성급회담

내일 서해교전 논의

6일 판문점에서 제13차 유엔군사령부·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이 열린 전망이다.

유엔군 사령부는 4일 "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열어 서해교전 문제를 논의하지는 북한측 제의를 받아들일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선 서해교전사태를 촉발시켰던 NLL(북방한계선) 문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유엔사측은 그러나 "NLL이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남측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NLL에 관한 북·미간 타협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장성급회담에는 한국측 대표로 이정식 공군준장, 미군측 대표로 제임스 N 솔리건 미 공군소장, 영국측 대표로 존 킹 육군준장, 캐나다측 대표로 버나드 H 보네스 육군대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각국 대표들은 1998년 제1차 회담 직전 양측이 정한 장성급회담 절차 규약에 따라 동등한 발언권을 갖게 된다.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회담은 특정의제를 논의하는 비정례회의로, 지난 2000년 11월 제12차 회담 뒤로 열리지 않았다."

경향신문

2002. 8. 5(월)

유엔사-北 내일 장성급회담 북측제의 수용 ... '교전' 논의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열어 서해교전 문제를 논의하지는 북한측 제의를 받아들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담은 1998년 북한측과 합의한 장성급 회담 절차에 따라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지난 98년 6월 1차회담 이후 2000년 11월 12차 회담을 열어 정전협정체제 준수 문제를 협의해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조선인민군 관문장대표부 리찬복 대표 명의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갖자고 유엔사에 제의했다.

박성진기자 kxyjwa@kookhyang.com

2002. 8. 5(월)

北-日 적십자회담 평양서 개최

18일-19일 이틀간 일본인 실종자문제 등 집중논의

북한과 일본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양국간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번 적십자회담은 지난주 브루나이에서 이뤄진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紀子) 일 외상간 회담에서 합의된 본 사안으로 지난 4일에 이어 열리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거주 일본인 처우의 일시 귀국 문제와 북한에 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일본인 실종자의 소재 파악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한편 북-일간 수교협상 재개할 위한 국장급 실무협회는 오는 25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도쿄=전현일특파원

2002. 8. 5(월)

2002. 8. 5(월)

北·日 적십자회담

18일 평양서 개최

북한과 일본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양국간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주 브루나이에서 이뤄진 북·일 외상회담에서 원칙적 합의를 본 사안으로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양국간 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사람과 결혼해 북한에 살고 있는 일본인 여성들의 일시 귀국 문제, 일본인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 4월 회담에서 "6월께 적십자회담을 한다"고 합의했으나 북한측이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한편 북·일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장급 교섭은 오는 25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국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11명 필리핀 거쳐 入國

지난달 11일 이후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잇따라 진입, 한국행을 요청했던 탈북자 11명이 2일 베이징을 떠나,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3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외교부상부가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은 '중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 사건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탈북자의 주중(駐中) 공관 진입이 이뤄질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한국행을 원만히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權景福기자 kkb@chosun.com

침몰 고속정 오늘부터 인양

지난 6월 29일 서해교전 때 침몰한 고속정 인양과 실종된 한상군 중

사에 대한 수색작업이 예정대로 5일부터 시작된다. 국방부는 고속정 인양에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합참은 인양 전담부대를 편성, 인양 및 수색작업에 들어가며,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위원회 요원들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전 전반을 관찰하고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에 대한 조사할 벌이게 된다.

/房龍厚기자 kysu@chosun.com

2002. 8. 5(월)

"김정일, 이달 푸틴과 회담 가능성"

日 언론 "러 극동 방문할듯"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무위원장 이 이달 말 러시아 극동지방을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푸틴 대통령이 6일 밤 코이즈미 총이(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의외의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알려주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8월22일부터 3일간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의 방문 시기가 같은 경우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北·日 적십자회담

18일 평양서 개최

북한과 일본이 18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북·일 적십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일본 외교소식등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주 브루나이에서 이뤄진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紀子) 일본 외상간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른 것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시사풍향계



장성민
전 국회의원

기 위한 선전으로써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서해교전의 한·미 책임론을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로는 국제사회와 한국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나는 오는 6일로 예정된 북한과 유엔시간의 장성급회담에서 김전임장의 틀 내에서 남북간 군사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북한은 '합의만 있고 실천은 없는' 태도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 국민은 합의만을 위한 합의에 이미 실증을 느낀 지 오래다. 최근의 대화공세가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외교적 제

북관계의 진전에 새로운 장애물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폐기될 뻔보다는 원바 이 합의 협상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에 모든 합의사항을 한꺼번에 이행하도록 압박하거나 북한의 태도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재개하기보다는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주고받는 방식을 택하는 것만이 심각한 대북 지원이 초래할 비판을 경계하면서도 북한을 합의이행의 길로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감의산 협도 및 도로 연결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보기면서 대북 전력지원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위기의 핵심은 김수로 공사 및 해시찰의 지연에 있고 북한은 전력지원이 있다면 해시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대북 전력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간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번 남북 장관급회담의 결과에 따라 2003년 한반도의 평화와 위기가 감정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파월 미 국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상간에 미 특수 방북이 합의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아직 임시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온건 협상파인 파월이 강경 매과들을 상대로 벌인 '개인적인 외교적 쿠데타'라는 것이 정실이다(8월2일 USA투데이).

북한은 부시 행정부 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또 우리 정부는 남과 북에 교착 국면을 바라는 강경파와 보수파가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상호간의 이견을 축소하고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신 대담트라는 열매로 맺어 나가는 정부의 지혜와 인내를 기대해 본다.

남북 장관급회담에 바란다

한반도에 '제2의 대담트'가 찾아올 것인가. 4일 남과 북은 급강산 실무접촉을 마치면서 제7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12~1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확정지었다. 더불어 9~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문제도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무려 1년7개월간이나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에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다.

나는 남과 북 모두가 이번 대화의 기회를 잘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관급회담에 몇 가지 시안을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NLL 폐지와 같은 남북간, 북·미간 난제를 일단 내던져야 한다. 모처럼 마련된 대화 국면에 장애를 조성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 국민은 북한이 서해교전에서 보인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해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NLL 폐지를 재촉하는 것은 서해 도반의 책임을 회피하

스치가 아니라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협력 을 바라는 차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4·5 공동보도문에 적시된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특히 남북간 도로 및 철도 연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영구면허소 설치, 남북간 군사당국자 회담은 북한의 대화의지를 시험하는 것 대다. 북한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사회 역시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유감표시를 이쯤에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유감표명은 사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외교적 관례다. 더구나 북측은 이번 실무접촉 과정에서 유감표시와 재발방지 의지 등 거듭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이상의 진실성 논란을 벌이는 것은 북한 내 대남 협상파의 입지를 축소시켜 남

12~14일 남북장관급회담

긴급 전문가 진단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오는 8월12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검색된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전환케 되었다.

이번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실무대표 접촉 결과 확인된 향후 남북관계 일정을 보면 8월중 장관급회담 개최,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 개최, 9월중 축구경기 개최, 제14차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 참가 등 뻘뻘한 일정이 짜여져 있다.

그러면 북한이 서해사태가 발생한 지 한달여 만에 왜 이처럼 갑자기 대화국면으로 선회하는가.

그것은 첫째 남한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 최근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혁조치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식량 등 물자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올해 부족한 식량만 해도 150만t 정도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남쪽으로부터 30만t의 식량과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전기, 가스, 전화 등 지원이 얻어내려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은 장관급회담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북측에 촉구해야 한다.

대형 對北사업 합의 안돼

이번 실무대표 접촉의 공동보도문을 보면 서해사태에 대해 쌍방이 어떤 입장을 교환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관급회담이 열리게 되면, 정부는 서해사태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

북한은 최근 '조평통' 성명을 통해, 북방한계선(NLL)은 유령선이라며 남측이 NLL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전면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협박하고 서해경계선은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볼 때 북한이 서해사태에 관해 충분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정부는 서해사태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닌 확고한 의지에 입



宋榮大

'서해사태' 확실한 사과 받아내야

열릴 경우 무엇보다도 남북검토후진위원회 가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을 향한 화해제스처

둘째, 북한은 남남갈등을 조장할 목적으로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서해사태 후 우리 국민들의 대북 여론이 한층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북한은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평화이미지 부각에 주력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화해국면으로 전환시키면, 김대중 정부와 여권에 도움을 주고 보수세력과 야당의 입지를 약화시키리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셋째, 북한의 대화호응은 미국을 향한 화해제스처다. 북한이 미국의 특사를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북대화가 시작될 시점에 와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미교섭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북한의 대화공세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우선은 서해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각한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대북경제지원을 평화 정착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화해협력의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대북경제지원을 해왔다. 그런데 북한의 의도는 달랐다. 그들은 화해협력이라는 명분하에 주어지는 경제지원만 따먹고 평화에 대해서는 도발로 응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상황이 이쯤 되면 정부가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평화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대형 대북사업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대북경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햇볕정책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벌여 놓은 일의 마무리작업에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전 통일부 차관



발언대

이강우

베트남 호노대학교 역사학과 박사과정

최근 배급제 폐지와 일부 시장제도 도입 등 북한의 경제개혁조치가 알려지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이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경우처럼 개방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낙관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방은 곧 체제 몰락 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변화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1986년 개방개혁 이후 90년대 들어 연 8%의 경제 성장률을 구가하며 안정적인 개방개혁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은 북한과 매우 유사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베트남은 일찍이 봉건국가 시절부터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 1000년 동안, 그리고 근대기에는 프랑스와 일본에 인하여 100년 동안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미국과의 전쟁 중에는 2차대전 때 전유 럽에 투하된 양보다 더 많은 폭탄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런 기나긴 굴곡의 역사를 거치면서 베트남 민족주의는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강력한 생명력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일은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자유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베트남공산 당 지도자 호치민의 구호 속에 융합되어 절대적 가치를 지닌 민족정 체성이 되었다. 그리고 당시 동서냉전의 구도 속에서 자본주의 제국 들과의 투쟁을 거치면서, 베트남 민족주의는 민중의 해방을 외쳤던 사회주의와 결합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베트남 민족에게 사회주의 는 단순히 그 이념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수천년을 이어온 이민 족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민족의 자유·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베트남 개방과 북한

한 베트남공산당은 민족의 힘을 하나로 통합하여 역사적 숙원인 독 립·통일을 이루어낸 유일한 정치집단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현 재도 국민들의 지지에 기대 개방개혁노선을 주도하고 있다.

전쟁세대가 잠깐하고 있는 베트남도 역시 배급제를 폐지하고 시 장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지 이미 20년 가까이 되지만, "독립·자 주에 기반한 대외개방", 그리고 그 궁극적 지향점은 사회주의라고 하 는 것을 단호하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은 시장에서, 외국인 회사에서 맘을 풀리면서 일하고 있지만 민족주체성, 독립과 연결된 사회주의는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있다. 개방의 격랑 속에서도 베트남이 점차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근래 가장 매력적인 외 국인 투자지역으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베트남이 개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적 동요를 막기 위한 방안을 한국에서 찾았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90년대 중반부터 한국드라 마가 병영되었는데 그 전후시절에 방송되는 국제뉴스의 한국 관련 소식들은 노동자·대학생들의 피업, 복력사위 장면들과 아이엠에프 사 태를 당해 실직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는 이야기 등이 주 류를 이루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편승하여 경제적인 로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복력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것 을 강조하여 급속한 경제개발은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요소들 안전해 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개방의 완급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예산의 부담을 담고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배급제 폐지, 임금·물가 현실화, 인센티브제 도입, 대외관계 개선 등 북한이 취하 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베트남 개방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하다. 김 장일 국방위원장이 역삼하는 '신사고' 역시 베트남 개방 초기부터 감 조되어온 '도이모이'(사교혁신)의 의미이다. 같은 사회주의 동맹국으 로서 올해 수교 52돌을 맞은 양국은, 지난해와 올해 김영남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장과 관동혁명 국가주석이 상호 방문하였으며, 또한 96년부터 베트남은 4만4천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여전히 1당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대외관계의 중심축인 미국에 대해 서도 반대의사법 단단히 표시하면서 중국과 더불어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은 북한에는 개방개혁의 배력적인 모델이다. 북한은 이미 개방의 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2002. 8. 5(월)

대한매일

2002. 8. 5(월)

오늘의 논

진지한 자세 아쉬운 남북



김수정 정치원자

4일 남북한은 금강 산 장관급회담 실무 집회를 통해 한반도 회에 분위기를 복원 시켰다. 9일 부산에서 여경기대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석한다는 합의까지 담으로 했 다. 남북한이 '6·29 서해교전'이라는 비 국을 어찌했는 극복 해낸 것이다.

남북한은 그동안 '합의' 뒤 '무산', 또는 '교착' 상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 이번에는 말로 제대로 된 관계개선을 어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지난 달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취재하 면서 느낀 안타까움이 너무나 큰 까닭이다.

이 회의에서 남북한 외무장관은 공식 회 단을 갖지 못한 채 헤어졌다. 북한 백남준 (白南準)외무상은 물론 비일 미 장관과 미 국무 차관에 합의하고 가와구치 요리코(川口利子)외무상과 북·일 수교 교섭 재개 에 합의했다. 북 외무상은 파월 장관에게 "우리를 친구로 대해달라."며 '리브 팔'을 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기뻗고 나섰 다.'는 말까지 나왔다.

미·일은 북한의 대화 태도를 아주 긍정적 으로 평가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대미 (對美), 대일(對日), 대남(對南)정책에 새 로운 그림을 그리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의 두 불씨가 터졌는데, 정작 당사자인 남북은 "강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하면 못 만날 것 없다."는 말 만 되풀이하다 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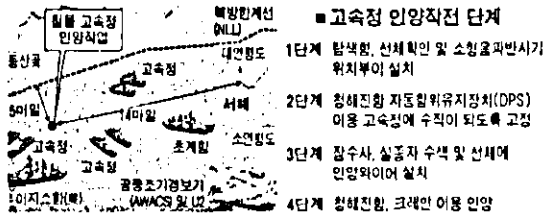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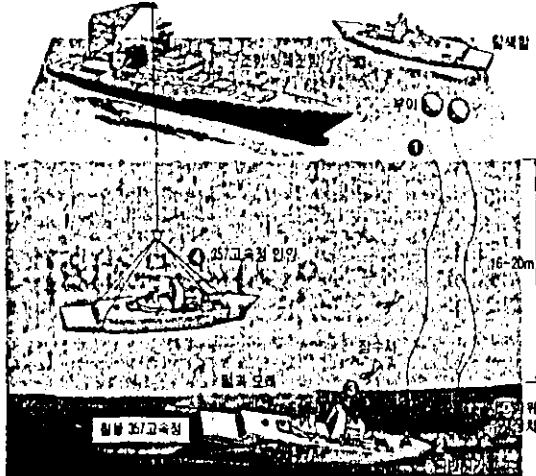
최성룡(崔成龍) 외교장관은 '서해교전'으 로 격양된 대북 국민정서'를 의식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즉시 '선(先)회담 을 제의했다.'는 오해를 살까와 북한측에 실무선 차원의 전화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표정으로 귀국길에 오른 정부 관계자는 "남북한이 만났더라면, 너무 나 언변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장관급 회담 실무집회를 앞둔 상태에서 굳이 무리 수일 두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여 시 아쉬움은 남는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풀린 2002년 7월말 브 루나이. 그 자리에서 남북한은 북·미, 북·일 의 뒤에 있고 좋은 모습을 아니었다. 앞으로 남북 모두 '모양새'나 '눈치'를 따지기 이 전에 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겠 다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crystal@kday.com

'北방해' 대비 24시간 경계

■함북 고속정 인양작전 및 군사 대비태세



■ 오늘부터 고속정 인양 시작

서해교전 발발 38일 만인 5일 함북군 해군 고속정 인양작전이 시작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인양작업이 당초보다 지연된 것은 태풍과 조류 등 기상·해상 조건을 감안하고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연합대비태세 점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시와 장관급위관 재의 등으로 남북간 긴장분위기가 다소 완화돼 인양작업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사들을 투입, 고속정 선체 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한 상국(韓相國·27) 중사의 유해를 수색할 계획이다. 수색이 끝나면 고속정 선체 앞뒤 해저에 터널을 뚫고 1.5인치 인양와이어를 묶는 작업을 실시한다. 고속정이 가라앉은 해저는 조류가 시속 3.6노트로 빠른데다 펄과 모래로 이루어진 탓에 시계도 1m 미만에서 이 과정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청해진함의 크레인 이용, 고속정을 끌어올리게 된다. 해군 관계자는 "청해진함의 크

SSU 요원 60여명 투입
두달간 4단계로 작업
초계함·고속정 상시배치
美는 U2기·이지스함 지원

펄프로 빨려서→체인 묶어 크레인에 연결

서해 웨리호 인양때와 닮은꼴

■ 해군 인양작업 사례

해군이 인양작업에 참여한 사례는 1993년 10월 여객선 서해 웨리호와 98년 6월 동해 앞바다 북한 잠수정, 99년 3월 남해안 북한 반잠수정 등 3건. 이중 해군 구조함 편대가 참여한 서해 웨리호 인양작업이 이번 인양 방식과 가장 유사하다.

당시 해군 해난구조대(SSU) 요원들은 수심 13~16m 바닷속으로 들어가 구조함의 대형 펄프로 붙은 고속분사, 펄을 제거한 뒤 선수(船首)와 선미(船尾) 일부분에 지름 30cm 크기의 구멍을 뚫었다.

이어 체인을 동여맨 뒤 인양선인 삼익호(9,754톤급)의 크레인 후크(고리)에 연결해 끌어 올렸고, 구조함 등은 실악호가 움직이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

동해앞바다 북한 잠수정 인

양작업은 SSU 요원들이 34m 해저로 들어가 잠수정 선수와 선미에 지름 4.1cm 철타 와이어를 감은 뒤 잠수정 연결고리에 20톤급 공기주머니 4개를 차례로 연결했다. 이어 구조함인 청해진함에 연결된 호스로 잠수정에 부착해 놓은 공기주머니에 압축 공기를 주입, 부상시켜 끌어올렸다.

수심 150m에 침몰됐던 남해안 북한 반잠수정 인양작업에는 국내 최초로 '포화강수법'이 동원됐다. SSU요원들에게 현장과 동일한 15기압에서 3시간동안 협업을 포화상태로 용해시키는 고압 적응 훈련을 시킨 뒤 투입하는 방식. 이를 통해 현장에 투입된 SSU요원들이 로프와 굵은 현사로 반잠수정을 묶고 청해진함과 케이블로 연결, 끌어올리도록 했다.

/함양준기자
naiger@hk.co.kr

인양에 두달 가량 걸릴 듯

인양작업에는 다목적 구조함인 청해진함(3,200톤)을 주축으로 탐색함(MHC), 비저선, 해상크레인 등 군용 및 민간 장비가 동원된다. 또 국내 최고의 심해잠수능력 지닌 해난구조대(SSU) 요원 60여명이 투입된다.

해군 관계자는 "당초 편대(2,929톤)를 구조함으로 투입하기로 했으나 잠수정의 작업환경 등을 감안, 잠수정도 구조할 수 있는 청해진함으로 교체했다"며 "하루 한두 차례 정조(停漕)시간에 30~40분 밖에 수중작업을 할 수 없어 인양 인양까지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업은 ▲위치 탐사 ▲구조함 고정 ▲수색 및 와이어 걸속 ▲인양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탐색함이 고속정의 위치를 파악, 선체에 소형음파반사기(소파)를 부착한 뒤 위치 부이(Buoy)를 설치한다. 이어 청해진함이 자동탐위장치(DPS)를 이용, 고속정 선체와 수직이 되도록 해상에 위치를 고정한다. 해군은 이 두 단계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SSU소속 심해 잠

라인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민간 해상크레인도 동원할 계획"이라며 "고속정 자체 중량은 150톤에 불과하지만 선체 속의 바닷물과 선체 주변의 펄로 인해 양력이 2~3배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미 24시간 일체 군사대비태세 합동상조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인양작업 시작과 동시에 연합위기관리체계급 기동, 24시간 대박 감시태세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군은 작업구역에 고속정과 초계함 편대함 상시 배치하고, 공군은 공대함 무장을 한 전투기를 출격대비시킨다. 서해안의 레이더와 통신감청망이 북한군의 동향을 철저히 살펴보고, 인근 해안포대도 비상 경계에 돌입한다.

미군은 고정정찰기인 U2기를 출동시키고, 상황에 따라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중인 공중조기경보기(AWACS)와 이지스함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하루 수차례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미 군사첩보위성 KH9과 KH11도 북한군의 동향을 철저히 감시한다.

/권혁범기자 hbkw@hk.co.kr

북한,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백두·한라산서 성화 동시채화... 남북관계 발전 돌파구 가능성

12~14일 서울 남북장관급회담... 추석전후 이산상봉

9월 20일 부산에서 개막될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다. 북한은 20개 종목에 선수단을 보내고, 백두산 천지에서 채화된 성화가 도착한다. 또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이뤄진다.

▶ 관련기사 4면

남북한은 4일 금강산에서 열린 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12~14일 서울에서 열리는 7차 장관급회담에서 구체적 내

용과 일정을 논의, 확정기로 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측의 참가를 확정하고, 4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와 5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8·15민족통일대회와 9월 남북 축구경기의 성공적 진행을 적극 돕기로 했다.

다음주 장관급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추석(9월21일)을 전후한 시기에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성사되고 적십자회담을 통해서도 상봉 정

례화,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또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문제와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개최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 재개 등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방북때 합의된 '4·5 공동보도문'의 이행 일정을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곧 정세현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실무접촉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추진한다.

남측 이봉조 대표는 "이번 합의는 그동안 정체됐던 남북관계에 활기를 넣고 앞으로 관계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해교전과 관련해 남측은 3일 열린 수석대표 단독접촉과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 다 성의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했고, 북측은 전체회의의 기초발언을 통해 유감표시와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했다고 대표단은 전했다.

서해교전 사태가 공동보도문에서 언급되지 않는데 대해 남측 이봉조 대표는 "이번 접촉은 장관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예비회담이며 서해교전 사태는 6일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문화일보

2002. 8. 5(월)

정부, 경의선 연내 연결 추진

12~14일 남북 장관급회담 대책...금강산 실무접촉 5개항 합의

정부는 2~4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7차 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에서 장관급회담재개 등 5개항에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특히 오는 12~14일 서울에서 열릴 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의 연내 연결과 추석(9·21) 이산가족 상

봉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통일부는 5일 오후 정세현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열어 회담장과 북측 대표단 숙소를 준비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또 6일중 유관부처 실무자 협의를 통해 종합회담대책을 마련

한 뒤 8일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앞서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대표들은 4일 금강산에서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9월20일 부산에서 개막될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기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한중호기자 idhan@munhwa.co.kr

남북교류 '일방→쌍방향' 으로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합의 의미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 대표회담을 통해 남북은 일반 사해교전(6·20) 이관, 정확히 말하면 일방적 장외에 외교안보통일목표의 북시방북에서 남북이 '4·5' 공동보도문 합의하에 상대로 관계할 복원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북측이 이번 합의를 통해 유례없이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점이다. 이시안 개괄 참가협의를 비롯, 9월 남북측 구내회, 경제사담단 파견 등은 모두 남북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다.

제7차 장관급회담(8.12-14)과 8·15 민족통일대회(8.15-16)도 서울에서 개최된다. 북측이 지난해 9월 5차 장관급회담 이후 국제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수로 사업을 제외하곤 단 한차례도 남북교류 방문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상당한 변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일방행진식'에서 '쌍방향' 교류로 변화하게 된다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북측은 이미 월드컵 남북경기의 T V중계 등에서 보듯, 대남·대외부문에 대해 분쇄와 중지를 점차 줄기마련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학술한 경제 개혁의 성공에 필수적인 대외지원을 위해서 가장 큰 파트너가 될 남북에 대해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늘

려도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남북시금의 '경제적 연극행'에 북한이 감복하고 있는 것도 의미있는 변화다.

여기다 미국이 북한의 남북대화 의지 등을 면밀히 주시한 뒤 북시방북 중 준비된 대외태와 일치를 가능하게했다는 태도도 비교하고 있는 것도 북측의 이같은 적극적인 자세를 이끄는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적극성이 강해

경제지원·美와 대화 의식

北적극적 '4·5' 합의 복원

전문가 "성의 이행에 성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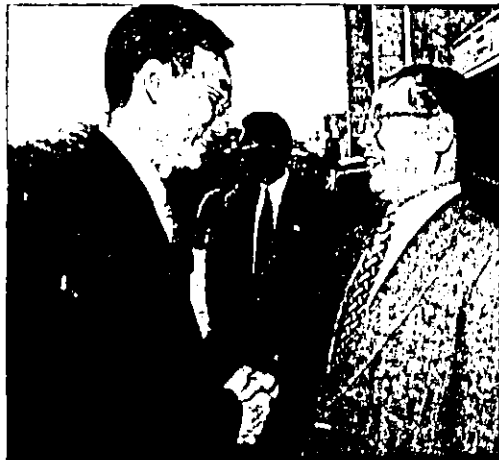
중정부 일기내 남북관계와 북·미·북·일관계를 동시에 진전시키려는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뒤늦게 발동이 걸려 북·미정상회담 일보직전서 최접한 2000년 말린던 행정부패의 전장을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는 1회성 또는 이벤트성 행사의 추가 합의보다 경의선 연결이나 군사적 위협의 축소 등 산외구축의 토대가 될 남북간 기존 합의에 북측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서외통기자 phil7@munhwa.co.kr

향후 남북관계 주요 일정

시기	행사	내용
8. 6	유엔사-북 정상급회담(변방)도	서해해방전쟁선(NLL) 문제 등 논의
8. 7	경수로 콘크리트 타설 기공식(백현호참석)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본체공사
8. 12~14	제7차 장관급회담(서울)	2차 경주위, 북한 경제사담단 파견, 금강산관광 활성화, 남북 남북국회담, 군사당국회담 개최방안 논의
8. 15~16	8·15 민족통일대회(서울)	북측대표단 100명 서울방문, 예술공연 명승시행
9. 8	남북육구경가(서울)	북한 대표팀 서울방문, 경정육구 부활
9. 21(후계연회)	5차 미안가족 방문단 교환(금강산)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서 세부방안 확정
9. 29~10. 14	제4차 아시아경기대회(부산)	북한대표단 참가, 배두산 총리행동



“또 만남이다” 7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남북 대표인 이봉조(왼쪽)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4일 실무접촉을 마친 뒤 회담장인 금강산여관을 떠나면서 최철의 북측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금강산=심민수기자 panlocus@munhwa.co.kr

남북관계 남은 불씨

장관급회담 재개를 계기로 남북 관계는 다시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그러나 장애물이 모두 제거한 것은 아니다.

50년 군사적 대치'의 기본틀인 장전체제의 유산들이 언제는 남북 관계를 냉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될 사안은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의 '양적 확대'라는 점에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분야에서의 진전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남북회담의 이전에는 서해교전 해임은 남북한계선(NLL) 논란이라는 쟁점이 '뜨거운 감자'로 여긴한 남아 있다.

두 사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남측이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보장 약속을 요구하고 나서자 북한은 지난 1953년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른 NLL이 서해교전의 화근이라며 맞대응 하고 나섰다.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남북 대표단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다 성의 있는 조치"를 요

서해교전 책임·NLL 논쟁

장성급 회담 '평행선' 전망

구했지만 북측은 7월25일자 권봉은 수준의 유감 표명을 되풀이 했을 뿐이다. 정부는 일단 이 문제를 6월 판문점에서 열릴 북·유엔사 장관급 회담으로 넘겨 급한 불을 끄고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은 서해교전 직후 유엔사측이 요구했던 장관급 회담에 불참했다 한남이나 지나서야 갑자기 양해했다고 나섰다.

북측은 회담을 일꾼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7월25일자) 유감표명은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서해교전은 남조선의 계획적 도발"(2일자 조영봉 배서)이고 그 책임이 미국과 남한의 호전세력에게 있다"(3일자 노동신문 논평)며 NLL의 즉각 철폐를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이면에는 남북장관급회담과 북·미 군사회담에 불리대응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번 장관급 회담은 양측 주장이 병행될 그라다 끝날 공산이 크다. 또 이 문제가 장관급 회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한홍조기자 ichan@munhwa.co.kr

“아시안게임을 민족화해 마당으로”

부산조직위·시민반응 대회 참가국·규모 최대... 준비 만전

부산아시아게임을 남북화해의 한 마당으로.

북한의 부산아시아게임 참가가 바뀐 것만 가늠해 제1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김순택)는 5일 북한의 대회참가에 따른 보안 및 편의제공 등 지체 대책안을 마련하고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민들도 부산 아시아게임이 북한 참가감정으로 통일아시아게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됐다며 지원봉사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

간이다.

◆조직위 대책=조직위는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북한의 대회 참가 결정으로 이번 대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하는 최초의 대회가 될 것으로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직위는 우선 대표단 구성문제에 있어 남북한의 그동안 의견관계에 따라 선수단과 보도단, 예술단 등 수송 대상별 전용차량 운행하고 각 차입별로 운전요원을 고정배치할 방침이다. 선수 및 임원들이 300여명에 이를 것

으로 보고 숙박문제는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 및 안전을 기본으로 선수촌안에 북한팀 숙소로 40여가구를 마련해 신변 안전과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등을 최우선 고려해 배치키로 했다.

외환문제는 북한을 다룬 국가유업 피정의회(NOC) 소속 국가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국제회의 관련 지원 및 요청사항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예술단 등 민간교류단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해 특급호텔에 숙박 배정하는 등 직접한 예우와 서

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시민 반응=북한의 아시아게임 참가 소식만 접한 부산시민들은 이번 대회가 통일아시아게임으로 갈 수 있게 됐다며 크게 반기는 한편 개최지 시민으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연호 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 지원본부장은 "북한의 대화참기로 부산 아시아게임이 통일불모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아시아게임이 된 만큼 조직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나아가 전 국민이 대기 심장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단체인 아시아드지원협의회는 북한의 아시아게임 참가를 위해 이미 1억원의 기금만 모아 놓고 있으며 북한의 참가만 확대를 위해 조민간 방북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김기원기자 an73@munhwa.co.kr

“합의이행 시간표 만들것”

丁통일 “南北장관급 회담때 구체명시”

‘쌀30만톤 제공’ 준비착수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12~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 연결 등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스케줄을 합의문에 명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남북 간에는 새로운 합의의 이상으로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실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행 일정 등 타임테이블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장관급 회담 대응 방향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의 방침은 북측의 서해교전 유감표명에 대한 여론의 불만족을 합의사항 이행으로 돌파하면서 옛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것으로,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한 현안의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사항의 실천문제를 논의할 제2차 경험추진위와 비무장지대(DMZ) 군사보장 문제 등을 다룬 군사당국회담 등 하위회담을 장관급회담 직후 이달내에 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 장관은 “두 회담을 북측이 준비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대로 서둘러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험추진위 논의를 통해 북측에 정부 보유미 30만톤 이상을 제공키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유관부처간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측이 2~4일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발방지 약속을 제의했지만, 국민 여론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이 문제를 남북 현안에 연계하지는 않겠지만, 단국 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동준기자 dilee@hk.co.kr

金대통령 “합의실천 강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2~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과 관련, “어떤 새로운 합의라도 끌어 내기 보다는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조치를 강구하는 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 장관급 회담 실무접촉 결과보고 받고 “이제부터는 남북간 합의사항 가운데 가능한 것부터 이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영성기자 leeyoung@hk.co.kr

경향신문

이산면회소 ‘금강산 설치’ 접근

12일 장관급회담서 시기·운영등 구체논의

丁통일 청와대 보고

남북은 지난 2~4일 금강산에서 열린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금강산에 상설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8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실무접촉 결과보고를 받고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과 관련, “(남북간) 새로운 합의가 이끌어내기보다는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금강산에서 자주 이산상봉 행

사급 갖게 되는데 이산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강산에 상설면회소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의했고, 북측은 “좋은 의견”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남북은 이에 따라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금강산 이산면회소 설치시기 및 장소, 구체적 운영방식 등을 논의키로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는 금강산 면회소가 설치되더라도 남북관계와 북한의 이산가족 관련 업무 능력 등을 감안, 일단 한식·추석·설날 등, 매년 세차례 가량 이산상봉을 하되 상봉 횟수를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금강산 면회소 장소와 관련, 정전항 인근의 보세구역(CIQ) 건물을 보수해 사용하거나 온정각 앞 광장에 새로 건물을 세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장관급회담에서 합의사항의 이행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 데 주력하되 특히 제2차 남북 군사당국자회담과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이달 중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는 데 이어 8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장관급회담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준근·이용욱기자

hanubang@kyunghyang.com

대한매일

2002. 8. 6(화)



실무접촉 결과보고 김대중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중앙일보

2002. 8. 6(화)



김대중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정세현 통일부장관과 임동원 특보로부터 금강산 남북 실무접촉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世界日報

2002. 8. 6(화)

南北경추위 이달내 재개추진

장관급회담 후속책 착수

정부는 오는 12~14일 서울에서 열리는 7차 남북장관급회담 대책과 관련, 이달중으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와 군사당국자 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남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추위의 군사당국자 외남 개최에 대해 "어떤 것이 먼저 열린다는 것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업 단위상 부문은 (남북이) 합의돼 있기 때문에 늦은 것을 만회해야 한다"고 밝히 이달중 재개 의사를 강력히 시사했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서울경제

2002. 8. 6(화)

"7차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주력" 김대통령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실무접촉 결과보고를 보고받고 "남북관계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발전해오다가 지난 1년반 동안 정체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는 남북간에 합의된 것 가운데 가능한 것부터 이행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매일경제

2002. 8. 6(화)



김대중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현 통일부장관과 임동원 특보 등에게서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

한겨레

2002. 8. 6(화)

"남북 경추위 이달안 개최 추진"

정세현 통일 밝혀

군사 회담도 우선 협의

정부는 12~14일 서울에서 열리는 7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경협추진위(경추위) 2차회의와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되도록 이번달 안에 후속 회담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추위 2차 회의가 열려야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임남(금강산)년 관련 수자원 공동사용 문제 등을 다뤄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열 수 있다"며 "이런 사업들은 군사관계선을 넘나드는 것인 만큼 특히 경협추진위 2차 회의와 군사당국자간 회담

이 우선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 장관급회담을 위한 금강산 실무접촉 결과보고를 보고받고 7차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해 "새로운 협의를 이끌어내기보다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강구하는 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는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접촉 결과로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통일부장관이 3당 대표를 직접 방문해 잘 설명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nomad@hani.co.kr

“이번만은 말보다 실천”

12~14일 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앞둔 정부의 표정이 자못 비장하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5일 “새로운 합의를 하기보다는 이미 합의된 사안에 대한 실천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는가 하면,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실천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번 회담이 서해교전이라는 무력충돌 상황을 타고 열리는데다, 특히 임기 말 정국을 고려할 때 몇몇정책의 유용성을 재확인할

■ 정부, 南北장관급회담 준비

“北 달라졌다” 일단 고무속 구체적 합의 이행에 주안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협상태도가 예전과 달리 적극적이었다는 데 상당히 고무돼 있다. 합의사항 이행 주력 사실 정부는 6·15 정상회담과 4·15 특사방북을 통해 북

측과 수십 가지 협의를 했지만,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는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장관급회담

에서는 경의선 연결 등 합의사항의 이행방법과 시기를 합의문에 명시기로 하는 등 무엇보다 실천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사항의 구체화를 위해 제2차 경협추진위, 군사당국회담 등 하위 회담도 장관급

회담이 끝난 후 바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다. 철도연결, 입진강 수방사업, 개성공단 개발 등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담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북쪽이 준비된 대로 받을 수 있는 대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북측이 지난달 25일 회담을 재의하면서 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제기한 점을 주목, 경의선 연결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서해교전 시과 수위논란 그러나 정부의 구상대로 남북관계가 안착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구석이 없지 않다. 서해교전으로 불거진 남한 여론의 대북 불신감이 여전하고 북측이 당장 남측의 요구에 걸맞은 사과를 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측이 이번 실무접촉에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종전의 태도와 별 차이가 없다.

때문에 북측이 장관급 회담에서 서해교전에 대해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남측의 협상력이 대선정국을 반영한 여론의 비판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2차 경협추진위에서 ‘대북 퍼주기’ 논란으로 9월 말 이시안 게임 때는 북측 대표단 응원시비까지 이어질 공산이 있다. 이 같은 비판적 시나리오에 당초 정부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는 등 대북정책의 탄력성을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초조한 측면도 있다. 정 장관은 이를 감안한 듯 조만간 3당 대표를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여론 수습에 나설 방침이다.

/이동준기자 dje@hk.co.kr

世界日報

주말쯤 대표단 구성

회담장 물색-부처협의 '발등의 불' 비판여론 감안 쌀지원 결정 신중

장관급회담 대책 분주

정부는 '8·4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합의'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면서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관급회담 의제가 군사 경제 문화 체육 이산가족 등 분야별로 방대한데도 준비 기간이 1주일밖에 안돼 이번 주내 모든 준비작업을 끝내야 할 형편이다. 정부 당국자는 “기존 ‘4·5보도문’ 위주였던 것이어서 과거 준비했던 자료를 정리하면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특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14일 장관급회담이 끝나는 대로 경추위와 군사당국자회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의선 연결, 대북 쌀지원, 입진강 수해대책 등을 앞장겨 실시

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정부는 기존 합의사항 가운데 ‘이행 가능성’이 높은 의제를 선정, 전라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재경·건교·문광·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1차 사전협의를 거쳐 8일 중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회담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말쯤에는 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단을 구성, 처리협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속소 및 회담장 선정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3~4곳의 후보를 대상으로 규모나 회담장, 보안시설 등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청사와의 이동거리를 감안, 내부적으로는 강남보다는 강북 지역의 호철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 표명이 미흡하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 대북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다.

정치권에서 30만~50만t의 대북 쌀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와 ‘협상결과에 따른다는 두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쌀지원은 내부적으로 합의가 돼 있고 더욱이 북측이 이번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비공식 요청을 해외 질치만 남아 있는 셈이다.

서해교전과 관련, 정부는 향후 회담에서도 무조건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상설면회소 설치 등 대해선 오래 전 우리측이 제의, 이젠 북측이 대답할 차례인 만큼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남북經協委·군사회담

20일께 열릴듯

이산가족면회소 금강산설치 유력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군사당국자회담이 이르면 이달 20일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2~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 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추위 등 각 분야별 회담 일정을 확정짓는 등 남북관계담 조기에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6·15공동선언 정신과 4·5공동보도문에서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천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내도록 함 것'이라면서 "현정부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작은 성과라도 축적시켜야 한반도 화해·협력의 활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경추위에는 경의선연결문제, 임진강수방사업, 임남단 수자원 공유 등 각 현안들이 걸려있어 개척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면서 "북측이 준비되는 대로 빨리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업들은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일이기 때문에 남북에서 군사적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면서 "경추위를 군사당국자회담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등이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설치장소는 금강산이 유력시된다.

정부는 조만간 3당 대표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남북 실무접촉의 경과와 장관급회담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남북장관급회담의 장소로는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14~17일 100여명의 북측 참가

단이 참가하는 8·15 민족공동대회의 장소는 서울 잠실 펜싱경기장, 숙소는 워커히 호텔로 잠정 결정됐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장관으로부터 남북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경과를 보고 받고 "어떤 새로운 합의물이 이끌어 내기보다는 이미 합의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강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 이후 잘 진행되다가 지난 1년반 동안 정체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는 남북간에 합의된 것 가운데 가능한 것부터 이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임성준(任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부산 아시안게임 침관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비록심기자 youngtan@kdaily.com

'先군사회담 後경협' 제의방침

정부 남북장관회담서... 철도연결등 군사적 담보 필요 판단

丁 통일장관, 김대통령에 보고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 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선(先)군사당국자회담 개최, 후(後)경제협력추진위 개최' 일정을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추위에서 다루질 사안들이 군사적 보장을 필요로 하는 데다 서해 교전 사태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군사당국자회담에서 북측이 먼저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대화 경협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5면)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장관급 회담 실무대표 접촉 결과별 보고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경추위와 군사당국자회담은 이르면 이달수복 좋다"면서 "두 회담이 열린다면 군사당국자

담이 경추위보다 먼저 열리거나 같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경추위에서 논의될 남북 철도연결 문제나 임진강 수방사업 등은 휴전선이 끼여있는 문제라던 만큼 실제로 실행되려면 군사적 이행 보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정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이번 장관급회담은 새로운 합의물이 이끌어내기보다 이미 합의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 조치를 강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3당 대표를 직접 방문해 잘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김대중 북한 국방위원장의 부산 아시안게임 침관 가능성에 대해 "진척이 어느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이번 실무접촉에서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책도, 책임자 처벌도,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이상재 정책위의장은 "쌀 지원 등이면협약이 공급하며 북한은 경제난 타격을, 남한 정권은 재·보선과 대선 등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주고받기 협약설도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홍 신협호기자

8·15 행사 남북대표단 방북

민회협과 통일연대, 7대 종단 등으로 이뤄진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대표단 6명이 8·15 민족공동행사 2차 실무접촉을 위해 5일 방북했다.

대표단은 금강산에서 2박3일 동안 북측 민회협과 실무접촉을 갖고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민족공동행사 북측 참가단 규모와 구성, 공연예술, 행사 장소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신창호기자

순풍 타는 '한반도 해빙무드'

불과 한 달여 전만해도 긴장이 고조되던 한반도에 대화 기운이 감돌고 있다. 한반도 경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던 6·29 서해교전 해법을 북한이 해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남북간에는 지난 2~4일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통해 한 차례 대화했고, 이어 장관급회담·최신지회담·경제추진위원회·군사당 국지회담 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산상봉·각종 회담 동시다발 예상 美와도 대화...김정일 결단 내린듯

8·15 민족통일대화와 부산 아시안경기 대회의 북한 참석, 추석에 즈음한 이산상봉 등 민간행사도 예정돼 있다.

북-미간에는 미국의 대북특사 방북일정이 아직 잡혀지는 않았지만 대화재개에 합의한 만큼 각종 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북-유엔시간 정상급 회담도 6월 열렸다. 북-일간에는 오는 18일 최성림이 평양에서 열리기로 돼 있고, 국교정상화를 위한 실무접촉 협상도 이날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양상은 한·미·일 3국이 주도한 '패리 프로세스'를 북한이 수용, 조병학(趙炳學) 인민군 총정치국장-올브라이트 미 국무부 판의 상호방문이 성사된 미국 플린턴 정부 말기 때의 북-미 관계를 연상케 한다.

한반도 대화 기운의 중심에는 북한이 있다. 서해교전 유감표명 후 미국, 일본에 대한 잇단 북한의 대화재개는 여러가지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요 몇 년사이 북한이 남한 및 한반도 주변국가들에 동시다발적으로 관계개선 메시지를 보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에서의 적극적인 자세도 눈에 띈다.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외무장관회의에서 북-미 및 북-일 대화재개를 도출한 백남산(白南善) 북한 외무상의 인연이 이를 증명한다. 금강산 실무접촉에 나온 북측 대표들의 태도도 격변해 친화적이고 호의적이었다고 회담 관계자들은 전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8·15 민족통일대

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100명의 북한주민과 200명의 운동선수들을 각각 파견키로 한 것도 '자본주의 사조유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으로서 대단히 파격적인 조치다.

이로 미루어 북한의 최근 대화재개 개선 조치들은 최고권력자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모종의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한다. 정부당국자들이 최근 북한의 자세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배경이 있다. 각종 회담과 행사에서 과거보다 더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북-미 대화와 관련해 태도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북측이 대화를 재의한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북대화 를 재의하면서 북한의 대당실상무기 문제와 재래식무기 감축 등 의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뒤 어찌 방침 변화가 없다.

북한은 한동안 미국의 일방적 대화의 재 실행을 비난했으나 이번에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미국의 대북특사 수용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경제개혁을 성공을 위한 외국의 지원과 협력에 확보 하기 위한 처연인지, 아니면 미국의 일관된 대북강경태도에 위기감을 느낀 데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한반도정세의 전도는 밝은 쪽이다.

조영연기자 chy@kjh.yonhap.com



지난 4월 30일 금강산에서 가진 제4차 이산가족상봉에서 북한의 남관 올브라이트(왼쪽)를 만난 남한의 경거일 김(오른쪽)가 자비를 앞두고 오열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철도·도로 연결 우선 논의

• 장관급회담 의제

남북장관급회담 의제는 어떻게 될까. 여대경 북한은 합의해놓고도 상심하지 않은 적이 많았다. 다만 금강산 실무접촉에 임하는 북측의 자세가 전과 달리 적극적이었던 점이 밝은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고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경제선과 관련, "현 정부 임기가 이뤄지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북한군의 군사시설 기반정비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무게를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동해선의 남쪽 부분의 공사를 우리가 먼저 착수하면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러시아쪽에서도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를 연결한다는 가정에 북측의 노후선 동해선 철도를 보수해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철도 보수공사 지원을 노려 남측이 강릉~고성간 철도부설을 먼저 해주기를 바란다는 예가다.

<군사당국자 회담>=정세연(丁世彦)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의

장관급회담 의제 및 남북 입장 비교

남측 입장	북측 입장	북측 입장
공민산 군사시설 보수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유치사 협의
출장 개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	형식적 안화
북측의 경제특구 지정	개성공단 건설	남측이 지원관련법 제정해야
한반도	북측 경제시설단기건설	한·미·일 포괄적 안화
출사 개시	남북군사당국자회담	남북통일재단 방위어야
이산가족상봉 실시	이산가족 상봉	최신지회담에서 논의

군사적 신뢰구축 주요문제로 부각

미를 두고 있다는 예가다. 서해교전 이후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또다시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헝가리 연결 등 초보적 신뢰구축 조치가 합의될 경우 남북관계가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군사당국자 회담이 성과있게 이뤄질 경우 경제선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목로개설 등 비무장지대(DMZ)를 넘는 경험 사안들이 열거될 수 있다.

<제2차 남북경제추진위원회 및 경제시설단 파견>=북측은 합의한, 개성공단 건설, 경제시설단 파견 등 경제난 타개에 도움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경제추진위는 식량지원 등 인연이

깊은 만큼 심사가가능성이 높다. 경제추진 예산 대비 약 30만 달러 문제 및 개성공단 건설, 일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측 경제시설단과 방군이 실현될 경우 정부는 단정적으로 정상회담(黨政會) 노동당 부부장 등을 협치고 있으며, 이들은 중소기업 및 정보기술(IT)산업에 몰려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 아시안경기대회>=북측의 대규모 선수단이 참석하는 만큼 북한 고위급 인사와 방문이 예상된다. 지난 월드컵 때 방한설이 들었던 김용중(金容中) 노동당 비서, 정몽준(鄭夢準) 의원에게 월드컵참승 축하서신을 보낸 이광근 무역상 겸 북한 축구협회장, 정몽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등의 참석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장외대축은 김정일(金正日) 국무위원장의 방한설에 대해서 "틀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영욱기자 wooyuk@kjh.yonhap.com

남·북·북·미·북·일 회담 일정표	일정	장소	주요 의제
제7차 장관급회담(서울)	8월18~14일	제2차 남북수립위, 군사당국자회담 북측경제시설단기건설 등	
8·15 민족통일대회(서울)	8월15~16일	북측 대표단 100명 서울방문	
북·일 최상급회담(평양)	8월18~19일	북측 일관적인 고강도, 일관된 통일통일당시 수제비, 개사시 시과 및 방상	
북·미 외교정책심회 국공산합동(한소 방북)	8월25일(미하방)	미 방	
남북측 구공기회담(서울)	8월8일	북한 출구단 서울방문	
제4차 이산가족상봉(금강산)	추석연휴(추석)	북한 추수단 100명 등 참가 북부산 실외상봉 등 남북 추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9월28일~10월14일		

침묵·비방서 '관계개선' 급선회

北, 정말 대화·협력 나서나

남북 실무접촉 합의 놓고 전문가 견해 엇갈려

침묵과 비방에서 대화와 협력 자세로 바뀐 북한의 태도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최근들어 북한이 이례적으로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뿐 아니라 우리측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진짜 북한이 변했다"는 분석과 "실리를 챙기기 위한 순간적인 행태"라는 심반론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변화가

서 오랫동안 당국자간 대화채널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지시사항에 익숙한 북한 당국자들의 태도가 사상 유례없이 유연하고 우리측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이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도 포함돼 있다.

북한은 그동안 남측 대표단의 압도 리콜 잡는 방식의 회담 형태에서 탈피했다. 우리측이 서해교전과 관련, 북측의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



대북 경수로 논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5일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진행이사회를 열고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는 장신섭 경수로기획단장, 최 프리처드 미국 대북담당 대사, 스티브 기쓰너러 일본 대사, 장 피에르 뢰 유럽연합(EU) 대사 등이 참석했다. 김자훈기자

경제개혁·지도부 행태등 '변화' 평가 속 대북원조 노린 의도적 계산 주장 맞서 정부 공식입장은 "진전 태도에 긍정적"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양측의 관계 개선을 위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가 전쟁위협, 전향적이라고 평가하는 대다수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와 같은 견해다.

그 근거로 북한이 인근, 물가, 원유 동시인상과 노동인센티브제의 도입 등 대대적인 경제개혁에 나서는가 하면 그동안 남작했던 미·인과의 접촉을 다시 시도하는 지도부의 행태를 들고 있다. 또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나타난 북한 대표단의 유연한 태도와 서해교전 이후 우리측에 먼저 대화제의를 해오는 적극성도 중요한 이유다.

정부의 판단에는 이번 실무접촉이

히 요구해 회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북측은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한다며 곧바로 한안 논의에 들어갔다.

북한은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기간에 미국의 핵사 파견을 다시 추진키로 하는가 하면 일본과는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과 인도적 현안 논의를 위한 직선지회담도 합의로 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변화는 대상과 내용면에서 매우 포괄적이어서 뭔가 작심한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는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가 일시적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보여

준 대외 유희체스치는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남북대화 장구 복원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북원조를 받아내려는 의도적 계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연수 교수는 "실무접촉 결과물 보면 매뉴얼은 풍성하지만 실제로 주문해서 먹을 음식은 그리 많지 않은 느낌"이라며 "뽀뽀하게 찌어진 대남사업 일정을 북한이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지

급의 국제정세가 북한의 진략적인 제스처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정부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시소한 문제들을 북한이 꼬무리잖아 그 이전까지의 합의사항을 모두 깨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5차 장관급회담에서도 북측은 이번 실무접촉 결과만큼 많은 것들을 약속했다가 11일 6차 장관급 회담에 가서 이면이면 핑계를 대며 아무 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실명이다.

신창호기자 procol@kmbi.co.kr

한겨레

한나라 "남북실무접촉 이면합의" 의혹제기

한나라당이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 접촉 결과를 두고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할 때는 등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경계심 속에 주시하고 있다.

5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금강산 실무접촉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와 경고성 발언이 잇따랐다. 서청원 대표는 "금강산 회담에서 서해교전 재발방지를 명문화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장관급회담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않을 경우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싼 자원을 비롯한 이면합의가 뭔지 밝혀야 한다"며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정부는 재·보선과 대선을 위해 남북대화를 이용하려는 주고받기식 합의일까 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방북설도 한데 묶어 "청와대의 공작 지시가 있다"고 주장한 뒤 "북한을 대신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대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소자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회창 후보의 한 측근은 "실무 접

촉에서부터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라는 큰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장관급회담에서 김정일 국민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더 중요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으로서는 '햇볕정책' 비판과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반대 등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전면적인 시합대에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진득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박용민 기자 piaou@hani.co.kr

정부, 남북장관급회담 준비 박차

기존합의 이행에 주력

정부는 장세현 통일부 장관이 5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김남 규남 실무대표 접촉결과를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12~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대역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장관급회담이 북한과의 현안을 논의하는 포괄적 청구라는 점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있는지 감시하는 한편 그동안 미루어놓았던 합의사항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김 대통령은 5일 장 장관에게서 남북 실무접촉 결과를 보고받고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 이미 합의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강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의선 복원사업은 군사회담 통해 해결 NLL논쟁 불씨 여전

정부는 특히 경의선 등 남북 철도·도로 연결 문제가 늦어지는데 휴전선 안에 건설을 강요하고 있는 북한 군부의 반대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군사당국자 회담에 주력하기로 했다.

장 장관은 "철도 연결과 임진강 수방사업 등은 비무장지대(DMZ)를 넘나드는 시인인 만큼 먼저 군사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군사당국자회담은 경주위와 함께 가장 시급한 회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짚지 못하고 교란 상복으로 인식

해온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합의해 감 지원 청구인 김철수친위까지는 북측이 회담 상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도 쌀을 지원하자는 쪽으로 합의했다"며 "주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반감이 누그러지고 이 같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쌀을 지원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해교전 유감표명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다고 있다. 장부속

에서는 군사당국자 회담에서 책임자 처벌 등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친북가층에서는 북측이 북-유연시간 정상급회담을 제의해 서해상 북방안계선(NLL) 문제 불복 미군측과 협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해교전사태를 계속 문제삼을 경우 어렵게 합의한 회담일정이 또 다시 무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실무접촉의 합의사항에는 다양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사전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경필기자 philip@dk.co.kr

남북 축구경기 논의 본격화

남북한 실무대표 접촉의 결과물로 서해교전의 불씨를 뜨게 된 가운데 오는 9월로 예정된 남북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및 위안 실무회의가 본격화된다.

민간 차원에서 이 친선경기를 추진해 온 유럽-코리아재단(이사장 장자호 그로하, 지동훈)은 5일부터 통일부, 문화관광부, 서울시, 대한축구협회 등 관계부처와 실무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코리아재단은 실무대표 접

촉을 통해 친선경기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의사가 확인된 만큼 이번주 안에 관계부처와의 협의할 모두 마칠 계획이다.

이 재단의 박근혜 이사 등 이사진은 지난 5월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한 축구 친선경기를 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의 축구대표팀은 9일 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할 예정이다. 북측 대표팀은 9월 6-9일 서울에 머무른다. 니경필기자

한 "포게임때 김정일 깜짝답방 가능성"

창외대 "아는바 없다" 일축

한나라당이 남북 관계의 발전 조짐에 "신북풍"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 정보통신부 관계자가 5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관이 대북 관계 개

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제가 보인다"면서 "현재로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9월 부산 아시안게임 개막의 이나 폐막식에 참석하는 '깜짝 답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김 위원장의 아시안 게임 참관 가능성에 대해 "진짜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민준기자

美·英·佛 화해기류 환영 日 보수언론 회의적 반응

• 주요 외신 반응

세계 주요 언론들은 오는 12~14일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는 데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보수적 성향의 요미우리(讀賣)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다소 조심스러운 시각을 내비쳤다.

미 CNN방송은 4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할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이 장관급 회담을 다시 열고,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하는 등 한반도에 화해기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남북, 경색후 고위급 회담 재개'라는 기사를 통해 "양측간 화해기류를 정상적으로 복원시켰다"고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 이번 회담으로 남북한은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동결됐던 평화과정을 본격적으로 출발시켰다고 논평했다.

영국 BBC방송은 이날 남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특급 회담을 열게 됐다고 보도하면서 북한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는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경기에서 처음 참가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BBC 인터넷판은 전날에도 '북

한의 매력적인 공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외부세계에 대해 번덕스러운 행태를 보였던 북한이 대내적으로 시장경제 개혁의 전조를 보이는 한편 일본 및 미국과의 대화재개를 제의하는 등 최근 새로운 외교를 선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남북한이 지난 6월 서해교전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장관급 회담을 갖게 됐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결정은 남북 대담(화해)의 또 다른 징표라고 해석했다.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은 "남북관계의 발전은 무엇이 합의됐는지에 있다기 보다 북한이 합의사항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은 (장관급 회담을 통해) '햇볕정책'을 폐기한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2월로 끝나게 됨에 따라 쌀 지원 등의 실리 확보를 겨냥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서해교전에 대한 한국내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진호기자 j@kyunghyang.com

北도발 사과·예방책 실종 재보선 정치적 이용 의혹

• 한나라당 반응

한나라당은 5일 남북실무대표 접촉 결과에 대해 "서해무려도발 사과나 방지책 등이 빠져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서해교전과 관련된 별다른 합의가 없는 점을 들어 "보급선거 등 다른 정치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가 요구되지 않으면 서해교전 재발방지책 명문화나 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이 이번 급급한 회담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서울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는 재발방지책과 사과를 받아내기를 기대한다"고 밝

혔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도 "쌀(지원)을 비롯한 이번 합의가 번지 의심이 간다"며 "북한과의 주고받기 합의도 불명확한데 현정권이 폐색이 짙어진 재·보급 선거에 남북대화를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경계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실무접촉을 하면서 '잡음'은 줄었다고 했던 목소리는 국민을 제3차에 불과했다"며 "현 정부는 경제력있는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이 이벤트성 행사야 아닌 군사적 신뢰구축에 기초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승욱기자

utopia@kyunghyang.com

고속정 본격인양 지연

서해 기상악화로

6·29 서해교전에서 침몰한 해군 고속정 인양과 침몰된 인양국(海軍 11-27) 중사에 대한 수색작업이 5일 오전 시작됐다. 그러나 이날 태풍의 영향 등으로 침수요원의 인양(人水)은 당분간 미뤄졌다.

국방부 황의돈(黃義敦) 대변인은 이날 "연평도 서쪽 해역에 구조항을 투입하는 등 계획대로 인양·수색 작전에 착수했으나, 서해상에 내리던 폭풍주의보 때문에 본격적인 작업은 법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군 본부도 "지गत(地況) 전선이 불발 때까지 인양작업이 잠시 보류되지만 날씨가 풀리면 곧 입수작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날 오전 연평도 서쪽 2.5km 해상 침몰지점으로 출동한 400kg급 해인양을 비롯한 구조 함정들은 연평도 부두로 대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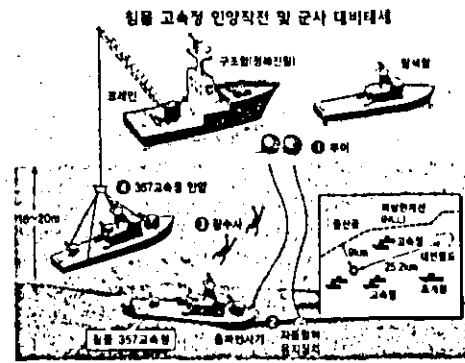
그러나 인양작업에 대한 전방적인 지원권을 지닌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남북간 회담 무드가 조성되는 듯하자 시종리 인양작전 규모를 축소하는 등 말뚝계 작전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집은 6·29 서해교전이 북측의 명백한 도발이라는 점 때문에 주한 미 해군 등의 협조를 받아 대규모 해상 무력지원 없이 인양 작업을 벌이기로 했었

다. 합집은 "북한에 불필요한 경제 태세나 갖추게 할 수 있는 미 해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이지스함 등은 부업요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 이지스함은 범상시와 마찬가지로 공해 상에서 대기중이다. 이날 인양·수색에 필요한 필수 장비인 구조함, 바지선, 해상크레인과 초계함·고속정 등 인양인양 지원함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합집은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 측에 인양작업 일정에 대해 사전통보할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태풍 여파에 따른 지연까지 조속한 인양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인양작전 전비태세를 지휘하는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15개국 군사장관위원회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현장에 상주시켜 작전 전반을 관찰하고 북한군의 작전일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할 예정이다.

○오세영기자 pabst@kd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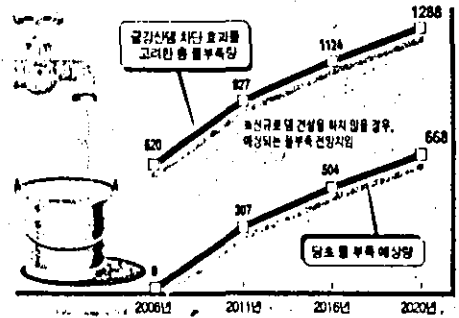
- | 고속정 인양작전 단계 | |
|-------------|---|
| 1단계 | 합계 인양작전 및 초계함·구조함 배치 |
| 2단계 | 합계 인양작전 지원함 투입(AOPSI) 이후 고속정 수색이 되도록 교섭 |
| 3단계 | 침수, 침몰지 수색 및 인양작업 진행 |
| 4단계 | 합계 인양작전 종료 |



“금강산담 문제 北서 대화 거부땀 국제기구 통해 공론화”

정부, 내부 방침

■ 건교부가 전방하는 한강 수계 물 공급 전망(단위 1000t)



북과 위험과 함께 한강 하류에 물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금강산담 문제에 대해 북한이 남북대화할 계속 거부할 경우, 우리 정부는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정식으로 공론(公論)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것을 염려해 "금강산담 문제를 대외로 풀어 나간다"는 발언 되풀이해 왔으며, 최근 북과 위험을 인정해 우리 측 '빙하의 덩어리' 45m 높여 쌓는 중공공사담 9일 중 착공하기로 결정했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남북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UN이나 국제대회의 등 국제기구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경협추진위원회(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통해 금강산담 공동조사와 수자원의 공동이용을 북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 수계(水系)의 물 부족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담봉과 위험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건교부 관측에 따르면 2000년 10월 금강산 담 1단계 공사가 끝난 뒤 화천댐의 물 유입량은 연평

“한강물 年6억t 줄어 물부족 심각” 經協추진위서 공동조사 제의키로

군 29억t에서 12억t으로 17억t(50%)이나 줄어 들었다. 건교부 김철세 수자원국장은 "물수기에 그날 배대로 빠져 나가는 물을 제외하고도 금강산담 건설로 인해 한강 하류에서 연간 6억2000만t의 물을 차단하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담이 아니라라도 잘 사용하면 증가로 2000년 이후 물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금강산담의 물 차단 효과까지 겹치면서 2010년 이후 물 부족량은 총 10억t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 설명했다.

따라서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면 그만큼 대안댐 추가 건설해야 하지만 엄청난 재원 조달과 환경 파괴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그동안 하천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이 UN 등 국제기구인 통해 해결된 사례가 적지 않다. 70년대 인도와 파라카(Faraka) 댐을 건설, 건지스강으로 흘러가던 물의 일방적으로 후달리기로 방향을 돌렸을 때 당시 하류에 있던 방글라데시의 건지스강 물이 줄어들면서 배달물이 육지로 유입돼 농토가 황폐화되고 무척추동물 직간접적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됐다.

마침내 UN이 중재에 나섰고 두 나라는 1977년 11월 '건지스강의 공동이용 원칙'에 합의했다. 캄보디아·라오스·태국·베트남을 흐르는 메콩강도 오랫동안 인접국 간에 분쟁의 씨앗이 되어오다 UN의 중재로 타협점을 찾았다.

UN은 이런 분쟁들을 거울삼아 지난 97년 '국가 간 공유하천은 상·하류 국가가 협의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는 국제하천의 이용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분쟁해결 창구인 국제재판회의는 세계 환경국이 참여, 수자원 개발과 대항담 문제급 다루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도 마침 연례총회가 오는 9월 브리진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주통신기자 nbcha@chosun.com



對北 경수로사업 논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기획단은 5일 서울 삼성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김영이사 회를 열고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오대근기자

서울경제

2002. 8. 6(화)

北韓 변화 이끄는 탈북자들

중국 옌지(延吉)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탈북자 이모(58)씨는 중국 경찰에 붙잡히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중국 공민증(公民證)이 있기 때문이다. 이씨가 두만강을 처음 건넌 것은 3년 전. 옌지에 도착한 뒤 조선족 동포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 호구(戶口·호적)를 만들었다.

이씨가 한 달에 버는 돈은 약 400위안(1원화 약 6만원). 이 돈을 알뜰히 모아 1년에 한두 번 평양으로 돌아간다. 중국 인민폐와 식량, 옷, 의약품 등은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씨는 한국에 갈 마음은 없다.

지난달 정신문화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씨처럼 중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국경을 왕래하는 탈북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체포의 두려움 속에 한국행을 기다리는 탈북자가 많고, 그들 중 비정부기구(NGO)의 도움으로 망명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행 대" 중국에서 돈과 식량을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국경을 넘나드는 탈북자도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단속 느슨... 中왕래 찾아져

이들의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중국 학자는 "2~3년 전까지도 중국 동북3성(東北三省)의 조선족 인구는 국제결혼과 해외 노무 출국 등으로 175만명까지 줄어들었으나 작년 말 인구조사에서 갑자기 204만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이것은 탈북자들의 신분변화와 관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조선족 총각과 결혼하거나 호구를 취득하는 탈북자들 때문에 조선족 인구가 갑자기 늘었다는 해석이다.

중국 학자들은 또 북한이 강제 송환된 탈북자의 수용 기간을 종전의 6개월~1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고 전했다. 탈

북자들을 기뻐두고 교화하는 체계가 그만큼 느슨해졌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국경 수비병들도 탈북을 방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다 보니 북·중 국경선 전역에서 탈북이 일어나고 있으며, 한 번 붙잡혔던 사람이 재탈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중국 학자들은 지적했다.

바깥세상 정보 北에 전파

이렇게 보면 중국 동북3성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 주(州)와 닮은 대가 있다. 인종과 종교가 동일한 발루치스탄 지역이 아프간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었듯이, 동북3성 역시 탈북자들의 거대한 '저수지'로 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왕래(往來) 탈북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다. 중국에서 시장경제를 체험하고 KBS 위성방송으로 한국사정에 밝아진 이들은 북한 사회에 인민폐와 옷가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무형



池海範

(無形)의 정보들을 끊임없이 쏟아놓을 것이다. 한 명의 탈북자가 10명의 주민을 접촉한다고 쳐도,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에 눈을 뜨게 된다.

이런 점에서 탈북자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왕래 탈북자들'은 북한을 급격히 변화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서서히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에 압력이 될 것이지만, 북한의 장래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햇볕정책 때문에 남한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던 탈북자들이 햇볕정책의 목표였던 북한의 변화에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탈북자를 보는 시각과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 때가 왔다는 생각이다.

/국제부 차장대우 hbje@chosun.com

北, 서해도발 사과안해

유엔사·北 장성급회담... 무력충돌 방지노력 합의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은 6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3차 장성급 회담을 열고 서해교전 같은 무력충돌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유엔사측 대표인 제임스 슬리건

부참모장(미 공군소장)은 이날 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매우 긍정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공동 관심사인 긴장완화와 상호 옹호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군사적 충돌 방지책 위

해 유엔사·인민군 간 핫라인(군사 직통전화) 신설, 서해상 남북 합정간 신호규정 신설, 대규모 훈련 상호 통보 및 참관, 실무접촉 정례화 등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 대표인 이정석(李廷奭) 공군 준장이 기초발언을 통해 서해교전에 대한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

축 조치를 제의했으나 북측은 경청만 했을 뿐 사과나 유감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유엔사측은 서해교전과 관련,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종자 수색과 고속정인양작전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북측에 통보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유엔사와 북한 간 새로운 해상경계선 협의가 필요하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양측은 영관급 실무접촉을 통해 다음 장성급 회담 일정을 협의키로 했다.

廣報記者 kysu@chosun.com

경향신문

2002. 8. 7(수)

남북 군사대화 물꼬 트였다

• 유엔사-북 장성급회담 의미

20개월 만에 재개된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은 지난 6월29일 발생한 서해교전 이후 굳게 닫혀 있던 남북간 군사분야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 양측이 서해교전 사태와 같은 남북한 해상충돌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책을 적극 논의한 점은 '해상교전-한반도 긴장조조'라는 악순환을 대화로 풀겠다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성과다.

그러나 북측이 6·29 서

해교전 사태에 대한 도발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마

디의 사과표명도 하지 않

아 합의가 성실치 이행될

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성과=장성급회담이 재개됐다는 점 자체가 성과다. 북측이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증으로 한 후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의 청신호라는 것이다. 특히 북측의 이같은 태도는 제임스 슬리건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일행의 방북 및 오는 12~14일로 예정된 남북정권급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케 한다.

양측이 서해교전과 같은 작대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키로 한 점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양측이 이를 위해 무력충돌 예방 및 신뢰구축방안을 집중 논의, 통신수단 유지와 감도회의

를 협의기로 합의한 것은 공동노력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점이다.

양측이 해상충돌 방지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한간 신뢰를 구축하지는 데 의견일치를 모은 것 역시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쳐진다. 비공개 원칙에 따라 무력충돌 예방과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양측은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회담장의 분위기가 부드러우면서도 '실무적'이었다"는 참석자들의 전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물꼬 남긴 교전책임 논

란=유엔사측은 회담을 통해 6·29 서해교전의 책임이

북한군측에 있음을 북측이

주지시켰다. 유엔사측은 북

측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

히 서해도발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북측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북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회담에 참석한 이정석 합참 군사정보처장은 "북측 대표들은 유엔사측의 사과요구 등에 대해 어떠한 유감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히 서해사태를 '쌍방간에 일어난 교전'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슬리건 대표는 "쌍방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서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북측이 여전히 교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이번 합의의 이행 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점이다.

김중훈기자 kjk@kyunghyang.com

“무력충돌 재발방지 공동노력”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 …대화로 문제해결 합의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은 6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에서 제13차 장성급 회담을 열고,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의 방지와 신뢰구축을 위해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50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유엔사와 북한군은 앞으로 장성급 회담 또는 실무 회담을 계속하기로 하고, 새로운 회담 절차와 실무회담의 정기적 개최 문제도 논의했다.

유엔사 수석대표인 제임스 슐리건 부참모장(미 공군소장)은 이날 회담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긴장완화와 무력충돌 재발방지 등에 대해 토의했고, 북한도 몇가지 제안을 했다”며 “고속정 인양과 실종자 수색작전을 북쪽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유엔사 쪽에서 슐리건 소장과 이정석 준장(한국), 이안 페트코프 대령(오스트레일리아), 폴린 그리브스 대령(영국), 그리고 북쪽에서는 리친복 상장, 조동현 소장, 박임수 대좌가 각각 참석했다.

이 준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 경비정의 서해도발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와 관련자 처벌 등 선의있는 조치를 촉구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제의했다”고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북한군 수석대표인 리 상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서해상 군사적 충돌의 재발을 방지하고 합정 인양작전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상 충돌의 원인은 명확한 해상경계선이 없기 때문인 만큼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황 대변인이 전했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앞으로 있을 양관급 실무회담을 통해 다음 장성급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東亞日報

北, 서해교전 사과 안해

유엔사-北 장성급회담 “군사충돌 재발방지 노력”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은 6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2000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장성급회담(13차)을 다시 갖고 서해교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날 유엔사측 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슐리건 부참모장(미 공군소장)은 회담 직후 “북한측에 서해도발에 대한 사과 및 관련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북한측은 경청만 했으며, 해상 충돌사태의 원인은 명확한 해상경계선이 없기 때문이므로 이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해교전의 정전협정 위반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북측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앞으로의 회담을 고려해 일단 공개를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에 참석한 이정석(李廷奭) 합참 군사정보처장(준장)은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측의 구체적인 사과나 유감표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사는 이날 서해교전에서 침몰된 우리측의 고속정 인양 및 실종자 수색작전을 북측에 통보하고, 작전기간 중 상호간의 오해 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해 양측의 통신 유지와 실무회담 등을 제의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무력충돌 막자” 예상밖 합의

유엔사-北 장성급회담 성과

6일 판문점에서 열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제13차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교전과 같은 적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경의선 철도·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합의서를 서명·비준하기 위해 열린 제12차 회담을 제외하곤 단 한번도 합의를 도출해 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은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 서해상에서의 '긴장 완화'와 '오해 방지'에 협력하기로 한 게 사실상 전부일 뿐이다.

그럼에도 양측이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장성급 회담을 지속하자고 뜻을 같이한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초의 디딤돌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과거와 달리 유엔사와 남측의 강경한 기초발언을 경청하는 등 시종일관 부드러운

北, 억지주장 않고 부드러운 태도

南-北, 北-美 대화등 긍정적 신호

회담 태도를 보인 것도 앞으로 있을 장성급 회담의 전망을 밝게 한다. 1998년 잠수정 침투사건과 99년 연평해전 직후 벌어진 장성급 회담에서 정치선전식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던 과거 북측의 회담 태도와는 판이하기 때문이다.

회담에 참석한 이정식(李廷奭·준장) 합참 군사정보차장은 “회담 분위기가 대단히 좋았다”면서 “또한 양측이 언제든지 만나 대화로 해결하자고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에 장성급 회담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슐리건 유엔사 대표도 1시간50분간에 걸친 회담을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회담장을 나와 자유의 집 1층 로비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회담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북측이 회담에서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북한 정권의 기대감이 담겨 있다는 게 남북관계에 정통한 군 고위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는 “북측의 무력도발을 항의하기 위해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군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처

음”이라면서 “이는 12일부터 있을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북·미대화 등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및 금강산관광 합성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시작될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도 이번 장성급 회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측으로부터 서해교전과 관련해 명시적인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것은 남한 보수층의 반발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전통문에서 밝힌 수준 외의 어떤 사과 표명도 하지 않아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사과의사를 밝힐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李군사정보차장은 “북측이 직접적인 사과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찬복 북측 대표가 기초발언을 통해 “서해상 무력충돌의 원인은 명확한 해상 경계선이 없어서이며,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게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유엔사와 국방부는 NLL 문제를 장성급 회담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유엔사는 “서해상에서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설정하는 문제는 남북 간에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NLL 철폐를 비롯한 새로운 해상 경계선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며 논의할 문제”라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장성급 회담에서는 북한 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NLL 문제를 제외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 대책 등 신뢰구축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무력충돌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양측은 검토과정을 거친 뒤 실무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장성급 회담을 다시 열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chlee@joongang.co.kr>

유엔사-북, '설전'에 상개고 우호분위기

■ 장성급회담 인콰

6일 열린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은 최근 남북 해방관계를 반영해 서해교전이라는 약재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우선 의미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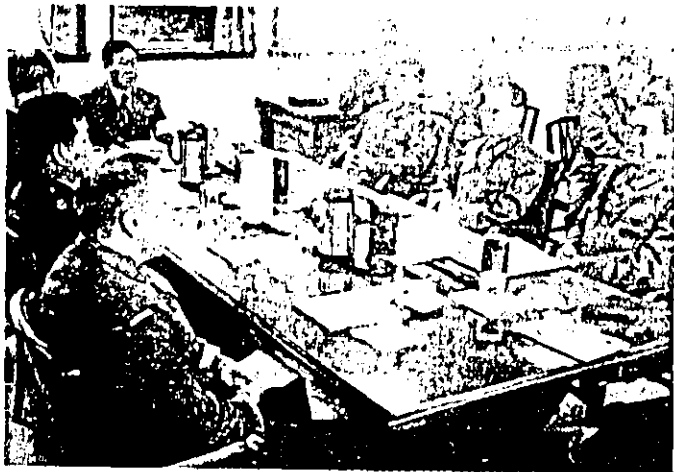
군의 한 관계자는 "서해교전 이후 처음 열린 회담이어서 입씨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양쪽이 서로의 주장을 경청했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서해교전과 관련해 북한군측은 '유감' 또는 '사과'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유엔사측이 기초발언을 통해 서해교전을 강력히 합의하고 사과와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한 것을 경청한 대목은 달라진 모습이다.

이는 1999년 발생한 서해교전 이후 열린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 분위기와도 크게 다른 것이다. 당시에는 △서해교전의 발생원인 △책임자 처벌 △북방한계선 문제 등을 두고 양측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 별다른 진전 없이 회담을 마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유엔사와 북한군이 앞으로 있을 장성급 회담의 절차와 실무회담의 정기적 개최 문제도 논의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다음 회담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회담 대표인 제임스 솔리건 미 공군 소장은 "북한도 긴장 완화와 무발총돌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또 회담에 참석한 이정석 공군 준장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이 6일 오전 판문점에서 제13차 군사정전위 장성급 회담을 열고 있다. 북한은 왼쪽부터 조동현 소장, 리찬복 상장, 박입수 대좌, 유엔사측은 앞에서부터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언 페트코프 대령, 한국의 이정석 준장, 미국 제임스 솔리건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 실무회담 정기개최등 논의 북, 한국군 발언인정 주목

은 "앞으로 있을 회담에서 남북 긴장완화, 무력충돌 예방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실무회담을 계속하면서 필요할 경우 장성급 회담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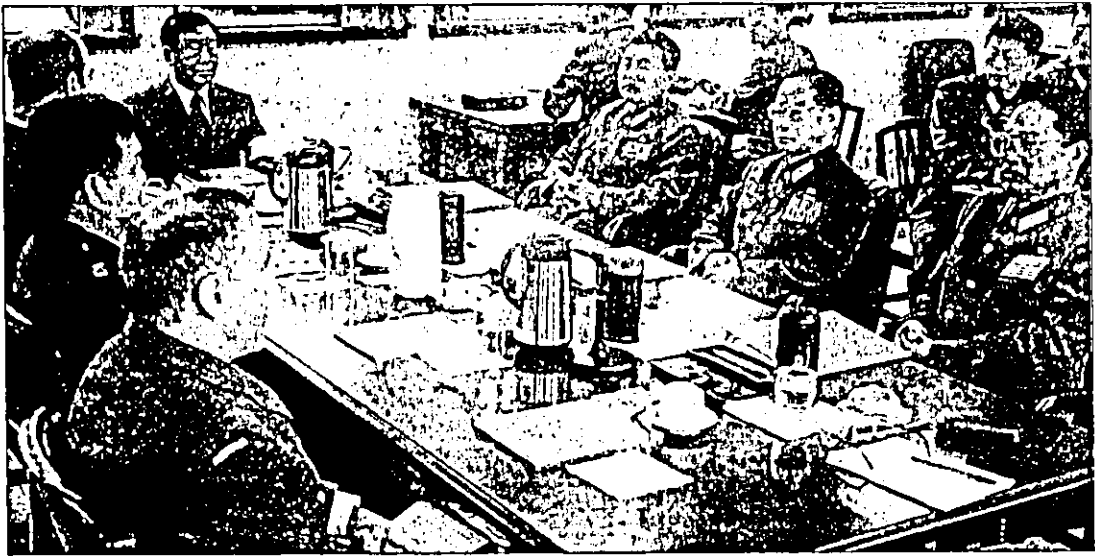
이에 따라 군 한쪽에서는 장성급 회담이 남북간 군사당국자 간의 '대화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남북한은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 관광로 개설, 남북간 실질적 긴장완화 등 급박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군당국 간 회담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지나는 경의선 철도구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점진협정의 한 당사자인 유엔사와의 협의도 필요해, 남북한과 유엔사가 함께 모이는

장성급 회담과 실무회담이 3차 간의 효과적인 논의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동등 발언권'을 그대로 인정할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때 북한은 점진협정이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에 맺어진 협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한국군의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발언 내용을 무시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날 한국군 대표인 이정석 준장이 회담대표인 솔리건 소장과 함께 기초발언을 한 것을 경청했다. 북한은 이날 회담에 앞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한국군이 기초발언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길 기자 skkim@hani.co.kr



주한유엔사령부와 북한의 제13차 장성급 회담이 서해교전 이후 처음으로 6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렸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부드러운 北

■ 장성급회담 이모저모

예상밖 협조적 태도로 1시간50분간 의견절충

‘예상 밖이다. 그러나 북의 진의는 두고 보자.’

6일 유엔사령부와 북한의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이 적극적이고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서해교전으로 냉각된 남북, 북미관계 전반에 청신호를 울리고 있다. 양측은 북의 온건한 태도로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진통을 겪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긴장완화와 적대행위 재발방지에 대한 원칙적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이다.

회담에 참석한 이정석(李廷奭) 합참 군사정보차장(공군 준장)은 ‘양측이 언제든지 만나 대화로 해결하

기로 뜻을 같이하는 등 회담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과거 장성급 회담이 1시간을 넘긴 경우가 드물었으나 이번은 1시간50여분간 진행될 정도로 양측이 의견 절충에 힘을 쏟았다는 후문이다.

이날 논의 내용은 장성급 회담의 관례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양측이 재발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는 등 실무회담 수준의 논의가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유엔사측은 서해교전이 북한의 명백한 정진법 위반임을 강조하며, 북측에 사과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해상충돌의 원인은 명확한 해상 경계선이 없기 때문’이라며 NLL문제의 우선 해결을 주장했다. 이는 북측이 최근 잇달아 NLL 철폐를 강력 주장해온 입장과 궤를 같이하지만 강도는 다소 떨어진 느낌이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최근 재개된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연관된 ‘다목적 전략’에 따른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북측은 서해교전후 첫 고위급 접촉이 난항을 겪을 경우 후속 장관급 회담과 북미대화 등에 악영향을 끼쳐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내에서는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상당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측의 유화적인 분위기를 ‘진의’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경계론도 퍼고 있다. 세무 사항에 들어갈 경우 북한측이 NLL 철폐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등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대 외교안보대학원 남주홍(南柱洪)교수는 ‘장성급회담이 20개월만에 열려 정전체제를 논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북측이 이번 회담에 나섬으로써 향후 남북대화 의제에서 NLL을 배제하고, 북미 협상의제로 NLL문제를 등장시키는 의도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南北충돌 재발 방지 합의

유엔사·北 장성급회담 北, 새 해상경계선 주장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은 6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3차 장성급회담을 갖고 서해교전과 같은 적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회담 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솔리건(미 공군 소장) 유엔사 부참모장은 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무력충돌 예방과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전체제 관리할 위한 양측의 유일한 협의체인 장성급회담은 2000년 11월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유엔사측은 "6·29서해교전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반면, 북측은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채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른 불법적인 선이라며 새로운 해상경계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솔리건 대표가 전했다.

솔리건 대표는 또 "침몰 고속정 인양과 실종자 수색작전을 북측에 통보



6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제13차 유엔사·북한 군사정전위 장성급 회담에서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 옆이 유엔사 대표단, 오른쪽 옆이 북한 대표단.

●사진공동취재단

했다. "먼서 '아울러 통신수단 유지와 양측 참모회의를 통한 긴장완화 및 상호 오해 방지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측이 피격된 경비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해 주면 이와 동등하게 남측의 고속정 인양 작전에 대해서도 확인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해교전에 대해서는 유엔사측이 "기습도발에 따른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합의한 데 반해 북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솔리건 대표는 "(북

측이) '쌍방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인정했다."고 밝혀 의미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담에는 유엔사측에서 제임스 솔리건 소장을 비롯, 이정석(李廷奭·합동참모본부 군사정보차장) 한 국군 준장, 이안 페트코프 호주군 대령, 칼린 그리브즈 영국군 대령 등 4명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이천복 상장과 조동현 소장, 박임수 대좌 등 3명이 나섰다.

●김경운 오석영기자
kkwoon@kdaily.com

세계타워

남북대화 재개로 한반도가 후끈 달아올랐다. 남북한은 12~14일 3일간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을 열어 기약없이 지체되던 경의선 연결 문제와 군사당국자회담 등을 다투기로 합의했다. 한 숨 더 떠 북측은 9월 부산아시아게임 참석을 약속했고 6일에는 2년만에 유엔사와 장성급회담을 가졌다.

북한이 지난 4월말~5월초 이산가족 상봉 이후 3개월 동안 보이지 않던 대화에 응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현상이다. 엇그제까지만 해도 6·29서해교전의 여파로 서릿발이 뻗쳐 올 겨울까지 내내 남북관계가 공포 없애 볼음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탕 온탕을 거침없이 드나드는 남북한의 현란한 변신을 보노라면 현기증이 난다. 1972년 7·4공동성명 이후 30년 동안 수없이 되풀이되던

화인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못된다.

김정일 서울답방 연계의혹

위험천만한 '북풍' 의혹을 받아가면서, 그것도 대선 기간에 '붉은 전사(戰士)들을 남쪽으로 대거 불러들여 한비탕 곳판을 벌이는 것을 예상하다 할 수 없다. 정상회담 이후 2년이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말이다. 아마도 그 대답은 거꾸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서 들어보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서울답방 행이행에 대해 저간에서 쓴소리가 나오자 "서울에 가고 싶다. 하지만 여건이 안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주고 싶으나 무엇이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



趙敏皓

南北관계 정략이용 말라

일을 또 목격하게 된 것 같으니 그렇다. 갑작스러운 대화재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무슨 공공이가 있거나 않을까. 몇달 동안 아단법식을 펴다 싸늘하게 등을 돌리지나 않을까 우리가 앞선다.

갑작스런 대화재개 현기증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 이번 8·4남북합의 내용은 지난 4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특보와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비서간의 합의사항과 다르지 않다. 일부 항목은 2년 앞서 열린 6·15정상회담 합의 사항에도 들어있다. 북한이 실천 의지만 있다면 진작 이뤄질 것을 여태껏 미루다 극도로 민감한 12월 대선에 압박해 왜 똑같은 매뉴얼 재탕 삼탕하고 있는지, 벌써부터 한비탕 흥역을 예고하는 듯하다.

이번 남북대화는 북측 입장에서선 30만~50만 1의 싸움 얻어가고 부산아시아게임 참석 등으로 대내외에 개방의지를 선전하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측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얻을 것은 뭔가. 현정부가 내건 '접촉을 통한 변

다"고 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안다. 호혜적인 상황이 되면 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김대중정권과 김정일정권간의 합수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의 하나다. 작금의 남북대화도 그 범주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상한 현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연속성과 일관성은 없고 즉흥적인 흥행과 약삭빠른 전술만 명멸했던 것이 그간 남북관계의 현주소였다. 동질성 회복과 평화구축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정권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경우가 더 많았음을 기억한다. 양측이 서로의 특수 목적을 위해 의기투합하면 그것은 '북풍(北風)'이란 낯설지 않은 이름으로 다가왔고, 각자의 체제강화를 위해서라면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남북대화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이다. 하지만 '장치색'을 빼지 않는다면, 평화구축은 없고 배신감과 허탈감만 남는다는 것을 과거 30년간 수많은 사례에서 경험했다. 순수한 남북관계를 전략적 재물로 삼으려 하는 한 한반도 평화논의는 공허하다. /통일부장

北서포터스 대규모 구성

부산AG 안전-응원대책

43세대 전용아파트 제공

전세버스로 불상사 차단

'최대한 편리하게 머무르다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어 돌아가게 한다'

북한팀을 맞이하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게임 조직위(위원장 정순택)는 350여명으로 추정되는 선수단이 보다 인리현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좋은 성적까지 내도록 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위가 가장 신경을 기울이는 부분은 안전과 응원 대책. 지난 4일 북한의 출진이 공식발표된 후 숙소와 수송, 의전, 심화체육의 방송, 문화 예술행사 지원, 보도 등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마련에 들어간 조직위는 특히 안전과 응원 만큼은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북한선수단에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대회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길 수 있는데다 향후 남북한 관계마저 냉각시킬 수 있는 만큼 안전문제본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한 경호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부산 반여동에 위치한 아시안게임 선수촌내에 북한 선수단을 위해 43세대의 아파트를 특별히 마련한 조직위는 선수단이 선수촌과 경기장을 오갈 때 다른 나라들과 달리 셔틀버스 대신 전세버스를 배정, 외부와 불필요한 접촉을 막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진행될 북한측과의 협의에서 안전대책에 대해서만큼은 북한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조직위는 이와함께 북한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돕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작정이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대적인 응원전.

부산에서 모집하고 있는 각종 서포터스 가운데 북한 서포터스의 숫자를 크게 늘려 일반 관중들과 함께 열렬한 응원을 펼치도록 해 북한 선수들이 마치 인방에서 경기하는 느낌을 주도할 계획이다.

시는 서포터스 구성을 위해 조만간 이북5도 민연협회, 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해 늦어도 이달말까지 북한 서포터스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북한 서포터스는 경기장 응원 외에도 도적 환영행사, 숙소 격려방문, 식사대접 등의 활동을 하며 선수단이 원할 경우 시내관광도 시켜줄 계획이다. 시는 선수단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단체나 기업체를 제외한 일반인을 상대로 한 개별 모집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등과 협의를 통해 남북간의 경기대는 '한반도기'를 내걸고 남북공동응원전을 펼쳐 대결의식보다 화해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수익기자 sagu@kmb.co.kr

국민일보

2002. 8. 7(수)

世界日報

2002. 8. 7(수) ▶ ▶

한국땅에서 북한기 날릴 수 있을까

아시안게임 '人共旗 고민'

보안법상 반국가단체...선뜻 허용못해
조직위 '체육교류일뿐...마땅히 걸어야'

대한민국 땅에서 북한의 '인공기(人共旗)'가 휘날릴 수 있을까.

북한이 갑작스레 9일 부산아시안게임에 참가기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때어진 '인공기 고민'에 빠졌다.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부산의 주요 경기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 참가국의 국기가 내걸리는 등 축제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현행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의 '인공기' 제양을 선뜻 허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순수한 스포츠교류인 만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허용하면 국내 대학가 등에서 인공기 제양이 일반화될 수도 있어 문제다.

특히 부산시측이 참가국별로 200~300명의 서포터스를 조직할 방침인데다, 북한의 경우 1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인공기 응원 논란이 한층 더 가시화되어 높아 고심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관례대로 북한이 부산에서 인공기를 내걸고 문화행사할 경우 인공기 논쟁은 끊이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남북단일팀이라면 전례대로 '한반도기'를 제양하면 그만이다.



▷ 부산아시안조직위 관계자가 6일 동구 범일동 조직위원회 6층 옥상에 마련된 각종 국기 제양대를 점검하면서 인공기를 걸지 않은 빈 제양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붙이고 있다. /부산=신원경기자

정부는 일단 "북한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한 전례가 없는데다 국민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통일부는 6일 오후 조

직위 및 체류기간 인사와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인공기 제양 여부를 놓고 통일부,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간 조율작업도 병행중이다. 정부는 아시안게임 엔트리 마감시한인 이달 30일까지는 공식입장을 유보할 방침이다.

부산조직위원회는 그러나 '스포츠교류'라는 거국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북한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이기에 때문에 국기 제양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부산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연습장, 문화행사장은 물론 부산 시가지와 전국 광역도시 주요 도로변에 참가국 국기를 제양하거나 준비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서해교전 이후 찾아온 남북화해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인공기 제양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북한 선수단에 대한 체재비 지원과 특별경호 등 파격적 대우를 해주는 상황에서 인공기 문제는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살 만한한 사안"이라고 곤혹스러워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기타부터 얘기하기는 힘들다"며 "통일부와 조직위 등에서 법률적 의의가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기홍기자

북 경수로 본체 착공

한겨레

2002. 8. 8(목)

케도 콘크리트 타설식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는 7일 오전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원전 1호기 건물 앞에서 원자로 본체가 들어갈 자리에 처음으로 콘크리트를 쏟아붓는 공사 착공식을 했다.

▶관련기사 2면

장선섭 케도 집행이사회 의장은 연설을 통해 "이번 최초 콘크리트 타설공사 착수는 경수로 건설사업이 여러 의구심과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됐음을 온 세계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도의 경수로 공사는 6월 말 현재 9억1830만달러의 건설공사비 지급과 약 22%의 종합공정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본관 기초 굴착공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에 첫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장선섭 의장과 켄 프리처드(미국), 스키 가스나리

(일본), 장 피에르 랭 집행이사(유럽연합), 찰스 카트먼 케도 사무국 사무총장, 김희문 북한 경수로 대상사 업국장 등 북측 대표단 16명 등 150여명과 건설현장 일꾼 600여명 등 모두 750여명이 참석했다.

프리처드 미국 측 집행이사는 "오늘 행사는 미국과 케도가 경수로 사업과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의무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라며 "이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하고 핵비확산조약(NPT) 준수를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함경남도 금호지구/공동취재단

유엔사·北 장성급회담 고속정 인양 논의했다 北방송들 보도

지난 6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유엔군과 북한 인민군 사이의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과 남측 고속정 인양문제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북한의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7일 보도했다.

인합뉴스에 따르면 북한방송들은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 우리측은 유엔군측이 지난 서해 해상사건 때 침몰된 남조선 군 합선 인양과 관련한 문제를 사전에 알리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박복삼기자

대한매일

2002. 8. 8(목)

국민일보

2002. 8. 8(목)

'8·15 민족공동행사' 南-北, 세부일정 합의

남북한의 2002년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대표단은 7일 오는 15~16일 서울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8·15 민족공동행사 개막식과 단합대회, 석합동에 슬공연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반포동 조달청 문화관에서 미술·사진전을 개최하고 16일 오전 10시 위커험출연 코스모스홀에서 일본문제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 행사단은 16일 낮 청덕궁과 남산타워 등 서울 명소를 관광한 뒤 저녁 8시 위커험출연 무궁화홀에서 폐막식을 겸한 환송민찬을 갖는다. 100명 규모의 북측 행사단은 김영대 사회민주당 위원장 겸 민회협 회장이 단장을 맡고 우리측에서는 400여명이 참가한다.

신창호기자

한국일보

2002. 8. 8(목)

2002민족행사본부-北 8·15 서울행사 일정확정

민회협과 통일연대, 7대총단 등으로 구성된 2002년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대표단 6명이 금강산에서 북측과 8·15 서울행사 일정을 확정하고 7일 속초항으로 돌아왔다. 남북의 민간 대표들은 금강산어관에서 접촉을 갖고 이날 15, 16일 서울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8·15 민족공동행사 개막식과 단합대회, 남북합동에 슬공연을 연기로 합의했다.

김영대 사회민주당 위원장이 단장을 맡게 된 북측 대표단(100명 규모)에는 집단체조 '아리랑' 개막가를 불러 인기를 모은 여자민요가수 식련희(38) 등 다수의 공훈배우와 인민배우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섭기자younglee@hk.co.kr

경향신문

2002. 8. 8(목)

남북 8·15행사 일정합의 실무협의의 대표단 귀국

민족화해협력범민족협의회·통일연대·7대총단 등으로 구성된 2002년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대표단은 7일 "오는 15~16일 서울 올림픽경기장에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대표단은 7일 "오는 15~16일 서울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리는 8·15 민족공동행사에서 단합대회, 남북합동에 슬공연을 갖기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의측과 합의했다"

고 밝혔다.

북측과 2박3일 동안 금강산에서 8·15 서울행사 실무협의합 미치고 이날 귀향한 남측 대표단에 따르면 남측은 15일 서울 반포동 조달청 문화관에서 미술·사진전을 개최하고, 16일엔 광장동 위커험출연 코스모스홀에서 일본문제 학술토론회를 갖는 등 여러 행사들 개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용욱기자

“켈리특사 訪北때 동행할것”

프리처드 北경수로 타설식서 밝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추진중인 대북 경수로 건설공사의 첫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이 7일 함경남도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부지에 열렸다. / 관련기사 8면

원자력기구와의 협조를 포함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대사는 기념식 뒤 “앞으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함께 따라가 북·미대화 재개방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7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KEDO측이 초청한 김계관(金桂寬) 외무성 부상은 참석하지 않았다.

금호지구(함남) / 공동취재단

北경수로 기반공사 착공

2008~2009년 최종 완공 美 “핵사찰 안받으면 지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7일 오전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원전1호기 공사장 앞마당에서 KEDO 원전 최초의 콘크리트 기반공사 착공식을 거행했다. 이날 공사는 지하 18m, 지상 65m 높이의 동형 경수로의 구조물에 처음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행사로 본격적인 공사시작을 의미한다.

KEDO 집행위원인 잭 프리처드 미국 대북교섭 담당대사는 이날 “오늘 행사는 미국과 KEDO가 경수로사업과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장선섭(張瑄燮) KEDO 집행이사 사회 의장도 “날안했던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건설

이 차질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97년 8월 착공된 경수로 건설은 현재 도로 통신 등 기반공사가 끝나 22%의 공사가 진척됐다. 경수로 원전(100만kw급 2기)은 2005년 봄쯤 원자로가 건설되고 최종적으로는 2008~2009년경에 완공된다.

경수로의 순항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여부에 달려 있다. 프리처드 대사는 이날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3, 4년 후에 끝날 경수로 공사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이날 보도했다. 그는

이어 “경수로 사업의 성공여부는 바로 지금(right now)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사찰에 3년 정도 걸리므로 경수로의 핵심부품을 넘겨주는 2005년 이전에 ‘핵개발 의혹’을 씻기 위해서는 당장 사찰에 응하라는 얘기였다.

이날 착공식에는 장 의장과 프리처드 대사 외에 스텝키 가쓰나리(鈴木勝也·일본)와 장 피에르 랭(유법연합) KEDO 집행이사, 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과 북한의 김희문 경수로 대상사업 국장(장관급) 등 대표단 17명과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호지구=공동취재단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중양일보

北 KEDO 경수로 본체 착공식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7일 오전 11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1호기 원자로 건물 앞에서 ‘KEDO 원전 최초 콘크리트 타설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선섭(張瑄燮) KEDO 집행이사회 의장과 잭 프리처드 미국 대사·스즈키 가쓰나리(鈴木勝也)일본 대사·장 피에르 랭

유럽연합 집행이사·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김희문 북한 경수로 대상사업국장·현장 근로자 6백여명 등 모두 7백50여명이 참석했다.

랭의장은 이날 “경수로 사업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들의 상호 협조, 특히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안전

조치협정을 안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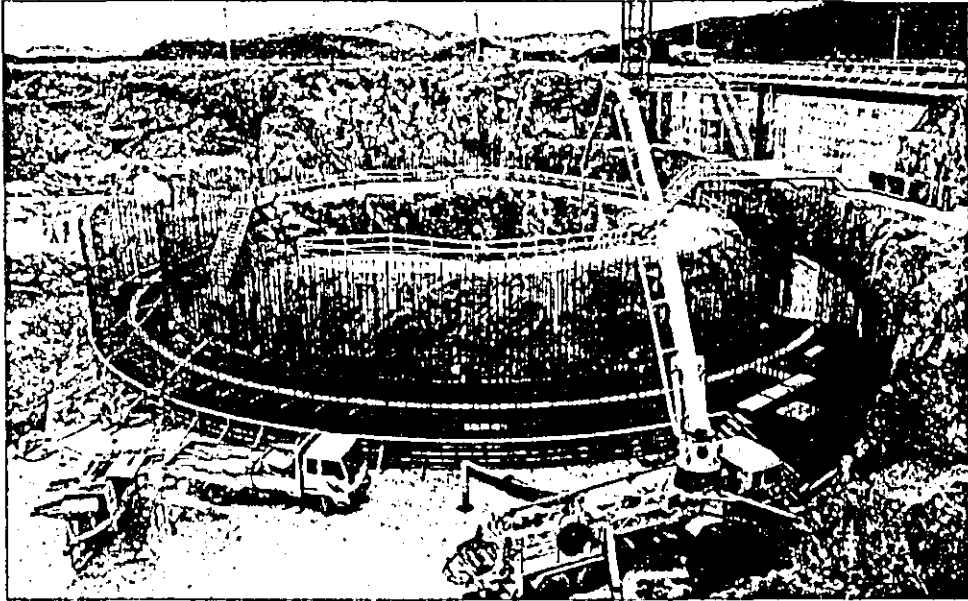
잭 프리처드 미국 대사는 “이제 북한이 IAEA와의 협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한 김희문 국장은 “2003년 말을 목표로 한 경수로 원공이 늦어진 것에 대해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남 금호지구=공동취재단, 이영준 기자 <yjlee@joongang.co.kr>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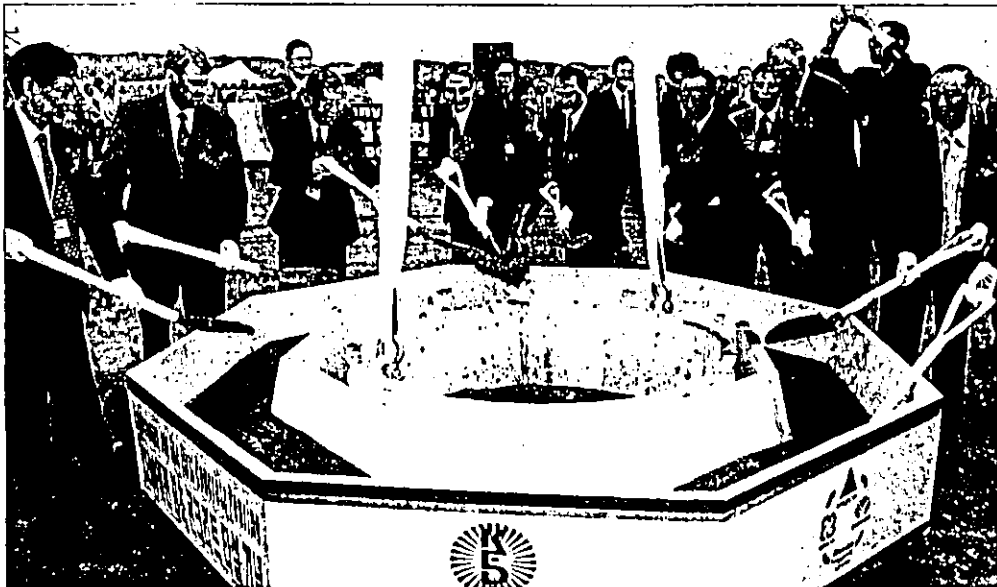
2002. 8. 8(목)



북한 경수로 원자력발전소의 본격적인 건설 단계인 콘크리트 타설이 7일 함경남도 금호지구 원자로 건설 현장에서 실시됐다. [로이터-뉴시스]

서울경제

2002. 8. 8(목)



北경수로 '콘크리트 타설식' 북한 경수로 원자력발전소의 본격적인 건설을 알리기 위해 7일 오전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열린 '최초 콘크리트 타설식' 행사에 참석한 귀빈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반도 평화담보 北경수로 순항예고

콘크리트 타설 의미

1호가 2008년쯤 완공
“북한 핵사찰 받아라”
프리치드 강력 경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7일 오전 함남 금호지구 경수로 원전 1호기 공사장 앞마당에서 KEDO 원전 최초의 콘크리트 기반공사 착공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행사에는 장선섭 KEDO 집행이사회 의장, 잭 프리치드(미국) 스텔스키 가쓰나리(일본) 장 피에르 램(유럽연합) 집행이사, 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 김희문 경수로 대상사업국장과 북한 대표단 17명 등 모두 150여명이 참석했다.

KEDO 집행이사들은 안정적인 경수로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들의 상호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의장은 “경수로 사업은 전쟁 위협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이번 타설식은 경수로 건설사업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관계자들이 7일 함남 금호지구 경수로 원전 1호기 공사장에서 KEDO 원전 최초의 콘크리트 기반공사 착공식을 거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러 의구심과 회의적인 시각을 분식시키고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됐음을 전세계에 분명하게 알리는 계기”라고 말했다.

프리치드 이사는 “이번 행사는 미국과 KEDO가 경수로사업과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의무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라고 지지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3~4년후에 끝날 공사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착공식이 끝난 뒤 경수로 건설현장과 교역인 공사인력의 생활터 등을 둘러보고 오후 7시쯤 한나라호 배편으로 금호항을 출발, 8일 오전 속초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진체 270만평 부지의 경수로 공사는 1997년 8월 부지조성 작업으로 시작돼 현재 진체 공정의 22%를 마친 상태다.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경수로 부품반입과 조립작업에 들어가 2008년 1호가 완공되며 2호기는 2009년 이후 건설될 예정이다.

신창호기자 procol@kmb.co.kr

‘北 전력 해결되면 식량도 잘 풀릴 것’

• 경수로 콘크리트 타설 이모저모

7일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열린 대북경수로 콘크리트 타설기념식에 참석한 북한측 인사들은 본격공사가 시작된 것을 내심 기뻐하면서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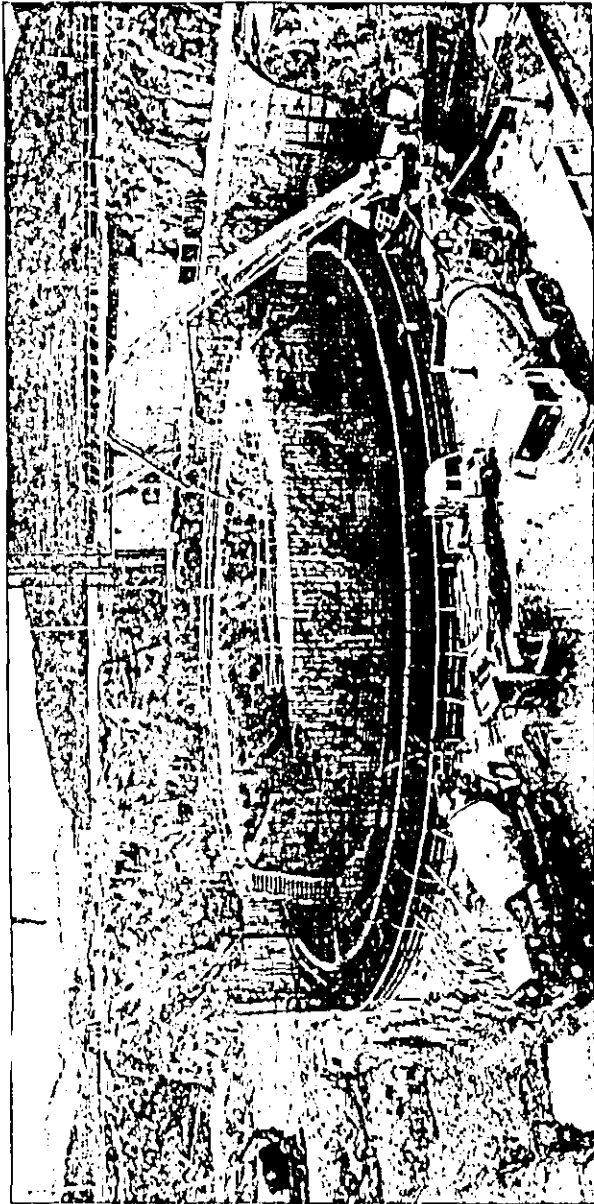
○...북측 대표로 참석한 김혁은 국장은 “좀 더 빨리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타설 후 시공 전담을 맡는 기술자들의 질문에 ‘두고 봐야죠. 잘 따져요’라고 말했다. 북한측 관계자는 “물도는 나라의 동력이라 하는 데 전력은 모든 것이 수태(배우)였다”면서 “전력이 없기 때문이며 전기만 해결되면 식량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94년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때 공화국은 2백만톤의 쌀을 받았는데 북한은 2백만톤의 쌀을 받았던 것”이라며 “미국을 만났다가 공인형 우리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 프리치드 대표고삼 대사는 기념식에 나온 북한 외무성 김명길 부국장과 5분 동안 환담을 나눴다. 두 사람은 1990년대 초 4차 회담 때부터 10여년간 ‘누욕재복’의 실무회담을 함께 인연을 쌓았다. 프리치드 진 용이사는 김부국장과 약속한 뒤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김혁은 “17”을 통해(프

리치드 대사들) 왔다”고 밝혔다. 김 부국장은 기자들에게 “오전만에 만난 친구”라고 소개하며 “다른 회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프리치드 대사는 기념식 후 “부시 정부는 이 시기에 견고한 지원을 해왔다”면서 “북측은 이 시기를 비중있게 보고 있는 미국의 의지를 거둬지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북한이 핵사찰에 응해야 하며, 연기시키면 북한만 손해”라며 “미국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속사에서도 조심적으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경수로 사업에 투입된 북한 근로자들은 지난달 1일부터 시공 단계에 들어가는데, KEDO의 보고는 “시공의 공무물 거부해온 북한 근로자 96명이 오버타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관계자들은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 “일반 사무원들의 월급은 17~18배 올랐지만 쌀이 1천차 오름 등은 조정됐지만 아직 소소한 물건의 값은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서 공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호지구(함경남도) / 공동취재단



남편을 뚫고... 7일 오후 북한 함경남도 경수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호지구(함경남도) / AP연합

“타설 이후 공사 중단 있을 수 없다”

• 장선심단장 문답

장선심(北總務) 경수로사업지원 기획단장은 7일 북한 신포 경수로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에 참석, “그동안 한반도 정세 불안정 등 난관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발전소 건설이 차질없이 지속될 것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타설 기념식의 의미는.
“건축 공정상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는 공사가 중단되는 날이 없다. 콘크리트 타설은 발전소 건설의 필수

적인 과정이며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수로 공사가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 (경수로 완공 여부 불확실) (북측의 견해) 북한에 주는 강령에 시지도 된다.”

—사망 일부 전문가들이 경수로에 서도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수로사업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론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 경수로 완공 전에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체제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비평리에

연료봉을 빼낼 수 없다.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대 규모 재처리시설이 필요하다. 북한의 재처리시설로는 할 수 없다. 반대론자들은 사업초기부터 이런 논거를 들며 반대해왔으며 새로운 예기를 내놓지 않았다.”

—향후 주요 사업일정은.
“2003년 상반기 기준 연자로 등 핵심 부품이 북한에 인도될 예정이다. 북미 제네바회담에서 합의된 2003년 안장은 불가능하며 5~6년쯤 늦춰진 2008~2009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수로 사업에 대한 북한의 최근 반응은.
“지난달 양양~선덕간, 진양공로가 마련됐고 북한의 핵인전규제요원들이 남측에 파견돼 교역물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 장관급인 김문 북한 경수로대사(사업국장이 참석)한 점 등이 북의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달 27일까지 25일 동안 남측에 파견된 북한인전규제요원들의 교육태도는.
“대우 실질하게 교육에 임했고 태도도 좋고 교육성적도 남측 못지 않았다. 용어 차이로 초기에 에로를 겪었으나 나중에는 질문이 많아 감사가 감의를 진행하기 힘들 정도였다.”

금호지구(함남) / 공동취재단

대한매일

2002. 8. 8(목)

7대종단대표 대북쌀지원 재개 촉구

개신교와 천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민족종교 등 7대종단 대표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 쌀 지원을 시급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대종단 대표들은 성명에서 "민간 차원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재개돼야 한다."면서 "대북 쌀 지원은 경제논리나 정치논리가 아닌 동포애

차원에서 접근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과 장응철 원불교 교정원장, 최창규 성균관장, 김철 천도교 교련, 김기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백도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종수 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서명했다.

서동철기자 dcsuh@kdaily.com

7대종단 "대북 쌀지원 재개를"

대국민 호소문 발표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7대종단 대표들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인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 쌀 지원을 빨리해야 한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7대종단 대표들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최근 국제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난민 문제는 식량난에 원인이 있다"며 "북한난민 문제의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 차원의 쌀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북 쌀 지원은 쌀재고 분량 처리 같은 경제논리나 정치논리가 아닌 동포애 차원에서 접근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종단 관계자는 "각 종단들이 해오던 대북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을 추곡수매 때는 종단 차원에서 직접 쌀을 사서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7대종단 대표들은 서해교전 사태 이후 민간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주춤해지고, 정부의 재고 쌀 사료용 전환 방침 등이 나오자, 이달 초 모임을 열고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고 있는 데 종교인의 양심상 사람이 먹는 쌀을 김승에게 먹일 수 없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급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게 됐다.

대국민 호소문에는 정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장응철 원불교 교정원장, 최창규 유교 성균관장, 김철 천도교 교련, 김기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백도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종수 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서명했다.

권학길 기자 nura@hani.co.kr

국민일보

2002. 8. 8(목)

"대북 쌀지원 재개하자"

기독교등 7대종단 지도자 대국민 호소

민간차원 종단별 모금활동·캠페인 전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소속 7대종단 지도자들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족의 화해협력력을 지속하고 평화와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급히 재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도자들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웅 총무가 대표로 남북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북한난민 문제의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떠한 정치적 견해나 경제 이익추구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고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지원이 이뤄질 때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통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도자들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쌀 지원을 시급히 재개해야 한다"며 "이러한 식량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총격을 준 서해교전 사태는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킨 문제였다"면서 "민족이 처한 절망과 긴장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적인 노력과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견의 차이는 인정되되 민족의 통일을 먼저 생각하고 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웅총무(왼쪽부터) 등 7대종단 지도자들이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북지원 대국민 호소문을 남북한류 포스트를 취하고 있다. 김지웅기자

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민족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문화와 정치문화 형성을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각 종단 지도자들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단별 모금활동과 대국민 캠페인 활

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회원 교단장 및 각 교단 총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모임을 갖고 정부의 비축미 가축 사료 전용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대북 쌀 지원에 반교파적으로 동참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김재중기자

대한매일

2002. 8. 8(목)

탈북난민 엑소더스(Exodus)가 상례화 되고 있다. 가난과 굶주림에서 탈출하고 자 하는 인간 본능의 반란이 숨을 잇는 것이다. 이들의 일차적 행선지는 조선족이 주로 살고 있는 중국의 동북 3개성 지역이다. 주로 길림성(吉林省)과 흑룡강성(黑龍江省)이다. 중국으로 탈출하여 전전하며 한국에 관한 얘기를 듣고 한국에 가면 더 좋은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듣고 한국으로 탈출하는 모습을 감행하는 것이다. 한국으로 탈출하는 북한난민은 그 대반이 중국에서 1~6년 간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도이다.

잘못된 국가경영에 경고

탈북의 기원동기는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경제 난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난과 기아는 잘못된 국가경영에서 오는 것이므로 구태여 정치난민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크게는 인도주의의 범주에 속하는 난민들이기 때문이다.

난민들이 한국으로 줄을 이어 오기까지는 북한정부의 실정(失政)과 중국정부의 개방적인 자세가 그 근저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북 난민들의 숫자가 갑자기 몇 배 터지듯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러한 난민 '엑소더스'가 병양 정권의 위기로 바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난민 행렬이 상례화 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대비

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난민 엑소더스는 북한의 잘못된 국가 경영에 대한 증언이요, 경고이다. 자연재해는 일시적 기근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렇게 지속적이고 민연하는 가난의 원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디에 국가 경영의 잘못이 있는가를 북한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는 199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수출주도형 경제 개발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의 덩소평(鄧小平)이 주창한 '전쟁기피론'(戰爭可避論)과 '선부론'(先富論)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순수 정통사회주의, 주체사상 그리고 선군정치론 주장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탈북난민의 행렬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중국은 시장경제를

봉한 경제대국이 되면서 경제에서 뿐 아니라 정치·안보·외교에 있어서도 점차로 국제사회의 일반규범과 질서에 다가 가고 있고 국제사회를 향하여 더욱 개방되어 가고 있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평화와 안정 유지에 그 기본이 있고 정통 사회주의의 확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개방사회로의 변화는 병양의 변화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병양의 선택 범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탈북난민을 우리의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형제로서 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자유의 투사, 민주화의 영웅으로보다는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찾아온 보통시민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탈북난민 엑소더스와 남북관계

열린세상

홍순영 전 외교장관



국방부마저-

기자의 눈

6일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장성급 회담이 일련 직후 브리핑이 열린 국방부 기자회견.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이정식(李廷奭·준장) 합감 군사정보차장은 "회담이 매우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말문을 엮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의 회담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며 "유엔사측의 회담 제의에 북측이 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해교전 사고문제가 나오자 이 차장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북측의 사고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기자들이 "유감 표명도 없었느냐"고 재차 묻자 그는 "그렇다"고 대답을 흐렸다.

물론 이 차장의 말대로 20개월 만에 장성급회담이 다시 열린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불과 이틀 전에 제7차 장관급회담 실무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이봉조(李鳳朝) 남측 대표의 말을 되새겨보면 믿기 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 대표는 당시 "서해교전은 정전협정 위반인 만큼 (사과, 재방방지책 마련, 책임자 처벌문제)는 곧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다루지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다.

장성급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예상은 빗나갔다. 장성급회담에서 서해교전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흔적은 별로 발견할 수 없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군사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공동 노력키로 한 것은 큰 성과"라는 말만 강조했다. 더구나 회담 다음날인 7일 북한방송들은 "회담에서 서해에 방벽한 해상경계선을 합의 설정하는 것에 대해 협의였다"며 북방한계선(NLL)의 갈래 논의가 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것처럼 보도했다.

국방부가 최근의 회담 무드에 틀어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 수뇌부는 갈 나 갈 때일수록 회담 성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군 안팎의 지적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윤상호 장처부

ysh1005@donga.com

이 난민을 수용하고 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이들을 어떻게 시장경제에 적응하도록 교육·훈련시키며 마침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자기 책임하여, 자기 노력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를 깨달아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개 1세대 30년을 소요하는 큰 과제이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훈련원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 즉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을 우리는 오늘날의 러시아에서 그리고 구 동독과 모든 공산권 국가에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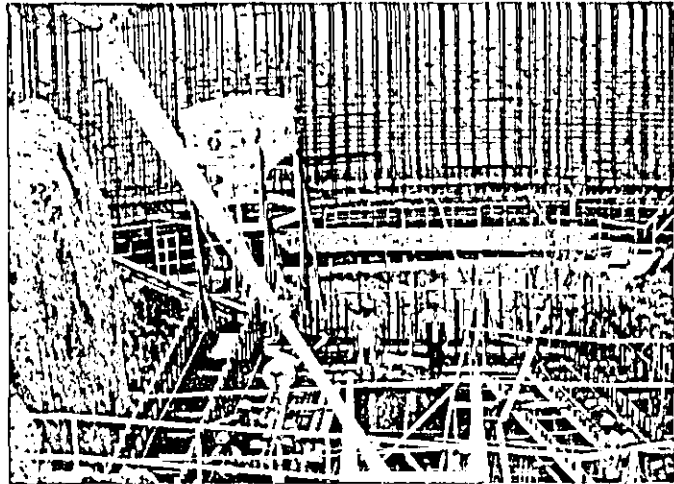
이러한 나라들에서 구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가 일부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탈북난민을 위한 교육과 훈련과정에서 우리는 물론 한국과 과제 하나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의 현장에서 교육시켜야

탈북난민의 문제는 남북분단에서 오는 다양하고 복잡한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난민도 광의의 교류의 일환이다. 우리는 남북간에 평화공존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 공존은 항상 경쟁과 경계할 수밖에 없는 공존이다. 공존하면서 공존의 가능성과 한계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통일한국을 내다보아야 한다. 남북 관계의 관리는 분자 그대로 따듯한 가슴, 차가운 머리할 요구하는 어려운 국가과제이다.

문화일보

2002. 8. 8(목)



경수로 공사현장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7일 열린 경수로 1초기 콘크리트 타설식 후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주최한 이날 타설식 행사에는 정선섭 경수로기획단장, 썸 프리처드 미 대북교섭담당대사, 찰스 키트먼 KEDO 사무총장과 북한 대표단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北 '경수로 콘크리트 타설' 보도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경수로 원전 최초 콘크리트타설 착공식(7일) 소식을 8일 오전 논평없이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조(북)-미 기본 합의문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경수로 발전소 원자로 기초 콘크리트 타입이 시작됐다'며 '원자로 기초 콘크리트 타입을 시작하는 의식이 어제 금호지구 건설현장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여기에는 찰스 키트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과 KEDO김재이 사국 대표들이 참가했고, 북한의 해당 기관 임원들이 초대됐다고 소개했다. /한중호기자 ichan@munhwa.co.kr

8·15 서울행사 일정 확정

민화협과 통일연대, 7대 종단 등으로 구성된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오는 15-16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8·15 민족공동행사 개막식과 단합대회 및 남북합동 예술공연 등을 개최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북한 금강산에서 북측 민화협 대표단과 2~3일간의 실무협의를 마치고 7일 오후 속초항으로 돌아온 추진본

부 대표단은 행사 기간중 서초구 반포동 조달청 문화관에서 미술·사진전을 개최하고 16일 오전 광장동 위키실호텔 코스모스홀에서 일본 문제 학술토론회를 열기로 북측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북측은 김영대 사회민주당 위원장 겸 민화협 회장을 단장으로 100명의 참가단을 보낼 예정이며 우리측에서는 400여명의 참가가 예상된다. /한중호기자 ichan@munhwa.co.kr

내일신문

2002. 8. 8(목)

8·15 민족행사 자원봉사단 모집

'2002년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오는 15,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8·15 민족통일행사를 앞두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상주 근무가 가능하고 17일 북측 대표단이 서울을 떠날 때까지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추진본부의 강현구 자원봉사단장은 7일 "지난주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봉신이나 인터넷 부문에 20여명이 지원했다"면서 "오늘부터 단체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학생 등을 중심으로 2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100여명의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가운데 8·15 민족공동행사 개막식과 함께 '민족단합대회', 예술공연, 미술전시회, 사진전, 축하연회, 명승지 탐방 등이 예정돼 있다. /연합 심규식 기자

北, 3년후에나 핵사찰 수용입장

美 즉각수용 요구에 반발- 양국 대립 불가피 전망

북한은 미국 등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즉각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3년 후에 받아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한·미·일 3국에 진술했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핵사찰 수용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의 대립은 불가피해졌으며 이런 북핵 입장은 북·미 협의 재개에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

인다고 낮게는 잔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핵 프리시드 대사 교섭담당 대사는 7일 북한 금호지구에서 열릴 경수로 콘크리트 타설식에서 북한에 핵사찰을 즉각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사찰은 2~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며 경수로 주요 부품을 인계하기 직전 사찰을 받겠다는 입장이 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워싱턴=법

장관급회담 北대표단

12일 서해직항로로 온다

12~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은 12일 오전 진해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한한다고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이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한화갑(韓和甲)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조금전 연락이 왔는데(북측대표단이) 12일 오전 9시(평양 순안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오전 10시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北 “核사찰 3년뒤 받을것”

美 “당장 수용하라” 연일 압박 미사일 시험중단 연장도 요구

7일 한남 신포 금호지구에서 열린 경수로 본체 콘크리트 타설식을 계기로, 핵사찰 수용 시기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미 국무부의 필립 리커(Reeker) 대변인은 7일 "이제는 북한이 핵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의미있는 협력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는 핵사찰에는 풍상 3~4년이

걸리므로, 2006년으로 예정된 경수로 핵심 부품 인도 전에 북한의 핵사찰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당장 핵사찰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반면 북한은 이번 타설식과 관련, 경수로 주요 부품이 인도되기 직전인 3년 뒤 핵사찰을 받겠다는 의사를 한·미·일 3국에 밝혔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8일 보도했다.

또 미국의 반 H 반 디엔 미국 국

무부 핵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대영은 북한이 2003년까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2001년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시한을 2003년 이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8일 말했다.

반 디엔 부차관보 대영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미사일 시험 중단 조치를 유지하고 무기한 지속하는 게 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워싱턴=朱廣中특파원 midway@chosun.com

/東京=權大烈특파원 dkyw@chosun.com

한국경제

2002. 8. 9(금)



KEDO대표단 귀국 장선섭 집행이사회 의장(맨 왼쪽)을 비롯한 한 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계자들이 8일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열린 경수로 본체 콘크리트 타설행사에 참석한 뒤 속초항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東亞日報

2002. 8. 9(금)



김정일위원장 · 푸틴대통령

김정일-푸틴 20일째 회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경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일간 이즈베스티야지가 8일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주 김 위원장이 이단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스크바시엔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12일 직항공로 통해 입국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참석할 북측 대표단이 12일 오전 서해 직항공로편으로 서울에 올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현(丁世炫) 통일부 장관은 8일 한화갑(韓和甲) 민주당 대표를 방문, 장관급회담 준비상황을 보고하는 자

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정장관은 한대표로부터 12일 개최될 장관급회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조금 전 연락이 왔는데 (북측 대표단) 12일 오전 9시 (평양 순안공항) 출발해 직항로를 이용, 10시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은 오는 14일 8·15 민족통일행사 북측 참가단이 타고온 여객기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용욱기자

경향신문

2002. 8. 9(금)

朝鮮日報

2002. 8. 9(금)

金正日·푸틴 20일쯤 회담

러 이즈베스티야紙 보도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0일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가 8일 보도했다.

이즈베스티야는 연해주 주지사의

공보담당관 말을 인용, 김 위원장이 연해주 주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푸틴 대통령도 마침 태평양함대 사령부 방문이 예정돼 있어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극동 방문은 지난해 러시아 방문 이후 정확히 1년 만이다. /모스크바=鄭萬鍾특파원 bschung@chosun.com

“김정일 - 푸틴 20일께 회담”

러 이즈베스티야紙 보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0일께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8일 보도했다. 이즈베스티야는 '그들은 우연히 만날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달 말 비슷한 시기에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 등 극동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모스크바=한

“적대정책 바꿔야 특사대화 의미”

외무성 대변인 주장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북한은 8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대북 특사파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화가 열려도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특사로 누구를 언제 보내는가 하는 것은 미국측이 할 일"이라며 "만약 미국측에 사정이 있다면 특사 파견 안 보내도 좋으며 편리한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얼마전 제9차 ARF 기간에 진행된 우리 외무상과 미 국무장

관과의 접촉결과를 놓고 북조선이 미국 특사 방문을 괴상한 것이라고 비난, 북조선의 연행을 보아가며 대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 등 여론이 나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 특사의 평양방문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 문제는 미국측이 대화재개 입장 설명을 위해 특사를 보내겠다고 하여 제기된 문제로서 우리는 그를 받아주는 입장이며 우리는 이번 상급(외무장관) 접촉에서도 미국측이 특사 파견 의향을 다시 표시하여 온데 대해 환영한다는 것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북측의 이런 입장은 지난달 31일 브루나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IRF)에서 백남순 외무상이 열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만남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 대표단, 서해 직항로로 온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서울에서 열리는 7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석할 북측 대표단이 12일 오전 서해 직항공로편으로 들어올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8일 낮 한화갑 민주당대표를 방문해 장관급회담 준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 대표로부터 12일 개 최된 장관급회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조급한 연락이 왔는데 (북측대표단이) 12일 오전 9시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직항로를 이용, 10시에 들어 온다"고 밝혔다.

북측 대표단은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우리측에서

는 관례에 따라 수석대표인 정 장관을 제외한 장관급회담 대표단 4명이 공항으로 영접을 나갈 계획이다.

북측 대표단은 14일 8·15 민족통일대회 북측 참가단이 타고온 여객기편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북측 대표단은 당초 12일 베이징(北京)을 거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이봉조 정책실장은 금강산 실무대표 접촉후 북측 대표단의 입국 경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귀환시 8.15 서울행사 북측 참가단이 타고온 직항 여객기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관급회담 대표단이 직항로를 이용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일신문

2002. 8. 9(금)

미, 즉각 핵사찰 받아라..

북, 3년후 받겠다

북한은 미국 등이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핵사찰 즉각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핵사찰은 3년 후에 받아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한미일 3국에 전달했다고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핵사찰 수용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의 대립은 불가피해졌다고 닷케이는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잭 프리처드 대사는 7일 북한 금호 지구에서 열린 경수로 콘크리트 타설식에서 북한에 핵사찰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미국 등이 핵사찰을 서두르는 것은 핵 의혹 규명에 3~4년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사찰은 2~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며 경수로 주요 부품을 인계하기 직전에 사찰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

아시안게임 때 “北 인공기 게양 불가피”

정세현통일 국회서 밝혀- 보안법과 충돌 소지 당국자 “남측 응원단·대학內 사용은 곤란”

정세현(丁世鉉)통일부 장관은 9일 “부산 아시안게임 때 최소한의 북한 인공기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丁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위원회 참석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경우 남북이 동시에 입장, 한반도기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참가국으로서 참가하는 데 국기 게양까지 막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북한이 국기 게양이 따르는 국제

체육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남한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허용 방침에 따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에서 인공기가 공식적으로 쓰이게 됐다. 하지만 그간 국가보안법 등을 이유로 인공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 온 전례를 내세운 보수층 등 일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丁장관은 또 “이 문제는 아시안 게임조직위와 북한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나 그 과정에서 정부가 자연

히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진계한 뒤 “국제 행사이므로 참가국의 국기를 못게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 의원은 “이번 입로 공공연히 인공기가 사용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같은 당 최병렬(崔炳烈) 의원은 “북한을 초청해 놓고 국기 사용을 허용치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헌장 제48조(기과 휘장)는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에는 참가 회원국기와 평의회 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장과 43개 참가국기 모두가 걸리는 장소에는 당연히 인공기를 게양해야겠지만 남측 응원단이 인공기를 흔들거나 대학 구내·차량 등에 다는 행위는 실정법과 국민 정서상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 공동의 체육행사와 응원 등에는 헌법 바깥에 허용해 지도가 새겨진 한반도기가 사용돼 왔다.

통일부·법무부·국경원 등 관계기관이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곧 인공기 사용의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남정호·이영중 기자

<namjh@joongang.co.kr>

경향신문

2002. 8.10(토)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北, 실무회담 개최 제의

“17~20일 금강산서”

북한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9월29일~10월14일)에 선수단 외에도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박명철 북한 올림픽위원장은 9일 오후 평선덕(平津德)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는 데 따른 세부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오는 17~20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함께 참가하게 되면 남북간 인적교류로는 역대 최대 및 최장기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측은 서신에서 “제7차 북남산림회담(장금금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서 방향이 합의된 데 따라 제1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이 참가하여 발굴 중심으로 북한에게

알린다”면서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기대회 참가와 백두산 성화행과 동행이 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쌍방 체육관계자들이 이틀 시달 내에 단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또 “우리측에서는 올림픽위원회 서기장을 책임자로 하여 대표 3명과 수형원 2명을 금강산에 보내겠다”면서 “응원단의 참가에 대해 긍정적인 회담을 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북한 선수들의 숙소 배정·수송체계·신변 안전 등의 제반 조건과 백두산 성화 및 성화 봉송, 응원단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4일 장금금회담 준비를 위한 금강산 실무 접촉에서 9월5일 백두산-한리산 동시 성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영욱기자 ywoc@joongang.com

대한매일

2002. 8.10(토)

北응원단도 부산AG 온다

대회참가 공식 통보 17일 실무접촉 제의

북한이 부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할 것임을 공식 발표해왔다. >관련기사 18면

북한은 9일 판문점 남북 연락관 접촉에서 이같은 의사를 담은 박명철 국가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전

달했다.

북한은 또 백두산 성화 채화 및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에 따른 제반 문제들 협의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한편 북한은 실무접촉에 박명철 위원장을 책임자로 한 대표 3명과 수형원을 파견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관련기자 kwyoung@daily.com

국민일보

2002. 8.10(토)

北 장관급회담 대표명단 통보

북한이 9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참가할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 왔다.

북측 대표단은 김영성 내각 책임관 시금 단장(수석대표)으로 조성만 내각 사무국 차장, 최문식 서기국 부

장, 김민길 문화성 차관, 김준근씨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김준근 대표는 지난 6차 회담대표 허수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총장장 겸 무역부 차장과 교체됐다. 공식 직함을 명시되지 않았다.

우리측 대표단은 수석대표인 장세현 통일부장관을 비롯, 윤진식 재경부 차관, 박문식 문화관광부 차관, 이분조 통일부 경제실장, 서영교 통일부 국장 등 5명이다. 신형호기자

北 응원단도 참가 통보

부산 아시안게임- 17일 실무접촉 제의

북측이 9일 오후 판문점의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전달받은 대남 서한에서 9월말 개최되는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를 공식 통보해 왔다. <관련기사 2면>

부산 아시안게임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 올림픽조직위원회 박명철 위원장이 공식 서한을 통해 선수단과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 규모, 방법 등과 백두산 상하 채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해왔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을 책임자로 대표 3명과 수행원을 파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대회 개막 30일 전인 8월 30일까지 참가국의 최종 엔트리 접수를 마감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달 말까지 종목별 참가 선수들 긴장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감세를 보이는 축구와 농구, 유도, 사격, 소프트볼 등 20개 종목에 걸쳐 350여명의 선수 및 임원들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돼 일부 종목에서는 경기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양측은 아시안게임 선수촌 내의 북한 선수단 숙소와 전용버스 등을 포함해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인공기 게양 여부에 대해 사건임을 전제해 "조직위에서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지만 최소한의 게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호기자 procol@kmb.co.kr

한국일보

2002. 8.10(토)

부산 아시안게임때 北 “응원단도 파견”

17일 금강산 실무회담 제의

북한은 9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9월29~10월14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안게임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를 공식 통보해왔다.

북측의 선수단 참가는 7차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이나, 응원단 파견 문제는 처음 거론돼 규모와 구성원 등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17면

북측은 또 박명철 조선올림픽위원장(내각 체육위원장) 명의의 대남 서한에서 선수·응원단과 백두산 성

화 채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17~20일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해왔다. 북측은 실무회담에 올림픽위원회 서기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 3명과 수행원 2명을 파견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BAGOC)는 조만간 남측 실무회담 대표 명단을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남북 체육단국이 스포츠 교류를 위해 회담을 갖기는 1990~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이동준기자 dilee@hk.co.kr

중앙일보

2002. 8.10(토)

北, 부산아시안게임 참가 공식통보

“응원단도 보내겠다”

17~20일 실무접촉 제의

북한이 2002 부산아시안게임에 선수단뿐 아니라 응원단까지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또 이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17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9일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박명철 북한올림픽조직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지난 4일 남북 실무대표 접촉에서 쌍방이 합의한 우리 선수단의 파견을 정식으로 알린다”고 밝히고,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기대회 참가와 백두산 성

화채화 등 실무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17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협의를 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은 이 회의에 올림픽위원회 서기장을 책임자로 대표 3명, 수행원 2명을 보낼 것이라고 전해왔다. 한경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실무협의를 같은 기간 금강산이 아닌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조속히 장소를 결정해 17일 실무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수 기자

<gonan@joongang.co.kr>

네티즌 마당

아시안게임 '인공기 계양' 82%가 찬성

병역비리 공방, 총리 인사청문회, 남북 대화, 북한의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서울시 수해방지대책 등 날마다 신문 지면을 달구는 현안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떻게, 인터넷 여론조사는 전문적인 조사기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과, 이해당사자의 집단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도를 의심받기도 한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활용한다는 특성상 인터넷 여론은 기성세대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없티미디어 시대에 여론의 한 축을 담당하는 네티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기에 가장 손쉬운 수단이기도 하다. 몇몇 언론사 사이트나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네티즌 톨 코너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하루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질문에 응하고 현안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벌인다.

오픈미인 페이지는 각계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외(社外)인사와 기고 내용은 본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향신문 인터넷사이트(www.khan.co.kr)는 이회창 후보 이들의 병역의혹과 관련, "공직정치"라는 한나라당과 '은혜공작'이라는 민주당의 주장 중 어느 것에 찬성하느냐, "고 묻는 설문응을 올렸다. 1만 명이 훨씬 넘게 응답한 이 조사에서 '한나라 주장에 찬성한다'가 50%, '민주당 주장에 찬성한다'는 답변 역시 50%로 나타나 팽팽한 대치정국을 반영하고 있다. (9월 13일 현재, 이하 동일)

연합뉴스 인터넷사이트(www.yonhapnews.net)에서 올린 "북한의 부산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인공기 계양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은 '찬성'이라는 응답이 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률로 볼 때 네티즌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인공기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 된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한국일보 인터넷사이트(www.hankooki.com)는 "장상 전 총리사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진행에 의욕적이란 무성했다

는 일부의 평가도 있다."고 견제, "정문화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을 지난달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 응답은 '만족한다' 33.5%, '개선이 필요하다' 31.4%, '정만족스럽다' 20.6%로 나와 네티즌 60% 이상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진행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의 인터넷사이트(www.hani.co.kr)는 "김수지역 주민의 피해를 주는 차원에서 반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 42.6%, 반대 57.4%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 설문과 관련한 의견 쓰기 코너에는 "누구는 반지하에 살고 싶어 사는 중 이냐, "며 "층수별 군별적으로 예방하는 데나 힘을 쏟으라, "고 촉구하는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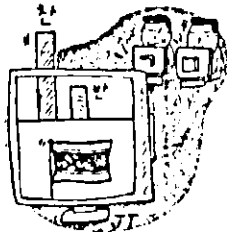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서는 방학특검기획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등을 집중 조명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답변은 '응답으로 사고싶은 것을 살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67.5%로 다수 차지, 김소년 의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사회검험을 해보고 싶어서' 13.4%,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6.4%, '부모로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6.1%, '취직에 도움이 되는 검력을 쌓으려고' 2.7% 순으로 나타났다.

엠프스(www.empris.com)가 올린 "박헌서 신임 감독에게 바라는 가장 큰 가치"를 묻는 설문에서는 '열심하면 해달라'가 31.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축구풍토 확산' 21.8%, '신수들의 체력 및 기술력 강화' 19.4%, '신인 유망주 발굴' 11.7%, '부산 아시아게임 우승' 12.7% 순이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의 인터넷사이트(www.scn.org)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북이 함께 참여할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서는 "군사충돌 예방 방지 장치 감구"라는 응답이 50.9%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여기에 "이산가족 상봉 실시" 30.2%, "김의선 침도 연결 추진" 11.2%, "식량지원 등 인도적 조치 시행"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준기자 sagang@k.dailym.com



문화일보

아시안게임 인공기응원 딜레마

정부, 계양·국가연주 허용... 깃발응원 허용범위 고심

보안법 저촉·대학가 확산 우려 반론도

부산 아시안게임(9.29.-10.14.)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경기 기간중 경기장내에서의 북한 인공기(人共旗·홍합오각별기)의 계양과 북한 국가(애국가)의 연주 허용하고, 인공기를 사용한 응원행위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3면>

그러나 정부 및 정치권 입각에서는 인공기 사용이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될 경우 대학가등에서 공공연히 사용되는 등 '저지선'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원단과 부신시가 조직할 응원단(서포터스)에 인공기 사용을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세현 통일부장관도 9일 국회에서 "북한이 정식 회원국으로 참가하는 만큼 최소한의 인공기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경주는 법 문제 이전에 국민 정서의 문제로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인공기로 응원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제7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며, 내외국인 모두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북한인의 경우, 신변안전보장각서를 교환하는 등의 절차 때문에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부 입각에서는 경기장주변 일정 지역을 '아시아평화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 국가보안법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는 다르지만 월드컵때 경기장 변경 1km이내를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해 김희 시위를 봉쇄한 사례가 있다.

한법재판소는 00년 4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라 해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실질적 해악을 미칠 만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제언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관건(89 헌가 113)을 내렸었다.

/한홍호기자 ichan@munhwa.co.kr

서해교전 실종 한상국 중사

41일만에 유해 찾았다

침몰고속정 조타실서

지난 6일 서해교전 당시 실종됐던 한상국 중사(27·부사관 155기)의 유해가 실종된 지 41일만인 9일 발견됐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해군탐색대가 수중탐지장비를 동원해 고속정 357호의 침몰 위치와 상태를 파악했으며 SSU(해군 해난구조대) 요원들이 침몰지역에 입수. 오후 5시 25분쯤 침몰 고속정의 조타실에서 한중사의 유해를 찾았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한중사의 시신을 끌어올려 연평도로 옮긴 뒤 경기도 분당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

최현수기자 hschoi@kmb.co.kr



서해교전시 실종됐던 41일 만에 유해가 발견된 한상국 중사의 어머니 문희순씨가 9일 경기 성남시 분당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아들의 영정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다. 분당=이병주기자

한겨레

서해교전 실종 해군 주검 발견

북 "유엔사 수색활동 기간 긴장조성 않겠다"

지난 6일 서해교전 당시 실종됐던 한상국(27) 중사의 주검이 실종된 지 41일만인 9일 발견됐다.

해군은 이날 수중탐지장비를 동원해 서해교전 현장을 탐색해 침몰한 고속정 357호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한 뒤, 해군 해난구조대(SSU) 요원들이 오후 5시 25분쯤 침몰 고속정의 조타실에서 한 중사의 주검을 찾았다고 밝힌 뒤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해군은 이날 한 중사의 주검을 경기도 분당의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다. 한편, 북한군은 지난 6일 일련 유엔

군사령부의 강령에 따라 서해교전 당시 침몰한 고속정 인양 및 실종자 수색작전과 관련해 유엔사 긴장완화 조사활동 기간 동안 긴장조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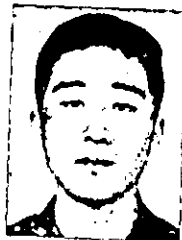
유엔사는 이날 공식 발표자료를 통해 "유엔사는 지난 8월 6일 회담에서 북한측으로부터 '북한은 유엔사 정전위 조사단이 서해교전에서 진행중인 조사활동 기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보장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배경록 기자

실종 韓상국중사 유해 찾았다

'서해교전' 41일만에 침몰고속정 조타실서

6·29 서해교전 당시 실종됐던 고(故) 한상국(27·부사관 155기) 중사의 유해가 실종된 지 41일만인 9일 발견됐다.

해군은 이날 오전 수중탐지장비(SONAR)를 동원, 서해교전 현장을 탐색해 고속정 357호의 침몰 위치와 상태를 파악한 뒤 해군 해난구조대(SSU) 요원들이



유해를 찾았다. 해군은 오후 6시 30분쯤 한 중사의 시신을 끌어올려 최선에 구조함인 청해진함(ASR-21)으로 옮겼으며, 해군

수중작전을 통해 오후 5시 25분쯤 침몰 고속정의 조타실에서 고한 중사의

고속정 등을 이용해 연평도를 기차 군 헬기편으로 경기도 분당 국군수도병합병원으로 이송했다. 국군수도병합병원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한 중사의 모친 문희순씨 등 유족들이 달려와 오열했으며, 이날은 합참의장 등의 조문이 이어졌다.

해군은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긴장완화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하는 해군장으로 장례식을 치를 계획이다.

/백범진기자 worldpk@sgt.co.kr

예술공연 - 학술토론회 '다채'

8·15-AG '교류' 붓됨

北 "아시안게임 응원단도 파견"

1일부터 서울에서 시작하는 8·15 민족통일행사에 이어 9월20일부터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도 북한 선수단 참가는 물론 북한 응원단이 오기로 해 남북한 민간 차원의 만남과 교류가 붓됨을 이루고 있다. 특히 8·15 행사는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민간단체 행사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8·15, 민족통일행사=김연애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회장이 인사하는 100여명의 북측 대표단

이 14일 오전 서해 직항로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둘째날인 15일 오전 9시30분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행사가 개막된다. 남측 주진본부 상임의장인 이준병 변호사와 북측 단장인 김 회장이 축하연설을 교환하며 하이라이프인 합동예술공인과 북측 공연이 이어진다.

셋째날인 16일 남측 민화협과 7대 공연, 풍악연대 등 9개 단체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까지 13개 부문에 걸쳐 북측 대표단과 부문별 토론회를 연다. 지난해에 이어 '일문일제 학술토론회'도 열리며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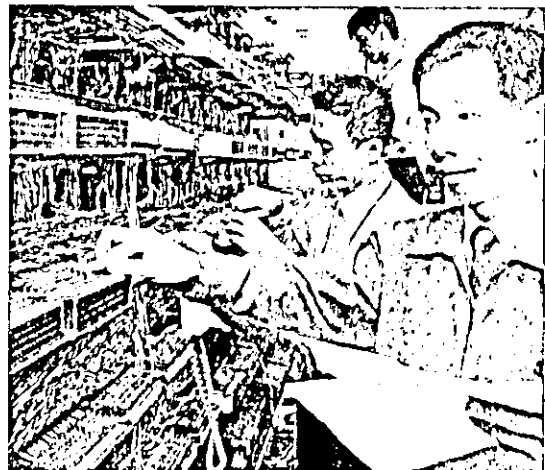
녁 7시 행사 폐막식을 갖는다. 마지막날인 17일 북측 대표단은 남측 인사들과 함께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돌아본 후 오후 1시 인천공항에서 전세기 편으로 평안으로 귀국한다.

◀아시안게임 준비=북측이 9일 관동강의 남북 인민군 검문을 통해 전달받은 대남 서한에서 9일 밤 개최되는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를 공식 발표해 등에 따라 아시안게임에 남측인 민간 차원의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간담회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려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은 선수단 참가 및 배후간섭회 체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기로 계획해 왔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방명록 올림작위원회 위원장을 책임자로 대표 3명과 수석위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우리측 대표조직위원회의 관계자로 "북측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17일 금강산 실무접촉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또 북측의 민간 응원단도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측에서 열리는 체육경기에 응원단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의동기자

phi21@munhwa.co.kr



서울 신라호텔 홍신실 직원들이 1일부터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의 북측 관계자들이 사용한 전화회선용 1021 점검하고 있다. (김구철기자 kckim@munhwa.co.kr)

'군사회담 성사' 촉각 곤두

7차 장관급 회담 전망

서해교전을 계기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오는 12~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장관급 회담에서 군사회담 개최가 합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병도 군사분야의 관계장관이 행방장관의 차기장관 계승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라는 내부 판단 아래 군사회담 개최협의를 권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군사분야의 진전은 이남측에 대한 북·미 보·압대화의 권위와

관련, 북측의 '강의'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기대감을 높고 주시하고 있다.

정부 구상은 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회담 등 두가지 대화채널을 모두 복원, 군사실무회담에서는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보장 합의'에 서면, 권의선 인가를 위한 군사보장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0년 9월 1차 회담에서 그해 11월중순쯤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가 무산된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반드시 개최, 남북간의 포괄적 군사문제할 논의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서해교전 유사시대의 개안방각 방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의향이다.

경남은 북·유엔사 회담에서 서해교전에 대한 남북과 유엔사의 논의 북측이 반박없이 경청하는 등 유인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회담개최가 확실한계선(NLL)에서의 교전예방규칙 상호제정 등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국방장관간 군사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병력이동을 동반한 군사훈련 일관 상호정보와 참관단 교환문제 등 남북기법합의서에 담긴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군사문제에 대해 그간 북측이 보여 소극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성실한 성과를 전망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西海사태 풀 軍事회담 될까

7차 남북장관급회담 의제와 전망

京義線연결도 맞물려 최대관심 經協委·이산상봉은 성사될 듯

6차 회담결렬 이후 9개월 만에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7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북한이 6·29 사태 도발 이후 한달 만에 대외로 방향을 바꾸어 일단 순항(順航)이 예상된다.

남북 대표단은 이번엔 14일까지 3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그동안 남북간 합의됐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던 사안들을 모두 논의, 일단 향후 일정들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 대상 중 경제협력추진위 2차 회의와 금강산관광 합성화를 위한 2차 당국 회담, 북측 경제시찰단의 방한, 4차 적십자회담 및 5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에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미 울지포커스센터(UFL) 훈련이 실시되는 것을 고려, 이르면 8일 남북 적십자회담과 김일추진위 세계가 추진되고 추석(9.21)을 전후해 이산상봉과 금강산합성화 당국회담이 기대되며, 김제시찰단의 방한이 뒤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외의지를 내보일 수 있는 적십자회담과 30만~50만의 발을 받을 수 있는 김제시 재개는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회담은 조기에 이뤄질

〈7차 남북 장관급회담 일정〉

날짜	시간	일정
8.12	10:00	북측 대표단, 인천공항 도착
	16:00	1차 전체회의(남북 수석대표 기조 발언)
	19:00	남북 수석대표 주외 환경연찬
8.13	10:00	2차 전체회의
	오후	북측 대표단, 경기도지역 환관
	19:00	공동식식(시내 모음식점)
8.14	00:00	3차 전체회의(공동보도문, 주요 배경)
	12:00	공동중식(인민공화)
	14:00	북측 대표단, 평양 향방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최대 관심은 서해사태를 계기로 한 남북간 무력충돌 재발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군사당국자회담 조기 재개 여부다. 정부는 이 문제의 진전여부가 장관급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판단 아래, 군사당국자회담 조기 개최에 합의하고 그 시기를 공동보도문에 명문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군사당국자회담은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내연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에 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회담 등 두 가지 채널을 복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회담준비 점검 정세현 통일부장관(오른쪽)이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2일부터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 준비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우성원기자 kwjw@chosun.com

정부는 북측이 6일 장성급회담에서 유엔사와 우리측의 서해사태 항의에 대해 견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하면서 군사당국자회담을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중 개최하겠다는 정도의 '상'의는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앞서 다섯 차

레나 열린 장관급회담과 지난 4월 임동민(林東敏) 특사 방북 때 북측이 합의만 해놓고 이행하지 않았던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번에는 북측의 합의 이행 의지를 확고히 하고 그중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미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영희기자 kkb@chosun.com

정부 “北 응원단 한반도旗 사용 추진”

아시안게임 해법 고심

북한이 지난 9일 대만 20일부터 열리는 부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외에 응원단도 보내겠다고 문보해 온 이후, 정부는 인공기 게양과 응원단의 인공기 사용 문제할 놓고 고심 중이다.

정부는 특히 북측의 인공기 사용에 국내 일부 세력들이 동조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인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남북(南南)갈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가급적 체류행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헌장에는 경기장의 참가국

人共旗 흔들면 南南갈등 초래 우려 OCA규정상 경기장에만 인공기 게양

국기게양과 국가연주가 명기돼 있어 이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우리 국민의 인공기 응원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고무·찬양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는 점 때문에, 북한 응원단과 남한 서포터스(응원단)가 북한 팀을 응원할 때 인공기가 아니라, '한반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번엔 선수단만이 아니라 응원단도 보내기로 한 배경도 관

심이다. 정부는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이 참가할 때 응원단을 함께 파견하는 것은 관례라는 점에서 북이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상당수의 북한 응원단이 한국의 발원지 현실을 본다든 것 자체가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체제이완의 우려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응원단이 많이 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측 응원단이 경기장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북한 선수단을 응원할 때 우리들 내부에

서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인공기를 둘러싸고 예기치 않은 남북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규모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90년 중국 베이징(北京) 아시안 게임 때의 경우(선수단 300여명, 응원단 200~300명 기량 추정)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들을 하고 있다. 또 응원을 명분으로 한 예술단과 재일(在日) 조총련 응원단의 방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대 1000여명의 인원이 부산에 올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홍영희기자 kkb@chosun.com

남북관계 일정표 마련 주력

장관급회담 월 논의하나

12일 개최되는 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시작으로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실무회담이 끝나는 20일까지 남북은 단국 및 민간차원의 접촉을 많 그대로 실패 없이 이어가게 된다.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재개 상황을 지켜봐왔지만, 이런 일련의 접촉을 통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임기 말까지의 '남북관계 일정표'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산상봉등 구체 협의

▽장관급회담 관전 포인트=북한은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에서 부산아시아경기 참가 의사를 밝힐 정도로 각종 남북교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본 게임인 장관급회담에서는 수많은 합의사항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실무접촉 공동보도문을 통해 합의한 '협의대상'만도 이산가족 상봉에서부터 임진강 수해방지문제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종 남북당국간 회담이 수많은 합의사항을 쏟아냈지만 결국은 실천이 문제였다.

통일부 이봉조(李鳳朝) 통일정책실장이 "새로운 합의보다는 합의된 의제를 구체화해 '손에 잡히는'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번 회담의 성과는 원론적인 합의가 아니라 실행을 위해 어떤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의선 철도부터 시작한다=정부가 가장 삼철을 쏟는 현안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 경의선 연결은 단순히 길을 연결하는 차원을 넘어 교류협력의 제도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의선을 연결할 경우 남북간의 숙원 사업이며 이번 회담의 목표이기도 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개성

남북 장관급회담 대표의 주요 회담 참여 경력

			
남측 대표 베이징 남북차관급회담 수석대표(98년4월) 장관급회담 처음 참가		북측 대표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2000년5월) 단장 5차 장관급회담이후 단장	
정세현 통일부장관 (수석대표)		김명성 내각 책임 참사 (단장)	
윤진식 재경부차관	장관급회담 처음 참가	김춘근 민경연사기장	장관급회담 처음 참가
박문석 문화부차관	장관급회담 처음 참가	김만길 문화성국장	5차회담 이후 참가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	5차회담 이후 참가	조성발 내각사무국 참사	5차회담 이후 참가
서영교 통일부국장	베이징 남북차관급회담 (98년4월)대표 1차 장관급회담부터 참가	최성의 조평통사가국 부장	베이징 남북차관급회담 (98년4월)대표 1차 장관급회담부터 참가

이번주의 남북접촉 일정

일시	주요 행사	비고
8.12	7차 남북장관급회담 1차회의	북측 대표단 서해직항로 이용 서울 방문
13	장관급회담 2차회의, 참관(관광)	공동 석식
14	장관급회담 3차회의, 공동발표문 합의(예정)	북측 대표단 귀환
15	8·15 민족통일대회	100명, 서해직항로 이용
16	8·15 민족통일대회	합동예술공연 및 북측 예술단 공연
17	북측 8·15행사 대표단 귀환	부문법 토론회 및 일본문제 회담토론회
	부산아시아경기 관련 실무접촉(예정)	한강 유립선 관광
		금강산

공단 추진 등을 한꺼번에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의선 연결 과정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작업을 병행하고, 경의선 연결지점에 항구적인 이산가족 상봉면회소를 만들 수 있으며, 개성공단으로 공사자재를 실어나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의선 연결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키워드라는 것이다. 정부 내에는 특히 경의선 연결을 '해법정책의 상징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공동 작업 규정을 담은 '군사보장 합의서'에 합의했지만 서명은 하지 못했다.

다만 북측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경우 철도(12km)는 4개월, 도로(12km)는 12개월 만에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잘하면 연내에 철도연결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희망이다.

8·15 北돌출행동 우려도

▽남북 민간행사=장관급회담에 이어 열리는 8·15 민족통일대회는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한 북측의 답례 성격이 강하다.

물론 북한은 이번 행사를 '민족대단결'의 기회로 강조하는 등 내부 선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측의 돌출행동 가능성도 있다. 북측이 특히 이번 행사를 주한미군 철수와 서해교전 이후 강조해온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한 선전기회로 활용할 경우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또 주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규모와 이동방법, 숙소, 신변안전보장 등의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추석 이산상봉 의견접근

장소 금강산... 경의선공사 월내 재개 주력

이달하순 經推委·군사회담 추진

오늘부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정부는 12~14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을 이달 하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군사당국자회담이 열리면 남북간 철도·도로연결공사에 따른 군사보장합의서의 시범·교환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이달 하순 개최도 북측에 제의할 예정이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일정 및 방법에 대한 논의도 건넨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남북간은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오는 9월21일 추석을 전후해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남북간 군사당국자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이 열리면 우선 경의선 북측 구간 철도연결문제에 대한 군사적 보장방안을 논의, 김

의선공사가 이달안에 재개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서해교건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직 신뢰구축 방안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급회담 남북대표단 대변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이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 육로 관광 등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이미 남북군사실무회담이 전제됐고 내재했다."면서 "경추

위의 군사실무회담은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을 동시에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식량지원 요청과 관련, "북측의 태도와 회담 결과 등을 봐 가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특심기자 youngtan@kdaily.com 2면으로 ▶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흥원기자 jongwon@kdaily.com

▷ 1면에서

정부는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오면 30만 인원의 대북 쌀자원을 검토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4차 직입자회담의 개최일자 확정지은 뒤 격입자회담에서 이산가족면회소의 금강산산지점 본격 협의하는 한편 상봉의 정례화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8·15만국통일대회 ▲남북축구대회 ▲부산아시아게임 등 각종 민간차원의 행사도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급회담에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한편 김영성 내각 총리를 단장으로 한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20명은 서해직항공로를 통해 12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다.

世界日報

2002. 8.12(월)

군사회담-경의선 집중논의

오늘~14일 서울서 南北장관급회담 재개

지난해 11월 6차 남북 장관급회담(금강산) 이후 9개월만에 군사당국자 회담 및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논의할 7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243일 일정으로 개최된다. (관련기사 3면)

남북은 첫날 1차 전세회담을 갖는 등 모두 3차례 협상을 이어갈

강산 실무대표 접촉(8월 2~4일)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당국자 회담 등 향후 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군사당국자 회담과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재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추석 전후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고 제4차 직입자회담 일정을 확정해 면회소 설치 등 상봉 제도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부산아시안게임 참가와 9월 8일로 예정된 남북 축구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북측 김영성 내각총리 등 북측 대표단 20명은 서해직항공로를 이용, 12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경의선 연결 중점논의

오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은 1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7차 장관급회담(12~14일)을 열어 그동안 합의만 내놓고 구체적인 이행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군사당국자회담 등 각종 합의 사항의 실천 방안을 협의한다.

▶A3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이달 중 남북군사당국자회담과 2차 경의선철도위원회 회의 등을 열어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에 필수적인 군사보장 합의의 시범 및 교량건설을 집중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회담 대변인인 통일부 이봉조(李鳳朝) 통일정책실장은 11일 "7차 장관급회담에서는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 금강산관광 합심회를 위한 당국간 회담, 군사당국자회담 재개 등의 이번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도 논의하는 적십자회담 일정 등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는 사해교전 문제를 분명하게 짚을 것"이라며 "앞으로 무력충돌 시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를 협의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8·15 민족통일대회의와 남북축구경기대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당국간 협의도 벌인다.

한편 북한 김영성 내각 책임관사를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 20명은 12일 오전 9시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할 뚝해 오전 10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정식기자 spear@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경의선 年内복원 논의

오늘 南北장관급회담

남북한은 12~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작년 11월 이후 중단된 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고 지난 4월 인동원(林東源) 특사의 방북 때 합의된 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와 금강산관광 합심회를 위한 2차 당국간회담,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상봉 등의 구체 일정확정 문제를 협의한다. ▶▶관련기사 3면

우리 측은 특히 남북 간 무력충돌 예방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회담과 연내 경의선 복원, 후식(9.21)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 등의 합의 및 이행 일정 마련에 주력하면서, 북한

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와 9월 8일 남북대표단 간 축구경기 대회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정세연(丁世鉉) 통일장관을 수석대표로 윤진식(尹鎭植), 채경·박문식(朴文錫) 문화관광 차관, 이봉조(李鳳朝) 통일정책실장과 서영교(徐永敎) 통일부 국장, 북측에서는 김원삼 내각 책임관사를 단장으로 조성만 내각 사무국 차장, 최성일 조평통 서기국장, 김춘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 김만길 문화상 국장이 각각 참석한다.

/최영복기자 kkb@chosun.com

경향신문

2002. 8.12(월)

'손에 잡히는 성과' 기대

• 남북장관급회담 의제·전망

경의·동해선 철도 동시착공 가능성 北 전에없이 적극적 '화해무드' 轉機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한동안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접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전인적 지체 없이 있었던 북측이 부산아시안게임에 선수단에 이어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지난 9일 밝히는 등 전에 없이 적극적으 나서고 있어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철도 연결 및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이산상봉 등은 6·15 남북공동선언 및 4·5 특사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것들이다. 정부가 이들 합의의 구체적 이행일정을 짚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은 여기에 배경을 둔 것이다.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역점을 두고, 경의선 철도·도로의 이달내 착공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동해선 철도·도로의 착공을 요구할 경우 우리가 동해선 남북구간(간봉~고성)의 공사

를 시작하는 대신 북측도 경의선 북측구간의 첫 삽을 뜨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남북 중단철도의 연결을 전제로 북측에 무상으로 노후철도 개선작업을 해주기로 했다는 소문도 있어 북측은 동해선 연결 합의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군사실무접촉의 재개 문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긴밀하게 맥이 닿아 있다. 남북은 이미 경의선 연결과 관련, DMZ내 공사를 위한 군사보장협의의 서담 도출했지만, 양측 국방장관의 서방·교관 참가가 이뤄지지 않아 합의서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민간교류·경제협력·군사적 신뢰구축의 의미가 있어 연결이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라는 평가를 대담으로부터 받는 일이다.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원하는 북한도 이 점을 고려해 철도·도로 연결문

▶장관급회담 의제 남북 입장 비교

남측	북측	북측
경의선공사 복원추진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추진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합리적 동의
북측 경제협력 지원	개성공단	남측 전면지원 반대
특각개회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	합리적 찬성
경우위서 논의	북측 경제 시업단 파견	경우위서 논의
특각개회	남북 군사 실무접촉	합리적 동의
이산면회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회담에서 논의

재에 적극적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남북경협 관련 사항들도 활발히 논의할 전망이다.

북측은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경제사찰단 파견 등 경제난 다기에 도움이 되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경우위는 시장지원 등 현안이 걸린 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다.

경우위에서는 대북 쌀 30만t 지원 및 개성공단 건설, 입점권 수해방지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대표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북측이 식량지원 등을 요청할 경우 북측의 태도와 회담 경과 등을 보이면 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위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실무

도 논의하게 된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정부는 부산 아시안게임(9·29~10·14)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추석(9·21) 이전에 제5차 이산상봉을 하지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상봉을 정례화하고, 면회소를 통한 상봉 제도를 폐지는 두 트랙(two track) 전략으로 이산가족 문제에 접근할 방침이다.

적십자회담과 이산상봉이 연계되기 보다 별개의 행사로 치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정부는 적십자회담에서 면회소 설치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합의가 이뤄지면 회담에서 개략적으로 논의, 합의할 방침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영욱기자 woo04@nhanhva.com

기자메모

8·15 남북대회 뒤탈없게

서울에서 열리는 '8·15 민족통일 북에 크게 기여하는 무대라는 예기 대외'를 앞두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의 악몽(惡夢)에서 비롯된다. 이 행사에 참석한 김성구 교수의 '만경대 범명목' 파문 등은 남한내 대북여론 악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낳았다. 당시 국민정서와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부 남측 인사들의 행동은 북에 기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대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남북 단체들의 잠재된 충돌을 '축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돌출행동들이 발생할 경우, 예방기구를 남측관계가 도를 넘길 수 있어, 이렇게 상사된 행사가 정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국 측은 "북에 대한 열정은 좋지만,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를 뉘뉘아 두려워 민간교류를 중단하거나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구태가 무서워도 장은 담가야 하는 것이다. 민간 공동행사가 앞으로 50여년간 이질적 삶을 살아온 남북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기 때문이다. 민족통일상 회

북에 크게 기여하는 무대라는 예기 대외'를 앞두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의 악몽(惡夢)에서 비롯된다. 이 행사에 참석한 김성구 교수의 '만경대 범명목' 파문 등은 남한내 대북여론 악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낳았다. 당시 국민정서와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부 남측 인사들의 행동은 북에 기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대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단체들이 이 약속을 지키는 기간에는 민간교류 활성화, 밀착한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는 길이다. 지금은 '당국과 민간이 통일에 대해 이견이 가장 적은 때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당국자들도 고민만 하기보다 작년 8·15대회 이후 한층 심숙해진 민간단체들을 믿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



정치부
이 용 옥
woody
@unghyang.com

한국일보

하용훈교수의 국제潮流



최근 서해 교전에 대한 국민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기도 전에 남북관계와 한반도에 새로운 대화와 회담 분위기가 급속히 조성되고 있다. 특히 남북 장관급회담의 개최, 북한의 부산이산가족회 참여 등으로 냉각됐던 남북관계가 해빙을 향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대화를 서두르게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북한의 이런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되, 남한 입문 러시아 등과의 관계개선에 동시에 추구하여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가 우려하

남한이나 일본과의 협상에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다. 햇볕정책의 최대 문제점인 안보·군사 측면에서 잦은 돌파구를 남북관계와 대일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역동적 상황이 초래할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안보와 경제의 분리 문제다. 안보·군사 문제가 북미간에 전개되면서 파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남한이 지게 되는 경우다. 지금까지 햇볕정책은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치중된 나머지 '되'는 분야부터 허지는 사고가 났는데 왔다. 이는 북한이 안보문제는 미국과 해결한다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독인한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는 안보분야와 연계된 햇볕

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경우 나타나는 단기적 외교성과의 불균형 및 시간차의 조정 또한 어려운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안보와 연계된 햇볕정책을

이런 상황을 한반도 밖에서 벌어지는 변화로 인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의 진전을 한반도 상황 진전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활발한 외교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간 외교관첩 속에서 더욱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외교적 수사와 행동이 다른 이중적이고 혼란된 자세는 우리의 외교적 입장과 남북관계를 어렵게 할 뿐이다.

북한의 새로운 외교적 행보는 햇볕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그 하나는 안보와 경제, 국내요인과 국제요인의 유기적 연계이고 다른 하나는 햇볕정책의 기초를 일관성 있게 계승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햇볕정책과 이에 따른 개입정책은 개념적으로는 초(超)정권적 측면을 띠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의 정권적 접근은 많은 문제점을 낳아 개념 자체의 중요성까지 도전받게 되었다. 정권 말기에 한 정부는 남은 기회와 도전을 활용하여 정책의 연속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북한의 외교전략과 햇볕정책

단 기존의 '미국 우선, 한국 배제'의 자세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 간에는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확산과 식량배급, 핵사찰 등에 관한 협상 방식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주 유엔대표부의 인사개편, 9월 중에 있을 벨라 미 국무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이견해소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미협상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정권 및 체제 보장과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이다. 북한은 또한 미국과의 군사안보 협상을

정책의 추진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소위 '4자 회담'과 같이 분야별로 우리의 안보대화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미 북일 등 양국간 대화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상호영향을 조정·조화하는 문제가 심각히 드러날 것이다. 특히 북미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조정역할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경제와 군정 전략을 통한 다중적인 외교 전략

韓美日에 진방위 대화공세

그러나 이런 단기적 해빙 무드와 함께 전개되는 북미·외교·전략적 신축이아발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전략이다. 북한은 예상외로 개교 하루 아침에 남한, 미국, 일본과 동시 다발적인 협상을 제의하고 나섰다. 북한은 김정일의 체제개혁에 대한 입장과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전방위 외교공세를 통해 대외적 체제인정과 개혁에 따른 경제지원체제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한 듯하다. 동시에 북한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강경노선, 즉 '악의 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정권 교체 입장 등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이라기에 대한 공격적

8~9월 남북 당국·민간교류 잇달아

대선정국 새변수

오늘 장관급회담 전체회의로 출발 경의선 복원·면회소 설치 합의 역점

남북 당국간 대화 및 민간교류가 8~9월에 잇달아 예정돼 있어 남북한 화해기류의 정도와 속도가 12월 대선 정국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12일부터 서울간 서울에서 개최되며 곧이어 8~15일 평양에서 이틀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또 북한 선수단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한 금강산 실무회담이 예정돼 있고 9월8일 남북 축구대표팀간 친선경기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더구나 장관급회담의 결과에 따라 대북 식량지원과 경의선 연결 등 경제 문제를 논의할 남북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와 후식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할 4차 직접회담이 개최된다. 아울러 군사당국회담은 물론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남북 자회담이 열리며 북한의 경제개발단이 서울을 방문하는 등 남북한 고위급

당국자들이 잇달아 만나게 되며 이에 따른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다음달 말에는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북한 선수단은 물론 대규모 응원단까지 내려올 예정이어서 한반도에 또다른 '북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8월부터 10월까지 남북한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대선 정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정기 소식통은 "지금 남북한은 정치·경제·사회·군사 분야는 물론 체육 분야까지 광범위한 교류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류가 정치권에 어떻게 파급될지 천재로운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월 서울 방문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 또한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번 장관급회담에 20명의 대표단을, 15일부터 열리는 민족통일대회에 100여명의 참가단을 보낼 예정이며 이들은 모두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측 고려항공편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간다.

정부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첫날부터 전체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장관급회담에서 첫날부터 전체회의를 갖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9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와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회담, 군사당국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4~5공통보도문 이행 일정을 확정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우리측은 또 경의선 복원 및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쌀과 전력 지원에 희망하고 있어 직접전에서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창호기자 procol@kmb.co.kr

국민56% "성과없을것"

장관급회담에 부정적

꺾임 여론조사

국민의 절반 이상이 12일부터 서울간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장관급회담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만20세 이상 성인 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남북 장관급회담 성과에 대해 장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5.9%가 '별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서해교전 사과없으면 쌀지원 안돼" 61%응답

않는다(47.7%)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8.2%)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

또 가장 관심 있는 회담의제에 대해서는 '서해 교전에 대한 사과받지 약속'(37.6%) '이산가족 재회 문제'(26.7%)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 및 경제협력'(23.7%) '남북군사 당국자간 대화 재개'(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북 쌀지원과 관련, 60.7%가 '서해교전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없으면 쌀지원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준모기자 jnkin@sgt.co.kr

대한매일

부산아시안게임 경기장주변 평화구역 추진 "인공기응원 제한적 허용"

北선수·응원단 1000명 올듯

정부는 오는 9월말 열리는 부산아시안게임에 대규모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 인공기(人共旗) 게양과 북한 국가 연주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북측은 부산아시안게임에 350여명의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공연

단 등을 포함, 최대 1000명의 인원을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정부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정부 관계자는 "경기장의 참가국 국기게양과 메달 수여때의 국가 연주 등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헌장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경기를 개최한 이상 그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북한 응원단과 부산시가 조직

할 응원단(서포터스)에 인공기 사용을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포터스의 북한 응원기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때 사용한 흰색 바탕에 하늘색 지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측 응원단의 인공기사용 허용 여부는 추후 검토하는 방침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인공기 응원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 이를 제한 허용할 경우 국내법과의 상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중"이라면서 "경기장 주변 일정 지역을 '아시아평화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 국가보안법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제기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BAGOC)는 지난 10일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북측이 제안한 금강산 실무 접촉문제에 대해 동의하며 접촉기간은 오는 17~19일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2002. 8.12(월)

사전조율 충분... '남보' 기대감

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오랫동안 갈색코던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런 만큼 양측 대표들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구체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여러가지 면에서 6차 회담때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사전 실무접촉없이 곧바로 본회담에 돌입했던 이전까지와 달리 남북 양국은 이번 회담전 실무접촉을 통해 의제 조율과 일정 합의할 미리 마쳤다. 따라서 본회담에서 양측 대표들은 곧바로 의제 회의에 들어가 구체적인 합의에 비교적 손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부가 의사 진행의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는 회담이라는 것도 이번 회담의 특징 중 하나다. 지금까지 남북 양국간 대화는 우리가 먼저 대화를 요청하면 북한이 이에 "그렇다면 하자"는 식의 태도로 응하는 게 전철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의제면에 소극적이고 우리가 더 적극적인 양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여러 의제면에 북한이 적극적이고 우리는 느



회담장 점검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이 11일 서울 신라호텔에 마련된 7차 남북 장관급회담장을 둘러보고 있다. 호임수기자

지원 급한 北 예전과 달리 태도 적극적

南, 새로운 제안보다 합의사항 이행 초점

곳한 입장인 장민대의 경태를 보이고 있다. 바로 북의 사해교전 무력도발에 계기가 됐다. 내각진 국민연속 협상카드도 내세우는 우리측에 대해 일조가 실질적인 북한으로서는 우리측의 여러 요구들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이 명분을 내세우며 시무일 정도의 자존심 싸움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새롭다만 새로운 일이다. 6-15 남북공동성명서와 일련된 대북외교안보특별회의 광명방안서 이같은 변 4-5 합의할 기본 틀로 삼아 남북 양국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합의에 곧바로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표단은 일단 새로운 제안보다 이미 합의한 사항의 이행 점검을 화점한다는 양측

을 세워놓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 문화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방콕화 회담 회담, 김의선 회도 및 도요영결 이행 화점 등이 우리 대표단의 신갈 화제들이다.

사해교전 사태와 같은 무력도발 재발방지책 요구도 방점할 화점이다. 따질 것은 따져 북측으로 하여금 군사당국자간 회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이러 비례 북측의 주된 관심사는 범죄현, 개성공단 건설 등 자신들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지원 방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이미 지난 4월 실무접촉에서 아시안개발 참가, 5차 이산가족 상봉 등을 약속하며 "계속 해주기만 한다"는 비판을 가하는 보수층을 달

날짜	내용
8월 12~14일	7차 남북장관급회담
8월 15~16일	8-15 남북공동성명서교섭사(북측 대표단 100명)
8월 20~30일	남북공동수석대표 2차회의 사전 개회 예정
9월 8일	남북 수석대표단 서울 친선경기
9월 14일	4차 남북적십자회담 및 제5차 이산가족 공강산 상봉 예정
9월 29일	부산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및 통일당 대표회 참가

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만 넣었다. 거기다 북측은 사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 사과할 요구하는 우리측을 어느정도 냉담하고 판단하고 있다. 북측은 이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재개를 통한 경제지원책에 기대기 위해 회담전의 역량을 쏟아부을 태세다.

신항호기자 procal@kmb.co.kr

재계도 기대감 "경협 활성화 계기를"

재계는 남북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대북 경제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북 장관급회담에 이어 북한이 9월 부산에서 아시안게임 참가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간 대외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강부가 이번 회담에서 남북경제추진위(경추위) 재개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도 재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재계는 특히 최근 북한이 경제관리방식에서 시장경제적 요소권 일부 도입하고 있고 금강산 민간접촉 과정에서도 분위기가 풀리고 있는 점들을 들어 이번 회담의 결과가 좋게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경협 활성화를 위한 가지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강산관광사업을 담담하고 있는 현대아산은 누구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대부분의 남북 기업들이 북한 무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불운이 터지면 평

투자 위험요소 차단위한 4대 경협합의서 발효돼야

정할 것"이라며 "북측과 이미 합의한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개성공단 특구 지정 문제 등이 조속히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성경제연구소도 최근 관련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남북간 경제협력에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이 무지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다. 재계는 남북경협사업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위험이 큰 만큼 실제로 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 이종교체 방지 등 이미 합의한 4대 경협 합의서가 발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경관급회담의 성과가 좋아 4대 경협 합의서 발효로 이어지면 현재 추진중인 개성공단 조성 및 금강산관광사업에 남북 기업은 물론 외국자본의 유치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대부분의 남북 기업들은 북한 무지에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법적인 보장이 없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도 고위 관계자로 "4대 합의서가 발효되는지가 경협 활성화의 관건"이라며 "여와 함께 통신, 통행, 육로수송 등도 이뤄져야 무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 관계자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북한은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협소하지만 남북관계가 불안하면 외국자본이 떠난다는 측면에서 남북 경협은 일종의 안전비용"이라며 "투자할 조건만 마련된다면 국내 다른 통신회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북한 통신사업에 진출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남중기자 nkim@kmb.co.kr



정세원 통일부장관(가운데)이 11일 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린 서울 신라호텔 회담장에 둘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은구 기자 eokank@hankyung.com

철도·도로 연결 ... 개성공단 논의할듯

오늘 장관급 회담 - 군사회담·이산상봉 스케줄확정

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12일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2박3일간 열린다. 김대중 내각책임 장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 29명은 12일 오전 간담회로 서울에 도착하며 이튿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기존 합의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관후 남북 관계에 진전 여부를 결정지을 관수당이 될 전망이다.

◆별 논의하다 △철도 및 도로인 김.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

지를 논의할 2차 경제협력추진위 개최 △북측 경제사절단의 남한 파견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 개최 △군사당국간 회담 재개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4차 남북직접저회담 개최 및 5차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일정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있지 않지만 장관급회담 때마다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예기가 나올지 주목된다.

남측은 2차김주위의 군사 당국간

회담을 이날 하순에 개최할 것을 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삼파전역 지원을 이같이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해 어느 한에서 집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회담 전야-이번 회담이 북측에서 먼저 재의내외 상사했다는 점에서 전망이 밝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남북관계 긴장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군부가 최근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회담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북한이 정세원 회담에 따라 대외의 문을 다시 열어왔던 진척이 많아 낙관할 수는 없다.

윤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경의선·금강산 육로 연내완공 적극 추진

경향신문

2002. 8.12(월)

오늘 남북장관회담...동해선 조기착공 추석 이산상봉·임시면회소 설치 제의

정부는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연내 완공과 금강산 육로관광 연내 실현을 추진키로 했다. 또 추석 전 제5차 이산상봉 실시를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위해 북측은 이같은 연내 경의선 착공을 시작하고, 남측은 북측이 원할 경우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조속히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경의선 연내 완공과 금강산 육로관광 연내 실현을 위해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금강산관광을 위한 당국회담, 군사실무협회의 이같은 제의를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2박3일간 열린다. 김대중 내각책임 장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 29명은 12일 오전 간담회로 서울에 도착하며 이튿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이 당국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남측은 경의선, 북측은 동해선에 각각 비중을 더 두고 있어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수용한다면 경의선·동해선의 이담중 동시착공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남측은 이미 5차례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DMZ에 공사를 위한 군사보장협의를 풀 마련했지만 양측 국방장관이 이 협의의 서명·교번 절차를 밟지 않아

협약이 발효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당국자는 제5차 이산상봉 실시시기와 관련, "다음달 초·중순에 이산상봉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이산면회소를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한 문제 해결은 직선회담이 없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그동안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 임시면회소 설치 문제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정일 내각장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 29명은 12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에 도착,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남측과 1차 전체회의를 갖는다.

조호연·이동욱기자 chv@vndchina.com

軍 신뢰구축 최우선노력

장관급회담 정부 전략-진망

1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창송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북한의 부산이시안 게임 참가와 8·15공동행사 참석 등으로 어느 때보다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남북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부문에 역점을 두고 회담에 나설 입장인 것으로 회담 결과를 살펴볼 때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남측 대표단의 일인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정책실장은 11일 브라질에서 "이번에도 서해교전과 관련, 재발방지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도록 북측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성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군사당국자회담에 우선 비중을 두는 것은 남북한 신뢰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선 군사문제를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경의선 등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공지도 결국은 군사문제에 귀결된다. 따라서 우리측은



회담준비 분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서울 신라호텔 직원들이 회담장 테이블을 닦는 등 막바지 준비에 분주하다. /이재형기자

서해교전 재발방지대책 강력 제기 경추위 재개 등 '4·5합의' 이행 주력 '면회소' 난항예상... 회담 낙관 어려워

'DMZ 군사보장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북측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측은 군사회담 개최 합의가 이뤄지면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도발 문제 ▲북방안계선(NLL) 문제 ▲임동원(林東源) 대통령령보 발북

당시 제기했던 주적문(主敵論) 문제 등을 다뤄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측은 임동원 특보와 김용순(金容淳) 노동당비서간 4·5공동합의의 '이행'에도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경추위, 2차 회의 재개와 금강산관광당국자회담, 경제시찰단 서울 파견, 5차 이산가족상봉 등 5대 핵심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측은 북측이 이 사안에 합의하는 중 남북관계 진전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면 30만~50만 명의 값지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이시안 게임 참가에 따른 북측 대표단과 통일당의 신변보호와 인공기(人共旗) 게양, 성화제와 문제 등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물론 오는 17~20일 금강산에서 양측간 합도의 실무접촉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남북 양측은 추석을 전후한 5차 이산가족상봉 문제도 이번에도 다룬다. 하지만 '제도의 해결'을 위한 상설면회소 설치 건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면회소 설치 없이 곧바로 상봉을 하자는 입장이고, 우리측은 상봉은 계속 하되 추가로 직산자화단도 열어 면회소 문제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김기동기자 kidong@spt.co.kr

■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12~14일 서울 신라호텔)

의제	주요 내용
남북 철도·도로 연결	경의선 군사 안전 확보, 동해안 철도·도로 연결 추진
계엄종전선정	북측의 계엄종전선정
임진강 수해 방기	공통조사 및 상무협조, 수해구호소 운영, 방기 운영
남북 과학협력 추진위 2차 회의 개최	8월을 개최
금강산 관광 협력위 4차 회담	포기 계획
북측 공해사정단 파견	연내 파견 요청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8월을 개최
제5차 이산가족 상봉 실현	제1차 남북이산가족 회담 개최, 면회소 설치 문제 논의

일정	주요 내용
12일	오전 10시를 북측대표단 고려민행민연공동도회, 남12시를 경제협수석대표와 북측 김철성 단장 환영, 오후 4시 1차 전체회의 후 휴전
13일	오전 10시 2차 전체회의, 오후 1~3시 북측대표단 문해제 협조 후 휴전
14일	오전 9시 3차 전체회의 및 공동 보도문 발표, 오후 2시 북측대표단 휴일 귀환

서울경제

2002. 8.12(월)

"남북경협추진위 이달말 재개"

정부, 오늘 개막 장관급회담서 제의키로

정부는 12일부터 열리는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대북 쌀 지원문제 등을 논의할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이달 말 재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직자는 11일 "장관급회담에서 보다 못한 이점이 없는 한 오는 26일에서 31일 사이에 서울에서 2차 남북경협추진위 회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달 말 남북군사

당국자회담도 개최하기로 하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따른 군사보장합의서 서명·교환을 군사당국자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은 12일 오후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9개월 만에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의 공식적인 입장에 돌입, 국방당국자회담,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개최, 이산가족 문제 등 양측간 현안을 논의한다. /이상훈기자 shlee@sad.co.kr

오늘 서울서 남북장관급회담

14일까지...경추위·군사당국자회담 일정 등 논의

남북 회담은 12일 오전 9시 30분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9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임동원 청와대 통일정보보좌관이 평양 방문에서 합의한 1등 공보보도문합이 성취하기 위한 일정을 확정하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알입 대외 국면의 촉박점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도 통일부 장관정세현장은 11일 7차 회담은 실무대표 접촉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관계 일정을 확정하고 실천하는 최단선 방안을 새로운 합의보다 한미원 회담을 구제하는데 논의를 집중하는 실용적 성격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회담에선 스정도 및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문제 등을 논의할 경제협력구상과 2차 회담의 스정도 관련 협상화를 위한 2차 당국간 회담 소담북간 긴밀한 대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할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 등의 개회 일정을 더욱 적절하고 말했다.

그는 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 문제를 협의할 적십자회담 일정과, 금강산에서의 제5차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정은 또 '8·15 민족공동선언서와 남북 축구경기,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의 문제에 대해 관련기관 협력이 이뤄지도록 당국 차원에서 지원·협력하는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북 총수 이재민 2만여명

국제적십자사, 원조 요청

국제적십자사는 10일 지난주 북한 지역을 휩쓴 홍수와 산사태로 북한 주민 수십만명이 죽고 적어도 300만명이 다쳤으며, 2만2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면서 북한 이재민들에게 돈, 담요, 의약품, 장수기 등의 구조용품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60만달러를 긴급 원조해줄 것을 각국에 요청했다.

제3매:AFP 연합뉴스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가운데) 통일부 관계자들이 서울 창충동 신리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을 둘러보며 최종점검을 하고 있다. 김광호 기자 hyupde@hani.co.kr

한국일보

2002. 8.12(월)

매일경제

2002. 8.12(월)

남북경협추진위 이달말 개최 추진

오늘 서울서 장관급회담

남북은 12일 서울 창충동 신리호텔에서 제7차 장관급 회담을 열고 급박한 실무대표접촉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종 회담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협의한다.

특히 남북은 이날 하순 제2차 남북합작추진위원회와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5면

또 이산가족 면회와 관련해 임동원 수석(9월 21일) 이전 제5차 상봉급 금강산에서 갖고 제4차 적십자회담 일정을 확정해 민회소 설치 등 상봉 제도화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부산 아시아경기(9월 29일-10월 14일) 참가와 남북 축구경기 개최(9월 8일 서울 예선) 개최를 위해 남북한 축구협회를 관련기관의 접촉을 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애틀에 관한 무려총을 시애틀

제방되지 않도록 군사당국자회담도 조속히 열 것을 제안해 장소와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봉도 남북 대표(중앙부 통일정책실장)는 11일 "회담이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는 새로운 합의보다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회담 일정을 구체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문제 해결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북측의 식량지원 요청과 관련해 "북측의 태도와 회담 결과 등을 평가하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김연진 내각장관을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 22명이 서울 직할군으로 불려 12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박3일간의 공식 일정이 들어간다.

내정기자 philip@nk.co.kr

대한매일

2002. 8.12(월)

탐색없는 '속전속결' 예고

7차 장관급회담 일정

지금까지 진행했던 여섯 차례의 남북 장관급회담에 3박4일에서 길게는 4박5일동안 열린 것과 달리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2박3일동안 열린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짧은 일정이지만 북측 참가단이 서해직항로로 통제 1시간만에 도착하는데다 속전속결로 회의를 진행하

고, 전체회의만 2박3일로 이전보다 일정줄어 세 차례 열릴 예정에 세차례 전체회의로 내칠 기대 단보다 더욱 밀

도있는 회담 진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김영삼 내각책임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대표단은 남측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 박문식(朴文錫) 문화관광부 차관, 이봉도(李鳳道) 통일부 정책실장, 서영교(徐永敎) 통일부 국장 등 4명의 협정팀을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차 회의에서 남북 수석대표단은 2박 3일의 성과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협의를 교환하며 상대방의 회담에 임하는 기본 입장을 타진하게 된다. 저녁에는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 초청으로 환영반찬을 갖는다. 둘째날인 13일 오전에는 2차 전체회

남북 장관급회담 세부일정

12일	오전 9시	북측 대표단 출발
	오전 10시	인천공항 도착 신리호텔로 이동
	오후 4시	제1차 전체회의
	계	남측 수석대표 부회 면담
13일	오전 10시	제2차 전체회의
	오후 4시	북측 대표단 출발
	오후 7시	대표단 면담
14일	오전 9시	제3차 전체회의
	오후 2시	인천공항 출발

의가 열린 뒤 오후에는 경기도 한

민회보존지역을

둘러본다. 저녁에는

반찬을 갖는다. 여섯 차례 장관급

회담의 진행에 비춰볼 때 이날은 저

녁 이후에도 개별 회의 등이 반복되

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날

인 14일 오전중 전체회의가 있긴 하지만 미합의 부분 타결, 공동보도문 등 수장 등을 마무리짓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회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

이다. 14일 오전 3차 회의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의제적인 만남이 될 전망이다. 남북 대표단은 공항에서 공동 오찬을 갖고, 북측 대표단은 평양으로 돌아간다.

●북측참가자 youn@nkdaily.com

새로운 합의보다 内實에 무게

■ 오늘부터 서울서 南北장관급회담

12~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말기의 남북관계 뿐 아니라 북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전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은 일단 남북이 사전에 실무협약(2~4일, 금강산)을 통해 의제 등을 확정함으로써 예상보다는 내실 있는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해교전이라는 군사적 충돌 이후 열리는 회담인 만큼 주적 문제 등 의제의 의제가 불충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 "경의선 연결 시간표 도출 노력" 主敵문제등 의외 악재 돌출땐 난항

경의선 연결 일정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인 듯하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현안 모두가 중요하지만, 경의선 연결만큼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북측이 지난달 25일 회담을 재의하면서 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제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경의선 연결의 경우 북한의 의지만 확인되면 바로 실현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인 공사시작 및 완료 시점 등 협의 의문에 명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관점에서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보장 합의서' 서명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즉각 개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2차 국방장관 회담

정부는 이와 함께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그 해 11월 중순쯤 북측 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부산 2차 국방장관회담을 반드시 조기에 개최, 서해교전 등 남북간의 포괄적 군사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북측도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를 의제로 삼기로 합의한 만큼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북측은 그러나 서해교전의 경우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거론하지 않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12~14일 서울 신라호텔)

남측		북측	
철도·도로 연결	경의선 공사 촉박 촉구	원칙 동의	
계정결산 진행	북측 국제기구 지원	남측 안전보장	
임진강 수해방지	금강산사 후 관광소 설치	원칙 동의	
2차 경협추진위 개최	속기 개최	원칙 동의	
금강산 육로회담	조기 개최	조기 개최	
북측 경제지원단 파견	연내 파견	공정 정보	
남측 군사당국자회담	속기 개최	원칙 동의	
5차 이산가족 상봉	4차 적십자회담을 통해 상설연락선 논의	북방위계(남·북·유엔사) 회담 주제로 2주 추진	
북측 육로구대회	북측 육로구대회	공정 정보	

이경호(李敬浩) 통일부 정책실장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도 짚을 것은 많겠으나, 군사당국자 회담 일차 합의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현안 논의를 해나간다면 서해교전 문제를 짚어줄 필요는 없을 듯 내다봤다. 북측도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이상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불지원 문제

북측이 식량지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2차 경협추진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식량지원은 경제 사안이자 인도적 문제"라면서 지원 의사를 강하게 시사한 뒤 "북측의 태도와 회담 경과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추진기를 맞은 북측도 식량을 받기 위해 경협추진위 조기 개최에 호응할 공산이 크다. 결국 쌀을 매개로 경협추진위가 이 단 말중 서울에서 열릴 수도 연결, 임진강 수방사업, 개성공단 개발 등 굵직한 북한 현안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동준기자 djk@k.co.kr



정세현(가운데) 통일부장관이 11일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린 신라호텔 회담장을 둘러 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부산 亞게임 '인공기' 딜레마

정부 "경기장 계양·국가연주 불가피" 입장 응원때 허용 여부 고심... 보안법과 배치 '한반도旗·평화구역內 최소화' 대안 검토

북한이 부산 아시안게임(9월29~10월14일) 참가를 공식 통보해 올에 따라 대회 기간 중 인공기(人共旗·환람오각별기)를 사용한 응원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시연

을 전제로 "북한이 참가국으로서 참가하는데 국가 계양까지 막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제한적 인공기 사용 허용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정부 및 정치권에는 인공기 사용이 국가보안법 등 관련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데다 국가 문란의 계기가 될 것이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정부는 일단 경기장 내의 인공기 계양과 북한 국가 연주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경기 참가국의 국기 계양, 애국가 48초에 병기해 있어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헌장 제48조에 병기해 있어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남한에서 인공기가 공식적으로 사용 되는 셈이다.

문제는 북한이 파견 의사를 표명한 응원단과 국내 서포터가 응원에서 인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제7조)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며, 내·외국인을 발문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북한 주민의 경우 신변안전 보장 각서할 교환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처럼 남북 응원단이 함께 응원할 경우 한때 비판에 휩싸이게 지도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17~20일 금강산 남북 체육회담에서 북측이 남북 공동 응원에 호응하고, 한반도기 사용에 동의하지는 미지수이다. 정부 입각에서는 경기장 주변 일대 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지정, 국가보안법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기자

남북 대표단 모두 베테랑

北 김영성·최성의 낮이어
새인물 김춘근은 남한通
南 정세현·윤진식도 전문가



정세현 통일부장관 김영성 내각총리



윤진식 재정부장관 최성의 조총리부장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참석할 북측 대표단의 명단은 김춘근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낮이 익숙한 인력들이다. 김춘근 대표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전담하다가 하고 있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서기장을 맡고 있다. 5.6차 회담에는 김대중 대신 허수명 민경련 총서장 및 무역상 처장이 북측 대표로 나섰다.

내각 사무국 차사와 김민권 문화성 국장은 지난 5차 회담때부터 대표로 나섰다. 모두 남북합작 경험이 많은 실무형이다. 우리측 대표는 정세현 통일부장관,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박문식 문화관광부 차관,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 서영교 통일부 국장 등이다. 정장관은 학자출신인 통일문제 전문가로 통일부 고위직과 차관 등을 두루 거쳤다. 친정권 초기부터 대북정책을 주도해온 터라 누구보다 북측과의 협상에 적당하다는 평이다. 윤차관과 박차관은 남북경협과 금강산관광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책임자 지고 있다. 이일장은 햇볕정책의 핵심이라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장관급회담 대표로 나섰다. 서국장 역시 장기간 대북 고압 강압을 지낸 실무형 전문가라는 평가다.

최성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서기국 부장은 2000년 7월 장관급회담이 시작될 이후 이번까지 계속 대표로 나서는 터라 누구보다 낫다. 1989년 내남협정 진전에 나선 그는 지난 90년 6월 중국 베이징 사관급회담과 2000년 4월 장관회담 준비과정에도 북측 대표로 나섰다. 지난 1월 임영민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할 때에는 공청에서 연설하기도 했다. 조성발

공보보도문의 협력사항 이행과 실천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5 협역사항 이전에 양측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실천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6·15 공동선언에 포함된 김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의제로 떠오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위원장의 답방문제는 지금이 대선급을 앞둔 민감한 때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온다, 안온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정부로서는 냉각된 남북관계도 다시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이번 회담이 정치권으로부터 대선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러울 모습이다. 그러면서 북측이 이 문제를 꺼낼 경우 "외서는 안 된다"고 신중 대답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김정일 답방 얘기 나올까

외제에 없어 정부 '고려안해' 회담중 자연스레 논의가능성

이번 남측장관급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를 논의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실무진이 합의한 외제에는 이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 우리측 회담대표단 대변인인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는 없다"고 말했다. 이일장은 이번 회담이 지난번 4·5

아시안게임 '인공기 사용' 고심

제한적 계약 내부방침 불구 대학가등 확산될까 우려

정부가 북한 인공기 사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내달 29일부터 열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공기 사용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강했으나 그 범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인공기 사용을 제한할 한양·고우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향후 대학가 등에서 인공기 사용 관련 사용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고, 보수층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는 11일 국가보안법상 남북의 허가 없이 인공기 사용 무렵으로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해 있으나 아시안게임 기간 중 북한이 참가하는 경기장 천수 및 임원숙소, 시상식장 등 대외 관련 시설 등에서의 인공기의 계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준태 조직위원장은 "경기장과 공공시설에서의 인공기 계약은 아시안게임위원회(OCA) 환경에 명백히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웅천(서포터스)이 사용하는 것과 시가지에 계약하는 것 등은 관계 당국과 충분한 협의의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정일 答訪說 왜 솔솔 나오나



남북관계 개선 조짐과 함께 최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10월 답방설이 다시 나오고 있어 관심이 일고 있다. 이 문제가 북측 거론되는 곳은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기획위 보고서에서 "청와대·통일부·국방부·국정청 등의 장보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이 임기 말 임지가 취약해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원하는 한편 현정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실리를 챙기기 위해 방북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시기는 9월 하순-10월 초순, 정상회담 장소는 서울이나 제주, 또는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부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랐다. 안기부 차장 출신으로 방대장 보통인 정호근(鄭亨根) 의원은 9일 70쪽 중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문제는 4월 초 임동원(林東源) 북보의 방북 시점

을 묻자 "무언가 거대한 논의가 숨겨져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강한 의욕을 시선을 보였다. 이희창(李希昌) 대동방 후보의 한 특보는 "장관급 회담에서나 합의할 사안이 실무 접촉에서 결국 합의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며 "이번 남포리연 장관급 회담에선 김 위원장 답방이 최소한 아시안 게임 개막식 참가가 발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임기 전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의 방북설을 내놔다가 이번엔 신문을 밟았고, 지난주에는 정몽준(鄭夢準)의견의 방북설을 주장, 민주당과 정 의원의측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농성이야 정 부속 움직임에선 김 위원장 답방설을 뒷받침할만한 징후는 전혀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이 답방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이번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의지를 명확히 반영할 수

한나라 '大選겨냥 新북풍說' 제기 정부선 '아직까지 가능성 없어' 선물보따리 노린 '카드'로는 상존

간주되었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이루겠다는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측의 회담 공개와 회담이 백이부리는 의도도 전 중인 마당에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외제할 수도 있는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해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로 답방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즉, 김위원장의 '답방수요'는 상존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답방설도 이런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있는 최고위급 인사의 조율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는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주장들은 대선을 앞둔 방어적 의외의 산출일 수도 있지만, 막대한 개연성에 대해 미리 공개와 회담이 백이부리는 의도도 상존해 있다. 이는 정 의원 방북설을 얘기하면서 청와대의 의도도 거론한 데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난도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측은 김 위원장의 답방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만을 써 왔는데, 서울 방문 시 반대사류 등 방북에 정서에서 따른 신변 위협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전부터 '북한 인력의 어려움 여건에 비추어 김 위원장이 차기 정권과 협할 수 있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12월 대선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장 수 밖에 없다. 이른바 '신북풍 공작설'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관측은 2-4일 금강산에서 개최됐던 남북 장관급 회담 실무협력을 기점으로 고개를 들었다. 지난번 북한이 장관급 회담 재개 제의를 하면서 그 배후로 의도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한나라당은 실무 접촉에서 북한의 아시안 게임 참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대외 현안에 대한 합의가 손쉽게 도

이와 별도로 김 위원장의 답방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민주당의 대선 전면에 과연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이종준기자

인공기 계양 '제한적 허용'

'北참가 아시안게임'대책

북한의 부산아시안게임 참가로 밝혀진 '人共旗(인공기)' 계양 문제가 정치권과 사회각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마련중인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조금씩 엿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단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현장과 국가보안법 사이에 상충되는 인공기 계양 및

북한국가 연주 부문에 대해 '제한적 허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이 지

난 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사건임을 전제로 "최소한의 인공기 계양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계양 범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OCA 현장 48조(기와 휘장)는 모든 경기장 및 부근에 참가국 국기와 평의회 기를 계양해야 한

대한 찬양고무 행위는 중죄로 못 박고 있어 절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보 7일자 1면 보도)

정부와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는 현재 인공기 계양을 '경기장 주변과 북한선수단 숙소에 한정' 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단국자는 11일 "경기장의 참가국 국기 계양과 메달 수여시 국가 연주, 국기 계양은 OCA현장에 명시돼 있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에서 온 대규모 응원단과 부산시의 북한 '서포터스'까지 인공기 사용을 허용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 등 대도시의 도로변에 인공기를 계양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문제는 경기장 등 제한지역에만 인공기 계양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형평성 문제와 북측의 반발이다.

특히 북측은 선수단-응원단을 포함, 500~1000명의 대규모 인원을 보내겠다는 입장인어서 우리측은 보통 고민이 아니다. 남북한은 12~14일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원론적인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17~20일 부산조직위-북한올림픽위원회 간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다루질 전망이다.

정부는 엔트리 마감시한인 이달 31일까지 조직위와 통일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의 협의를 거쳐 인공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경기장주변-선수단 숙소에 한정

응원단-서포터스엔 허용 안할듯

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계양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에는 이적단체에

世界日報

2002. 8.12(월)

김령성 단장 '떠오르는 남한통'

경제담당 김춘근만 새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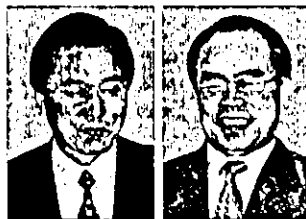
■ 北대표단 누구

12일부터 2박3일 동안 열리는 제 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북측 대표단은 김령성 단장, 조성발·최성익·김춘근·김한길 대표로 꾸려졌다. 김춘근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북 대화체념을 통해 낯익은 인사들이다.

지난해 9월 제 5차 회담때부터 단장을 맡은 김령성 내각책임협사는 이미 2000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준비접촉 때 '천리 먼 곳도 가까운 이웃'이라는 뜻의 북한 사자성이 '천리비린(千里比隣)'으로 남북대화를 강조해 유명해졌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종 당국 및 민간교류에 자취를 남긴 '떠오르는 남북 대화통'이다.

특히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과 김 단장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다 논리적이면서도 유연한 사고와 달변 등 공통점이 많다. 이런 친분과 공통점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은 2000년 7월 남북 장



김령성 단장

최성익 대표

관급회담이 시작된 뒤 한번도 빠지지 않았던 대표로 나섰다. 지난 89년부터 대남 협상 전면에 나선 최 부장은 99년 중국 베이징(北京) 차관급 회담과 2000년 4월 정상회담 준비접촉 때 북측 대표로 나선 바 있다.

조성발 내각 사무국 참사와 김한길 문화성 국장은 지난 5차 회담 때부터 대표로 나섰다. 모두 남북 학자들과의 학술교류에 참가한 경험자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처음으로 남북회담에 얼굴을 내민 김춘근 대표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민족경제 협력연합회(민경련) 서기장으로 5.6차 회담 대표인 허수림 민경련 총사령 겸 무역성 처장을 대신해 경주위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 박복삼기자

대한매일

2002. 8.12(월)

2002. 8.12(월)



Global Eye



주었다. 그러면서도 까
갑스런 미국과 달리 평
양 지도부에 안도감을
전하는 틈새 파고들기를
구사한다.

중국도 반데려 전쟁에
서 미국편에 섰다. 중국
에 대한 견제심을 촉구하는 보고서들이 잇
따라 나오지만 데려 상대하기 바쁜 미국의
주력(主軸)에선 일단 벗어났다. 오히려 미
국의 견제가 당치기 전에 경제력부터 키우
자며 잔꾀를 쓴다.

바이어로 북한도 전방위 외교에 동참했
다. 과거 우방과의 관계를 복원하면서 미국
과 일본에 새롭게 접근할 준비를 서둘러 있
다. 게다가 대선 앞둔 남쪽 정부가 간신히
바라다면 밀집 것 없는 동북아 장기전에 구
미가 당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주변국 상대로 줄
타기 외교에 관철하는 북한과는 대조적이

북풍이 불어닥칠 모양이다. 이번에는 '신
(新)북풍' 이란다. 대선 때마다 어김없이 불
었던 바람이건만 이번엔 삭풍(朔風) 아닌
미풍(微風)이다.

북한의 위협을 들먹여 겁먹은 유권자들
마음을 집권당에 불어넣어 놓으려던 선거공작
이 북풍이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집조적 자세에 기대리는 전락이다. 햇볕정
책의 성과를 앞세워 떠나가는 민심에 호소
해 보겠다는 '신관(新觀)' 북풍이다.

지난날 국내정치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공작
의 피해자는 대부분 현 정부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포용정책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것은 아이러니다. 하지만 정

'新북풍' 먹혀들지 않는데...

황을 보니 바람이 휘어닥칠 이유는 있는 것
같다.

입기내 햇볕정책에 매듭을 짓고 싶은 정
부의 근거있는 욕심이다. 또 당 떠난 대통령
이라지만 대선 앞두고 표류하는 집권당에
무언가 보태고 싶은 심정 이해한다. 게다가
평양발 위신이 전하듯 북한 스스로 변화할
시험하고 있다면 남쪽의 맞장구에 따라 따
스한 바람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신북풍'
음모를 제기한 아당이나 의심받는 이들 모
두 바깥세상에 무심하다는 데 있다.

정치권은 대선공방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의 계산은 냉엄하다. '외의
축(軸)'과의 '조건없는 대화' 마냥 한 입으
로 두말하는 미국이다. 경수로는 지어주되
핵사찰은 제때 받으라며 북한을 밀어붙인
다. 또 지난해 9월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환심을 사려 경쟁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모
두 북한의 우방들이다.

러시아는 미사일방어체계(TMD) 논란
에서 중국의 뒤봉수를 치며 미국 손을 들어

다. 미군 재만권 이양, 대사관 신축 등을
놓고 민심은 동맹국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를 뻔히 보면서도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자세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진지한 노력
은 어느 정당에서도 할 수 없다. 또 마늘
분쟁, 탈북자 처리로 시끄럽지만 중국을
어찌 상대할 것인지 큰 그림 그려내는 대
선 후보는 없다.

혹시라도 햇볕정책의 성과에 대한 조급
함이나 대선장국 흔들기의 유혹에서 출발
한 것이 '신북풍'이라면 이는 집권당의 패
각(敗角)이 될 것이다. 과거 북풍의 피해
자였다며 하소연해도 먹혀들지 의문이다.
한편 '조건부 포용'이란 실천하기 어려운
아당의 수사학이나 햇볕정책에 대한 조건
반사적 매도(罵詈) 역시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북한이 휘젓고 다닐 정기관에 '열' 도둑
지치는 여의 대선공방이 '신북풍'의
실체라면 그런 바람은 국민들에게 먹혀들
지 않는다. **논설위원 겸 국제담당**

한국경제

2002. 8.12(월)

서해교전 분명한 사과 있어야

북한이 오는 9월20일부터 부산에서 개
최되는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과 방
견단을 파견하겠다고 한다. 남한에서 일
라는 국제적인 체육행사에 처음으로 참가
하기로 한 자세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최근 일련의 북측 농기양이 적
극적이고 전향적이란 점에서 우산 반기는
일이다.

오늘부터 서울간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장관급회의에선 이산가족 상봉문제, 8·15
민족통일대회 개최, 남북축구를 본래 등
을 논의할 예정이고, 뒤이어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와 군사당국자회담 등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남북간 대화와 교류가 어느 때
보다 활발해질 게 분명하다.

6·29 서해교전으로 싸늘하게 냉각됐던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고, 정부와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
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명해야 할 것은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사과와 책
임자 처벌 등 재발방지대책이다.

북한이 전적으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일 최대를 바라고 또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면 우리측이 신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
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제각각 9월
에 작공권 견의인 천도와 도요인간 사업이
북측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로 중단된 것은

비롯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
기하고 나온 신례가 한말이 아니었다는 점
을 되새기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 각종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추진
된다지만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북
한측의 속셈이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이번 장관급회담 등
에서 남측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고 그 첫번째가 서
해교전에 대한 사과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
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에 한안이 되 있으면서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임진강 홍수문제
와 금강산댐 문제에 북측이 선의있는 자세
를 보이는 것도 교류협력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특
히면 물난리를 겪는 임진강 홍수문제와 수
많은 공사비를 쏟아야 하는 금강산댐과 대
동댐 문제는 양측의 공동대응이 절대적으
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북한측이 가
초적인 공동조사조차 남색하기 어려운 주
장으로 거부한대서야 말이 안된다.

북측은 서해교전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하고 이월 사안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자세
를 보여야 한다.

“17~19일 금강산서 접촉갓자”

AG조직위, 北 접촉제의를 대신

부산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BAGOC)는 지난 10일 대회 참가에 관한 실무접촉을 하자는 북한측의 제안에 대해 오는 17~19일 금강산에서 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조직위는 이날 정순택 위원장 명의로 관문점을 통해 북한올림픽위원회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북측이 제안한 금강산 실무접촉 문제에 대해 동의한다. 조직위 사무총장이 포함된 대표단과 지원인

력을 금강산에 보내고자 하며 기간은 오는 17~19일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관문점 남북연락관 접촉에서 박명철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서한문을 보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아시아게임 참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BAGOC와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바 있다.

/김용환기자 kimj@sgt.co.kr

世界日報

2002. 8.12(월)

한국일보

2002. 8.12(월)

남·북 금강산 실무접촉 금물살



남쪽 “17~19일 만나자” 대신

○…북한의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9.29~10.14) 참가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이번주 금물살을 탔 것으로 보인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순택)는 11일 대회 참가를 위해 금강산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하자는 북한측의 제안에 대해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 10일 정순택 위원장 명의로 관문점을 통해 북한올림픽위원회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북측이 제안한 금강산 실무접촉 문제에 대해 동의한다”며 “조직위 사무총장이 포함된 대표단과 지원인력을 금강산에 보내고자 하며, 기간은 17~19일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관문점 남북연락관 접촉에서 박명철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한문을 통해 “우리(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기대회 참가와 백두산 선화 채화 등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쌍방 체육 관계자들이 이른 시일 안에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7일부터 20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남북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0월14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11일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밝혔다. 이연택 대한올림픽위 위원장은 개막식에도 로게 위원장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로게 위원장은 일정상의 이유로 개막식에만 참가하기로 했다.

일 태권도선수 파견안기로

○…일본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태권도 선수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내년에 합쳐 있는 일본태권도연맹(JTF)에 대해 애초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등록 마감 시한인 5월 중순보다 두달 가량의 말미를 더 주고 타협을 유도했으나, 일본이 가라앉지 않자 선수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모리 다카노 부연맹 회장과 마루야마 가즈노리 이사장 사이의 갈등은 지난해 말부터 일본태권도계가 두 파벌로 나뉘면서 더욱 심화되기 시작했고 최근까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일본에서는 과거에도 자신들이 진짜 태권도연맹이라고 자칭하는 두 집단이 갈등을 빚었으나, 1999년 11월에는 시드니올림픽에 선수를 출전시키기 위해 서로 양보했다.

김경무 기자, 도쿄/고도 연한
kkm100@hani.co.kr

추석前 이산상봉 절충

장관급회담... 南, 경협委·군사회담 개최제의

北 "아시안게임때 예술단등 600명 파견"

남북한은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첫날인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서로의 입장을 담은 기초연설문을 읽은 뒤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6차 회담에 이어 9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 관련기사 3면

남측은 연설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의 내주 개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일대 개최, 추석(9월 21일) 전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논의할 제4차 직심자회담 개최 등을 북한측에 제의했다. 남측은 또 서해 교전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사당국자회담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측은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금강산엔 공동조사,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간 회담 개최도 제의했다.

북한측도 연설을 통해 경추위, 직심자 회담,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회담과 함께 부산 아시아경기 참가와 남북 축구경기에 대한 남측의 협조, 태권도 시범단 교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은 그러나 군사당국자, 군사실무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서해사태에 대해서도 장관급회담을 위한 금강산 실무접촉 당시의 '제발방지를 위한 공동노력' 선언에서 다진 진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3일 2차 회의 등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직심자 회담, 경추위 개최, 북한의 아시아경기 참

가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 등에 대해 의견교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사분야 회담의 개최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崔秉謙기자 bmchoi@chosun.com

북한이 9월 20일부터 열리는 부산 아시안게임 때 선수단과 응원단 외에 예술단까지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북측 대표단의 최상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은 12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주미 만찬에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에게 "선수단과 응원단·예술

단을 합쳐 모두 600명이 넘는 인원이 부산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북한이 부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키로 하고 실무회담을 오는 17~20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한 적은 있지만, 예술단 파견 방침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權秉福기자 kkb@chosun.com



◇9개월만의 회담...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남측 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오른쪽)이 12일 서울 신라호텔 만찬장에서 북측 김원삼 대표의 건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달 아시안게임 人共旗 게양 경기장·숙소만 허용키로

대검, 법률 검토작업

김철은 다음달 20일 개막하는 부산 아시안게임 기간 중 인공기 게양 문제와 관련, 경기장 등 정해진 구역에서 제한적으로 게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대검 공안부(부장 이창수·李廷

晙)는 아시안게임 기간 중 인공기 게양 허용문제와 북한국가 연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민칭 사용이 헌법상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철은 현재 확실한 결론을 내린 상황은 아니지만, 인공기 게양과 북한국가 연주의 경우 경기장과 숙소 등 한정된 구역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 등에 무분별하게 인공기가 게양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질 법 위반 행위로 보고 단속할 방침이다.

김철은 자체 검토를 거쳐 금주 중 법무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거칠 예정이다. /李明謙기자 mllee@chosun.com

추석 이산가족 상봉 의견접근

南北장관급회담 첫날 금강산서 개최 구체 일정 협의

남북한은 12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7차 남북 장관급 회담 첫 전체회의를 열고 경의선(京義線)철도 연결과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집중 협의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추석(9월 21일) 때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는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해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3면>

회담 대변인인 이봉조(李鳳朝)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경의선 철도연결을 위한 군사신뢰회담을 조속히 열어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자는 입장과 함께 추석을 계기로 한 5차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방대책 등을 제안했다"면서 "임남범(金南範)의 공동조사도 협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李대표는 "이에 대해 북측은 2차 경험추진위원회와 각급자 회담,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국회담의 재개 등에 대해 입장을 제시했다"며 "태권도 시범단 파견문제도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서해교전 문제와 관련해 남측은 정세현(丁世鉉·통일부장관)수석대표의 기초연설에서 보다 분명한 사과·재발방지과 군사신뢰 구축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이날 초 금강산에서 일린 실무접촉 때 이미 입장을 밝혔던 거부한 것으로 李대표는 전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左)과 김영성 북한 대표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 첫 전체회의를 끝낸 뒤 만찬에 참석해 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건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석 이산상봉에 대해 회담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이산가족 문제의 압박성에 공감하고 추석을 계기로 한 제5차 이산가족 방문단 성사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북측 단장의 김영성 내각 책임장사도 추석 상봉에 "낙관을 가져도 좋

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서울 도착성명에서 "이미 상경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훌륭한 합의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여 14일 공동보도문에 어떤 내

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10시 고려항공 전세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북측 대표단 29명은 13일 오전 2차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경기도 용인 민속촌을 방문한다. 이영종·고수석 기자

<yjlee@joongang.co.kr>

世界日報

2002. 8.13(화)

對北쌀지원 내달말 재개될듯

정부 30만~50만톤 3~5개월 분산 北送

남북장관급회담 서울 개최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해빙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대북 쌀지원이 오는 9월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농림부 고위 관계자에 따

르면 "이번 서울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대북 쌀지원문제가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합의될 경우 당초 지난 6월 지원될 예정이었던 30만~50만t 수준의 재고쌀을 도장·포장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3~5개월간에 걸쳐 분산 수송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미국 등의 대테러 전쟁과 국제경제 침체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지원이 줄어들면서 식량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지난해(81만t)보다 25% 줄어든 61만t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한국을 제외하곤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수기자 kbs@sgt.co.kr



남북대표 건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오른쪽)과 북측의 김영성 내각책임참사가 12일 저녁 회담장 겸 숙소인 서울 신라호텔에서 만찬을 갖기에 앞서 잔을 부딪치고 있다.

경의선工事 재개 의견 접근

이달중 경협추진위서 실무협상... 對北 쌀지원도 논의

南北장관급회담 1차회의- 北 “亞경기 600명 파견”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문제와 논의할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할 이달 말에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 철도 및 도로인길공사할 위해 필요한 군사보장합의서 교환 등의 실무절차가 합의되는 대로 경의선 연결공사에 착수한다는 데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3면에 관련기사

남북이 8월 말 또는 늦어도 9월 초

에 경의선 연결을 위한 실무절차를 마무리할 경우 정부가 제7차 장관급회담의 최대목표로 추진중인 경의선 인내 완공 구상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김주위에서는 30만~50만 t의 대북 식량제공 문제도 논의한다.

남측 양측은 이날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와 밤늦게까지 이어진 막후 실무접촉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깊숙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경주

위 2차 회의를 8월 말에 개최하고 △적십자회담을 9월 초에 열고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9월 중순경에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 대표단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남측 대표단은 5차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 9월 초에 제4차 적십자회담을 열어 상설면회소 설치 등 이산상봉 문제 해결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측은 또 안전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 임남담(금강산담) 공동조사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북측의 서해교전 사과문제와 관련, 이 실장은 “서해교전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이 마 입장을 밝혔다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해 이 문제를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북측은 9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600명이 넘는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대표인 최성익(崔成益) 조평통 부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만찬에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에게 “우리가 이번에 부산에 많이 온다. 600명 넘게 온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北 “8·15행사 안전 확보돼야”

민화협 통지문... 北대표단 명단 오늘 보낼 듯

경향신문

2002. 8.13(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15~16일 서울에서 열리는 ‘8·15 민족통일대회’가 최대한 안전하게 치러졌으면 한다는 뜻을 남측,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에 12일 전했다.

북측 민족화해협은 팩스를 통해 “(8·15 민족통일대회) 개막 및 단합대회 장소가 최대한 안전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대표단 명단을 13일 오전

보내겠다”고 밝혔다. 북측 민족화해협은 또 “이번 대회에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 않고 학술토론회와 단합대회에서 2개의 초소문만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추진본부는 8·15행사 개막식을 감림리컨싱강기장에서 위귀합초점으로 변경하는 등 행사 대부분을 국내에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용욱기자

금강산 육로회담 조기개최 장성급회담도 이달 열기로

■南北 장관급회담 첫날 의견 접근

개성공단 등 다들 2차 경추委 26일 서울서 北, 이산상봉논의 내달5일 적십자회담 제의

남북은 내달 5일 전후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목표로 4차 적십자회담을 갖고 조만간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또 이달 안에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연결 공사를 논의할 남북 장성급회담을 개최기로 의견 접근을 보였다. ★관련기사 3면

남북은 12일 신리호텔에서 개막한 제7차 장관급회담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개성공단건설, 임진강 수방대책, 임남담 안전문제 등을 다룬 제2차 경합추진위원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은 이산가족 방문단을 추석 전후에 교환하기 위해 내달 5일부터 4차 적십자회담의 개최방안을 제의, 금강산지역내 준(准) 상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가 급진 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측은 또 9

월 중 남측 태권도 시범단의 방북, 10월 중 북측 시범단의 서울방문 방안을 제시했다.

회담관계자는 "북측은 이달 회의에서 남북간의 9개 의제에 대해 구

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며 "적십자회담과 경추위 개최 일정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북측은 그러나 서해교전에 대해 2~4일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언급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측은 재발방지 문제를 장성급 회담을 통해 논의할 것을 제의했으며, 북한은 이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전체회의 기조발

언에서 "새로운 약속보다는 기왕의 약속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골라 실천하는 회담,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 김령성 단장(내각 책임참사)은 이날 오전 고려항공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성명을 발표, "이미 상정된 모든 문제에 대해 훌륭한 합의를 이룩해야 하며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준기자 djlee@ik.co.kr



만찬 전배.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오른쪽) 통일부 장관과 북측 김령성 단장이 12일 저녁 신리호텔에서 열린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경의선 연내연결 추진

南제외에 北긍정적 군사실무회담 이달개최 가능성

장관급 회담첫날...추석전 이산상봉 실현촉구

남북은 12일 서울 잠충동 신라호텔에서 제7차 장관급회담을 갖고 군사당국자 회담과 경의선 연결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절충에 착수했다.

남측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는 이날 신라호텔 다이내스티움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초 발언을 통해 경의선 '연내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했다. (관련기사 34면)

이에 대해 북측은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비무장지대(DMZ)내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발효 문제와 9월 공사재개를 논의할 군사실무회담이 이달 말쯤 개최될 전망이다.

남측은 또 서해도발 사태를 예방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임남연 공동조사 및 개성공단 건설 등을 논의할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 재개도 이달 말에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남북은 첫날 회의에서 추석 이전에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고 상설면회소 설치와 시신교환 확대 등을 논의할 4차 적십자회담을 조만간 열기로 긍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8·15공동행사와 북한의 부산아시아게임 참가 문제에 대해

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해교전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와 관련, 남측은 이날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북측은 명확한 사과 대신 금강산 실무대표 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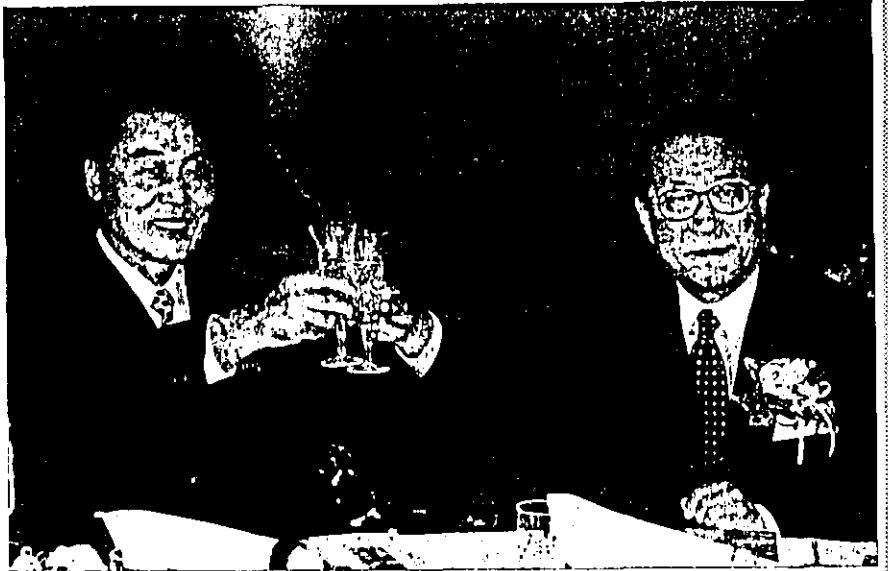
에서 제시한 수준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재확인했다.

이봉조(李鳳朝) 남측 장관급회담 대변인은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북측 대표단 가운데 새로

합류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김춘근 서기장은 실제 직책이 '내각 참모성 계획국 국장급'으로 참모 전문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은 13일 오전 2차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단독접촉을 갖고 본격적인 의제조율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북측대표단은 회의 후 경기도 용인 민속촌을 참관할 예정이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9개월만의 만남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북측 김형성 대표 단장이 12일 오후 회담을 마친 뒤 만찬을 하며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의선·금강산陸路 논의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7차 장관급 회담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의선 철도 공사 재개와 금강산 육로개척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관련기사 2면

남측은 이날 회의에서 경의선 철도를 올해 중 연결하기 위해 군사 실무 회담을 조속히 열자고 제의했다. 금

강산 육로 개척을 위한 당국간 회담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및 서신교환을 위한 4차 남북 적십자회담도 빠른 시일내 열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추석(9월21일) 이전에 5차 이산가족 상봉단을 교환하고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도 열어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을 위해 2차 검열추진위, 4차적

십자 회담, 금강산 당국회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북측 대표단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남 쌍방은 이미 상징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합의를 이룩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식·김동욱 기자 ysho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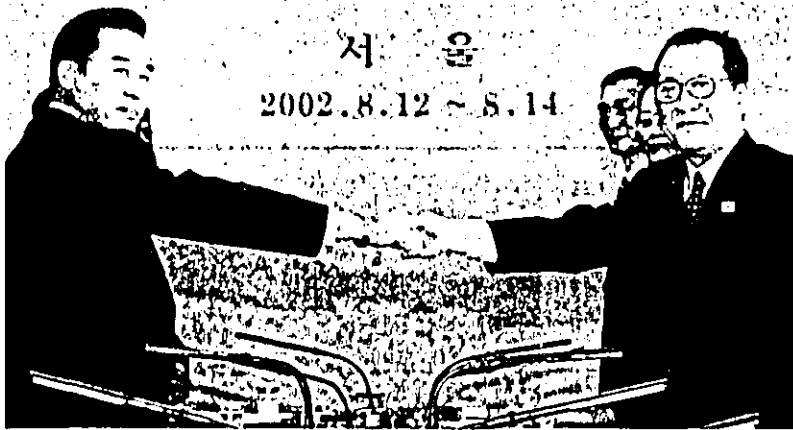
한국경제

2002. 8.13(화)

7차 남북장관급회담

서울

2002. 8. 12 ~ 8. 14



"같이본시다" 12일 오후 서울 잠실동 신라호텔에서 7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정세민 남북 수석대표(오른쪽)와 김영성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겨레

2002. 8. 13(화)

내달초 적십자회담 합의

경의선 공사 재개 시기엔 이견
북 "아시아대회 600명 넘게 올것"

장관급회담 어제 첫회의

남북은 12일 남북장관급회담 첫날 전체회의에서 9개소 4차 적십자 회담을 연다는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및 경의선 철도·도로 공사재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려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정세민 남북 수석대표는 12일 저녁 서울 잠실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 첫날 전체회의에서 기도방언을 통해 오는 9월5일 4차 적

십자회담을 열고 추석(9월21일) 직전인 9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실시할 것을 북쪽에 촉구했다고 회담 소식통이 전했다. 북쪽 김영성 단장도 기본방언을 통해 9월4일 4차 적십자회담을 열고 재의해 회담 일자는 사실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쪽이 이산가족 교환방문 시기 등을 적십자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남쪽은 이번 회담에서 5차 방문시기와 그에 따른 실무문제를 협의하고, 면회소 설치 등 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의하고 주장했다.

남쪽은 이달 중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군사보장협약서'를 교환·발효시키고 이날 안에 경의선 연결공사를 재개하자고 했으나, 북쪽 김 단장은 기본방언에서 경의선 연결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할 표시하면서도 공사재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경의선 공사재개 시점 등 구체적인 일정을 둘러싸고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수석대표는 군사실무회담과 별도로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와 군사적 통신과 설치 등 초보적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할 2차 국방장관회담을 이틀 안에 열자고 재의했다고 회담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김집수진위원회 2차 회의와 그에 따른 실무협의회담 이날 중에 열 것을 재의했고, 북쪽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의 북쪽 회담대표는 회의 뒤 열린 환영만찬에서 안성일 부산시장에게 "이번에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600명 넘게 온다"라고 말해 대규모 선수·응원단을 파견할 계획임을 밝혔다.

북쪽 대표단은 이날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며, 도박상에서 이미 실정된 남북간 한일 등에 대한 합의와 함께 "과감한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남쪽 대표단은 회의 뒤 남쪽 수석대표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연 용인 만찬을 끝낼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東亞日報

2002. 8. 13(화)

"지난해 南南갈등 되풀이될라"

정부, 8·15남북행사 워커히호텔로 제한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서울에서 열리는 8·15 민족통일대회의(14~17일)의 장소를 워커히호텔로, 남북관계란 규모는 500명으로 제한했다.

정부가 남북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장소나 규모를 구체적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가능한 한 '남남(南南)갈등'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교육적으로 보인다.

주최측인 "2002 민족통일행사 추진본부"는 14, 15일 2일간의 행사장기장에서 민족사 개막식을 갖고, 같은 날 사초구 반포동 조양동 문화관에서

공동미술사전을 연다는 계획이었다. 전체 참가인원도 최대 6000여명까지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이처럼 '축소 가이드라인'까지 정한 것은 보수단체들의 잇따른 시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8·15 행사 직후처럼 통일연대측과 재향군인회(향군) 간에 물리적 충돌은 피하지는 것이다. 장소를 워커히호텔로 정한 것은 통일본부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걱정스럽기는 추진본부측도 마찬가지로, 김중수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

총장과 조성우 민회관 상임의장은 8월 양군 본부로 찾아가 이상훈(李相勳) 회장 등 임원진에게 "반대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양군측은 12일 "서울 한복판에서 양양 축전이 개연될 경우 차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다. 정해진 곳에 시민 행사를 치른다면 '목인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연대도 10일 성명을 내고 "8·15 대회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화에 응이 생겨서 앞으로 회선을 다하겠다"며 "남북 대표단과 참관단이 대화할 긴 행하는 동안 건국대에서 차분하게 지키고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삼일절을 기념하는 성명이다. 행사가 끝나고 북쪽 대표단이 돌아갈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taylor55@donga.com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서울

2002. 8.12 ~ 8.14



손 맞잡은 남북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 정세현 수석대표(오른쪽)와 북측 김영성 대표단장이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를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의선 연결 의견접근 추석전후 이산 상봉도

남북장관급회담 첫날 "교류 적극협력" 南 무력충돌 방지 北 태권도시범단 파견 제의

남북한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갖고 다음달 중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를 재개해 연내에 완공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월21일 추석을 전후해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갖는 문제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남북한은 또한 부산아시아게임 북한 대표단과 응원단 참가, 남북축구대회 등 여진권 교류협력사업에 양측 당국이 적극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남북간회담의 조속한 개최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장관급회담 정세현 수석대표는 첫 전체회의 기초발언에서 경

의선 연결을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공사에 필요한 군사보장합의서 발효 등 제도적 장치할 원료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또 추석전후 이산가족 상봉 실현과 함께 4차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상봉 상시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공동수방대책, 금강산 임남댐 공동건설 등도 제안했다.

북측 김영성 대표단장은, 우리측에 남북관계 원상회복과 6·15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한 뒤 남북축구경기와 아시안게임 참가, 태권도 시범단 파견을 제의했다. 북측은 우리측의 일부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복원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해 유감 표명 이상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무력충돌 재방지책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를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측 김대표단장은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성명을 통해 "이미 상징된 모든 문제에 훌륭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과감하게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남북간 미이행 합의사항의 실천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대표단장은 낮 12시쯤 숙소이자 회담장소인 신라호텔에 도착해 남측 정수석대표의 환영을 받았고, 전체회의에 이어 정수석대표가 주최한 환영민찬에 참석했다. 양측 대표단은 13일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 장관 일정을 정했으며, 마지막날인 1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의규 신참호기자 procol@kmib.co.kr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만찬회에서 남측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북측 김령성 대표(왼쪽)가 건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의선 年内 연결 제의

남북장관급회담 추석前 이산상봉 회담도

남북한은 12일 제7차 장관급 회담 전체 회의장 열고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6차 회담에 이어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시해교전 사태 후 악화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8면>

우리측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경의선 인내 연결을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제의했다.

또한 추석(9월 21일) 전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서신교환 등을 위한 제4차 직신자 회담과 개선공

단, 임진강 수방대책 등을 논의할 제2차 김집수전위 개최도 제의했다.

남측 대표 대변인인 이창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새로운 합의보다는 기존 합의를 구체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사당국 회담을 빨리 열어 신뢰 구축을 강구하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산아시아인게임 북측 대표단 참가와 남북 축구대회 등에 정권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 축구협회 접촉 등 관련 기관·단체간 협력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붙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공감을 표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제4차 직신자회담, 김집수전위, 태권도 시범단 교환 등을 위한 일정을 제시했다.

김영성 북측단장은 "지대와 협을 합쳐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전체 민족이 기뻐할 수 있는 알찬 일정을 기워내도록 하자"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말해 이번 회담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임을 시사했다.

공동취재단
내영필기자 philip@mk.co.kr

“경제개혁 한달… 분위기 좋다”

北대표단 첫 언급 “때되면 외부에 알릴 것”

12일 저녁 북측 대표단을 위한 만찬 자리에서는 북한이 7월부터 추진중인 쌀 배급제 개혁과 월급 인상 등 경제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나 북측을 다녀온 검토후견자들을 통해 경제개혁 동향이 일부 소개되긴 했지만, 북측 당국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만찬에서 우리측 참석자들은 북측대표단에 '내부에서 추진중인 중요한 경제개혁을 왜 조선신보를 통해서만 공

개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북측 관계자는 "심안임을 외부에 다 알리면 되느냐"고 운을 뗀 뒤 "어느 정도 잘 진행되면 적절한 시점에 (외부에) 알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혁을 추진한 지) 한달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알하는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말했다는 것.

우리측의 한 참석자는 "북측대표단이 만찬 내내 다른 사안은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경제개혁은 몇 차례나 언급해 개혁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측 단장인 김령성 내각책임 총리가 12일 오후 신리호텔에서 회담 후 만찬장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매일

2002. 8.13(화)

금강산 '이산면회소' 의견접근

남북장관급회담 첫날

남북은 12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갖고 이튿날 시집 내에 금강산 지역에 상설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의견접근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남북은 이날 서울 신리호텔에서 한 시간 가량 열린 첫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초 4차 적십자회담을 열어 구체적 시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2박3일간의 공식적인 회담 일정에 들어갔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민족명칭인 '추석(9.21)'을 앞두고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이에 앞서 제4차 적십자회담을 열어 면회소 설치 등 이산상봉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남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올해 내 경의선 복원을 목표로 다음달 중 경의선 협도·도로 연결공사 재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남측은 이날 허순 겸의선 협도·도로 연결 등을 위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와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공사

에 필요한 '군사보장협의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북측에 제안했다. 남측은 또 부산 아시안게임 북측 대표단 참가와 남북 축구대회 등 예정된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 축구협회 접촉 등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남측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간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통한 다음달 금강산 육교관광 실행 등에 대한 북측 의사도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北 '대화일꾼' 물갈이

단골 빠진 대표단 면모

장관급 회담 북측 대표단의 단골 수행원 중 일부가 새 안료로 교체돼 눈길을 끈다.

사라진 인물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권호웅(권민) 내각 총리. 권 총리는 90년대 말 금강산 관광 등 연내의 남북사업 협상을 전담하면서 대남사업에 열광할 정도로 90년대 신진 '내과열풍'으로 2000년 정국회담 이후 고위직급의 회담에는 빠짐없이 참여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빠졌다. 권 총리는 그동안 회담에서 남북 대표단의 서훈 청와대 국장과 공동보도발언을 도맡는 역할을 맡아 남측과의 최전선 다리기 상대로 역할을 도맡아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권 총리가 해왔던 역할을 누가 맡게 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그동안 장관급회담에 단골 수행원으로서 역할을 하던 계봉일씨도 이번 대표단에서는 빠졌다. 계씨는 북측 대표단 중에서는 비교적 수려한 외모를 지녀 2000년 10월 제

남북 경제협력 전망

권호웅·허수림 빠져

주도에서 열린 제3차 장관급회담에서 여성들의 시선일 한 통에 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장관급회담에서 경제협력문제도 단골 해왔던 회담대표 허수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총시각 겸 무역장 처장 대신 이번 회담에는 김호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연) 시가지장이 나왔다.

그러나 수행원 중 막후 실세로 평가받고 있는 최승철·문장근 수행원은 이번 회담에도 얼굴을 나타냈다. 이들은 작년 9월 열린 제5차 장관급회담 때 김영삼 북측 단장과 함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 수행원의 변화가 대남업무의 교체로 보기에 우리가 있었으나 보직변경 등의 조치는 추후해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박희심기자

서해교전 언급수위 실랑이?

첫회의 왜 지연됐다

남북한이 12일 오후 4시 예정됐던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를 2시간이나 지연시킨 속사정은 뭘까. 지난 2000년 7월 제1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도 제2차 전체회의의 지연 불발접속을 히느라 2시간 30분이나 회의를 지연시킨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모종의 '암초'가 돌출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북측 대표단 김령성 단장이 서울 도착 직후부터 시종 '교감한 실천'을 강조해 이번 제7차 회담이 전례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를 던졌던 상황에서 이날 회담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 배경을 둘러싼 회담장 주변의 의혹은 더욱 무성했다.

'우리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무자 사이의 일정 협의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북측 김령성 단장도 회담 직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으나"는 말로 "아, 그런 것은 아니다."며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담담히 회의 지연이 회담 의제와는 무관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병호(李秉鈞)

군사당국자 회담 등 의제 재조율 관측도

남측 대표단 대변인은 "보통 3박4일로 하면 회담을 2박3일로 하면서 일어난 일정조정과 일관"이며 "각기 필요한 곳에 보고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북 양측간에 심각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특히 우리 국민 정서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발언에서의 서해교전 언급 수위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체회의 결과, 당초 일시천리로 성과를 도출해낼 것이란 기대에 못 미친 점도 남북 양측이 군사당국자 회담 등 민감한 의제에 대한 재조율이 나왔을 것이라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각기 필요한 곳에 보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도 의제 재조율이 난항을 겪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다.

●김수경기자

‘금강산 면회소’ 원칙합의

추석 이산상봉·경의선 연결 조속착공도

남북 장관급회담...경추위 이달 개최 접근
北 “내달 부산 아시아경기 600명 이상 방문”

남북은 12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1차회의를 열고 금강산 임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와 추석 이산상봉 실시에 원칙 합의를 했다.

남북은 또 경의선의 연내 연결과, 이를 위한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이담중 개최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은 임시면회소를 설치, 매년 설·추석·한식 때 정례적으로 이산상봉을 하자는 우리 제의에 면회소 장소를 금강산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추석 이산상봉 실시에는 양측이 이견이 없어 구체적인 입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관련기사 2·3면

이 당국자는 “우리는 경의선 연내 완공과 북측의 이담중 착공을 제의했다”며 “북측은 경의선 연내 완공에 원

칙 동의했으나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겠다고만 밝혔다”고 전했다.

북측은 경의선 공사외 관련, 군사신 무회담의 이담 개최 제의에 대해선 “우리 소관이 아니므로 돌아가서 남측의 뜻을 건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회의에서 제2차 경추위와 제4차 적십자회담, 금강산관광을 위한 당국회담을 합의 열고 남북축구대회·태권도시범단 교환·북 경제시찰단 파견 등에 대한 제의를 했다고 이봉조(李鳳朝) 장관급회담 남측 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6월 발생한 서해교전사태에 대해 남측은 남북할 만한 수준의 해명을 북측에 요구하고 무력충돌 예방 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측은 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이미 의견을 밝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당시 북측은 서해교전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이 사건 예방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성의 북측 대표는 남측 주최 만찬에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에게 “우리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600명 넘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대표단은 앞서 이날 오전 서해직할로동 총해인친공청에 도착, 2박3일의 회담일정에 들어갔다. / 김문석기자

csh@kyunghyang.com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손잡은 南·北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오른쪽)가 12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체회의를 갖기에 앞서 북측 김영성 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 김문석기자

“회담분위기 진지해 성과기대”

장관회담 南대변인 문답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대변인 이봉조(李鳳朝) 통장부 장력 심장은 12일 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양측이 남북화해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자세로 의견교류를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회담이 오후 4시에서 6시로 지연됐는데.

“3박4일이던 회담이 이번에 2박3일로 조정돼 쌍방 연락관간에 조정해야 할 일이 발생했고 협의해야 할 일이 있었다”

— 북측이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제4차 적십자회담과 관련, 구체적인 개최일정도 제시했다.

“첫 회의이기 때문에 쌍방이 기본입장만을 밝혔다. 내일 아침 2차

전체회의에서 본격 협의할 것이다”

— 서해교전과 우리의 군사당국자회담 제안에 대한 북측 반응은 어떤가.

“우리의 중요한 입장을 전달했고 앞으로 무력충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북측은 서해교전과 관련, 지난 금강산 실무대표접촉에서 밝힌 입장이 이번 회담에서도 그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밝혔다”

— 경의선과 관련, 북측이 언제 경의선을 착공하도록 제의했다.

“내일부터 협상해 나가겠다”

— 북측 김영성 단장이 나가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좋다”고 했는데.

“진반적으로 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 이용욱기자



경향신문

2002. 8. 13(화)

北, 經協·금강산관광엔 적극적

장관급회담 전망

중남 9개월 만에 12일 개막된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출발은 일단 순조로웠다. 남북 모두 새로운 의제들 내놓기보다는 비어있던 의사의원의 활동을 적극 강조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엔 남북 수석대표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다. 장세현(丁世鉉) 남북 수석대표는 "이번 회담은 새로운 약속보다는 기회의 연속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오히려 실현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약속하는 회담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원삼 북측 수석도 시종로가 성명에서 "북남 쌍방은 이미 설정된 모든 문제에 대해 동등한 합의에 이룩해야 하며, 그것을 과감하게 실현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북측은 모든 합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양측은 대화를 시작하는 원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심사에서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리 측이 서해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이냐고 인도적 문제, 연내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과 경연, 그리고 민간행사 지원 등의 쟁점주제를 주장했지만 북측은 경연과 이산가족 상봉, 민간행사의 한국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무역을 재개하자고 건의한 연장에 필수적인 군사분야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 측은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과 무역증진 재발방지 등 위한 군사분야 국제회의, 입안과 수방(水防)사업 공동조사와 개성공단의 항공 등을 위한 김주위 2차회의를

각각 대두와 이남 내에 열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측도 김주위의 초기 재개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안지이을 합친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도 통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수방사업과 남측이 지원할 수 있는 30만~50만명의 쌀은 긴급하게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부의 논의가 필요한 군사분야회담에 대해서는 한미미도 하지 않고 대신 외외회담이 가능한

직접자 회담의 9월 개최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지만, 직접자 회담은 준비 단계에 내세워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의 시각차가 확연히 나타난 대목은 역시 서해 무리도발 이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에서였다. 우리 측은 그 같은 무리도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軍) 자위단을 병기 위어야 한다는 뜻을 표명했지만, 북측은 "상부에 보고하

軍事회담 문제는 언급안해 우리측과 상당한 시각차

금강산관광 활성화나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 재개할 꺼내들었다.

우리 측은 추석(9.21) 전에 금강산에서 5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되 원주 금강산에서의 상봉의 상봉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서신 교환과 연주소 설치 등 이산가족분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4차 직접자회담의 초기 개최를 제안했다.

북측은 5차 이산가족 상봉과 4차

고 계속 집중해달라'는 선에서 이남 회담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군사분야회담을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하지만 오늘 이견을 보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의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本報기자 kbb@chosun.com】

07차 장관급회담 첫날 일목 일장

남측	북측	북측
8월 12일 개최	군사분야회담 2차회의	기금채 초기 개최
9월 중 개최	금강산관광 활성화 남북회담	조기 개최
8월 말 개최	군사분야회담 재개	연말 열람
서해의 재발방지 요구	서해 도발과 재발방지 노력	유감표 관용 재발방지 노력 인정에 열람
군사분야회담 개최 9월 중 시작 추석(9.21) 이전 실시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연내 연방국적 부여
이산가족 연주소 설치	5차 이산가족 상봉	추석 이전 실시 원칙 열람
이산가족 연주소 설치	연주소 설치 위한 4차 직접자회담	직접 열람
회담의 부진(AG)을 8-15 연주소 열람		남측의 열람 필요



◇"잘 해봅시다" 12일 서울 신리호텔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양측 대표들이 전세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8·15 통일축전 차분하게 유도

서울행사 규모 축소 작년 만경대파문 의식

정부가 다음 오는 15~1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예정이던 남북 민간차원의 8·15 민족강동행사를 북측 대표단 소속인 워킹그룹을 제외하고 개최하며 개최한다는 방침을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전위원회에서 청구하고, 이를 주석(周) 2002 민족강동행사에서 추진본부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침은 서해도발 이후 북한의 태도변화로 남북 장관급회담 등 남북 간 대외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때 대화의 흐름을 꺾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작년 광안행사 때는 우리 대표 중 일부 인사가 정부가 불허한 행사에 참석하고, 김영성(金泳成) 생가인 만경대의 행명(行名)에 '만경대 성신 아어만자'는 글씨 남기 때문에 일었다. 이로 인해 남남(南南) 갈등이라는 추유증도 남은 바 있다. 이런 경향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정부의 고충이 이번엔 이례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따라 15일 서울 한복동 조 단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공전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의 강동행사 개막식은 워킹그룹으로 축소된 줄거 축소 개최할 전망이다. 추진본부측은 "정부 방침을 대응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일단 수용하는 뜻을 지새다. 그러나 민회원과 통일연대, 7대 총연으로 구성된 추진본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소 남라 반발의 움직임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기자

추석前 금강산 이산상봉 성사될듯

12일 9개월만에 재개된 남북장관급회담은 첫 회의인 만큼 일단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달 초 금강산 실무대표급회에서 구체적인 의제까지 대부분 정해진 상태라 양측 대표들은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시기를 못박기 위해 주력했으나 일부 의제에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통 제안 의제=이날 오후 개최된 1차 전체회의에서 양측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의제는 5차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김주위) 개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재개 △북측 선수단의 아시안경기 참가 △남북축구대회 협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거의 기정사실이었다. 김주위 역시 북한이 먼저 의제를 내놓으면 만큼 개최가 확실시된다. 김주위에서 30만~50만 명의 방문 북측에 지원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도 육로 개척시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의 '탈러닝'이라는 걸을 고려하면 성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1.5km에 이르는 임시도로 건설에 합의할 경우 언제 개통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점과 이견=우리측은 이날 회의에서



9개월만의 대좌

12일 저녁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단이 이산가족 상봉 등 그동안 이행되지 못했던 합의사항들의 실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는 2시간이나 지연됐지만 양측 대표단의 표정은 밝다.

도발사과 南 언급은 하되 밀어붙이진 않을듯
이산상봉 北 면회소 설치등 제도화엔 소극적

5차 이산가족 상봉 외에도 이산가족 만남을 전례화하기 위해 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측은 그러나 5차 상봉만 예기했다. 정부는 면회소 설치가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5차 이후의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이 원하는 대로 금강산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봉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동조사가 필요한 금강산내(압록강)은 북측이 공동조사 제의를 받아들이지가 불투명하다. 북측은 군부가 침략을 가할까 우려한 남의 안전을 제일 거론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다.

경의선을 비롯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은 북측이 먼저 의제를 꺼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진전이 빠른 편이지만 경의선이 유자시 전이 연합군의 '북침공로'로 활용될지도 모른다고 경계하는 북한 군부참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에서 드러난 양측 입장

공동 제안(이견없음)	북측 제안	남측 입장	북측 입장
-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10월 말)	서해교전 제정	북측 도입	우방 출몰
- 5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4차 이전)	이산상봉 일일 면회소 설치	본질 적지	이산가족 상봉 추진
- 금강산관광활성화 당국회담	금강산내 공동조사	통제 우려	소극적
- 북인에서이과기대회 협조	군사일국지회	만도시 필요	소극적
- 남북축구대회 협력		포괄 개최	소극적

섭득하는 게 관건이다. 서해교전=남측 대변인인 통일부 이병조(李道朝) 통일정책실장은 1차 회의가 끝난 뒤 "서해교전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금강산 실무대표회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만 말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김영삼 단장은 민선사에서 "여제남에 정착하여 시비나 가리고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빼어난 어휘를 구사하며 서해교전과 관련해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성동기기자 espi@donga.com

北 '회담일꾼' 상당수 교체

권호용등 실무담당 실력자 빠져-협상전술 변화 관심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서울을 방문한 북측 대표단의 '회담일꾼' 가운데 상당수가 교체됐다. 우선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각종 고위급 남북회담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권호용 내각 차사의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 같은 해 5월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 준비협상을 비롯해 6차례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막후조정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권 차사는 남북이 참여한 입상 차이를 보일 때마다 남북 사임교(徐水敎) 통일부 국장, 시운(徐勳) 청와대 국장 등과 밤을 지새우는 막후입상으로 각종 협의를 완성해 온 '숨은 실력자'로서 그의 교체로 북측 회담전술의 변화도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권 차사가 참석

한 이날 초 금강산 장관급회담 실무입상에서 본회담의 큰 방향은 원칙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가 굳이 서울에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측 기자단에도 세대교체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70년대 이후 무려 18 번이나 남한 땅을 밟았던 김영기(金映基) 회담회사(64)도 이번에는 후진에게 키에라를 넘겨주었다. 북한 내 하다 서울 출장자인 그는 5차 장관급회담이 열렸던 지난해 9월 "나도 이제는 손자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회담 대표 중에는 남북 경제협력문제 협 담당했던 허수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총서장 겸 무역성 차장인 강순근 민경련 서기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5차 장관급회담부터 북측 수석 대표를 맡아온 김영성(金盈成) 내각 책 임공사는 이제 완전히 회담대표로서의 위치를 굳힌 듯한 모습이다. 또 수행원 중 심재교(沈在交) 평가관은 적십자회담의 북측 수석대표인 최승철(崔承哲) 조평통 부장(47)과 문창근(文昌根) 차사 등도 변함 없는 입지를 과시했다. 김영식기자 spea@donga.com

2002. 8.13(화)

북한 대표단 얼굴
여러명 바뀌어 눈길

○북측 대표 5명과 지원요원 24명 가운데 앞서 여섯 차례의 장관급 회담에 참석했던 인물의 교체가 눈에 띄었다.

대표 가운데는 대남 경협문제만 전담해왔던 허수업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총사장의 빈자리쯤 김춘근 민경련 시가장이 매웠다. 지원요원 중에도 그간 남북 공동보도문 조율 일을 맡았던 권민(권효용) 내각 참사와 단장 수행비서 역을 담당했던 개인연세가 보이지 않았다.

/尹植경기자 jhyoon@chosun.com

2002. 8.13(화)

부산 아시안게임기간
인공기 제한허용 검토

검찰이 부산 아시안게임 기간 중 경기장 등 부득이한 구역에서만 인공기 개양, 또는 인공기 음원을 제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검 공안부(검사장 이정수)는 북한이 다음달 29일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참가케로 한에 따라 대회기간 경기장 안팎에서 인공기 개양과 북한국가 연주, 북한 정식 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용 등을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상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용호기자



12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를 마친 정세현 통일부장관(오른쪽)과 북측 대표단 김영삼 단장이 이어 열린 만찬에서 진을 마추고 있다. 사진:송홍희재단

첫회의 2시간 늦자 한때 긴장

회담 첫날 이모저모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이 만에 재개된 제7차 장관급회담을 위해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북측 대표단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 그러나 북한 대표들은 막상 회담을 시작할 즈음에는 예상치 못한 오무 4시가 훨씬 지나도록 회담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회담은 2시간이나 늦어졌다. 이 때문에 한때 돌발 악재가 발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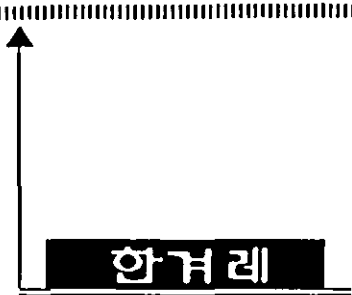
○이날 첫 전체회의는 오후 6시 3분께 시작됐다. 김영삼 북측 단장은 회담장에 들어서기 전 남북 기자들이 '날만족스러운 것이 있는가'라고 묻

관계자 "북 항의 있었다"
두대표 모두 '실천' 강조

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입을 닫았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회담 진행 및 일정 협의로 첫 전체회의가 늦어졌을 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측 대표단의 항의가 있어 회의가 늦어졌다"면서도 북측이 어떤 문제로 '항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남북이 서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해 궁금증을 더했다.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는 회담 뒤 7시 조금 넘어 신라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이번 회담은 새로운 협의를 이끌어내기보다 협의사항들이 합의상대로 머무지 않고 이 땅으로 이어지도록 불포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급회담)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회담이 아니라 '실천하는 회담'이 돼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김영삼 북측 단장은 "어제에 집착해 시비나 가리고 논쟁으로 시간을 보낸 수 없으며 함께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방은 이번 회담에서 뜻을 같이하고 협을 합쳐 좋은 결실을 이뤄냄으로써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과시하고 겨레에 기쁨과 희망을 안겨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급회담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 20명을 실은 고려항공은 이날 오전 9시54분 인천국제공항에 내렸다. 회색 양복 차림의 북측 김 단장은 입술입 북측 안락관의 안내를 받으며 고려항공 비행기에서 내려왔다. 그는 공항 청사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초연의 운전석 재검검체 부 차관에게 다가 "반갑습니다. 김 단장은 사임교 통일부 국장이 참이 마른 것 같다고 하자 "우리 조국이 힘어지니, 나도 젊어집니다"라고 활짝 웃었다. 북측 대표단은 준비된 여우스승용차와 버스 등에 나눠 타고 1시간20분 만에 회담장 겸 숙소인 신라호텔에 도착해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의 영접을 받았다. 송홍희재단



2002. 8.13(화)

北 “실천이 중요” 적극 자세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예전과는 달리 '강한 의욕'을 보여 회담 진행을 일단 밝게 해주고 있다.

북측은 김영삼 단장의 도착 발언을 통해 "짧어마련 시간을 빨리 앞당기자"고 한 데 이어 전세계 남북 수석대표와의 원상에서는 "협의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측 대표단을 파견시킨 남북 대표단이 5차 장관급회담 때는 북측이 남측 오찬 8시에 늦었다고 항의해 온 적이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 비해 이번 우리 대표단은 여러중 함께 양행급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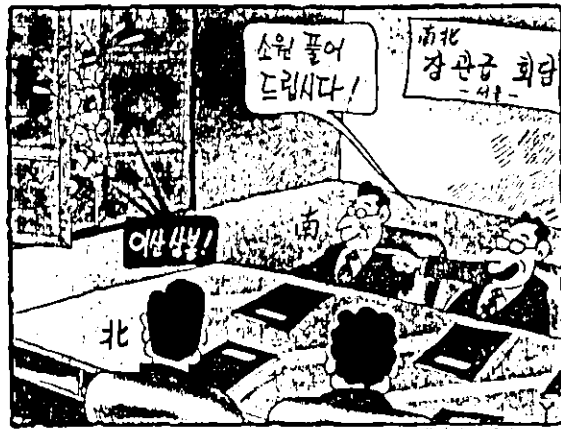
남북회담이 회담 당일 경제회의를 열고 양측 의제별 제1차 수준에 합의할 때도 회담을 주안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심층관측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관측은 회담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는 북측이 최근 경제개혁을 추구하며 점차 회담에 회안이 돼 있다는 장강인척에 기인한다.

남북장관급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양국간 양국인 경제수진권 위상을 회복해야만 할 등 적극적태도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개혁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초급장관에서 있었던 실무 접촉에서 회담 의제별 미리 합의한 것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실제 회담에서 의제 실천을 위해 매번 발언했던 양측간 조목조목을 이미 처리했던 안건 합의의 의제가 대부분 일종의 특사 방북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북측이 회담 당일 보여준 의제별 회담 미지박담까지 유지하면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 이남중 제2



무력충돌 방지할 대책등 군사당국회담 의제가 변수

차 남북경협수진권 개회 등은 손쉽게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이후와 이 회담에서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급강한 육로관광, 남북한 전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협력 방안이 대내 합의됐지만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무장지대 개방에 양측 군사당국간 아무런 합의할 도출에 내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우리측에서 군사당국회담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일주전위에서 갖가지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북한 군부의 협조 없이는

남공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다해왔다는 의도다.

남측 대표단은 군사당국회담을 군사실무회담과 국방장관회담으로 구별해 추진하고 있다. 실무회담에서는 김일주전에 필요한 군사보장 합의서 발효를 위해,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시해교전과 같은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군사당국간 신뢰구축을 위해서다. 남북이 주석을 전후해 제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합의하면 이남중 개최가 예상되는 김일주전위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도 김일주는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 성사, 남북 친선축구대회 등을 통해 인도

남북관계 전망

내 용	시 기
제7차 장관급 회담	8.12-14
8-15 민족통일 행사	8.15-16
남북 체육회담(오찬)	8.20
남북 군사당국 회담	8월 말(미정)
남북 친선축구대회 (성일 경기장)	9. 8
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추석 전후(9.21-25)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석	9.24-10.14
경협수진권 개회	미 정
북한 경제시정당 방문	미 정

의 지원의 대북지원은 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 지견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개식년 10월에 실현되지 못했다가 임 특사 방북 때 5월중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경제시정당 방문 일정도 이번 회담에서 가늠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측이 경제개혁조치를 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경제시정당 방문이 연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면 다음달이나 10월중 김일주전위 방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은 부산아시아게임에 북한 대표단을 참가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8월 15일 예정인 남북 친선축구대회와 함께 남북관계는 스포츠 교류로 새로운 장을 열어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부산대회에 대규모 응원단을 보내기로 방침을 강해 북측의 자유시장 의의와 교류협력 자세를 남측에 과시하고 '평화와 단결'이란 스포츠 정신을 최대한 발휘시켜달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니영필기자 philip@mk.co.kr

北, 아시안게임 최고 1천명 참가

응원단 100여명 포함 예상

부산아시아게임에서 북한 응원단의 '인공개 눈물' 비극이 눈앞에 닥쳐 올 수 있는 가운데 이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응원단의 규모와 참가배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당국과 체육계는 북측 선수단·응원단·예행연 규모를 선수단 350여명과 응원단 100여명 등 500-1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응원단이다. "모기장으로 사살된 화점무장 박사"면서 주민들에게 사살무장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규모 응원단의 남북 방문

은 향후 개방 폭과 남북교류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NGO(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은 제1차 조선인총연담회(5.연) 조속 종료될 제1차 순수 북한주민들로 구성된 응원단을 100명 안팎으로 관측하고 있다.

반회합 한 관계자는 "오는 16-17일 서울에서 열리는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대표단의 규모를 지난 해 평안대회 당시 남측 대표단과 동업한 330여 명 수준으로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북측은 '인민연' 등

을 이유로 100명 이하를 고집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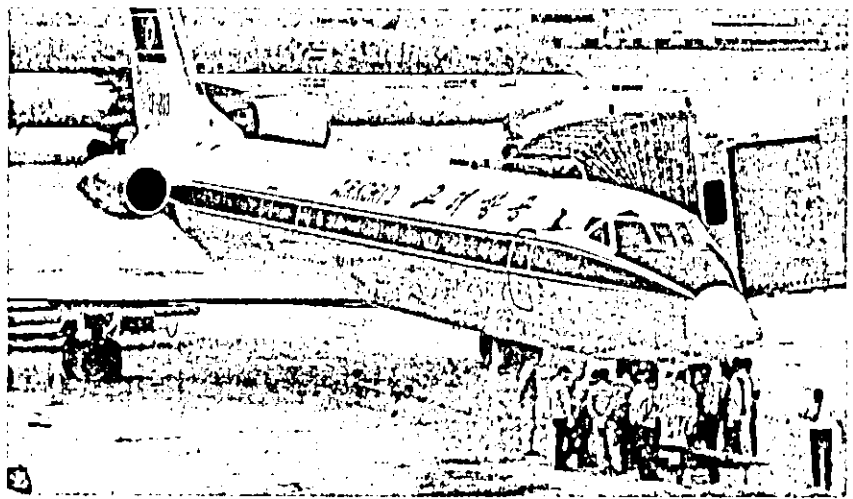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반응을 감안하면 순수 응원단은 1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민 부산시도 노세기 등의 이력선업 이용한 응원 소속 등보들의 남한 방문은 그보다 많을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대다수 NGO단체는 부산아시아게임에 참가할 북측 응원단 규모는 서울 민족통일대회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에 대한 남측의 신변보장 대책 등 전반적인 행사 현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관계 주요 현안

현 안	남	북
남북철도 도로연결	김의선 연립 이남 회담	원칙적 동의
개성공단 개발	동해안 철도 도로 연결 추진	시기는 논의
금강산관광 활성화	북, 경제특구 지정	원칙적 동의
금강산관광 활성화	육로관광, 관광특구 지정	계속 논의
원전수배방지	공동조사 후 해결	방안 후 논의
이산가족문제	추석 이산상봉	공동 방행
군사당국 회담	조기 개최	원칙적 동의
무력충돌 예방 방지 대책	군사당국회담에서 추진	재발방지 언급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참석	민중운동 단일기 사용 논의	공동 검토
식량지원	요청하면 지원 검토	회담에서 요청 가능성

정부 입각에서는 90년 9월 베이징 아시아게임 때 한지 거주인과 북한 주민 등 200여 명의 응원단이 북측 선수를 응원했던 만큼 이번 대회에도 동일한 수준의 응원단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필 기자



北특벌기 인천공항 도착

7차 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을 태운 고려항공소속 특벌기가 12일 오전 평양공항을 출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계류장에서 점검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丁 “남북간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 金 “땀 합쳐 민족앞에 성과 내놓자”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회담록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첫날 전 체회담에서 정세현(丁世鉉) 남측 수석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 가지 업적으로 새삼스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성(金源成) 북측 단장은 “땀 합쳐 민족 앞에 좋은 성과를 내놓자”고 화답했다.

다음은 양측 수석대표의 회담 내용.

▲정 수석=지난번 월드컵에서 36년 전 북한이 이탈리아를 이겼

던 역사적 사실이 우리 선수와 국민에게 큰 자신감이 됐다. 대전에서 열린 16강 경기 카드색션에 ‘AGAIN 1966’이 있었다. 이를 보고 큰 힘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 고비 넘기고 8강, 4강까지 갔다. 단일팀 만들면 아시안 경기대회에선 당연히 1등을 할 것이다.

▲김 단장=17차 세계육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대표단이 이탈리아를 이긴 건 36년 전 북측이 이탈리아를 꺾은 그 위에서 이번 성과다. 축구뿐 아니라 6·15공동선언 이행에서 습기를 발휘하면 못할 일이 없다. 중단됐던 당국

대화를 조속히 재개, 북남관계 정상화와 화해와 단합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6·15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된다.

▲정 수석=새로운 합의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오늘 회담은 실천하는 회담. 문제를 푸는 회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표 10명이 사흘동안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

▲김 단장=실천적으로 6·15공동선언 이행의 길을 열기 위한 토론이 되어 한다. 성의를 다해 진지한 토론을 해 빠른 시일안에 끌어내도록 노력하자.

/조정진기자 jju@sgt.co.kr

철도담당 김춘근 ‘데뷔전’

北대표단 면면은

북측이 밝힌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단은 김영성 내각 책임참사를 단장으로 조성발 내각 사무총장, 최영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춘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 김만길 문화성 국장 등 5명의 대표를 포함해 총 2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민경련 서기장 직책을 달고 나온 김춘근 대표다. 장관급회담 단국 대표인 허수립 민경련 총사관 겸 무역성 처장 대신 나타난 낯선 얼굴이다.

분지가 12일 확인한 바로는 그의 진짜 직책은 ‘내각 협동성 계

획국 소속 국장급’으로 밝혀졌다. 그는 북한에서 손꼽히는 철도전문 기술관료로 불린다. 김 국장의 대표단 발탁은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경의선 등 철도연결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철도 연결 문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6·15정상회담

경의선등 연결공사관련 중책맡은듯

주석궁 부실장 김단장 ‘남한통’ 부상

때 먼저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측 군부가 자재를 전용해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명이 ‘김성수인 김원성 단장은 이미 알려진 대로 김 국방위원장을 보좌하는 주석궁의 서기



◇김춘근대표

차(남한 의친외대 비서실) 산하 통일안보보좌실 부실장이 다.(본 보 2002년 8월 5일자 9면 보도)

그는 1~4차 정금진 내각 책임참사로부터 비명을 이어받아 5차 회담 때부터 단장을 맡아왔다. 김 부실장의 단장 내정은 남북대회담 1준비비서가 직접 챙기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최영익 대표는 7차례 회담에 모두 참가한 터줏대감이고, 조성발 김만길 대표는 5차 회담 때부터 대표로 나서고 있는 실무형 대표이다.

/조정진기자 jju@sgt.co.kr

京義線 연결-‘추석전 상봉’ 공감

장관급회담 첫날회의 결과

12일 개막된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제1차 전체회의가 끝나면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자연스레 드러났으며, 그 타결 전망에 대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영성 북측 수석대표는 전체회의 직후 회담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좋다" "업계가 크게 주목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고 밝힌 1차 회의 성과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김세현(丁世炫) 남측 수석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작업을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재언했다. 북측도 지난날 25일 전문문에서 이를 언급한 적이 있어 간단한 군사 당국자 실무협의만 거치면 앞서선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남측은 이날중 군사 실무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 DMZ내 철도 연결작업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북측도 마침 지난 6차 북측 대표단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 전문가인 김춘근 내각 철도성 계획국 국장급을 새로 발탁, 경의선 연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남북은 이날 회담에서 중전 김강산 실무장측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건설 및 임남역 공동조사 등을 위한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이산가족 상봉 및 면회소 설치를 논의할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 ▲부안 이시안 계임과 남북 축구, 태권도시범단 교환, 경제시찰단 파견 등에 대한 실행일정과 계획에 대한 의견교환작업을 벌였다.

양측은 무엇보다 추석 전에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는 데 원칙적인 의견일치를 보였다. 북측이 이미 제의한 사안인데다 금강산이라는 북수성을 감



○남북한이 12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제7차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를 개최, 군사당국자 회담 등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라산역 면회소설치엔 北측 거부감 經推委-군사회담 재개엔 큰 이견없어

인한 것으로 보인다. 남측 도라산역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북측이 난색을 표명, 1차 회의에서는 당측 입장을 개진하는 선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졌다. 김영성 단장은 공한 도락 직후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민중에 커다란 기쁨을 주는 업적을 거두자"고 말해 전향적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암시했다.

8월말쯤 경주위와 군사당국자 회담을 재개한다는 남측 제안에 대해 북측도 원론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위는 북측이 필요로 하는 30만~50만1의 식량과 전력 등 굵직굵직한 사안이 걸려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방안을 논의할

군사당국자 회담 역시 서해교전에 따른 남측의 압박을 모면하기 위해 북측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의 시인사한 태도

에 오히려 외교심이 든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경의선 연결을 논의할 경주위에는 대북 설치원 문제가 걸려 있으며, 북측 회담인 '개성공단실무협의회'는 대북 전력 지원과 맞물려 있다. 남한으로부터 실익을 얻어가기 위한 전술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정확한 의도는 회담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흥기자 kidong@sgt.co.kr

■ 7차 장관급회담 주요 쟁점

북측 입장	의제	북측 입장
군사보장합의서 발효 요구	남북철도 철도연결	•축적통의
경제특구 지정 요구	개성공단 건설	•은핵지원 요청
금강산철도 안전 보장	철강관 수해방지	•축적통의
상봉면회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만 가능
이탈통 개최	군사당국자 회담	이정
현명	경제 시찰단	현직통의
회담태도의 결과에 따라 경주위에서 결정	대북시찰 지원	포기지원 요청
		•경주위 인정

“합의한것부터 실천” 한목소리

남북 양측은 12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첫 전체 회의에서 그간 합의사안들에 대한 실천을 재삼 강조,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합의사안 도출보다는 그동안 합의하고도 이행되지 못했던 사안들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금강산 이산면회소 설치,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군사당국회담, 금강산관광 활성화 회담, 북한 경제시찰단 파견 등에 대한 세부일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산가족 상봉 및 직십자회담=제5차 금강산 이산가족 순차상봉은 추석에 앞서 실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영성 북측 단장은 '지혜와 힘을 합쳐 이산가족뿐 아니라 전체 민족이 기뻐할 수 있는 일한 일매를 거둬내도록 하자'면서 남측의 협조를 당부,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제5차 금강산 상봉 일정을 정한 후 직십자회담에서 면회소 설치 문제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제4차 직십자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면회소 설치 등 상봉제도와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지게 된다.

◇제2차 경추위=이달 하순 개최가 유력해 보인다. 남북 양측이 경추위 개최에 합의한 이력이 없는데다 남측

■ 남북 장관급회담 첫날

추석전 이산상봉·월말 경추위 타결 가능성 철도연결등 관련 군사회담 조속개최 제의



장관급회담 북측측 단장인 김영성 내각책임장사가 12일 회담장소인 신라호텔에 도착해 한복을 곁에 차려 입은 호텔 여직원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달 중 열지는 의견을 내놓았고 북측도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을 고려할 때 미흡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정부가 북측에 다음달 중 경의

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재개를 제의한 만큼 경추위에서는 이 문제가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경의선 연결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개성공단 추진 등 전반적인 남북

교류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남측이 가장 심의를 쏟고 있는 사안이다. 경추위가 이달 말께 열리게 되면 북측에 차관형식의 쌀 30만~50만톤을 제공 하는 문제도 논의하게 된다.

◇군사당국회담=정부는 다음달 중에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재개를 추진한다는 복안 아래 군사당국회담이 이달 하순에는 개최돼야 한다는 방침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이날 전체 회의에서 서해 교전지 대해 북측에 다시 한번 성의 있는 조치로 촉구했으나 북측은 '이 문제에 관해 금강산 실무합곡에서 밝혔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방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전했다.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지난 5월 중 실시하기로 남북간 합의했던 경제시찰단 방한 일정이 이번 회담에서 가닥을 잡게 된다. 북측이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 하순께 개회가 예상되는 제2차 경추위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달 경 추 다음달이나 오는 10월 중에는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측근들이 포함된 경제시찰단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내외신 기자 50여명 취재경쟁 北수행원 일부 악수 청하기도

■ 이모저모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12일 전체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2시간여 늦은 오후 6시에 시작해 1시간가량 진행되는 등 첫날부터 직장은 진통을 겪었다. 장관급회담이 시작되는 날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북 한대표단 20명을 실은 고려항공은 이날 오전 9시15분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북한 고려항공이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지난해 5월3일 북한을 방문한 요란 페르손 총리행영을 수송한 이후 두 번째다.

○ 김영성 단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은 오전 10시 27분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울림피 도로와 한남대교를 거쳐 오전 11시 47분께 회담장 겸 숙소인 서울 장

충동 신라호텔에 도착했다. 대표단 도착에 앞서 신라호텔 직원들은 호텔 현관 앞에 도열해 있다 북측 대표단이 현관에 들어서자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으며 현관 앞에서는 내외신 기자 50여 명이 열렬히 취재경쟁을 벌여 이번 회담에 걸린 국내외의 관심을 보여줬다.

○ 환담이 끝난 뒤 대기실을 빠져 나오면서 김 북측 단장은 '신라호텔은 이번이 두번째라며 '92년 총리회담때도 신라호텔에 왔었다'고 말해 친숙한 환경에 만족해 했다. 특히 북측 취재단과 수행원 중 일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열린 회담을 통해 친숙해진 몇몇 남측 인사들과 악수할 하는 등 친밀감을 보여 이번 회담에 나서는 북측 대표단의 달라진 모습을 실감케 하기도 했다.

○ 남북 양측 대표 5명은 이날 오후 5시 55분께 첫 전체회의가 열리는 회담장 대기실로 입장했다. 취재진들이 회의가 지연될 것과 관련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는 나'고 묻자, 김영성 북측 단장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남측의 한 회담 관계자는 '남북 실무자 사이의 일정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당초 오후 4시에 개최 예정이었던 이날 첫 전체회의는 늦게 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해진 남측 대표가 주재한 민찬도 2시간여 늦은 8시 경 열렸다.

○ 민찬장에서 최성익 북측 대표와 나란히 앉은 인상영 부산 시장은 '내가 부산아시아계열을 개최하는 도시의 시장'이라며 명암을 건네지 회 대표는 '이번 17일부터 실무회의가 개최되는 데 이때 (우리 선수단의) 참가종목을 주겠다'고 답했다. 회 대표는 곧 이어 '우리가 이번에 부산에 600명 넘어 온다'고 밝혀 북측의 참가단 규모를 시사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한 "서해도발 사과를" 민 "실천적 합의 기대"

■ 정치권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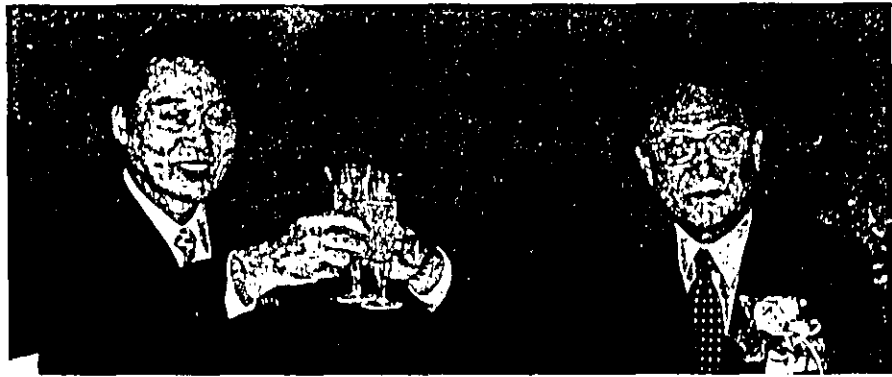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일부터 시작된 개최되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 '기존의 남북간 합의시행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서해도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강조하면서 '신북풍' 가능성에 경계를 늦추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남북간 경제·문화·군사 등 제반분야에서 내실 있는 실천적 합의들이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이 이 장권이 집권연정을 위해 감당 못할 퍼주기'로 '신북풍'을 일으키려는 속셈이 있다면 당장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의 북측측 참가 문제와 서해도발 같은 군사적 도발의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긍정적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정욱기자 jryang@sed.co.kr
구동본기자 dbkuo@sed.co.kr

'경의선' 군사회담 가시화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 정세현 수석대표(오른쪽)와 북측 김영성 대표단장이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환영연에서 건배하고 있다. 호일수기자

국민일보

2002. 8.13(화)

군사회담 서해교전 재발방지등 논의- 23일께 유력
경협방안 쌀지원등 합의 가능성- 경추위도 곧 개최
이산상봉 추석전후 실현- 南 정례화 주장 北은 유보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에서 양측은 기초연선을 통해 많은 제안을 했다. 14일까지 시간을 갖고 협상을 계속 해야 하지만 의견집결이 된 부분도 적지 않아 일정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두리 정부의 기대다.

남측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 및 변화소 설치,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과제에 반드시 합의점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이에 북측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난 타개책 위한 우리측의 경제원조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 김영성 대표단장은 기초연선에서 회담 성과를 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양측은 경의선 연차 완공을 목표로 곧바로 공사에 들어간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알려졌다.

특히 비무장지대 안 철도 및 도로 12km 공사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이점보장까지 발효할 위한 군사담화자 회담도 이틀 내 개최한다는 대어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북측 대표로 새로 참가한 김준근 민경련 서기장이 북한 철도성 계획국장이라는 점도 북측의 전략적 자세를 짐작케 한다. 우리측은 북한측에 군사적 모험이 필요 없는 개성~비무장지대 밖 구간 공사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이점까지 교환 후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군사담화회담=양측 기초연선 내용을 보면, 서해교전 재발방지책 마련뿐 아니라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군사담화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이 회담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군사담화회담 시기는 8-15민족공동행사와 우리 정부

의 움직임이 끝나는 오는 23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측은 이 회담에서 재래식 군비종류 문제를 논의하고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북측은 별가 입장일 보여왔다.

경협 방안=북측이 가장 신경쓰는 의제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 서울개최 문제다. 남북 경제원조가 합실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건설, 입김강 수해방지 대책, 차관 한도의 할지원 문제 등은 이번 회담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에서 주요 경협안의 실천을 전방위면 경추위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정전은 전혀 없게 문제다. 경추위 개최 시기는 군사담화회담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 및 이산가족 상봉-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와 변화소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우리측은 단지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실현뿐 아니라 매년 적어도 설 전후와 추석 전후 두 번의 정기적 상봉을 제도화하라고 북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이번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과 4차 직접회담 개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상시화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호기자 procol@kmb.co.kr

“北, 부산AG 600명 이상 온다”

회담 첫날 이모저모

9개항에 만에 장관급회담을 재개한 남북 대표단은 상건년부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영성 북측 대표단장은 12일 오전 속초 김 회담장인 서울 신라호텔에서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와 원담하는 자리에서 “나는 많은 것을 가져와서 남에게 주고 가는 사람”이라며 “이번에도 많은 걸 남에게 주고 가겠다”고 말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새로운 합의보다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회담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가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열리는 바람에 회의장 주변에서는 “또 빠지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정호 남측대표는

김단장 “회담 낙관해도 좋다”

회의일정 논의·보고하느라

전체회의 2시간 늦게 열려

이에 대해 “남북간 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필요한 곳에 보고할 하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해 대표단의 정세현 방문 일정 등이 추가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회의에서 양측 대표는 원드립을 회자에 둘러싸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했다. 김대표단장은 취재진으로부터 회담 전망을 물문받자 “낙관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김단장은 호텔에 도착한 직후 남측 정수석대표와 상건례를 겸한 한담 때 “전에 김동수가 좋으면 면담도 가깝다는 말도

한 적이 있는데 정대표가 좋은 김동수가 될 거 같 보인다”고 대답을 전했다. 이에 정수석대표가 “김동수가 된 이상 새로운 약속 보다는 기회의 약속을 할 수 있는 것만 실천하는 회담이 되어 한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의 직후 열린 환영연에서는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북한 대중가요인 ‘반갑습니다’와 ‘화과방’이 연주됐다. 최성의 북측 대표와 나란히 앉은 안상영 부산시장이 “내가 부산이산가족연담을 개최하는 도시의 시장”이라면서 환영을 전해 주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600명이 넘게 온다고 봐서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도 짐작하게 된다.”

김영구기자 eekim@kmb.co.kr

새 합의보다 '실천' 최우선

■ 장관급회담 될 논의하나

7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최우선 목표는 합의이다. 새로운 합의보다는 이미 합의한 과제를 얼마나 이룬 사업 안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이번 회담의 관건이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장관급회담은 수많은 합의를 했다. 그러나 남북 심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 등 대부분의 합의내용이 구체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냉담한 편이다. 한국전쟁이 11월 발표된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 과반수(55.9%)가 이번 장관급회담의 성과에 밝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담 대표단도 이런 상황을 의식하고 있다. 정세현 남북 수석대표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북한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새 약속보다 기왕의 약속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골라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약

군사실무·국방회담 제1과제 경추위 2차회의 일정도 관건 이산가족 면회소 합의 관심

속하는 그런 회담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영삼 북쪽 단장도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과감하게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실천"과 관련해 최대 관심사는 군사실무사 회담 일정의 확정 문제다. 남북 심도·도로 연결사업의 비무장지대 안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군사실무사 합의'가 필요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군사실무회담이 필요하다.

정 수석대표는 첫날 전체회의 기조 발언에서 이달 안에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제의했다. 정 수석대표는 실무회담과 별도로 군사적 신뢰구축 조처를 합의할 2차 국방장관 회담의 조

속한 개최도 강조했다. 회담 관계자는 "군사문제에 진전 여부는 이번 회담의 성과를 가능할 시금쇠"이라며 "북쪽이 적어도 군사 실무회담 개최와 군사보장 합의서 교환에는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추진위(경추위) 2차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남북 협정의 제도화와 본격화는 북한이 지난해 초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임금·가격인상·배급제도 변화 등 '경제관리개선 조치'로 인해 새로운 기대를 낳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쪽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선 남북 등 외부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회담 기간 어떤 식으로든 협의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개성과 금강산에 대한 경제특구 지정, 부처보장 등 긴급 관련 4대 합의 시 발효 문제는 경추위에서 본격 논의할 것이어서 이번 회담에선 경추위 2차회의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남쪽은 이번 중 개최를 제안했다. 북한 쪽이 여러차례 공언했던 긴급 시달단 파견은 이번엔 남북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긴급 시달단과 경추위 2차회의는 북쪽의 경제장래 변화를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로 이어가는 징검다리라 되리라 관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관급회담 이후 남북 회담을 위한 노력의 '제도화' 문제도 중요 합의사항이다. 이와 관련에선 남북관계 진전의 척도로도 꼽히는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방안 마련이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남쪽은 금강산 상봉 정례회를 통해 사실상의 '금강산 임시면회소' 설치 효과를 얻고, 장기적으로는 경의선 연결지점(도리산의 부근)에 상설 면회소를 설치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이전과 달라진 점은

의제등 미리조율 '실속' 기대

일정도 2박3일로 줄어

직항로 첫이용 격 높아져

지난해 11월 6차 회담 이후 9개월 만에 열리는 7차 장관급회담은 이전 회담과 다른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회담에 이르게 된 과정이 다르고 공적적이다. 지난 2~4일 금강산에서 7차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라는 예비회담을 거쳐 회담 의제와 일정을 결정했다.

양쪽 수석대표(단장)의 기조발언이 나온 뒤엔 '강을 잡았던 이전'에 비해, 효율적이고 '실사구시'적인 회담 진행을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회담당에서는 확정된 의제들 외에도 합의과제 이행 방식과 일정 등에만 협의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쪽 대표단이 특별기길 이용해 서해상 직항로를 통해 남쪽에 온 것도 의미가 있다. 남쪽에서 열린 1~3·5차 회담 때 북쪽 대표단은 평양~배이진~김포(인천) 경로를 이용했다. 3차 회담에서는 회담장소가 제주도였는데도 북쪽 장관급 대표단은 직항로를 타지 못했다. 이에

반해 김일철 인민무력상 등 국방장관회담 대표들은 관문점용 통해 육로로 옴으로써 "북쪽은 역시 선군정치"라는 말이 나왔다. 장관급회담 대표단이 처음으로 직항로를 이용한 것은 그만큼 격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회담 일정도 6차 때까지 3박4일에서 2박3일로 줄었으나 합의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사전협의가 많았고, 서해 직항로 이용으로 첫날부터 대표단 전체회의를 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풀렛날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번 회담이 새로운 합의보다 이전에 합의했으나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들의 회담 일정을 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전과 다른 점이다. 이재훈 기자

■ 대표 면면 살펴보니

두 수석 대표적 회담 전문가

지난해 2월 평양서 만나

북 김춘근서기장 새얼굴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김영성 내각 책임감사는 장관급회담 대표로서는 처음 만나지만 이미 구면이다. 두 사람은 12일 회담장인 신라호텔에서 만나 1년만 전 평양에서의 인연을 떠올리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전북이 추진한 <순항전> 병합공연 때 남북 참관인과 북쪽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으로 만난 적이 있다.

수석대표인 두 사람은 모두 입삼과 배포를 지닌 남과 북의 대표적 회담 전문가다. 정 장관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베이징 '발회담'에 깊숙이 관여한 적이 있고, 98년 비료와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다룬 차관급회담 수석대

표로 활약한 바 있다. 전금진 책임감사에 이어 지난해 9월 5차 회담 때부터 단장을 맡은 김 참사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담 때부터 남쪽에 알려진 인물이다.

남쪽 대표 가운데 서영교 통일부 국장은 정상회담 준비회담 때부터 주요 회담 현장을 지킨 터줏대감이다. 5차 회담 때부터 회담 태연인으로 참석한 이봉조 통일부·평인정혜실장은 이날 초 금강산 준비장소에 나섰다.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난 2월 차관으로 승진했으며, 남북 경협추진위 남쪽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문식 문화관광부 차관은 지난해 개각 때 차관 승진했다.

북쪽 대표단 중에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전담하고 있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연) 허수갑 총시장을 대신해 김춘근 서기장이 나왔다. 나머지는 모두 이전 회담에 참석했던 인사들이다.

최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시가국 부장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에 모두 참석했고, 금강산 준비협곡에 김일철 문화선 국장과 함께 나왔다.

이재훈 기자 hoonie@hani.co.kr

南 '상봉'·北 '경협'에 무게중심

· 장관급회담 첫날 '다가선 南北'

양측 '이번엔 실천·결실 이루어' 공감 北 '서해교전 유감'은 아직 진전없어

9개월만에 제7차 남북상관급회담의 출발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각편에선 이전도 있었지만 전반적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양측 대표들의 표정도 밝았다.

남측이 전체회의 기초발언을 통해 내놓은 제안의 핵심은 경의선 연내 연결이었다. 이를 위해 북측이 이남측 경의선 확공을 하고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군사사무회담의 이남측 개최를 하자는 입장이었다. 경의선 공사작업 위한 기술적·행정적 문제점 논의를 경수위와 비무장지대내 공사를 위한 군사보장합의서의 서빙·교환 절차를 밟기 위한 군사사무회담이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북측은 경수위의 이남측 개최에 대해선 공감했다. 경의선 작공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조속히 착공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군사사무회담에 대해선 다소 난색을 표명했다. 군부 소관이므로 회담 후 돌아가 남북의 뜻을 전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남북은 이에 따라 이남 변방 접촉을 갖고 군사사무회담 개최문제를 조율했다.

추석 이산상봉안 이미 남북이 공감한 대목이어서 쉽게 합의를 이룰 전망이다. 다만 추석 전 상봉 실시에 대해 북측이 이렇다할 의견을 내지 않아 조정이 요구된다. 금강산에 임시 이산면회소설 설치, 문연회지는 방안에 남북은 의견 차를 보였다. 이의 구체적인 일정과 기술적인 부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직접자담의 이남 또는 내담 초 개최도 어렵잖게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금강산관광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성사에 주력하는 인상을 줬다.

회의에서 남북은 경의선 연결 및 이산가족상봉 제도화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둔 반면 북측은 서해교전과 비무장지대 논의와 경수위 개최문제로 부산이시 안개임 참가 등 각종 행사상 이벤트에 무게중심을 뒀. 회담의제 선호도에 차이도 보였다.

서해교전사태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금강산 실무합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남측이 서해교전사태에 대한 북측의 사과, 재발 방지,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지난달 25인의 유감표명 수준 이상의 언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이다. 공동보도문에 좀더 명시적인 북측의 사과입장을 포함시키겠다는 남측의 의도가 역히 보이지 않고 있다는 예이다. 북측은 정상급회담 등에서 남북간 무력충돌 방지책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돼 향후 전체회의와 비공개 대표접촉 등을 통해 서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합의할 여력을 갖는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차세현기자 chx@kukmin.com



화기애애 남북 장관급회담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저녁 서울 신라호텔 민선장에 김령성 북측대표(왼쪽 두번째)와 나란히 앉아 있다. 김민석기자

김령성 단장 "6·15 이정표 따라 남북 다시 본궤도" 정세현 대표 "주변국·EU등 전세계가 보고 있다"

장관회담 '월드컵 여격파' 등 화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첫날 분위기는 밝았다. 특히 북측 대표단은 '실천'과 '성과'를 거듭 강조, 회담성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남북은 당초 일정보다 2시간 늦은 오후 6시 회담장인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현안 의건 조율에 나섰다. 북측 김령성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단했던 당국대회를 조속히 재개해서 북남관계 정상화에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자"며 "북남 상급회담 협치가 다시 기동돼 6·15공동선언이 가라앉고 있는 이상표현 따라서 다시 활기를 띠다"고 말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일어하는 회담이 아니라 실천하는 회담, 문제를 풀어 놓는 회담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회담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선 월드컵축구대회가 화제로 떠올랐다. 정세현 수석대표는 "우리가 4강까지 갔지만 16강 넘어갈 때가 큰 고비였다"면서 "36년 전 북측이 이탈리아에 이겼던 역사적 사실이 우리 선수, 국민들에게 큰 자신감과 동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측 김령성 단장은 "남측이 이태리급 어긴 데 대해 세계언론이 36년 전 공화국이 이태리급 뛰은 걸 위에서 이혼 성과라고 했다"면서 "우리 민족의 슬기, 힘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 남북 주최 현영민간에서 정수석대표는 "국제정세로 보나 한반도 현실을 볼 때 남북 북에 화해의 한미 이외의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북측 김단장은 "우리는 서로가 어찌날에 접촉하여 시비나 가리고 혼쟁으로만 시간갈

보낼 수 없으며 함께 앞을 내다보며 새출발을 하여야 한다"고 회답했다.

○앞서 북측 대표단 29명은 이날 오전 9시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 서해직항로를 통해 9시5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단장은 남북 정수석대표와의 첫 만남에서 "나는 많은 걸 가져와 남에게 주고 가는 사람이다. 이번에도 잘 도와줘서 많은 걸 남에게 주고 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수석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미국·일본 등 주변 4강과 유엔 연합 등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약속하는 그런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홍욱기자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도착성명

서울서면들과 남해중도 여러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북남 상급회담 북측대표단은 우리 쌍방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일행을 열국의 정으로 따듯이 맞정신에 기초하여 이미 상정된 모든 의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의 남과 북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남과 북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북측의 인사와 더불어 뜨거운 동요에적 인사말 전하는 비입니다.

지금 온저는 이번 상급회담을 계기로 북남관계에서 일시 조성되 있던 난관들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길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기를 기대하

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쌍방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이미 상정된 모든 의제들에 대하여 훌륭한 협력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여러분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게 모든 심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며 남측도 이에 적극 협력해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는 비입니다.

주체91(2002)년 8월12일

“실천” 한마음... 협상 성과 기대

■南北장관회담 첫날

남북은 12일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서로 뒤집세라 실천을 강조하면서 경의선 연결 등 합의사항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남북 대표단 관계자는 이날 밤 “진지하고 밀도 있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체 협상이 순장 중임을 경하게 시사했다. 양측은 전체회의와 대표회담을 통해 2차 경협추진위 초기 개최 등 의제 상당부분에 의견 교환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北, 군부양해 받아온듯 적극자세 서해교전은 군사회담으로 넘길듯

북한 군부의 양해 가능성
김영성 단장(내각 북침상사)이 “과감하게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측 대표단은 시종 강한 입장의지급 과시했다. 북측이 이처럼 자신감을 보인 것은 2-4일 금강산 실무협약 후 내부적으로 상당한 준비를 했으며, 특히 군부로부터 회담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전 회담 때까지는 군부가 관련권 사안이 거론되면 아예 언급을 회피하거나 “건의하겠다”고 결정을 미루기 일쑤였다.
· 사실 이번 회담에 상정된 의제 대부분도 북한 군부의 양해가 없는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경의선, 금강산 육로 연결 등은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야 하고, 개성공단 건설 등 경협 사안도 군

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 더욱이 남측이 이번 회담에서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군사당국자 회담 재개 문제는 북한 군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예전과는 달리 협상 재량권을 갖고 회담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교전 해결 통합
남북은 이번 회담의 최대 결실점으로 제기됐던 북측의 서해교전 사과 수위 문제를 군사당국자 회담에서 다루는 선에서 사실상 봉합했다. 북측은 전체회의에서 남측이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대응 넘어가주길 바라는 기색이 역력했고, 남측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으로 절고만 넘어갔다. 북측의 이 같은 태도는 서해교전을 북방 회담의 의제로 삼겠다는 진술



12일 저녁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측 대표단(오른쪽)이 북측 대표단과 회담성과를 다짐하며 악수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 이에 남측은 경의선 연결 등 합의사항 이행이 앞선다는 명목으로 더 이상 서해교전 사과 수위를 문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측 관계자는 “서해교전을 놓고 실천을 외면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하는 입장에서 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의 공동보도문에는 서해교전 언급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유감표명 이상의 진전된 표현은 남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명준기자 djlcc@hk.co.kr

서해교전 사과 싸고 한때 긴장

■ 회담 첫날 이모저모 北 “부산에 600여명 파견” 한국 월드컵4강도 화제

12일 남북의 장관급회담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회담이 거래에서 회담을 주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인 북측 대표들의 발언이 이번 회담의 특징이 될 것 같다.
· 오후 6시 열린 첫날 전체회의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원 통일부장관은 “반쪽 알에 좋은 겉피를 내놓으려면 여러 합의를 새롭게 하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성 북측단장은 “실질적으로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길을 열기 위한 도문이 되어 있다”고 화답했다. 양측 대표들은 지난 월드컵에서 한대표단이 이기고 이틀 컷고 4강에 진출한 것을 회제로, 민족의 숨겨진 비망으로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지는 회담의 목

소리를 냈다.
· 하지만 보도진이 회담장을 빠져 나간 뒤 진행된 회의에서는 잠시 긴장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김 단장은 “귀족(남측)에서 서해교전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려는 입장인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서해교전에 관해서는 이미 금강산 실무협약에서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의 이 같은 언급은 첫 전체회의에 앞서 남측이 북측에 서해교전 입장을 밝히려고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남측의 서해교전 문제 언급 요구로 북측은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2시간 정도 지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 반면 남측은 북측의 기초법제에서 경의선 연결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되지 않을 것 같고 남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정권은 “귀족 기초법제 중 가장 중요한 경의사업인 경의선 연결사업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합의사항의 실천을 강조했다. 후문이다.

하지만 회담관계자는 “서해교전과 경의선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 같은 입장 개진은 국지적인 회담 분위기에 한하여 “진재적으로 남북 대표단은 이산가족, 금강산 육로 관광 사업 논의 등에서 일치를 재시하면서 논의의 상향이 진척시켰다”고 전했다.
· 김 단장은 오후 7시30분부터 신라호텔 회담장 앞에서 진행된 환영만찬에서도 “거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북 대표단과 경협관계자, 김영성 대표, 부산아시아게임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환영만찬에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은 앞에 앉은 북측 회담의 대표에게 “내가 부산 아시아게임을 개최하는 도시의 시장”이라고 소개했고, 이에 최 대표는 “17일부터 열리는 남북간 실무회의에서 우리의 참가를 약속했다”며 “이번에 부산에 많이 간다. 600명이 남게 간다”고 귀띔했다.
/이명준기자 yuanghe@hk.co.kr

南 "합의보다 실천하는 회담을" 北 "월드컵통해 민족의힘 확인"

회담 첫날 이모저모

김영삼(金泳三) 북측단장은 12일 서울에 도착한 뒤 "꽤 오랜 시간을 앉았어야 한다", "길동무가 좋으면 변경도 가능하다"며 회담 분위기를 주도했다. 첫날은 '대체로 맑음'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새로 예정됐던 1차 전체회의는 당초 예정보다 2시간이나 늦어져 회담장 주변에서는 "반가웠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뉘며 한때 긴장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이병조(李鳳朝) 남측 회담 대표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체적인 일정 조정 문제로 지연됐을 뿐"이라며 억측을 경계했다. 북측도 "오늘 내로 열리면 되니 그게 무슨 문제냐"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북측대표단 29명은 아예 앞서 이날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고려항공기가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작년 5월 북한을 방문한 요한 페르손 스웨덴 총리 이후 두 번째다.

대표 환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과 북측 단장인 김영삼 내각 책임장사는 이날 1차 전체회의에서 6선에 열린 월드컵 통째로 회담을 나눴다.

▽정세현=분히 쉬었다. 북에서는 제17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라고 하는 지난번 월드컵에서 우리는 4강까지 갔다. 30년 전 북측이 이탈리아를 이겼던 역사적 사실이 우리 선수, 국민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탈리아와 8강 진출을 놓고 겨룬 경기 대전에서 잃었는데 키드세선에, 북한말로는 '해경대'에 "어게인(AGA IN) 1966"이라고 나왔다. 1966년 북한

의 승리를 재현하라는 뜻이었다.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단일팀이 구성되면 모든 운동에서 세계 최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김영삼=남측 대표단이 이탈리아를 이긴 데 대해 남측 언론은 물론 세계 언론이 30년 전 북측이 이탈리아를 꺾어 같이 터 있는 위에서 이런 성과라고 했다. 감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승기와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이번엔 시간이 없어서 단일팀을 구성하지 못하겠지만 관계가 발전돼 단일팀을 만들면 아시아경기대회에 신 남연히 1등을 할 것이다. 남북이 축구도 하게 됐고...이번 회담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

▽김=축구뿐만 아니라 6·15공동선언 이행에서 승기를 발휘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번에 중단됐던 당국대회를 조속히 재개해서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고, 회화와 단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문제를 해결하지는 6·15 공동선언 정신에 부합한다. 잠시 정지됐던 북남 상급(장관급)회담 일차가 다시 가동돼서 6·15 공동선언이 가라앉고 있는 이 징표를 따라서 날라게 됐다. 정세현 수석대표가 대화 상대자가 된 것을 축하한다.

▽정=민족 앞에 좋은 결과를 내놓으려면 여러 가지 합의를 세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신이 중요하다. 오늘 회담은 합의하는 회담이 아니라 실천하는 회담, 문제를 늘어놓는 회담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회담으로 운영될 수도 있겠다 하자.

이호갑기자 gdh@donga.com
봉성호기자 ysh1005@donga.com
성동기기자 esrd@donga.com

"합의사항 실천을" 양측 유난히 강조

南北 첫날 만남 표징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첫날인 12일의 회담 분위기는 좋았다. 남과 북은 만날 때마다 실천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측 관심분야인 군사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시각차를 드러냈다.

월드컵 4강 얘기로 전체회의서 환담

○...일정 조정으로 예정보다 2시간 정도 늦은 오후 6시에 열린 첫 전체회의는 회의 베투 월드컵을 회제로 환담하면서 서로 합의의 실천을 강조했다.

남측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는 "30년 전 북한이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이겼던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4강 진출에 큰 동력이 됐다"고 말하자 북측 김영삼 단장은 "축구뿐만 아니라 6·15 공동선언 이행에서 승기를 발휘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표가 "이번 회담은 합의하는 회담이 아니라 실천하는 회담, 문제를 늘어놓는 회담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회담이 되도록 머리끝 맞대고 노력하자"고 하자 김 단장은 "실의를 대대 진지한 토론회를 해 이

사일 안에 끌어내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 수석대표 주재로 열린 환담은 북한 대중가요 '반갑습니다' '위파란' 등의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술을 6-7잔씩 나누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가 속에서 진행됐다.

정 수석대표는 환담사에서 "합의 사항들이 합의로 바뀔지 않고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힘써달라"며 "서로가 어제 밤에 짐작하여 시비나 가리고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고 새출발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담에는 이상산(安相善) 부산시장이 참석. 앞에 앉은 북측 최성익 대표에게 병행을 건네며 "내가 부산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도시의 시장"이라고 하자 최 대표는 "이번에 우리가 600명이 넘어 온다"며 "텔레비전을 통해 봤는데 우리 민족이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예 앞서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고려항공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귀빈실에서는 윤진식(尹鎭植) 대표(제정경제부차관)가 "회담이 잘돼 항도 길이 열려 기차갈 나고 밤에 가서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김 단장은 남측 얘기로 회담을 들었다. 김 단장은 "평양에도 매일 배가 왔는데 떠날 때는 아침부터 남측이 풍고 서울도 좋은 것 같다"고 했다.

김 단장과 윤 대표는 이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환담했는데, 김 단장은 "꽤 오랜 시간을 벌러 담겨야 한다"면서 도착 심명을 서면으로 대체한 뒤 회담장인 서울 신라호텔로 향했다.

亞계입때 인공기 게양 제한 허용

대검, 법무부에 입장 전달

대검 공인부가 다음달 29일 부산에서 개막되는 아시안게임 때 경기장·선수촌 등 입정 구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공기를 게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12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국 관중이 경기장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인공기 게양이 제한 허용되더라도 대학 캠퍼스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인공기나 깃대그림 등이 무분별하게 등장할 경우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관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인 인공기 게양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인공기 응원 등의 세부 사항은 법무부의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헌장에는 "모든 경기장 및 주변에는 참가 회원국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인공기 게양은 헌법 국기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에 대한 헌양·고무죄에 해당해 논란이 돼왔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중앙일보

2002. 8.13(화)



김영성 북한 내각최임장사가 12일 회담장인 신라호텔에 도착해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장관급회담 이모저모

지난해 11월 6차 회담에 이어 9개월 만에 열린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김영성 내각 책임장사를 단장으로 한 북측대표단이 12일 오전 9시 55분께 고려공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에 따라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김영성 단장은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남측 대표로 임정남간 운전석 재정경제부 차관과 한담을 통해 "잊어버린 시간을 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해 회담 전망을 밝게 했다.

“집중호우 피해 팬찮나” 남북대표단 공통 화두

공동취재단

○...북측대표단은 인천공항 도착 후 서면으로 배포한 성명에서 "지금 온겨례는 이번 상급 회담을 계기로 북남관계에서 일시 조성되었던 난관들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길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북남 쌍방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이미 상정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율령한 합의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김영성 북측단장은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와의 회담에서 "나는 많은 것을 가져와서 남겨 놓고 가는 사람이다"며 "이번에도 잘 도와줘서 많은 것을 남겨 놓고 가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천 분위기를 만들어 합의 이행에 노력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여 성과 있는 회담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정 남측 수석대표는 "새로운 약속보다는 기왕의 약속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골라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약속하는 그런 회담이 되어야 한다"며 "매듭짓고 실천해가는 그런 회담이 되면 국민 반응도 좋고 국제적 신뢰도 높일 수 있다"고 회담했다.

남북 양측 대표단은 이날 전체 회의에 이어 오후 7시 정 수석대표가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감했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공동의 화두가 됐다.

김영성 북측 단장은 "최근 평양에는 계속 비가 왔다"며 "황해남도도 청천강 유역에 많은 비가 왔고 일부 지역은 460mm까지 비가 내리 인명피해도 있었고 침수피해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는 북측대표단이 호텔에 도착하기 5분 전 현관 앞에 내려와 서울을 방문하는 북측 손님을 맞이하는 예의를 갖췄다.

정 수석대표는 김 단장이 현관 입구에 들어서자 "반갑습니다"라며 손을 내밀어 악수할 청했고 김영성 단장도 환한 표정으로 수인사를 내렸다.

북측대표단은 호텔에 도착한 직후 호텔 2층 북측대표단 대기실에 둘러앉아 수석대표간 회담하기도 했다.

북측대표단 29명 가운데 6명의 취재진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기자'라고 표시된 녹색 인장을 찬 이들은 북측대표단보다 먼저 고려항공 여객기에서 내려 공항 입구에 자리잡은 뒤 남북대표단 첫 만남을 취재하는 데 전념하는 모습.

南 “신뢰 쌓는 기회로” 北 “과거에 집착 말자”

■ 회담·만찬 이모저모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북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이 기존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한 회담이 될 것이라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 시종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오후 4시로 예정된 첫 전체회의가 2시간 가까이 지연되면서 돌발적인 악재 발생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회담 뒤에 이어진 만찬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北 서해교전 언급회피 노력

●북측 대표단과 수행원들은 한결같이 '서해교전' 문제를 더이상 남측이 제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날 저녁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가 주최한 만찬에서 김영성 북측 단장은 서해교전 문제를 남측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완곡히 표현했다. 정 수석대표가 만찬사에서 "말했던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눔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한층 두텁게 쌓는 기회로 만들자"고 밝힌 데 대해 김 단장은 답사에서 "서로가 어쩔 수 없이 집착, 시비나 가리고 논쟁으로만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응답했다.

한 북측 수행원도 "서해교전 얘기를 남측이 계속 제기하는데 어쩔나"는 질문에 곤혹스러운 듯 긴 한숨을 내쉬고는 "지금은 (서해교전 문제로)같은 율박 논쟁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순조롭게 갈 것"이다. 결과가 좋아야지, "라며 회제할 줄라기도 했다.

●북측 대령가요인 '반갑습니다'와 '워파람' 등의 연주거 흐르는 가운데 2시간여 진행된 만찬에는 관계·학계·종교계 등 1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석익 북측 대표와 나란히 앉은 안상영 부산시장은 "내가 부산아시아게임을 개최하는 도시의 시장"이라면서 명함을 건네자 최 대표는 "이번 17일부터 삼무회의가 개최되는데 이때 (우리 선수단) 참가종목을 주겠다. 우리는 600명이 넘게 온다."며 부산아시아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임원단의 규모를 밝히기도 했다.

안시장이 "월드컵을 잘 치렀으니 아시아게임도 잘 해낼 것"이라고 하자

최 대표는 "텔레비로 봤다. 우리 민족이 잘하고 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고 말했다.

●김영성 단장은 옆 자리에 앉은 박건상 KBS 사장과 '농담 반 진담 반'식의 실전을 벌이기도 했다.

주위에 앉아있던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이 "누 분이 구만이사요"라며 언론사 사장단 남북대 두 인사의 만남을 삼기시키자 박 사장은 "우리 싸움을 많이 했지"라고 했고, 김 단장은 "박 선생하고는 별로 싸운한 적이 없다. 했다면 좋은 싸움이지"라고 얼버무렸다.

●북측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이 제기한 군사당국자 회담의 이달내 개최안에 대해 노 코멘트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측 관계자는 "북측이 왜 듣기만 했는지 의도를 파악중"이라면서 "우리측이 이번 회담에서 군사실무자 회담의 일정 합의의 만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것"인 만큼 13일 2차 전체회의의 부터 본격적인 제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北, 김 단장 다이어트했나”

●김 단장은 눈에 띄게 체중이 준 모습으로 이번 회담에 참석, 남측 관계자들로부터 "다이어트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자아냈다. 지난해 9월 5차 장관급회담 때부터 단장을 맡아온 그는 흰 칠한 키에 건장한 체구로 남측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6차 장관급회담에 참석했던 남측 대표들은 한결같이 "김 단장이 4~5kg은 줄어 보인다. 체중조절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정세현 수석대표가 "남색해진 것을 보니 운동을 많이 했나"라고 말을 건네자 "우리 조국이 짙어지니 나도 짙어진다"고 받아넘겼다.

대표단 서해 직항로 이용

●이번 7차회담은 사전 의제설정, 북측의 전형적인 회담지세 등 여러 면에서 예전과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의제를 이미 설정한 후 장관급회담을 시작하는 '실사구시식 성격'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변화로 꼽혔다. 그간 중국 베이징을 거쳐 우회했던 북측 대표단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서울을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어서 나뭇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처럼 북측의 오석영기자

北, 이산상봉·經協등 적극적

남북 장관급회담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일단 순조롭게 출발했다.

남북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회담 첫날 1차 전체회의와 실무접촉을 갖고 그동안 양측이 합의했던 거의 모든 과제의 이행일정을 잡기 위해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통상 장관급회담 첫날은 인사장도만 하고 이틀째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북측도 회담에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영성 북측 대표단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진행된 남북 수석대표에

게 "합의도 중요하지만 심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회담이) 아마 잘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북측은 도착식당에서도 심전을 강조,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자세를 엿볼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남북간 협의사항을 무산시킨 적이 많았던 북측이 심전을 강조한 것은 의미있는 대도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측은 그러나 회담 첫날 구체적인 이행일정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2차 김일성주최, 4차 적십자회담, 금강산 관광 당국회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이 부문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북한의 자세는 그들

이 진실하게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협의해 결실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일성주최에서는 개성공단 건설 등과 함께 북측이 진실하게 필요한 쌀 등 대북식량 지원을 논의하게 된다.

북측은 또 경제시찰단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북한이 취한 김제리만 개선조치와 맞물려 주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은 남측이 제의한 군사적 신뢰조치를 논의할 군사당국간 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양식 기자

yshong@hankyung.com

한국경제

2002. 8.13(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겸세현 통일원장관(오른쪽)과 북측 단장인 김영성 내각책임총리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 "회담성과 낙관해도 좋다"

이모저모

○9개회담에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의 첫 전체회의는 예전보다 2시간 지연돼 오후 6시부터 열렸다. 이 때문에 남북간에 시해교전 제방방재문제 등으로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경호 남북 대변

인은 전체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그동안 회담을 3박4일간 해왔지만 2박3일로 일정이 짧았고 쌍방 인력관건에 조정해야 할 일정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회의지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영성 북측 단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된다. 일제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전망해도 된다"고 말해 회

담성과가 좋을 것임을 시사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세현 통일원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이번 (장관급)회담은 머사에 귀담 들어놓는 회담이 아니라 심건하는 회담이 돼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북측 단장은 "우리는 시로가 어제날에 김제에서 만나 가지고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으며 함께 앉을 때부터 새 출발 해야 할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회답했다.

"인공기 계양 제한적 허용"

검찰, 아시안게임중 경기장 일정구역서

다음달 22일 열리는 부산아시안게임 기간 중 경기장 등 일정 구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북한 인공기가 계양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이정수 검사장)

는 12일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에 따라 대회 기간 중 △인공기 계양 △북한 국가 연주 △북한 정치 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용 등이 현행법 테

두리 내에서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참가 회원국 국기를 계양도록 하는 아시안게임규칙의 헌장 등 국제 관례상 인공기 계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행 국가보안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며 "따라서 제한적으로 인공기 계양을 허용하는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대회 캠퍼스에 인

공기를 계양하는 등 아시안게임규칙만 국내 운동권 단체의 인공기 계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주 중 법무부 통일부 아시안게임조직위 등 관계기관과 이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 조직위는 정부 임의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에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성현 기자

ohycab@hankyung.com

北 전례없이 적극적 협상의제 사전 조율

7차회담 무엇이 달라졌나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회담 주도권 ▲예비접촉 유무 ▲직항공로 이용 등 종전회담과는 크게 대비된다.

◆남측의 회담주도권=6차회담은 시작부터 북측이 미국의 9·11테러 참사 이후 취해진 남측의 비상경제조치 해제 등을 요구,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회담 내내 북한

6차때와는 달리 남측에 주도권 회담일정 하루줄여 2박3일로

이 주도권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6·29 서해도발 이후 남측에서 사과 및 재발방지, 관련자 처벌 등을 감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열리게 돼 회담 주도권은 남측이 갖게 됐다. 북측은 서해사태에 대해 지난달 25일 김영성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유감표명 과 재발방지 약속을 했고 2~4일 금강산 실무접촉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의제 사전조율 및 일정 단축=7차 회담은 임동진(林東振) 특사 방북시 합의한 4·5합의안 이행과 새로운 교류협력 아키텍 실행을 다루게 된다. 탐색과 설

전만 되풀이, 합의문 작성에 급급해하던 종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회담 의제가 대부분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한 30만~50만 1의 쌀지원 ▲철도-도로 연결시 자재 지원 ▲부산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지원 등 남측의 시혜성 조처들이어서 예상외로 걸림돌이 적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 때문에 회담 일정도 2박3일로 짧게 잡혔다.

◆북측의 달라진 태도=이번 회담은 북측이 먼저 제의했다. 북측은 금강산 실무접촉에서도 철도연결과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부드럽고 적극적이다. 북측은 또 중국 베이징(北京)을 돌아 서울로 오던 과거와 달리 서해직항공로를 이용, 회담의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입장을 선보였다. 6차회담 때는 "아메리칸(미국인)이 있지 않느냐"면서 관문점 경유를 꺼려 했다. 남북간 지루한 공방을 자제하고 합의사항 '실행'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조정진기자 jji@sgt.co.kr

● 南北 기조발언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에서 양측 수석대표의 기조발언을 남측 대표단 이봉조(李鳳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토대로 재구성한다.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남 “실천하는 회담,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을 하자.” 6·15 합의사항인 경의선 철로와 도로 연결공사를 이달 내 재개할 수 있도록 하자. 경의선 철로와 금강산 육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로 건설은 빠른 면을 해 안 관광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공사 재개 일정을 조속히 협의 하자. 이달 말 제2차 경추위를 조속히 열어 개성공단 건설과 임진강 수방 대책, 임남(금강산)댐 공동조사 문제의 해결에 노력하자. 군사당국자 회담을 이달 중 재개, 경의선 철로·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 발효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분단의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위해 민족 대명절인 추석 전 제5차 상봉이 이뤄지도록 제의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초 직십자 회담을 열어 면회소 설치 및 서신 교환 등을 제도화하자. 여기에서 면회소 장소 및 건설·운영 방법 등을 논의하자.

“경제시찰단 파견하자”

북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자.” 일단 북남관계 협원상회복시키자. 지난 2000년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북남 상급회담은 이같은 거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 북남간 경제 협력·발전을 도모하자. 회담·협력에 의해 지난 5차 장관급 회담 의제였던 북남간 태권도 시범단 교환사업을 다시 제의한다. 또 경제시찰단 파견 문제도 논의하자. 서해상의 무력충돌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금강산 실무접촉 때 밝힌 입장과 같다. ●박복심기자 younglan@kdaily.com

대한매일

신라호텔 장관급회담 특별한 인연

두차례 유치... 北日장도 “전속”

5차회담 부산 직년엔 2의 피해

신라호텔은 남북장관급회담과 ‘약연’이 있다. 신라호텔은 지난해 3월 제5차 장관급회담 행사장으로 지정됐지만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때 정부로부터 1억 3000여만원의 위약금을 받기는 했지만 2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행사일정이 3박4일이었으나, 1박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악연 때문이다. 그 탓에도 지난 2000년 7월 1차회담에 이어 이번에 7차회담을 유치했다.

호텔측은 “북한측이 신라호텔을 가장 선호한다.”면서 “신라호텔이 외국 체인호텔과는 달리 국내자본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북측 인사들로부터 호감을 산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12일 입국한 북측 대표단 김영성 단장은 신라호텔에 전속함을 표시했다. 호텔에 도착한 김 단장은 우리측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에게 “신라호텔은 이번이 두번째”라며 “지난 92년 총리 회담 때 신라호텔에 왔었다.”고 소개했다. 호텔 관계자에게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구연”이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신라호텔은 북측 대표단을 위해 순우리말로 된 호텔안내책자를 만들어 받마다 비치했다. 책자에는 방문을 끄는 법, TV를 켜는 법, 전화걸기는 법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호텔측은 “호텔 문화는 기본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북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피담·탈북자 인권과 구원을 위한 시민연대’가 13일 오전 호텔 맞은편에서 국내 남북자단체와 함께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 호텔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오석영기자 palbat@kdaily.com

월드컵4강 화제 “뜻 합치자”

장관급회담 이모저모

장관급회담이 열린 12일 남북대표단은 화기에애한 분위기에 첫 날 일정을 가졌다. 양측 대표는 날씨 이야기를 화제로 발문을 열었으며 비 피해를 서로 걱정하는 등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나 애초 오후 4시로 계획된 제1차 전체회의가 기약 없이 늦어지자 회담장 주변은 한때 “돌출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며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다행히 북측기자단이 오후 5시40분쯤 회담장에 모습을 드러내 분위기는 반전됐고 화기를 되찾았다.

○장관급 회담 첫 공식일정인 제1차 전체회의는 예정보다 2시간 늦은 오후 6시에 시작됐다. 5시50분쯤 남측대표단이 먼저 와 회의장 자리를 채웠고 5분쯤 뒤 북측대표단이 뒤따라 입장했다.

본격 회의에 앞서 남측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이 월드컵 이야기를 화제로 꺼내며 “북한이 36년전 이탈리아를 이겼

던 역사적 사실이 우리 선수들에게 큰 자심감을 주었다”고 말문을 열었고 북측대표인 김령성 단장은 “축구 뿐만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습기를 발휘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김 단장이 “뜻을 합쳐 좋은 결과를 내놓자”고 제의하자 정 통일장관은 “합의만 하는 회담이 되지 말고 실천하는 회담이 되자”고 응수했다.

양측 水害 걱정하며 시종 화기에애

北 김단장 “새출발하자” 묘한 여운

○장관급회담의 첫 공식일정인 전체회의가 지연됐던 이유는 “일정이 지나치게 빠른 탓이었다”고 통일부측이 해명했다. 이병조(李鳳朝) 장관급회담 남측 대변인은 “3박4일간 진행된 기존의 장관급회담보다 일정이 하루 줄다보니 일정을 합의하기 위한 시간이 추가로 생겼고 회담시간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쯤 시작

된 만찬은 일반인과 취재진의 입장이 봉제된 가운데 진행됐다.

만찬장에는 북한 대중가요인 ‘반갑습니다’ ‘휘파람’ 등의 연주가 흘러나왔고 시종 화기에애하게 진행되었다. 정세현 수석대표는 만찬사에서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댄 뒤 “남과 북의 대화가 다시는 중단되는 일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령성 단장은 답사에서 “앞을 내다보며 새출발을 하자”고 답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날 만찬에는 서영춘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각계인사 약 100명이 참석했다.

○앞서 김령성 단장을 비롯한 북측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5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 편으로 서해직항로를 1시간 경유해 들어왔다. 공항엔집에는 운전석 재경부 차관등 남측대표단 4명이 나갔으며 정세현 수석대표는 회담장 소인 신리호텔에서 이들을 맞았다.

○북측대표단의 숙소는 이 호텔 2층 객실로 정해졌다. 특히 북측 김 단장의 숙소는 로열 스위트룸으로 하루 객실료가 60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장소로 사용될 회담장은 이 호텔 2층 ‘다이너스티룸2’이며 옆방인 ‘다이너스티룸1’은 환영만찬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리호텔측은 인공기(人共旗) 문제로 북측대표단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뜻, 평소 국기계양대에 걸어놓는 5개국 국기들 모두 철수시키는 등 회담에 무척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호텔 관계자는 “평소에는 태극기를 비롯한 5개 국기와 국민급 손님의 소속국 국기 등 7개걸 내걸었지만 이번 회담의 경우 인공기를 내걸 수 없어 아예 모든 국기들 철수키로 했다”면서 “회담이 끝날 때까지 국기들 내걸지 않은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준모기자 jnkim@sgt.co.kr

대한매일

2002. 8.13(화)

부산 아시안게임 인공기 계양 조직위 승인때만 허용

검찰, 최소화 방안 검토

대검 공안부(부장 추廷洙)는 다음달 29일 개막되는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인공기 계양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공기 계양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인 만큼 한총련·방민련 등 단체가 당국의 허가없이 인공기나 불법 결핵그림을 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회 기간 중 경기장 안팎에서의 인공기 계양과 함께 북한 국가 연

주, 북한 장식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용 등을 현행법상 허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남북한의 관련 기관 사이에 신중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이지만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회원국의 국기들 계양토록 하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헌장’ 등 국제 관례를 존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땅히 참고할 만한 선례도 없어 막상 아시안게임이 열리면 적법·불법행위일 기리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안별로 범의(犯意)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동기자 taedoks@kdaily.com

軍事실무회담 원칙 합의

시기는 異見... 京義線공사 이달 재개 불투명

8월말 경추委·내달 적십자회담 개최 장관급회담... 오늘 공동보도문 발표

남북한은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3일 전체회의와 실무대표 접촉을 열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연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측 제안대로 경의선 공사가 8월중 재개될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김주석은 남측은 내주에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8월말 재개해지고 주장했으나 북측은 김제남이주한위 원회(김주위)를 이날 밤에 인위 군사회담의 날짜를 정하지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 문제

를 둘러싸고 14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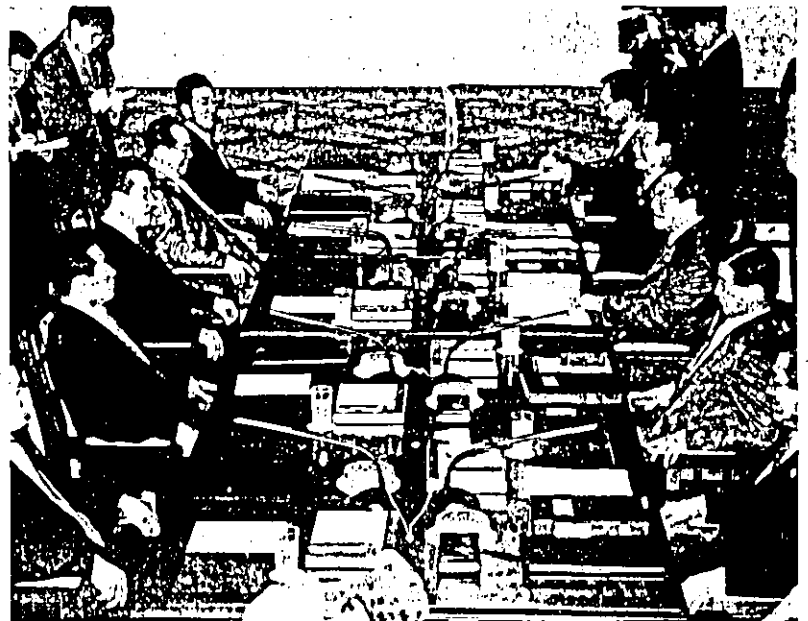
남북 양측은 그러나 경추위 2차 회의(8일 밤), 적십자회담(9일 초),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위한 남북간 회담(9일10일)을 등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 구체적인 회담 날짜를 정 중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산가족 상봉도 우리 측이 재의한 대로 추후(9일10일)을 계기로 실시하는 문제 등 논의 중이나 북측측의 주소 하인 기인 등 실무회담 때문에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의 한 회담관계자는 "군사실무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시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현재로

선 낙관도 비관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측은 적어도 군사실무회담이 확실히 열린다는 보장이 없는 한 다른 회담에 대한 합의할 무효로 할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우리 측 이봉조(李鳳湖) 회담대변인은 "몇 가지에 대해 의견전근이 있으나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작 합의

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남북한은 14일 오전까지 협상을 계속, 합의사항을 6-7개항의 강요보 도문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장관급회담 북한 대표단은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할 북한측 대표단을 신고 14일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북한으로 돌아간다./崔秉默기자 bmc@chchosun.com



◇이틀째 마주앉은 南北

13일 서울 신리호텔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2차회의에 앞서 양측 대표들이 안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北, 美 核사찰요구 거부

외교부 성명... 核동결합의 파기도 경고

북한은 13일 미국의 핵사찰 시설 허용 요구를 거부하고 핵프로그램 동결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1994년 제1차에 해당하는 파기되나, 북한은 보전(보안)의 기 모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핵 프리저드 대책 교섭(1994년) 대사가 지난주 북한 김수로 건설 신그리드 타실학에 참

석, 북인측에 대해 국제기구의 핵사찰 시설 수용을 요구한 것은 북한이 제대나 합의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붙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현상은 우리가 독자적인 길을 가도록 최종 결정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崔秉

금강산댐 南北 공동조사

9월중 실시 사실상 합의... "北 군부 호응" 주목

장관급회담-오늘 8개항 안팎 공동보도문 발표

남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를 논의할 2차 경연추진위원회(경추위)를 이달 말에, 4차 적십자 회담을 9월 초에 개최하기로 하는 등 8개항 안팎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14일 오전에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3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또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3일 2차 전체회의에서 입남댐(금강산댐) 공동조사 사업도 9월 중에 시작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3면에 관련기사

남측 회담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차 경추위와 군사실무회담, 금강산 당국회담, 5차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회담 개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이달 말부터 10월 초에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군부가 관찰권을 갖고 있는 입남댐 공동조사 사업에 북측 대표단이 호응하고 나선 것은 이번 회담의 진행 및 일정 협의에 군부의 직간접적인 협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회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이날 "북측 대표단은 6차 회담 때까지 '군사분야의 문제에 대해서는 군부에 건의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다'며 피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군인들이 만든 입남댐 공동조사에 대한 북측 군부의 호응이 확인된 만큼 다른 분야의 협력사업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북측은 그동안 남측이 입남댐 안전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예민한 거

부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의선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과 군사당국자회담(2차 국방장관급회담) 등 북측이 유일하게 구체적인 개최 날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번 회담의 2대 난제도 14일 새벽까지 이어질 남측 이광조(李光朝) 서영교(徐永敎) 대표와 북측 최성익(崔成益) 김만길 대표간의 남북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타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남북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8·15 민족통일대회, 남북축구대회 등

에 대한 당국의 지원에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광조 남측 대변인은 13일 2차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및 가지 부분에 대해 남북 양측의 의견을 집결시켰으나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민속촌에 간 남측대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대표의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대표의 김영성 내각책임총리가 13일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을 방문해 민속촌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측 대표의 표정이 밝다.

北, 美 핵사찰 요구 거부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

북한은 13일 미국의 핵사찰 사찰 허용 요구를 거부하고 북-미간 핵프로그램 동결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3면에 관련기사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평양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94년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는 파기되느냐, 혹은 보전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잭 프리셔스 대

북 교섭담당 대사가 지난주 북한 경수로 건설 콘크리트 기반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핵사찰 사찰 수용을 요구한 것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계자는 "북한이 실제로 북-미간 핵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건 고라기보다 미국과의 대화재개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상투적인 진술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

‘내달16일 이산상봉’ 추진

남북장관급회담 경의선 연결-經推委 합의접근

오늘 8~10개 항목 공동보도문 발표

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한 대표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민속촌을 관람한 뒤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가졌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남북한은 13일 이틀째 7차 장관급회담을 갖고 추석전인 9월16~18일까지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 위해 9월5일쯤 제4차 직실자회담을 개최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실무접촉을 잇따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8~10개 항목의 공동보도문을 작성, 14일 오전 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조율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보도문에는 ▲연내 경의선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개최(8월말) ▲개성공단 건설과 금강산관광 공동조사를 위한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재개(8월말) ▲5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설치 등을 다루는 제4차 직실자회담 재개(9월초) ▲연내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금강산 단국회담 개최(9일) 등 순차적인 회담 일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특히 경추위 재개 시기를 이달 26일쯤 열기로 하고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측은 이와 함께 북한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와 8·15행사, 남북 축구대회 등과 관련, 공동 노력과 합의사항의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을 보도문에 명기하기로 했다.

회담의 최대 걸림돌인 군사단국자회담 재개 문제는 북측의 '식량지원'과 남측의 '군사적 신뢰조치 확보'라는 명분을 찾기 위해 이달 경추위와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은 그러나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았으며, 서해교착에 대한 사과문제는 북측이 금강산 실무접촉 때 표명한 수준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이날 향후 회담 일정을 한꺼번에 확정짓자는 북측의 '일괄타결안'과 경추위 등 일정만 확정된 뒤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더 협상하자는 북측의 '순차시

행안'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세현(丁世鉉) 남측 수석대표

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과거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데 주력했다"며 "모든 의제가 한꺼번에 타



北대표단 민속촌 관람

남북장관급회담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왼쪽)와 김영성 북측 대표단장 등이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 민속촌을 관람하며 관광객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北, 핵사찰 요구 거부

외무성대변인, 핵합의 파기 경고

북한은 13일 미국의 핵시설 사찰 허용 요구를 거부하고 핵프로그램 동결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단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수로 2기를 제공하기로 한 1994년 제네바 핵합의는 파기와 유지의 기로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을 받아야 하며,

핵비확산조약(NPT)을 준수해야 한다는 핵 프리처드 미 대북교섭 북측의 요구가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독자적인 길을 걷게 하는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밀어부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

군사회담 상설화 절충

經推委·적십자회담등 10개항 합의 접근

장관급회담 오늘 폐막
남북공동보도문 발표

장부는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한간 군사당국자회담의 '상설화'를 적극 추진중이다.

남북한은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장관급회담 이틀째 간제회의와 실무 접촉 등을 잇달아 열고 우리측이 제기한 남북한 군사당국자회담의 구체적인 개최와 이를 운영할 사무국 설치 문제를 최종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우리측은 서해교전과 같은 남북한간 무력충돌의 예방 방지와 한반도 군사신뢰 구축을 위해 군사당국자회담의 상설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북측을 설득, 이날 14일 발표할 공동 보도문에 넣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북측은 "군부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공동보도문에 최종적으로 담길지 여부는 미지수다.

남북한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건설, 경제선 철도·도로 연결 등을 위한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8월25일 진주 개최 ▲후석(9월21일)전 5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및 면회소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적십자회담 9월25일 개최 등 모두 12~13개의 세부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14일 오전 마지막 간제회의에서 이날 8개 항목 안팎의 합의사항으



민속촌 방문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2차 간제회의를 마친 남북 대표단이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민속촌을 방문, 목경시민장 앞에서 줄거리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 단장, 남측 정세현(웃옷 벗은 이) 통일부장관

●용인 시민공통취재단

로 정리,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또 금강산관광 남북공동조사 사업을 9월중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남북간에 제3차 식량·각종 상품에 10개항 조금 넘는 다"면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

위원회를 위한 군사실무회담 개최, 금강산관광 합성화할 위한 당국 간회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집중 개최하는 방향으로 막판 집중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약 30만~50만과 미묘를 북한에 지원하는 분

은 8월말 열리는 경제위에서 시기와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시안개입과 8·15행사, 남북축구대회 등에 대한 남북 당국의 적극 지원방향을 합의, 공동발표문에 담을 예정이다.

●김수점

박복삼기자 crystal@kdaily.com

중앙일보

2002. 8.14(수)



13일 오후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오)와 김영성 북측 단장이 경기도 용인 민속촌을 방문해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경의선연결 군사회담 이달 개최

장관급회담 이틀째

남북단은 장관급 회담 이틀째인 13일 신라수의 현안을 협의하거나 의견을 교환시켰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2차 전체회의에 이어 방북계까지 실무접촉을 갖고 14일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 후 발표와 공동보도문만을 다 놓았다. 그러나 군사당국 회담 열기가 성하는 문체를 놓고 막판까지 난공을 거듭했다.

◆접점을 찾은 부문-△이산가족 수색전 상봉 △2차경협추진위원회 회의와 군사실무회담의 이달말 개최 △승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 회담의 조속한 개최 등은 일찌감치 안착을 이루어냈다.

특히 북한경제시정판의 남한과

경 문제는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북한경제시정판의 남한 파견은 지난 2000년 8월 2차남북장관급회담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처음 언급한 사안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박재규 통일부 장관에게 핵심축군들과 경제관료 및 전문가 15명 규모로 방남단을 구성해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지난 4월 일동원 특사의 방북에 5월중 파견하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무산시켰다. 경제시정판이 오면 우리 경제 시스템을 북한경제의 개발모양으로 삼는 데 참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쟁점-남북간 견해차가 가장

큰 부분은 군사당국 회담 열정을 갖는 문제다. 남측은 사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당국 회담을 조속히 열어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를 논의하고자 주상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일단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제2차 경협추진위 회의, 제4차 적십자회담, 금강산 관광회담 등의 열정할 이번 회담에서 결정하고 시행해 나가면서 군사당국 회담 열정은 추후에 합의해 시행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연결 및 금강산 육로 개설 등을 논의할 군사당국회담 문제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홍익희 기자

yshong@hankyung.com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2차 전체회의가 13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

北 “빨리 시작하자” 재촉

이모저모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 전체회의는 예상대로 오전 10시부터 시작, 한시간 20여분간 진행됐다. 북측 대표인 김영삼 단장은 이날 남북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나란히 회담 대기실

로 들어가면서 “시간이 시간인 만큼 곧바로 회담에 들어가자”며 회담을 재촉하기도 했다.

회담이 끝난 후에도 정 수석대표와 김 단장은 나란히 회담장을 빠져 나왔다. 북측 김 단장은 “다급되고 있다”며 간혹 웃음을 지은 반면 정 수석대표는 일말 대답하지 않고 시종 굳은 얼굴로 표정관리를

하는 등 태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실에 머물던 북측 보성상원(지인연락)은 회담 도중 제2차에 걸쳐 북측의 흥분이 적힌 듯한 메모를 김 단장에게 전달했다. 북측 보성상원들은 회담개시 후 50분쯤 지나 155쪽 두 장 분량의 메모를 종중김일상으로 북측 대표단에 전달한 데 이어 회담이 막바지에 다다른 11시3분과 12분께 추가로 메모를 남겼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적십자사 총재회담 합의

남북 내달 3-4일- 이산상봉·군사회담은 난항

장관급회담 이틀째

남북 장관급회담 대표단은 13일 전체회의의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다음 달 3~4일 양측 적십자사 총재급 회담을 열기로 확정하는 등 상당수 현안에 합의점을 찾았다. (권연기 3면)

이번에 총재급 적십자 회담이 열리면 상설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상봉 재도와 문제가 한걸음 더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은 그러나 수석인 제5차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 유관측은 이산가족 상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이번 회담에서 상봉 일정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적십자 회담에서 일정을 정하지는 않겠다고, 이산상봉이 10월 이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양측은 또 군사회담과 관련, 남측이 장관급인 군사당국 회담을 열어 경의선 연결과 사해교전 재방문지제, 한반

도 긴장완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요구한다. 이에 북측은 군사회담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만 보인 채 먼저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협의 없이 경의선 연결 문제를 논의하고 고립해 막판까지 난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 정세현 수석대표는 2차 전체회의에서 “경의선 연결에 대해 그간 5차례나 협의가 있었지만 실적이 없었다”면서 경의선 허공을 위한, 군사적 보장 등 재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론 북측에 분명히 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단은 금강산 관광 협상과 대북 지원 논의, 이산 시인내 관광 협상회담 위한 방도회담을 열어 육로관광 심신 지원 등 다양한 도로 확보와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에 관한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김수위의 8월말 개최에도 합의는 못 한한 10여개에 대해 접촉을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구 신장우기자
procol@kmb.co.kr



남북 장관회담 이틀째인 13일 오후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과 김영성 북측 단장이 용인민속촌의 옛 한옥방에 둘러 쌓여 차를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南北 군사실무회담 개최 합의

장관회담 경험위 이달 열기로...추석께 이산상봉

제7차 장관회담 이틀째인 13일 남북한은 추석을 전후한 시점에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고 이달중 김대중추진위 개최한다는 데 의견충돌을 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6면

또한 비무장지대 내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협의할 군사실무회담 개최에 합의, 이르면 다음달 초 김의선 북측구간 공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밤늦도록 실무접촉을

잇따라 갖고 스이탈중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개최 스톱한 경제시찰단 방한 스텝간담회 참석회를 위한 남북간회담 스추석(9월 21일)을 전후한 제5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과 민회소 설치, 서신교환 논의를 위한 제4차 직선지회담 개최 등 10여개 항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측은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김대중추진위에서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금강산관광공사 등 협의 논의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대표단은 연내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우리측이 재의한 군사실무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에 대해서는 '개회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 서로 구체적인 입장을 놓고 교섭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영필기자 philip@mk.co.kr

'경의선 연결' 이달착공 진통

추석전 이산상봉·이달말 경추위 개최등은 합의

南北장관회담...오늘 7~8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남북은 추석 전 제5차 이산상봉을 금강산에서 실시하고, 이달 말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다음달 초 제4차 직선지회담의 개최에 합의했다.

남북은 그러나 경의선과 관련해선 조속한 연결에만 공감했을 뿐 남북이 재의한 이달 내 북측 구간 착공과 군사보장협에서 교환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이달 개최 대목은 의견 차가 커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남북은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남북장관회담 2차 전체회의와 실무대표 접촉을 잇달아 갖고 10여개 항목의 행사와 회담 일정에 의견을 모은 뒤 공동보도문 작성에 들어갔다. 남북은 14일 3차 전체회의를 열어 7~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무당국자는 "상야 실무대표 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경의선 북측구간 착공과 군사실무회담 개최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남북은 이날 회의에서 북측의 이달중 경의선 착공과 이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의 16~17일 개최를 요구했으나 북측은 "남측의 견해를 심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측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9월 남측 태권도 시범단의 방북, 10월중 북측 시범단의 서울방문안을 제시했고 남측은 이를 수용했다.

또 제2차 경추위에 대해선 당초 오는 26~29일 개최를 요구했던 남북이

27~29일 개최를 제시한 북측의 주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추위에서는 40만(가량)의 대북 쌀지원과 경의선공사를 위한 실무적 문제, 임진강 수방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남북은 이와 함께 10월 하순 북측의 경제시찰단을 남한에 파견하고, 그 이후 8차 장관회담을 개최키로 원칙 합의했으며, 다음달 중순쯤 금강산관광공사 파견문제도 의견충돌을 봤다.

최세현·이용욱기자
csh@k.yunghyang.com



남북대표·민속촌 방문...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정세현 통일부장관(왼쪽부터)과 김련성 북측대표가 13일 용인민속촌을 방문, '안대차'의 실명을 탐으며 함께 '웃고 있다'. /김은구 기자 ekgang@hankyung.com

경의선 내달착공 접근

군사실무회담 열어 '안전보장' 합의키로

■ 장관급회담 이틀째...오늘 공동보도문 발표

26일 경협추진위 통해 쌀30만~50만톤 지원 北경제시찰단 10월중순 南 방문키로

남북은 13일 내달 중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표시켜 경의선 연결사업을 착공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틀째 장관급 회담을 진행한 남북 대표단은 이날 전체회의와 심야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비무장지대내 경의선 연결사업을 착공키로 의견을 접근시키고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남측은 내달 중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발표시킨 뒤 즉시 공사를 재개하는 한편 양측의

경의선착공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경의선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를 공동보도문에 명기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은 군사실무회담 개최는 군 당국의 문제여서 '건의' 형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군사실무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는 태도를 밝혀 내달 중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은 이달 26일께 열릴 2차 경협추진위를 통해 30만~50만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데 대해서도 합의할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특히 추석(9월21일)전 이산가족 상봉 실현과 내달 5일 직십자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내달 12일 금강산유료관광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은 또 ▲10월 중순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 ▲9~10월 남북대권도 시범단의 상호 교환방문에 합의했으며, 다음달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협의회를 열어 임남댐(금강산댐) 남북 공동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의선 연결에 대해 그간 5차례의 합의

가 있었지만 실천이 없었다"며 경의선 공사 재개를 강하게 촉구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후 경기 용인의 민속촌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북측 환송 만찬에 참석했다.

남북대표단은 14일 오전 10여개 사항의 합의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북측 대표단은 서울 8·15 민족공동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이 타고 오는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으로 돌아간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이동준기자 djlee@hk.co.kr

2002. 8.14(수)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

이르면 오는 9월 중 20년 규모의 북측 경제시찰단이 서울을 방문할 전망이다.

남북 양측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북측 경제시찰단을 이르면 9월 서울에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달 하순에 열린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협의하기로 결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시찰단 파견이 최종 합의될 경우 대북 지원이나 투자 위주인 이렇듯 남북간 협력이 한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 육로

개설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이달 중 개최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그러나 사해교전 등과 같은 무력도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으로 논의할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남북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경의선의 용해 안건과 관련해, 북측은 쌀·전력 등에 대한 남측의 지원에 더욱 치중된 것으로 알려져 최종 회의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남북 양측은 이날 밤까지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가진 데 이어 14일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北 "핵사찰 거부" 경고 北·美 관계 경색 우려

북한은 13일 미국의 핵사찰 사찰 허용 요구를 거부하고 핵프로그램 동결 합의를 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합의 파기'가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장관급회담 결과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과 함께 북미, 북일관계도 다시 경색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성명에서 "4년제네바 핵합의는 파기되느냐, 혹은 보존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핵 프리치드 대책 교섭이 남 대사가 지난주 북한 경수로 건설 콘크리트 다설식에 참석해 북한측에 대해 국제기구의 핵사찰 시설 수용을 요구한 것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2002. 8.14(수)

내달 14일께 이산상봉 이달 26일 쌀지원 논의

南北장관급회담 합의

'남북한은 추석(9월 21일) 직전인 14일께부터 약 2주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치른다는 데 합의했다. 또 이어 앞서 다음달 5일부터 사흘간 4차 적십자 회담을 열어 민회소 개성을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관련기사 3면〉

양측은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7차 남북 장관급 회담 이틀째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실무접촉을 통해 공동보도문 작성을 위한 방선길 송 작업을 했다.

남북한은 또 장관급 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일경과 관련, 우선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을 열어 북한에 대한 쌀 지원과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 등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중 30만 t 규모의 정부 보유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할 전망이다. 육로 관광 등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논의할 당국 회담은 9월 12일께로 잡았다.

양측은 그러나 군사 실무접촉과 관련,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16일부터 군사 실무회담을

열어 연내 경의선(京高線)철도 연결 완공을 위한 방안도 협의하기로 제안했으나, 북측은 철도 연결 문제를 건담추진위에서 다루자고 맞선 것으로 회담 관계자는 전했다.

또 남북 간 군사 신뢰 구축 문제 등을 논의할 군사 당국자 간 회담과 관련, 남측의 조속한 개최 요청에 대해 북측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군사 당국에 '견인'한다는 정도로 허지는 입장을 보여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양측은 오는 10월 중 북한 경제시찰단을 서울에 파견하기로 합의했으며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9월 7일 서울 남북 친선 축구경기 등을 위한 당국 간 지원 방안 등도 긴밀히 협의했다.

양측은 14일 오전 10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6~7개 항목의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난징을 겪을 경우 일정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김영심 단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들은 청와대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방문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김대통령의 건강 문제로 유동적이다. 29명의 북측 대표단·취재진은 8·15 남북 공동행사를 위해 서울에 오는 북측 인사들이 디오공 고려항공 전체기편으로 귀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종 기자

<yjlee@joongang.co.kr>

한겨레

2002. 8.14(수)

'인공기 응원'은 안된다니... 아시아경기 정치적 잣대 논란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가경기대회 기간에 북한 인공기를 사용하는 응원용 허용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방침을 두고 13일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다소 잇달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엔 인공기 사용을 허용하고 그 대신 북한에서 열리는 체육 행사 때는 남측 응원단이 대극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방적으로 남북한 당국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박완순 아랍다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응원은 경기의 일부인데 인공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오래러 이를 허용해 앞으로 평양에서도 '대극기'를 휘날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직장인 강윤선(31)씨도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한다고 북한을 찬양한다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 시민사회는 성숙해 있다"며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민족해협력법국민협의회 이승환 사무처장은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정식 국가이므로 경기장에서 인공기를 들고 응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감

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매도될 우려도 있는 만큼 북쪽이 양해해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했으면 좋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체육진흥회는 "인공기 응원은 지난 월드컵 때 한국이 태극기와 '붉은악마'를 통해 일어난 국민적 일체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인공기 사용을 반대했다. 교사 이용배(32)씨도 "한국 국민들이 인공기를 들고 북한을 응원한다면 이번 아시아가경기대회는 순수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정치행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일부 시민들은 인공기 문제로 남북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민회 변호사는 "앞으로 스포츠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남북 공동행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공기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인공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축소 적용이나 대체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c@hani.co.kr

北 “經協후 軍事회담 일정 잡자” 南, 경제지원 뒤 흐지부지 우려

양측 새벽까지 신경전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3일, 양측은 의제에 올라있는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적십자회담, 군사당국자회담 등을 모두 꺼내놓고 협의 협상을 벌였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를 ‘포경적 협의’라는 말로 대신했다.

◆군사당국자회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필요한 군사보상협약서(2001년 5월 합의)의 발효를 논의하는 군사신무회담과, 한반도 군사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국방장관회담 등 두 가지가 포함된다. 이는 경의선 연결 및 사해 사태의 재발방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우리측은 이번 장관급회담의 성과가 가늠된다는 인식에 앞서야 할 듯이 보였다. 회담 첫날 남측의 군사실무회담 내주 개최와 이날 밤 경의선 군사시작 제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북측은 밤중으로부터 지시할 만났는지 13일 군사회담 재개원칙에는 동의해 일단 통과가 이르렀다.

그러나 북측은 8월 말 재개될 경주위를 지키는 뒤 군사회담의 시기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 쌀을 포함한 경제지원만 받고 군사분야 합의는 또다시 미루려는 게 아니냐는 남측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14일 새벽까지 남북의 버디기 협상이 계속됐다.

◆경제지원 분야

북한이 이번 회담을 연 실제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큰 이견이 없었다. 8월 말 김주위 2차회의를 열어 30만~50만 t 대북 쌀지원, 100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1단계 공사 연내 착공, 임진강 수방(水防)사업과 금강산생(인양생) 공동조사 문제 등이 현안으로 돼 있다.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도 9월 10일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 전방대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임시도로(1.5km) 건설을 통한 육로 관광 실현과 관광특구 지정 문제가 논의된다. 200년 북한 김용순(金容淳) 특사의 방한 때 합의된, 북한 경제시찰단의 연내 방한에도 북한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문제

추석(9.21) 전 금강산에서 각기 100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측이 대상자 선정 등 상봉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며 난색을 표명,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면회소 설치·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 방안은 우리측의 계속되는 요구 사항인데 이번에도 북측은 9월 초 적십자회담으로 미뤄볼 것 같다. /황영환기자 kkb@chosun.com

北 경제시찰단 연내 訪韓엔 긍정적



◇민족촌 간 南北대표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정세현 통일부장관과 김원성 북측대표가 13일 용인민족촌을 방문. 양내인의 실명을 붙여 함께 웃고 있다. /사진규동원취재단

北단장 “붉은악마 옷이 저거냐” 관심

南北대표단 표정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3일, 남북 양측은 밤늦게까지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연결 등 현안 진담에 대한 협의정 도를 위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진세회의에 이은 실무접촉에서는 “군사당국자회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진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으나, 민족촌 합관은 1시간도 분 늦춰지는 등 일정에 혼란을 빚었다.

○...남측 정세현(丁世鉉) 수석대표는 이날 내내 회담결과에 대해 굳은 얼굴로 침묵하거나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반

남북자가족회 등 단체 회담장 주변서 시위

면, 북측 김영성 단장은 밝은 표정으로 “잘 될 겁니다. 다 잡히고 있습니다”고 해 대조를 이뤘다.

○...아예 앞서 남북대표단 50여명은 1시간여 동안 경기도 용인민족촌을 둘러봤다. 김 단장은 대상간담을 관망하면서는 실무타협의 한 소절을 즉석에서 붙였고, 도예촌에서는 “도자기는 젊음이 중요하다”고 중부한 상식을 자랑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그러나 대상간담에서 안내원이 기념품을 권하자 “눈이 기념”이라며 사양했고, 관광객중 일부가 붉은색 옷을 입고 지나가자 “저게 붉은 악마옷

이”며 관심을 보였다.

○...정 수석대표는 오전 진세회의 때는 “어제 김 단장이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해 품속에서 선물이 왔다갔다 하는 꿈에 잠을 잘 못 잤다”고 했고, 이에 북측 김 단장은 “난 아직 낙관한다. 걸실있게 짧은 시간내에 모든 합의를 이뤄내도록 하자”고 말했다.

○...회담장인 신라호텔 주변에서는 “남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촉구 건의대회”와 북과공작원 송환을 촉구하는 ‘1인 소복(素服) 피켓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6·25 남북자 가족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자유민주민족회의는 경의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린하는 임김 합작의 적화통일 연방제를 분쇄하자”고 말했다. /尹植漢기자 yhoon@chosun.com

軍事대화 재개문제 진통

南北 장관급회담 이틀째

7차 장관급 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시간표가 회담 이틀째인 13일 대강의 기둥을 잡았다.

우선 이달 하순 김집추진위원회 2차 회의가 시작으로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경추위 산하 각 실무협의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또 2000년 11월 평양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경제협력 실무접촉에서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는 차관 제공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회담에서 추석 직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기로 합의함에 따라 9월 중 대북 쌀 지원이 실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측이 보다 양질의 쌀을 원하고 있고, 양도 정부가 생각해온 30만t보다 더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조율 과정은 아직 남아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다섯번째가 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양측 방문단이 9월 14일경부터 금강산을 각 사흘간 순차 방문해 상대 측 가족을 만나는 방식이 된다. 앞서 5일경부터 열린 4차 적십자 회담은 그동안 그때그때 합의에 따라 이뤄진 상봉 등을 정리해·제도화하는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

그러나 회담은 군사 단국간 대화



7차 남북 장관급 회담 양측 대표들이 1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AP=연합]

철도 연결 등 분야별 실무협 이달말 가동

재개하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경의선(京義線)철도·도로 연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남측은 비무장 지대(DMZ)공사의 키를 쥐고 있는 북한 군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군사 실무접촉을 조속히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2000년 9월 첫 회의 이후 중단된 국방장관 회담보다 손쉽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북측은 14일 발표할 예정인 공동보도문에는 지난 4일 금강산에서 열렸던 장관급 회담 실무접촉 합의와 비슷하게 원칙적 수준에서만 언급하고 경의선 문제는 경추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유독 군사 당

국간 대화만 낱씨를 박지 않은 것은 "군부에 건의한다"는 식으로 주장해온 과거 남북 회담과 유사한 태도다.

이 때문에 서해교전에 대한 더욱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합의문에 담기를 원하는 정부의 희망은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북측은 회담 베틀부터 "서해 사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입장을 밝힐 게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남측 이철조·서영교 대표와 북측 최성익·김만길 대표는 13일 오후 민속촌 관공까지 걸어가며 합의문 문안 작성에 매달렸다.

<yjlee@joongang.co.kr>

공동보도문 밤샘 절충 회담일정 연장 가능성도

회담 이모저모

"김영성(金泳成)단장이 어제(12일)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꿈 속에서도 선물이 왔다갔다하는 바란에 잠을 못 잤습니다."(정세현 통일부 장관·남측 수석 대표)

"난 낙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 내 모든 합의를 이루도록 합니다."(김영성 내각 책임장사·북측 단장)

13일 오전 10시쯤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린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회담장에서 남북 양측 대표들은 2차 전체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결실을 보자는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회담은 일부 진전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중시하는 군사 실무회담 일정을 정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다소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4일까지로 예정된 회담일정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전 11시30분쯤 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담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측 쇼단장은 "다 잡히고 있습니다"며 웃음을 지은 반면, 남측 장관은 일절 답변하지 않고 굳은 표정을 지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봉조(李鳳朝)통일부 정책실장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양측은 오늘 논쟁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담에서 우리 측이 경의선 연결과 관련, 군사 실무회담 일정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북측이 완강하게 반대해 회담 분위기가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용인 민속촌을 관광하기 위해 오후 2시 호텔을 나서기로 한 양측 대표단은 2차 전체회의 결과의 정리와 실무대표 접촉에 대한 논의로 지연돼 1시간30분 늦게 출발했다.

논의 결과 양측 실무대표 2명씩이 신라호텔에 남아 접촉을 계속키로 하고, 나머지 대표와 취재진 등 1백20여명은 대형 버스를 타고 20인승 승합차 다섯대에 나눠 타고 민속촌으로 출발했다. 북측 기자들은 "민속촌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합영했다"며 "이번엔 민속촌으로 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을 카메라에 담겠다"고 밝혔다. 고수석 기자

<sskom@joongang.co.kr>

‘경의선 일정’에 군사회담 걸림돌

• 장관급회담 이견 드러내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이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의 조속 개최에 주력하고 있다. 경의선 연결은 남북간 교류, 경제협력, 군사 긴장완화 등 남북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요소들 무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으로부터는 “경의선 연결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정부는 12일과 13일 1·2차 전체회의 및 비공식 실무접촉을 통해 경의선 연대 안공 및 북측의 구체적인 군사 재개 시점 등의 문구를 공동보도문에 담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남북은 12일 첫 회의 기초발언을 통해 정세현(丁世鉉) 남북 수석대표가 “경의선 철도를 올해 안에 연결하고 이를 위해 군사실무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발언 이후 각종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집요하게 북측을 설득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관련, 남북은 북측의 이달 중 착공과 남북 군사실무회담의 이달 중 개최를 요구했다.

비무장지대(DMZ) 군사 안전보장을 위해 지난해 2월 합의한 ‘군사보안협약’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양측 국방장관의 서명·교환 절차를 밟을 실무회담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경의선 연결에 필요한 자재 및 전차 지원, 향후 경의선 운

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
의하기 위한
제2차 경제협
력추진위원회
도 이달 중 개
최하고 요구
한 것 역시 같
은 맥락에서다.
이에 대해

남, 이달개최요구 설득작업 北선 군부의식 미온적태도 합의 이뤄질지여부 불투명

북측은 쉽게 합의해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측 김경성 단장은 1·2차 전체회의에서 경의선 연대 안공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착공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북측 대표들 역시 “군사실무회담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군의 소관으로 추후 논의하겠다”며 한발 빼고 있다. 반면 경의선 문제 외에 핵·비료 및 전차 지원,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을 논의할 경우 2차 회의날 오는 26~29일 서울에서 열자는 데는 쉽게 의견집근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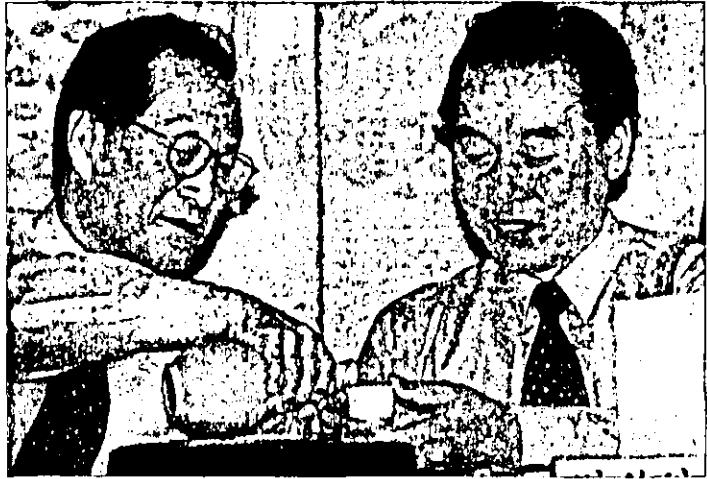
지난 2~4일 금강산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경의선 연결에 대한 북한 최고지도부 및 군부의 입장 정리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기존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공동보도문에 남북이 요구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남측은 북측이 지난달 24일 장관급회담을 재개하면서 경의선 연결을 뜻해야 재의를 만큼 적극성을 보인 점 등을 감안, 회담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일정 협의를 위해 북측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남측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북측이 경의선 카드를 활용한다면 적절한 ‘담판’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이 지난 4월 임동원(林東源) 특사 방북 당시 강하게 요구한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에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차세현기자 cdh@kyunghyang.com



‘화기애애’
남북장관급회담
정세현(왼쪽)과 남
수석대표(오른쪽)가 13
일 서울의 한 중
식장에서 김령성
북측단장에게 술
을 권하고 있다.
/ 사진제공:북위자

經協委등 시행일정 명기

• 공동보도문 뒤편다

남북은 2박3일간 진행된 제7차 장관급회담의 성과물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14일 발표한다. 공동보도문에는 남북 당국이 예고한 대로 지난해 금강산 실무대표접촉(2~4일)에서의 합의사항들의 시행일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중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등 북측이 1·2차 회의에서 적극 성을 보인 부분과 경제시합단 파견, 남북측구경기 서울 개최 등 민회성 이면

‘군사회담 조속시일 개최’ 선언적 문구 포함가능성

트는 쉽게 의견집근을 이뤘다. 반면 군사실무회담 등 군사분야는 비공식 실무접촉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일정 협의가 법일 예정이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 등 선언적 의미의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은 우선 제5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제4차 직접지회담 개최 등

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추석(9·21) 이전에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고, 민회소 삼치 등 상봉 제도를 논의할 제4차 직접지회담을 내달 5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2차 남북간재향추진위원회는 오는 26~29일 사이에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회담에서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금강산전 조사,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북측이 적극성을 보여온 금강산관광 협상회담을 위한 당국회담은 다음달 10일 개최라는 우려적 안을 북측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또 10월 하순 북측 경제시합단을 파견하고, 이때를 전후해 제8차 장관급회담을 열자는 우리측 제의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논란이 된 서해교전과 관련한 내용은 양측의 입장차가 커 공동보도문에 명기되지 않을 것 같다. 남북은 12일 1차 회의 직전 실무접촉에서 “서해교전 관련사항은 공동보도문에 넣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북측 단장의 기초발언에서 지난해 금강산 실무대표 접촉때보다 높은 수준의 유감표명을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북측은 그러나 “이미 입장표명을 했다”면서 끝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관계는 “북 군부의 검정시합이기 때문에(북측이) 언급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욱기자 woodv@kyunghyang.com

'경의선 일정' 심야접촉서 돌파구

■ 장관급회담 이틀째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2일 남북 대표단은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인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의 최종에 의견을 좁히면서 회담 전 망을 밝게 하고 있다.

北, 긴장완화 의식 군사실무회담 동의
살리원 실리 노려 막판에 빅딜한듯
서해교전 다룰 軍 당국회담은 합의못해



민승훈 장관 (가좌) 남북정상급회담의 남북 수석대표 장석환(남북) 통일부 장관과 북측 김영삼 단장이 12일 오후 경기 용인의 한국민승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통신사

남측 수석 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전사회에서 "그간 남북간에 5년의 경의선 연결 합의가 있었지만 현재 남북정상회담 [최] 늦게 있다"며 북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합의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표적 사업인 경의선 연결은 개를 이번 기회에 아득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남측이 앞장 밟아야 한다. 정부가 경제추진위원회를 경의선 문제를 논의한다는 식의 공작한 합의 대신 공동프로그램 경의선 4월 착공" 또는 "연과 한중의 연구를 병행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시한 것도 이런 배경이었다."

이에 북측은 "합동(합동) 시기 경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추진위원회를 경의선 문제를 논의하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방어책을 폈다. 하지만 남북의 공개가 완강한 북측은 이날 낮 동안에는 경의선 연결에

필요한 '비무장지대 안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남북사실군사실무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군 당국에 '건의'하는 형식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고, 상야 실무회담 북측에서는 군사실무회담 개최에 동의하는 태도를 내비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북측의 태도변화는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게 회담장 주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관측원은 "미국은 경의선 연결사업을 단순한 남북경협차원에서 보지 않고, 남북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완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서 "북측은 미국이 북미대화 재개에 앞서 경의선 사업 진행여부를 지켜볼 것이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이 남북 합의의 돌파구 지공과 경의선 연결사업프로그램을 연결 지으면서 풀과 경의선 사업추진과의 비일치라는 측면에서 회담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한편 북측은 서해교전사태 후 개회 필요성이 더욱 커진 군 당국간 회담 개최 문제에서는 여전히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김영삼 북측 단장이 12일 전세회의에서 "서해교전에 입장을 밝히려는

남측의 요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맥락이 같이 있는 듯 하다. 정부가 이번 회담에 앞서 군사당국 간 대화 재개와 종전선

재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것은 되새겨보면, 이번 회담은 '합의'의 성숙에 그칠 것 같다.

이영철기자 youngie@kookje.com

한국일보

2002. 8.14(수)

합의문 문구 줄다리기

■ 회담 이틀째 표정

北, 수시로 평양훈련 받아

11일 새벽2시 서울 신라호텔 조종 북측 대표단 본부. 남측의 이영조(李英祖) 통일부 정석(正錫) 서연교(徐延橋) 통일부 국장, 북측의 최상익(崔相益) 평안도 서기국 부장) 김민길(金敏吉) 통일부 국장) 대표는 각각 보편한 공동협의의 원칙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북측이 내놓은 문안에는 여전히 경의선 연결과 이를 위해 필수적인 군사실무회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빠져 있었다. 남측은 "공사시작 및 완공 시점, 군사회담 일시를 못박지 않는다면 여타 합의 사항도 무의미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북측은 "군사회담은 군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구 일방적으로 나오면 협상이 곤란하다"고 맞섰다.

남측은 군사실무회담의 시기 문제 놓고 이차럼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수 차례 반복했다. 남북회담이 되면 이합산 '합일' 현상-극적 열매가 이번에도 저출근 셈이다. 남북 실무회담은 그러나 새벽 동이 트자 한 일파의 물결이 남측 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정석(正錫) 서연교(徐延橋) 국장)를 다시 회담장에 끌어들였다. 이영철 기자 youngie@kookje.com

전세회의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북측이 경의선 문구를 2차 경협추진위원회에 다룰 것을 제외하며 편견을 피우자 "무슨 말이나"고 푸대접을 베풀고 이어 앞서 북측 김영삼 단장은 "순리대로 풀기"면서 편견을 부렸다.

협상이 중점거리가 대기실에 머물던 북측 지원인력이 3차이나 운영이적인 메모를 김 단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북측은 남측이 대공한 별도의 남북 비무장지대 거의 합의시간으로 영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요원들은 "회의가 끝나나 결정적인지 모르겠다"고 회담장 분위기를 전했다. 1시간20분이나 계속된 회의가 끝난 후 남북대표단은 한결같이 굳은 표정이었다. 기사적 성격이 나오지 않은 만큼 양측 협상적 사 추후 각기 다른 측면 행사도 3시간 이상 늦어지는 등 회담 일정이 전면 재조정됐다.

남북 대표단은 그러나 회담의 공적성이라는 시공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북측 김 단장은 경기 용인 민승훈을 방문해서는 판공력이 높은 뜻을 읽고 지나가지 신기한 듯 "주체 불은 다의 옷이나"고 말했다. 정석(正錫) 서연교(徐延橋) 국장)는 "남측 북측을 괴롭혀 오기"라고 했다. 양측 대표단은 서울 양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회담을 축하하고 "합의"라고 축하했다. 이영철 기자 youngie@kookje.com

신중한 정세현 vs 호방한 김영성

남북수석대표 스타일 대조

장관급회담 이듬새를 맞으면서 남북 수석대표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과 북측 단장(수석대표) 김일성(金鎭成) 내각책임장사의 호단 진영 스타일이 김집 다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한마디로 '신중한 정세현 대(對) 호방한 김영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 단장은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집견실에서 "주인들은 어디 갔어. 손님들을 앉혀놓고..."라며 김집 '허세'를 부리기도 했다. 그는 또 공항접견을 나온 윤진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이 "수석을 맞아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건네자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이 커다란 기쁨을 주는 알찬 일매를 거둬야 한다"며 "풍 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정 장관은 평소의 '화려한 연변'을 삼키는 눈치다.

남북 수석대표 비교

정세현 통일부 장관(57)	한국	김영성 북한 내각책임장사(57)
베이징차관급회담(98년 4월) 수석대표 7차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회담경력	정상회담 준비집속(2000년 5월) 단장 5차 장관급회담 이후 북측단장
"사실 나를 비롯해 우리 대표는 마음이 무겁다"(12일, 1차 회의를 한달사 회담의 성취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 단장이 어제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정속에서도 선물이 왔다갔다하는 풍에 감을 못 했다"(13일, 2차 회의 한달사)	말투	"조국이 젊어지니 나도 젊어진다"(업공이 좋아졌다는 말에 대해) "(회담 성과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전망해도 된다"(1차 회의를 마친 뒤) "다 잘 돼가고 있다"(2차 회의를 마친 뒤)

김 장관도 현정권 초기 "금강산관광은 햇볕정책의 옥동자"라는 말을 만들어낸 정도로 김 단장 못지않은 수사력의 소유자. 그러나 그는 첫날 1차 회의(12일) 때부터 "사실 이번 회담에 임하는 마음이 무겁다"며 말을 아꼈다.

김 단장이 "옛말에 지혜와 힘을 합치면 하늘을 이긴다고 했다"고 하자 정 장관은 "역시 말을 잘한다. 김 일성종합대학 조선어학부를 나오셨는데 우물생이었음에 틀림없다"고 받아치는 장면도 있었지만 결코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두 수석대표의 대조적인 스타일은 이번 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북측은 금강산 실무 접촉에서 대제적인 회담의 운학을 잡은 뒤 서울 본회담을 '국제사회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다. 반면 남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김 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만 대북 정책의 임정표를 마련해야 하는 압박한 처지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8·15 北대표단 116명 서울에

오늘 직항로 편으로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민간 차원의 8·15 남북 공동 행사에 참여할 북한 대표단 1백16명이 14일 남한을 방문한다. <관계기사 15면>

행사를 준비해온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김영대 민회협 회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은 서해상을 거치는 고려항공 직항로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며 "이들은 15일 오전 워커히 호텔에서 열리는 개막 행사에 참석하고 예술공연과 전시회 참가, 참덕궁 관광 등의 일정을 가진 뒤 17일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측은 여원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부친인 여운형 건국준비위원장의 서울 우이동 묘소를 성묘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정부는 북측 인사의 신변안전을 위해 불허키로 했다.

북측 대표단은 민회협 인사 외에 직업운동원과 농업근로자동맹·여성동맹·청년동맹·기자동맹 소속으로 짜였으며, 예술단과 취재진도 포함됐다. 추진본부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승권과 법민련 남측 본부의 행사 참가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영중 기자

北 여원구등 116명 오늘 방한

8·15행사 참석- 黨-종교계 핵심인사 대거 포함

북한의 각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 116명이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땅을 밟는다. 대표단 단장인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과 인연이 깊은 인사기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여원구(呂源九·74)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은 광복 직후 좌우합작에 힘쓰다 암살된 몽양 여운형(夢陽 呂運亨) 선생의 셋째딸. 여씨는 서울에 오자마자 서울 감북구 수유동에 있는 아버지 묘소를 참배하고 싶다는 뜻을 우리측에 밝혀왔다. 2000년 평양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때에는 대통령 부인 이희호(李姬嬪) 여사와 나란히 앉기도 했다.

강연섭 조선그리스도교인맹 중앙위원장은 남측 기독교계에 열

골이 잘 알려진 인물. 5일 금강산에서 열린 통일기원 기도회에서 남측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했다.

정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은 1998년 12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준군 남북간 인도지원 및 교류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2000년 11월에 열린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때 단장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

허혁립 민회협 부회장은 남측 민간단체와의 교류 때 자주 등장하는 인사.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으며 올해 5월 제주도민 253명이 방북했을 때 평양 순안공항에 나와 임접했다.

최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철학과 출신의



여원구



김영대

엘리트로 1970~80년대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현 청년동맹) 활동을 했다. 김원수 노동당 부부장 겸 북한 아시아대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남북간 경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대남본부의 실세로 꼽힌다.

북측은 이치란 내로라하는 인물들을 대거 참석시킨 데 대해 "남측 통일운동단체들의 요청과 그동안 평양을 방문해준 데 대한 답례를 하기 위해서"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 추진본부측은 "답례 이상의 면면들"이라는 반응이다. 조선중앙방송은 13일 이번 행사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성동기기자 espril@donga.com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발표를 하루 앞둔 13일 남북은 제7차 장관급회담 제2차 전체회의와 다각적인 실무접촉 등을 벌여 기존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남북 합의'에 머리를 맞댔다. "잡히고 있다. 진전이 있다."는 양측 회담 대표들의 말은 계속됐다. 이산가족 상봉과 적십자회담 개최,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일정 조율 작업은 밀착감치 마무리했다. 그러나 서해교전 사태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상설화하는 우리측 입장과, 이에 소극적인 북한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발보게까지 돌다리가 계속됐다.

이산상봉 제도화 '줄다리기'

공동보도문에 땀 뺀다

●이산가족 상봉 기간 열흘간씩 공동보도문 문안 조정에 하루가 걸린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제4차 적십자회담. 다음달 5일쯤 적십자회담을 연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서신교환 및 민회소 설치 등 이산상봉 제도화는 북측이 일찌감치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나가 공동보도문에 남남지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의견차이를 보였다.

●경의선 및 금강산 관광도로 연결 강제선 연결은 우리측이 이번 회담에서 군사

경의선연결·육로 새달 착공 포함은 확실 군사회담 상설화·쌀지원 막판까지 진통

단국사회담 상향회의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북측 역시 장관급회담을 제2차 전체회의 먼저 치렀던 정도로 적극 입장을 보였다. 박상 회담에 앞서는 공동보도문에 "군부에 건의한다."는 식으로 하자는 입장을 밝히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나와 진통을 겪었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에 실무회담을 어날쯤 열고 다음달을 군사분

계선에서 개성에 이르는 13km 구간의 경의선 연결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강산 육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임시도로도 다음달 착공한다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불치항과 경제협력 남북한은 오는 25일 남 진주에 제2차 김주익을 재개, 함도·도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 인천항 수해방

지 사업, 금강산(인남산) 공동조사 등의 내용을 담기로 합성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밤 30만 시간 시기와 관련해 김주익 여권을 요구하는 북측과 김주익에게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남측의 의견이 엇갈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무신아시아인개발 등 민간교류 분야에서 안개업 등 남북 시·도·군·세·읍·면·리 단 단 김부 당국 차원의 지원을 강요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5차 장관급 회담 때 제시된 9~10월 남북 대관도 시범단의 순차 교환 등의 내용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회담 이모저모

13일 남북 장관급회담장은 남북 양측이 회담에 대해 전방 개진한 각자의 의사를 놓고 본격적인 실무 스케줄 조정에 착수하면서, 시종 비면 움직임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북측은 회담장 옆 대기실에 마련된 평양과의 직통전화로 수시로 회담내용을 전달하고 훈령을 받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새벽까지 릴레이회의

●본격적인 협상 줄다리기는 사실상 이날 오전 10시부터 14시간 동안 진행된 2차 전체회의가 끝난 뒤부터 전개됐다.

지난 4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남측의 이봉조(李鳳朝)·서영교(徐永敎) 대표와 북측의 최상희·김민길 대표 리안은 14일 새벽까지 자체회의와 실무대표회의를 번갈아 열며 의견을 조율했다.

이에 따라 이날은 오후 용인민속촌 관광 등의 일정에 참가하지 못했다.

도착 첫날인 12일에도 만찬 이후 밤늦게까지 평가회의와 '총회(결산)'를 했던 북측대표단은 13일에도 릴레이회의를 갖는 등 강행군을 한다.

평양훈령 6차례나 전달

●2차 전체회의에서는 회의 종료 40여분 전인 오전 10시50분쯤 북측이 한 '보상성원(非戰鬥員)'이 회담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B5형식 크기의 노란 종이 2장을 들고 나와 대기실에서 평양과 직통전화로 교신을 하더니, 이후 2명이 교대로 2~5분 간격으로 6차례나 남북간 회담하면서 평양의 훈령을 회담장에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북측은 '남인 연변어 회담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느냐.'면서 남측에서 회담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지운 박희삼 오석영기자 jkdaily.com



北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2차 전체회의에서 김형성(왼쪽 두번째) 담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미소를 짓고 있다. ●손원천기자



南 13일 오전 남북장관급회담 2차회의에서 정세현(오른쪽 두번째) 통일부장관 등 우리측 대표단이 미소를 짓고 있다. ●손원천기자 jkdaily.com

군사회담 상설화 입장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군사당국자 회담의 '상설화'가 합의의 실천을 강조한 이번 회담의 성과물 최우선 핵심 의제로 주목받고 있다. 남북한은 14일 새벽까지도 여흥 놓고 팽팽한 기싸움만 보였다.

군사당국자 회담 상설화는 사대교전과 같은 남북한간 무력충돌의 재발 방지를 보장하고, 나아가 한반도 신뢰구축에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우리측이 이번 회담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강까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지난 4일 실무접촉 때 이미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됐던 것

南 "한반도 신뢰구축에 필수" 압박 北 "군부에 건의해 봐야" 뒷걸음질

의한 함도·도로 연결 및 금강산 관광도로 건설을 위한 제6차 남북 군사실무회담 문 제까지 "군부에 건의해 봐야"며 뒷걸음질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측이 단순히 군사 당국자회담 위임을 갖자는 의제일 뿐 아니라 "상설화" 연까지 제의하자, 서전 조율했던 "군사실무회담" 재개할 협상 카드로 놀라게 한 것이다.

남측은 군사회담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경의선 철도 연결

등에 필요한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군사보장 합의서'를 발표시킨다는 것이다. 여 부분은 북측의 소극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이달 말 개최한다는 데는 남북이 의견일 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실무회담에 열려 경의선에 연결되고 휴전선 일부가 개방된다. 그 자체는 북한의 신뢰 구축의지와 연결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근본적 차이를 만든다는 점에서 군사당

국자간 회담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남측은 2002년 9월 제주도에서 한차례 열리고 중단된 국방장관회담을 재개할 것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군부 동의할 때까지 연어 하고, 군사실무회담 남북간 논의대상으로 기성사실화한다는 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남측은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군사당국자 회담에 대한 북측 자세를 무시하고 있고 햇볕정책의 기반을 흔들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연을 쉽게 받아들여보겠다는 입장이다. 회담 관계자는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해 남북이 14일 발표할 공동보도문에 이윤 명사를 찾아라 는 기대를 내세우지 않았다.

●김수경기자 crystal@kdaily.com

'군사실무회담 합의'가 실천 열쇠

장관급회담 이틀째

7차 장관급회담이 이틀째를 거치며 남북간에 회담전과 실전일정표 각성을 둘러싸고 접근 방식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차이를 가르는 핵심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각 수 시점을 못박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공사 착수에 불가할한 '군사보장합의서' 교환·발효를 위한 군사실무회담 개최일정을 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남북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전체 회의를 통해 이날 안에 이 회담을 열어 군사보장합의서를 교환·발효하고, 경의선 연내 완공을 목표로 이날 안에 공사를 재개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북쪽은 경의선 연결사업 자체에는 뜻을 같이한다면서도 군사실무회담 개최 시기와 공사 착공 시기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에선 이 군사실무회담 문제들이 이번 회담의 의제 가운데 하나로서가 아니라 이번 장관급 회담의 성과를 좌우할 핵심변수로 보고 있다. 이 문제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능케 하는 시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금강산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육로관광로 개설, 개성공단 건설, 안기산 수해방지사업과 양남·금강산댐 등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비무장지대협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3일 정세현 통일부장관(오른쪽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남북 대표들이 김영성 단장(왼쪽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등 북측 대표들과 미주없이 회의에 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의선 공사 군사합의서 북측 언급 피해 비무장지대 협력사업 '군부 보증' 급선무

가거나 비무장지대에 걸쳐 있는 남북 협력사업은 남북 군부의 '보증'이 없다면 현실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 일정의 일괄조정과 일괄 다결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정부 당국자는 "경의선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면, 금강산 육로관광 등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다른 사업에서도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북쪽은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

화 문제를 협의할 국방장관 회담의 '근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회담의 개최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이른 시일 안에'라는 표현 정도로 느슨하게 제시한 것도, 경의선 문제를 다룬 군사문제와 분리함으로써 북쪽의 진전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북쪽이 장관급회담 등 각종 당국회담에서 '군사문제는 군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전반적 정세를 고려할 때 회담이 끝나기 전에 군사실무회담에 대한 북쪽의 긍정적 태도 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사업 실시 시기도 아직껏 남북간에 완전히 의견결근을 보지 못한 쟁점이다. 남쪽은 추시(09월의일) 직전 9월 중순에 실시하자고 재기했는데, 북쪽은 구체적 시기는 9월4, 5일경에 열릴 전망인 4차 직심지회담에서 협의하자며 한발 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회담 관계자는 "북쪽은 행사준비 등 실무문제로 추석 전 실시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미, 남북장관급회담 긍정 평가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북-미관계 영향 끼칠듯

【워싱턴=윤국한 특파원】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장관급 회담을 긍정적 시대전진으로 평가하면서 이 회담이 북한의 새로운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윌립 러거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한 대화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관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풀린 러거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에 각종 상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남북 장관급 회담은 또 하나의 긍정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풀린 장관이 대북 대화와 관련한 다음 단계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행정부내 고위 관계자들과 백남준 북한 외무상의 회담 결과 및 최근 북한의 행동들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다음달 중순께 제임스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를 특사로 북한에 파견할 것으로 내다봤다. gookhan@hani.co.kr

"북, 독립채산제 도입노력"

일 요미우리신문 보도

북한이 최근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해 재무상 주도로 독립채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북한방송 전문 청취기관인 일본 <라디오프레스>를 인용해 전했다.

북한 재무상 독립채산제 지도국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의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통해 지난 8일 "독립채산제 규정과 거기에 따르는 부문세칙을 사회주의 원칙과 실리보존의 원칙 아래 새로 작성해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훌륭하게 조직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민주조선》은 또 "간부들이 현장에서 실무감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홍 기자 sdhan@hani.co.kr

‘군사당국자회담’ 막판진통

장관급회담 이틀째-분야별 성과-이견

제7차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3일 남북한은 전체회의와 실무접촉을 잇따라 갖고 남북교류 연결통 '8·4급강산 실무합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담일정을 조율했다.

양측은 대체적으로 경제협력추진위 재개와 이산가족상봉 등 순쉬운 안건은 거의 타결했으나 군사당국자회담 등 민감한 사안은 14일 오전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추위는 이날 26일과 28일중 선출해 열기로 하고 이산가족상봉은 추석 전인 9월 16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이 협상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막판조율이 주목된다. 남측은 주요 의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북측은 '순차시행'을 고집해 진전이 계속됐다. 북측은 김추위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먼저 이행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군사당국자회담과 상설면회소 설치 등을 협상하자는 분위기다. 30만~50만 명의 쌀을 먼저 얻어간 뒤 추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협상술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측은 무력충돌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회담 합의 없이 김추위를 통해 선뜻 식량과 전력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북측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군사회담과 김추위를 동시에 개최하는 쪽으로 매듭지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북측 관계자는 "김추위와 군사당국자 회담, 또는 김추위와 군사 실무회담의 동시 개최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재개=지난 5월로 예정됐다 무산된 김추위 2차회의 재개에는 남북이 합의했다. 남측이 이달말 재개를 강력히 원하고 있어 26일과 28일 두가지 안을 놓고 북측과 입장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내한 김에 ▲개성공단 착공 ▲급강산면(인남면) 공동조사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 하부 회담에 대한 구체적 일정까지 북측에 제시했다. 식량 및 전력 지원금 영두에 둔 북측은 김추위 재개에는 합의했지만 급강산면 문제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상봉 및 4차 적십자회담=남북이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도록 9월5일쯤 4차 적십자회담을 갖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 9월16일쯤 5차 이산가족 상

봉이 가능하다. 다만 적십자 회담에서 상설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 문제를 논의하자는 남측 제안에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문제만 다루겠다고 고집. 이견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다.
◆경의선 연결=이미 남측은 경의선 연내연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8월 16~17일에 열자고 제의했다. 북측은 "좀 이르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하긴 했으나 이달 말쯤 개최될 전망이다. 남북이 이미 합의했던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보장합의서'만 발효되면 곧바

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달중 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될 것이 확실시된다.

◆쌀 지원 및 체육분야 지원=장부는 회담 직전 대북 쌀지원 전제조건으로 ▲김추위 재개 ▲북한의 회담 태도 ▲남북관계 진전상황 ▲국내여론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북측이 김추위 재개에 동의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쌀지원 방침을 굳혔다. 외견상 제공 시기는 김추위가 열리면 그때 가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양측은 8·15공동행사와 9월 축구경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經推委 26-28일중 택일 재개추진 '내달 5일쯤 적십자회담' 원칙합의



13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한 대표들이 협상 인건을 책상에 올려놓고 개별 사안마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공취재단

2차 전체회의

世界日報

2002. 8.14(수)

北, 경협 적극 軍事엔 신중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3일 회담의 성과물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남북은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다음달 중 북측의 경제시찰단 파견을 비롯해 이 달에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표시키고 금강산 육로개설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몇 가지 부문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며 남북양측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 경제협력 적극적=다음달 경제시찰단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4월 임동원 대통령 특사 방북 때 5월 중 실시하기도 했던 것이 4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셈. 북측도 이달 하순 열린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동의한 상태라 다음달 중 시찰단의 방한 가능성은 높다. 특히 최근 북한에서 경제개회 조치가 진행 중인지라 시기적으로도 북측의 수요의 맞이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시찰단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들이 대거 포함할 것이며 정보기술(IT) 및 중소기업 위주의 시찰을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은 또 군사실무회담의 이달 개최에도 의견을 접근하고 있는 상태. 이날 경우 경의선 안내 완공을 위한 카다만 전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육

■ 남북장관급회담 둘째날

경의선 철도연결 '군사실무회담' 등 열기로
서해교전 긴장완화 '군사 당국자회담' 진통



남북장관급회담 양측대표단이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 민속촌을 관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로개설을 위해 필요한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과 교류증진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셈이다. 특히 군사실무회담의 이달 중 개최가 최종 합의될 경우 북측 군부가 상당부분 체재개방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합의여부가 더욱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외제별 막판진행 기능성=추석(9·21) 때 이산가족 상봉, 다음달 5일을 전후한 적십자회담 개최, 금강산관광

합의회담 위한 당국회담, 경평축구·대관도시법단 파견 등 체육교류, 쌀 지원 등의 사안은 발달 없이 무난히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이다. 목록을 보면 북측으로서도 부담감이 덜한 사항들이다.

문제는 북측의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다음달 착공,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의 시안. 이 의제들의 합의를 놓고 남북은 회담 막바지까지 합의문 문구 하나하나에 상당한 줄다리기를

● 남북 장관급회담 양측 정점에 대한 입장 (올해날 회의 결과)

외제	남측입장	북측입장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8월말 개최	논의 계속
회담 재개		
경제협력 추진위 2차회의		외견 접근
금강산관광	9월중 개최	
합성회위원 당국회담		
기상공단	연내 1단계 착공	논의 계속
북 경제 시찰단 방문	2004년 수준 이르면 9월 중 파견	외견 접근
서해도발과 개발방지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	금강산실무 접촉에 입장 표명했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군사회담 거쳐 9월중 재개	연내연결 원칙 동의
5차 이산상봉	추석(9월21일) 실시	실시 협의
연회소실치 위한 4차 적십자회담	이산상봉 한후 9월 초순 개최	외견 접근
북한의 부산 AG참가 8·15 통일행사	최대한 협력	원칙 동의·(제한적) 인공기 거양 허용 포함)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측은 서해교전에 대한 언급수위를 실무회담이 아닌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다룰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을 놓고 우리측과 이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 실정은 이와 관련 '회담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며 이들 문제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世界日報

北, 군사회담은 소극적... 경협엔 적극적

이번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여부뿐 놓고 가장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지난 2~4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에서 군사당국자회담 재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합의, 이번 회담에서는 일정협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남북의 회담과는 달리 북한이 일정 합의에 선뜻 응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남북은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남북 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군사 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 ▲군 인사교류 ▲군축문제 동등 거론하고 6·29서해도발에 대한 직

접 전달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강산 당국회담 등 각종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예민한 문제인 서해교전과 관련, 북측은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군사분야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13일 실무대표 접촉과 14일 3차 전체회의가 남아있고 전반적으로 회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조정진기자 jin@sgt.co.kr

남측 "조속개최" 계속된 요구도 외면 교전관련 "입장 밝혔다" 원론적 답변

접한 조치와 재발방지 약속 등도 받아낼 생각이었다.

이봉조(李鳳朝) 남측 대변인은 회담 첫날 "(서해교전과 관련) 다시 한번 우리측의 입장을 분명

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남북관계 원상 회복과 6·15 공동선언 이행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2차 경추위, 경제시찰단 파견, 금

합의사항 '실천 시간표' 절충

남북 장관급회담 양측 대표단은 13일 전체회의에서 상당수 의제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교환을 보였으나 각본에는 이견이 많아 밤늦게까지 공식-비공식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협상을 계속했다.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경의선 연결공사 조기 착공과 이산가족 상봉 실시, 제1차 적십자회담, 금강산 관광 협정과 회담 등 큰 의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건설, 입진강 관동수방 대책 마련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시찰회의 개최와 북한 경제사담단의 남한방문 등에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념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



남북 장관급회담 양측 실무대표(왼쪽)와 북측 김영삼 대표단장 등이 13일 오후 음인 민속촌을 방문, 일련 관련자를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취재단

南 "군사회담 먼저"에
北 "경추위 먼저" 고수
적십자회담 중량감 높여
추석전 이산상봉은 난항

에 대해서는 시작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의선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 시레교전 재발방지책 마련 등 군사관련 회담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합의의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4차 금강산 적십자회담을 총체적으로 중량감을 높여 다음달 3~4일 연다는 데에 합의하고서도 이산가족 상봉 시기에 대해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추석전 상봉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양측은 일단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회담 일정을 마치게 돼 있는 14일 오전까지도 이 같은 입장차에 대한 막판 협상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측 관계자는 "이번 협상으로는 북한 대표단이 서울을 떠나기 전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 착수할 위해 필요한 군사적 이행협약서 실효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다른 어떤 회담보다 먼저 열자는 주장을 폈다. 이 회담이 산행네이 경의선 연결공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경추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우리측 논리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군사관련 회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경추위를 먼저 열자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차관 형태로 우리측이 북에 제공하기로 한 쌀 문제와 개성공단 착공 등 북한 경제난 타가에 필요한 여러 대책들이 경추위에서 논의될 시안이기에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측은 또 군사관련 회담의 성격과 내용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장관급인 군사당국자회담을 열어 경의선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문제, 논의하는 한편, 시

레교전 재발방지책도 함께 논의하는 입장이다. 이차 시레교전에 따른 대북강경 여론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관련 회담에서 철도 및 도로연결에 필요한 상당한 논의한 채 교전 재발방지책은 거론조차 하지 못할 경우 국민경심을 달래기 어렵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측은 군사관련 회담의 성격과 경의선 연결에 군사적 보장 문제로 한정하는 실무회담에만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 실무회담은 경의선 연결을 위한 보장이행 협의서만 교환하면 다른 문제점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는 남측이 끈질기게 거론하는 시레교전 재발방지책 마련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북측은 "군부에 건의해보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호기자 prccol@kmb.co.kr](mailto:prccol@kmb.co.kr)

北, 수차례 메모전달... 곡절 있는듯

전체회의 예정시간 넘겨 민속촌 뒤늦게 참관
기념품 증정 의사에 "눈이 기념" 끝까지 사양

남북 대표단은 13일 오후 경기 용인민속촌 참관 일정을 1시간30분 연기하면서까지 협상에 바쁘다. 지난 2~4일 금강산에서 실무협상을 가졌던 남측 이병조 서영교 대표와 북측 최성익 김만길 대표는 육소에 남아 실무협상을 계속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측 대표들은 협상 내용에 대해 낙관론을 폈으나, 회의장 안으로 수차례 메모가 전달돼 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회담 이튿날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시작해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우리측 정세권 수석대표는 "어제 김단장이 선물 많이 주시고 해서 끝까지도 선물이 왔다 갔다하는 형에 잠깐 할 못했습니다"라고 밝히

는 농담을 던졌다. 이에 김영삼 북측 단장은 "너무 이른 격정입니다"라면서 "남 아직 낙관합니다. 좋은 합의에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회담장에 나왔습니다"고 답했다.

회의를 마친 뒤 김단장은 성희봉 질문반사 "다 합의고 있습니다"고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정수석대표는 굳은 얼굴로 답변을 피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대기실에 머물던 북측 지안인북은 수차례 북측 문명이 찍힌 듯한 메모를 김단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회담 개시후 50분이 지난 10시50분쯤 B5층지 두정 본당의 메모를 총중감음으로 전달한 데 이어 11시3분과 11시12분 추가메모를 잇따라 넣었다.

○...양측 대표단은 당초 예정보다 늦은 오후 3시30분부터 용인 민속촌을 방문, 재현된 전통

거주와 내장간 등을 둘러보며 탄소나 나왔다. 참관 시간 지연에 대해 워남 관계자는 "회의나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진행할 절차가 많은 법"이라고 밝혔다.

김대표단장은 1시간30여분간 이뤄진 민속촌 참관에 북측의 연변으로 분위기가 변했다. 그는 내장간에서 안내원이 기념품을 하나 가져가시겠느냐고 말하자 "눈이 기념"이라는 말로 사양했다. 김단장은 또 관공재 관 입부가 붉은 색 옷을 입고 지나가자 "저게 붉은악마 옷이냐"고 관심사를 보이기도 했다.

참관 일정을 끝낸 양측 대표단은 곧바로 서울 반포동 모 음식점으로 이동, 회기에예한 분위기가 속이 차려줄 함께 했다. 정수석대표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며 지속하는 의미에서 견해를 재의한다"고 잔을 들자 남북 대표단은 "회담성공을 위하여"라며 건배했다. 김단장은 식사에 앞서 식당안에 전시된 남북정상회담 역사 사진과 이산가족 상봉 사진들을 진지한 표정으로 둘러보기도 했다.

김의규기자 egkm@kmb.co.kr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

“경협위해 軍협조 꼭 필요”

남북 양측은 13일 남북장관급 회담 이틀째를 맞아 북한 경제시찰단 방한, 북한 태권도시범단 방한, 추석음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 실현, 제2차 경협추진위 개최,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 등에 합의하는 등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다.

그러나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합의된 내용의 일정을 모두 잡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북측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 밤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북측은 몇가지 교류일정만 합의해 놓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합의해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사당국간 회담은 이달 초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합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표단이 주저하는 인상을 남겨 북한 군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대두됐다.

양측은 그러나 군사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남측 대표단 대변인인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올해 안에 경의선 연결을 목표로 군사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북측에 촉구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 북한 대표단을 설득해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양측간 군사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군사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남북 교류협력에서 경의선 개통의 상징성이 큰 데다 이미 합의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따른 군사보장합의서’를 서명·발효시켜야 한다는 의지로 북한 대표단을 밤늦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회담 내내 “우리 소관이 아니므로 돌아가서 (군부 등 상부에) 남측의 뜻을 건의하겠다”고 말해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우리측 대표단을 곤혹스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조정문제도 양측이 미묘한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3일 정세현 통일부 장관(오른쪽 셋째) 등 남측 대표단과 김경성 내각책임장(왼쪽 셋째) 등 북측 대표단이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뉴스】

향후 실무회담 일정 미묘한 입장差 南 “일괄조정” 北 “순차적 합의이행”

차이가 있어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이 제시한 방법은 일괄조정 방식으로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 8월중 제2차 경협추진위·군사실무회담·금강산실무회담 개최, 9월중 적십자회담 개최 등으로 모두 결정짓자는 것이다.

특히 군사실무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경협위를 열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문제 등을 논의하고 금강산 당국간회담을 열어 육로개설 등을 논의하더라도 북한 군부의 결심이 필요한 만큼 경협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군사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즉,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군사당국간 회담 개최가 급선무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모든 일정을 확정하고 합의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측은 몇가지 교류 일정에 대해서만 우선 일정을 합

의해 놓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합의해 시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권도시범단 교환, 경제시찰단 방한, 제2차 경협위, 제4차 적십자회담, 금강산 관광회담 등의 일정을 우선 결정해 시행하면서 나머지 회담일정도 합의할 수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군사당국간 회담을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면서 “북측도 이 사안에 대해 금강산 실무대표접촉에서 개최원칙에 동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는 나름의 일정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점에서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군사당국간 회담이 열리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봉조 대변인은 2차 전체회의가 끝난 뒤 “남북간에 구체적인 실천문제를 집중 협의해 현재 갖가지 부문에서 의견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나영필기자 philip@mk.co.kr

2002. 8.14(수)

북, 경수로 지연 전력손실 보상 촉구

조기 핵사찰 유연대응 비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미국에 대해 핵사찰 문제보다는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조기 핵사찰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 (중앙방송)은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조·미 기본합의문(제네바 핵동결 합의)을 유지하는 데서 급선무는 미국측의 경수로 제공 지연으로 인한 우리의 전력손실 보상

문제이며 이것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논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핵사찰 문제는 조·미 기본합의문이 이행돼 경수로 건설이 진척되면 그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돼 있는 문제'라며 '그 시기는 기본합의문과 특별문건인 비공개 양해록에 명기돼 있으므로 더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담화는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 기본합의문을 유지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고 전력손실 보상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김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국민일보

2002. 8.14(수)

"美서 너무 몰아붙인다" 北, 핵사찰 거부 합의 파기 경고

북한은 13일 미국의 핵사찰 사찰 허용 요구를 거부하고 핵 프로그램 동결 협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1991년 제네바 핵합의는 파기되느냐 혹은 보전되느냐의 가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제네바 핵합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면서 "이는 전력 부족으로 북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핵 프리치드 태복 교섭단장 대사가 지난주 북한 경수로 건설 콘크리트 타설식에 감복해 북한측에 대해 국제 기구의 핵사찰 사찰 수권을 요구한 것을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덕기자**

대한매일

2002. 8.14(수)

北, 美핵사찰 요구 거부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

외무성 대변인 성명

북한은 13일 미국의 핵사찰 사찰 허용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이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하지 않을 경우 핵프로그램 동결 협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 기본합의문(91년 제네바 핵합의)은 경수로 제공이 대폭 늦어진 것으로 해 파기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서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식대로 나아갈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데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9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 파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

김근미기자 kmkim@kdaily.com

중앙일보

2002. 8.14(수)

경수로 지연 전력손실 北, 美에 보상논의 촉구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미국에 대해 핵사찰 문제보다 경수로 건설 지연으로 북한에 입힌 전력 손실 보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조·미 기본합의문을 유지하는 데서 급선무는 미국 측의 경수로 제공 지연으로 인한 우리의 전력 손실 보상 문제며 이것은 미국이 싹튼 싹튼 반드시 우리와 우선적으로 논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영증 기자

<yilee@joongang.co.kr>

北대표단 참석 자체가 의미

• 서울 8·15 남북공동행사

'8·15 민족통일대회'가 15~16일 서울 위커헬호텔과 잠덕공·교역스 등에서 열린다. 북측 대표단 116명을 포함, 남북 500여명의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이산신봉을 제외하면 분단 이후 서울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민간교류 행사다.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교류 행사는 금강산이나 평양 등 북쪽에서만 열렸다"며 "대규모 북측 대표단이 남쪽으로 내려오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번 행사를 최대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내신있게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축전' 때의 '민경대 방명록' 파문을 의식한 행동이다. 이에 따라 당초 울림관객심경기장이던 개막식 장소가 북측 대표단의 숙소인 위커헬호텔로 바뀌는 등 대부분의 행사를 국내에서 치르기로 결정했다. 한총련과 범민련측은 위커헬에서 열리는 본 행사에 참

려원구등 유력인사 116명 한총련측 "사려깊게 행동" '교류시간표'에 도움 기대

가하지 않기로 했다. 한총련측은 "사려깊게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추진본부측이 밝혔다. 이번 행사의 북측 주관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도 13일 "개막 및 단합대회가 최대한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뜻을 남측 추진본부에 전하는 등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가 완충행동 없이 무사히 치러질 경우 남북간 화해무드가 좀더 확실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이번 행사에 북측은 여운형(呂運亨) 선생의 딸인 려원구 조국전선 의장과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등 종교계·예술계의 비중있는 인사들을 대거 파견했다. 려의장은 6·15 남북정상회담 때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나란히 있어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역할

8·15 민족통일대회 일정

일자	시간	행사
14일 (수)	11:00	북 대표단 도착 (도착성명 발표)
	17:00	남측 환영공연 (한국예술)
	19:00	환영연회
15일 (목)	09:30	개막식 민족통일대회
	10:10	놀이마당
	11:00	합동예술공연
	15:30	전시회 개막식
19:00	북측 예술단 공연	
16일 (금)	08:30	분오별 모임
	10:30	화술토론회
	12:30	폐막식
	14:30	고궁관람
	17:00	북측 예술단 공연
19:00	환송민찬	
17일 (토)	09:40	환송행사 탑승

을 한 인물이다. 1946년 월북한 뒤 최고 인민회의 부의장,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직도 맡고 있다. 려의장은 서울도착 직후 서울 우이동에 있는 여운형 선생의 묘소 참배 의사를 밝히 상사여부가 주목된다. 장위원장 역시 북한의 직십자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 이영욱기자

경향신문

2002. 8.14(수)

한겨레

2002. 8.14(수)

8·15 민족통일대회 개막

남북 500여 인사 참가 화해·상호신뢰 강화

남북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8·15 민족통일대회'가 14일 오전 북측 대표단의 인천공항 도착을 시작으로 3박4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는 분단 이후 서울에서 개최되는 첫 남북 민간공동행사로 북측 민족대표단 116명을 포함, 남북 5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5·19면

남측 행사주체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8·15 민족통일대회는 남북간 신뢰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통일운동이 민족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쌍두마차를 확실히

주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남북 대표단은 행사기간 동안 합동 예술공연(15일), 민족단합대회(15일), 화술토론회(16일) 등을 통해 동포애를 나눌 계획이다. 15일 남북공동 미술전에는 북측의 국보급 그림 10여 점이 전시된다.

한편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에는 여운형 선생의 딸인 려원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과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허혁필 민족협 부의장 등이 포함됐다고 추진본부측은 밝혔다. 북측 대표단은 17일 귀환할 예정이다. 이영욱기자

8·15 민족통일대회 위커헬호텔서만 열기로

한총련 참가 정부서 불허

민화협과 통일연대, 7대 종단 등으로 이뤄진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추진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총련이나 범민련 남측본부 등은 위커헬호텔 등에서 열리는 이번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또 "정부와 최종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을 잡았다"며 "행사에는 북측 인사 116명과 남측 인사 400여명 등 500여명이 참석하고 개막식 등 각종 행사는 서울 위커헬호텔 안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계획했던 장소 등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김중수 추진본부 상임본부장은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니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북측의 신변안전 문제 등으로 장소를 옮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열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통일연대 소속 단체 중 한총련이나 범민련 남측본부 등은 이번 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건국대에서 열리는 통일연대 자체 행사인 '8·15 대회 상사 축하 한마당'에만 참가한다"며 "우리는 이들도 본 행사에 참가하기를 원하지만, 정부가 막기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주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행사를 서울 위커헬호텔 등에서만 개최하도록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주최측에 통보했다.

한 상임대표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민일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선이 기자 anmadang@hani.co.kr



8·15 민족통일대회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6·25 남북인사가죽합의회 회원들이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앞에서 남북자생사학인·송환 촉구집회대회를 갖고 있다(왼쪽). 이날 서울 대학로에서는 한총련 소속 대학생 1,000여명이 참가한 전국대학생 반미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김재현·박서강기자

‘8·15축전’ 保-革긴장 고조

8·15 민족통일대회를 앞두고 행사주최측인 민화합, 통일연대 등 진보단체와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향군 등 보수단체 등이 13일 ‘행사 감시’ ‘행사 반대’ 등을 잇따라 천명하고 나서고 이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등의 행사 개입과 졸출 행동 우려가 제기되는 등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이날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심야 차도 점거 시위를 벌여 긴장을 높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평양 통일 대축전 이후 없었던 극단적 보·혁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향군 ‘행사 감시하겠다’ 지난해 평양 대축전 이후 진보단체와 정면 충돌했던 재향군인회 측은 굳은 표정으로 단단히 버리고 있다. 향군측은 수천여명의 감시단을 구성, 북측 대표단 등을 입국에서부터 행사기간 내내 밀착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행사 도중 주최측과 향군측의 골목전인 충돌을 방지시킨

鄉軍等 감시단 운영·반대집회 주최측 “역풍맞을 일 안해” 불구 한총련 어제 쇠파이프 기습시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재향군인회 정일훈(鄭一勳) 안보부장은 “남측인사의 친북 이직, 친안고무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 문제기 생기면 대규모 규탄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자유시민연대도 북측대표단이 입국하는 14일 여의도 등에서 1,000여 명이 모여 민족통일대회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사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확실한 사과가 없으면 행사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충돌·미살 가능성 상존 8·15 행사주최측은 “역풍 맞을 일 안할 것”이라면서도 한총련 등의 돌출행동 우려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특히 한총련 내부에서 “정부측의 행사축소와 규제 등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총련 소속 대학생 250명이 이날 전국대학생 행동의 날 집회 후 오후 9시경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 역앞 왕복 8차선 도로를 기습 점거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반미 시위를 벌여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크게 했다.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적 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보수단체들의 행동에 일절 맞대응하지 않겠다”며 “또 한총련 등은 위키일 호텔 등 행사장에는 참여하지 않고 14일 건국대에서 열리는 통일연대 행사에만 참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켜보는 수밖에” 정부의 입장은 일단 지켜보자는

8·15 민족통일대회 행사일정

14일	북측대표단 입국(인천공항) 한국예총 환영공연(위키일호텔) 제막식(위키일호텔)
15일	민족통일대회(위키일호텔) 합동예술공연(위키일호텔) 북측 단독 문화공연(코엑스) 부연발 상봉모임(위키일호텔) 학술모론회(위키일호텔)
16일	고궁 방문(명덕궁 등) 제막식(위키일호텔)
17일	북측 대표단 출국(인천공항)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 주최 행사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양측 단체들에 지시를 권고했지만 지난해처럼 돌출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14일 94개 중대 2,000여 명의 병력을 행사장인 위키일 호텔 등에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행사장 내에서 한반도기 사용은 허용하되 안광기 사용 등은 차단키로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정원수기자 nobletiar@hk.co.kr

8·15행사 '남남 갈등' 우려

• 진보-보수단체 신경전

8·15 남북공동행사를 앞두고 '남남 갈등'이 우려되면서 경찰이 이들의 충돌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총련 등 진보단체가 14일과 15일 연이어 '8·15 민족통일대회' 관련 집회와 행사를 계획중인 데다 일부에서 '공화국기' 게양 등 '집중행동'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지난해 평양축전의 재판이 벌어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21일 평양에서 열린 8·15 평양대축전에 참가한 방북단이 도착한 김포공항 주변에서 방북단을 환영하는 통일연대·한총련 등 진보단체 소속 400여명과 북한에서의 행동을 비난하는 재향군인회, 6·25참전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1,300여명이 몸싸움까지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8·15 관련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누구나 평화적인 집회는 허용하지만 불법적인 집중행동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한총련에 따르면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회'에는 '참년학생추진위원회'란 이름으로 참가하며 15일에는 건국대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자체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한총련 관계자는 "남북화해 분위기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가두집중과 집중행동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것이 한총련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들은 진보단체들의 행동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총련 집회 돌출행동때 재향군인회 맞대응 벌려

재향군인회 안상열 홍보부장은 "이번 집중행사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총련 및 일부 좌익단체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모든 회원들이 일어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강영규 경비1과장은 "법법시위가 발생할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그 이전에 학생들의 집중행동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장경성 교수(사회학)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아직은 미완의 공복"이라며 "서로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민족국가의 존엄성을 지켜내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8·15민족통일대회 오늘 시작

북 대표단 116명등 500명 참가 위키힐 호텔에서만 행사 열려

올해 8·15 민족통일대회가 북한 대표단 116명과 남한 대표단 400명 등 모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4~17일 서울에서 열린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 7개 종단, 통일연대 등으로 구성된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회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21면)

당초 올림픽 제2체육관 동지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이번 행사는 북한대표단의 신변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모두 서울 광장동 위키힐호텔에서 열린다. 17일에 예정됐던 북한 대표단의 한강 유람선 관광은 취소됐다. 다만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북한 예술단 공연과 청덕궁 등 고궁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15일 개막식에서는 한반도 단원기 게양에 이어 공동호소문이 채택되고, 남북 합동예술공연도 이뤄진다.

한편 북측 민화협은 이날 남측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앞으로 8·15 민족

통일대회 북한 대표단 116명의 명단을 보내왔다. 대표단에는 단장인 김영대 민화협 의장을 비롯, 몽양 여운형 선생의 딸인 여원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대남집속 심세인 허학림 민화협 부회장, 장재연 조선총교인협의회 회장 등 북한 심세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신창호 박재천기자

한반도기만 허용 경찰, 인공기 사용 통제

경찰청은 13일 8·15 민족통일대회 경비대책회의를 갖고 서울·위키힐호텔 등 행사장에서의 한반도기 사용은 허용하되 인공기와 단체별 깃발 사용은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사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등 전 행사장에 AD카드 또는 비표달 소지한 남측 대표단 500명만 출입을 허용하고 행사장 입구에 문형 검색대를 설치, 인공기 등 행사방법에 불합법을 통제하기로 했다. 김영석기자 yskim@kmb.co.kr

8·15 민족통일대회 옥외행사 축소

14일 개막되는 8·15 민족통일대회는 2년 전인 2000년 8월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 이후 최대 규모의 북한인사 방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7일까지 나흘간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 지 알이된다. 이번 대회는 만경대 방명록 파문으로 남남갈등을 야기했던 지난해 8·15 평양행사와 지난 6월 시해교전 여과 등을 고려해 옥외행사를 줄이는 등 당초 일정을 상당부분 수정했다.

△14일=김영대 북한 민화협 회장이 인솔하는 100여명의 북한 대표단은 오전 9시30분 전 세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 시해 직항로를 거쳐 오전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북한 대표단은 도착성명을 발표한 뒤 곧바로 숙소 김 행사장인 서울 위키힐호텔로 이동한다. 오후 5시 호텔 내 기자회견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환영 국악공

연이 열리고, 오후 7시 남측대표단 500여명이 참석하는 환영연회탑가진 뒤 첫날 일정을 마친다.

△15일=개막식은 당초 올림픽관 경기장에서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틀 변경, 호텔 안 잔디밭인 제이드가든에서 오전 9시30분 연다. 개막식에서는 한반도 단원기 게양한 뒤

여의도 유람선 관광도 취소 17일 인천공항서 석별의情

이돈명 남측 추진본부 상임의장과 김 북측 단장이 개막연설을 하고 공동호소문을 채택한다. 양측 대표단은 이어 민족화해논의마당을 50분동안 가진 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합동예술공연을 가이급출에서 연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북측의 이리랑축전에 개막식 노래를 부른 북한 민요가수 식민리씨(38기) 본산

회합 부른다. 오후엔 사진·미술진이 호텔에서 열린다. 북측 민수대 예술단과 평양예술단 소속 배우 30여명은 오후 7시부터 삼성동 코엑스 디토리움에서 90분동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단독공연을 갖는다.

△16일=양측 대표단은 오전 8시 30분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노동, 농민, 여성 등 9개 부분별 모임을 갖고 민간차원의 교류일정을 논의한다. 오전 10시30분 호텔 무궁화홀에서 일본문제 하소토회를 갖고 오후에는 장덕궁 등 고궁관람에 나선다.

△17일=북한 대표단은 당초 잔디밭에서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를 둘러볼 계획이었지만 옥외행사를 줄여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취소됐다. 북한대표단은 오전 8시 30분 호텔을 출발, 인천공항에서 전세기편으로 평양으로 돌아간다.

김영석기자 yskim@kmb.co.kr

경향신문

사회·종교계 거물 대거 서울行

8·15 민족통일대회 北선 누가 참가하나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최초로 열리는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은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소속 대남 관계자를 중심으로 사회·종교·학술 등 각계 단체 핵심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김영대 민화협 회장, 여원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정재연 조선종교인협의회 회

장,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은 북한 회의의 주요 행사 때마다 주석단에 빠지지 않고 올라갈 만큼 상당한 사업의 간부다. 남측이 순수 민간 단체 중심이라면 북측의 참가자는 국가 기관의 책임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셈이다.

◇대남 사업 관계자—김완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 김경남 민화협 상무위원이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다. 민화협의 김영대 회장과 허혁필 부회장이 공식 행사를 주도하는 역할이라면 이 두 사람은 마후에서 이번 행사를 사실상 조율·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그동안 각종 남북 접촉과 대화에 실무자로 나선 경험이 있어 서울 방문이 낯설지 않다. 특히 김완수 부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임을 받는 대남 분야 실세 중 한명으로 남북 간의 비밀 접촉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양 직후 정치 지도자였던 여운형의 딸인 여원구 의장은 최고인민회의(남측의 국회) 부의장직도 겸하고 있으며, 2000년 평양 6·15 남북 정상 회담 때는 이희호 여사와 나란히 앉아 눈길을 끌었다. 1946년 월북 후 첫 서울 나들이다.

이외에도 김영대 회장·허혁필 부회장을 비롯해 배문길 상무위원, 김대봉·이경철 과장 등 1998년 설립된 이후 남북 민간 교류를 주관해 온 민화협 관계자 20여명이 대거 방문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김세현 아태평화위 참사는 낯선 인물로 차세대 실무 일꾼인 것으로 추측된다.

◇종교계—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장재연 조선종교인협회 회장. 그는 98년 12월 조선직업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남북 직업자 회담 등 남북 간 인도적 지원 및 교류 사업을 총괄해 왔다.

2000년 11월 말 2차 남북 이산가족 교환 방문 때 최측 단장을 맡기도 했다. 80년대 말부터 조선가톨릭교회

(99년 6월 조선천주교인협회를 개칭) 등 종교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그는 기독교·천주교·불교·대종교 등 남측 각 종단의 교류 사업을 주도했다.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중앙위원회 위원장 역시 북한 종교계의 거물급 인사. 그는 최근 남북 간 불교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유명해졌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면서 조선종교인협회 부회장, 북·일 우호친선협회 부회장직도 맡고 있다. 95년에는 고(故)문익환 목사 부인 박용길 장모 환송 모임, 2000년 평양 정상회담 환영

만찬, 2001년 6월 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평양 인민경제대학을 나왔으며 1979년부터 조불련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도 남측 기독교 인사들과 교분이 많은 주요 인사. 그는 북한의 주요 행사 때마다 주석단에 빠지지 않고 올라갈 만큼 북한에서 비중 있는 인사다.

◇문화·예술인—이번 행사에 참석할 문화·예술인 43명 가운데는 김두일 문화성 국장(단장)을 비롯해, 최희평 학생소년예술단 단장, 차세대 여배우 김경애 등이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손국장은 30년 전북 이리에서 출생, 6·25전쟁 때 의용군에 입대해 북한으로 넘어간 월북 인사.

또 1936년 평양 출생인 최단장은 조선문학예술인총동맹(문예총)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내각 문화상 부상(차관)으로 피비다가극단 부총장(85년)·국립평양예술단장(87년)을 역임했다.

8·15 민족통일대회 북측대표단 주요 인사



김영대(남)
민족화해협의회 회장(단장)



여원구(남)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정재연(남)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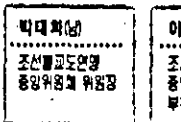
강영섭(남)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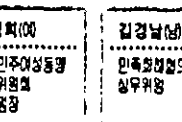
허혁필(남)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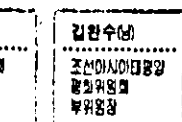
최희연(남)
김일성시절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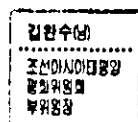
박태화(남)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명희(남)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남(남)
민족화해협의회 상무위원



김완수(남)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현재는 조국통일법민족연합(법민련) 북측본부 부의장과 조선·수단 친선협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4월 일본에서 활동 중인 가수 김연자씨가 평양 공연을 위해 순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직접 마중나가기 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말~7월 말에 열린 아리랑공연 실무팀 총괄하는 등 예술 분야에서 기획력과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차세대 여배우 김경애는 오미랑과 홍연희의 뒤를 잇는 인기 여배우로 올해 29세. 94년 9월 평양에서 열린 4차 평양영화축전에서 최우수 여자배우상을 수상, 팝스타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등장은 특히 대형 신인 여배우 기근에 시달리던 북한 영화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윤수 기자

<nkys@joongang.co.kr>

여운형 셋째 딸 여원구 첫 방문 실무자엔 김정일 신임 실세 포진 차세대 여배우 김경애도 눈길

중앙일보

2002. 8.14(수)

軍事회담 빠른시일내 개최

경협委 26~29일 서울서... 對北 쌀지원 논의

南北장관급회담 합의 10개항 발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南北동시착공 추석 이산상봉·적십자회담 금강산서

남북한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7차 장관급회담 전체회의를 열어 군사당국자 간 회담 조기 개최에 합의하는 등 막판 쟁점사항을 타결, 10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 관련기사 3면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시급히 취하며, 쌍방 군사당국자 간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착공은 작년 2월 합의했던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표되는 대로 이르면 9월 중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회담기간 내내 북한이

군사회담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이행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들이다.

남북 양측은 이날 장성급 군사실무회담의 개최 시기를 둘러싸고 협상을 계속해 '내주 회담 개최, 이달말 군사 착공' (남측), '이달말 경제협력추진위 논의' (북측)라는 입장을 철저히 하는 형태의 합의안을 만들었다.

남북한은 또 경협위 2차회의를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어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이 동시에 착공하기로 하고 남측은 기술적 문제할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북 쌀 지원 규모는 경협위에서 결정하며 정부는 현재 30만~50만 t 규모를 고려 중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추석(9월 21일)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하되 구체적인 문제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를 다룬 제4차 적십자회담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양측은 이 밖에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를 위해 남북이 협력

▲9월 6~8일 남북축구경기의 성공 협력 ▲9월 10~12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 회담 ▲9월 중순 남측 태권도 시범단 평양 방문, 10월 하순 북측 시범단 서울 방문 ▲9월 중순 안변청년발전소 임남담(금강산담)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 접촉

▲10월 하순 북한 경제사찰단 남측 방문 ▲10월 19~22일 제8차 장관급 회담 평양 개최 등도 합의했다.

북한 대표단은 8·15 민족행사 북측 대표단이 타고 온 고려항공 편으로 이날 평양으로 돌아갔다. > 崔東默기자 bm.choi@chosun.com

중앙일보

2002. 8.15(목)

'8·15 통일대회' 保·革 갈등

한총련등 성공기원 집회 보수단체선 우려 목소리

8·15 민족통일대회와 관련, 14일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들이 각각 장외 행사를 열고 민족통일대회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보(保)·혁(革) 갈등이 벌어졌다.

한총련·통일연대·민주노총 등 40여개 학생·시민단체는 회원 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건국대 운동장에서 '8·15 민족통일대회 경축 통일연대 한마당'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북측 대표단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

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반면 자유시민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굴욕적 대북정책과 북의 위장병 회공세 규탄대회'를 열고 "서해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북의 대남교란 책동에 불과하다"며 "김정일 체제를 강화하는 데만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진보·보수 단체가 충돌할 것에 대비, 건국대와 여의도 일대에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東亞日報

2002. 8.15(목)

남북 8·15대회 개막

北대표단 어제 서울에

남북 대표단 520여명이 참가하는 8·15 민족통일대회가 14일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광장동 위키홀호텔에서 시작됐다. > 3면에 관련기사
김연대 민족회해협의화(민화협) 회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 116명은 이날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입국, 남측 대표단과 합류했다. 남한

에서 열리는 민간행사에 북측 대표단이 이처럼 대규모로 참가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북측 대표단은 도착성명을 통해 "이번 8·15 민족통일대회가 민족의 힘을 합치고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며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이호갑기자 adl@donga.com

■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요지

- 1 경협위 2차회의 8월 26~29일 서울 개최
- 2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 3 9월 중순 금강산관광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
- 4 추석계기 5차 이산가족 상봉 및 9월 4~6일 4차 적십자회담
- 5 9월 10~12일 금강산 관광 당국간 회담
- 6 8월 17~20일 아시안게임 실무접촉 협조
- 7 남북축구경기 9월 6~8일 서울서 진행되도록 협력
- 8 대연도시범단 교환방문
- 9 북 경제사찰단 10월 하순 남측 방문
- 10 8차 장관급회담 10월 19~22일 개최

장관급회담 10개항 합의... 내달 4~6일 적십자회담

핵심안건 軍事 당국자회담 구체일정 못정해 8차 장관급회담 10월19-22일 평양서 열기로

남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인접 문제 등을 논의할 2차 경의추진위원회(경추위)를 이날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및 운영문제를 협의할 4차 적십자회담을 9월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3면에 관건기사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은 추석(9월 21일) 직전에 금강산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상봉단의 규모와 집사는 판문점에서 만나 합의한다.

남북은 또 철도 및 도로인접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사실화' 취하며,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안변정남발전소 압남댐(금강산댐) 공동조사 및 관계실무자들의 접촉을 9월 중순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남북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회담을 마무리했다. 제8차 장관급회담은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각종 남북 협력사업이 활발해지며 경제협력과 북-미 대화 및 북-미 대화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핵심안건으로 삼았던 경의선 연결을 위한 군사당국자간 회담 일정을 확정짓지 못해 경의선을 연내에 완공하리라는 목표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그러나 회담 고위관계자로서 "북한 군부의 관할권 하에 있는 금강산댐 공동조사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남북은 이번 장관급회담 합의 사항의 순환 여부에 따라 군사적 협력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또 남측 대변도시법단이 9월 중순에 평양을, 북측 대변도시법단이 10월 하순에 서울을 방문키로 합의했다.

김영성(金泳成) 단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평등보도문 발표를 마친 뒤 8-15인적통일대표단을 대우고 인민 국제공항에 도착한 고려항공을 타고 북으로 돌아갔다. 김 단장은 출발직전 '시해교전'에 대한 사과는 7-25 전쟁중에서 벌인 유감표명으로 감응할 것인 '가'라는 가치들의 집념에 대해 "그렇게 봐달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er@donga.com

성동기기자 eson@donga.com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10개 합의사항

- ①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26~29일 서울)
- ② 국산면회국과 적십자회담 개최
- ③ 양방향 공동조사 실무자 접촉(9월 중순 금강산)
- ④ 제3차 이산가족상봉(9월 추계 직전 금강산) : 북측 남북적십자회담(9월~10월 금강산)
- ⑤ 제2차 금강산관광 활성화 방안(9월~10월 금강산)
- ⑥ 북한인사(이산가족대회) 북측 대표단 참가
- ⑦ 남북축구경기(9월6~8일 서울) 협조
- ⑧ 남북 대변도시법단 9월 중순 평양방문 : 북측 대변도시법단 10월 하순 서울방문
- ⑨ 북측 경제시찰단 10월 하순 평양 방문
- ⑩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10월19~22일 평양

경의선 타결돼야 쌀 지원 방침

남북안이 14일 정동 끝에 7차 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관계의 시간표가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가 합의할 기승인 군사당국자회담 문제 등 핵심 안건은 북측의 원간선 일정에 밀려 진전을 보지 못해 앞으로 쌀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게 됐다.

▶합의내용 뒤가 담겼다=이번 회담을 위한 금강산 실무접촉 합의(8월 4일)와 비교해 새로운 내용은 금강산댐 공동조사와 대변도시법단의 서울·평양 교환 방문이다. 2000년 12월 한차례 열린 뒤 중단된 김일주추진위원회의 재개를 비롯한 나머지 현안들은 일정한 주제적으로 상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10개항의 합의안만 중 잡음이 구제적인 납짜질 바깥고, 나머지는 대체적인 시기를 맞는데 그쳤다.

특히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당국자간 대화는 '이번 회담 안'에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담겼다. 더욱

향후 남북 교류 일정

8월 26~29일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서울)
9월 4~6일	4차 적십자회담(금강산)
6~8일	남북 축구경기(서울)
10~12일	금강산관광 활성화 2차 당국회담(금강산)
14일경	5차 이산가족상봉(9월~10월 금강산)
29일	북인사(이산가족대회) 북측 대표단 참가
중순	남측 대변도시법단 9월 중순 평양방문 금강산에 공동조사 실무접촉
10월 19~22일	8차 장관급 회담(평양)
하순	북측 대변도시법단 10월 하순 서울방문 북측 경제시찰단 10월 하순 평양

더 일찍 결집추진위원회가 이 문제는 하이슈가 될 점이었다.

8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10월 중에 열기로 한 것은 장관급 당국회담을 다시 전개하고,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중간점검을 기회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동보도문 남북관계=은 26일 2차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의 개최를 시작으로 앞으로 두달에 걸친 남북간 각종 회담과 행사 시가 속가쁘게 진행되게 됐다. 서울 8기5 남북 공동행사단 위주 1백66명의 북한 대표단이 11월 평양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이

자연재민 신속한 배진, 경제시찰단·대변도시법단 남한 방문 등이 여러차례만 교류·협력에 불붙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이 남북관계의 순환권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재남북 위한 경제개회 조치를 뒷받침할 경제지원이 성사될 것을 기대했다.

▶구태 벗지 못한 회담운동=이달 초 금강산 실무접촉을 통해 의제들을 정한 마저 효율적인 회담운영이 기대됐지만 회담과같은 기대에 못 미쳤다.

12일 첫 회의는 시해교전 사태가 풀리려고 남측이 입장 수준의 사과요건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북측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두시간 지연됐다. 또 마지막 전체회의도 막판 접경구가 때문에 7시간 늦춰졌다. 전체회의보다는 비공개 막후 접촉에 의존해 부연선이 담겼다는 것도 문제다. 풍성하게 포장된 합의문안이 이미 25차례의 남북당국자 회담에서 재탕 삼탕식으로 다뤄졌던 사안이란 점에서 정부는 '합의보다 실상'이란 정부의 회담원칙이 무색해졌다.

이영준 기자 yjlee@joongang.co.kr

중앙일보

2002. 8.15(목)

장관급회담 이후 남북관계

남북 합의 주요 내용

- 경의추진위 2차회의 8월 26일 서울 개최
- 철도·도로인접 군사보장조치 군사당국자간 회담 이번 시일 개최
- 9월 중순 금강산댐 공동조사 실무접촉
- 추석계기 6차 이산가족 상봉
- 4차 적십자회담 9월 4일 금강산 개최
- 금강산관광 활성화 방안 9월 10일 개최
- 북인사(이산가족대회) 참가회담 등 협의
- 남북축구경기 성공적 진행 적극 협력
- 대변도시법단 서울·평양 교환방문
- 북측 경제시찰단 10월 하순 남측지역 방문
- 8차 장관급 회담 10월 19일 평양개최

軍事회담은 원칙합의에 그쳐

交戰 사과요청에 北 불쾌한 반응

이 북측 합의문안에는 북한 군부의 일방적 의식인 듯 "자기 측 군사당국에 권의관다"고만 돼 있어 실제 이행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추석 직전 구체적인 날짜에 의건이 담겼으나 준비문제 등을 감안해 공동보도문안에 못 박지는 못했다. 상봉단 규모와 상봉일정은 4차 이산가족 상봉 때의 관례를 따르기로 해 1백66명의 방문단이 금강산댐 사흘간 순차방문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회담이 막판 난항을 면치 못한 것은 경의선(京義線) 철도와 개성~판산 간 도로인접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 때문. 회담 관계자는 "경의선 복원을 위한 남북 구간 공사 착공날짜를 공동보도문에 밝히지 않기로 한 이상 논의할 군사실무접촉 일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제시했으나 북측이 경의선 문제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협의하자고 버티 상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일주추진위에서는 대북 복지원 문제와 함께 경의선 북측 구간 공사에 합의한 대입·지급·김복 등 자체적인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방제원과 경의선 전선을 사정선 안개하고 있어 20일부

금강산댐 공동조사 합의

南北장관급회담 경의선 연결공사 일정 못잡아

이산상봉 등 10개항 도출... 군사문제 이견 못잡혀

남북은 1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7차 장관급 회담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댐 공동 조사를 비롯한 10개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번 회담에 기대를 걸었던 경의선(幸義線)연결공사를 위한 군사 실무접촉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또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시과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양측은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2차 회의를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같은 경제 협력 문제를 협의한다.

양측은 또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남북이 동시에 병행시켜 각공회기로 하되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남북합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관계기사 3면>

남북한은 또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서급히 취하고 방방 군사 당국자가 이르면 시일 안에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측 보도문안에는 이 문제를 "각기 자기측 군사 당국에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표현해 양측이 견해 차이를 해소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김영성 북측 단장은 기자회견과 만나 "우리는 남북과 달리 국방위 원회가 내각에 속해 있지 않아 '건의'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답했다. 또 서해교전 문제는 "대남 전쟁문(7월 25일)으로 대응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양측은 추석을 계기로 5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키로 하고 이에 앞서 9월 4일부터 6일까지 4차 적십자

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운영 문제 등을 합의키로 했다.

북의 우리가 제기했던 임남단(금강산댐)의 공동 조사 문제는 관계 실무자 간 접촉을 다음달 중순 금강산에서 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 확산을 위한 육로관광·관광특구 지정 문제를 다음 당국간 회담은 다음달 16일부터 서울간 금강산에서 한다.

북한 경제시찰단의 서울 방문은 10월 하순으로 잡혔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경향신문

경의·동해선 동시착공

남북 경협위 26일 서울서...군사회담 조속 개최키로

장관급회담 '합의 10개항' 발표

'금강산댐 조사' 내달 실무접촉 北경제시찰단 10월하순 방문

남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동시 착공하되 구체적인 착공 시기는 26~2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 관련기사 3면

남북은 그러나 공동보도문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서급히 취하겠다고 합의. '군사보장 합의서' 서명·교환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개최일정은 잡지 못했다.

남북은 14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10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5차 이산가족상봉을 추석 이전에 금강산에서 진행하되 상봉단 규모와 접차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9월4~6일 금강

산에서 개최,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봉조(李奉朝) 남측 대변인은 군사 실무회담과 관련, "우선 경추위를 열어 철도·도로 착공일자를 정한 뒤 이에 따라 군사적 실무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해 타협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무력충돌 재발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논의를 위한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이르면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 경추위에서는 철도·도로 공사와

여 대북 쌀지원,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에 제기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이대변인은 밝혔다. 또 안변청년발전소 임남단(금강산댐) 공동조사를 위한 관계실무자 접촉이 9월 중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은 9월10~12일 각각 금강산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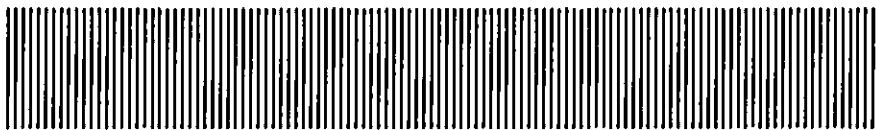
공동보도문에는 4.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10월19~21일 평양 개최 4.북측 경제시찰단 10월 하순 방문 4.남북 태권도시범단 9월 중순 및 10월 하순 상호방문 등도 포함됐다.

북측 대기관은 이날 저녁 8~15 민족통일대회 북측대표단이 타고온 고려항공을 이용, 경양으로 돌아갔다.

차세현·이용욱기자 csh@y.co.kr, ur2@com

남북 공동보도문 주요내용

- ▲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 8월 26~29일 서울개최
-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동시 착공
- ▲ 철도·도로 연결 위한 군사당국자간 회담 조속 개최
- ▲ 금강산댐 조사 위한 실무접촉 9월 중순 개최
- ▲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9월4~6일 금강산 개최
- ▲ 제2차 금강산 관광·당국회담 9월10~12일 금강산개최
- ▲ 북측 경제시찰단 10월 하순 남한방문
- ▲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10월19~22일 평양개최



군사회담 이룬 시일내 개최

남북장관급회담 10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경의선 연결 26~29일 다시 논의 10월말 北 경제시찰단 서울방문

남북은 이날 오후 7차 장관급 회담 마지막 회담의 불협화음 및 농해진 상호의 도로 연결 문제를 논의할 남북경제협력추진위 10개항 서울에서 개최하고, 추석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사대교섭 이후 교섭장에 빠졌던 남북대과 및 교류협력에 공해 말까지 다양한 제안을 통해 긴장완화로 보인다. 그러나 정점이 됐던 군사당국자회담과 남북경도 및 도로 연결 시기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해 김정일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대표단 10개항의 8~14일 공동보도문에서 경제협력추진위 2차 회의의 날 오는 26~29일 서울에서 개최해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개선장관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제 문제들에 대

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는 남북이 동시에 착공하기로 하진 않기로 했다. 남북은 추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을 이룬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강산댐 공동조사단 위촉 관계 실무자 접촉을 9월 중은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추석을 계기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상봉단 규모와 절차는 관공정을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4차 남북 직업자회담의 격을 한 단계 높여 다음달 4일부터 서울간 금강산에서 개최, 민회소 실

시와 운영 등 제도와 분개할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제2차 금강산관광 남북회담을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으며, 남북 육군대포함 9월 6일부터 8일까지 사당에서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9일 오후와 10일 이른 대관도 시범단을 교환하기로 했으며, 10일 말에는 북측 경제시찰단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제8차 장관급회담은 10월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 <관련기사 3면> procol.knmb.co.kr

한겨레

2002. 8.15(목)

경의·동해선 동시착공 군사보장 시급히 해결

장관급회담 10개항 합의

남북은 14일 김의선회담 이룬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남북이 동시에 병행해 착공하기로 하고, 공사 착공 일정은 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안 경의선 등의 철도·도로 연결에 앞서 요구되는 군사적 보장조치에 대해서는 '시급히' 취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5차 이산가족 상봉은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하며, 이를 위해 양측 전선자 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4차 직선자회담을 다음달 4~6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오후 서울 잠정공동선리요령에서 7차 장관급회담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룬 10개항의 합의 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회담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3면>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북측 금강산댐(남한)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다음달 중은 금강산에서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경추위 2차 회의날 26~29일 서울에서 열고, 군사 당국자 회담은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이룬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측 경제시찰단이 10월 하순에 남측을 방문하며, 남북 대관도 시범단이 다음달

- 경추위 이달 26~29일 서울서
- 군사당국자회담 이룬시일안 개최
- 금강산댐 조사 내달 실무접촉
- 이산상봉 추석 전후 금강산서
- 북 경제시찰단 10월하순 파견
- 8차 장관급회담 10월19일 평양서

중은 평양을, 북측 시범단이 10일 하순 서울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남북은 이러한 교류·협력사업들을 총괄하는 8차 장관급회담을 10월 19~22일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공동보도문은 김관추진위 2차 회의에서 논의할 시간으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문제 △개성공단 건설 문제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 △그 밖의 경제협력 등을 명시했다. 특히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는 "남북이 동시에 병행시켜 착공하기로 하되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날짜를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군사보장 합의서를 교환·발효시키기 위한 군사실무회담 개최시기를 명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예도 오전 9시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가 7시간이나 늦게 열리

는 등 진행을 늦었다. 정부 당국서는 "군사실무회담 개최 시기와 경의선 과중시계 문제가 백안까지 정점이었지만 시기는 못박지 못했다"며 "일정을 최장까지 늦은 것은 동해선의 경우 남북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등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이 문제에 대해 자기쪽 보도문에서 "각각 자기쪽 군사당국에 건의하기로 한다"고 표현했다.

4인중 대관도시범단 2명은 이산가족 민회소 단체·운영 등을 협의할 4차 직선자회담과 관련해 "北의 경제협력 북측 직선자회 중앙위원장이 수석대표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8~15 민회소대표와 북측 대표단을 싣고 온 고속열차에 탑승하고 북측으로 돌아왔다. <이제훈 권혁길 기자> nomad@hani.co.kr

남북 10개 합의사항

- △남북경제협력추진위 26~29일 서울 개최
- △군사당국자회담 조기 개최
- △금강산댐 공동조사 실무접촉 9월 중은 금강산 개최
- △추석 전후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 △금강산관광 활성화 당국회담 9월10~12일 금강산 개최
- △무산아시아게임 성공 위한 당국간 협력
- △남북축구경기 성공 위한 당국간 협력
- △대관도 시범단 서울·평양 교환방문
- △북측 경제시찰단 10월 하순 서울 방문
- △제8차 장관급회담 10월19~22일 평양 개최



군사회담 조속 개최

남북장관급회담, 추석 이산상봉등 10개항 합의

경추위 오는 26~29일 서울서 개최키로
8차 장관급회담 10월 19~22일 평양서

남북은 14일 오후 제7차 장관급 회담 마지막 날 전체회의를 열어 경의선 도로·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합의하기 위한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달 오는 26~29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는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또 ▲다음 달 4~6일 금강산에서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 및 추석 전 제 5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에서 9월 중순 금강산 댐 공동조사 실무접촉 개최 ▲9월 10~12일 제2차 금강산 관광 활성화달 위한 당국자 회담 개최 등에도 합의했다. 이어 10월 19~22일 평양에서 제8차 장관급회담을 열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남북은 이같은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경의선 개통을 위한 군사 실무회담과 신뢰구축 논의를 위한 군사당국자회담 재개 날짜는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하며, 양측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이른 시일내 개최키로 했다.

이봉조(李鳳朝) 남측 회담 대변인은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남북이 동시에 병행 착공키로 하고, 경추위에서 공사 일정

표를 잡기로 했다."면서 "대북 쌀 지원 문제도 논의하지 않았으나 경추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또 5차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규모와 절차는 4차 상봉 관례에 따르며 판문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면회소 설치와 운영 등 제

도화 문제를 집중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대관도 시범단 남북 교환방문에 합의, 남측이 9월 중순 평양을, 북측이 10월 하순 서울을 각각 방문키로 했다.

이봉조 대변인은 "새 합의보다는 기존 합의 사항 실천을 위한 일정을 구체화,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시간표를 짜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앞으로 예정된 북·미, 북·일 대화 진전에도 기여해 한반도 정세를 대화국면에 진입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성 북측 단장은 평양으로 떠나

기 전 성명에서 "양방은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또 부산 아시안게임과 백두산 평화·올림픽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금강산에서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조선 올림픽위원회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군사실무회담 개최 일정 확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6시간이나 미루는 등 합의도장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김수정 오석영기자 crystal@kdaily.com



14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마친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오른쪽) 통일부 장관과 북측 단장의 김영성 내각책임협사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쌀 30만t 對北지원 검토”

김동태 농림장관

김동태(金東泰) 농림부장관은 14일 북한에 장기차관 원식으로 지원을 검토중인 쌀 규모와 관련, "현재까지는 30만t, 210만t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재고미달 사유로 쓰지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통해 지원규모를 신속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어 올해 작황과 관련, "3600만t을 생산해 소비량보다 300만~350만t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승진기자 redtran@kdaily.com

南北경협위 26일 개최

장관급회담 10개항 합의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대북 식량지원 등등 논의할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가 이날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 관련기사 5면

또 200명 규모 제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추석(9월 21일) 전에 금강산에서 진행되며 금강산반 공동 조사를 위한 실무자 접촉이 9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개최된다.

남북한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항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

남북 장관급회담 10개 합의사항

1. 경협추진위 26-29일 개최
2. 경의선·동해선 복원 동시 착공
3. 군사당국자간 회담 조기 개최
4. 인변청년발견소 임남당 공동조사
5. 추석 다 금강산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
6. 9월 10-12일 제2차 금강산관광 활성화 회담
7.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백두산 성화 협력
8. 남북축구경기(9월 6-8일) 서울 개최 협력
9. 태권도시범단 교환
10. 북측 경제시찰단 10월 하순 방문
11. 10월 19-22일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으로 발표하고 제7차 장관급회담을 마무리했다.

남북 양측은 공동보도문에서 "안변청년발견소 임남당 공동조사를 위

한 관계 실무자 접촉을 9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하기로 했다"면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남북이 동시에 병행해 착공하되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 날짜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한 △8일 17일 금강산에서 양측 조직위원회간 아시아경기대회 문제 협의 △9월 4-6일 제4차 남북 직심자회담 개최 △9월 10-12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자 회담 개최 △9월 6-8일 남북친선축구대회 직극 지원 △태권도 시범단 교환(남측 시범단 9월 중순 평양 방문, 북측 시범단 10월 하순 서울 방문) △북측 경제시찰단 10월 방문 △10월 19-22일 제8차 장관급 회담 평양 개최 등에 합의했다. > 관련기사 philip@mk.co.kr

장관급회담 공동 보도문 北방송 일부 다르게 보도

북한방송들은 14일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가운데 일부를 남한에서 발표한 것과 다르게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남과 북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하며,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한다"고 발표된 공동보도문 2항을 "북과 남은 북남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하며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가지도록 각기 자 기속 군사당국에 권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조항은 경제교할단(경제시찰단), 상급회담(장관급회담)과 같이 남북간의 표기상 차이들 제외하면 같다. > 신창호기자

'경의선' 26일 경추추서 논의

군사회담 조속 개최... 구체일정은 확정못해

■南北 장관급회담 10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추석상봉 적십자회담 내달4일에 8차 장관급회담 10월19일 평양서

남북은 14일 경의선 연결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군사적 보장 조치들 시급히 취하고 이른 시일 안에 군사 당국자간 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은 경의선 연결사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군사실무회담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으나 대신 26일 열린 경협추진위 2차 회의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공사의 동시착공 입자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3면

남북은 경협추진위 2차 회의(26-29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2박3일간의 장관급 회담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10개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서해교전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관계를 일단 복원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끊어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 보장 조치를 시급히 취하기로 명시, 조만간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표시킬 것으로 보인다.

■ 장관급회담 합의 사항

1. 남북경협추진위 2차 회의 개최 (26일-29일 서울)
2. 군사당국자간 회담 이른 시일 내 개최
3. 금강산반 공동조사 실무자 접촉 (9월 중순 금강산)
4. 4차 남북직심자회담 개최 (9월 4-6일 금강산) 추석 전후 5차 이산가족 상봉
5. 금강산관광 활성화 2차 당국자 회담 개최 (9월 10-12일 금강산)
6.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실무협의 (9월 17일) 협력
7. 남북 축구 경기 (9월 6-8일 서울) 협력
8. 남북 태권도 시범단 평양 방문 (9월 중순) 북측 시범단 서울 방문 (10월 하순)
9. 북측 경제시찰단 남북 지역 방문 (10월 중순)
10. 제8차 장관급회담 개최 (10월 19-22일 평양)

정부 당국자는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둘러싼 남북 양측의 견해차가 커 경협추진위 2차 회의에서 경의선 공사 착공 및 인공 일시등을 다시 논의한다는 걸중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남북은 군사당국자간 회담(국방장관 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해 서해교전 재발방지 대책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측 공동발표문은 '군당국자간 회담 개최를 군 당국에 권의한다'고 명기하고 있어 조기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남북은 또 추석 전에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9월 4-6일 금강산에서 4차 직심자회담을 갖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함께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2차 당국자 회담(9월 10-12일) ▲임남당(금강산당)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9월 중순) ▲남측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방문(9월 중순) 및 북측 시범단의 서울 방문(10월 하순)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북측방문(10월 하순) 등에도 합의했다.

> 이영실기자 younglee@hk.co.kr

이동준기자 dilee@hk.co.kr

2면에 계속됩니다

1면 '남북회담'서 개숙

아울러 남북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북측 참가, 백두산 성화운반, 남북축구경기(9월 6-8일) 등의 선공적 진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8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10월 19-22일 평양에서 갖기로 했다. 남북 양측은 군사실무회담 개최시기를 둘러싼 이견으로 당초 예정보다 7시간 지연된 오후 4시에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8·15 민족통일행사 북측 참가단이 타고 온 북측 전세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쌀지원 빠진 이유뭬까

우리측 "논의안해"부인불구
실제론 다른 의제들과 빅딜
30만~50만톤 주기로 한듯

과 사실상 연계되어 있
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5차 장관급 회담에서 우
리측이 식량지원 문제가
논의된 사실을 감추었던
'전력'도 이런 관측을 부

추긴다.
관측통들은 양측이 이번에
대북 식량지원의 규모와 시기
를 확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경추위 2차 회의에서 확
정된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공
동보도문 작성에 참고했을 가
능성이 높다. 한 관측통은 "남
북이 쌀 지원을 예정대로 추진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군사실
무회담 개최 등의 실질적 성과
가 없어 대북지원을 둘러싼 남
측 여론은 좀처럼 호전되기 어
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섭기자

한국일보

2002. 8.15(목)

남북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
서 30만~50만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
의한 것으로 보이나 공동보도
문에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이
봉조(李鳳朝) 남측 회담대표는
"회담에서 쌀 지원 문제는 논의
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26
일 열린 경협추진위 2차회의에
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식량지원 문제가 논
의되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게
회담장 주변의 시각이다. 식량
지원 문제는 북측의 최대 관심
사인데다, 회담의 다른 의제들

朝鮮日報

2002. 8.15(목)

北대표단, 오전 한때 철수할듯 '시위'

“軍事회담 표현다른건
남북의 체제차이 탓”

12~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출발은 매
끄러웠으나 막판에 산고(產苦)를
겪었다. 우리 측이 서해 무력 도발
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
련하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당국자회담에 비중을 둔
반면, 북한측은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었다.

○...14일 새벽까지의 철야 협상
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했던 군사당국자회담은 양측이
오후 2시쯤 '빠른 시일내' 개최한

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회담 속도를
높였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쯤에는 북측
대표단 일부가 짐을 챙겨 떠날 준비
를 하고, 대표단 일부는 실제 짐을
호텔 현관 앞에 내려놓는 등 '시위'
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측의 완
강한 입장을 확인한 북측 대표단은
평양과 교신하면서 우리 측 입장과
타협하는 선에서 이번 회담을 종결
하려 한 것 같다고 회담 관계자들은
전했다.

○...김령성 북측 단장은 회담장
소인 서울 신라호텔을 떠나기에 앞
서 승용차에 올라 '추석을 계기로'
라고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5차 이
산가족 상봉의 구체적 시기를 묻자

"추석(9.21) 직전에 이뤄질 것"이
라고 말했다. 우리 측 회담 관계자
도 "북측이 추석 전에 한다는 것을
구두로 약속했다"고 부연.

김 단장은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
표현을 둘러싸고 남측 보도문은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
로 한다"고 규정한 반면, 북측 보
도문에는 "회담의 조기개최를 건
의한다"고 명시된 배경에 대해 남
북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
했다.

아울러 "(남측은 내각에 국방부
가 포함돼 있지만) 우리는 국방위
원회가 내각 밖에 있어 그렇게 표현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權景福기자 kkb@chosun.com

軍事 회담 시기 못정한 '未完의 합의'

經協·이산상봉 등 이벤트性 행사 일정은 확정
임진강 수해방지·금강산댐 조사추진 등 성과도

장관급 회담 결산

남·북한은 14일 열린 제7차 장관급 회담에서 그동안의 쟁점들을 타결지어 남북관계를 복원시켰다. 지난 5월 북한의 경제협력추진위 2차 회의 일방 연기정보 이후 3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이었던 서해 도발에 대해 북측은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불안정한 합의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심을 모은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남북은 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9.21) 전에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서신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등 제도적 해결 방안은 내달 4-6일 열리는 4차 적십자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3차례의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했던 항구적인 면회소 설치 논의가 이번에도 적십자회담으로 미뤄졌다는 점에서는 과연 북측이 이산가족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면회소 설치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려도 없지 않다. 공동보도문에 '추석을 계기로'라고 다소 모호한 표현을 넣은 것도 북측으로 하여금 이산상봉 연기의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희망했던 경제협력 분야는 대부분 일정을 확정지었다. 북한은 당장 오는 26~29일 서울에서 검토회를 열기로 해 30만~50만t의 쌀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7월부터 실시한 경제관리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

해 경제시찰단을 10월 하순 남측에 보내고, 이에 앞서 금강산관광 합성화를 위한 2차 당국회담을 9월 10-12일 열어 육로관광과 관광특구 지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른바 북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이벤트성 행사'가 다수 북측측의 희망대로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임진강의 수해 방지, 지난 4월부터 안전성에 의혹이 일었던 금강산댐(임남댐)의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한 모두에 이익이 되는 사업들도 상당 부분 합의됐다. 다만 경의선 철도·도로의 경우 검토회와 군사실무회담 모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돼 있어, 그러잖아도 군사회담에 소극적인 북한이 이 모두를 이번 합의대로 실천에 옮기겠느냐는 의문이 남기는 한다. 특히 경의선 연결이, 아직 구제안이 확정되지 않은 동해선과 맞물려 표현됨으로써 흑시나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이번 합의로 남북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의 남북관계 일정표를 확정할 셈이다. 그동안 북한이 '합의 따로 실천 따로'의 양상을 보여온 것이 이번에도 반복되느냐가 앞으로 1~2개월 내에 판가름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입기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엔야말로 북한이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權景禧기자 kkb@chosun.com

■ 향후 남북관계 일정

8월	17~20일	북한 선수단의 부산이산 게임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 (금강산)
	25~29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 (서울)
9월	4~6일	4차 적십자회담(금강산)
	6~8일	남북 축구경기 (서울 상암구장)
	10~12일	금강산관광 합성화 2차 당국 회담 (금강산)
	중순	금강산댐(임남댐) 공동 조사를 위한 실무접촉 (금강산)
	중순	남측 태권도시범단 평양 방문
10월	21일 (추석)	추석을 계기로 제5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19~22일	제8차 장관급회담 (평양)
	하순	북측 경제시찰단 남측지역 방문
	하순	북측 태권도시범단 서울 방문

'군사회담' 양측 발표문구 달라 논란

14일 남북이 추석 직전 이산가족 상봉과 이남방 경제협력추진위원회(김주위) 개최 등 일련의 협력 사업 이종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3개월 동안이나 막혀 있던 남북교류사업의 가능성을 다시 열었다.

그러나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대다수 경제사업과 직결되는 군사실무회담 개최 일지를 정하지 못해 회담 성과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당분간 유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군사실무회담의 황해=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비무장지대(DMZ)를 넘나드는 대다수 경제사업들이 북한 군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

회담장 주변에서는 북측이 쌀과 군사실무회담 날짜를 맞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이봉조(李鳳朝) 남측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는 함 지원 문제를 꺼내지 않았지만 김주위가 열리면 제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정보보도문답 작성하면서 군사실무회담과 관련해 우리측은 '개회하기로 한다', 북측은 '군부에 건의하기로 한다'고 서로 다른 문구를 사용,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김영성 북측당장은 회담장을 떠나기 직전 기자들에게 "북한은 남한과 달리 국방위원회가 내각에 속해 있지 않다.

南 "조속히 개최"-北 "軍부에 건의" 北, 쌀지원과 맞바꾸기 의도인듯 경의선 연결 연내완공 불투명해져

다는 점에서 군사실무회담 개최 시기는 이번 장관급회담의 최대 관건이었다.

회담 내내 우리측은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않고 길고양이 매달렸고, 북측은 "군부에 건의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다"며 이남방 김주위를 열어 남북이 정하지 않으면 주간에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양측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는 "시급히" 치하고,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비전사업안'에 개최하기로 다짐했지만 남초 우리가 북측이었던 일정 못박기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군사실무회담 개최 시기를 대폭 앞 지연을 감성 짓는 김주위 회담에서 정하기로 해

때문에 건의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라고 설명해간 했다. 그러나 북측이 이 문구를 '양해'로 군사실무회담에 비호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남측으로서는 문제를 삼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경의선 연내 연결 불 건너가나=경의선 공사 재개의 전제조건인 군사보장협에서 서명·교환을 다루는 군사실무회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기대했던 경의선 연결공사의 연내 완공은 어려워졌다.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무제한의 공사를 하더라도 경의선 철도(북측구간 12km) 연결에 넉 달은 걸린다는 게 정부측 예상인데 들어

10월까지의 남북관계 일정

시기	항목	주요 행사	장소
8월	17~20일	북한 선수단 및 동맹국 푸안대사아카데미회합기 실무접촉	평양시
	26~29일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울
	4~6일	4차 회담차별	평양시
	6~8일	남북 축구경기	서울 잠실구장
9월	10~12일	2차 금강산관광협정 체결	평양시
	출판	함남(남강산)에 공화포사 실무접촉	
	출판	남북 해군도시회담 발족	평양
	추석(21일)	추석전 5차 이산가족 상봉	평양시
	19~22일	8차 평壤회담	평양
10월	하순	북측 해군도시회담 발진	서울
	*	북측 경제사업단 발진	신림시

도 남은 기간이 넉 달이 채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연내 완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연내 확공 정도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측 대표단이 군사

분야에 대한 권한이 없어 군사실무회담 개최 일지가 정해지지 못했다"면서 "연내 경의선을 연결하려면 이번 회담에서 군사실무회담의 구체적인 일지를 못박았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www.esprkdonga.com

중앙일보

北 대표단에 軍인사 제외 애초부터 '非군사'에 초점

軍事접촉 일정 왜 못 정했다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 군부가 끊임없이 직방했다. 북측이 경의선 연결과 관련해 군사적 보장협 의서에 서명·교환을 위한 군사실무접촉 일정을 잡자는 우리 측 요구를 거부하고 '군사당국에 건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장관급 회담에 나온 북측 인사들은 자신들이 군사 문제를 논할 권한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완강

하게 버텼다. 결국 합의는 군사실무접촉을 확정하지 못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개최'라는 수준에 그쳤다.

우리 국방부는 북측의 이런 행태가 군사문제를 남북 장관급 회담과 별도로 진행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북한 대표단에는 북한군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실사 이번 회담에서 일정을 합의했다"라고 북한 군부가 거부하고 나설 경우 양측을 지키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북한 측의 대표단 구성에 대해

북측은 예로부터 군사실무회담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군사실무회담 일정을 합의하고, 그 회담을 통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협의를 서명·교환해 올해 안에 경의선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비해 북측은 쌀지원과 이산가족 상봉·남북 체육교류 등 비군사분야에만 북측의 주안점을 두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걸음이 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순순하게 내놓지 않을 것이란 게 우리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경의선 연결을 위해 비무장지대(DMZ)에서 공사를 하려면 공사를 책임진 남북한 일선 공병부대 사이에 화해인양을 개입하고, 남북당이 동시에 DMZ의 철조망을 걷는 상징적의에서도 상징적인 큰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

'철도·도로' 일정표 경추위 열쇠

■ 장관급회담 10개항 합의 의미

착공시기 조율때 장기사업 무게이동 적십자회담 수석대표 책임자급 격상

7차 장관급회담의 성과는 풍성하다.

그러나 그 성과는 현재로서는 잠정적이다. 회담의 산체로 가급 핵심 결정이었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현실화를 위한 일정표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시점을 확정하기 위한 경제협력추진위 2차 회의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이번 회담에 합의는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핵심 현안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합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남북이 동해선용 경의선과 동시에 병행해 착공하기로 한 대목이다. 경의선이 2000년 7월 1차 장관급회담 합의에 이대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반면 동해선은 지난 4월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반북 때 합의된 사항이다. 남북은 그동안 경의선을 우선 연결하고 동해선은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이번에도 두 노선의 '동시·병행 착공'이 제기된 것은 북쪽이 동해선 연결사업에 대한 남북의 '보장'을 받으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쪽 역시 이날 안 군사사회담 개최-군사보장 협의서 교환-발효-협의선 착공이라는 목표치와 관련해, 26~29일 서울에서 열린 김주위 2차 회의에서 착공시기를 확정하기로 함으로써 나름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남북관계 진교와 속도도는 김주위 2차 회의에 크게 연

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화해협력 노력은 활발한 합의에 머물거나 이벤트성 단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남북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현실화라는 결실을 이끌어낸다면, 남북관계는 앞으로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장기지속형 사업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다.

남북 대표단이 회담 기간 내내 '군사보장 협의서' 교환-발효를 위해 이날 안 군사사회담 개최와 다음달 김의선 공사 착공을 북쪽에 알뜰한 것도 바로 이런 판단에서다. 비무장지대를 오가는 철도·도로 연결이라는 장기지속형 사업의 현실화는 그 자체로 남북이 반북경제공동체와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달 4~6일 금강산에서 열린 4차 적십자회담의 수석대표를 양쪽 적십자사 책임자급으로 올리기로 한 것 외에 있는 합의내용이다. 회담 핵심 관계자는 "변화소 실지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제도화로 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시인촌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12일 밤 환영만찬 뒤 "북쪽이 다음 적십자회담에는 장래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남쪽은 금강산 이산상봉 정례회와 함께 '금강산 임시변호소' 설치 효과를 거두고, 장기적으로 김의선 연결지점(도리산의 부

근)에 삼십 변호소를 설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일단은 상봉 정례회 개최가 결정이 될 전망이다.

남쪽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금강산(남·남남) 공동조사에 북쪽이 응한 것도 북쪽에 비판적인 남쪽 보수세력의 문제 제기를 의인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미 기동한 바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와 차원에서 '남북 공유하진 공동이행'이라는 큰 틀로 접근하지 않고 별도의 '단발성 사업'으로 합의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재훈 기자 nomad@hank.co.kr

장관급회담 이후 남북관계 일정표

회담 및 교류	시기	장소
남북 군사사회담	8월14~17일	이명
8.15인민통일대회	8월17~20일	서울
이산가족기대회 남북교류포럼	8월26~29일	금강산
김의선추진위 2차회의 및 실무협의	9월 4~6일	서울
4차 남북적십자회담	9월7일	금강산
남북축구대회	9월 10~12일	금강산
금강산관광 활성화 2차 당국회담	추석(9월 21일) 개기	
5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	9월 중순	
금강산(남·남남) 공동조사 실무협	9월 중순, 10월 초순	평양-서울
태권도 시범단 상호 교환	9월29일~10월14일	부산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선수 참가	10월 19~22일	평양
8차 청문회회담	10월 초순	서울
북쪽 경제시찰단 남북 파견		



경의선 일정확정 → 군사회담 → 공사착수

■ 핵심현안 철도연결 어떻게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합의는 이달 26~29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김주위) 2차 회의가 빠르면 이르면 있다. 김주위 회의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남북 공유하진, 공동 이산, 대북 식량지원 등 남북관계의 굵직한 현안이 논의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핵심 현안인 비무장지대 안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도 김주위가 때문이다.

이봉조 장관급회담 대변인은 "철도 연결은 26~29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에서 시기를 최종 확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군사적 보장조치의 시점은 그에 따른 부차적인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작금 입지가 정해지면 당면한 그전에 군사 사회담이 완료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이다. 회담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시급화하는' 표현으로도 경의선 공사의 일정을 보장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경의선 구간 비무장지대 공사를 위해서 지난해 2월까지 다섯

차례 군사 사회담을 열어 철도·도로 연결 군사보장 협의서를 다검지었다. 남은 이것이 합의서로 교환·발효 시기는 없다고 이를 위해서는 6차 군사 사회담을 개최 시점이 문제기 돼 왔던 것이다.

공통보도문에서는 앞으로 김주위 회의 또는 그 이전에 남북이 '기술적인 문제'를 풀러 검토한다고 돼 있다. 남북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는 않았다. 남북이 지뢰 제거 장비 등을 비롯해 도로 철도 부설에 따른 토목 공사상 자재 등의 지원문

제가 이어 포함한다는 예기도 있다. 정부는 이미 경의선 공사를 위한 자체 지원 방안을 정했기 때문에 김주위 회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끝나 도로·철도 공사 일정이 확정되면 다음은 바로 군사 사회담을 열어 '군사보장 협의서'를 교환 발효시킨 뒤 비무장지대에서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지난 4월 임동원 특사 반북 때 개성철도국방위원장이 직접 제안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동해안 지선형에

서 비무장지대를 넘는 공사다. 이 한편 지역에 대한 개발이 따른다면 동해 북부의 비무장지대 안접지역은 단기간에 금강산 육로 관광과 한반도 동부 지역을 잇는 물류 교통의 속 구실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은 경의선 구간 비무장지대 이남 철도·도로 공사도 이미 완공하였으며, 군사분계선 2km 밖 비무장지대 남쪽 구간 공사는 철도 4~5개월, 도로 7개월 만에 끝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개인까지 12km인 경의선 북쪽 공사 구간도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면 철도는 4개월, 도로는 12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k.co.kr

주요 외신들 “화해절차 재개 의미”

영국의 BBC방송과 AP,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14일 남북장관 회담에서 남북이 군사회담 조속 개최 등 10개항에 합의한 데 대해 수 개월간의 긴장 끝에 화해절차가 재개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핵심사안인 군사회담 등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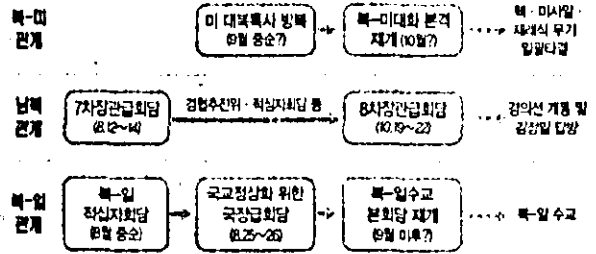
AP와 AFP는 서울발 긴급기사로 남북간의 합의소식을 타진하면서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검침추진위원회 개최 소식과 추축적전 5차 이상

가속 상경, 금강산 관광 당국간 회담, 북한 경제시찰단 한국 방문 등의 합의 사항을 상세히 전했다.

AP는 양측이 7시간의 진통 끝에 가장 민감한 문제인 군사 당국자간 회담 개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이로써 숨막히는 긴장이 감도는 비무장지대(DMZ)를 가로지르는 역사적인 철도 연결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AFP는 남북한 철도 연결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래 가장 주목받았던 진전이자

한반도 주변정세 전망



반세기를 넘긴 냉전의 국경을 뚫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BC와 로이터통신도 남북이 진통 끝에 양측을 한층 가깝게 할 만한 일련의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점을

평가했다. 그러나 BBC 등은 군사회담 등과 관련, 남쪽을 확약받고 싶어했던 서울의 바랍과 달리 세부일정을 구체화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국민영기자 havelun@donua.com

국민일보

2002. 8.15(목)

한겨레

2002. 8.15(목)

“서해교전 언급없어 유감” 한나라 “일부 합의 의미있는 진전” 민주당

정치권 엇갈린 반응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4일 남북장관 회담 합의안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성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유감증 표시한 반면 민주당은 환영했다.

한나라당은 김의선·동해선 동시 착공, 금강산내 관광도시 등 일부 성과는 인정하지만 최대 현안인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서정원 대표는 “서해사태 이후 국민이 요구했던 재발 방지, 관련자 처벌, 사과 등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 정권은 진지도 별로 없는 남북회담을 계속하지 말고 다음 정권에 남북문제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남경필 내무부 장관은 논평에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지만, 어떤 합의든 기쁘게 환영한 적은 없지 않았다”라고 반문하고 “사태도 받아 내며 일련성 언급없이 임버우리고 지나간 데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백 가지 약속보다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자거보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최근 남북관계가 계속 이완되어 가는 배경에는 남북간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 한희갑 대표와 박정호, 김경일 국방위원장의 담방정 등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당 안을 깨쳐주는 의도라는 것이다.

남북관계 대안특별위가 11일 오전 서울사내 회의실에서 송인태 전 통일부차관을 초

청,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관련해 북한외 의도와 전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한다. 특히 위원장인 유홍수 의원은 “남북관계가 급전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부산 아시안게임 및 남북 축구대회 등이 이를 가속화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며 “간담회에선 남북관계와 관련한 논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남북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 등을 거치면서 정몽준 의원의 지도도가 상승, 내선구도에도 변화가 생길지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산가족상봉, 직권자 회담, 금강산내 관광도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등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이 합의된 것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평양에서만 있었던 8·15 남북공동행사가 올해에는 서울에서 열리게 될 것을 뜻하는 진전이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김의선과 동해선 공사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낙연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여러 채널의 대화를 통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확산되고 상호의지를 보인다”면서 “8·15 남북공동행사가 남북간 민간교류를 더욱 촉진하게 되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대만 의원은 한나라당이 화남상파루를 관하한 것에 대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유승규 이기는 진전이 남북화해협력까지 방해하고 있는 인성이 대단히 혼란스럽다”고 비난했다.

남도영 조수집기자 dynam@kmb.co.kr

“군사회담 일정합의 실패 불구 대화·교류 숨가쁘게 전개될 것”

■ 남북장관회담 외신반응

〈에이피통신〉 〈비비시방송〉 등 주요 외신들은 14일 남북한이 서울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했으나 군사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점 보도했다.

영국 〈비비시방송〉은 “이번 회담은 최근 북쪽의 호의적인 태도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기회라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했다”며 “남북은 두 쪽의 관계를 좀더 가깝게 해줄 때까지 행사 개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에이피통신〉은 “두 쪽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를 이끌어 냈지만 남쪽이 가장 버려진 군사 당국자 회담

일정을 합의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남쪽은 군사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북쪽의 상반은 군사회담을 ‘권고한다’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관측자들의 말을 따 “북쪽 회담 대표가 군사문제에 화답을 줄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북쪽이 군사회담 일정을 못박는 문제집 성공적으로 피해갔다”는 인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요도통신〉은 “가장 중요한 남북간 사업의 하나인 철도 연결사업의 끝모를 봤다”고 논평하면서 앞으로 남북 대화와 교류가 숨가쁘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신종합

月初 실무접촉 보도문이 '軍事회담' 진통의 씨앗

“일정 합의” “당국에 건의” 당시 南北, 다른내용 발표

14일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둘러싼 남북 장관급회담 진통은 2일부터 4일까지 평壤산에서 진행했던 7차 장관급회담 준비 실무대표급회담에서 예고됐었다.

7차 장관급회담 의제와 목표 등 범기안 당시 남북 양측의 공동보도문은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 재개문제를 널리 표현했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북측 공동보도문은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할 데 대해 각기 자기측 군사당국에 건의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내용이었고, 반면 남측 공동보도문은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를 협의한다"고 되어 있었다.

북측 보도문대로라면 7차 장관급회담은 군사실무회담 개최할 군 당국에 건의할지 여부를 확정하는 회담이며, 남측 보도문대로라면 이번엔 군사실무회담 개최 일정을 확정해야만 한다. 결국 북측은 자신들 보도문대로 '건의' 이상의 합의는 어렵

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교착상태를 빚고 있다. 협상결과를 자기식으로 발표하는 그간의 남북 회담의 구태(舊態)가 또 지루한 임겨부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남북 회담의 구태(舊態)인 양상은 이번 장관급회담 내내 반복됐다. 남북 수석대표들이 어느 때보다 '합의사과의 실현'을 강조, 회담장은 활의 선전(宣傳)을 이루어지만 비효율적인 회담 진행은 여전했다. 전체 대표들이 회담장에서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전체회의는 2433일간 고작 2시간 20분 진행했고, 대신 양측 대표 1~2명씩이 심야에 회담장이 아닌 숙소(호텔)방에서 만나 협상의 세부를 짚어내었다.

또한 회담 종료 직전에야 카드를 꺼내 협상을 시작하는 모습은 이번에도 재연돼 오전 9시 발표해야 할 공동보도문은 이날 오후 4시경에 공개됐다. 2, 6차 장관급회담 일정 연착, 3차 장관급회담 후 북측 대표단 출발 지연 등 난색을 초래했던 협상현태에 대해 남북은 전혀 변성과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ik.co.kr

쌀지원 빠진 이유뭬까

우리측 '논의안해' 부안불구 실제론 다른 의제들과 빅딜 30만~50만톤 추가로 한듯

남북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30만~50만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보도문에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이봉조(李鳳朝) 남측 회담대표는 '회담에서 잘 알려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26일 열린 김영춘총리와 2차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식량지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게 회담장 주변의 시각이다. 식량지원 문제는 북측의 최대 관심사인데다, 회담의 다른 의제들

과 사실상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5차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측이 식량지원 문제가 논의된 사실을 강추했던 '전력'도 이번 관측을 부추긴다.

관측자들은 양측이 이번에 대북 식량지원의 규모와 시기 등 확정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경주위 2차 회의에서 확정 시점을 미리 정관하고 공동보도문 작성에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 관측원은 "남북이 잘 지낸 예전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번엔 군사실무회담 개최 중의 실질적 성과가 없어 대북지원을 둘러싼 남북 여론은 좀처럼 호전되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섭기자

회의 7시간 늦춰져 일정연기설 돌기도 회담 마지막날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인 14일 남북대표단은 예정보다 7시간 늦은 오후 4시10분이 돼서야 회의를 열고 10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첫째, 둘째, 셋째는 남북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난산이었다.

오전부터 통일부 김홍재(金弘宰) 대변인은 "언제 발표될지 모르겠다. 계속 협의중이고 빨리 결실을 맺겠다"고 했지만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아 회담장 주변에 긴장감이 흘렀다. 남측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어젯밤부터 밤샘 진술을 계속했지만 회담 핵심인 군사실무회담 개최시기에 대해 북측이 '바다'로 일관해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들은 "(북측이) 조금만 양보하면 됐는데...라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오후 2시반경, 회의가 오랜 시간 지연되자 호남측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때 축하행사할 위해 내치었던 한복 차림의 이치원팀을 출수시켰다. 호남 관계자는 "회의가 언제 시작될지 몰라 모든 직원들이 비상 대기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삼이 더 연기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취재진과 호남 관계자들은 바빠 긴장했다.

오후 3시50분경 "감사 후 전체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곧이어 윤진식(尹眞植) 재정경제부 차관이 회담장에 나타났다. 얼마 뒤 양측 수석대표가 공동보도문을 진작 발표했다.

발표 직후 김영성(金永成) 북측 단장은 "많은 선물을 받고 간다"며 만족감을 표시했으나 남측대표인 정세진(丁世鎭) 통일부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긴동 끝에 발표된 공동보도문에 남측에서 가장 신경을 기울였던 군사회담 일정을 명기하지 못하고 "빠른 시일"이라고만 언급한 데 대해 회담장 주변에서는 "북한이 군부와 내부 조율을 거치지 않고 나왔을 것이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왔다.

윤상호기자 ysh105@donga.com

'경의선 합의'싸고 北 막판까지 완강

• 군사회담 일정 왜 못잡았나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연대 관광 및 철도 차량 군사실무회담 일정을 놓고 남북간에 이견을 좁히는 데 끝내 실패했다. 경의선이 남북 화해·협력 작업에 추구하는 인차·물적 교류의 경제협력, 군사적 긴박한회담은 3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한 평가도 '미흡' 쪽으로 머물게 하는 결과였다.

북측은 회담 전만 해도 먼저 장관급회담 의제로 철도·도로 연결문제만 좁는 등 경의선 연결공사에 적극성을 보였지만 점차 회담이 시작되자 남북의 접근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 북측이 경의선 연결공사를 주시하는 배경에 대해 관심이 높고 있다.

3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수석 및 실무대표 회의를 통해 북측이 밝힌 수용불가 이유는 군부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세진(丁世鎭) 남측 수석대표가 "그동안 5차례나 경의선 관련 협의를 했는데 이뤄진 게 뭐냐"며 군사실무회담 일정 확정을 강하게 요구할 때 북측 김영성 단장은 "(경의선은) 군부 소관이다. 향후 상부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공동보도문에서 그나마 오는 26~28일 경주위에서 착공시기만 정한 뒤에 맞춰 군사실무

회담을 잡자고 협의한 것만 해도 북측 대표단의 양보라는 게 남측 회담 관계자의 평가다. 북한 관계에 있어 북한 군부의 영향력이 이처럼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또 있다. 13일 2차 회의에서 김단장은 남측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북측의 좀더 명시적인 사과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그런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남북장관급회담 합의 일정표

일시	장소
부안(이치원) 실무회담	8-17~18 평壤산
2차 전체회의(수석대표회담)	8-26~28 서울
4차 차담(이치원)	8-4~6 평壤산
남북총구회기	8-6~8 평壤산
금강산관광 2차회담	9-10~12 평壤산
이산가족회담	수석(이치원) 평壤산
관직(이) 공보(이) 실무(이)	8월말 평壤산
남북역사대회	8월말 평壤산
대관도(이) (남) (북)	8월말 평壤
대관도(이) (북) (남)	10월말 서울
1차 회담(이) (남) (북)	8-26~10-14 부산
5차 장관급회담	10-18~22 평壤
합계(이) (남) (북)	10월말 평壤산
군사실무회담(이) (남) (북)	미정
군사실무회담(이) (남) (북)	미정

례적으로 강한 반발을 제기했다. 경의선 연결이 갖고 있는 군사적 함의도 북한 군부의 감정을 늦추는 배경이 될 수 있다. 남북간에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북측의 경우 전방방위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전방해보시감'을 거의 '제로(0)'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남북정세를 감안하면 남측 군대의 북침이 이뤄질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북한 군부로서는 치명적 심경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체제생존의 최후순 조건을 군사력으로 꼽고, 군사 대치를 체제안정조건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경의선 연결은 북한 정권, 특히 김영성(金永成) 국방위원장 차원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번 회담에 드러난 북측 대표단의 태도와 볼 때 경의선 연결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북한 군부 내의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측이 경의선 연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 등 서방세계가 '실질적 북한 변화의 증거'를 경의선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마냥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해 미국과 대화해야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점도 경의선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차세현기자 csh@kyunghyang.com

남북장관급회담

남북한이 14일 '실천' 일정이 담겨진 10개항을 합의함에 따라 서해교전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 대화·교류 및 한반도 정세가 일단 안정과 대화 국면으로 반전될 전망이다. 10월 말까지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연결 사업, 경제 교류 협력 등 남북간 작업이 순기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의선 연결 사업의 전제조건

이 될 수 있는 군사실무회담 재개 일자를 확정짓지 못해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예정된 북·미, 북·일 대화도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의 진행속도를 보면서 완급을 조절할 것 같다. 북한의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실천 여부는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손잡은 南北 "이젠 실천"

10개항 합의의 안목

●경의선 연결이 실현의 최우선 과제 우리측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력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은 경의선 연결을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보장합의서' 서명 교환을 위한 회담의 날짜를 확정짓지 못했다. 오는 26~29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남북한이 김의선과 홍혜선 참모연락공사를 동시에 확정하고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북한은 군사적 검증문제를 완전히 분리해 대처했다. 향후 실천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의성을 자아내고 있는 대목이다.

북측은 공동보도문 2장에서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군사당국에 전의한다."고 했다. 우리측은 같은 항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한다."고 다르게 밝기했다. 향후 다른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김영성 북측 단장은 이에 대해 "내각과 국방위원회가 별도로 있어 그 같이 표현했다."

며 다른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남여있는 경의선 철도·도로는 군사분계선-

개성간 각각 12km구간, 동해선 철도는 남측 강릉~군사분계선 127km, 북측 군사분계선~강원 고성군 고성읍 온성리 18km부인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측과 향후 전망 일정을 검토위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이 일정에 맞춰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효시킨다는 설명이다. 검토위에선 대략 30만~50만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이 함께 논의되기 때문에 북측이 쉽게 협의를 저버리지 않는 걸 속여 간여 있다는 평가도 있다. 서해교전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신뢰구축 조치를 위한 군사고위 당국자간 회담에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응징지 여부도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보따리는 금강산관광 공동조사 북한이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예사관세의 플러스 알파로 내놓은 것은 남강산관광 공동조사 문제. 지난 5월 백근애(朴根愛) 비례인민 대표가 방북했을 때 김장일(金正日) 위원장이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금강산 땅에 군부의 자존감이라는 관에서 쉽게 합의의대에 불거 임의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주는 "우리 국민의 우리나라인 부분에 응답하는 의미도 있다."면서 "군



다시 봅시다 14일 남북 장관급회담을 마친 북측 김경성(오른쪽) 단장이 남측 정세현 수석대표와 포옹을 받으며 회담장인 서울 신라호텔을 떠나고 있다. ●이종원기자 jorwon@kcdaily.com

經推委·경제시찰단 파견 일정 확정 군사실무회담 날짜 못정해 '아쉬움'

부의 동여가 필요한 일로 남북간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도회를 마련 남북은 직할지 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직할지 회담에 합의. 상봉 편의소와 사산양육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만외소 설치 등에 완전 합의하지 못해 아쉬움도 있지만, 5차 상봉 추석 전 일정에 합의하고, 직할지 회담을 통해 재도회 등을 만들었다는 것은 나름의 성과로 꼽힌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향후 전망. 북한이 10월 하순 경제시찰단을 서울에 파견키로 한 것은 최근 심시하고 있는 경제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북측은 향후 남북 합의사항 실천과 내미 관계 등에 있어 비교적 진지한 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고유관(南有南) 동국대 교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대외였다."면서 "군사실무회담 날짜가 확정되지 못해 이상지만 곧바로 검토위에서 이 문제도 다루기로 돼 있다는 점은 북측이 진지한 입장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kcdaily.com

이종조 남북대변인 문답

군사회담 표현 다른건 양측이 서로 양해한것



제2차 장관급회담 남북 대변인 이종조(李鍾朝) 통일장석삼장은 14일 오후 회담을 마친 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일지'를 분명히 강조했다.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효시키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개최 일자는 명시돼 있는 반면 군사실무회담에는 날짜가 없다는 점이 양측이 양해한 것인 것 같다.

김현위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하기로 한 것은 '4·5항'의 사항이다. 이에 따라 경협위원회를 열어 철도·도로 연결공사 일정에 맞춘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효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북측의 세사의 확산과 북측 대표단의 의견을 고려해 서 합의했다.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 입장은. 무력충돌 재발방지를 위해 군사당국자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북측이 강조해 이점 합의하기 위한 회담에 합의했다. 이 문제는 정상급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남북이 군사실무회담에 대해 '재개한다.', '군부에 전의한다.'는 식으로 다른데 그 이유는.

군사당국자회담이 개최되면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신뢰구축 등에 대한 진일보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 표현이 다른 것은 서로 양해해서 사용한 표현이다. 우리는 군사당국자회담을 국방장관회담으로 보고 있다. ●양측 보도문의 구체적 차이는.

남측은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한다.'로, 북측은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전의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

●군사적 보장조치의 군사당국자회담이 무엇인가.

군사적 보장조치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된 먼저 해결해야 하는 조치다. 군사당국자회담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조치에 합의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오석영기자 oabai@kcdaily.com

남북장관급회담 합의 일정보

- 8.16~17 1차 회담 8·15 민족통일대회
- 8.17~19 2차 회담 부산아시아게임 실무협약 백두산 철화코만 등 논의
- 8.20~29 3차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민간급 수방사업 논의
- 8.4~6 4차 회담지회담 만외소 설치 운영 논의
- 8.8~8 5차 회담지회 남북 육구경기
- 8.10~12 6차 회담 금강산관광 2차 회담 금강산관광 통행비 논의
- 8.14 7차 회담 이산가족 상봉
- 8월 15일 8차 회담 금강산관광 공동조사 실무협약
- 8월 15일 9차 회담 남북여성대회
- 8월 15일 10차 회담 대연도시법단(남) 방북 실무협의 필요
- 8월 15일 11차 회담 대연도시법단(북) 방남 실무협의 필요
- 8.27~10.14 12차 회담 14회 부산아시아게임 북한 참가
- 8.10~22 13차 회담 8차 장관급 회담
- 8월 15일 14차 회담 1차 경제시찰단 방남
- 8월 15일 15차 회담 군사보장합의서 교환 군사당국자회담 북한 서명내 개최

北 '벼랑끝 전술' 한때 결렬 위기도

장관급회담 이모저모

9개월만에 재개된 남북장관급회담이 막판까지 진전을 거듭한 가장 큰 이유는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여부와 시기 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이 합어맞게 맞았기 때문이었다. 북측 입장에서는 군사문제는 역시 '뜨거운 감자'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됐다.

'뜨거운 감자' 또 입증

남측은 이달 안으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를 못박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향에) 들어가 남측의 뜻을 건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南 "날짜잡자"- 北 "군부건의" 맞서 오후 평양훈령 받은후 타협점찾아

북한 군부에 대한 '건의' 형식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지만 남측으로부터 보다 많은 그것도 양질의 식량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전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측은 줄다리기를 거듭하다 군사당국자회담 날짜를 확정짓지 않고 '빠른 시일안에 개최한다'는 선에서 갈등, 극적으로 공동보도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측 공동보도문에는 '각기 자기측 군사당국에 건의하기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논란의 황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北 일부대표 집 책거

이에 대해 김영성 북측 단장은 공방으로 출발하기 전에 '국방위원회가 내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건의하겠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북측은 14일 오전 9시에 예정된 전체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11시쯤에는 대표 일부가 김용봉 회담 장소인 신리호텔 현관 앞에 내려놓는 등 북측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 장관급회담은 한때 결렬 위기까지 갔

었다. 군사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식량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남측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북측대표단이 평양으로부터 몇 차례의 훈령을 받은 후 타협점을 찾았다.

실제 군사당국자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경의선-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개발 및 금강산 관광 활성화 ▲임진강 수방사업 등 남북이 합의한 대부분의 기업사업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문제도 풀 수 없게 된다.

군사분계선(MDL)을 경계로 남북 4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DMZ)가 인적-물적 이동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양측은 군사당국자회담이 개최되면 육사 경의선과 동해안 철도 연결 등을 위한 '군사보

장환의서'에 서명, 발표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군사직통전화 설치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단계적 군축 등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문제들 논의할 장(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구차이에서 비롯"

회담 관계자는 "군사회담을 둘러싼 남북한 견해 차이는 금강산 실무대표 때 합의한 공동보도문의 문구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북 보도문의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 재개'와 관련, 남측은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된 문제로 인식한 반면 북측은 '자기측 군사당국에 건의하는 문제'로 풀이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마지막 브리핑에서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이봉조(李鳳朝) 남측 대변인은 "우리의 제재가 다른 북측의 특수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서 "북측이 표현은 '건의'로 했지만 내용과 해석은 우리측과 같다"고 굳센한 해명을 했다.

/조정진기자 joo@sgt.co.kr

■ 남북 공동보도문 전문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양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4·5공동보도문과 그 밖의 상호 관심사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2차회의를 8월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여기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문제, 개성공단 건설문제,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와 그밖의 경제협력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다.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남북이 동시에 병행시켜 착공하기로 하되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날짜를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강조치를 시급히 취하며,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안변형탄발진소 임남당 공동조사를 위한 관계 실무자들의 접촉을 9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상봉단의 규모와 상봉절차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의 관계에 따르면 구체적인 문제는 관문점을 통해 협의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속지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직속지체회담을 9월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며, 이대 면회소 설치·운영문제 등을 협의한다.

5.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을 9월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북측의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백두산 상화호만 등 제반 실무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8월 17일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조선올림픽위원회간의 협력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7. 남과 북은 남북축구경기가 9월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추진하기로 하며 남북시범단이 9월 중순에 평양을, 북측 시범단이 10월 하순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고 관계 단체들간의 실무적 협의와 주선하기로 한다.

9. 북측 경제시찰단이 10월 하순에 남측 지역을 방문한다.

10.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0월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北 군사회담 훈령 안와 7시간 지연

■ 이모저모

7차 남북장관급회담 마지막날인 14일 발표된 공동보도문은 군사당국자회담 일정 등 일부 현안들 놓고 남북의 의견이 엇갈려 오전에 예정된 3차 전체회의가 7시간 지연된 뒤 오후 4시에서야 가까스로 회의장 속개한 뒤 확정됐다.

●마지막 회의는 전날 오후부터 조박 2시간 동안 실무접촉, 미후접촉, 수석대표접촉 등을 거듭하며 줄다리기를 계속했지만 '평양'으로부터 군사회담과 관련된 미관 훈령이 오지 않아 계속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 동안 양측은 실무접촉도 갖지 못한 채 손을 놓고 '평양 소식'만 기다려야 했다.

●실제로 어렵게 발표된 공동보도문에서는 관심이 집중됐던 군사회담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빠른 시일'이라고만 쓰여지지 회담장 주변에서는 "군사회담과 관련, 북한이 내부 조율도 거치지 않고 온 것 아니냐"면서 "도대체 '실문'은 뭐였냐"고 고이 빼겠다는 반응도 보였다.

그러나 북측이 별,비도 제공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정서도 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전해지자 "남측 양측 모두 건반의 심공과 집반의 이우공을 남김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남북 양측 대표단들의 표정은 미세하게 엇갈렸다. 북측 김영성 단장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회의장을 나오면서 "내가 많은 신빙을 놓고 갑니다."라면서 나름대로 만족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반면 남측 정세현 수석대표는 회의장 마친 뒤 객심으로 올라가면서 북측 참가인 표정만 지으며 억지로 웃으려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아 회담 성과에 별 만족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영성 북측 단장은 출발에 앞서 인민국제공항에서 "경제연 장관은 좋은 상대가 되겠다. 6·15공동선언의 이점을 잡지 못한 채 '빠른 시일'이라고만 쓰여지지 회담장 주변에서는 "군사회담과 관련, 북한이 내부 조율도 거치지 않고 온 것 아니냐"면서 "도대체 '실문'은 뭐였냐"고 고이 빼겠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진모 오석경기자 joo@sda.com

軍事대화 제자리 '절반의 성공'

• 남북 장관급회담 막판진통 안팎

‘일정 못박자’-‘추후논의’ 입장차 뚜렷
공동보도문 내용놓고 끝까지 신경전

남북은 14일 군사합동회담 의제 하나만을 놓고 하루종일 씨름을 벌였다. 공동보도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집어넣으려는 남측과 추후 논의의 주장을 편 북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결국 오후 4시 남측은 진제회의를 열어 북측 입장을 남측이 수용하는 선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군사합동회담 입장을 잡지 못한 탓인지 남측 대표단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밤샘 실무접촉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남측은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연기하고 마지막 실무접촉에 돌입했다.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은 “회의가 오전에 열릴 지 오후에 열릴 지 알 수 없다”고 밝혀 함로(險路)를 예고했다. 김대변인은 “자주 합의가 중단된 채 남북 대표단이 따로 만나 속의하고 있다”고 말해 별다른 진전이 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북측 대표들은 이날 하루

만도 수차례 평양으로부터 훈련이 적힌 메모를 전달받는 등 북측의 ‘겉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오후 4시가 돼서야 3차 전체회의 개최소식이 전해졌다. 회담장에 입장하는 양측 수석대표의 표정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합의 방향을 암시하듯 정세현(丁世炫) 남측 수석대표는 상기돼 있었다. 반면 북측 김영성 단장은 예의 여유 있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김단장은 회담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밝은 표정을 지으며 “네, 성과 있습니다. 곧 알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남북군사회담을 둘러싼 양측간의 신경전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타났다. 정 수석대표가 남북군사회담과 관련된 공동보도문 2항을 읽어갈 무렵 김단장은 “두번째 조항을 다시 봅시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공동보도문 내용

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무접촉을 벌였던 북측 최상의 대표는 깜짝 놀라 “이것이 우리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라고 언급, 발표는 계속 됐다. 김단장은 또 회담결과에 만족한 듯 남측에 이례적으로 공동보도문 발표를 공개하지고 제의했으나 정 수석대표는 “신뢰에 따라 하자”며 비공개할 고집했다.

회담결과에 대한 남북한의 반응은 공동보도문 발표이후에도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김단장은 배웅나온 윤진식(尹鎭植) 재경부 차관에게 “정세현 장관은 좋은 대화상대입니다. 중도하차하지 않도록 잘 하라고 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TV를 보니 이봉조 선생 기자회견 잘 하더라”고 말했고 옆에 있던 최상의 대표는 “앞으로 잠깐까지 갈 것이다”라는 덕담을 하기도 했다.

반면 남측은 군사합동회담 입장을 잡지 못한 부분과 서해교전사태에 대한 북측의 입장표명이 없었던 것과 관련,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명하느라 곤혹스러웠다. 이봉조 남측 대변인은 “북측의 체제 특성과 북측 대표단의 의견을 고려해 타협했다”고 말했다.

차세현·이용욱기자
csk@k.yuhyang.com

국민일보

“北에 쌀 30만톤이상 지원가능”

김동태 농림, 국내 재고량 기준초과... 北요청땀 검토

구제역 52일만에 완전종식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14일 “북한이 요청할 경우 쌀을 남초 계획된 30만(210만십) 이상 지원해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로서는 대북 지원 쌀의 규모를 지난해 결정된 30만t으로 정할 계획”이라면서도 “하지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한이 요청할 경우 통일부 등과 협의, 더 많은 쌀을 지원해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10월말 재고량이 1318만

t으로 예상되고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 재고량이 650만t이기 때문에 재고에 여유가 있다”면서 “다만 최근의 수해와 지온 현상으로 윤작량이 예상보다 풍작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고려하면서 북한 쌀 지원 규모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대북 지원이 화정평 경우 북한에 보낸 쌀은 1999년과 2000년 신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올해 작황이 예상대로 이루어질 경우 390만~668만t(55만~95만t) 가량 여유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장관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23일까지 경기 안성시 등 4개 시·군에서 16건이 발생했던 유휴 구제역이 최초 발생 52일 만에 완전 종식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김장관은 이 밖에 “지난해 3만ha의 농경지가 줄어들어 97년 이전 수준이 됐다”면서 “휴경보상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갈 산전을 추진, 2001년 무부과이라운드(UR) 재입상 때 쌀 관세 화합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세욱기자 swkoh@kmb.co.kr

짜다만 시간표 '미완의 합의'

남북인이 전통 끝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
도 포함한 각종 남북회담 계획, 이산가족
상봉 등 10개항에 합의한 것은 그동안 결핵
된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는 계기가 마련했
다는 의미가 있다. 기업계는 6·24 시해교전
사태로 교착된 남북관계에 전기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것 같다.

우라늄이 가장 관심을 높였던 것은 남북관
협도 및 도로 연결 문제였다. 양측은 이남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하기로
했으며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 도로 연결
공사를 남북이 동시에 착공기로 의견을 모
았다. 이 문제는 오는 26일부터 서울에서
일리는 남북합동추진위 2차회의에서 집중
논의된다. 김수위에서 군사 시작 날짜가 확
정되면 양측은 군사신무회담을 열어 이 공
사를 위한 군사적 이행보장 협의사항 발표
하는 조치를 취하는 수준을 밟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김수위에서 양측이 인권권선
일정을 잡는데 실패하면 또다시 도로 및 철
도 연결 문제가 비중에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다.

김수위에서는 개성공단 건설, 평지일 등
개발 방안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은 북한은 경제개발을 위해 외국 공
력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뿐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 경제개혁 조치할 필요성까지 위해
서는 김수위를 통한 우리측 협조가 절실히
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서는 구
선 우리측의 교육지원금 증가가 이뤄져야
하고 북측의 경제지구 지정도 있어야 한다.
발전할 문제는 30만여 자관 형식으로 우리
측이 북에 지원하기로 돼 있다. 북측은 김수
위에서 발전관리를 늘리겠다고 제안할 가
능성이 크다.

양측이 '즉시 착수'와 '곧바로'로 진행하
내 담았던 금강산 입산협 공동조사에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북한 군부는 이것이 군
사요충지이고, 남 공동조사를 위해서는 이
지역을 남북이 협력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반해 우리측은
금강산법 통과로 인한 남북지역 수해준 막

기 위해 공동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
사였다. 양측은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협
남북 9일 중순으로 확정해 공동조사의 지
역과 방식, 조사인원 구성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1차 직상지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재
도화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매년 추석 전후의 산신유 두 번의
이산상봉을 정례화하는 집과 상봉변화소
상치별 요구할 방침인 반면 북한은 직상지회
담을 통해 그때그때 결정하자고 상봉 정례화

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남북지회
담에서는 동해안 입시도로 연결 문제가 중
심 의제다. 오는 10일 남한을 방문하는 북
측 경제사절단은 남북의 경제개발 모범을 갖
을 둘러보며 자신들의 경제개발 모범을 갖
으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아사안개입
북한 선수단 및 통일당 참가, 남북 국구내
외, 태권도 시범단 교류 등 체육행사와 관련
한 구체적 문제들은 각급 실무협상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번 제8차 장관급회담

**금강산담 공동조사 합의 큰 의미
'교전'이후 남북관계 복원도 성과
경의선·이산상봉 향후 낙관못해**

인자를 포함한 것
은 장관급회담이
이같은 재반 의제
의 실천 과업을 감
감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감
동정국이기 때문
이다. 신창호기자
procol@kmb.co.kr

국민일보

2002. 8.15(목)

경의선 착공·군사회담 일정 못잡아

아쉬움 남는 '발표문'

시해교전 사건 이후 북측 제대로 재개된
이번 회담은 지지 않은 기대를 모았으나 경
의선 공사 착공 시기와 군사남국회담 회담
날짜 등 주요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아쉬움
을 남겼다.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구
체적 일정을 확보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
이 미흡에 그칠 재차 다시 북측의 실천 의지에
기대할 게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현재 경의선 완공을 위해 늦어
도 다음달 초 공사를 재개하자고 북측에 제
사했다. 그러나 남북 공동보도문에는 경의
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남북이
동시에 시작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기
중적 문제 등을 고려해 날짜를 최종 확정하
고 한다"고 다소 유보적 문구를 넣는 데 그
쳤다. 상황이 따라 착공 시기와 완공 시가
가 유동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또다시 '北의 의지'에 기대야 하는 상황
北 주장 경추위는 26-29일 명시 대조적

남북은 또 군사남국회담 일정에 대해
"이런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한다"는 신의만
합의했을 뿐 아니라 이 회담이 시해교전 등
남북간 긴장 완화는 다루는 회담이라는 점
을 적시하지 못했다. 경의선 연결을 위한
전제가 되는 군사적 보장조치도 "시급히 취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이를 위한 군사실무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반해 북측이 줄곧 제기해왔던 김수
위 일정은 오는 26~29일 열기로 확정됐다.
우리측은 경의선이나 동해선 연결, 개성공
단 건설 등 미래협력 각종 남북 현안과 관련
돼 있는 군사회담 일정 확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측은 군사남국회담 날짜를 못
박는다는 남북을 요하며 김수위에서 먼저
이 문제가 다룬 뒤 군사회담의 시기를 잡자
는 주장을 내었다.

제5차 이산가족 상봉 날짜가 확정되지 못
한 점도 아쉬운 점이다. 우리측은 추석 전
상봉을 적극 추진해 왔고 상봉 대상자 명단
교란 등 사전절차를 감안할 때 이번 회담에
서 일정을 확정해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남
북은 추석 전 상봉 추진에 합의했지만 보도
문에는 "추석을 계기로 상봉을 실시한다"고
만 돼있고 날짜도 확정되지 않아 구속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의규기자 eskim@kmb.co.kr

경색국면 풀고 화해무드로

• 공동보도문 푼 답았나

남북이 243일간 진행된 제7차 장관급회담의 성과물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보도문 대부분은 그동안 합의해 놓고도 이행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다시 고집어낸 것이다. 남북 대표단 대변인인 이봉조(李鳳朝) 총일부 정책실장은 "서로의 입장과 남북관계에 대한 심정인식의 차이점 해소하면서 한반기 남북대화 및 후속조치 시안표집 작성함으로써 심정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남측은 공동보도문에서 이번 회담의 최대 이슈인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공사와 관련, "남북이 동시에 병행시켜 착공하기로 하되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날짜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동시 착공을 원칙적으로나마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공동보도문에 경의선 연결을 담보하는 군사실무회담 개최시기를 남측은 남측 요구를 북측은 거부했다. 남측은 '경의선 연결을 위해 필수적인 군사실무회담을 이룬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한다'고 밝혔으나 북측은

검협위·금강산 관광등 北적극성보인 부문 결실 '이행 중점' 의지 빛바래

'각기 자기측 군사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다진 소리를 했다. 향후 실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봉조 실장은 "제2차 김주위에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일자를 분명히 정한 뒤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공식입장에 맞춘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효시킨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발자연을 경의선 착공 문제와 연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해교전과 관련, 남측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에 대해 북측은 이미 압정표명을 했다며 완곡히 거부했다. 장부 당국자는 "무려중독 제반방지를 위해 군사당국자와 합의에 관하여 한다는 것을 북측에 강조, 이른 시일 내에 회담을 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 김영성 단장은 '서해교전에 대한 사과문제는 지난해 유감표명된 전봉문으로 대신한 것이냐는

가지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남북은 면회소장처 등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책을 논의할 제1차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와 제5차 금강산 이산 상봉연락에 합의했다. 상봉은 추석 이전에 실시하고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 등은 적십자회담에서 결정될 것 같다.

남북은 특히 더담담 4~6월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한 적십자회담에 양측 적십자단체의 총재급을 수석대표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당국자는 "이번 적십자회담은 책임자급이 수석대표로 나서게 돼 다른 회담과는 의미가 다르다"면서 "이산가족들의 영안인 면회소 설치에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남북은 또 제8차 장성급회담을 10월 19~22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이 지속적 대화를 약속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봉조 실장은 "장성급회담은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중점사업체로서 기능을 수행해왔다"면서 "앞으로 장성급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조장·정착하고 남북간 협력시상에 대한 심정인양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욱기자 woolly@kukminpy.com

경향신문

2002. 8.15(목)

서울경제

2002. 8.15(목)

北소극 군사회담 '조기개최'로 봉합

남북대화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짜여졌다. 그러나 시간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남북은 제7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8월 25~29일),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자회담(9월 10~12일), 북측 경제사업단 파견(10월 하순) 등 10개 항에 합의했다.

남북은 특히 회담 막판까지 참여한 입장차를 보였던 군사당국자회담의 개최시기를 명시적으로 못박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됐다.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이번 회담이 북일,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남산 끝의 준비의 성공=금강산 실무협력을 도대로 기존에 합의했던 사인들의 입장을 구체화시켜 남북관계 복원의 터전을 마련했다. 하지만 '합의만 있고 실현은 없다'는 비판을 일거에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남북간 견해를 보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군사보장합의서 발표를 의미하는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한다'는 공동보도문의 문구는 명시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아 문제의 소지점

■ 남북장관급회담 10개항 합의

관계개선위한 기본 터전 마련 성과 타결된 시간표대로 실천은 미지수

● 남북장관급 회담 합의 일정

행사	시기	장소	비고
8.15(목) 평양회담	8.14-17	평양	북측인 김기춘 총일부 본의
부산 A.G 실무협상	8.17-19	부산	·합도, 도봉연결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문제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8.25-29	서울	·이산가족 문제 ·합정권 수립사업 본의
4차 적십자회담	9.4-8	금강산	면회소 설치 운영 본의
남북수교협정	9.8-8	평양/개성	
금강산관광 2차회담	8.10-12	금강산	금강산관광 활성화 본의
이산가족상봉	추석연휴	금강산	
금강산 관광조사 실무협상	9월 하순	평양	
남북예술교류	9월 하순	금강산	
대중도시별대외 교류협력	9월 하순	평양	남북문화 교류
남북도시별대외 교류협력	10월 하순	평양	
14회 부산 A.G	8.29-10.14	부산	북방 불기
8차 장성급회담	10.19-22	평양	
북측 발자연을 위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교환	10월 하순	남측지역	
군사당국자회담	미정	미정	이행 시점 미개

따리게 됐다. 또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당국자회담도 이룬 시일 안에 개최한다는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더구나 북측 보도문은 군사당국자회담의 경우 여전히 '건의한다'는 형식으로 돼 있어 냉

정기 밀에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실독력을 얻고 있다.

●북측 ▲합의사항 실현일정 구체화 ▲남북관계 복원 ▲회해·협력의 지속 기반 마련 등의 성과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특히 추석(9월 21일)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이에 앞서 오는 9월 4일부터 금강산에서 제4차 적십자회담을 갖기로 하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구체적인 상봉 일시는 못박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 실장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9월 중 금강산행(안남행) 공동조사관 위한 실무협력을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 점과 관련,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합의안 실현이 관건=정부도 이 문 제점을 적시하고 있다. 이 실장은 "회담 할 견협위에서 철도·도로 연결 문제 착공일자를 분명히 정하고 정한 날짜를 바탕으로 군사적 실무조치를 시급히 취하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남북간에 합의된 여러 분야의 협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군사실무회담이 우선 열려야 한다. 우리측은 이날 남북 견협위에서 다시 한번 실무회담 일정과 관련한 합의 도출에 주력할 전망이다. 북측도 쌀 지원 등을 위해 서리도 군사실무회담 일정과 관련해 더이상 구체적인 응답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고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측이 미국 및 일본과의 대화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훈기자 shlee@sed.co.kr

남북한이 14일 끝난 7차 장관급회담에서 주요 의 제에 대한 이행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대 회와 교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차관 등을 논의할 김 집추진위원회 2차 회의와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 한 파견이 합의대로 진행될 경우 입가공 교역 수

준에 미달했던 남북간 경제협력에 한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군사단국지회담은 빠른 시 일 안에 개최한다는 신에서 갈수록 경의선 연결 공사 등을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장치를 확 보하지는 못했다.

막판 진통 '남북7차 장관급회담'

經協 한단계 도약 토대 마련

◆경제협력 분야

2차 경제협력추진위 회의가 서 울에서 열리면 30만~50만 t 기량의 대북 쌀자원을 논의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는 자립재생 방식, 지원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 된다.

김집추진위에서는 또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개성공단

문제는 남측 사업자인 현대 와 토지공사, 북측 사업자인 조선아시아태평양개발위인 회와의 논의가 1년6개월 가 량 중단된 상태다.

북측은 특별법 제정을 위 한 실무팀을 가동중인 것으 로 알려지고 있으나 특구 지 정, 필수 이동과 전력 확보 등 실무적 문제를 풀어나가 야 한다. 이밖에 임진강 수 해방지를 위한 현지조사, 남

북한과 러시아 철도 및 가스관 연 결 문제도 김추위에서 논의가 이뤄 질 전망이다.

북측의 경제시찰단이 남한으로 올 경우 정부는 주요 산업단지 시 산, 경제연구소와의 세미나 개최,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만남을 주선 할 계획이다.

◆경의선 연결 가시화

경의선 단산~개성 24km 구간을 잇는 압은 비무장지대(1.8km)와 북쪽구간 개성~군사분계선 12km

만 연결하면 끝난다. 문산에서 남 방한계선(도라산 역)까지 10.2km 는 지난해 10월 마무리됐다. 김의 신 연결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자재 반입과 물류수송 등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적십자 회담·이산가족 상봉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주요 합의내용

- 8월 26~29일 김경위 2차회의 서울 개최
- 경의선, 동해선 공사 남북 동시 병행 확공
- 추석 계기로 5차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 4차 적십자회담 9월 4~6일 금강산 개최
- 금강산남 공동조사 실무집속 9월 중순 금강산시
- 금강산 관광 탐구회담 9월 10~12일 개최
- 남측 태권도 시범단 9월 중순 평양 방문, 북측 시범 단 10월 하순 서울 방문
- 북측 경제시찰단 10월 하순 파견
- 8차 장관급 회담 10월 19~22일 평양 개최

남북은 적십자회담에서 이산상 봉 김회와 면회소 설치 등을 김 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현재 면 회소 설치장소와 관련, 남측은 남 북 경의선 연결 지점인 도라산 역 주변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금 강산을 고집하고 있어 난항을 겪어 왔다. 5차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은 남북 방문단이 각 사흘간 순차 방문해 상대측 가족을 만나게 된다.

◆군사 관련 회담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 던 사안이다. 군사회담은 △비무 장지대(DMZ)내 군사보장협약의 시면·교원을 위한 군사실무회 담 △남북간 무력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 긴장완화 등을 논의할 고위 급(장관급) 회담으로 '수반된다. 김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북측 으로부터 확실한 보장받기 위해서 는 이런 회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남 측은 구체적인 일정을 확 정하지고 주장했고 북측 은 "군부에 추후 건의하 겠다"고 맞서 이번 회담 내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남북이 서로 한발짝씩 물러나 조속히 개최한다는 신에서 마무 리했지만 제대로 일괄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 다.

◆향후 과제는

상당한 협의를 이뤄냈지만 '말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추 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 들은 입을 모은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간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합의 해놓고 무산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실천 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강요 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영식 기자

yshonk@hankyung.com

군사회담 이견 '줄다리기'

회담 마지막 날인 14일 남북 양 측은 군사회담 문제에 대한 이견으 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남북 대표단은 지난 13일 오후부터 14일 새벽까지 실무접촉, 막후접촉, 수 석대표 접촉을 잇따라 갖고 의견 갈증을 시도했으나 오후 3시40분 을 넘기도록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중 열릴 예정 이던 3차 전체회의는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회담 관계자는 "남북 회담은 최종 결론을 반드시 봐야

하는데 합의해야 할 의제들은 많은 반면 결론을 잡약하기 어려웠다" 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북측은 지난 12일 기 본 입장 발표시 군사실무회담은 언 급조차 하지 않았고 13일에는 군 사실무회담 개최 필요성에는 원칙 적으로 동의했지만 그 시기는 못박 을 수 없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 였다.

북측은 대신 8월 말 김추위에서 군사회담 시기론 논의해도 늦지 않 다고 밝히는 등 이 문제를 과제 가

리는 인상이 강했다. 특히 2차 전 제회의 도중에는 세 차례나 평양으 로부터 훈령을 전달받으면서도 이 부면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전 중에도 북측의 가시적 인 태도변화가 없었고 실무접촉조 치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후에 양측 실무접촉이 재개 됐으나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했 다.

이에 대해 남측도 이번 장관급회 담의 성과가 '군사실무회담'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배수진을 칠에 따라 남북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김동욱 기자 kindw@hankyung.com

한국경제

2002. 8.15(목)

8·15 남북행사 오늘 막을라

北대표단 116명 도착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남북 민간 차원의 8·15 공동행사(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할 북측 대표단 1백16명이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회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은 이날 고려항공 편으로 입국, 숙소인 서울 세라몬위커킬 호텔에서 남측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대표단 4백여 명과 만났으며 15일부터 이틀 동안 본 행사를 연다. <관계기사 3.31면>

북측 대표단은 도착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8·15 민족통일대회가 민족의 힘을 합치고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며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

다"고 밝혔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남측 환영 공연 및 만찬에 참가했으며, 여원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장은 공연에 앞서 부친인 몽양 여운형 선생의 묘소(서울 수유동)를 참배했다.

남북은 이번 행사에서 민간 교류 활성화가 화해와 통일의 밑거름이란 점을 공동호소문을 통해 확인하는 한편 16일에는 '독도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 침산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특별호소문을 채택한다.

행사기간 중에는 북한 민수대 예술단·평양예술단·피바디 가극단 소속 배우 30여명이 두차례에 걸쳐 공연을 하게 된다. <고수석 기자>

<sskom@joongang.co.kr>

'8·15 민족통일대회' 개막

北대표단 116명 어제입국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할 북측방문단 116명이 14일 입국, 3박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몽양 여운형 선생의 차녀인 여원구씨 등이 포함된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46분 고려항공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관련기사 18면>

북측 대표단은 허혁필 민화협 부회장을 통해 도착성명을 발표한 후 곧바로 숙소인 서울 광진구 광장동 세라몬 위커킬 호텔로 이동, 남측대표단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남측 대표단

은 학술과 종교, 정치, 노동 등 각계 인사 430여명이었다.

남북 각계대표 52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분단이후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민간 공동행사이며, 남북 민간교류로도 최대규모이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후 6시30분 위커킬호텔에서 열린 남측 환영공연과 이어 열린 환영만찬에 참석한 뒤 첫날 일정을 마쳤다.

공동대표단은 15일 오전 9시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째 행사 일정에 들어가며, '민간 교류 활성화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밑거름'이라는 공동호소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준모기자>

jnkim@sgt.co.kr

"8·15를 민족단합의 날로"

北대표단 116명 서울도착... 어제 환영행사

8·15 민족통일대회가 북측 대표단 116명과 남측 대표단 430여명 등 모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4일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김영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 시해직항로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단장은 허혁필 북측 민화협 부회장이 대독한 도착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8·15 민족통일대회가 민족의 힘을 합치고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며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며 "우리 모두 굳게 손잡고 광복의 기쁨이 분업의 비극으로 비면 8·15를 민족단합의 날, 통일의 날로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북측 대표단은 이어 숙소 겸 행사장인 서울 광장동 위커킬호텔로 이동했

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저녁 한국에 총이 주최한 환영공연을 관람한 뒤 남측 대표단 주최 환영연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쳤다. 한총련과 범민련 등 통일연대 소속 단체 회원 1만여명은 별도로 건국대에서 8·15 대회 성사 축하 한마당을 개최했다.

남북한 대표단은 15일 위커킬호텔에서 8·15 민족통일대회 개막식을 갖고 공동호소문을 채택한 뒤 합동예술공연을 열 예정이다. 또 사진 및 미술전시 개막식을 갖고 북측 예술단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단독 예술공연을 갖는다.

한편 정부는 남측 대표단 460여명 가운데 통일연대 17명 등 25명에게 북한주민 접촉을 허용해 430여명만이 행사에 참가하게 됐다.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南北장관급회담 10개항 합의 의미

남북교류 '실천 시간표' 확정

이번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시해교전사태 등으로 소강상태를 보였던 남북교류 정상화하고 국민의 정부 맡기까지 실천 시간표를 작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경제협력사업에 필수적인 군사보장합의서 발표를 위한 군사실무회담 개최일정 확보에는 실패, 북한에 끌려다니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

남북 양측은 이날 26일부터 서울에서 제2차 감추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합의사항들을 본격 논의하게 됐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였던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남북이 동시에 착공하고 감추위에서 그 일정을 간기로 한 것도 후속조치의 시간표를 만들어 실천 가능성을 높인 대목이다.

그러나 군사당국 회담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경제분야 합의 사항들을 한 상태로 정치시킬 수 있는 발미날 재경하는 셈이었다.

경의선, 동해선, 금강산 유류 관...

는 경협사업들은 비무장지대 내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지 않으면 진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군사실무회담 일정을 확정하려고 노력했으나 북측이 거부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시급히 취한다'는 선에서 합의점을 이갈아내는 데 그쳤다.

북측은 쌀 지원 장구인 김주위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추석 직전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은 실감반면에겐 다할 나위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양측은 제4차 각급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전기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군사당국간 회담 시기 못정해 경의선등 사업추진 걸림돌 우려

개최는 손쉽게 합의해 놓고 경협사업을 보장하는 군사실무회담에는 난색을 표명, 쌓여온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인도적 지원분야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식량, 비료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설명이다.

남측대표단 대변인인 이봉도 통일부 정책실장은 "쌀 비료 등 경제지원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면서 "북측에서 이 문제는 제기해 오지 않았으나 김주위가 알려면 제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북한 대표단은 추석 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비롯해 제4차 각급자회담 개최에 합의, 쌀 지원에 필요한 남한 내 분위기 조성 작업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군사당국간 회담

양측간 군사회담만 놓고 보면 이번 회담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측은 아무런 소득도 얻어내지 못했다.

북측은 경협사업에 필수적인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쌍방간 군사당국간 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향후 남북관계 일정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Event. Includes dates like 8.14-17, 8.17-19, 8.26-29, 9.4-6, 9.6-8, 9.10-12, 9월 중순, 9월 중순, 9월 중순, 10월 하순, 9.29-10.14, 10.19-22, 10월 하순 and events like 8-15민족통일대회(서울), 부산아시아경제 실무그룹(금강산), 2차 경협추진위원회(서울), 4차 적십자회담(금강산), 남북축구경기(성암경기장), 금강산관광 2차회담(금강산), 이산가족 상봉(금강산),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금강산), 남북여성대회(금강산), 태권도시범단 방북(평양), 태권도시범단 방남(서울), 부산아시아경제 특목 참가, 8차 장관급회담(평양), 북측 경제시찰단 서울 방문, 군사당국자회담

■스포츠 교류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오는 17일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조선올림픽위원회간의 합의가 원력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9월 6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친선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니름일기자 philip@mk.co.kr



14일 오후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끝난 뒤 남북 정세선 통일부 장관(왼쪽)이 북측 김정성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일어나고 있다. [AP/에]

8·15 민족통일대회 개막

남북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8·15 민족통일대회'가 17일까지 서울 광장동 워커히호텔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강원내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회장 등 북측 대표단 116명이 14일 오전 10시 46분께 고려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측 대표단이 이처럼 대규모로 남측 행사에 참가한 것은 분단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北 116명 서울로...분단후 최대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후 5시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남북 환영 공연과 환영 만찬에 참가한 뒤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민족통일대회 본행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 개막식과 시작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남북은 이번 행사에서 민간교류 협성회가 화해와 봉합의 밑거름이 되는 시정발 광복호소문물 봉제

하고, 16일에는 '독도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 청산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특별호소문물 채택한다.

북측 대표단은 17일 오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환한다.

이번 행사에서 9일중 개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남북청년학생 통일대회와 '남북여성통일대회'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끝나고 관바로 민간 중심의 이번 8·15 광동행사가 없었기에 따라 남북관계 '관민(官민)'의 비공 터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됐다.

김경선 단장 등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참석했던 북측 대표단은 8·15 광동행사 북측 방문단 116명이 되고 온 향관가변으로 날

아간다. 북한은 이번 서울에서의 8·15 민족통일대회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기대를 나타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공화국 북반부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서울에 나감으로써 통일운동 발전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번 8·15 민족통일대회가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이 이르게 진행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향동일기자 goldbar@mk.co.kr

사 설 · 칼 령

'유감 표명' 아닌 사과를

국민일보

2002. 7.26(금)

북한이 6·29 서해교전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 제 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제의해 왔다. 우리의 사과 요구와 당국간 남북대화 재개에 거부 또는 침묵으로 일관해온데 비추어 주목할 만한 태도 변화다.

하지만 서해교전에 대해 오히려 생색이 나 내듯 기껏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나마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이 '공동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그야말로 매우 유감스럽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북한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해 당국간 남북대화에 나서려 한다면 더욱 확실한 사과와 확고한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물론 국가관계에서 유감 표명은 사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조준 사격 등 모든 정황으로 보아 의도적인 도발일 수밖에 없는 6·29 교전을 '우발적'인 것으로 호도한 부분이라든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북한의 유감 표명이 과연 진정한 사과일 수 있는지는 의심을 들게 한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장관급회담을 제의한 것도 담장 시급한 식량지원 등 오직 실리만을 챙기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실 지금 북한은 그 어느때보다 남한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배급제를 폐지하는 것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가는 것이라기보다 배급할 식량이 절대부족한 탓에 배급제가 '자연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6·29 교전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더욱 불신을 받게 된데다 남한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사과하는 시늉만 하고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문은 그래서 타당성을 지닌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간주하고 장관급회담 제의가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너무 성급하다. 장관급회담 개최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이라 해도 그 전에 분명한 사과 등 확실한 태도 표명을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해놓고 우발적이라고 단정지은 북한측 유감 표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유감 표명을 사과로 본다면 '남북 공동책임론'도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NLL 사수 의지는 포기하는 것인가. 만약 정부가 북한의 모호한 유감 표명에만 매달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장관급 회담부터 먼저 착수한다면 또다시 북한의 필요에 의해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朝鮮日報

2002. 7.26(금)

社說

이것이 謝過인가?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해 우리 측에 보내온 '유감 표명'은 사과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장관급 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에서 서해교전을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려충돌'이라고 규정하고, '북남 쌍방'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기습적인 선제 군사공격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해군당국의 조사로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북측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유감 표명의 주체가 북한 내각 인물인 점도 적절치가 않다. 북한 군사도발의 책임은 군부이고, 군부는 내각과 엄격히 구별되고 있는 것이 북한 체제다. 이처럼 도저히 사과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해교전을 '남북 공동의 책임'으로 호도하고 있는 듯한 북측의 전화통지문에 대해 현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것을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명백한 사과와 유감 표명"(통일부 차관)으로 받아들이는지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북한의 의도는 서해교전 사태를 어물쩍 넘기고 남측으로부터 식량지원 등을 받아내려는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의 배급식량 가격 대폭 인상 등으로 북한으로서는 식량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 정부가 자신들의 체면과 입장을 살리는 데만 급급해 북한의 '알버무린 수사학' 하나로 서해교전을 없던 일로 넘긴다면 이것이야말로 사태 재발을 부를 수도 있는 우려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사설

남북 장관급 회담의 전제

북한이 어제 서해교전에 대해 사과하고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서울 개최를 위한 8월 초 금강산 실무접촉을 제의했다. 김영성 장관급 회담 북측 단장은 "서해 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사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북남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것을 사과 수준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논란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북측이 어쨌든 서해교전의 잘못을 공식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우리는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북한이 앞으로는 서해교전과 같은 망동적 도발을 결코 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선 책임자 처벌이 수반돼야 하고 재발방지 담보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 간 회담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앞으로 열릴 실무접촉 및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의 이같은 자세를 '접수'만 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남

북 간 평화보장 체제의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관계가 정착돼야 진정한 화해협력의 기초가 정착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서해교전으로 드러난 남북 간 군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시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에만 매달린다면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사과와 남북 장관급 회담 제의에 한층 주목하는 것은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과 맞물린 점에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 실험이 성공하려면 물자와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선행조건이다. 그러나 북한이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곳은 남쪽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측은 서해교전의 처리문제로 남쪽과 상당기간 대치할 형편이 아닌 것이다. 남쪽도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가 연착륙하도록 돕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 대해 요구할 건 당당히 하면서 식량지원 등 대북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대한매일

사설

北 '유감' 대화로 진실성 보여야

북한이 어제 서해 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제의한 것은 고착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 특히 서해사태 재발 방지와 철도연결 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 구체적인 현안을 적시하고 8월초 금강산 실무접촉까지 제의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실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한다. 물론 분명한 사과가 아닌 유감 표시이고,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협의할 거쳐 북측 제의를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힐 테지만, 대응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서해교전 이후 정풍 일어붙은 남북간에 대화 기류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는 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앞서 남측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8·15민족통일대회를 오는 8월15, 16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당국과 민간단체의 대화가 병행하게 된 것이다. 두 대화축이 순조롭게 풀리간다면 남북간 화해·협력은 신뢰 속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항상 변수가 삼존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8·15행사만 해도 지난해 평양 공동행사 때 빚어진 '방명록 파문'을 비롯한 후유증을 생각하면 사전 준비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 해와 같은 우뚝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미리 점검할 것이 없는지 챙겨보고, 보완할 것이 있다면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북측의 유감 표명과 장관급 회담 제의가 남북은 물론 북·미, 북·일 관계간 대화의 물꼬가 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오는 31일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고, 오늘부터는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는 등 주변환경 또한 대화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여건을 선용하는 길은 진실한 대화일 뿐 '유감' 표명이 사실상의 사과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남북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社說

북 유감 표명, 화해·협력 전기되길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고 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열자고 제의해 온 것은 매우 반갑고 다행스런 일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에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에 대한 확고한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서해교전과 같은 사태를 그대로 넘기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김령성 남북 장관급회담 북쪽 단장 명의로 남쪽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에게 온 전화통지문은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를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북쪽의 사과로 간주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서해교전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핵심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도된 도발이 아니라는 뜻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서해교전 사태를 놓고 북쪽의 의도된 도발이라느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다느니 하는 추측이 난무했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이어졌다.

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이에 앞서 금강산에서 실무전족이 열리게 되면 중단됐던 남북 대화와 끊긴 화해흐름을 되살릴 논의가 다각도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북쪽이 전화통지문에서 밝힌 바처럼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철도 연결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그동안 남북 사이에 많은 합의를 하고서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남북 간에 장관급 회담이 재개되고, 유보된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도 이루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전 문제가 논의되는 자리가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한다.

世界日報

社說

北의 유감표명과 회담제의

북측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남북장관급회담을 재의함에 따라 한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트일 것 같다. 통일부는 어제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북측 김령성 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우리측 정세현 대표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서해교전 유감표명과 함께 남북장관급회담을 재의해 왔다고 밝혔다. 또 북측은 장관급회담에 앞서 실무회담을 8월 초에 가질 것도 제의했다.

북한이 뒤늦게나마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 표명 형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해온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북측은 이날 재의에서 지난 4월 임동원 특사의 방북때 합의한 남북철도 연결과 이산가족 사업 등도 언급함으로써 대화에 적극성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정치권도

엇갈린 반응이지만 회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회담을 재의하면서 서해교전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노력해야 한다고 한 주장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서해 도발에 대한 전국민의 비판의 소리를 간과해선 안 된 것이다.

이 기회에 남북이 항구적인 평화협력시스템을 갖추으로써 서해교전과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서해교전을 계기로 부각된 서해 해상경계선과 남북공동어로문제 등 분쟁소지가 해소돼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를 보는 국제적 시각도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좀더 진지한 자세로 서해도발을 반성하고 남북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론

서해 교전과 동해철도

보론초프
러동방연구소
수석연구원



지 남남 및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한 교전은 남한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나는 그 사건 이후 한국 사람들로 부터 그 사건과 관련한 나의 견해를 질문받았다. 그 사건이 당시 남한에서 열리고 있던 월드컵경기 분위기를 해치려는 평양측 노력의 일환이었는지, 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겉정에 따른 선제공격이었는지, 미리 계획된 고의적 도발이었는지 등이 한국 사람들의 의문이었다.

나는 그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 다만 북한측이 그같은 사건을 일으킨 동기나 이유를 추측할 수는 있다. 나의 추측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선 서해사건의 당사자인 북한 함정 정점 스스로의 겉정에 따라 공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 북한 함정 잠정은 3년 전 같은 해역에서 발생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쓰라린 경험을 기억했을 수 있다. 당시 남한 해군은 인명살상을 위한 포격을 주저하지 않았다. 남한 해군은

매우 효율적인 공격을 퍼부었으며, 그 결과 북한 함정은 침몰했다. 나는 북한 함정의 잠정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선 선제공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격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분명한 결론 가운데 하나는 가능한 한 빨리 남북한 대표들이 만나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논의하는 무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위험스런 군사적 충돌은 앞으로도 쫓겨 조정시기에 서해에서, 또는 다른 해역에서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른다.

동시에 지난 6월의 사건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고위 정치지도층에 의해 사전준비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 그런 행동은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특히 유럽연합(EU) 등 서방세계와의 점진적이고 꾸준한 협력 발전을 위해 나서고 있는 평양측의 노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평

양측은 그같은 목표값 이루기 위해서는 건설적이며 비공격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국가적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현 재 미국의 대북 입장이 더욱더 강경해지는 상황 속에서 평양의 이런 태도는 특히 중요하다. 지난 한해 동안 북한의 처신은 북-미 관계를 긴장시키지 않으려는 북한의 의지를 잘 나타내준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매우 날카롭고 비우호적인 언어로 공격하는데도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평양은 사전계획 하에 서해교전을 일으키는 일에 흥미가 없다. 왜냐하면 서해교전이 남북대화 진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또 다른 장애물을 낳기 때문이다. 나는 북한이 서울과의 협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매우 깊은 흥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조짐은 아주 많지만, 남북한 한도 연

결 계획을 진전시키려는 평양의 준비상황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8월 모스크바에서 있는 두번째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남북 동해철도 연결을 재의했고, 동시에 북한의 철도 개도를 러시아의 것과 같은 것으로 만드는 계획도 열어놓았다.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관심을 갖는 현안은 바로 남북 동해철도 연결하고 협정한 북한 철도 개도를 러시아와 같은 광케로 만드는 작업이다. 남북한간 철도 연결은 남북관계 측면에서 볼 때 두 나라의 상호 협성성의 공극적인 인정을 뜻한다. 그것이 내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남북대화의 장래와 관련해 서해교전의 부정적 영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이유다.

다른 분야에서의 남북협력 가능성도 매우 크다. 평양은 남북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때로 남한의 몇몇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하곤 하지만 햇볕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朝鮮日報

2002. 7.27(토)

金大中칼럼



요즘 한강에는 '김대중(DJ)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에 무슨 약점 잡힌 것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돌아다닌다. 그렇지만 알고서서 북한에 대해 사사건건 양보하고 기여하려고 비위 맞추는 DJ의 행태들을 도저히 실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들은 아니겠지만 일반 사람들의 머리로는 북한문제에 관한 '대상의 뜻'을 헤아릴 수 없기에 해설 수 있는 말일 것이다.

'희밀건 유감'에 맞장구라니

그런데 본래는 김 대통령만큼 '대공'은 아니지만 대북문제를 앞에서 관건있게 관

해운 사람들에게조차 이 정권의 대북 자세, 대북 무체중(無體重)은 남측하기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해교전 시대 때 "언어터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북에 총 쏘지 말라"는 식의 DJ 수칙은 북(DJ)신경 안 건드리기의 질정을 이루더니 옛 그제 서해시대에 대한 북측의 '희밀건 유감' 표시에 반감하는 듯이 '명백한 사과도 간주'로 맞장구를 치고 나온 것은 아주 시기적절한 안티클라이맥스였다.

북을 비난하거나 시비 걸 의욕은 없다.

련의 입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타작'을 하는 것이 이번 북한 '유감'의 진짜 속심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동 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한이보다 우리 쪽과 이 정권에 대해서다. 한 나라의 기본적 존재이유는 자존심이다. 영토도, 안보도, 거제도 결국 공동체의 자존심을 지키자고 하는 일이다. 자존심을 잃은 나라는 이미 나라도 국가도 아니다. 그런데 길쭉하면 상대방을 건드릴까봐 우리가 먼저 순죽이고 눈치보고 비위 맞추며 그

것을 고마워하면서 재빨리 '명백한 사과'로 간주해 주는 이 정권은 이런 수습이 진정한 남북관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답답할 수가 없다.

DJ정권 對北역전 더 없어야

여기서 김대중 정권에 한 가지 고연(高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더 이상 대북역전에 나서지 않아달라는 것이다. 김 정권으로서는 6·15를 이끌어낸 김일 내세워 무슨 '결과'를 만들어 내고 싶을 것이고, 그 집은 심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분쟁이바로 국가의 대계(大計)에 속하는 초(超)정권적 사안이며 민족과 나라의 미래에 관한 일이다. 그리고 국가적 자존상에 관한 일이기도 하다.

북한측도 '마지막 받아내기' 이외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고 어차피 다음 정권과 실질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며 지금 북측이 하는 것들은 뒤안 길에 있는 '갈래준 사람'에 대한 인사처리의 성격이 짙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DJ도 이 엄청난 문제를 다음 정권에 넘겨주고 자신은 여기서 손을 뺐으면 한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며 더 이상 북한에 이상관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편집인

“북한에 무슨 약점 있나?”

에담초 남북에 평화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 북한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북한이었다. 그런 북측이 '우발적 충돌' '유감'으로 위장한 '공동책임'을 들고 나왔으니 그답로서는 그나마 내란한 양보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남북 지도부는 감지되지한 모양이다. 그러나 적의 속셈은 뻔하다. 일간조선 8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 북한 노동당원은 '김대중은 북조선에 팔과 남러들 가장 많이 준 남조선 지도자'로 고매움을 느꼈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김대중이 있을 때 다 받아내자'는 말을들 한다"고 했다. 김 대공

것을 무슨 대단한 '회해의 제스처'인 양 내세우는 우리나라 지도층과 일부 지식층의 '인족 반 내밀기'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역경기조치 하다.

북이 우리 '자존심 잡기'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하는 자세라면 우리의 유엔 참성은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가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듯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비밀' 위에 군림하려는 속셈을 보여준 북한 당국자들에게 더 이상의 자존심 잡어주는 국민 자기(士氣)의 남미일 뿐이다. 엄청난 범죄자가 단순사기된 것을 인정하는

미흡한 사과에 정부 서두르지 말라

북한이 서해교전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장관급 회담을 제의한 것이 하나의 작은 진전(進展)임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졸속이 가깝다. 우선 북한, 정부원의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런 제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를 격하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데도 거기에 통일부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대를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북한이 보내온 전화통지문 가운데 서해교전과 관련된 내용도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까지 명백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관철하겠다고 다짐했음에 비해 보더라도 차관보급 인사의 두루물살한 유감표명만으로는 미흡하다.

그런데도 통지문이 접수되자마자 통일부 차관은 "명백한 사과와 유감 표시로 간주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한마디로 겁술했다. 노무현(盧武鉉) 민주당 대통령후보까지 비판했던 햇볕정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외침상으로나마 살려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작동한 것 같다.

또한 통일부가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 없이 단독으로 판단해 발표했을 리 없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재생된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려는 데 연연한 나머지 청와대와 통일부가 합작으로 그 같은 발표를 서둘렀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정부

가 그제는 북한의 유감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어제 아침에는 신중론으로 돌아서더니 저녁이 되자 다시 기대(期待)를 표시하는 것은 중심 없이 흔들리는 모습이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도 임동원(林東源) 대통령특보는 최근 북한 경제정책이 중국의 개방 초기 개혁 양상과 비슷하게 바뀌는 듯이 공언했다. 이것은 햇볕정책의 결실로 북한의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 8·8재·보선에서 여권후보들이 득표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우리는 남북대화의 진정한 개선과 발전을 희망한다. 따라서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거중(居中)역할 표명, 그리고 앞으로 있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한 국제적 다자(多者)포럼들에서의 토론회와 대화들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북한이 보다 더 상실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제의를 무시할 일은 아니지만 그들의 속셈이 남한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겠다는 것,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진전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야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서둘러 열지 말고 북측이 우리 요구를 수용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社說

東亞日報

2002. 7.27(토)

한국일보

2002. 7.27(토)

社說

대화는 재개하되 신중하게

북한이 25일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장관급 회담 개최를 제의해온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서해교전 이후 한달 가까이 끊어온 남북간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밀린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유감'이라는 수준에 그치기는 했지만 과거의 예와는 달리 북한이 비교적 신속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회개의 제스처를 보인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다. 김대중 대통령도 같은 날 군 주요시위관과 가진 오찬석상에서 명백히 밝힌 것처럼 서해교전은 '북한군의 명백한 불법도발'이다. 따라서 북한이 '남조선 군대의 계획적 도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로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우리측이 요구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에 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로 대신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측의 재발방지 보장요구에 대해서도 '남북 쌍방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한다'며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우리는 정부가 북한과 대화는 재개하되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전종문을 접수한 직후 통일부가 '명백한 사과로 받아들여졌다'고 흥분했던 것이나 '제고 쌀 400만석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농림부의 성급한 언급은 심히 유감스럽다. 김 대통령도 지적한 대로 정부는 앞으로 대화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대화재개에 급급한 나머지 지 지칫 북한에 이윤만 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견저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햇볕정책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대화수용 이후가 더 중요하다

정부가 이제 전략기획단 회의들 연어 서해교전과 관련한 북측의 유감표명이 미흡하지만, 장관급회담 재의할 수용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전란 통일부가 '사실상 사과와 의미'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데서 한 걸음 물러서 정부 내 혼선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 잘못 된 시각은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이다. '회담 지상주의'에 푹 빠져 호들갑을 떨어서는 매양 북측에 끌려다닌다는 비판만 받게 되고, 오히려 남남갈등만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장관급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금강산 실험무회담 일정에 관해서는 여론을 수렴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 역시 옳은 결정이라고 하겠다. 교전에서 우리의 뜻밖은 젊은이 4명이 목숨을 잃은 아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북측과의 회담에 찬박 달라붙는 듯한 속없는 모습은 책임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차제에 정부가 긴 호흡 속에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당부하고자 한다. 한나라당과 지민연, 일부 언론이 '사과로 볼 수 없다.'며 공세를 퍼고 있으나 남

북간 화해·협력은 결국 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어차피 다음 집권도 햇볕정책의 기본 골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십년 이어갈 남북화해·협력의 굳건한 첩로를 까는 심정으로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임기말까지 '피주기 정권'으로 오해받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아울러 우리는 북측도 성실한 자세로 회담에 임해주길 바란다. 지난 1996년 갑수합 칩투사건 때보다 사과 주체의 격을 높였고, 신속히 이뤄진 집에 대해서는 평가한다. 그러나 서해에서 일격을 가한 뒤 재빨리 꺼안는 척하며 식감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남한 일각의 비판적인 분석도 없지 않다. 북측이 진지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지 않으면, 남한의 대북 협력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도 장관급 회담에서 철도 연결사업,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추진위 개최, 군사 회담 등 기존 현안들에 대해 기초연설 수준에서만 맺도는 식의 회담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우리가 회담 수용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 구체적 증거를 보여라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어부지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사과 수준으로는 미흡하다.

그러나 사과 수준의 문제를 놓고 북한의 화제적인 제인을 거부하는 것은 다반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북한측이 제의한 장관급회담을 통해 북한이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과거 북한의 무력도발 후 태도의 진례에 비추어볼 때 이번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은 사과로 인정할 만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유감표명 내용이 정부가 요구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보장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 정서적으로 용납할 만한 수준은 더욱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무시하고 계속 사과 요구로 일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 사과로 인정할 것이냐의 어부지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인 색깔논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제7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해 철도 연결과 이산가족 등 관심 있는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해 왔다는 점이다. 사과 문제에 있어 유감표명 문구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회담을 통해 북한이 서해교전으로 인해 손상된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회복할 만한 구체적인 성의를 어느 정도 보일 것이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북한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실무접촉부터 적극적으로 임해 화해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무력충돌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전화통지문에서 북한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언급한 만큼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군사단국회담 개최부터 수용해야 한다.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번 북측의 유감표명으로 서해교전을 없던 일로 하고 무력충돌 방지 보장도 없이 또 소위 '피주기'식의 화해협력 사업 일변도의 회담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햇볕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성의를 보임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몫이 되었다는 점을 북한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

2002. 7.27(토)

사설

따질 건 따지는 게 재발방지책

북한은 지난 25일 장관급회담 북측대표 명의로 전화공지문을 보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재개하자고 제의해 왔다. 이는 북측이 일단 서해사태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자세라고 평가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등에는 훨씬 미흡한 것이어서 좀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유감표명을 명백한 사과로 볼 것이냐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내부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북측은 서해교전을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과보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런 점에서 북측은 우리가 요구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우리 정부도 이번 만큼은 어물어물 넘

어거리 해선 안될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미봉책이 남북관계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남북대화를 진행할 필요성은 크다고 본다. 서해사태의 보다 명쾌한 해법을 찾기위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들과 연관시켜 보더라도 더욱 그런 느낌이 든다.

북한이 본격적인 시장경제 실험에 나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인금 및 생활필수품 인상 등 가격구조 개편과 환율현실회 배급제 포기 등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비관적인 현상이다. 또 경제개혁을 위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경제체제의 변화로 북한의 민생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을 앞당길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대화재개를 통해 따질 건 따지되 경제협력 을 촉진할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2002. 7.27(토)

사설

北, '화해' 말보다 실천을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힘쓸 것이다". 96년 12월29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이 남한 정부의 요구를 수용, 북한 김수환 김용 침투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발표한 성명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저 북측이 서해교전에 대해 발표한 것과 대응소이다. 5년여의 시차를 두고 무려도반, 유감표명, 재발방지, 화해·협력조치 다짐이 반복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공고한 평화와 안정'에 힘쓰겠다던 5년 전 북측의 약속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자세 때문에 이번 북측의 결의가 정말 진지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수세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 대응은 이남'이라는 의구심도 있다. 막연한 '유감' 표명도 기습공격에 충격을 받은 국민의 가슴을 달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더 이상 남북간 대립과 단절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번에 북한이 과거의 잘못을 단순 반복하지 않

고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여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서해교전 이후 대남 유화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지적 충돌이 전면적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했고, 한때만에 직접 남한에 유감 표명을 하는 등 나름의 성의를 보였다. 남북 장관급회담,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협의를 구체적으로 저시, 남북간 현안을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리가 전에도 밝혔듯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는 필요하다. 북한이 회두를 던진 만큼 일단 만나서 따질 것은 따지고, 다짐받은 것은 다짐받고, 얽힌 것은 풀어가는 게 순서다.

문제는 북한이 이번 유감 표명을 일회적인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화해·협력을 말미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대화·협력을 추구하는 것만이 돌발변수 하나에 남북대화가 중단되지 않는, 예측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길이다.

사설

재고 쌀 먼저 북한에 지원을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유감을 밝힌 뒤 쌀 지원 문제에도 약간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잡히면 북한에 쌀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재고 쌀을) 배합사료로 공급하기도(남북관계가 잘 잡리면) 재고미를 대북 지원으로 풀리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김 장관의 이런 견해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그가 생각하는 재고 쌀 처리 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재고 쌀은 먼저 북한에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재고 쌀 중 일부를 사료용으로 공급할 생각을 하게 된 사정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풍년이 계속되는 데다 소비가 줄어들어 오히려 쌀을 수확하게 되는 10월 말쯤이면 쌀 재고가 적정재고 수준의 두 배인 1300만섬에 이를 것으로 농림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쌀을 보관할 창고도 크게 부

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수확한 벼를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도 이미 만만찮다. 이런 상태에서 재고량을 줄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 중 하나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남북관계가 나빠지면서 보수세력의 반발로 이를 실행하는 데는 난관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가 교육지출로 사료로 쓸 것을 고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재고 쌀을 우선적으로 사료로 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래 묵어 질이 떨어진다고 해도 동물보다는 배고픈 사람들이 막도록 하는 게 도리이고, 정서에 맞다. 더욱이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녘동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보면, 먼저 북쪽에 쌀을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 게다가 북한에 30만톤의 쌀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마침 남북관계가 개선될 기미도 보인다. 설령 남북관계 등이 좋지 않다 해도 남은 쌀을 먼저 북한에 지원하는 게 인도적 처사라고 본다.

한겨레

2002. 7.27(토)

사설

만나서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를 재의한 데 대해 정부가 사실상의 사과로 간주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 등 보수층에서는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어제 열린 국회에서도 양쪽의 상반된 견해들이 날카롭게 맞섰다. 사과로 볼 수 없다는 쪽은 서해교전이 치명하게 계획된 도발인데 북쪽이 '우발적 무력충돌' '남북 공동책임'으로 호도한다며, 재발 방지 약속도 분명한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북한의 유감 표명이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사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남북관계 전례로 볼 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은 '사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굳어져 있다. 또 서해교전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리면 김의선 철도 연결이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이미 합의하고도 이행이 안 된 문제들을 중

점적으로 협의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열어 논란이 된 북방한계선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북방한계선은 정전회담 직후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북쪽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북방한계선을 해상계선으로 가정 사실화하려는 남쪽과 이를 분쟁수역으로 부각시키려는 북쪽 속셈이 맞부딪쳐 잦은 충돌의 원인이 되었고, 두 번이나 교전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해마다 꽃게잡이엔 서해상에 긴장이 높아지고,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남북관계가 짙은 얼음판이 반복된다.

꽃게잡이에 나서는 우리 어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을 위해서도 남북 사이의 공동 어로구역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 남북이 진지하게 논의하면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분명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해결을 뒤로 미루는 게 능사는 아니다.

2002. 7.27(토)

책임자 처벌없는 북의 '유감'은 유감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통상 외교수사(修辭)는 국가간의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의사표시와는 크게 다르다. 같은 표현이라도 상당히 우회적·다의적(多義的)이기 마련이며 서늘상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 25일 김령선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가 우리측 정세현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온 전화문지문도 그 중의 하나다. 김 대표는 문지문에서 '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감표시'가 어떻게 '사과'나 '견해도' 나오고 '우발적 발생' '공동의 노력' 등의 표현에 대해 그들의 '의도된 도발'을 회색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 차원에서 유감을 말했다면 그것은 교전이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공동의 노력' 부문도 책임의 몰다기 시도보다 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협상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면 무난하다고 할 것이다. 북방한계선 문제는 그것이 군사·통행·어업 등이 복합된 문제이므로 군사정전위나 남북간 군사회담·이업회담을 통해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북한은 그동안 무수하게 많은 대남도발을 자행했고 그때마다 '사과' 대신 '유감'표명만 했다. 이번의 유감표명도 같은 종류가 아니냐. 그래서 같은 도발을 다시 회색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은 산중한다.

북한은 그 '점'에서 이전의 유감표명과 다른 점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시해교전에 대해 북측에 3가지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사과와 재발방지의 보장과 책임자 처벌이다. 이번 전화문지문이 앞의 두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한 데로 응당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아무 대꾸가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굳이 통보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반드시 단행돼야 할 일이다. 워드캅기간 중의 시해교전은 북한으로도 백해무익한 망동이었다. 책임자 처벌이 확인돼야 북한의 유감표명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배급제도의 개편과 임금의 생산성 연동제 등 자본주의식 시장경제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량배급제의 개편이 성공을 거두려면 쌀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남한으로부터의 쌀지원은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책임자 처벌은 남한의 재고생 문제를 북한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영랑 장관급회담에서 우리가 주력할 부분이다.

중앙일보

2002. 7.29(월)

사 설

北 대외관계 대전환할 때

북한은 최근 대내적으로 경제개혁을, 대외적으로 한·미·일 등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정책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시장경제체제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듯한 경제개혁 추진에 때맞춰 도모하는 대외관계 개선의 움직임은 그래서 한층 관심을 끈다. 양자의 움직임이 최고지도층의 결단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이라면 북한이 노선상 대담한 전환기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우선 서해교전과 관련, 간접적이거나 책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동시에 북한은 북·일 외상회담에 합의하고, 유도호 관련 일본 적군파의 귀국을 용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미국이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하면 그 격에 구애받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전환의 배경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피탄 상태의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대외개방이 불가피하다

는 판단에서 결행된 것이라는 긍정적 분석이 있다. 그러나 경제난 타개를 위한 교육지책으로 한·미·일의 지원을 얻기 위해 일시적이고 전술적으로 유화책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닐까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북한이 단일 후자의 입장이라면 서방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전 북한의 노린수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고, 미국이 특히 그렇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 외부세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의도라면 보다 대담하고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상대 방과의 만남 그 자체를 무슨 '시혜'로 여기는 듯한 오만함이나, 협상에서 보여온 허장성세의 버림받길 견뎌내지 못해 전고·그야말로 호혜적 입장에서 신뢰를 쌓기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오늘부터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한 백남순 외상이 한·미 양국 대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북의 입장과 의도가 한층 명료하게 드러날 것이다. 북의 대외정책이 대전환할 때다.

社說

김대통령의 對北 조급증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6일 "북한이 서해 교전 사태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해사태 발발 한 달이 만에 북한이 보내온 진화통신문에 담긴 '우발적인 무력충돌' '재발방지 공동노력' 등의 무책임하고도 모호한 표현들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과로 보기는 어렵다.

국회 1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조차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정부도 강경한 국민여론에 놀라 길으로는 북한의 사과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김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이 사실상 사과했다"고 주장한 진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김 대통령은 "북한이 사실상 사과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진례없이' '신속하게' 같은 표현까지 동원해가면서 북한이 과거

에는 때보다 빨리 '유감'을 표시한 점을 꼽았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이 그만큼 원기가 급했거나 임기말의 김대중 정부로부터 '더 큰 무엇'을 얻어내려는 속셈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지, 결코 사과의 진실성을 판단해 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

결국 김 대통령의 언급은 남북관계에 대한 'DJ식 집착'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서해사태라는 족쇄를 풀려는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쫓겨온 정반들의 복수를, 앓아가고 워드캄 환희에 들떠 있던 국민을 일순간에 분노로 들끓게 했던 서해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침착해야 할 김 대통령이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은 보기에 딱한 일이다.

특히 북한의 유감표시를 전후해 나오고

있는 핑크넷 대북사업들은 임기말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집요한 신뢰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북한 개성공단에 진리 10만세불 제공한다는 한국토지공사사의 사업안 같은 대한대북 프로젝트들은 임기말의 정부가 추진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대북 전략지원 문제는 한반도 안보 및 북한의 변화방향 등과 직결되는 전략적인 사안인 만큼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는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적 신뢰를 전면적으로 잃은 상태다.

김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임기 중에 남북관계에서 '감나무도 심고 감도 따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아집과 과대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북-미 대화 재개되기를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장관급 회담을 재의한 데 이어 미국의 특사 방북 재추진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서해사건 이후 미국의 특사 파견이 취소되었지만, 앞으로 조건이 마련되어 미국 쪽이 다시 특사를 보내겠다고 우리는 일관한 입장에서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특사로 누구를 보내는가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 말해 특사의 '급'에 얽매이지 않을 것을 분명히했다.

미국 쪽 분위기도 일단 긍정적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표명은 "긍정적 사태 전환"이라고 밝혔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분명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파월은 북한의 특사 환영 발표에 앞서 연 회견에서 북-미 외무 장관 회동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표가 파월 장관 발언 직후

에 나왔다는 점에서 브루나이에서 열릴 아세안지역 포럼 때 북-미 접촉이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일본과 외무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고, 남북 장관 접촉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남북한을 잇달아 방문 중이고, 한-중 외무장관 회담도 곧 열린 예정이어서 한반도 주변 각국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북-미 대화는 남북 대화와 함께 한반도 안정의 두 축이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높고 화해보다는 긴장을 바라는 강경파들의 입김이 센 조지 부시 행정부와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세에서 헤어날 수 없다. 남북대화 진전도 일정한 한계를 갖게 된다. 우리는 무산된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이 이른 시일 안에 재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앞서 아세안지역포럼에서 백남순-파월 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기류는 긴장 완화 쪽으로 바뀔 것이다. 공은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

서동만
삼지대 교수
북한정치



남북관계 복원과 '8·15행사'

북측의 유감 표명에 따라 서해교전선이 수습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북측도 20여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사과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던 과거 잠수함 침투사건 당시에는 북·미 채널을 통해 3개월 후에나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과 비교해도 훨씬 적극적인 자세이다. 더욱이 북측은 임동원 특사 방북시의 남북 합의사항 이행을 내걸고 철도·도로 연결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대화를 재의하기도 하였다. 북한에 체류 중인 요동호 납치병들이 서해교전 직후 전격적으로 귀국 의사를 밝힌 것도 북한 당국과의 교감에 이루어진 시대 수습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북측이 어떤 사내로 입은 대외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상당히 고심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제 북측의 선제공격이 전무현장 차원에서는 계획적이었는지 불라도 명암의 최고 의사결정 차원에서는 우발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

다. 서해교전이 북측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명백한 실수였던 셈이다. 다시금 우리 해군이 현장에서 용분의 대응을 하면서도 전투가 확대되는 것을 막은 것이 올바른 대처였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지도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유보하는 냉정한 발표를 한 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남북 각각의 자제력이 순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예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번 사건이 확전으로 치달아, 악화되어야 한다는 데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일부 주류 언론이나 인사들은 북측의 유감 표명을 '김대중 정부 구하기'로 해석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서해교전 자체도 김대중 정부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었는가, 전혀 알 수가 맞지 않는 해석이 북한 전문가란 이름으로 바깥이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주류 신문 중에는 제발리 입장을 바꾸어 북측의 유감 표명을 제대로 해석할 경

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서해교전 직후에는 이 사태가 북·미대화를 회피하거나 북·미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북측이 면밀히 계획한 도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전의 해석이 잘못이 없었는지 스스로를 뒤 돌아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회주의의 전형이라 할 만한 이러한 보도 태도도 냉정적인 논조 못지않게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남북관계에는 불확실성이 많은 점에서 누구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수록 신중하고 냉정한 분석과 자기 심합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어쨌든 남북관계는 특사 방북 합의의 이행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남북 대화뿐 아니라 북·미, 북·일대화도 재개될 것이다. 남과 북은 1999년 서해교전이 상호 보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서로 지체한 결과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된 경험을 갖고 있다. 비운 뒤 땅이 더 굳어진다든 속담

도 있듯이 전화위복의 자세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언어질 것이다. 우선 남북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일 마무리짓기만 해도 남북관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일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담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철도나 도로로 일반인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는 일이다. 이는 2003년 한반도 위기설로 우려되는 북·미관계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민간 차원에서는 남북 사회단체가 합의한 8·15 경축행사를 온건히 치러내는 일이 중요하다. 북측 인사가 100명 규모로 남측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분단 사상 최초의 획기적인 일이다. 남북 민간단체들은 작년 평양 행사에서의 돌출 사태로 뼈아픈 교훈을 얻고 있다. 이번은 서울 한 북관에서 열리는 만큼 어떠한 사소한 괴양 행동이나 미숙함도 허용될 수 없다. 8·15 행사와 당국간 회담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동력을 만들어내도록 모두가 힘써야 할 때이다.

중앙일보 2002. 7.29(월)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북·미관계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바로 이와 같은 진세 아래 김대중 정부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개선할 것을 끈질기게 권고해 왔고 지금까지도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반복하고 있는 줄 안다.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김대중 정부가 벌써 몇년째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는데도 그 결과는 보잘것없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언세, 어디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부시 미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경우에도 막연히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는 추상적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특정무기체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무기 통제 협상을 생각하고 있다.

예상 어긋난 北태도 변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평화, 화해, 협력, 긴장완화, 모두 해석의 여지

가 있는 개념들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더 구체적인 협상 목표, 그리고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대북 전략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가 있는 개념들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더 구체적인 협상 목표, 그리고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대북 전략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색과 자세를 그대로 유지해 나갔다고 했지만 미국은 일단 계획해 있던 특사 방양 방안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미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또다시 끊어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강경 자세에 대한 북한

북한으로서는 불가피한 간헐적 제스처다. 강제적으로도 그렇고 자정학적으로도 그렇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접근 제스처가 전술적 통거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매우 우둔한 일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동거에 대한 어떤 한강도 견제해야 한다.

김경원 칼럼



南·北·美 방정식 다시 짜자

의 반응은 한국 정부가 기정했던 방광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왔다. 한국 정부의 기정이 맞다면, 남북관계는 북·미관계가 악화될 만큼 나빠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한 상태에서, 북한은 남한을 향해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정전금 회담을 재개할 것을 제의해왔다. 북한은 분명히 대미 관계가 어려운 만큼 대남 접근의 필요성을 인지했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서해교전 이후의 대남 접근은

北美관계 열쇠는 한국이

결국은 미국이 중요하다. 우선 우리 정부는 북·미관계가 잘 돼야 남북관계도 잘 될 수 있다는 종래의 기정을 포기해야 한다.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진세를 포기한다는 것은 대미 외교의 내용을 완전히 재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는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달라고 지자체로 청원하던 외교를 지양하고 우리의 북한에 대한 구상과 그 실행을 설명하는 외교가 되어야 했다. 그렇게 하는 경우 미국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미국의 반응은 궁극적으로 북한에 달렸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응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대북한 어떤데에도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미관계는 개선될 수 없으며, 동북아 정세도 안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원 원장·고려대 석좌교수

특별기고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장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이건 지도자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자신의 권력을 가능한 한 오래도록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예외가 아니며, 북한의 '체제생존'이라는 최고 목표는 김 위원장의 권력유지와 동의어이다.

그러면 김 위원장의 권력유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의 회복이다. 대내외적 정세, 사회, 군사의 안정은 회복되고 있으나 경제만은 어려움에서 헤어날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북한의 국가적 슬로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도 정치, 군사, 사상의 강국은 이루었으나 경제강국은 이루면 보다 는 주장이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노동인

입금인상은 가격인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만큼 노동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한 방침이다. 게다가 임금인상과 더불어 이번 조치로 공장이나 기업의 이익에 따라 분배 몫이 인상을 받게 되었으므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는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노력동원 운동이다. 천리마운동과 같은 지난날의 노력동원운동이 노동시간 인장의 형태였던 반면 이번 조치는 생산능력의 증가를 추구하는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제고는 생산증가로 연결되어 얼마

“계획경제 정상화 위한 시도”

생산설비할 현대화하고 원자재를 필요한 만큼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북한은 외부의 지원 및 투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수년전부터 북한이 외교장부의 핵심과제로 내미관계의 정상화를 설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미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남북관계의 지나친 진전은 세계붕괴와 그에 따른 흡수정벌의 우려가 있어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고 주저할 수도 없다. 더 이상 경제시스템이 무너지기 전에 독자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최근 경제관련 조치의 배경이다. 가격 및 환율인상은 '고민의 행진' 시기를 거치면서 기대했던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을 공식부문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다. 비공식 부문과 공식부문의 가격이 같다면 비공식부문은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 및 환율인상은 경제 내에 사장되어 있거나 비공식부문에서 사용되던 북한 원화나 외화를 공식부문으로 흡수하여 자본을 자체적으로 동원하겠다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가격인상은 세입의 확대를 이어서 임금을 인상해주기 위한 재정의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다.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을 정상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다소 이르다. 김 위원장의 권력기반의 이론적 토대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그것도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향후 북한은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번 조치만으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조치의 성공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외부지원은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북한은 남북관계에서도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북한 경제심장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필요로 있다. 북한 경제의 상징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 평화구도의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는 따뜻한 지원을 하고, 상업적 차원에서는 경제상에 압박해 냉정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정당당당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북한을 '스포일(spoil)'시키게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社說

고속정 인양도 북한 눈치보나

정부가 침몰된 해군 고속정 인양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처음엔 태풍을 거론하다니 이제 북한을 자극할까 우려해 남북장관급회담 이후로 인양을 늦출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8·8 국회의원 재보선 이후로 인양을 늦추자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국방부는 지난주 한미군사위 MC 발표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고속정 인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전담 부대를 편성했고 국방부 대변인은 "인양은 북측의 유감표명과 관계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인양 시기에 맞춰 정부 안에서 '인양 연기'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민주당 일부에서 8·8재보선 이후 인양을 주장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고속정 인양이 선거에 불리할지 모른다는 판단은 안보와 정치를 혼동하는 정략적 사고가 아닐 수 없

다. 국방은 국방이고 대화는 대화다. 우리 해역에, 그것도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해 침몰된 고속정 하나 인양하는데 원 고리사장이 이렇게 대단 말인가.

고속정이 침몰된 지 한달이 지났다. 고속정을 서둘러 인양해야 할 이유는 많다. 정확한 교전상황의 파악이 가능하고 '실종된 한상국 중사의 시신도' 수습할 수 있다. 6·25전쟁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령을 찾는 미국의 예를 들지 않아도 국가는 전사자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이다.

문제는 정부 당국의 태도가 '북한 눈치보기'로 비쳐진다는 점이다. 북한이 서해교전을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공동 책임' 운운했어도 서둘러 '사과'로 받아들인 것도 문제지만, 북한을 자극할까 두려워 침몰된 선박 하나 해파 인양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문화일보

포럼

북한 경제개혁의 실체

드디어 북한이 의미있는 변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식 명령형 계획경제를 고수해왔던 북한이 한계점에 이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경제의 개선'이란 목표를 내걸고 실리추구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북한은 2001년 초부터 '신사고'를 강조하면서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국 부시연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등으로 '신사고' 노선을 본격화하지 못하다가 최근 다시 경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경제부흥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것은 더 이상 기존의 계획경제로는 식량난 등 만성적인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인구의 10% 정도가 굶어죽은 90년대 엄청난 시련의 연대기를 보낸 북한은로서는 더 이상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근이 미디테크(muddling through)'를 지속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 자구 노력의 하나로 내부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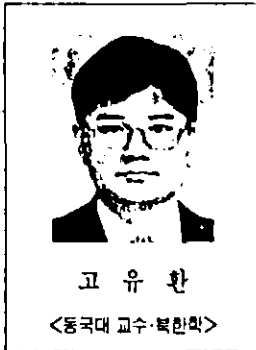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경제개혁 개선 조치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조종현 기자가 '조선일보'가 지난 7월 26

일 평양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경제관리 개선"의 내용을 전함으로써 최근 긴급적으로 알려지 왔던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이 사실로 확인됐다. 북한이 추진중인 경제관리 개선의 기본 방향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보상의 원칙'에서 큰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은 생산 수단의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일련의 개인작업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리보상의 원칙에서 '고실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혁신적 안목으로 모든 경제사업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고수속 실리 보장

실리보상의 원칙에서 추진중인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핵심은 세가지이다. 첫째, 모든 생산물을 '재가치대로 계산'해야 실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도입 및 판매 가격의 인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공장-기업소들이 '년 수입에 의한 평가'를 받는 독립재산제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많은 일을 하



고 유 환 <동국대 교수·북한학>

고 많이 번 사람에게서 많이 판매하고 적게 일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서 적게 판매한다'는 사회주의 판매원칙을 엄바로 실시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며 '시장 경제 도입의 경조'로 해석하는 것은 경제라고 있다. 북한 당국은 도입과 판매 가격의 인상은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화에 의한 유통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도 그것은 생산수단의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테두리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도입과 생산물의 가격을 다시 정한 것은 생산자들의 노동 의욕을 높여 나라의 경제를 빨리 추진해나가는 북

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은 철저한 중앙 계획경제 단위에서 조절하도록 하는 체계가 세워져 있다'면서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 서방 언론의 시장 경제 도입설을 부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시장경제의 도입을 부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경제의 개선 조치는 사회주의 체제 개혁의 초기단계로 당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 경제의 회색화에 따른 시장경제를 촉진할 수밖에 없다. 이번의 경제정책 변화도 지속적인 경제개혁으로 인한 농민시장 중심의 시장경제, 지하경제가 붕괴 온 광업적 산물 이듯이 더 이상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를 압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필연

이제 필연한 것은 북한 지도부의 '자강 해방'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교조적 사회주의관으로부터 벗어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시장을 봉하지 않고는 인간의 창조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이 살아남는 길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로의 공세적인 편입을 통한 경제개혁이다.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社說

北, ARF를 기회로 삼아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담은 북한이 그동안 정체돼 있던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건설한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회의는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개국과 역내(域內) 23개국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자간 정치협상 무대다. 북한으로서는 2000년 이후 2년 만에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이번 회의기간 중 일본·중국·유럽연합(EU) 호주 등과의 외무장관 회담 등 활발한 대외 접촉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특히 북측 백남순(白南淳) 외무상과 일본 가와구치 요리코(河野 洋子) 외상 사이에 예정된 회담은 양측이 북·일(北·日) 수교협상 계기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이번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북·미(北·美)간에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접촉이 이뤄지느냐는 점 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이 걸심을 보려면 북한 당국의 '진심'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진술직 차원에서 이번 회의를 활용하려한다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반면 북한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진지한 자세를 국제사회에 보여준다면 이번 회의는 북한 경제회생의 극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최악의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제제도의 몇 가지 변화시도가 성공하느냐 여부도 결국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외부의 지원이 관건이다.

북한이 이번 기회를 무산시키지 않으려면 할 일은 자명하다. 당장은 우리측과의 공식 비공식 접촉 때 시해교전 사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 나아가 대량살상무기 등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측은 그럴 때만이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지원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매일

2002. 7.30(화)

사설

北 변화 행동으로 보여야

북한이 대외적으로 반대를 빈틈없이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내적으로는 배급제 폐지와 인센티브제 도입 등 경제개혁적 요소들 채택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미·일과의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특히 시해교전에 대한 유감 표명에 이어 미국의 대북북사 파견을 적극 수용할 뜻을 밝히고, 북·일 외무장관회담에 나서는 등 대외관계 개선 움직임도 진방위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한층 관심을 끈다. 북한의 과거 대외진술을 고려할 때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계산된 노림수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실제 대외관계에 있어 아직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은 없다. 외교가 국제정치의 수시학업을 감안할 때 태도 변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명칭이 따지면 이제 겨우 출발선에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백남순 북한외상의 자세는 북의 진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백 외상은 현지에서 일본과 중국, 유럽연합(EU), 호주 외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북·일 회담은 북한이 앞서 요도호 남침범들의 일본 송환 방침을 밝힌 티에서 회담성과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여기에 남북, 북·미간에도 비공식 대외도 이뤄질 것이라는 게 현지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만약 이 자리에서 북측의 유화책이 식량난 등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현시적인 태도변화로 드러날 경우, 북한은 또다시 고립무원의 궁색한 처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을 망심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1994년 핵협상 이후 북한외교 특유의 비관적 견술과 과대포장형 외교행태를 익히 파악하고 있다. 대화에 응하는 것이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인양, 착각해서는 누구의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개혁과 개방 노력을 진심으로 보여 실리를 쫓는 외교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한의 '똥' 외교와 대담한 태도변화를 기대한다.

사설

이회창 후보의 우려스러운 대북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대북관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강성을 띠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당직자 회의에서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을 '대단히 미흡하다'고 규정하며 '분명한 사과를 다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균형 감각을 상실한 냉전수구적 사고'라며 무책임하다고 규탄했다. 지민련도 '애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이 후보가 여론이 부정적이지 않음을 비판하고 나선으로써 남북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에 나섰다.

무릇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대북정책도 정당들 사이에 시각차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대북관이 냉전적이거나 뚜렷한 일관성이 없다면 이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 후보는 처음 북한의 유감표명이 발표되었을 때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당시 북한의 유감 표명을 '책임 회피'로 맹렬하게 반대한 것은 지민련뿐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이 후보와 한나라당의 시각이 '미흡'에서 '사과 개요구'로 바뀌게 된 중간에 여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일부 수구신문들의 냉전적 여론몰이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유감을 사과로 인정하지 않은 지민련보다 한나라당이 이 후보의 대북관이 더 문제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 후보의 대북관이 뚜렷한 철학 없이 냉전적 언론사들이 조성한 여론몰이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선풍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후보는 이들의 병역면제로 안보를 강조하는 정책에 신심성을 의심받고 있어 더욱 그렇다.

북한의 유감 표명과 남북대화 재개 제의에 미국 정부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의 대북 강경몰이에 편승하여 바뀌는 이회창 후보의 대북관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대북 정책은 그렇게 타리타리어나 일부 언론에 휘둘려 견집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사설

주목되는 한반도 변화기류

북한이 서해교전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북한이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재의한 데 대해 정부가 조만간 이에 호응하는 답신을 보내기로 해 내달 초번 남북대화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미국의 특사 방북을 수용키로 하고 미국은 이를 긍정 평가함으로써 북·미대화의 길이 인단 열리게 됐다.

북한은 또 일본 여객기 요도호 납치범 4명의 일본 귀환을 용인할 의사를 밝혀 오랜 북·일간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오늘과 내일 브루나이에서 각각 열리는 '아세안+한·중·일' 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한·미·중·일·러간 양자 및 다자회담, 북·일 및 북·중 외무회담 등 한반도문제의 직·간접 당사자가 모두 나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문제를 협의하는 장을 펼친다.

이는 북한이 서해교전에도 참구하고 대화로 방향을 바꾼 것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북한의 이런 대외관계

개선 움직임은 최근 일련의 '경제관리 개선책'을 시행한 것과 맞물려 북한의 변화가 좀더 깊이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현재 ARF 기간 중 남북, 북·미간 외무회담에 소극적이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실질적인 것인지, 단지 수사학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서해교전을 통해 '변화하지 않으면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면 ARF에서 그런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참신을 씻도록 해야 한다.

미국 부시 행정부 역시 공격적 방안을 자제하고 일관된 대화원칙을 고수하면서 북의 변화에 보상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확진론'을 제기했던 남한내 일부 세력의 자성도 필요하다. 최근 화해기류가 단순히 '서해교전 이전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한 단계 성숙된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남고 편협한 틀을 벗어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와 조건

정부는 북한이 제의한 남북장관급회담 실무협상을 개시하지는 않겠으나 이른바 오는 중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무력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수준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남북대화가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남북관계는 특히 국민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너무 성급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국가정책 결정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이 "사실상 사과했다"고까지 한 것은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의 장래를 위한 보다 대응적 견지에서 볼 때 대화 테이블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회담을 본격 추진하면서 회담의 생산적 내용과 성과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해교전예 대한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 문제에 보다 선의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을 통해 돌발적인 군사분쟁을 방지하는 군사직통전화 개설을 비롯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합의한 현안은 모두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

이번 남북대화 재개는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마무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조급함을 앞세워 회담 개최에 만족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처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북한도 회담 제의를 통해 시해사태 재발 방지와 철도도로 연결 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 구체적인 현안문제를 제시한 만큼 행동으로 진실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설

북한 변화 차분히 지켜보자

북한경제의 봄이 바뀌고 있다. 북한의 대외장구 노릇을 해온 재일조선인총연맹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북한에서는 쌀 등 생필품의 가격과 임금이 최고 몇 백 배 인상됐으며 원유가 현실화되고 기업의 생산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제가 도입됐다고 한다.

동구권 몰락 이후 자급자족경제의 고풍고수했고 그 외에서 사실상 자국민 부양능력을 잃었던 북한이 마침내 경제개혁을 본격화했다는 점이 크게 주목된다. 다만 이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실험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현 상태로는 더 이상 체제유지조차 어려워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차원의 개혁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변화가 그간 만성적인 생산력 부족으로 암시장과 같은 비공식 부문이 비대화되면서 공식부문이 위축되고 계획경제 운영에도 애로가 만연던 것을 시정하지는 못하면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경제개혁 변화가 상당 부분 의도된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물가와 임금을 동반 상승시키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공급측의 생산성 향상 노력과 소비자들의 구매력

상승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공급력은 단기적으로 늘기 어려운 공급능력에 대한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높은 구매의욕은 곧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경제불안 요인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단연히 이를 위두에 뒀을 것이다. 이번 개혁을 위해 북한 당국이 꽤 오래 전부터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북한에서는 국가가 가치를 통제하므로 인플레이션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억제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장기화되면 또다시 비공식 부문을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북한도 시장가격형성방식에 대한 고민과 수급 조절, 즉 시장경제시스템을 일부 수용하는 단계로 전환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이 같은 변화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확대 해석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폄하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 스스로가 국민부양능력을 갖춘 경제체제로 변모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마땅히 도와야 할 것이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기본적으로 상호이익을 우선시하는 남북관계를 도모해야 한다.

시론



高有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한계북향경제 재건 '몸부림'

북한의 경제경제 개선 조치와 남북관계 정상화...

과 대외관계 확장 등 새로운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北 대화제의 속셈은...

브레즈네프 도입하는 등 계획경제 개선 조치를 통한 자구노력과 변화의지...

성년용 거치지 않고는 도쿄로 갈 수 없다는 현실인식 아래 북-미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로 높아졌고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돼 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시하고 북한을 '외의 속으로'...

고 경제재건을 위한 재임을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원한 테러지원국 명단을...

對美 관계개선 교두보 확보

그리고 북-미 직대관계를 해소해야 안보위기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다.

기존의 주체노선을 수정하여 서방세계와의 대타협을 통한 경제재건을 모색하는 북한의 '강성부흥전략'은 획기적 정책전환임을...

/동국대교수·북한학

○본문의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海外 칼럼



로버트 아인혼 (Robert Einhorn)

북한이 사대교섭을 '우법적으로 입안'...

해상 '북항 규칙' 관심 갖길

북한 김일성이 지난 25일 보낸 메시지는 진정한 사대였는가...

가. 항포 발사를 시작한 북측 경비정장이었던가 아니면 평양의 지도부였는가...

남북대화, 군사적 신뢰에 우선순위를

그러나 남북은 단순히 사대교섭이 있기 이전, 그리고 임동원(林東源) 특사의 평양 방문 이후에 남북간에...

이 될 수 있을 해상 '북항 규칙' 같은 것에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 필요로 하는 남북 협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6·29 사대교전도 남북으로 하여금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게 했다.

숙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 놓고 그걸 해결했다고...

대화제개 실천케 압박해야

그러나 대화 제개가 북한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대화 제가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겠다고...

최상대등 명칭시키고 한국의 오랜 관심사들을 추구할 기회를 확보해 주는 것일 뿐이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사대교섭 이전의 남북관계로 되돌아가는 것 이상의 결과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정부, '사과 미흡하다' 왜 말 못하나

정부가 어제 북한에 보낸 전화통지문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서해교전어 대해 "귀족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의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스스로 '북한의 계획적 도발'로 규정했던 서해교전을 이런 식으로 매듭지으려 하는 것 같아 말문이 막힌다.

북한은 지난주 전통문에서 서해교전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며 남북 쌍방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측이 답신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북한의 미흡한 유감표명은 물론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까지 수용할 셈이었다.

정부는 '무력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는 했으나 책임자 처벌은 숨그러니 사라졌다. 회담을 열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통일부의 설명이 있지만 공식 문서로 남북 전통문

에서 언급하지 않은 문제를 비공개 회담에서 따지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 말을 믿을 것인가.

정부의 답신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반드시 관철시켰다고 다짐한 '명백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 국민 대다수의 여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이 급하고 아쉬워 북한의 통지문에 회답하듯 그런 수준의 답신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김 대통령이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앞뒤 안 가리고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벌써부터 정부 내에서 장관급 회담이 잘 되면 북한에 30만 t의 식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북한이 쌀을 받는 조건으로 다소간 책임을 인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식량지원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별도의 사안이지 도발사태 해결을 위한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관급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서해교전을 유야무야하는 빌미가 된다.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서는 악신례가 될 뿐이다.

한국일보

2002. 7.31(수)

아침을 열며

강정인 서강대 정외과 교수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장관급 회담 개최를 제의해 왔다. 여당은 일단 '미흡하지만 수용'을 주장하고, 야당은 분명한 '사과'를 포함한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되지 않는 한 수용할까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약 일자를 북측에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해교전 직후 입장을 방문했을 때 햇볕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른 한편 정부는 국민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경제지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 직접 수준의 승진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용어에 담긴 '수동적 북한'

그러나 나는 평소에도 '햇볕정책'이라는 단어에 묘한 거부감을 느껴 왔다. 햇볕정책이 흡수통일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북한

과의 화해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이 함축하는 의미는 북한을 통일의 한 주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여전히 통일의 대상으로 파악한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햇볕정책과 북한의 '他者化'

분단 이래 적대적 대치 상황에서 역대 남관정부는 북한을 '분명적인 화해와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곧 변화의 여지가 있는 '갈대적 타자(他者)'로 호명해 왔다. 한국전쟁 이후 널리 회자되던 '무찌르자 오랑캐'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북한 공산주의는 '야만(혹)'으로 치부되어 왔던 것이었다. 본래 오랑캐란 공화시상에서 분명과 이분화 가르는 이분법으로서 변방만족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나아가 최근 북한은

세계의 패권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강대국' 또는 '불량국가'(rogue state)라는 새로운 명칭을 얻게 되었다. 서구와의 친척과 함께 어제는 북한을 미국식 호칭에 따라 '불량국가'라고 부르는 국내의 정치학자들조차 적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호칭들이 북한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암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햇볕정책 역시 문제가 있다. 북한에 대한 화해와 협력을 일관되게 추구하는 햇볕정책의 기본 정신은 존중을 받지만, 햇볕정책 역시 북한을 통일의 과정에서 건실한 협력해야 할 대등한 패

와 실득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기의 기본적인 기정은 나그네가 예당 초 고향을 벗을 의사가 없다는 것이며, 그렇지만 비합과 해가 웃을 벗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기정을 햇볕정책의 내상인 북한에 적용하면, 북한은 예당초 화해와 협력의 의사가 없다는 기정이 나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햇볕정책에 따라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상이 된다.

대화와 협력주체로 이해해야

따라서 햇볕정책의 대상이 되는 북한으로서 명시적인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는 반감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함의, 곧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자발적인 의지가 결여된 단순한 대상이라는 함의에 대해서는 결코 답답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햇볕정책은 남북관계에 전개되는 화해와 협력의 공을 상대반인 북한을 제쳐놓고 남한 정부가 독점하려는 독선적인 의도도 감내하고 있다. 정책 당사자 입장에서는 모든 정책에서 상대반을 불가피하게 객체로 삼았다고 출발했지만, 그 정책의 명칭에서부터 명시적으로 상대반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오해와 편견의 원인에 반한다. 하물며 상대반이 흡수통일의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대외와 협력의 동반 통일의 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社說

‘사과·재발방지·책임자 처벌’을

정부는 이제 북한측에 남북대화 재개를 공식 제의했다. 북측이 서해교전 시대에 대해 모호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남북접촉을 제안한 지 닷새 만에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응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께는 일의 주도권은 늘 북측에 있어왔고 이번에도 그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남북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2일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다. 그것은 김 대통령과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짐했던 약속들이다.

지난 4월 임동원 특보 방북 이후 한때 탄력을 얻은 듯했던 남북관계가 궤도 이탈한 책임은 전적으로 선제기습 같은 일을 저지른 북측에 있다. 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 서해사태에 대한 북한의 이른바 ‘유감표시’는 모든 면에서 대단히 미흡한 게 사실이

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대화에서 정부는 스스로 밝힌 북한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을 북측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정부는 남북 김현추진위가 언리면 북한에 쌀 30만 t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해사태에 대한 충분한 사과 없이 북한이 또 쌀만 챙기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대화를 재방놓자는 게 아니라, 상벌(賞罰)의 경계를 분명히 해두는 게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보약(補藥)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지적인 것이다.

또 김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한 환상은 없으며, 임기말에 무리하게 남북관계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임기말에 굳이 남북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 결코 개인적인 또는 정파적인 정략과 집착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만약 김 대통령이 이 같은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지 못하면 심각한 국민적 지향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한겨레

2002. 7.31(수)

사설

미국, 정책권고안에 귀 기울이길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사회 각계 원로들과 시민단체 대표 등 110여명이 서명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권고안’이 그제 발표됐다. 사단법인 평화포럼(이사장 김원룡 목사)이 1년 동안 준비해온 이 정책권고안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원칙으로 무력이 아닌 평화적 해결과 남북한이 주도하되 국제사회 지원도 필요하다는 등 네 가지 원칙을 밝혔다.

권고안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공동체 등 국제사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북 전력지원을 꾀하자는 제안이다. 북한에 에너지 문제가 워낙 심각한데다 현재 건설 중인 경수로 2기 완공이 애초 예정보다 크게 늦어질 전망이어서 대북 에너지 지원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북한 쪽의 호응과 협조를 얻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정책권고안이 밝힌 대로 국제 컨소시엄이 만들어

질 경우 대북 전력지원 사업이 남한 안의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국제적 지원을 끌어올 수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에 적극적으로 있을 때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열렸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이 정책권고안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사회의 원로들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해결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평화포럼은 지난해 5월에도 한국사회 원로들과 사회단체 대표들의 동의 아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우려를 나타내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담아 미국에 촉구한 일이 있다.

미국 정부가 이런 합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한반도 평화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남북대화 재개에 유념할 일

사설

국민일보

2002. 8. 2(금)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이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브루나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에서는 북·미·북·일 대화 재개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미 등 관련 당사국간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해 추가 바람직한 사태 진전이다. 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 일변도였던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남북대화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정부가 왜 그토록 서둘러 북한측 제의를 수용해야 했는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당당하게 북한에 요구 혹은 주장할 것은 하고 나서 대화를 재개해도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과 재개를 오락가락하는 대화, 그것도 무려도발을 일으킨 북한의 분명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대화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정부는 자문(自問)해야 한다.

그러나 기왕에 정부가 '대화 우선'을 내세워 장관급회담을 열기로 한 이상 우리는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또다시 '퍼주기' '지지세'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6·29 서해교전으로 국

민의 감정이 격앙돼 있는 마당에 굳이 상호호주의까지는 아니라 해도 얻는 것 없이 식량 등 지원이나 해주고 마는 회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회담을 통해 북측에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보장,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관철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확공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약속이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

이 현안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 경우 무려도발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안보론 희생한 어떤 성과도 성과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장치 마련에 회담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군사적 신뢰장치가 없는 남북대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북한도 거기에 적극 호응해야 온다.

북한은 앞서 6·29 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이 '공동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물론 그것은 본질적으로 북한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고 교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사(修辭)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력충돌 예방을 위한 공동노력을 언급한 이상 그 말에 책임을 지야 한다.

朝鮮日報

2002. 8. 2(금)

社說

다시 '한반도 국제정치'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배남순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31일 약 15분간 만나 미·북 대화 재개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또 제임스 켈러 국무부차관보가 이르면 이달말쯤 북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작년 1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1년8개월이만에 이렇게 본격적인 미·북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북 대화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미·북간에 심각한 한반도 안보 관련 현안들을 해결키 위한 길고 어려운 협상의 출발인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그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과 미사일, 재래식무기, 인권 등 인도주의적 사안들을 다룰 방침이라고 천명해 왔다.

이 중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2003년 한반도 안보 위기설을 낳고 있는 긴급한 현안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원칙있는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심을

갖고 협상하되, 과거 북한이 보여온 '마라톤 전술'을 되풀이하려 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북 대화에서 한국이 국외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반도 안보와 직접 관련된 사안인 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미·북 대화 재개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이상 DJ식 대북정책의 상피에 연연하기보다는 한반도 운명과 직결되는 북한 핵·미사일 같은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태도가 주목된다. 과연 최근 북한이 보여준 한·미·일 등을 향한 대화용어가 단지 경제난 등에서 비롯되는 체제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보려는 전술적 변화에 불과한 것이라면, 한반도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미·북 대화는 북한이 진정 변화하려 하는가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설

北에 따질건 따지고 줄건 주자

북한은 오늘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한과의 장관급 회담 실무접촉을 시발로 한·미·일과 연쇄적인 회담을 하게 된다. 북한이 자제적(自制的) 노선에서 탄피, 대외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선화한 결과다.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 접어들어 한반도 전세의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시키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선 더욱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에 앞서 가장 유의해야 할 대목은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 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시대적 상황에서 적합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끊임없는 시비의 대상이 돼 반신불수 상태가 된 배경을 정부는 성찰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 상당수의 정서와 여론을 무시한 채 포용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따라서 정부는 서해교전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의 보장을 받아내는 것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가시화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북 포용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그래야만 북한도 자기를 멋대로 해도 남쪽이 따라올 것이라는 과거 다선에서 벗어나 남한을 어렵게 여기고 진중하게 대할 것이다.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민족의 장래를 고민해야 남북 문제는 해결의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접촉을 앞두고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접촉 방향은 여간 심망스럽지 않다. 이미 남북 간 막후접촉에서 장관급 회담의 8·15 이전 개최를 비롯해 의제 등이 사실상 타결돼 이번 실무회담에선 일정의 구체화 등 기술적인 문제만 논의한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리면서 우리는 실무접촉임명정 서해교전 문제를 당연히 따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바탕에서 북한의 경제개혁을 도울 수 있는 대북 지원책이 모색돼야 여론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따질 건 확실히 따진 다음 남이도는 뺨을 지원하겠다면 누가 반대할 것인가.

대한매일

2002. 8. 2(금)

사설

북한, 국제사회 진입 계기 삼아야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담에서 보인 북한의 태도변화는 의미 있다. 18개월 만에 북·미 외무장관 접촉이 있었고, 북·일 간에는 공식 외무장관회담이 열려 국교정상화를 위한 국장급 협의 등 구체적인 합의까지 도출했다. 특히 북한은 어제 백남순 외상 명의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대북특사 파견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발표함으로써 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남북 간에도 최성훈 외교부 장관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나, 백 외상은 일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와 같이 억지질 쓰지 않은 북의 태도변화에 실린 진심성울 약간은 엿볼 수 있어 다행스럽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라고 본다. 백 외상은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 "미국과 토론해 봐야 한다."며 논의할 수 있다는 진전된 태도를 보였으나,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여전히 불투명하다. 남북 장관급회담을 비롯해 북·미, 북·일간 전방위 대화가 함로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과거 협상 태도로 미루어 이번에도 '수 톨리면 깔아놓은 판을 거두어서 빗장을 걸고 들어오는' 바람갈 외교전략을 구사할 공산은 여전히 있다.

북한은 최우선적으로 남북대화할 순조롭게 추진해야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이야말로 북한은 진심해야 한다. 개방노선으로 선화하면서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해 대화에 나선 만큼 과거 불신을 털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의 '실력'을 다 알고 있는 만큼 괜히 허장성세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또 대내적으로 인센티브 도입과 같은 시장경제 시험에 나선 마당이므로 외교전략에도 '시장의 실리 원칙'을 시험 삼아서라도 도입해 볼 것을 당부한다.

北-美대화 재개한다지만

어제 끝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북한은 북-미(北-美) 대화 및 북-일(北-日) 수교협상 재개라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과 풀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회동은 지난 초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이래 중단됐던 북-미 대화의 물꼬를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은 지난주부터 잇따라 미국에 대해 '조건없는 대화' 의지를 밝히었다. 미국측도 잇그제 도널드 럽즈랜드 국방장관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전에 없이 유화적인 태도(對北)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할 통해 곧 제인스 캔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북사 직적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등 북-미 관계가 안정적인 협상체도로 진입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고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긴 어정의 첫걸음일 뿐이다. 파월 장관은 이번 백 외무상과의 회동에서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 재래식군비 감축 문제 등을 향후 북-미 대화의 의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며, 앞으로 북-미 대화가 가야 할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ARF 회의의 결과가 '질반의 성공'에 그치지 않으려면 북-미 양측은 앞으로 더욱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사찰 수용 시기와 관련해 '2003년 위기설'까지 대두된 마당에 이번 기회가 그저 대화를 위한 대화정도로 그쳐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어렵게 산리놓은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한이 그렇게 행동할 때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토대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

2002. 8. 2(금)

사설

한반도에 부는 대화와 변화의 바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등장 이후, 그리고 특히 서해교전 이후 열어붙었던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남북, 북-미, 북-일 사이의 대화 바람에다 북한의 경제 개혁 추진 등과 맞물리면서 큰 전환의 길목에 들어 서고 있다. 이번 대화와 변화의 움직임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움직임의 전면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누그러뜨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 평가하고, 지금 제안된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남북관계와 북-미, 북-일 관계는 서로 보완적인 것이어서 서로간의 관계 진전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상승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사태발전은 북한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경제개혁 노력에도 큰 힘을 보태주게 된다. 북한으로서는 그들의 경제개혁 과정에 질실하게 필요한 자본을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은 북-미 관계 개선으로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북-일 수교협상 진전으로 전후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적극 대화외교에 나서며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새롭게 싹트는 한반도 주변의 대화 움직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해내야 할 일들이 많다. 서해교전과 같은 분쟁의 불씨를 없애는 노력을 적극 해야 하며,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 재회 등 중단됐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개혁 노력이 큰 부작용 없이 성공을 거두는 일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남쪽과 국제사회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경제개혁 과정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는 식량과 에너지 부족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도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러 현안들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社說

北과의 대화, 이번엔 잘 될까

서해교전으로 냉기류에 휩싸였던 한반도에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 북미, 북일 대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 이후 남북장관급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선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풀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및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이달중 대화재개와 국교정상화 교섭에 합의했다.

북미 외무장관 회담은 15분간의 비공식 회동이었지만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18개월만에 처음 열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에 합의한 것은 북미관계 정상화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북일간 국교정상화 교섭을 위한 외무성 국장급 접촉과 적십자회담이 이달중 열리게 되면 북미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이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는 데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필요

성을 자각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이미 개화개방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막후 중재노력도 일조했다. 남북-미-일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대화가 성과를 거둬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가 도래하길 기대한다.

북한이 현재 계획중인 경제개혁의 추진과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대화와 개방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북한이 진정 대결이 아닌 대화를 택했다면 협상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벼랑끝 전술이나 치고 빠지기식의 계산된 행동으로 나올 경우 실익을 얻지도 못하고 불신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번 대화가 북한과 한-미-일간의 높은 장벽을 허무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북한이 진지성과 성실성만 보인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에포크(epoch·획기적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경향신문

2002. 8. 2(금)

사설

북·미대결 푸는 돌파구돼야

풀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어제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을 만나 북·미간 대화 재개에 합의, 부시 미 행정부의 1년6개월에 걸친 '대립과 모색'의 시기에 전환점이 마련됐다. 곧 미 특사 방북으로 시작될 북·미간 대화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양자간 갈등과 대립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나서 얻은 결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당초 김정일 정권을 교체대상인 듯 거론하고 미국 외교정책 결정자 사이에서 대북 강경론과 온건론이 동시에 나오는 등 대북정책에 혼선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대북정책 방향에 틀이 잡혀가고 있는 점은 대화가 좀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준다. 도널드 럽즈캠프 국방장관이 최근 김정일 정권을 교체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것도 그런 흐름이다. 북한도 미국과의 대결이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출발은 늦었지만 북·미간 대화 재개 합의를 평가할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양측은 아직 서로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지도자가 가장 위험한 무기를 지니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한 말이나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진짜 나쁜 정권은 결코 개혁하지 않을 것이므로 답답 것이 아니라 대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한 발언도 여전히 유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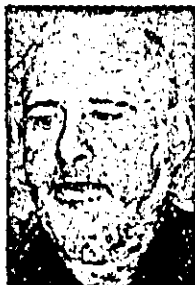
미사일,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 재래식 무기 감축 등 파월이 제시한 세가지 의제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 북한은 이미 재래식 무기를 주한미군 철수 등 다른 전제가 없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발표, 북·미대화의 전도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눈앞에 닥친 '2003년 핵 위기설'의 해소도 쉽지 않다. 북한이나 미국 내에서 다시 강경론이 고개를 들 여지도 있다. 그러나 방법은 달리 없다. 상호 대화상대담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신뢰있는 인행을 하고 어떤 난재라도 대결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별기고

조엘 위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北美관계 부시에 달렸다

플린 파워 미국 국무부 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 회담 회동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한편으로 톨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또 다른 장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후속 대화가 열리겠지만 전도는 험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많다.

부시 행정부가 취해온 대북정책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의 관료들은 분열돼 있다. 보수파들은 포용엔 거의 관심이 없다. 이들이 숨기고 있는 목표는 북한 정권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무력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보수파의 주요 이론가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현 단계에선 군사력이 경쟁력 있는 옵션이 아님을 시사한 것이다.

美 특사파견 평화구축 전기로

온건파도 포용엔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이들은 대북 감경책을 지지하지 않는 한국 일본의 견해 등 실제적 현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온건파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협상이 북한의 대량살상 및 재래식 무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 머지 않아 서해교전 후 철회됐던 미 특사의 방북 시기가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적인 관건은 대북 대화를 보수파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진전시키는 데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온건파가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데 이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이 99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의 모델이다. 즉 미 특사는 협상과 대결을 북한이

택할 수 있는 2개의 길로 제시할 것이다. 특사의 설명은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 등 부시 행정부의 수사(修辭)로 가득 차겠지만 후속 대화를 위한 문은 열어 놓을 것이다.

보수파가 우위를 점할 경우엔 입장이 보다 감경해질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대화 재개 전에 북한이 안보 및 다른 현안에 관해 지켜야 할 전제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92년 1월 미국이 북한과 첫 고위급 접촉을 가졌을 때 미국은 이 같은 입장을 취했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앞날은 험난할 것이다. 북한에 부시 행정부는 위협이자 기회이다. 위협은 부시 행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거라는 숨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기회는 부시 행정부가 감경한 수사와는 달리 거래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진정한 협상의 길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의제는 어렵고, 상호불신은 대단할 것이다. 게다가 대화를 시작하는 것과 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북한을 다루는 데 경험이 많은 미 관료들은 이제 거의 없다. 예전엔 로버트 갈루치 대사 같은 협상대표는 장관급 관리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대북정책 협성을 도왔다. 그러나 잭 프리처드 대북 교섭대사와 같은 부시 행정부의 협상팀은 연조가 훨씬 낮다.

힘든 협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평양의 정권 교체와 같은 부분별한 정치적 망상을 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는 북한이 제기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한 거래를 차단하고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저해할 뿐이다.

미 특사의 방북이 장차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기초를 닦는 데 결정적 전기를 올 부시 행정부가 이해하기를 바란다.

여의도 포럼



박명서 경기대 교수 정치전문대학원장

대북 포용정책의 방향

대북 포용정책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포괄적인 논의구조 형성 과 남북간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현재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발생한 사체 교전사태로 '이론'의 회색이 발생하였고, 과거에 비해 북한의 반박은 유감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받아 들일 것인게, 어딘가의 문제점 놓고 어이간지의 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방을 나눈의 국민 여론을 좌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종지 태도로 인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역시 만만치 않다. 국내 학계, 정계, 언론계 일각에서는 한 정부의 유화적 대북 정책의 옳고 내지 새조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냉전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한 정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사실 김대중 정부는 김권 출범 당시 국제단상의 변화 속에 냉전적 사고에 따른 남북한간 대립과 갈등은 더 이상 한반도 문제를 평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였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붕괴보다는 체제존속이라는 대북 정책의 구사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북한의 변화가 남북한 관계개선의 중요한 관건임을 인지하고 국내외적 지원을 통해 이를 유도해내는 강제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북 압박외교를 통한 흡수통합 방식이 남북한 관계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김대중정은 일

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구사했다. 이는 김대중정의 일관된 대북 정치철학과 남북한간 '상생의 정치'라는 당위와 현실의 집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는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대북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보수 집권연 불안 요인을 동시에 재강화하기 때문이었다. 교유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법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정책 구상은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집산력 외화 필요성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간 협정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에 북한은 상징적으로 삼리 추구를 위해 상당 부분 남한의 정책이 호응하였다. 북한은 금강산 개방, 각 분야 인사 방북 허용 등 대 북 남한에 대해 부분적인 개방

지세를 보였다. 또 북한은 지난 번 헌법 개정시 경제 관련 조항에 가격·원가 등 시장경제적 요소들도 도입했고, 경제권료 등을 대상으로 자본주의 경제·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주목되는 일이다.

최근 북한은 일장 부분 배급제를 폐지하고 유통제를 도입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결국 포용정책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남한이 확보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로의 길을 확고히 하는 접근이며 북한의 체제붕괴보다는 체제변질을 유도하고자 하는 처선책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선을 앞두고서 국내 여론이 심상치 않다. 한 정부의 상징인 햇볕정책이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야당의 후보까지도 '대북한 관계

정책을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며 햇볕정책의 한계점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 수준은 비판이 아닌 각본 차원의 문제 제기로 보인다. 일련의 도발사태들로 인해 남한의 유연한 대북 자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포용정책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보니 일시적인 견제이나 재검토가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 강부에서는 누가 장권을 잡든 대북문제만큼 북한에 대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유연하고 신중적으로 대북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문제는 일시적 감정이 아닌 시건으로 단정지어 결정할 수 없다. 지난 50여년간 남북한간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끊어 가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많은 대안이 없는 남북한 관계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현시점이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대북 대결정책은 남북한 긴장완화와 민족의 잠재력 위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북 포용정책에서 않은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선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정책의 원칙보다는 정책의 정교성, 실천성, 완급 조절 등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한겨레

한반도에 다시부는 훈풍



이원섭 칼럼

모처럼 한반도에 따뜻한 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서해교전이란 악재를 낫고 남북한, 북-미, 북-일 관계가 동시에 급진전되는 형세다.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남북 정권급회담 재개, 미국 특사파견 환영 성명 등으로 이어진 북한의 '변산'은 현실화 기까지 하다. 놀라운 상황 변천이다.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에 참석한 백남준 북한 외무상과 같은 과정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이뤄진 '삼파 회동'은 역사적 만남으로 길이 기록될 것인가. 두 사람이 만난 15분은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뒤 1년 반 남게 남북관계 개선을 거듭하던 북-미 관계 급 대화 쪽으로 돌려놓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머잖아 제임스 클리 국무부 차관보가 미

국 대통령 특사로 북한에 파견되고, 본격적인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큰 데다 강경 매피들의 견제 때문에 양자가 회담을 시작한다고 해서 좋은 결실을 맺 것으로 숙 단하기는 어렵다.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해결점이 무겁고 난해한 의제들이 놓여 있다. 그러나 양국이 힘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기 로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다. 여기에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 합의까지 보태었다.

북한의 '경제개혁 모험'

북한의 이런 놀랄 만한 변화는 체제의 존 방법을 갖고서 대대적인 '경제개혁 모험'에 나서는 미당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권력이 있을 터이다. 내부에서 엄청난 개혁을 추진 하려는 데 외부에서 오는 압박을 줄이는 것은 당면 과제다.

남북대화도 급진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차원의 8-15 공동행사에 남북 체육회담 등이 회에 분위기를 돋울 터이다. 오늘부터 열리는 정권급회담 실무접촉에서 논의되겠지만, 남북간 철도 연결, 이산가족 상봉 외

에 군사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 서해교전 사태에서 보았듯이 남북간에 사이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만 삐끗해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남북 관계는 일시에 공포 앞어놓는 일이 반복된다.

차재에서 서해상의 꽃게잡이 남북 공동으로 구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 또 갈등이 불거질지 모른다. 현재의 북방한계선이 분명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때그때 땀침차방으로 넘어가고 해결을 뒤로 미루니 까 분쟁이 재발한다. 북방한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남쪽과 이를 분장 수역으로 부각시키려는 북쪽의 속셈이 맞부딪쳐 왔을 총돌의 원인이 된다면 근본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북한의 유감 표명이 있기 전 농림부는 재고 쌀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다가 사료용으로 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료용으로 전용하는 데 드는 비용(100만당당 2500억원)이 북한 동포들에게 지원하는 비용(2122억원)보다 높다는 논란부 분석이 아니더라도, 동쪽이 굶주리고 있는데 재고쌀을 사료용으로 쓴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인간적 행위다.

큰 틀에서 보면 전례지원도 마찬가지다.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북한으로서도 여러차례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전례지원 문제는 북한 경우도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져 보상은 논란과 맞물리면서 중요성이 더 커졌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공동체가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만들어 북한에 전례를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는 길이 속고할 만하다. 대북 전례지원이 넘치처럼 굶고 식는 남북 여론에 좌우할 위험을 막고, 북쪽도 신뢰할 수 있는 반응을 준다는 점에서 두루 유용하다.

쌀·전력 지원 카고우면 말아야

한나라당 정철근 의원이 민주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담판을 통해 대선이 지지도를 높여 한다고 '신북풍 음모론'을 제기한 것은 그리 되지 않도록 미리 책기를 북으려는 정략적인 냄새가 짙다. 남북 사이에 물방으로 어떤 협상이 오가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2년 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담판의 담위성과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줄이고 평화체제를 굳히는 데 꼭 필요하다. 민족 차원에서 반겨야 할 일을 놓고 대선전략 차원에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논설실장 wslee@hanu.co.kr

社說

탄력 붙게 될 북미대화

미국과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현재 중립상태의 북미대화 재개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월 미 국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상은 국제 전략적인 비공식 접촉을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또 이틀 사이 내 미국의 대북특사들 평양에 파견키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파월 장관은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대화정책을 설명하고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6.15의 합의 제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제네비합의 이행, 재래식 무기감축안 등을 제시했다. 회동직후 백남순은 양국간에 제임스 캔러 미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가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해교전사태를 계기로 취소됐던 미 특사의 평양 파견 재개는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자간 정치협상의 열린 무대에서 북한이 미국과 만나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하고 또 지지한다.

내전집에 북한을 더 이상 고립상태에서 머물러 하지 말고 열린 사회로 나와 국제적 신뢰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ARF 외무장관회의가 결과적으로 서해교전 사태로 냉각된 한반도 전체를 대외국면으로 진전시켰다. 북한의 이해적인 유감 표현이 주효했다. 미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회담을 보였다. 린스켄트 국방장관은 회담을 통해 미국은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 정권의 교체를 시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사 양해 북한체제가 타도의 대상이 아님을 공식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자신들이 평화 파괴국이 아님을 알리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해교전과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북미, 북일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북한, NLL 거론할때 아니다

남북한이 3일 금강산에서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우리는 이 회담이 남북관계뿐 아니라 향후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접촉은 서해교전 이후 처음 있는 남북 대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며칠동안 북한이 보인 유연함은 긍정적이다. 더욱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북한은 미국 일본과 북·미대화 및 북·일수교협상에 합의했다. 이는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표명을 한 이후에 나온 성과다. 남북대화에서도 북한은 이러한 기초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은 우선 서해교전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북간 갈등인구 등 남북협력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접촉과 때맞춰 내놓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철폐 주장 등은 매우 실망스럽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발표한 백서중 통해 NLL을 거론했다. NLL은 서해상의 해상경계선이 아니며 NLL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 및 남북 대화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2일 나온 북한의 유엔사 장성급 회담 제의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이러한 엉뚱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서해상에서의 안전한 어로작업을 위한 방안 등 실질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남측대표들은 북한의 임방적 주장을 배격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을 위해서는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측의 분명한 반성과 함께 성실한 대화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社說

왜 이 시점에서 NLL 시비인가

북한은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백서를 통해 북방한계선(NLL)의 무조건 철폐와 함께 대미협상의 새로운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조평통이 이례적으로 NLL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직후에 유엔사가 설정했고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쌍방이 관할하는 지역을 인정한다고 되어 북한도 사실상 실체를 인정해 왔다. 그럼에도 북한이 NLL문제를 담보로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남북대화 재개가 눈앞에 있고 미국의 대북특사 방북과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등 한반도문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NLL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북방한계선

을 고집하는 한 전면전경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며 위협적 인사를 쓴 것은 회담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은 앞으로 대미협상에서 NLL의 비합법성을 주장하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카드화함으로써 미국의 협상압박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북한이 2일 유엔사에 군장성급회담을 긴급제의한 배경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 서해교전에 대한 책임추궁 공세를 피하려는 사전 봉쇄전략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한반도문제가 국제화 추세에 있고 남북대화 분위기가 성숙된 시점에서 NLL문제가 또다시 쟁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에서 NLL시비를 제기했다는 의혹을 분식시키기 위해서도 남북대화 성과에 최선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東亞日報

社說

금강산 남북회담을 주목한다

제7차 장관급 회담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금강산에서 시작했다. 이번 실무회담은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을 재의한 것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는 지난주 분반에서 정부가 남북대화에 시동러 나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비협조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 듯이 효용하고 나서는 것은 진사자까지 낸 터에 정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참지 않은 국민 여론을 무릅쓰고 북한의 재의를 받아들였다.

이차과 실무회담은 시작된 만큼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김조한 대로 시에 도발에 대한 북한의 좀 더 확실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개인사 처분을 얻어야 한다. 차기 장관급 회담의 시기와 의제 등을 결정하는 일은 그 다음 문제다. 우리는 정부가 북측에 대해 요구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넓게 보면 이번 실무회담은 올 하반기 한반도정세 진

반을 내다볼 수 있는 첫 행사라는 데 뜻이 있다. 북한으로서는 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원시킨 북-미(北-美), 북-일(北-日) 대화를 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최근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변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양측간의 관계개선은 그들에게 필수적인 사안이다.

우리로서도 이번 실무회담은 중요하다. 이번에 남북 교류협력이 재가동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러 가지 협력사업에서 진전을 이룬다면, 앞으로 진행될 북-미 및 북-일 대화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한 첫 단추는 역시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수반에 있다. 그런 점에서 잇그제 ARF 회담에서 북-미, 북-일간 접촉이 적극적이었던 백남준(白南準) 북한 외무상이 우리측과의 회담을 의뢰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실무회담은 북한이 잘못을 시인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사설

NLL, 남북간에 다름 문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일 서기국 백서를 인 용해 북방한계선(NLL)은 서해 해상경계선이 아니며, 새로운 경계선 확정은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무게를 실으려는 듯 이제는 유연사 장선급회담을 6일 관문집에서 갖자고 전격 제 의했다. 금강산에서 남북 실무접촉이 이뤄진 날, 또 제 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북하게 될 상 황에서 제기한 시의성의 측면 때문에 그 의도가 의아 하고 눈길을 끈다. 일견 북·미대화 의제를 확대하려는 계산으로 보이나, 북측의 태도는 앞으로 대화에서 불필 요한 트집이 잦을 것이라는 예견을 뒷받침하는 모양새 여서 안타깝다.

물론 북한의 이런 태도만 마냥 낫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대화에 앞서 의제를 선장하고, 시해교전에 따른 책임추궁을 피해가려는 대화전술의 측면까지 무시하 긴 어렵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북한은 연평해전에서 패배한 뒤 2000년 3월 NLL에 맞서 '서해 5개섬 동향길 서'를 일방적으로 발표할 적이 있을 만큼 실리보다는

명분에 집착해 왔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앞두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구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관계는 한 국 내부에서 배사 산업음관이다. 북한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과 내부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항상 북한의 이런 이중성에 기인한 바 크다. 이런 납득의 사 장과, 특히 대통령의 임기만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북한 이 북·미대화 중심으로 분위기를 몰아간다면 앞으로 일련의 회담에 대한 기본자세를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간 소모적인 대갈구도 만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NLL은 남북이 다뤄야 할 문제지 미국을 끌어들이는 사안이 아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찰하여 온 구역'이라고 명시되었다. 북한이 우리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남북간에 합의할 대 상으로 합의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 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다.

중앙일보

2002. 8. 3(토)

사설

서해 교전이 남측 도발이라니

북한은 서해교전을 미국의 사주에 의한 남측 도발이라 고 엄동하게 제기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서해교전에 사과한 것을 계기로 한· 미·일과의 연쇄적인 회담 개최를 이끌어 냈다. 그레 놓 고선 지금 와서 다시 서해교전 책임론을 원점으로 되돌 려 놓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어제 백서를 발표, 북방한계선(NLL)은 불법·비법의 유령선(幽靈線)이라는 전제하에 "서해 무장충돌은 미국의 대조선정책 에 따라 남조선 호진계층이 계획적으로 감행한 도발사건" 이라고 뒤집어씌웠다. 북측은 그 주장의 중요한 근거로 못 개잡이 일부 어선의 북방어로한계선의 원선 가능성을 보 도했던 MBC 뉴스를 예시, 공색함을 스스로 드러냈다.

북측은 또 남측이 NLL을 고수한다면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도 없다"고 협박하고, 침몰 고

속정의 인양작업을 위해 NLL을 다시 침범할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것은 북측이 1999년에 그은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의 합법성을 주장하면서 대미협상의 지 렷대로 삼으려는 의도이자, 남북 장관급 회담 실무접촉과 본회담에서 북측의 서해교전 책임자 문책 및 제반보장을 받으려는 남측에 대항하려는 얄은 술수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런 억지 주장과 사실 왜곡, 협박으로 서해교 전의 진상을 뒤엎고 책임론에서 벗어나려 해선 안된다. 한국과 미국이 북측 규범에 속고 그 협박이 무서워 NLL 을 철회하고 침몰선 인양을 하지 않으리라고는 북측 스 스로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북측이 억지를 쓰면 쓸수록 북 측에만 불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된다. 장관급 회담 실무 접촉에 나선 우리 대표들도 북측이 이런 억지 주장을 편 경우 즉시 철수,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 그 래야 남북간 실질 대화가 이뤄질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시론

·아태지역 정부간 유일한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담이 의장성명을 내고 폐막했다. 의장성명은 서해사태에 대한 우려표명, 재발방지 조치 마련, 남북간 신뢰구축, 6·15선언과 4·5특사합의 이행, 그리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이 특별히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서해교전 이후 주변 4강대국과 남북한 외무장관들이 모두 참석하여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등을 논의하는 첫 만남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ARF회담 전체회의 분위기도 좋았다는 평가이다.

이번 분위기를 이끈 첫번째 시선은 풀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북한 백남순 외무상이 ARF회의 첫날 가진 진격회담이다. 양국 외무장관은 6·20서해교전으로 무산된 남북특사의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본질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북미 수교회담 재개도 쉽지 않을 것이고 양국간 국교정상화도 요원할 것이다.

北태도 변해야 화해도 있어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부시 정부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는 있어도 체제생존을 견제할 보상이나 보상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북미관계 개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연동되어 있는 북일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마워의 대북관계 개선은 추진한다는 전략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ARF 회의중 남북 외무장관은 별도 회담을 갖지



柳錫烈

ARF이후의 한반도

반북을 재개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였고, 백 외무상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파월 국무장관이 대북특사 파견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 북한이 서해교전에 유감표명이라든지 북미대화 재개제사를 밝힌 점 등이 북미대화 재개조건으로 내세운 북한의 변화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관계의 진전여부는 변화된 북한의 태도가 미국이 의제로 제시한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제네바합의 이행, 재래식 군비 감축문제 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北-美 대화 남북문제는 뒷전

분명한 것은 북한이 남한이나 일본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므로 남북관계가 자칫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백 외무상은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국교정상화 교섭체계를 위한 위무상-국정당 실무협의와 남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8월중에 개최기로

는 않았지만 남북대표단은 나란히 앉아 시종 활발한 대화로 화기에 찬 분위기를 띠었다. 회선중 장관은 지역경제 모순에서 서해교전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북한의 유감표명과 대화제의를 평가했고, 백 외무상은 '민족끼리 자주해결'을 주장하면서도 서해교전 문제는 회피해 갔다.

향후 남북한 관계는 8월2~4일 금강산에서의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을 거쳐 8월 중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면 북한이 전방에서 내놓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 한반도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이 높았다. 당초 정부가 검토해온 30만~50만(의)의 양이 북한에 제공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평화지향적으로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남북한 화해 협력의 분위기는 결국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남한사회에서는 서해교전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북측의 성의 있는 조처를 촉구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본면의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해외 논단

The Washington Post

<워싱턴 포스트 1일자 사설>

북한과의 커피 한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만남은 지난 15년 동안 커피 한 잔만 마시던 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막혀있던 두 나라 사이의 막다른 골목을 뚫었다. 파월 장관은 이후 대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송과 재래식 무기의 전진배치, 그리고 핵증거에 관한 1994년의 제네바 합의가 논의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주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예측불가능한 속삭임 그대로 보여주었다. 수개월 동안 남만을 거부해 오던 미국의 대화 제의에 갑작스럽게 동의하고 남한과의 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더욱 더 흥미로운 것은 지난날 1일 시작된 경제개화이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김

정일 정권은 시장경제의 도입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관측된다. 모토에 따르면 노동자 임금과 함께 식료품과 인건비가 인상되고 식량배급이 폐지되고 있다. 이같은 개혁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드디어 경제 자유화를 용인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개혁은 내외 관계개선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북·미 관계개선의 출발점은 김정일 위원장에 있다. 그는 의심 많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상당무기의 생산과 판매를 포기할 것 이란 확신을 주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수용하고 휴전선 긴장완화와 북한의 자유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니혼게이지신문 1일자 사설>

북·일 대화 끈기있게



2년만의 북·일 외무장관 회담이 지난날 31일 브루나이에서 일한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양국은 국교정상화의 조 기실현에 노력하고 외무장관급 합의를 8월에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북·일 교섭의 재개는 환영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앞날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우리(일본)는 상내가 합의내용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검증해 나가면서 끈기있게 교섭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2000년 4월, 7년만에 재개됐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일본 국민(8천 11명)의 납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한국·미국과의 관계개선, 미사일 개발문제 등을 제기했다. 일본은 또 북한의 대화노력을 평가하고 50만t의 식량을 지원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말 갑자기 일본인

행방명령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고 발표 했다. 또 지난 6월 말 서해에서 남북 경비정 충돌이 일어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갑자기 대화로 돌아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무력과 외교에서 강경함과 유연함을 번갈아 구사하는 전략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을 흔들고 실리를 챙겨왔다. 북·일 교섭에서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이 일본에서 인으려고 하는 것은 자금과 식량이다. 그러나 경제지원이 군사력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되면 안된다. 일본이 요구하는 납치문제와 미사일·핵개발문제, 한국·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북한이 얼마나 성의있는 대응을 해오는지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지원과 대화를 조절하고 북한의 체제개혁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전환기에 선 남북 관계

한반도의 안정과 화해무드 조성을 위한 남북한 양측의 실무대표 접촉이 지금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실무대표 접촉은 제7차 장관급회담 서울개회를 위한 사전 조율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4월 임동원 특사 방북 후 4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실무대표 접촉에선 장관급회담의 개최시기와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특히 올 추석(9월21일)을 전후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비롯,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군사분계지 회담 개최 추진 등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남북관계는 특별한 변수가 돌발하지 않을 경우 급 불상을 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의 실무대표 접촉에 대한 기대가 특별한 것은 북한측이 먼저 회담을 재의 해 왔다는 점에 시다. 지금까지는 남한측이 제의를 하고 북한측이 마지못해 응하는 형식이었으나 이번에는 반대다. 우리로서는 지난 6월 말 서해교전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대북 감성기류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당분간 잠긴터 간 것으로 생각했었다. 따라서 대북 쌀 지원이라던가 비료 지원 등 인도적 차원에서 각종 대북 정책도 보류된 상태였다. 그런데 북한측이 갑자기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을 표명, 대화를 촉구하면서 빗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북한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사정이 절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은 현재 경제난 타개를 위해 감감한 국민 위원장이 개혁에 앞장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동시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중국의 초창기 개혁·개방정책과 비슷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앙집권적 명령성 계획경제' 체제가 수장돼 생산과 관리권한이 지방이나 허위기관으로 대폭 이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본이 연약, 경제개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민생적인 쌀 부족이 북한을 내부적으로 옥죄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해외투자 유치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손잡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백남준 북한 외무상이 지난 1·2일 양일간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서 보인 한반도 최근의 북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백남준이 파월 미 국무장관을 비롯, 기외구치 요리코(川崎順子) 일 외무장관과 전격 회동을 가진 것 등은 북한이 국제무대에 본격 진출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대북 지원은 순리대로 하되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서해교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의 보장이 필요하다. 북한도 '햇볕정책'의 당사자인 김대중 정권이 임기 말임을 감안, 이번에는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남북대화 이제 시작이다

남북이 4월 7차 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북한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등 5개항에 관해 합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또 이같은 남북간의 협력이 북한의 경제개혁과 북·미, 북·일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관계는 서해교전의 후유증으로 큰 위기를 겪어왔고 북·미대화 중단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등 한반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북한의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으로 재개된 남북대화가 일단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앞으로 열리게 될 장관급 회담에서 이미 합의했던 남북철도·도로연결 등 경제협력 문제들과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남북군사분계지 회담 및 체육교류 등이 진전되기를 바란다.

물론 남북 공동보도문에 서해교전에 관한 북한측의 사과나 개발방지 약속등을 경시하

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북측이 기초발언에서 유감표시와 개발방지 노력을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그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무접촉에서 이같은 뜻을 충분히 전개하지 못한 남북대표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향후 장관급 회담과 기타 관련 회담에서 보다 명확하게 처리, 다시는 남북간에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따라야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경제적 가격정책을 도입했고 더의적으로는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시도는 아직 시각에 불과하다. 북한은 이를 위해 우선 남북관계를 순리적으로 풀 수 있어야 한다. 오는 12일 시작되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은 그 징표를 보이기 바란다.

내일신문

2002. 8. 5(월)

사 설

사설

남북 합의, 일단 환영한다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일정과 의제가 확정됐다. 북측 제의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월드컵 기간 중 발생한 6·29 서해교전으로 인해 남한과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얻기 어려워지는 등 궁지에 몰린 북한이 대미, 대일 대화 추진과 함께 진방위적으로 시도한 전술적 유화책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일단 경색된 남북 관계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특히 실무접촉에서 북한의 부산 아시안 게임 참가에 합의가 이뤄진 것도 고무적이다. 남한이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북한이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만큼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실무접촉 결과 발표된 공동 보도문은 장관급회담의 의제를 열거하면서 양측이 이를 단순히 협의하는 게 아니라 '협의,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봉조 남측 대표의 설명대로 그간 양측이 합의해놓고도 이행하지 않았던 사안들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늘 문제는 합의가 아니라 실행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같은 의지 표현은 진정한 성과를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미흡하거나 의문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6·29 교전에 대한 북측 책임 인정 및 조치에 관한 언급이 공동보도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측이 유감 표시와 함께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했다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물론 앞으로 장관급회담이나 북한-유엔사 간의 정상급 회담 등을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과연 그렇지는 의문이다.

실무접촉이 시작된 2일 북한이 조평동 백시를 통해 6·29 교전이 '미국의 정책에 따른 남측의 계획적 도발'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같은 날 유엔사의 제의를 수용해 없기로 한 정상급회담에서도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과 남한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공동보도문에 명시되지도 않은 모호한 '유감 표명'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북한의 진의가 6·29 교전으로 형성된 상호 적대감을 털어내고 냉각된 남북관계를 다시 협력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가장 먼저 교전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는 등 가시적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정부도 협력관계 복원이라는 명분에만 매달려 이 문제들 호지부지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부터 매듭짓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또다시 뒤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朝鮮日報

社說

任期末 남북대화와 北 전략

북한이 최근 한·미·일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대화 전략에는 그 나름의 치밀한 계산이 내재돼 있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직결된 본질적 사안은 미·북대화에서 다루고, 남북관계와 인·북관계에서는 일련의 화해제스처를 통해 북한정권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이득을 최대한 얻겠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동은 지난 1일 미국과의 대화에서 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9 서해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은 정작 이 문제를 다루는 대화에서 배제돼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북은 금강산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 실무접촉에서 오는 12~14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남북 장관급 회담, 민간차원의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 9월 북한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및 남북

축구대회, 이산가족 상봉 등이 줄을 잇게 될 경우 한 반도는 외형상 해빙무드에 젖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간과해선 안 될 허점 또한 매복돼 있다.

이산가족 문제만 해도 정작 이들의 만남을 제도화·정례화할 수 있는 합의는 요원한 미래의 과제에 머물고 있는 반면, 북의 선심(善心)에 따라 이산가족들이 부정기적으로 상봉할 기회를 갖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 북한이 쌀 30만 t 지원 같은 실리들을 충분히 챙기게 되면 남북관계는 다시 검색 국면으로 곤두박질치곤 했던 게 지난 세월의 경험이다.

따라서 인기 말에 굳이 대한 남북행사를 만들고 있는 김대중 정부는 이번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 출발은 서해사태 사과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진의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사설

北 AG참가, 교류확대 징표로

남북이 어제 금강산 실무대표 접촉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 남북한 합의문서 하나가 추가되었다. 이 합의문 대부분은 낙담적인 지난 4월5일 임동원 대동령 특사 방북 때의 공동보도문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낙담간의 남북관계를 합의문만으로 평가한다면 합의사항이 지켜진 것은 이산상봉뿐으로 나재적이다.

서해교전을 고려하면, 후퇴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문만을 믿고 또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해야 할지 주저스럽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북한이 서해교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 대화 및 대화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4·5 공동보도문'의 가치를 재발견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포기할 수는 없다. 북한이 더이상 합의문만을 축적하는 문서상의 남북관계에 머물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이를 위해 북한은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북·미 관계의 수단 혹은 종속물처럼 접근하는 자세를 포기해야 한다.

그런 자세는 남북대화할 계속 불안정 상태에 빠뜨리고 경의선 연결·개성공단건설·금강산 육로개방 등 북한에 이익을 주는 사업에 장애를 조성하고 결국 북·미관계 개선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재확인한 남북검열추진위 가동과 북한경제시찰단 파견은 북한이 최근 경제관리 개선책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인플레이·실업 등 전혀 검합이 없는 거시경제적 처방을 해야 할 상황이 올때 남북이 북한 경제 개선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합의한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AG) 참석,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 9월 서울 남북축구대회도 민간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아시아 경기대회는 북한의 대규모 선수단이 남쪽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처음 참석한다는 점에서 민간교류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지 기대된다. 이번 합의가 실리를 좇아 더디더라도 한발씩 한발씩 꾸준히 중단없이 전진해 나가는 안정적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대한매일

2002. 8. 5(월)

사설

북한의 실질변화 이끌어야

남북한이 금강산 실무접촉을 통해 이뤄낸 여러 합의의 실현이면서 이것이 본회담의 성과로 연결돼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발전했으면 한다. 이번 접촉에서는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기로 하는 등 여러 합의가 나왔다. 적십자회담 개최와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의 구체적인 날짜를 장관급회담에서 정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은 9월에 개최되는 부산아시아게임에 참가하기로 했으며, 서울에서 열리는 민간차원의 8·15민족공동행사 및 9월 김평 남북축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장관급회담 의제로 거의 모든 남북한 현안을 망라한 것도 특이할 정도다. 실무접촉의 발표뿐만 보면 그동안의 대화단절이 이상할 정도로 남북간에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연초 미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금강산 순차방문 등이 이뤄졌던 남북관계는 지난 6월29일 서해교전 사태로 커다란 위기를 맞았었다. 이번 금강산 합의는 남북관계의 생산적 회복을 기

대하게 한다. 남한이 서해교전 사태로 심한 내부집중에 시달리던 지난달부터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미 있는 변화할 노정했다. 임금과 물가물 동시에 현실화하는 '가격정책'을 실시했으며, 브루나이 ARF외무장관회담에서 열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전격 회동한 뒤 대북특사 파견에 합의했다. 서해교전 이후 첫 남북 당국간 만남에서 나온 금강산 합의에 대해 서해교전 이전단계 회복보다 북한의 변화기류라는 보다 큰 틀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서해교전과 관련해 북한이 전체회의 기초발언을 통해 유감 및 재발방지 노력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고 공동보도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들 문제삼아 이번 합의 및 합의 뒤에 들어있을 수 있는 북한의 대내외적 변화 움직임을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은 일회성 합의에 머물지 말고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등과 같은 남북협력 현안들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社說

합의한 의제 차질없는 시행을

남북한은 4일 금강산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5개항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서해도발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남측합당한 조치가 없어 아쉬움이 적지않다. 다만 정치상태에 있는 남북대화에 승분을 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 7차 장관급회담의 의제와 절차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남북간에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못한 의제들을 모두 합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회담보다 각별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더욱이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기로 합의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로 평가된다. 금강산에서 8·15 광복절이나 추석을 기해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갖기로 합의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다.

물론 북한이 7차 장관급회담에서 과거에 비해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경제관리 개선조치 등 대내 변화에서 남북대화 복원을 통한 지원이 필요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북미, 북일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조건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7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의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남북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매듭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과제는 긴장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해교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보장되지 못하면 남북 화해협력은 불가능이 된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7차 장관급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를 세우는 값진 성과를 도출하기 바란다.

東亞日報

社說

北 의도에 또 말려드는가

어제 끝난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제7차 장관급회담의 시기와 의제에 합의하고 부산 아시아경기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하는 등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내놓았다. 이번 회담에 임하는 북측의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이로써 꼭 막혔던 남북대화의 승풍은 일단 트이게 됐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이 출발 전부터 그토록 다짐했던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받아 내는 데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북측 대표는 기초발언에서 유감 표시와 재발방지 노력을 기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고 구두(口頭)로 한 것일 뿐 지난달 25일 전화봉지문에서 한 발표도 더 나아가지 못한 수준이다. 짐작은 했지만 정부가 서해교전에 대한 책임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겨버리려는 것은 또 한번 국민적 비판을 받을 일이다.

나아가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 입장은 북-유엔시간 장성급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한 우리측

대표의 설명은 최근 상황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 하겠다. 장성급회담은 원래 유엔사측이 서해교전 직후 제의했던 것을 북한이 한달 동안이나 무시하다가 이번 실무접촉이 시작되던 날 갑자기 역제의를해온 것이다. 서해교전의 책임을 호도하고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대미(對美)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엿보인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을 정부 대표가 서해교전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떠넘긴 것은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여차피 장관급회담이 열리게 된 만큼 그동안 훼손됐던 남북한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양측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가 눈앞의 성과에 매달려 원칙없이 오락가락해서는 북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식의 대북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강만길 상지대 총장

지 난달 25일 남북 장관급회담 북쪽 대표의 이침으로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해서 유감의 뜻이 표명된 일은 반세기가 넘는 남북 대립의 역사 위에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한다. 1953년에 휴전이 성립된 뒤 남북 사이에는 많은 충돌사건이 있었지만, 그 대부분이 어느 쪽 잘못인지 계곡이 가려지지 못하기 마련이었다. 서로 상대방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돌리고 객관성 있는 공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휴전 후 반세기를 두고, 남북관계가 조금 풀리리다기도 그것을 방해라도 하듯이 그때마다 충돌사건이 일어났고, 그러고 나면 서로 잘못과 책임을 무조건 상대에게 떠넘기게 마련이었으며, 따라서 남북관계는 어김없이 다시 얼어붙었다. 그러나 아무리 뒤돌린 역사라 해도 세월에 따라 올 바른 쪽으로 흐르기 마련이어서, 이런 남북관계의 악순환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훗날의 역사가는 아마 그 변화의 시발점을 김대중 정부의 이른바 햇볕정책에서 구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햇볕정책보다 '적극적 화해정책'이라 하자고 주장하지만, 어떤 든 이 정책은 남북 간의 충돌을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극복하는 예쁜 민달이 났다고 할 수 있다. 1999년에도 금강산 관광길이 열려 동해 쪽에서는

남북정상 다시 만나자

매일 관광선이 운행되는데도 서해 쪽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전남 갯 으면 당연히 관광선 운행이 중단되었겠지만 김대중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쪽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는데 다른 한쪽에서 관광선이 그대로 운행되는 그런 '변과'는 과거 우리 남북 충돌사이에선 전례 없던 일이었다. 그 '변과'가 남북 사이에 처음으로 무게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이 함께 기뻐한 월드컵 잔치 끝에 다시 해상교전이 있었고, 남북관 계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조차도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해도 하필 이 때나,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한심한 민족인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올 것 같기도 했다. 그런 중에도 동해 쪽에서 관광선이 운행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으며, 그것이 남북 사이의 신뢰를 한층 더 깊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서해교전 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감 표명과 함께 실무회담과 장관급회담이 합의됨으로써 남북관계가 다시 풀려가리라 전망되지만, 앞으로의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김대중 정부 임기 중에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이라 하겠으며, 유감 표명이 그 일과 연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제1차 정상회담에 수행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회담 상대라기보다 연장자 로서 깎듯이 여우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에 신기원을 연 김대중 정부 임기 중에 제2차 정상회담이 열려서 민족문제 해결을 한층 더 진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2월의 대통령선거 전에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또 민족문제 남북문 제를 현실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난이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제2차 정상회 담은 대통령선거 후 김대중 정부 임기 중에 열려서 그런 비난도 피하고, 또 김정일 위원장과 다음 대통령 당선자가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남으로 써 앞으로의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제1차 정상회담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한 6·15 공동선언이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방법으로서 베트남과 같은 전쟁통일도 아니고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도 아닌, 우리가 이룩하는 '협상 통일'의 문을 열었다 고 할 수 있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도 그에 못지 않은 성과가 있어야 한다.

휴전조약을 평화조약으로 바꾸는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쉽게 풀기 어렵다면, 남북 두 정부 위에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협의기구를 두는 일도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문제에 신기원을 연 김대중 정부 임기 중에 제2차 정상회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제1차 회담에 못지 않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송영승
정치부장

데스크 칼럼

평양에 부는 바람

1962

년 흐루시초프가 쿠바에 진리미사일급 설치함으로써 촉발된 쿠바 위기는 미·소 양국의 경감일변도 대응으로 핵 전쟁의 위기로 치닫게 된다. 소련이 미국의 위협에 미사일을 배치하자 케네디는 쿠비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취했다. 케네디는 쿠바로 향하는 소련 선박을 미 해군이 가차없이 공격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크렘린에 보냈다. 흐루시초프는 소련 전역에 경보음을 발령했다. 카스트로는 공분했고 모스크바와 워싱턴 하늘이 진운이 드리워졌다.

바로 그때 소련을 방문중인 미국의 기업가 윌리엄 E 녹스가 흐루시초프를 만났다. 흐루시초프는 이 자리에서 케네디의 봉쇄 조치를 격렬하게 비난하면서도 소련의 쿠바 미사일이 방어용 무기임을 분명하게 늘어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이라도 케네디를 만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녹스는 흐루시초프와의 대화를 미대사관에 보고했고, 소련 수상에 발은 즉시 워싱턴으로 전송했다.

외교적인 발언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흐루시초프의 진의를 예리하게 감지해낸 것은 모스크바 대사를 지낸 아베를 해리만이었다. 그는 흐루시초프가 수렁에 빠진 자신에게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절망적인 심정을 미국에 보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소련이 쿠바라는 땅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도록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해석이었다(로버트 E 웨이크콤 피델 카스트로). 알려진 대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소는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 나는 해법을 찾게 된다.

서해교전 이후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덧붙여 이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교전의 성격과 내용, 종래 북한당국의 자세 등을 감안할 때 평양의 유감표명은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신속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북한의 유감표명을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는 식의 비현실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당국은 곧바로 미국과의 조건 없는 대화의사를 공표했다. 평양의 메시지를 제대로 간파한 것은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 워싱턴이었던 것 같다. 지난 주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열린 파월 미 국무장관 회의장 로비를 지나기엔 북한은 북한 의무상의 옷깃을 붙잡고 커피를 같이하는 형식을 빌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의무장관회담을 만들어냈다.

이 집국은 비공식 회동의 무늬를 띠었지만 북·미 대화 재개와 부시 대서 제의를 해오면 만만 수 있다"는 모호한 논리에 빠져 남북 의무장관 접촉을 하지 못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의무장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에도 합의했다. 이를 전후해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금제 실시, 시장가격과 부분적인 인센티브제의 도입, 탈러한들의 현실과 같은 북한의 '경제개혁' 조짐을 나타내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런 정책전환에는 물론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조건하에서'라는 단서가 붙지만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전제(前提)에 매달리는 것은 시야를 흐리게 할 뿐이다. 북한 선전에 체질이 지껄여대는 상무적인 연사에 일회일

비하면 변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말하자면 감정일정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의 선택을 피하면서 합리의 방향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정치든 무역이든 못한 사람에게 그 의미없 드러내지 않는다. 정치학도 그렇지만 정치인의 지혜는 변화의 정조에 무역을 기울이는 데서 시작한다.

오늘 우리 정치인 스텐들과 이미지만 난무하고 이슈와 메시지는 거의 없다. 정치인들은 온갖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 기술자들처럼 보인다.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미국에서도 한물 갔다는 이미지 조작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회창 후보건, 노무현 후보건, 제3의 후보건 차기정부란 많으며 한다면 정적의 익진 케기에 정력을 남비하지 말고 한반도정세를 조망하면서 뚜렷한 메시지를 구축해나갔으면 한다.

내일신문
2002. 8. 5(월)

신문로 칼럼

금강산 실무접촉 후 남북관계



고유현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8월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제7차 남북 정상회담 실무대표 접촉에서 남북은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남북은 서해교전이 남북관계 발전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한 있다는 공동인식 아래 4·5 공동보도문 이행과 이산가족친선 실현 및 제4차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에 북한 참가 등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관례의 접촉과 대외적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서해교전으로 교착되었던 남북관계는 다시 급진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 표명 이후 남북관

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남한의 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의 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남북 화해협력력을 가속화해서 제도화해 놓지 않으면 남측의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 재설정 요구를 받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비교적 북측에 호의적인 김대중 정부와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의 현 정부와 남북관계 발전을 재도약해두면 연방 대안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남북 화해협력의 대세를 거스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남측의 현 정부와 관계진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 부산이시인계합 참가는 관계개선 돌파구

둘째,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급진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15 공동선언 이행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과 권위유지 차원의 문제로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 위원장의 지도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측이 금강산 실무접촉에 진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6·15 공동선언이 잘 이행되지 않을 때 북한 주민들은 지도자가 나서도 별수가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선언에 함께 서명한 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남

북관계의 진전을 이뤄내야 '평양지도사'로서의 김 위원장의 권위가 서기 때문에 남북관계 위상의 복과 관련한 진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노력은 경제재건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의 계획경제 개선 조치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노력 그리고 북·미 대화의 의지 표명 및 북·일 대화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계점에 달한 북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북한지도부는 미국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주중했던 '신사고'에 일각한 계획경제의 개선과 대외관계 확장 등 새로운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임금·불기인상 등 허부단위의 '청상상'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제도 도입하는 등 계획경제 개선 조치로 인한 자구노력과 변화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대외관계 확장도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부흥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방세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남북관계 급진전환이 이를 기점으로 한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교섭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재건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방 세계와의 '대타협'이 불가피하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북한의 최소한의 생존근거를 마련해주는 의미일 것이다. 대국 식량지원과 남북경협은 긴급한 식량난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뿐이지 북한경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이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내부적인 개혁·개방과 함께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서방 세계로부터 도입하는 길이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재건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북·미 식대관계 해소 및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벗어나야 하고,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재건 위해 북 지도부 '신사고' 필요

북·미 식대관계 해소는 북한이 인본물인간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한 걸음 마련해 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 벗어나야 경제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빌려올 수 있다. 특히 북·일수교에 따른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매상자금 40억~100억달러)은 북한 경제난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단기적 마법할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재건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의 '신사고'와 경제재건이 필요하다. 서방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불량국가'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정상국가로서 국제무대로 나와야 할 것이다. 그 첫 걸음은 남한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행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칼럼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을 열며

남 일 총 KDI대학원 교수



한 때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어긋나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던 사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화해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수없이 되풀이되어 온 일이다. 남북한은 현재 한쪽에서 다른 쪽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따른 비용이 너무 커서 이를 추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을 것이 있으면 이를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집단이란 패어나 자신행사가 아니고 각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비즈니스 과정이다.

성실이행 강제할 수단 없어

협상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첫째,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타협한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안을 찾아 가능한 한 이에 근접한 안에 상대방이 합의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상대방이 지킬 인센티브

가 없는 안에는 합의하지 않는다. 셋째, 합의된 내용을 상대방이 어길 경우 그에겐 별 손해가 없고 내게는 큰 손해가 나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 넷째, 상대방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는다. 다섯째, 상대방이 합의할 어길 때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벌이권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서해교전 이후 한남여만에 남북회담이 재개되어 긴장완화와 경험 등을 대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해교전 및 그 이후 북측의 태도를 고려해볼 때 협상의 대상과 우리의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측의 태도는 남과 북이 설사 평화적으로 공동의 이익

을 추구하는 안에 합의한다 해도 북측이 이를 성실하게 지킬 유인이 낮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 사업 등 수많은 우리의 지원에 대한 북측의 대답은 월드컵 게임이 끝났을 이후는 남을 선택하여 서해교전을 유발하고, 이어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 것이었다. 이는 영토분쟁의 가능성과 또 다른 서해교전의 발생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북한은 서해교전과 관련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로 규정하고, "남과 북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주장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남북 경제사업은 투자된 자본 및 생산 사업의 운영에 대한 보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진 후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 우리의 피해는 크지만 북한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한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서라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형태의 서해교전과 같은 상황은 언제라도 가능해 보인다.

北 신뢰 확보 강제돼야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에 관하여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협상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강제되어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서해교전 및 그 이후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 '유감' 이상의 '재발 방지 담보'를 반드시 얻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남북간 경제에 관한 협의를 이룩시키더라도 그것이 성실하게 이행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합의가 이뤄졌다'는 수식적 의미 이상의 '경제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약속을 어겼더니 오히려 손해가 돌아 오더라는 배서지만 그들에게 줄 뿐이다.

南北경협의 우선조건

한 북측의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북한은 서해교전의 진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NLL을 불인정함으로써 분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 계속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협상의 본질을 전혀 도외시하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의 기본 원칙들을 거의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대와 경제협력에 관한

경향신문

2002. 8. 6(화)

이대근
논설위원



경향의눈

北·美, 친구, 악의 축

“미국이 (북한을) 친구로서 대대하게 대해 달라” 북한의 핵남순 외무상이 지난 달 31일 아제르바이잔 안보포럼(ARF)에서 열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잡지만, 좋은 커피사건’(파월의 표현)을 가질 때 한 말이다. 글쎄, 북한이 ‘절친지 원수였던 미국에 이보다 더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을까. 요즘 북한은 어제의 북한이 아니다. 너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많이 서두르고 있다. 파월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북측은 제임스 캐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특사로 방북한다고 언론 발표까지 했다. 지난 31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해교전 유감표명이 “솔직하고도 진지한 태도의 반영으로, 추후의 의의도 가능할 것이다”며 미흡하다는 밖의 여론을 달래려 꽤 애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북한을 보면, 도대체 서해교전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북한은 다른 목소리도 낸다. 자신의 솔직함에 추후의 의의도 하지 말고도 하기 하루 전날 조영봉은 배서침을 통해 서해사태가 남

측의 선제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뒤집는다. 북외무상이 파월 장관에게 친구 운운한 지 몇 시간도 안돼 조선중앙방송은 “미국은 악의 우두머리”라며 뒤통수를 치더니, 이를 뒤에는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공격한다. 정책변화가 빨라 내부 조정이 완전하지 않아서인지, ARF에 제출한 안보보고서에 미국과 재래식무기 감축문제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누가 그런 소말리”(북남순)라고 탄소리를 한다. 그러나 이 두가지의 충돌하는 목소리에 같은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 북한은 상대의 ‘호전세력’을 공격하고 대화파를 끌어들이려 나쁘게도 어르고 핍지는 진술을 구사할 뿐이다. 북한식 어법을 조금만 알면 대화하려는 북한의 뜻을 분명해 낼 수 있다. 미국은 한 입에서 나온 것 같지 않은 그런 북측이 싫다고 하겠지만, 사실 미국이 그렇게 나올 처지는 못된다. 혼란스럽기로 말하면 미국이 더했으면 더했지, 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 직후 파월을 통해 열린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하는가 하면,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

을 거쳐 지난해 6월 대화계 명치를 정해 놓고도,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구체적 프로그램도 만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악의 축’이나 ‘버즈잡 머리 없는 아이’니 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체제에 대한 함박탄 쏘면이다. 지난 4월 북한이 미 특사 수용의사를 밝혔을 때도 며칠 안에 응답을 하겠다고 해놓고 두달을 기다려 서해교전이 나자, 달리는 한국의 손을 굳이 뿌리치고 기다렸다는 듯 특사파견 방침을 철회했다.

이 는 물론 부시 행정부내 강·온파간 대립의 산물이다. 북·미대화를 지지하는 온파와 파월이 더 체니 부통령, 럼즈펠드 장관, 백악관 정치보좌관 할로브 등 강경파 3인방과 밀고 달기노라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 전반이 온파와 병행될 오라기까한 걸까. 흔히 미국에서 북한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군부강경파의 영향이 작용했다. 뛰니하는 관측을 내놓지만 사실 이런 접근법을 적용할 곳은 북한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달리건 게 없다는 관점에

대화를 꺼리고 협상할 자세를 갖추지 않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바라보는 주체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상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 스스로 변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만이 상대의 변화를 간파하고 그에 호응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에 그런 심세함과 유연성이 생겨날까. 이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 일부 외신이 평가한 대로 ‘북남순-파월 화동’이란 파월의 외교적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단정짓기는 이르다. 파월은 부시 행정부내의 외교 주도권 전쟁에서 앞진일위를 거듭해왔다. 2주 미다 파월 사임설이 나온다. 그가 지난 1일 ARF 파월행시안 장기지점에서 온파로 꾸민 내용은 시사적이다. 참치인 파월의 노래를 중단하라는 부시의 압력, 파월이 쫓겨나게 된다는 보도, 그레도 노래를 멈추지 않는 파월, 그의 노래말은 ‘합의한 것은 제대로 지키라’였다. 부시 행정부가 ‘파월구상’에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남북한은 위상전에서 전개될 또 한명의 대결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지, 또 두고 보지 않고 미칠지.

남북협회는 지난 5월 평양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5개항의 공동 보도문을 내놓았다. 이가 최정호 주요 외무장관 보도도 8월 12~14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회, 북한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그리고 민간 차원의 '8·15 서울민족통일대회' 및 남북 축구대표팀 서울 경기 직격 지원 등으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남북 공동보문의 의의와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남북한 남북은 일정한 대결협력사 방식이 합의했던 '4·5 공동보도문'에서 약속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면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고, 이에 그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격적인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이른다.

화해부드 금융살 탈 두

둘째, 이번 남북간의 합의는 북한이 대미-대일관계에서 적극적인 진정조치를 취할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북한은 구 소련과 동-유럽연합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후 생존전략으로서 1990년대 초와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관계 붕괴-대일관계 부문에서 적극적인 내외 협력정책을 취한 적이 있다.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정책은 또 한번의 진정화 내외 협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 협조는 배급제와 가격제에서의 새로운 개혁 조치의 도입 등 북한의 대내 경제관리

시론

백 학 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 연구위원



南北 다시 희망을 찾자

— 남북공동보도문을 보고

방식의 전환조치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번 북한의 대남 정책이 북한 당국이 더 높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생존전략의 틀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번 합의는 북한이 단순한 단거리 이익을 얻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넷째, 이번 합의는 남한의 대북정책이 중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권, 언론계, 그리고 다양한 사회집단 사이에서 격렬한 찬반논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합을 맞아 경제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어 정리될 것이고, 내선이

급나면 차기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이 나름대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월드컵 축구경기와 4강 진출의 열기를 잊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김경(京幸)축구의 부활'이 가져올 기쁨과 감격,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동시에 개최된 성화가 경기장을 밝히는 가운데 진행될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여기에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합도 및 도로 연결까지 이루어지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김치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협력정책의 해대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합의를 약속대로 이행할 것인가, 앞에서 이미 시사했지만, 북한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대미-대일관계에서 진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내

대적으로 경제개혁 조치를 통한 경제 살리기로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번 합의사항들은 예전 어느 때보다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지난 6월 서울에서의 무리도 많았던 남북관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곤경에 처하면서 대남 협조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깊이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는 더욱 적극적인 협조 자세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 서해 무력도발에 대해 예상보다 조속히, 그리고 솔직하게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우리측에 사과한 것이 그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합의사항 이행 가능성 키

선거성공을 맞아 대북 정책은 이미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지역감정이 또다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선 직전 남북관계에서의 급진적인 반드시 새천년 민주당에 유리하게만 작용할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민심 한나라당이 대남 정책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번 남북간 합의가 반드시 한나라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어찌됐든, 우리 국민은 장기적인 민족의 이해와 번영의 관점에서 김치권들의 주장과 판단하면서 이번 남북 공동보문의 이행을 돕고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지키기 위한 과수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

다산칼럼



金秉柱

서강대 교수·경제학

돈이 문제다. 과도하게 많이도 적어도, 지나치게 많이도 마다해도 문제다.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죄악의 뿌리'라는 말은 반교원변의 진리이지만, 그 말을 잘못 암송하면 돈과 죄악을 동일시하는 허구의 도덕론이 나온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는 합리성이 있었지만 근대화 이후 사회에는 타당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돈에 대한 바른 이해 길어

돈이 무엇인가. 그 원인과 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왜 그런지 이유 사리에 대한 타당성을 상실하지 오래다.

북한의 돈은 가치저장의 기능이 역제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기능도 제한된 것들만이 돈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남한의 돈도 기능이 제약되는 수가 있다. 물가 오름세가 가파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시 화폐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감시한다. 상황이 어려울 때 다른 형태의 자산이 선호된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값이 들쭉이거나 때론 치솟는 것이 바로 이때문이다.

요즘 강남 임대 아파트 값이 강세로 돌아선 것은 많이 들린 돈이 수익률이

도 면피부할 받기 어려울 것이다. 시장 경제에서 자산선택의 움직임이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법 테두리 안에 머무르는 한 부가 그 자체가 결코 비난의 대상일 수 없다.

지난 6월말 북한 돈에 변화가 일어났다. 생활필수 배급제를 없애는 대신 임금제 평균 20배로 올라 쏠테니 시장에서 조달하려는 조치가 있었다. 북한 대학 교과서들 읽어보면 '화폐는 완전한 사회주의가 실현되기 이전 단계인 상품생산 단계에서만 한정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침

몰린 수입으로 인한 원상 임금 지급하라는 지침의 조치는 큰 차감과 파행을 겪을 것이다. 공극적으로 화해 중이었어 20배 이상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은 드물 것이고, 이것은 폭발적인 수요증대를 초래할 것이다.

시장경제 속 제구실 해야

기업들이 가격유인(이윤동기)에 따라 생산을 늘리기까지는 삼바 투자와 시간 경과가 소모되기 때문에 금본 조치가 생산증대 효과를 얼마나 거둘 것인가는 미지수다. 이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교질 문제인 수요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시장 가격의 폭등을 부채질할 것이다.

남한 문제의 근본 해결 방법은 거시적으로 경제 안정 기반을 다지고, 실물 자산과 금융자산 간의 예상 목표수익률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자금출처 세무사찰 등 정부가 빼어 본 비상부기의 칼날은 무뎠다. 북한은 앞으로도 입으로 교조적 사회주의를 외치겠지만 결국 시장경제에 접근하는 마나면 길을 계속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간의 공통점은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돈에 대한 대응력과 교조적 거부반응이 벗어나야 할 과제이다. 근대 경제사회의 틀 속에서 돈이 제대로 구실할 수 있어야 법전과 번영이 있다. "돈은 좋은 허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서양 속담) 맞는 말이다.

pjkim@ccs.sogang.ac.kr

남쪽 돈, 북쪽 돈

낮은 금융자산을 떠나 실물자산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반세기 넘게 이같은 자산 선택의 게임에서 손해를 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경험 사실이 방위군과 전실문의 곁을 받는다. 이같은 게임이 나오지 않으리 아동배중 살아온 것이 모든 가계의 모습이었다. 지난주 국회중의 불 열지 못한 정치 후보의 경우는 특이한 주부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시아머니에게 책임을 돌린 본인의 정직성에 의심이 간다는 게 흔한이었지만, 잘못을 댈진 의의를 가진 실업

책으로도 일종의 이상의 신뢰 교환을 억제하는 화해 계획을 여러 차례 단행하면서 돈을 모아 재산을 늘리는 일을 하면서였다.

이같은 화해 수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외국돈을 모으는 것이다. 약화가 양화할 몰아나드는 전리는 북한에서도 예외가 아니라 시중에는 주로 약화(북한 돈)가 나돌지만 주민들이 깊어 간직하는 인화는 외국돈(달러화, 엔화)이다. 그들 말대로 '원부' 나라 돈이 존경받는 사회가 북한이다.

금본 조치의 결과는 어떠할까. 기업들이 저금 가격을 스스로 전하고 빚어

사설

북한의 성의와 실천이 관건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에서 합의된 내용은 남북 대화기조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음주에 열릴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각급 회담, 북한 선수단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포함한 이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남북관계는 상당 기간 순항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이룰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합의하고 중단하기'와 대남 도발을 습관적으로 해왔다. 북측은 정세의 유·불리 판단에 따라 제멋대로의 행태를 보여왔다. 남측은 그런 북측의 행태를 고스란히 수용해 북측의 버릇만 나쁘게 만들었다. 따라서 본격 대화의 재개에 즈음해 정부가 이번만은 서해교전의 북한 책임론을 끝까지 추궁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북측도 시인할 건 시인해야 스스로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측은 실무접촉에서 서해도발의 시인·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보장, 희생자에 대한 애도 표명을 요구

한 우리 측에 대해 북측의 7·25 유감표명은 진솔한 것이라면서 남측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했다. 그렇다면 서해교전의 남측 도발론을 주장한 조평통 백서는 무엇이라는 우리 측의 추궁에 북측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도 시사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논의 자체가 합의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합의 성과에만 연연한 우리 측의 고집병에도 책임이 있지만, 북측이 자신들의 체면과 자존심만 고집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북측이 이 시점에서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은 남측에서 정부의 의지대로 대북정책이 좌지우지되던 시기는 지나갔다는 점이다.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면 정부는 싹을 북에 보낼 수 없게 돼 있다. 오늘 열리는 판문점의 유엔사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방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 북측은 성의와 진실을 보여야 한다.

한겨레

2002. 8. 6(화)

사설

남북합의, 구체적 열매로 이어지길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 실무대표 접촉에서 장관급 회담 재개, 북한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등 굵직한 합의가 나왔다. 북한은 지난달 말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 기간에 있었던 미국·일본 쪽과의 만남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번 접촉에서도 적극성을 보였다. 이로써 서해교전 사태로 빚어진 긴장과 대결 국면이 화해와 협력 국면으로 전환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남북, 북-미, 북-일 대화가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단순한 합의를 넘어 합의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사이에는 그동안 합의한 내용들도 상당하며, 이를 제대로 실천하기만 해도 남북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남과 북, 그리고 미국내 감점매과들의 모험주의와 선동으로 실천과 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재야말로 그러한 모험주의와 선동, 외세의 압박에서 벗어나 민족이

함께 생존하고 번영하는 길을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2일부터 열리는 7차 장관급 회담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북한 경제시찰단 남한 방문,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 재개 등 이미 합의된 내용들을 실천하는 방안을 꼼꼼하게 헤아려야 한다. 특히 군사 당국자 회담은 서해 분쟁수역을 해소하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도 이 회담을 통해 적극 모색해야 한다.

남북의 경제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북한이 최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경제개혁 과정을 도와주게 되며, 그것은 다시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우리는 남북합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북한의 경제개혁 노력을 지원하고 또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구체적 열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社說

남북대화, 아직은 장밋빛 아니다

북한의 '대화 공세'로 한반도 경제가 다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북-위 회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까지 보인다. 상황이 복잡한 만큼 소용돌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예견하면서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급강산 실무회담을 남북화해를 위한 대단한 계기로 평가하면서 추속 조치를 준비 중인 정부의 자세는 너무 안이해 보인다.

실무회담 합의의 대부분은 4월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 방북 때 나온 발표의 재판(再版)이다. 시계를 4개월 전으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더구나 남북한간 최대 현안인 서해교전을 이번에도 어물어물 넘어가고 말았다. 한반도 상황을 검색시킨 북한의 도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아시아경기가 한가 뉴스로 '포장'한 합의를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시아경기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경비까지 부담하며 초청하기로 한 것을 북한 지도

부가 어떻게 생각할까. 서해교전에 대해 더 이상 신의를 보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는가.

남북문제는 결코 이벤트식 행사로 해결할 수 없다. 실권이 보장되지 않은 합의는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없다. 서해교전은 이벤트식 행사와 공허한 합의로 만들어진 남북화해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각 보여줬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제 남북간관급 회담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합의된 시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강구하는 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당연한 지적이다. 진작에 그랬어야 했다.

총리 공백 사태로 내치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남북 대화를 서두를 이유도 없다. 게다가 많은 국민이 임기 만여, 총리까지 없는 정권이 남북 대화를 제대로 이끌까 우려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정부 만기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할 정도로 북-미 관계가 진전됐지만 조지 W 부시 정부가 들어서자 하루아침에 냉각됐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매일경제

社說

서해교전·경제협력 연계해야

남북한 장관급회담 실무진측은 아시안게임 북측 참가와 제5차 이상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열린 장관급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사항은 지난 4월 5일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 때 합의한 사항에 대한 추속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이후 후퇴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장관급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남북 협력관계는 서해교전의 상처를 씻고 크게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북측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여전히 서해교전에 대해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사과와 제방방지책 등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쫓겨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급강산 회담에서 서해교전에 대해 진을 것은 진했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 문제를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해 우리 정부의 추공을 피해감으로써 서해교전 문제에 관한 한 이번 회담의 성과는 없다.

급강산회담을 앞두고 서해교전에 대해 북한이 보인 태도는 우리 정부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2일 발표된 조평룡 박사에서는 서해교전 진을 북측의 계획적 도발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과연 북한이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해 왔다.

북한측은 근본적으로 서해교전문제와 협력 문제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으며, 서해교전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유엔사간 장성급 회담을 통해 북방한계선(NLL)문제로 좁여가려는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서해교전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크게 주목된다. 만약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의 제방방지책 위해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남북군사당국자회담에 대해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협력사업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정부는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회담에서 서해교전문제와 경제협력 문제가 분리되어 다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부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 된다. 그런 경우 정부는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며, 각종 남북 협력사업에 합의할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우려가 크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서해교전문제와 협력 사업을 분리해 다루어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時論



鄭且權

백마부대 중대장이었던 고(故) 박우식 소령의 유해가 35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왔다. 헬리콥터가 이천후 속에서 추락해 4명의 미군과 함께 사망했다고 한다.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은 월남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해가 하와이에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월남전 참전 이후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된 것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미군과 함께 전사했기에 하와이에 있는 미육군 유해발굴센터의 노력에 의해 유해라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팔자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고인에게 미안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

전사자 유해발굴 나몰라라

흔히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외국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국립묘지를 참배해 그 나라를 지켜낸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

하게나 무명용사비에 헌화부터 한다. 전제 지도자들, 특히 당 대표나 대신자, 대통령 당선지도 국립묘지를 먼저 찾아간다. 나폴레옹은 전쟁 승리 기념으로 파리 시내 한복판에 개선문을 세우고 각 전투에서 싸운 지휘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둥 내면의 대리석에 새겨 넣어 후손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했다. 미국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 유해발굴이라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땅끝 어디까지라도 가서 찾아내며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고국으로 돌

韓중사 시신 찾기

아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은 한국전 도중 북한땅에서 전사한 미군유해 발굴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바 있다. 미국엔 유해발굴과 관련한 상상연구기관이 있으며 수백명의 연구원이 최첨단 장비와 최신 유전자 기법을 사용하여 신체 일부라도 찾아내 유족에게 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월남전에서 국군 몇 명이 전사했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6·25 전쟁에서 아직 찾지 못한 실종군인의 유해가 수만명여 넘는다. 나라를 위해 버린 마지막 남은 시신 하나도 국가가 챙겨주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앞장서서 국가

가 위더로울 때 총을 들고 전선으로 달려가려고 하겠는가? 정부는 6·25 때 납북된 국군 포로가 몇 명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군 포로가 엄연히 포로수용소를 탈출해 귀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 포로가 한 명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반박자료할 제시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여러 가지 겉으로 생존이 확인된 350여명의 국군 포로 송환문제에 대해 북한에 맡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비전할 장기수의 무조건 복송을 치지처럼 여기면서도 말

그 다음날 바로 금강산 유류선이 잠정항을 향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진 기분으로 관광을 떠나는 것은 젊은 목숨을 국가를 위해 송두리째 바친 애국지사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행동이었다. 그 다음날도 관광객을 전폭 실은 배는 유유히 북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부의 존재이유에 의문

6·29 서해교전 이후 전사한 한상국(韓相國) 중사의 시신이 고속정과 함께 수장돼 있을 거라고 발표한 국방부가 여대선체 인양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 유가족의 오열은 물론이고, 순국영령의 봉곡도 들리지 않는지,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했던 한중사 가족들의 슬픔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슬픔이 아닌가. 한 달 이상을 수장시켜 놓고 8월 초에야 간만(干滿)을 고려해 인양할 계획이라고 하니 7월에는 간만이 8월과는 전혀 달랐다는 말인가?

역사적으로 많은 외세에 시달려 온 점을 고려할 때 보훈이나 보상은 고사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에 대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유해 발굴과 시신 찾기가 아닐까. 요즘처럼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절실해진 때도 없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한림대 교수·생명과학

*본론(本論)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명철
대의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론

장관급회담에 저는 기대

경향신문

2002. 8. 7(수) ·

나는 한국에 온 이래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변화된 환경을 느끼고 있다. 첫째,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면 길쭉은 남북 모두가 입장과 태도 및 행동양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곤 하였다.

D)정부 들어 한국은 대내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것을 이해해 주고, 많은 것을 주었다. 그동안 남북은 민족경제 공동발전의 기초 이념을 만들었고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적 사업으로서 경의선 연결, 금강산 관광 등 분열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합의들을 창출해 냈다. 그러나 흥분과 희망이 잠시, 실천이 뒤따르지 않아 국민들은 예전의 부정적 감정보다 더 깊은 실망에 빠졌다.

둘째, 새로운 합의가 창출될 때마다 남북한 국민들 감동시키고 사람들 마음 속에 미래에 대한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뿌려져 온다. 그러나 흥분과 희망이 잠시, 실천이 뒤따르지 않아 국민들은 예전의 부정적 감정보다 더 깊은 실망에 빠졌다.

다. 군사회담은 암묵상으로 끝났고 장관급회담은 '하다 많다'를 반복하고 상징적 사업들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남북합의가 탄생되더라도 국민들은 반신반의하게 되고, 흥분하고 희망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셋째,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남한국민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때 흥분했던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짧게 권력을 배경으로 남북문제 해결의 장면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그가 한다고 하면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남한국민 속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장면에 나서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순식간에 풀리고 합의 사항들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합의해주고 언명한 사안도 결국은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하락하고 있다.

김정일위원장의 지시에 반하는 북한의 보수세력이 있다는 해석과, 김 위원장 자신이 합의사항을 실천할 마음이 없다는 해석이 있지만 어느 것이든 그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만을 낳는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시작되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잘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미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빨리 시작함으로써 국민의 흥분과 희망을 다시 살려야 한다. 남북관계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관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서 나오는 흥분과 희망 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이 시점에서 이 흥분과 희망을 살리는 사랑의 감정은, 새로운 합의의 창출이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형성되게 된다. 합의된 사안의 실천에서 북한이 손해 볼 것도 없는 만큼 빨리 행동하여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민족의 이익을 지속시키고 확대해시켜야 한다.

둘째, 김정일 위원장 자신이 외부 세계의 기대를 회복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내부를 개혁하여 평화로운 세계에 진입하도록 하려는 기대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로 권력을 유지하고 활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한낱 독재자이자 자신의 정치·경제적 이익만을 따지는 개인이자주요자로 평가되며, 결국 그 자신의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북한 내부에는 괴상 중상분자들도 많아서 과거의 원칙과 논리, 행동양식으로 김 위원장의 마음속 흔들려 놓는 사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괴상 행동들이 당장은 김 위원장 체제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미래에도 여전히 비효율적인 체제와 민생적 부국경제, 외부세계의 비판대상이 되는 체제 밖에 무엇이 남겠는가.

김 위원장이, 지난 시기에 했던 말과 행동이 실천되게 하여 그에 대한 한국국민과 국제 사회 속에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자면 남북관계의 근본문제, 즉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를 위한 참사건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실천 행동으로 즉시 옮기는 구체적 프로그램들 제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東西南北



洪準浩

북한이 마치 언제 도발을 했느냐는 듯 얼굴을 바꾸어 미소로 나오고 있다. 며칠 전 금강산에서 열린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에 다녀온 우리 측 대표단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예전에 비해 한 걸부 부드러워지고 사투 공손한 태도였다 한다. 또 이번 접촉을 계기로 남북간 대화 퍼레이드가 붓볼 터지듯 이어질 전망이다.

對話하기 위한 對話

어제는 장성급회담이 있었고, 12일부 터는 장관급회담이 시작됐다. 그 회담이 끝나자마자 8·15 민족통일행사 대표단이란 북쪽 사람들이 서울에 오게 돼 있다. 한 달 뒤엔 산업장기장과 부산에서

안개업에서 북한 선수들을 구경하게 된 것 같고, 또 한 차례 울음바다를 이슬이 산가족 상봉도 상사 알보 직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북쪽 사람들과 마주앉아 같이 웃고 울고 떠들고 박수치고 할 주고 하면 되는 것인가? 상대가 만나 지는데 굳이 미다할 이유는 없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대화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덮어 둘 일이 있고, 결코 그에서는 안 되는 게 있는 법이다.

우리가 서해에서 웃다들 장병들을 잃은 건 불과 한 달여 전이다. 북한의 기습 포격에 휩쓸린 고속정의 인양작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실종된 한 병사의 시신은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도발당사자인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유령선'이라고 도발 전이나 이후나 같은 목소리로 떠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대외지성주의자들은 제도만 반지 역시 중국에는 대화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대화에 인해서도 잃을 건 절대로 없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시사시켜

화 분위기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100% 참된 말은 아니지만 기꺼이 전제가 있다.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아직 그런 믿음이 축적돼 있지 않다.

남북은 이번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공동보도문이란 것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불과 몇 달 전 임원회담 대표목사가 방양을 방문했을 때 발표했던 4·5 공동보도문의 복사판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다.

기자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이대리고 있다. 이번만의 현상이 아니다. 사실 4·5 공동보도문부터가 그 이전의 수많은 합의들을 복원시키는 데 복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 기반관력은 6·15 남북정상회담 석 달 뒤인 2000년 9월 북한 김용순 특사가 서울에 왔을 때 나왔던 공동보도문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군사 당국간 회담이 우선

김과 지난 몇 년간 남북은 수없이 많은 회담과 합의들을 만들어왔지만 주로 이념트싱 행사들만 이뤄지고 나머지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 합의문에서만 되풀이 이어져온 셈이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합의의 이행에 앞서 회의록 이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해졌고, 합의 내용도 앞으로 대화한다. 또 회의한다는 게 핵심이 돼버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북한이 단리와 짝에만 관심을 두면서 군사적인 긴장 완화 등 근본 문제는 '대미용(對美用)'이란 빈도의 범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대로라면 이번에도 대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이념트싱 행사들로 뒤덮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막고 북한을 진정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면 장관급회담의 우선순위를 군사당국간회담 재개쪽으로 바꿔야 한다.

/김치부 부장대우 ihong@chosun.com

합의만 있고 이행은 없다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 건설,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제개 등등의 문제급 논의하기 위해 남북 장관급회담을 하자. 또 한 차례 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것이 핵심인데, 애당초 이행을 전제로 했던 합의라면 몇 달 만에 똑같은 공동보도문을 재발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이다. 그 사이에 피치못할 곡질이 있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단지 북한이 합의의 이행을 치일과일 마무다 어느 날 갑자기 서해에서 우리 배를 향해 함포를 쏘고 우리 국군을 살상한 일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북한은 또 다시 똑같은 합의문을 들고 나왔고, 우리 당

대한매일

대한시론

남북대화 재개 기대 크다



정옥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불과 달도 전에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도발을 시도, 대한의 아들들을 희생시켰고, 보수·진보 진영간 이념 논쟁을 격화시켰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 관계 현황은 급물살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 개최를 아나라 8·15 민족공동행사, 이산가족 상봉, 경명 축구의 부활, 나아가 북의 아시안게임 참가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1년 후반기가 다시 민족적 화해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월드컵의 영웅인 히딩크 감독도 남북 축구대회에 맞추어 방한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으니 당시의 흥분, 열기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이 남과 북의 공동

체 의식으로서 확대 재생산될 것이 분명하다.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의 선수들이 공동 입성하여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의 전율을 재현한다고 한다.

북한의 정책 방향도 상당히 유연해졌다. 북은 대내적으로 임금과 물가통제 시장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가격 통제 완화했다. 향후 더욱 과감한 개혁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대외적으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백남순 외교부장이 참여하여 열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회동했고, 조만간 북·일 적십자 회담도 개최될 전망이다.

다시 민족적 화해의 무대

또한 미국을 포함, 100여명에 달하는 KEDO 관련 인사들이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의 금호지구를 방문했다. 이로써 향후 대북 경수로 건설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유엔사와 북한간 간의 정상급 회담도 열렸다. 무려총통 예방과 신뢰구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노력했다.

반면에, 조심스러운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늘 그러하듯 남북관계는 국내정치와 시시한 속에서, 진정한 신뢰 구축 및 긴장완화는 걸여한 채 상징성에만 집착한다는 냉소론이다.

합의는 무성하나 정착 실천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진은 '도라산 프로젝트' 의혹과 함께, 금강산 관광 활성화의 명목으로 북한에 식량과 금강산 해수욕장 개발비 등 수백만달러를 지원하고 '김정일 답방'을 성사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8·15 남북 공동행사장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도 세웠다.

사실, 북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병력의 문제는 여전히 동북아 안보와 국제 평화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남북 관계는 민족과 안보라는 양면성과 혼선을 동시에 드러내며, 미국 등 주변국의 이해는 물론, 우리의 국내정치와도 깊이 연계된 상태로 전개된다.

한국 정치사에 있어 남북관계는, 집권층의 국내정치적 입지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반대로 국내정치의 사슬과 지나친 보수 이념이 합리적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기도 했

다. 율해의 경우 보상을 치르고 대신이 남아있는 시장에서 격려된 남북관계에 몰고가 트였고, 따라서 남북관계와 국내정치의 인과성을 의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은 김대중 정부가 국내정치에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는 신북풍론을 주장하고, 여당은 야당의 공세아말로 진정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외면한 변절한 당리당략이라고 반박한다.

교류통해 대화채널 상시화

사실 지난 6월의 서해 도발 이후,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대화의 물꼬를 트리라는 예상을 했었다.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 체육, 문화 및 상호 교류를 통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의 채널을 상시적으로 열어 놓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현 상황은 고무적이며 긍정적이다. 단, 향후 남북관계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는 장관급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임동원 특사 방북 때 확인한 '4·5 공동보도문' 합의 사항을 얼마나 진척시키는가에 있다. 나아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한반도 긴장 완화의 구체화 등에 대한 진전 여부가 남북관계 '완상회복'의 진정한 키 워드이다.

社說

남북 군사당국 회담도 열려야

이제 열린 북한군-유엔군사령부의 관문진 장성급회담에서 양측은 무리충돌 예방과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서해교전과 같은 격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하자는 합의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사과를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얼마 전 금강산 실무접촉에 나섰던 정부 대표들은 북측의 사과를 받아내는 문제를 이번 장성급회담에 떠넘겼었다.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후속조치를 반드시 받아내셨다면 정부의 다짐이 어지럽 흐지부지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재개할수록 과연 이윤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북한이 이번 장성급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다목적 포석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한 달 남게 외면해오던 장성급회담을 금강산 실무접촉이 시작되던 2일 봄인 의제에 어제 회담이 열리게 됐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겠

다는 북한의 '의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최근 북-미(北-美) 대화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북방한계선(NLL) 등 군사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의제로 올리겠다는 뜻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도'는 북한이 군사문제에서 한걸 전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걸실을 보기 어렵다. 북한은 말로만 그치는 무리충돌 예방과 신뢰구축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성급회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상 주체가 되는 남북간 군사당국 회담도 재개돼야 한다. 당장 김의선 연걸 및 금강산 관광육로 개설 등을 위해서는 군사 실무회담이 열려야 하고, 더 큰 틀에서 남북간 긴장 완화 등 군사적 현안을 논의하려면 국방장관회담도 조만간 재개돼야 한다. 이달 중순에 열리는 남북 장관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북한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인 대화 자세도 검증받게 될 것이다.

한국일보

社說

아시안 게임의 북한 참가

9월29일 개막하는 부산 아시안 게임에 북한이 참석한다고 한다. 남북 장관급 회담과 실무접촉을 통해 구체적 합의가 나오겠지만, 일단 환영할 일이다. 우선 아시아인의 친선과 평화의 상징인 이 대회에 북한의 참가는 의미가 있다. 이로써 월드컵과 대통령선거 등에 끼여 주목 받지 못했던 부산 아시안 게임이 활성화 계기를 맞게 됐다.

우리는 북한의 아시안 게임 참가가 남북 쌍방에 공동이익이 되기를 기대한다. 북측은 아시아인의 제진에 자신들을 동포로 초청하려는 남측의 상의에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측도 사상 처음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는 북측의 대응에 의미 있을 필요가 있다.

체육계에서는 탄압된 훈련과 입장식 방법, 백두산 채화 봉송, 북한선수단의 체육비 지원, 선수단의 안전 등 여러가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실무적 차

원의 문제 외에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치적 논쟁과 친북단체의 활동 등이 미묘한 과정을 일으킨 소지를 안고 있다. 우선 우리는 정부와 조직위가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새롭게 단일된 또 다른 입장식 행사할 구상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오히려 북한이 자유롭게 개별경기에 참가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 또한 북한선수단에 제공되는 편의와 지원은 참가국의 일원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지나친 억지공사는 후유증을 남기 십상이다. 정치권 또한 냉정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남쪽 사람들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으려 한다. 까닭이야 그들이 녀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이번 아시안 게임이 상호 신뢰회복의 계기가 돼야겠다. 우선은 참가문제와 관련한 집음이 없도록 하고, 페어플레이로 제전을 빛나게 하자. 아울러 피치간에 복잡한 정치적 개신일랑 접어두기로 하자.

社說

謝過는 않고 NLL 탓만

북한이 최근 표명하고 있는 남북대화 재개에사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슴적인 무리도발마저 유아무야 넘기려는 의도를 갖고서는 그 어떤 대화도 진정한 남북화해에 기여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북한이 6일 서해교전 사태를 다룬 정성급회담에서 유엔사령부측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북한으로서도 남북 장관급회담 대표 명의의 모호한 '유감' 표명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전쟁부가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대통령까지 나서 북의 영신한 유감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 북으로서도 더 이상 '선의'를 보일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은 앞으로 군사적 신뢰구

축과 충돌방지를 위해 대화를 통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북측은 오히려 해상충돌의 발원지인 '명확한 해상경계선'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피 북방한계선(NLL)을 무리화시키려는 기존의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런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북측 무리도발의 결과가 NLL 변경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는 일이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북한은 북하면 일부더 저지르고 보는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NLL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남북기본합의서 규정대로 우선은 기존의 남북 관할 구역을 인정하고 무력을 사용한 데 대해 진심한 사과를 한 뒤, 진정한 남북화해를 추구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와 협상의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

社說

남북 군사신뢰구축 계기로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이 어제 판문점 군사정전위 회의실에서 제13차 장성급 회담을 갖고 서해교전과 같은 적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유엔사측이 발표했다. 서해교전 직후 북방한계선(NLL) 침해를 장성급 회담의 선행조건으로 주장해온 북한이 회담 테이블에 나와 무력충돌 예방과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진일보한 자세로 평가한다.

유엔사측은 회담 후 성명에서 "쌍방이 서해교전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서로 인정했다"고만 밝혔다. 무리도발의 책임문제 등에 대해서 상호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측은 북측이 회담에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제안을 했다면서도 공개를 보류한 것을 보면 NLL 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측은 서해교전과 관련해 유엔사측이 제의한 공동조사에 응해

야 한다. 유엔사측이 남한측 고속정 인양과 실종자 수색작전을 북측에 통보하고, 통신수단 유지와 참모회의를 통해 긴장완화와 상호 오해방지를 제의한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우리측 합참 군사정보차장도 동참한 이번 회담이 "대단히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하고, 양측이 앞으로 회담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북측이 NLL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향후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장성급 회담과 함께 남북한 군사회담이 조속히 열려 신뢰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성급 회담은 조만간 재개될 남북 및 북미, 북일 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진정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바란다면 회담에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무력충돌 재발막자”

한반도는 법적으로는 아직도 전쟁상태에 있다. 서해교전처럼 언제든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자 재력을 잃고 과잉대응할 경우 더 큰 군사적 대결로 확산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1991년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소장이 임명된 것에 반발, 북측이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면서 정전체제는 7년간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다행히 1998년 김용집수정 침투사건을 계기로 유엔사와 북측이 변형된 형태나마 정전위 틀 내에서 '유엔사-북한군간 잠정합의'라는 체면을 마련했으나 이 회담도 남북관계처럼 그리 원만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사와 북측이 20개월만에 잠정급회담을 열어 긴장완화, 무력충돌 재발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한 것은 평가할 만

하다. 이 합의는 잠정급회담을 정상화한다는 뜻으로, 정전체제의 안정을 향한 의미있는 진전이다.

서해교전 직후 유엔사의 회담 재의를 즉각 거부했던 북측이 태도를 바져, 수세적인 상황을 예견하면서도 참석했다는 점도 정전체제 안정화의 좋은 징조로 보고 싶다. 서해교전 때 침몰한 고속정 인양방침을 북측에 통보하는 문제와 관련해 유엔사가 인양계획을 알려주는 것으로 타협, 인양에 발생하지도 모를 충돌의 불씨를 제거한 것도 결과적으로 잡았다.

북한이 비록 사과하지 않았지만,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요구에 과거와 달리 반박하지 않은 것도 작은 변화이다. 그러나 서해교전은 잠정협정 위반인 만큼 유엔사는 향후 회담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1953년 잠정협정의 정신으로 돌아가 무력충돌을 막고 문제해결을 포기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더 본질적 문제에 다가가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東亞日報

社說

北 경수로 순조롭게 건설되려면

어제 북한 함남 신포의 금호지구에서 경수로 건설부지의 콘크리트 기반공사 착공식이 열렸다. 1997년 8월부터 시작된 부지준비 공사를 마무리짓고 본체 공사에 들어감으로써 이 사업은 이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계자의 말처럼 '비행기가 함주로를 달려 이륙하는' 진기를 맞았다.

1994년 북-미(北-美) 제네바 기본합의의 신통인 대북(對北) 경수로 건설사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인력과 물자의 활발한 왕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남북 경제협력사업으로서의 의의 또한 매우 크다. 한마디로 이 사업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예정대로 2008년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2003년 안보위기실'의 한 가지 근거인 북한의 핵사찰 수용 이부가 관건이다. 미국은 건설일정상 2005년에 김

수로 핵심부품을 북한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일부 감검론자들은 경수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사찰은 수개월이면 충분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을 먼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사사건건 맞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북한도 이제 알고 있을 것이다. 미킵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미 대화의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는 니만큼 북한은 핵사찰 수용에서도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관계당사자들은 이 사업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이해와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북-미 양측은 어떤 난관이라도 협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남시옥 칼럼

언론인·성군권대 검임교수



서해교전 사과 받아내라

남북관계가 갈등국면에서 대외국면으로 전환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지만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책임론에는 사실상 물 건너 간 느낌이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치의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측의 사과와 책임사 시범,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려다던 당초의 방침을 관철하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의 부원칙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서해 기름공격과 관련해 북측의 책임을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남북대화과 협력관계 발전에 상호신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 당국의 책임을 단호하게 질어야 하는 것은 같은 불평등한 대북 강경자세에서가 아니라 신의 신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남북 협력 관계를 위해서이다.

北 끝내 '사과 특사' 안보내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그때 그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남북과 합의하고는 안 지키고, 도발하고는 만칭 부리기를 단골 전술로 삼아 왔다. 이런 현실상황 태도를 계속 받아들이고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에 집값 물리까지 앉았는 가, 아마도 한 정권 넘어 북측과 그나마 쫓대 있는 교섭을 받았던 것은 작년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정권교섭회담 정도였을 것이다. 이산가족연락소 설치 문제 등 방만한 각종 현안을 합의하기로 했던 이 회담에서 북측은 미국의 9·11 테러 직후 우리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회담

서울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해 결국 회담은 결렬되었다. 북측은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남북 수석대표에게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을 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그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결국 장관 재임 5개월 만에 경질되고 말았다.

정부는 지난해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정권교섭회담 실무회담에서 서해사태와 관련해 북측의 책임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반영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을까. 북측이 비검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는 구절과 남자는 주장이라도 했을까. 만약 그마저 북측이 불응했다면 우리측의 입장 표명 사실만이라도 공동보도문에 넣자고 주장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회담은 별 다른 진동 없이 예정대로 무사히, 밝은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고 한다.

이런 호사기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격단이지만 만약 6·25 서해교전 후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의 친서를 휴대한 특사를 서울에 보내왔더라면 어땠을까. 특사는 청와대로 김대중 대통령을 방문하고 북한 함성의 공격은 결코 김 위원장의 뜻이 아니었으며, 그 배경은 현재 조사 중에 있으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처자. 만약 북한 당국이 이렇게 나왔더라면 오늘의 한반도 상황은 어땠지 않았을까이다.

지금까지 김 위원장의 특사는 두 차례 서울을 방문했다. 첫 특사는 작년 9월 김 위원장이 김 대통령을 비롯한 남한 조야의 중요 인사들에게 추신선물로 보내는 절반산 송이버섯을 갖고 북방기쁜 오운 온 박제민 북한군 총정치국 부총장(대장)이었다. 박 대장은 평양에서 직항으로 서울에 와서 6시간 동안 미담

가 돌아감으로써 한반도에 금방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두 번째 특사는 작년 3월 김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작고했을 때 김 위원장의 조문사길로 온 송오경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임현 4명이었다. 정 회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특별한 예우를 과시하는 것이어서, 각정은 국민이 감동받았다. 특히 정 회장 안소호 전일원 김 위원장의 조회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완전하 바뀐 것 같은 느낌까지 주었다. 추석 선봉과 조문을 위해 특사를 파견한 인물이 김 위원장이다. 그가 진심으로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바란다면 서해교전 같은 중대 사태를 맞아 특사를 못 보낼 이유도 없을 것이다.

정부간 회담서 책임 안문다니

그러나 남북관계가 냉각되어 지금은 특사파견은커녕 이번 금강산 실무회담 같은 정부간 회담에서조차 서해사태를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으니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없다. 북한당국은 2일에는 "서해 무장충돌은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 따라 남조선 호전 계층이 계획적으로 감행한 도발사건"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함의 애매했던 유감표명마저도 완전히 뒤집고 말았다. 그들은 3일자 노동신문에서 "북측이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하면 우리 혁명무력은 결코 없는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위협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굴하지 말고 북측의 사과를 받아내야만 첫번째가 성공하는 것이다.

문화일보

남북 체육교류 정치이용 말라

올해만큼 역동적인 한 해도 없다. 정치와 스포츠. 그리고 남북관계가 광복선운 그러며 움직이고, 어떤 의미로운 상호 파급효과를 가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국 역사상 첫 정치 실업이었던 여야의 대통령 후보 경선, 한민족의 자강심을 분출시킨 월드컵의 한희, 그리고 이따의 압승으로 귀결된 6·13 지방 선거가 일어난 전반기에 펼쳐졌다. 북한의 이라리축전과 서해 도발도 이 시기를 전후로 전개되었다. 서해 도발은 월드컵과 정치를 잠시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의 긴장을 감지는 상당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런데 일어난 후반기로 전이하면서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탔고, 남북 축구대회의 북의 야심한 게임 참가 결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기대치는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이시안게임에서 남북이 공동 입장에 합의함으로써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강동도 재연될 것 같다. 남북은 깊은 민족이요, 정체임을 견뎌왔 것이다.

더욱이 곧 개최될 정권교섭 회담에서 이산 가족 상봉, 남북청도 연결, 그리고 대북 경제협력 사업 등이 가시화될 때, 김씨가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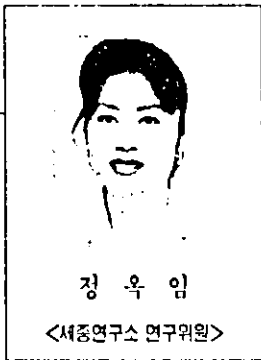
북 햇볕론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입김의 시대 진전은 오늘 의 재·보권 선거, 민주당 내 신당론을 둘러싼 긴장, 그리고 대선에의 후보와 시간적 쉼을 같이하고 있다.

월드컵을 통해 지지도가 급상승한 정몽준 의원은 자의든 타의든 스포츠와 국내정치, 남북관계라는 요한 협수 관계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듯하다. 여야간 정쟁과 극한 대치 상황도 벌어진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에 대한 이아 상호간의 정치 공세는 이미 산사를 불타는 감지에 이르렀다. 1892년과 1913년을 예로 들어 일요일은 '싸우는 해'라고 단정한 이석우의 '정확한' 예언에 손사래가 쳐질 정도이다.

피할 수 없는 상호 파급효과

과연 정치와 스포츠, 그리고 남북관계의 역학 구도 속에서 정치인들은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과 미래의 민족 공영을 위해 어떠한 승수효과를 줄 것인가? 한국 정치는 소문들이 속에 최종적으로 선진 민주주의로의 진화 수순을 밟을 것인가? 남북관계는 화해의 교류의 차이를 넘어 건

포럼



정옥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박 이벤트를 추진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안에 대한 구체적 상정과, 남북한간 신뢰 구축의 문턱을 넘어야 할 때이다. 서해교전 사태와 같은 빛의 저강도 국지 도발을 차단하는 일은 해군이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당면과 정략으로 지켜져야 하더라도 된다.

민족화합의 촉매제야

정치와 스포츠, 그리고 남북 관계가 연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비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김씨가 놀라와 페이스에 의해 스포츠와 남북 관계가 결합되는 일은 관계해야 한다. 오히려 스포츠의 패어 플레이가 진전이 정치와 남북 관계에 깊이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의 파고에 남으면서도, 불공의 의지와 끈기할 지기였다. 그리고 혼은 속에서도 변연과 진보할 지기였다. 각등의 여사가 배대한 냄비 정서의 단면에 안주하고, 소문들이 정치 문화에 정착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남북 관계와 스포츠에 대해 정치권이 단순적으로 감내·공조하고, 각계의 승부수는 정계 대안으로가 가무는 있을 기대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이 아직은 희망적 관측(wishful thinking)에만 그치는 것이 이 한의 현실일 것 같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
경제학



쌀지원 '퍼주기' 아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쌀값이 떨어질 위기에 몰려있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쌀값을 올리고 있다. 농민들이 내다줄 수 있는 쌀은 3백만톤 정도인데, 이만큼을 팔아도 10~20배 인상이 된다. 환율도 대폭 조정되었으며, 기업의 지급성을 높이는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사수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재 내의 개선'이라는 평가가 북한경제의 특수성에 기초한 '북한식 시장화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세계에서 교전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들으면 걱정이 된다. 정부에서 북수출을 주장하더라도, 남북한이 처한 정치적 조건을 고려할 때 사태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북한 대북 쌀지원 조치는 어려운 것이고, 우리 농민이나 북한 서민들의 삶도 고달파하겠다는 생각이 그늘이 드리워졌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남북경제교류 정상화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또 북한이 통가와 압록강 인삼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조금씩 '다른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기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우리의 쌀 재고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가을 수확기에 쌀값이 340~550배 인상되었다. 환율도 대폭 조정되었으며, 기업의 지급성을 높이는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사수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재 내의 개선'이라는 평가가 북한경제의 특수성에 기초한 '북한식 시장화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재고가 생겼다는 것은 쌀이 넘쳐나고 있다는 뜻이다. 다급한 것은 가을이 오기 전에 재고를 처리하는 일이다. 재고 쌀을 원물차관으로 해외에 지원하는 것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고, 무상지원의 경우에는 물자-시간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이나 시간을 감안하면 사료용으로 사용하든지 북한에 지원하면 지속할 단안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두서너 달 안에 처리해야 할 문제를 '국민정서' 운운하며 관련 부처 책임자를 나무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쌀에 관한 한 남북한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 농민과 국가재정에 이익이 된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이견이 없다고 해도 좋다.

때마침 북한 내에서도 7월 이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쌀 배급가격이 340~550배 인상되었고, 근로자들의 노동도 10~20배 인상되었다. 환율도 대폭 조정되었으며, 기업의 지급성을 높이는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사수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재 내의 개선'이라는 평가가 북한경제의 특수성에 기초한 '북한식 시장화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상황 변화의 핵심 요소는 하나인 쌀 가격문제와 '가격개혁'이나 '농업개혁'의 입문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직 수매제도나 배급제도의 골격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가격조정이나 차별요금 도입하는 농업조직 개혁의 움직임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선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격비율의 개선(가격개칭)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반성적인 식량생산 부진율 개선을 위한 지원금, 기술지원이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 북한경제의 구조이다. 추가로 지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동일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 결국에는 개혁 초기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지원비율 없이 제도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공급 부족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외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제도개혁에 우호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생산물(식량), 생산요소, 기술 등 외부에서 공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중에 제재와 함께 안전 방곡한 생산기반과 제도 자체를 새로 설계하는 비용을 모두 떠안는 것이다. 양쪽 모두 한국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쌀자는 앞으로 돌발적인 변수가 나오지 않아 쌀지원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올 가을 남북한 모두 쌀 시장이 나아지기를...

東亞日報

2002. 8. 9(금)

객원논설위원칼럼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對北 '경제카드' 왜 못쓰나

공적이었다. 또한 '경제지원 불가'라는 대북 협상카드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 다시 말해 김대중 정부 임기기간에 북한을 대남 화해 협력부담금 제공하는 대가로 남한의 경제지원을 받는 데 약속했었다. 이제 북한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대북 경제지원 불가'라는 표적적인 협상용 카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회성 화해부드란으로 안돼

김대중 정부는 남을 돕기 동안 더 이상 서두르지 말고 햇볕정책을 마무리해야 한다. 바로 '대북 경제지원 불가'나 '화해 없음'이라는 협상카드를 사용해야 할 시점이다. 남북 장관급회담이 재차 심사된다면 김대중 정부의 태도 이해에 따라 우리측 대표가 먼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작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 당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북 지원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을 실감할 때 햇볕정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으로 인해 단방단 남북간 화해 부름을 만들 수 없어도 어쩔 수 없다. 북한이 북핵문제에 대한 협조가 없다면, 남북국교대화도 무산되고, 이산가족상봉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일회성 관치에 지어 있을 줄을 알아야 한다.

월드컵 축제 분위기에 감정을 껴넣고 우리 해군병사들의 복송을 몇시간 시해교전이 일어나지 이제 겨우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의외로 4월 금강산에서 남북 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회담이 있었다. 이어 5월에는 판문점에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의 정상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를 두고 남북간의 본격적인 화해무드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을 뿐 한국정부가 요구한 사과를 하지 않고 공동책임 운운하고 있다. 심지어 장관급회담에서 북한군 수석대표는 서해교전지 침몰한 우리측 함정을 인양하는 작업을 서해상에서 강행할 조짐하는 행위로 강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장관급회담에서 서해상의 군사충돌 방지 및 위한 의견교환도 있었다고 하지만 북한군 대표는 기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한 채 민간 해상경계선에 대한 북-미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무접촉 제의에 들뜬 정부

돌아키 보면 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올 4월의 4-5 공동보통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실질적 이행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잘 30만 1을 요구하면서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해준 것에 대해 너무 들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김대중 정부가 남북국교대화 재개를 시달려서 얻을 수 있

는 이득은 별로 없다. 서해교전 당시 전사자들의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는 월드컵 축제무드엔 여지없이 깨뜨린 북한의 6-29 서해도발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남북국교대화 재개를 발표로 한 신(新)북상이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신북상은 정치판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길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얻을 것이 많다. 북한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나 남북국교류 재개를 통해 30만 1 이상의 쌀을 남한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남한에 어떠한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만큼 '안대'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다급한 심정일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면 북한은 북-미대화 재개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남북간 및 북-미간 접촉을 수용하고 부산에서 이경기대회, 9월 남북국교대화에 참가하는 전진한 이유가 한반도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에 있다면 김대중 정부의 남북관계 접근 노력에 반대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지의가 눈에 보이는데도 정부 당국자들이 이를 외면하려는 데 있다. 부산에서 이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대거 참가하고 백두산 전지외 한라산 백록담에서 재회한 성과가 하나가 되어 풍요의 영원을 담는 역사적인 장면이 조만간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컵 경기장은 남북국교류로 인해 다시 한번 뜨거운 열기를 뿜어낼 것이다.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가슴 뭉클한 장면도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이와 같은 남북간 화해무드가 북한의 제도방로 인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햇볕정책은 역사적인 6-15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데 선

아시안게임때 人共旗 어떡하나

북한이 참가하기로 결정한 부산 아시안게임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 인공기(人共旗)·국가(國歌)의 사용 허가 문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동시 참가라는 의미를 살리면서 불필요한 남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국제적 스탠더드와 상호주의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아시안게임 주최국으로서 우리는 국제 기준과 관례에 따라 각종 경기장은 물론이고 선수 숙소 등 제한적 장소에서 인공기 게양을 허용해야 한다. 시상식의 인공기 게양이나 국가 연주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행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여전히 이적단체며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는 중죄로 규정돼 있다. 이런 현실에서 '북한 서포터스'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경기장 내외의 응원단이 인공기를 들고 적극적인 응원을 펼칠 때 이는 불법 행위가 된다. 같은 핏줄인 북한을 응원하는 게 왜 나쁘냐는 주장과 현행법 위반이라

는 소모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지난번 서울대 구내 인공기 게양처럼 경기장 밖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남북 갈등이 변질 수도 있다.

아직 아시안게임이 50일이나 남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북측과의 체육회담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우리 선수단이 평양에 갈 때도 같은 준칙을 적용하는 등의 기준을 만드는 게 좋다고 본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제한적 장소'의 구체적 허용 기준을 만들어 현행법과 국민 감정 사이의 골을 원만히 메우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여 결정은 과거 냉전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난 의미있는 행동으로 앞으로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빈도나 가능성이 커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차제에 남북한 간에도 국가·국가 문제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세워 진일보한 대화와 교류를 이룩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도발징후 '묵살' 사실인가

지난 6월29일 발생한 서해교전에서 북의 도발징후에 대한 사전보고가 묵살됐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서해교전 직전에 대북 통신감청을 담당하는 정보부대가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구체적인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도발에 대비할 것을 보고했으나 묵살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보고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안고 있다.

당시 군 수뇌부가 북한도발에 대한 사전정보 공개될 경우 워드캡과 대북화해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군사적 직무유기다. 대북포용정책도 튼튼한 안보의 바탕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군의 역할이 유린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당시 김동신 국방부 장관이 수차례나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서해교전에 대한 책임논란을 우려해 사건축소와 도발에 대한 상황까지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겹쳐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은 있어야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군 수뇌부의 안이하고 소신없는 판단 때문에 서해교전을 자초했고 인명손상과 비극을 초래시킨 만큼 교훈적 차원에서도 철저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안보상 공리요, 상식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더욱 중요하게 음미할 때다.

사설

인공기 계양과 보안법은 별개

북한이 부산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까지 보내겠다고 통보해오며 따라 인공기 계양과 북한 국가 연주, 특히 인공기를 이용한 응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될 수 있는 데다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제 관례 및 민족의 화합과 화해 정신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올림픽과 월드컵 대회를 비롯한 스포츠 행사가 지향하는 것은 평화와 화합이다. 경기에서는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종교와 인종·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어울림이요 나눔이다. 하물며 같은 행사에서 민족끼리 반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까지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올림픽 등 스포츠 행사가 열렸을 때는 인공기 응원 등을 허용해왔다. 우리도 북한이 참가한 경기에서 인공기 계양 및 응원 장면을 TV를 통해

여러차례 보아왔다. 북한은 350명 이상의 선수단 및 인원, 200명 이상의 응원단을 보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메달을 땀을 때 인공기 계양과 북한 국가 연주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에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메달 수여 때 국기를 계양하고 국가를 연주하는 것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에 명시된 사항이다.

문제는 인공기를 이용한 응원의 허용범위다. 남한은 북한이 제의한 아시안 게임 참가 등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인공기 응원 등이 아시안 게임과 남북 화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인 적용으로 아시안 게임이 망가지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이다. 분단의 상처는 크고 깊지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남북한은 아시안 게임이 남북 화합과 화해, 나아가 통일 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상봉면회소 철도연결 이행을

오늘부터 서울에서 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린다. 9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장관급회담은 이번 주 잇따른 남북간의 8·15민족통일대회와 북한선수단의 아시안게임 참석 실무회담 등의 성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그 의미는 크다.

이번 회담에서는 새로운 합의보다는 남북간의 기존 합의를 구체화하고 실천 방안을 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경의선 공사 착수, 동해안 철도연결 추진, 이산가족 상봉 장려회 등 기존 의제에 관해 손에 잡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군사·정치분야에서도 당장 합의는 어렵더라도 상호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 일정을 가능한 한 빨리 잡도록 힘써야 한다.

남북 철도연결 문제,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은 남북간에 다소 시각차가 있지만 큰 원칙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남북경협위원 조속히 가동해 협력과 교류에 탄력을 불어도록 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문제 역시 이제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 지

속적인 상봉의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때다. 따라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일정의 조율은 물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방법, 장소 등에 대한 대강의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남북직접 회담을 통해 당장 면회소 개설시키나 장소 등을 합의하기 어렵다면, 최종 합의 때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준면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해나간다면, 이산가족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는 요원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인도적 차원에서도 더 미룰 일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쌀 및 전력지원 문제도, 여러 고려 요소가 있겠지만 다른 사안의 진전과 더불어 직정선에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번 회담결과를 김대중 정부의 인기말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변수로 만든다는 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요요했던 남북관계가 다시 활기를 띠고 교류의 장이 열리기 바란다.

社說

남북회담, 신뢰회복이 최우선이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불씨가 터졌다. 6·29 서해교전이 있던 지 한 달보름만에 서울 거리에 북한 대표단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7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14일부터 17일까지는 광복절 기념 공동 행사에 참가할 북측 대표단 100명이 서울에 온다. 뿐만 아니라 9월 8일 경평축구가 예정되어 있고, 9월 29일부터 열리는 부산아시안 게임에는 수백명의 북한 선수단에 응원단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나 북측 사절을 맞이하는 남쪽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신중론이 우세하다. 그것은 물론 한달보름 전의 서해 연평도사건 때문이다. 느닷없는 북한 경비함의 사격으로 우리 해군장병 20여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했다. 그 충격은 심로 컸다. '이제 전쟁만은 걱정 없게 되었다던 DJ정부의 다짐이 순식간

에 무너져내렸다. 이때 우리 국민 대다수가 느낀 심정은 '아, 역시 북한은 그런 곳이구나' 하는 낙담(落膽)이었을 것이다. 대북 불신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것이다.

6·29 서해교전의 비극을 딛고 이제 다시 남북이 무릎을 맞대고 '화해와 협력'을 얘기하게 되었지만 그 길과는 어렵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북측의 진솔한 자세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도 북측이 또 실망을 준다면 그 파장은 더 크고 오래갈 것이다. 사소한 시비나 해묵은 논쟁 제기, 설부른 기(氣)싸움, 사려 깊지 못한 말 한마디도 대화를 그르칠 수 있다. 북측은 무엇보다도 이번 일련의 회담과 행사를 통해 '신뢰 회복'에 최대 역점을 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합의와 가시적인 진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북한은 진정한 평화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인공기, 과민할 것 없다

북한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석이 확실해지면서 지금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깃발(인공기)과 국가(國歌)를 비롯한 상징물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는 고민을 안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정부는 슬기로우야 하고, 국민은 냉정해야 한다. 국내법, 국제법, 국제관행이 서로 충돌하고 국민정서까지 대립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북한이 처음 참가하는 사실 자체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은 남북관계가 협상의 단계에서 교류단계로 갈 때 타결 문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공식 행사장의 국기계양과 국가연주는 아시아 올림픽평의회 현장에 따른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경기장 밖의 참가국 국기 계양도 참가국 자리에 준해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

응원단의 활동은 제3국 응원단 활동에 준하는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한 정서를 감안해 규제할 부분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 분명한 관계선을 못박아 둘 필요가 있다.

미묘한 문제는 국내의 북한 서포터스 활동이다. 부산시가 조직할 공식 서포터스도 있지만, 학생운동 등 소위 친북단체의 응원도 있을 것이다. 아마 이 그룹의 응원활동이 관련기관에는 신경 쓰이는 일일지 모르나,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사회의 체제적 건강증진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 스포츠 행사에 준해 경기장과 그 주변에서의 활동은 전향적으로 생각하되, 장외의 문제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조직위나 부산시가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때 사용했던 한반도 기를 응원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국은 법의 탄력적 운용을, 북한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남한을 존중해야 한다.

사설

‘人共旗사용’ 원칙을 세워야

· 북한이 지난 9일자 대남 서한을 통해 오는 9월29일 개막되는 부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공식 통보해왔다. 북한이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대회에 선수단을 보내는 것도 처음이지만 대규모 응원·예술단까지 함께 파견하게 되면 더욱 뜻깊은 회합의 축제가 부산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그러나 북한 선수단 파견에 따르는 신변안전과 북한 인공기(人共旗) 사용허가 문제 등 우리측이 사전에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야 할 미묘한 사안이 적지 않다. 남북한 동시 참가라는 의미를 살려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소모적인 논쟁이나 남한 내부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원칙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이미 남북한이 유엔과 국제스포츠기구 등에 공동 가입한 이상 회원국 지위에 걸

맞은 집단한 대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헌장 43조1항은 '모든 경기장 및 주변에는 참가 회원국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 매달수여행사에서 국가를 연주하고 국기를 게양하는 절차도 지켜야 마땅하다.

하지만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물 금지한 국가보안법 등 심장법과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경기장 안에서 인공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 응원단이 경기장 내에서 인공기를 들고 응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부산시가 조직한 응원단(서포터스)이나 일반 관중석의 문제는 남는다. 참가국들을 환영하는 거리 국가 게양에서 인공기만 빼기도 어렵다. 6·15평화공동선언 기념행사 때 일부 대학 구내에 인공기가 걸려 논란을

빚었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내부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남북한은 북한 선수단 참가와 백두산 성화 채화 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고 장소·장합의 중인 만큼 우선 이 접촉을 통해 미묘한 사안들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참가가 남한 내부갈등을 부추겨 이념적 혼란과 불안을 키우는 부작용이 없도록 남은 기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자칫 감상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부산거리에 인공기가 물결치도록 방치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냉전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한번도 틀대결의 강으로 풀이하는 잘못은 더욱 곤란하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모두가 이를 준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

아시안게임과 人共旗 문제

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에 따라 북한의 국기(國旗)와 국가(國歌) 사용문제를 놓고 정부가 적잖이 고심하고 있는 모양이다. 인공기(人共旗)의 게양이나 북한 국가의 연주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 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국가보안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서해교전 사건'으로 우리 국민의 대북감정이 좋지 않은 점과 인공기가 게양됐을 때의 국민정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 이완 등을 우려하는 것 같다.

우리는 우선 '공식적인 장소에서의 인공기 사용'은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참가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국기를 게양하고 매달 수여 때 국가를 연주토록 돼 있다. 이러한 규정이 비록 국내법과 배치되기는 하지만 북한이 대회에 정식으로 참가하는 이상 규정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 북한 응원단이 경기장 내에서 인공기를 흔들거나 북한 국가를 부르면서 응원하는 행위 또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문제는 남쪽 관중의 '북한 응원'과 일반장소에서의 인공기 게양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스포츠정신에 입각해 접근하길 주문한다.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 이번 대회 참가를 결정했든 그 무대는 스포츠 행사장이 아니다. 스포츠가 정치논리로 비약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치논리로 스포츠를 재단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행위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경기장 내에서는 최대한 운동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기(旗)'를 이용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 응원단이나 남쪽 시민들이 북한의 국가·국가기를 스포츠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조만간 시작된 남북 실무협상에서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 대회기간 중 남 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길 바란다.

社說

人共旗와 북한國歌

북한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정으로 북한 국기(人共旗)와 국가(북한 '애국가') 사용의 허용 여부와 허용할 경우의 범위가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제체육대회의 일반적 관례, 남북관계의 현실과 미래, 국가보안법 같은 실정법(實定法) 규정,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인공기가 필적하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국민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단히 미묘한 사안으로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해 결정할 일이 아니다.

현 정부가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고, 건비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마당에 그들의 국기와 국가를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으며, 대안을 찾기도 어렵다. 다만 현 정부가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깊은 고려나 국민적 논의 없이 우선 북한의 참가부터 선사시켜 놓고 보자는 식으로 질주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기와 북한 애국가를 다른 참가국들과 마찬가지로 시상식에서만 아니라 응원석이나 경기장 주변, 길거리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허용할 경우 우리 국민들이 느껴야 할 혼란감은 적

지 않을 것이다. 북에서는 응원단까지 보내겠다고 봉보해 온 상태다. 이 경우 순수한 스포츠행사가 정치 선동·선전장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없지 않고, 남북 또는 남남(南南)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실정법상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경기장 안팎뿐 아니라 대도시 광장들에서 수많은 인공기를 흔들고 북한 애국가를 열렬히 고창하는 집단행동을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 모든 경우들을 미리 상정해 일일이 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뿐 아니라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시안게임까지 남은 기간에 정부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국민여론을 경청해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북측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북한 국기·국가 사용의 의미와 범위를 가능한 한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북한도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 차체에 남북이 국가상징물 사용에 관한 상호주의 원칙도 확립해야 할 것이다.

社說

'인공기 딜레마' 신중하게 풀어야

북한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로 남한 땅에서 인공기(人共旗)가 게양되고 북한 국가가 연주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때문에 남북화해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의미는 대단히 복잡적이다.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가하는 나라의 국기와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관례다. 경기장 및 선수 숙소에 인공기가 걸리고 북한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 인공기 게양과 국가 연주로 이어지는 시상식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며 논란거리가 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며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된다. 더구나 대다수 국민은 북한이 불과 두 달 전 서해에서 저지른 심각한 군사도발을 잊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응원을 어디까지 묵인해야 할 것인가. 북한 선수단의 제세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는데 인공기를 흔들는 일에 전념할 응원단에게까지 경비를 지인할 것인가. 응원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 북한의 '북한 서포터스'에게 인공기를 허용할 것인가.

정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17일부터 시작되는 실무접촉에 임해야 한다. 인공기와 북한 국가는 북한의 상징이다. 정부가 북한의 상징을 어떻게 대할지 전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주최국으로서 북한에 이번 대회 성공을 위한 협조를 당당하게 요청해야 한다. 남북한은 관리산과 백두산에서 동시 채화한 불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합쳐 만들어진 성화로 이번 대회를 밝히는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남북한이 여러 국제스포츠행사에서 국기와 국가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전례도 있다. 입장식과 응원의 경우 남북한 모두 한반도기쁨이 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해결방법이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분열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희망이었고 집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었다. 그런데 그처럼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으로 인식됐던 통일이 이제는 수지다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각어도 20~30년 후에나 생각해볼 수 있는 일로 인식되게 됐다. 그리고 당장 통일은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도 안되고 성취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새 컨센서스가 됐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통일은 안된다는 새 국민적 컨센서스를 우리 과 좌익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통일불가론은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새 정삼(orthodoxy)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다.

비용 엄청나 자연론 대두

그러면 통일 불가론은 1%씩 확실한 것인가? 20년, 30년 기다릴수록 통일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을까? 통일방법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 평화적으로 되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더 용이하게 된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통일 불가론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리라는 수치를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모두가 불확실한 가정 아래 임의로 추정된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점

은 통일비용이 얼마가 되든 앞으로 몇십 년 기다리면 감소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가 하는 점이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성장 속도가 남한의 경제성장 속도보다 앞서 가지 않는다면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지금보다 더욱 벌어지고 통일 비용도 더

있을 것이다. 통일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일을 지연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보다도 어떻게 하면 통일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가 더 집중해야 한다.

다음은 통일과정에서 주변 국제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

고. 그리고 북한 체제의 운영은 누구도 예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북한 체제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는 사실뿐이다.

北체제 붕괴 항상 대비될

북한은 태어난 때부터 이념적 스포츠의 역할을 해준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붕괴했다가 번갈아바뀔 마당에 홀로 남은 고독한 존재로서 과거에 사회주의 협제국가들이 제공하던 경제 인조가 끊어진 오늘날, 과거에 원수국가로 간주해온 자본주의 국가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가는 처참한 지경에 놓이게 됐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에만 처해있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바로 그와 같은 어려운 조건에서 이른바 경제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개혁은 성공한다고 해도 북한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실직자 문제 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경우 북한 체제의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 먼 훗날이 오기까지 통일은 없다는 생각이 버려야 한다. 우리의 통일은 우리가 통일을 가장 예상하지 않는 순간에 찾아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원장장 · 고려대 석좌교수

김경원 칼럼



통일불가론?

많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남한보다 앞서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전망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반드시 비관적인 일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통일 비용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독일 통일을 보고 나서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오늘날 독일 사람들은 통일비용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독일이 통일된 사실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통일 비용 문제만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다. 통일 불가론자들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독일 통일과정에서 보면 독일은 통일의 결과로 주변 국제관계가 더욱 안정된다는 점을 주변 주요국들에 설득함으로써 동의를 얻어냈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통일한국이 분단한국보다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통일외교의 기본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우리가 쉽게 편리한 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가늠해야 한다. 만일 북한체제가

朝鮮日報

時論



李東國

오는 9월의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들이 참가한다는 사실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반겨야 할 일이지 마다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선수들의 참가로 인하여 부산 아시안게임이 정치적 행사로 변질되어 우리 사회에 또 한 차례 '남남갈등'의 풍살을 강요할 위험이 머리를 들고 있다. 그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소위 '인공기(人共旗)' 문제이다. 게임기간 경기장에 '인공기'를 게양할 것인가, 경기에 참가하는 북한 응원단의 '인공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일부 한국인들이 '인공기'를 들고 나서는 일이 나타날 때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반도기'대체 허용 안될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정부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영계주춤한 태도를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즉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현장에 의거하여 경기장 내 '인공기' 게양과 북한 '국가' 연주할 허용하다 북한 응원단과 한국국민들로 구성된 북한 응원단(서포터스)은 소위 '한반도기'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로는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고, 둘째로는 원칙에 맞지 않는 합법적·변대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태극기의 끝길 속에서 불과 수백 명에 불과한 북한 응원단과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남북 사회의 북한 응원단이 '한반도

치적 행사'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월드컵 기간 '대한민국'과 '태극기'를 용례로 "전 국민의 '붉은악마'화"를 통해 남한의 4700만 국민들이 감동적으로 일구어낸 '국민적 단합'에 몰타기하려 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북한의 참가를 확보한다는 일념으로 쌍방의 국기와 국기를 '한반도기'와 '아리랑'으로 대체하는 데 동의한다면 부산 아시안게임은 이로써 북한이 당초 월드컵의 효과를 견제·회색시키기 위하여 평양에서 조직했던 소위 '아리랑 축전'의 연장선으로 전락하고 말 가능성이 없지

않은 요구 등 국제초약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문제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설정하는 법제정을 단행해야 한다.

北서 태극기 게양도 총족돼야

그러나 이 시정에서의 법개정은 그 범위도 어디까지나 국제초약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국한시켜야 한다. 그 범위를 넘는 문제, 즉 이번 아시안게임의 경우 북한 응원단이나 남북에서의 북한 응원단이 '인공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바로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상호주의'의 차원에서 논의하여 북한측도 남북에서 허용되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입법적 차원에서 취하기로 동의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를 동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상호주의'의 차원에서 북한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며 남한에서 '인공기'가 게양되고 북한 국가가 연주되는 것을 더이상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민족적 단합'에서 극복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지금 당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현실'을 '현실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반도의 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에는 대한민국과 공화국과 북에는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외면하고는 한반도의 분단관리는 물론, 평화통일도 무망하다.

/경희대 초빙교수·15대 국회의원의

아시안게임과 '人共旗'

기'를 흔들며 북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방식을 북한측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아마도 북한은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일지향적'인 '민족적 행사'로 '승화'시키지는 명분 아래 '남북 쌍방이 다 같이 각자의 국기와 국가를 사용하지 말고 깃발은 '한반도기'로, 국가(樂歌)는 '아리랑'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안으로 게임기간 중 '인공기'가 적한 없이 사용되도록 허용하라'는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도 예견된다.

만약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의 노립수를 읽어낼 수 있다. 김정일(金正日)의 북한은 부산 아시안게임을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민족적 단합'을 내세우는 '정

말다. 정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의 '인공기' 문제를 정중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한 우리 사회에서 '인공기'를 날리고 북한 '국가'를 연주한다는 것은 불법한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초청을 받아들여 참가하는 이상 우리는 OCA 헌정상의 요구, 즉 경기장에서의 '인공기' 게양과 북한 '국가' 연주할 수 용하는 길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도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이다.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를 합법성의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OCA 헌정상의 요구를 합법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다. 국회는 시급히 국가보안법 부칙에 OCA 헌정

社說

장관급 회담 '기존합의 실천' 을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그 성과와 실패를 구체적으로 결산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번 회담은 정치적 سنگ을 배제하고 실무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내는 일은 깨끗이 단념하고, 기존의 합의사항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확실하게 북으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

북한당국이 남북 회담을 자신들의 필요와 편의에 따라 열고 단기를 마음대로 하면서 합의사항마저 제멋대로 내팽개치고, 현 정부가 여기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행태에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심한 환멸을 느끼고 있음을 남북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 임하는 북한 당국의 진지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 측은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북한측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해야

한다. 이 문제를 북측의 모호한 '유감' 표명 진봉문 하나로 어물쩍 넘겨서는 어떤 남북대화도 속편 감정일 수밖에 없다.

이산가족 상봉, 김의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陸路)개통 등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들은 오래 전에 합의되고 어느 정도 진척된 것들이라 북한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당사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문세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협력과 화해로 끌고가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인 것이다.

북한은 최근 물가와 임금률 대폭 인상하는 새로운 경제실험에 나섰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므로 대외적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 만큼 현 정부가 입기 말의 초조감에서 또다시 신속 없는 합의문 몇 장에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에 나선다면, 그것은 '말을 수 있을 때 다 만자'는 북한외의 도를 충족시켜 줄 뿐이다.

社說

남북 장관급회담 성공하려면

어제 서울에 온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북한측 대표단은 도착선명에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훌륭한 합의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 말이다. 북한측은 선명대로 실천하기 바란다. 남쪽도 기존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이번 회담의 목표라고 거듭 밝힌 만큼 이번에는 양측이 가시적인 결실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김의선 연결과 금강산 육로관광, 이산가족 면회소 등 현안이 어떻게 결론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원래로 김의선 접도 및 도로연결 문제에 대해 북한은 '북측 구간은' 3개월이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호언하면서 실제 공사는 계속 미뤘었다. 북측이 이 문제를 계속 회피한다면 남북간 신뢰의 끈이 진정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를 위한 첫 단계인 면회소 설치 문제도 더 이상 시간만 낭비할 계책이 아니다.

이번 회담의 성패는 이 같은 사안들에서 북한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냐에 달려 있다. 부산 이시아경기나 남북 축구대회와 같은 행사만으로는 이문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남북 당국이 모두 알아야 한다. 국민은 이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를 원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번에도 이 문제를 흐지부지 넘겨 버린다면 남북이 아무리 길으로 화려한 성과를 낸다 한들 국민을 실망시키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도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것이다.

북한은 진에 없이 이번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백 미더 미사 어구가 아니다. 서해교전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가 북한의 '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가 될 수 있다.

사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어제 열린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시작으로 한동안 막혔던 남북대화·교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 민족통일대회, 서울 남북축구대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같이 이미 확정된 것 말고도 이산가족 상봉 등 예상되는 일장까지 고려하면 읊 하반기는 남북대화·교류의 풍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면 중단됐다가 붓물터지듯 하는, 이런 대화·교류 방식에 무조건 박수를 보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반쪽 대화와 긴 잠재상태'가 반복되는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대화 및 교류 역시 정체와 단점의 시간이 온다는 예고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일련의 대화과정에서 서두르는 북한의 모습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런 징조를 읽어내는 이들이 있다. 북한이 서해교전의 후유증이라고 판단하는 문제를 조기 치유한 뒤 대북 식량지원을 받고 북·미대화 등 대외관계의 전기를 마련하고 나서는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사실 기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장관급회담의 김영성 북측단장이 "합의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힌 대목을 주목한다.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북측에 해주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말, '실천'을 북측이 스스로 꺼내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잠빛 빛 합의문서나 '듣기 좋은 말'만으로 남북관계를 논할 때는 지났다. 대내외 과시용 일회성 행사를 갖게 더 갖는 것으로 남북관계의 성적표를 낼 때도 아니다.

이미 합의한 가운데 작은 사업이라도 답장 지킬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동이 좋은 예이다. 안락의 잠강변화에 따라 끊기는, 그린제자리 걸음식의 남북관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축적적 관계로 발전해나아가야 한다. 북측 대표단의 다짐이 빈말이 아니기를 바란다.

한국일보

2002. 8.13(화)

社說

남북회담, 합의보다 이행을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다. 실무 대표 접촉에서 주요의제가 이미 실정돼 있고, 북한측이 어느 때보다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 대표단은 인천공항 도착성명에서 "이미 상정된 모든 문제에 대해 훌륭한 합의를 이룩해야 한다"며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회담의 순환을 예고했다.

북한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했고, 부산 아시아게임 참가를 결정하는 등 개방을 염두에 둔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회담에 적극 임하는 게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을 바라보는 남한측의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선제공격으로 우리 해군 24명을 사상(死傷)케 한 서해도발 이후 북한을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서해도발에 대해 일방적인 애매한 사과만

을 할 뿐, 공개석상에서의 언급은 전혀 없다. 사과를 결정하는 북한체제의 복잡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최소한의 억지사지(易之思之)만 해도 얘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9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회담에서 경의선 연결과 금강산 육로관광 및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남한이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카드는 두말할 것 없이 식량지원 등 경제협력이다. 남한이 이들 세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낸다 해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얼마나 이를 성실하게 이행·실천하느냐이다.

세 부분 모두가 이미 합의했던 사항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를 이행토록 하는 실천력을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다. 회담의 성패가 합의에 있는 게 아니고, 이행과 실천에 달려 있음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남북 군사 당국자회담 시급

매일경제

2002. 8.13(화)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서해교전 후 한 달 반 만에 열린다는 점과 그 동안 합의만 하고 이행되지 않은 모든 사안의 의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북측대표단은 도착 성명에서 "상진된 모든 문제에 대해 훌륭한 합의를 이룩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북측도 이번 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내보였다.

따라서 이번 장관급회담이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서 권과직으로 합의했다는 사진만 남기는 회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에서는 남북의 태도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실행 없이 미뤄진 의제 중 구체적인 성과를 보기 원하는 의제의 우선순위에서는 남북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데 이번 회담의 어려움이 있다.

아마도 북측은 경험추진 2차 회의를 재개해 쌀 지원문제를 매듭짓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측은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를 통해 서해교전사태에 대한 사과와 무력충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구체적 진전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로의 다른 관심사항을 어떻게 조율해 구체적인 이행에 합의하느냐가 이번 회담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양측이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회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측은 최근 가격체계의 현실화를 비롯한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반면 남측에서는 서해교전사태에 의해 북측의 사과와 무력충돌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햇볕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남측은 김정은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북한은 남측의 여론을 수용해야 한다.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에 대해 응답자의 82%가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서해교전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 쌀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이 61%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측이 진전된 사과와 무력충돌 재발 방지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측의 화해협력에 확대하는 필수조건임을 보여준다.

국민들은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의 진전과 더불어 군사당국자회담의 조기 개최와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世界日報

2002. 8.13(화)

‘人共旗’ 문제는 원칙과 조화로

社 說

북한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로 인한 인공기 게양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북한 응원단의 인공기 사용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일부에서는 비정치적 국제행사인 만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실정법상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인공기 사용은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우리 국민들의 대북정서는 비단 부산아시아경기대회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중적 괴리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때문에 인공기 문제는 원칙과 현실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풀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원칙은 수용하되 우려되는 파장을 최소화시키는 운영의 조화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국제경기대회인 만큼 경기장에서 북한 국기 사용이나 국가 연

주는 원칙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분단 이후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경기에 북한이 최초로 참가한 것은 남북화해와 진전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인공기 사용을 수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엄한 실정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인공기 개방' 허용은 자칫 우리 사회체제의 혼란과 남남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남북한 응원단의 경우 남북한 국기 대신 2000년 시드니올림픽때 사용했던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무난한 것으로 본다. 응원가 역시 서로 비방의 내용이 아닌 화합을 상징하는 노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인공기를 앞세운 이념투쟁이나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무모한 개인-집단행동은 자제돼야 마땅하다.

사설

남북회담 말보다 실천이다

9개월 만에 재개된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외형상 일정한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이 서해교전의 도발 책임을 묻게 하면서 지난달부터 착수한 경제 개혁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드물게 유화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또 김대중 정부의 임기 내에 남북관계를 일정 수준 복원해 놓는 것이 차기 정부와의 관계를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고, 김대중 정부도 임기 말 실적 쌓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양측이 경의선 연결 및 그를 담보할 군사 당국자 간 회담 개최 일정, 대북 쌀 30만t 지원을 매듭지을 경험추진의 개최 일정은 물론 추석의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 같으면 대단한 성과로 비취질 이런 사안들은 이미 양측 간에 사실상 합의했던 내용들로 북측의 변덕으로 이행되지 못했던 것들이다.

북측의 성실성 결여가 남북관계 진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상황에서 합의의 사장에 대한 북측의 실천을 어떻게

담보해 낼 수 있는지가 남측 대표단의 최대 과제라 하겠다. 정부는 따라서 깨지기 쉬운 북측의 '선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행에 필요한 '실효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이벤트적인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합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상설 변희소 설치 및 우편물 교환 일정을 대북 지원 문제와 연계시키는 방법 등도 고려해볼직하다.

북측은 대표단 도착 성명에서 "합의를 과감하게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 한영사의 한 구절로 착각될 만큼 격조한 표현을 사용한 북측은 이전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북측은 우선 서해교전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히야 한다. 그래야 최근의 수해로 식량난이 더욱 심해진 북측이 남측에서 흔쾌한 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순항해야 북측의 경제 개혁이 국제적 도움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한겨레

사설

남북관계 진전 계기돼야

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어제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무려 9개월 남짓 만의 단담이다. 당국자 회담이 중단된 사이에 남북 간에 서해교전이 벌어지는 등 우려곡절이 많았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장관급 회담이 잘될 것이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것은 북측의 대화 의지가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도 그러하거니와, 북한은 실무접촉에서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할 뜻을 밝히는 등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며칠 뒤면 남북이 8·15 공동행사를 서울서 열기로 돼 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회담의 성과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이미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과제들을 어떻게 실천느냐에 달려 있다. 북측 대표단은 도착성명에서 "북남 쌍방은 이미 상정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훌륭한 합의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남북의 이런 분위기와 요구를 잘 알고 있음을 내비쳤다. "겨레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 것도 회담 전 망을 밝게 하는 대목이다.

남측이 역점을 두는 것은 이산가족 변희소 설치 외에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등 북측 군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위해서는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야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남북은 서로 이해를 높이고 믿음을 쌓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남측이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신속한 관계로 들어간다면, 북한 선수들이 아시아경기 대회에 참석할 때 '인공기 응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지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어떻게든 난관을 만들려는 일부 냉전세력들의 여론몰이가 풍해선 안 된다.

사설

'새출발' 위해 북측이 답할 때

남북 장관급 회담의 김정성 북측 단장은 "얼매가 주립 주립 열린다고 전망해도 된다"고 회담 경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이틀간 진행된 회담에서 북측은 서해 교전에 대해 종전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틀론이고 쌍방 국방장관 회담 및 경의선 연결공사의 구체적 입장을 확정하지는 않겠다는 주장엔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북측이 이번에도 단것은 삼키고 쓴것은 뱉는 식의 종래 방식을 답습해서 안될 것이다.

남측의 이런 우려가 사실이라면 북측은 우선 큰 오산을 하고 있다. 남측 대표단이 성과에 연연해 그 두 문제를 제외한 채 북측에 '주립주립 열린 열매'를 선물한다 해도 과거와 달리 국민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측은 지금 정권교체기인 데다 야대(野大) 정국으로, 국민과 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북 지원 정책은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에 있다. 북측이 남측에서 식량 지원 등을 받기 위한 경제협력추진

의와, 금강산 관광에서 더 많은 외화 수입을 겨냥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 회담의 개최 등 남측에서 받을 것에만 연연한다면 남측 정세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방장관 회담이 왜 필요한가는 너무나 자명하다. 북측이 허명한 서해 교전의 '우발적 발생'을 역면 그대로 믿는다고 치자. 그런 우발적 교전이 확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군사 당국 간의 최소한의 신뢰 기반 구축은 절대적으로 긴요한 사안이다. 경의선 연결 문제만 해도 실형이 관건인데 북측이 그 담보로 하지 않으려는 것은 남측의 대북 불신만 자초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북측은 그들 말대로 과거사에 대한 사비로 허송세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앞을 내다보며 새 출발'을 하겠다면 남측의 정당하고도 절실한 제의를 수용해야 한다. 서로가 필요한 것을 얻자면 서로 양보할 줄 아는 윈-윈 회담이 남북 회담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

사설

남북 군사신뢰 길 터야

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오늘 마무리된다. 공동발표문이 나와야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있었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할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의안은 경의선 철도 연결,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조속 가동,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기존 합의할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내용을 담는다고 한다. 우리는 특히 남북의 군사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군사회담의 조속 개최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한다.

이번 회담은 북측이 여는 때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기대가 컸다. 김령성 북측 대표가 회담 첫날 "합의도 중요하지만 실천 분위기를 잘 만들어 합의 이행에 노력하자."고 한 대목도 북측의 적극성을 반영한 대목이라고 본다. 물론 북측이 최근 추진중인 경제 개혁이나 식량난 등 경제난 해소 등을 위해서는 남측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보이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전향적인 자세로 합의 내용을 실천하고 신뢰를 쌓아 통일

기회를 다져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의 실현은 남북간 군사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남북 경제 교류나 협력의 통로를 마련한다는 상징적 차원에서 볼 때, 연내 완공을 서둘러야 할 사안이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나 군사실무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철도연결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포함, 서해교전 사태와 같은 무력충돌의 재발 방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돌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의 차단 방안뿐만 아니라, 무력충돌이 이뤄질 경우 이를 신속하게 수습할 남북간 비상체널의 가동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남북은 지금까지 국방과 군사와 관련있는 사안은 애써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외로 논의를 자체해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제 접근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실천 과제를 찾아나가야 한다. 경의선 연결이나 남북군사회담 개최 합의가 이런 가능성의 단초가 될 것 기대한다.

社說

北은 군사회담에 응하라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은 군 당국자 회담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경의선 연결과 금강산 육로관광 등 타결을 앞둔 현안과 서해 도발에 대한 사과문제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주요 고비마다 북한 군 당국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군 당국자 회담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느냐 하는 문제가 장관급 회담 합의의 실천을 담보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남북간 군 당국자 회담은 6·15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2000년 9월에 제주도에서 열린 제1차 국방장관 회담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있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 실무회담을 다섯 차례 열어 '군사보장 합의서'(DMZ 유착안)를 마련했다. 그러나 북한측의 서명 거부로 발효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당시 우리의 주적(主敵) 개념을 문제 삼았다. 남북은 4월 발표된 금

강산 실무접촉 공동 보도문에서 군 당국자회담 일정을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 당국자 회담은 비무장 지대(DMZ) 내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와 '군사보장 합의서'의 발효 문제를 논의할 실무회담과, 서해도발 및 남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과 신뢰구축 문제를 다룰 고위급 회담으로 나뉠 수 있다. 실무회담에는 응하겠으나 고위급 회담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측 태도가 사실이라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고위급 회담에 응해 서해도발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분명한 사과를 해야 남북 관계가 풀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에도 나와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평화공존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설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상당한 진통 끝에 10개항의 합의 사항을 담은 남북 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이 정리됐다. 군사실무회담 개최 일정을 확정짓는 문제로 한나절 줄다리기가 있었다. 결과는 '군사당국자 회담 빠른 시일 내 개최'다. 회담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것이다.

북측이 당초 군부에 '건의'하는 수준의 합의를 고집했던 점에서는 한 발짝 진전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보면 북측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셈이 되고 말았다. '빠른 시일 안'이라는 표현은 회담 개최일을 다시 북측의 결심에 유보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북측 나름의 사정이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회담 때마다 이 문제를 일버무러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합의의 성실한 이행 또한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인식이다.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바는 장관급 회담까지 열렸는데도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서는 공동보도문에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남북이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한다면 서해교전과 같은 중대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옳다. 아마도 이를 군사당국자 회담에 유보한 모양이지만 이런 미봉적 대응으로는 남북관계의 건실하고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군사분야를 제외하면 양측의 합의 사항은 아주 의욕적이다. 이제까지 합의는 됐으나 실천에 이르지 못한 과제들의 실천 일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제5차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2차 회의, 금강산탐 공동조사,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등에 대한 합의가 눈길을 끈다. 북측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비롯한 체육 교류,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제8차 장관급 회담 일정이 확정된 것도 주목된다.

남북 양측 대표들은 이번 회담에 들어가기 전부터 유난히 '실천'을 강조했다. 공동보도문에서도 그 같은 의지를 위울 수가 있다. 정말 중요한 몇몇 과제를 다룰 회담의 일정이 명시되지 않은 게 아쉽기는 하나 그런 대로 소득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대표들이 강조했던 비의 '실천'이다. 북측이 또 그 쪽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이른바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합의 사항의 실천이라는 과제에 선택적으로 대응한다면 남북관계는 순조롭게 진전되기 어렵다. 북측의 기류도 바뀌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북이나 남이나 서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 점을 북측이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일보

2002. 8.15(목)

世界日報

2002. 8.15(목)

시론

우여곡절 끝에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마무리되었다. 급변 합의 내용은 남북 양측 대표들이 기조연설에서 기존합의의 실천을 강조했듯이 새로운 사안보다는 이미 합의한 사안에 대한 실천을 확인하는 신에서 강한다. 주요한 합의는 김형주진위 합의 2차회의 8월 26~29일 서울개최(실도·도로 안제, 개성공단 건설, 입진감 수해방지, 군사적 보장조치 및 군사당국자 회담 '빠른 시일안에' 개최, 9월 중순 안보선언발진소·인민군 공동조사 등 위안 실무시 집중, 추석계기 5차 이상가족 간담 및 9월 4~6일 4차 남북적십자회담)만 회소 실천안 문제(9월 10~12일 금강산관광 단국간 회담, 17일 아시안게임 참가 및 백두산 성과 운반 등 실무협의)인조, 9월 6~8일 남북축구경기, 대관도시방문 교환방문(남측 9일 중순, 북측 10일 하순) 북경개최할만 10일 하순 남측



金賢俊

체육행사 뒤어남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南北합의 실천의지가 중요

북한의 경제시찰단 남한 방문 또한 중요한 문제다. 북한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금년 7월 1일부터 임금인상, 국정가격 한살화, 인센티브제도 도입, 지방공업의 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제관리방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정책의 성공여부는 북한이 얼마나 빨리 자본주의적 마인드를 갖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시찰단이 '후발 자본주의'의 성공국가인 남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와 관련지어 볼 때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군사당국자간 회담 일정을 정확히 명시하지

軍事회담 일정도 잡았어야

방문, 8차 장관급회담 10월 19~22일 개최 놓인다. 우선 '6·29선해사태'에도 불구하고 남북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종전의 예를 보면 이처럼 큰 사건 이후에 개최된 단국간 회담은 대체로 상대방에 대한 책임징기, 고상, 비난, 결렬 등의 수순을 밟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급변 회담은 약간의 진통은 있었지만 무사히 끝났다. 이것은 새로운 회담 분위기를 창조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기존 합의사항 확인선서 끝나

비록 북한이 '시해정국'에서 탈피해서 남한으로부터 경제지원을 획득하고 미국과의 대화국면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회담에 있었다 할지라도 회담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아울러 북한이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 체육경기대회에 최초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급변 회담의 성과로 꼽아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공의 대항트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체육교류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석은

뜻한 것은 남북군사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못내 아쉽다. 이미 2000년 경의선 연결시에 남북국방장관회담, 경의선 연계철 위한 군사실무회담 등이 개최되었고 40여개항의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국방장관 서명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경의선 복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것은 경의선 복원 문제는 물론 남북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에도 비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이제 제7차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 사실이다. 남북관계는 미국요인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한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남북한 당국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남북 대화정국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남북관계는 '어린아이 돌보듯' 하지 않으면 언제 '대형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 통일연구원원장인민연구원원

○본문의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국제행사
인공기 사용 국제법적 보장

다음달 29일 부산에서 개막되는 아시안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한다. 그러나 북한의 참가를 둘러싸고 정부 당국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적잖은 혼란이 일고 있는 듯하다. 다만 김기중 북한 외 인공기 계약과 국가 연주,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 사용 허용문제다. 더구나 북한 응원단의 인공기 사용,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의 인공기 사용 등에 관한 문제는 더욱 고



이창희
한국외대 법대 학장

다.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는 분명히 남북 교류협력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이 다법(국가보안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초청한 북한 응원단이 자기 나라 인공기를 들고 올라와고 손잡이 대회의로서 인공기를 들고 응원하는 우리 국

민을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다.

스포츠행사 정치좌대 안돼

넷째, 경기장에서 인공기 응원은 대회 풍조에 휩쓸린 상태임을 고려하는 것일 뿐 상대 팀이 속한 북한의 이념 수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다섯째, 경기장에서 인공기 계약 및 응원이 순수한 스포츠정신을 고양하는 목적이라면 이것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대하게 허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를 줄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축소·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헌정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아시안경기대회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정치적 만족사법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스포츠교류교섭을 법정시켜야 한다. 서해 교전을 보고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베를린 회담을 보고 북한이 완전히 변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단지 남북 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공동의 이해 폭을 넓혀가면서 접촉을 통한 변화 유도를 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북한의 응원단이 많이 와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은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에서 시범적으로 남북한 응원자의 인공기 사용 및 계약은 최소한 경기장 구역 안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레아 다음에 예상되는 평양 스포츠대회에서도 상호주의적으로 대한민국의 대국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과 협력을 더욱 증진하려는 데 있

보안법과 충돌하지 않아

우선 이번 대회는 정치행사가 아닌 순수한 스포츠행사이므로 스포츠 정신에 충실하게 치러야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스포츠행사에서는 대회 현장과 국제관계에 따라 참가국인 북한의 인공기 계약이 되고 국가가 연주되는 것이다.

둘째, 이번 대회는 국내 행사가 아니라 국제 행사다. 다시 말해 국제적 차원에서의 남북 만남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적 규범이 적용된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이번 국제 스포츠우대에서 상대를 상징하는 국기를 들고서도 응원해 주는 것은 현재 유엔 무대에서 서로를 국제법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과 동일하다.

셋째, 이번 북한의 참가는 한국 정부가 비용까지 부담하고 초청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 선수들은 한국 정부의 승인으로 초청받은 손님들이다. 정부의 초청목적은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간의 스포츠행사를 통해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진하려는 데 있

8·15 민족대회에 담는 소망



강만길
심지대 총장

8·15 민족통일 대회가 2001년 평양대회에 이어 2002년 서울대회로 열리게 되었다. 6·15 선언 후라 해도 서해교전 직후에는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번 민족대회가 가지는 의미는 우발적이건 그렇지 않은 일단 일어난 충돌사건을 전에 없었던 유감표명으로 풀어냄으로써 성립하게 된 민족대회라는 점에 있다.

휴전조약 후 남북사이에는 많은 충돌이 있었으나 솔직한 유감표명으로 문제를 풀어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다시는 그 같은 충돌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앞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어떤 일시적 강요인이 생길까 해도 그것에

구애되지 않고 쉽게 풀어 가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민족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 가는 것은 물론 정상회담·장관급회담 등 정부차원 회담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능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남북 민간에 의한 통일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장관급회담과 민간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실력 정부 차원의 접촉이나 회담이 어렵게 된 경우라 해도 민간 차원 통일운동이 그 실마리를 열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만나 신뢰감 쌓아야

이번 민족통일대회는 지난해 평양대회와 함께 남북의 많은 민간인이 접촉한다는 점에, 그리고 특히 남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6·15 공동선언 후 남북사이의 인적교류가 크게 활성화한 것은 사실이다. 평양의 보통강여관에서 자고 아침 먹으며 식당에 가면 여기가 서울인지 평양인지 모를 정도로 남북

사람이 많은 것에 놀란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후 급증한 남북 사이의 인적교류, 특히 민간교류는 주로 남쪽 사람이 북에 가는 교류에 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민족대회가 북쪽 사람이 남쪽에 오는 인적교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100명의 북쪽 민간인이 남쪽에 오고 앞으로 남북축구대회 및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많은 북쪽 민간인이 남쪽에 오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이 온다니 북쪽 사람이 남쪽에 오는 인적교류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다.

말이 같고 풍습이 같은 동족이지만, 남북 사이에는 분단 이후 오랫동안 인간적인 진출한 접촉이 거의 없었으며, 그 때문에 처음 만나면 어색하고 겉치레가 앞서게 된다. 그러나 몇 번 만나면 같은 민족으로서의 인간적 신뢰가 쉽게 생기고, 동년배면 술자리라도 만들고 말을 놓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게 된다. 체제나 이데올로기니 하는 것을 한꺼풀만 넘어서면 그 속에는 어릴 수 없는 인간이 있고 동족이 있게 마련이다.

이번 민족대회는 100명의 북쪽 민간인이 남쪽에 와서 동족으로서의 인

간적 교류를 가진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것을 넘어서 다만 인간으로서의 교류, 동포로서의 교류만이 이루어지고, 100명의 교류가 앞으로 1000명, 1만명, 나아가서 7000만의 교류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남북학생 수학적합심 실험기대

그리하여 경의선과 동해선이 이어지고 금강산 육로관광 길이 열려서 휴전선이 군사대결선이 아닌 이듬편인 경계선이 되어, 남북 초·중·고·대학생들이 수학여행 가서 저 웅대하고 화려한 고구려 문화유적을 보고, 북쪽 학생들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신라·백제 유적을 보러 수학여행 오는 데까지 남북관계가 진전되기를 바란다.

남북을 막론하고 그 기성세대는 민족사의 내일을 짊어질 2세 젊은이들에게 조상들이 남겨놓은 값진 문화유산 고루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 어떤 이유로도 거역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엄숙한 민족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8·15 민족대회가 그 책임을 완수하는 데까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시론



高有煥
동국대 교수
북한학

지나면서 같은 민족의 징표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분단 이후 두 세대가 지나면서 우리 민족은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으로 각각 서로 다른 인간형으로 정치사회화 됐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시급한 과제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을 인정할 가운데 많은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정상회담 이전 남북한은 '적대적 의존관계'란 틀 속에서 상대를 부정하는 태도가 강체성을 갖는 '자각적 경의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남과

북한과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는 일련의 협의를 이뤄냈다. 남과 북은 그동안의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4·5 공동보도문' 이장과 이산가족문제 해결, 군사적 신뢰구축 등 남북 화해·교류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갈래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서해교전으로 교착됐던 남북관계는 다시 급진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당국간 대화와 함께 8·15 민족통일대회와 부산아시아게임 참가 등 사회·문화교류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로부터 오는 위협을 피하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은 남한의 김대중(金大)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 원상회복을 통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기반을 마련해 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편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대외관계 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체제경쟁 워매이지 말길

남북관계 원상회복에 나선 남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남북간 접촉과 대화 등 통한 교류협력이 많아지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통일진정 회복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교류협력과정에서 우리가 북쪽에 일방적으로 '미주교'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그러나 남북간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사회주의 민족'이 '자본주의 민족'을 압도할 수 없다. 이게 월드컵 때 보여줬던 우리 국민의 단합된 열정을 동일 역량으로 승화시켜 민족통합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마련한 '민족화해의 길'이 '남남갈등의 길'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화해 가속화 하자

북은 2000년 6월 첫 정상회담에서 적대적 의존관계를 청산하고 '호혜적 상호의존관계'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약속했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불치권 차원에서 실정법을 초월해 만든 6·15 공동선언을 제도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북한의 군사도발, 남한 내부의 남남갈등 등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면서 남북관계는 정체국면을 면치 못했다.

다행히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이장의지를

있다. 오늘부터 서울에서는 남북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각계급 대표하는 주요 인사 1백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공동의 8·15 민족통일대회가 열린다. 북한은 '민족대단결론'과 6·15 공동선언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민족공조'논리에 따라 사회·문화 교류를 적극화하려 한다. 북측이 세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수하면서까지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대가이다. 첫째, 북한은 무엇보다 민족공동체를 통해 외세

오늘은 광복 57주년을 맞는 날이다.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은 외세의 개입과 내부 분열로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하지 못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20세기 말까지 통일된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 건국을 완성하고 주권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21세기가 열린 지금까지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화 못한 6·15공동선언

민족은 같은 지역에 살며, 협연·연어·문화·생활양식 등을 공통으로 하는 사회집단이다. 그런데 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서로 다른 생활권으로 나뉘어 살아온 지 어떤 반세기가

한국경제

2002. 8.15(목)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10개항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고 14일 폐막했다. 15일부터는 서울에서 북측 대표 1백16명을 비롯하여 남북 양측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8·15 민족통일대회가 열린다. 또 오는 9월 말 시작되는 부산아시아게임의는 대규모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최소한 의견상으로는 남북관계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추석 전 이상가족 상봉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울 개최 일정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핵심 의제인 군사실무회담 개최 문제가 전체회의 일정보다 늦춰지면서 진통을 거듭한 끝에 조속히 개최한다는 데 가까스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군사실무회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화 정착의 기본 전제인 군사적 신뢰 구축이 어려워지는데다

경의선 연결이나 동해안 철도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이 합의한 대부분의 경험 사업들도 풀릴 수 없기 때문에 장관급회담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북한이 남북 협력을 진정으로 비한다면 군사실무회담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합의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남북이 수 차례 회담을 가졌고, 합의사항도 많았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겨진 적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합의사항도 북측이 식량지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어떤 발목을 잡을지 이행을 회피하려 할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한 것도 그 때문이다. 더 이상 그런 일이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쌀 배급제 개선 등 경제개혁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남측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같은 점을 인식한다면 북한 스스로 합의 사항에 대한 실천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社說

군사적 보장이 관건이다

9개월 만에 열렸던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10개항에 합의하고 끝을 맺었다. 경제협력위 2차 회의를 이달 하순 개최하고 9월 중순 금강산 탐 공중조사를 위한 실무자 접촉을 하며, 5차 이상가족 상봉 및 9월 초 남북적십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확대의 길을 열었다. 금강산관광 당국자 회담을 개최하고 아시아게임 실무협의에서 협조하며 북 경제시찰단이 10월 남측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은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한 점이다. 사실 이번 회담은 군사당국자간 회담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각급 남북회담에서 도출된 적지 않은 합의사항들이 '군사보장 합의' 뒷받침이 없어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를 놓고 한때 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합의할 이끌어냄으로써 남북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된 셈이다.

군사당국자 회담이 실제로 열릴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면도 있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이 당초 이번 회의에 적극적으로 자세로 임하겠다는 점을 밝혔던 것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기대를 해

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원만히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왔지만 영통한 문제로 쌍방이 트집을 잡거나 일방적으로 협력을 중단해버리는 돌발행동을 보여서는 안된다. 상호 입관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도 시장경제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등 경제운을 통해 적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적 협력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한도 중단된 남북협력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민족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합의사항의 최종 실천 여부가 군사적 보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측이 협력적이고 적극적인 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북측이 또 다시 태도를 변화시키면 모처럼의 남북회의 성과가 뜬구름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모두 합의사항 이행에 저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매일경제

2002. 8.15(목)

社說

합의사항 '실천'을 주시한다

남북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군사회담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어렵게 회담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담에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 및 10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남북경협 등 이번 회담의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각급 실무회담이 잇달아 열릴 것으로 보여, 남북대화는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7차 장관급회담은 이같은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 회담에서 다음달 추석을 기해 제5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실현회는 기존의 합의사항을 재탕한 것밖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산상봉 상설 면회소 설치·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가 또다시 뒤로 밀린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이번 회담의 최대 현안인 군사문제에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협상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부담으로 떠안겨졌다. 군사·당국자회담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 또한 북한 대표단이 군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고집한 점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엄연히 정부대표로 나와서 '건의하겠다'는 협의를 하자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없는 일이다. 군사문제해결이 남북경제협력의 선결과제라는 점에서 대북식량지원은 물론 향후 협력사업의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7차장관급회담에서 어렵게 합의한 내용들을 차질없이 실천하여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만약 이번 7차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그 후과는 엄청난 부정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 자명하다.

한겨레

사설

성과 크지만 아쉬움 남는 장관급회담

서해교전 등 검색국면을 거치며 9개월 만에 재개된 7차 남북 장관급회담 결과는 한마디로 큰 성과 속에서 아쉬움을 남긴 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남북은 비교적 많은 10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달 말 열릴 경제추진위 2차 회의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문제와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다음달에 금강산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을 계기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많은 합의가 이뤄졌다. 그밖에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실무협, 남북 축구경기, 태권도 시범단 교환 등도 소중한 열매들이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핵심 쟁점이었던 군사 당국자회담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북이 합의했던 경의선이나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하려면 군사적 보장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시급히 취하기로' 한다는 데 그쳤다. 쌍방 군사당국자 회담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한다고 표현

했다. 우리측이 이번 회담에서 군사보장 합의서 교환·발효를 위한 군사 실무회담 개최시기를 못박고자 노력했던 것에 견주면 실망스런 결과다. 특히 이 문제를 북쪽의 '실천 의지'를 나타내는 시안이라며 달아놓았던 터라 아쉬움이 더한다.

그러나 기대가 컸기에 미흡하다고 느끼는 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결실이 풍성하다. 합의대로라면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남북 간에 대화와 단담이 즐김이 이어지게 돼 있어 진전이 기대된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무력충돌까지 빚었던 것에 비한다면 엄청난 변화다.

핵심쟁점인 군사 당국자 회담에서 구체적 실천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담 전체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다만 큰 틀에서 볼 때 남북대화가 다시 긴밀해지는 형국이고, 미국이 북한에 곧 특사를 보내기로 하는 등 외부 여건도 크게 좋아지고 있어 비관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사설

10개항 합의 실천이 관건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군사당국자 회담 조기 개최 등 10개항에 걸쳐 합의할 이룬 것은 새로운 신뢰 구축의 진기할 미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남과 북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합의할 이끌어 내려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 남북이 그동안 각종 회담에서 많은 합의할 이뤄 놓고도, 민감한 쟁점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렸던 사례에 비추보면 그 의미는 더욱 크다.

남북은 회담에서 경의선연결 등을 위한 2차 검토회의 이달 26~29일 개최, 9월 중순 금강산남 공동조사 실무접촉,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여러 방안을 합의했다. 남북의 이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상호협력과 신뢰구축의 밑거름이 될 만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특히 금강산남의 공동조사 실무접촉, 경의선 조속 복원 등을 합의한 것은 남북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군사회담의 시기 등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남북간 신뢰의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더구나 북한 군부의 눈치볼 봐야 하는 상황 때문이었다면 더욱 그렇다. 서해교전 등의 긴장관계를 겪었던 군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북측의 창직된 태도는 못내 안타깝다. 남북이 이번 조율을 토대로 정치·군사 분야에서도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이제는 실천이 관건이다. 이번 합의 결과물 두고 남북이 사안마다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새롭게 따지는 식의 일회성·이벤트성 후속 회담이 재현되어서는 곤란하다. 포장만 그럴듯했지 실천의지는 없는 남북회담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 전 일부 여론조사에서 회담성파에 대해 50% 이상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과거 검토회의 반응일 것이다. 남북은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제도화할 것은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의 상설화 방법과 절차 등은 특별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게 없다. 상설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 가족원래 등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속화 되길 기대한다.

사설

절반의 합의에 그친 남북회담

남북한이 7차 장관급 회담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의 활성화를 유도할 10개항의 합의를 이룬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금강산남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자 접촉과 8차 장관급 회담의 10월 평양 개최에 새롭 합의한 것이 그렇다. 그러나 남북 교류와 협력을 북돋우고 담보할 밑바탕인 군사당국자 간 회담의 개최를 '이른 시일 내'로 합의하고, 경의선·동해선 철도 공사를 동시 착공하되 착공 일자의 확정을 뒤로 미룬 것은 절반의 합의에 불과하다.

군사 당국자 간 회담은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신뢰 조성의 기반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당장 경의선 등의 공사를 위해서도 이 회담이 얼리 비무장지대의 지뢰제거 등에 대한 기존 합의를 교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서해교전 사태가 시사했듯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을 누그러뜨리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선 쌍방 군사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북측이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작 그것을 위해 관건이 되는 군사 당국자간 회담을 기피하는 배경이 궁금해진다. 북측이 남측으로부터 쌀 지원 등 '얼매'만 거두고 군사 당국자간 회담을 이룬 저런 이유를 대며 천연시키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 때문에 군사회담을 막연한 '이른 시일'이 아니라 구체적 일정으로 확정해야 한다.

우리 쪽이 주력한 두 문제에 대해 이런 미적지근한 결과를 얻은 것은 정부의 회담전략 부재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현 정부가 임기 말 업적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책임문제를 분명하게 따지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북측이 만약 남측의 도발을 당했다면 이런 식으로 회담에 걸고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북측에 따질 것은 확실하게 따지고 지원할 것은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결연한 자세를 가졌다면 회담 결과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북측만을 위한 대북협상을 해선 안된다.

社說

민족통일 대회 차분하게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8·15 민족통일 대회는 여러 측면에서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16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전개기 편으로 보냈고, 남북 공동의 광복절 기념행사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는 일부 남북 방북단의 사례 같지 못한 행각으로 남남갈등을 촉발했고, 급기야는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해임건의를 당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방북단이 귀국할 때는 김포공항에서 재향군인회와 통일연대 회원간의 폭력 충돌이 있었고, 방북단 1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방북단 파동은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의 해임을 둘러싼 이견으로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를 무너뜨려, 정국이 1이 2야로 재편되는 등 국내정치 지형에도 엄청난 파문을 던졌다. 한두 사람의 분별없고 자각없는 행동이 남북관계 전반과 국내정

치 등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이 새삼 확인된 사례였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이번 행사에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우선 행사장소를 가급적 축소인 위키필 호텔에서 하도록 했고, 통일연대와 민화협 소속 20여명의 북한주민 집속 신청을 받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행사를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경비대세를 강화했다.

서울대회는 지난해 평양대회의 불상사를 면회하기 위해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 참가인사 520여명, 특히 남측 참가단 400여명의 신중한 행동이 요구된다. 민간주도의 행사는 성공하면 남북 관계를 한단계 진전시키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일으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해 뼈저리게 체험했다. 서울대회가 차분하게 진행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朝鮮日報

2002. 8.15(목)

社說

北 군부는 남북정부 위에 있나?

이번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연결공사 재개 등 소기의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북한측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것이 현상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대북 지원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 견해추진위원회 회의의 우선적으로 개최기로 한 데서 분명해진다. 앞으로 다른 실무회담들의 진행 추이는 경험(經協) 회담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북측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및 책임자 처벌 약속이 없었던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이번 회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북한 군부(軍部)는 남북한 정부 위에 존재하는 '비토그림'인가?" 하는 의문이다. 남북회담의 북측 대표단은 언제나 자신들의 군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피해 왔으며, 이번에도 군사회담 개최를 군부에 '건의'는 할 수 있으나 합의는 할 수 없다고 고집해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고 끝내 개최일자를 정하지 못했다.

북한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대표단이 '군사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대표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며, 또한 남북 정부 간에 합의한 사항이라도 북한 군부가 거부할 경우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 군부가 저지른 서해도발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주체였던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가 정작 남북 회담에서는 군부의 뜻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도 스스로 모순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군부 따로, 내각 따로'의 방법으로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회담진술일 수도 있다. 이것이 바뀌지 않고는 그 어떤 회담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